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3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69년
사건·단체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대한민국 정부 수립~1969년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항목 기초조사)

제1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69년 시기 민주화운동관련 사건 항목 기초조사

제2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69년 시기 민주화운동관련 단체 항목 기초조사

연구책임자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연구팀

팀장 -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제출일 : 2003. 12. 1

제1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69년 민주화운동관련 사건 항목 기초조사

A1 제7차 大韓勞總 全國代議員大會

A2 1954. 3. 29-1954. 4. 2

A3 1954. 3. 29,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대회 소집준비위원회와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전국중앙연맹체를 공동 조직할 것에 합의/1954.3. 31, 두 파의 합류를 위한 기술적 문제 토의 위한 회합/ 1954. 4. 1-2, 서울 문화관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중앙연맹 결성 대회 개최

A4 1953년 노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되자 이 조합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중앙연맹체 결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대한노총 철도연맹 위원장 김주홍(金周洪)과 대한노총 경전노조 위원장 정대천(丁大天)을 중심으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大韓勞動組合總聯合會) 전국대회 소집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노동조합 중앙연맹체의 결성을 촉진하였다. 한편 결실한 조직기반이 되지 못하는 자유노동조합연맹을 배경으로, 종래 대한노총 최고위원으로 있던 이진수(李鎭洙)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세력은 대한노총의 기득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래의 대한노총을 노동조합법에 의한 전국중앙연맹체로 개편하려는 준비를 서둘렀다.

법률상 2개의 전국 중앙연맹체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부 당국은 노동운동의 분열을 피하고 원만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국 1954년 3월 29일 두 개의 준비대회가 대체적인 합의를 보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대회 소집준비위원회가 중앙연맹체결성에 대한 준비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가 이에 합류하기로 합의하였다.

A5 1954년 3월 31일 두 파의 합류를 위한 기술적 문제에 관한 토의를 위해 양파 대의원들이 사회부에서 회합하였는데 대의원 자격심사위원 구성문제로 회합은 일시 결렬상태에 빠졌다. 결국 자격심사위원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대회준비위원회측에서는 김주홍을,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소집 준비위원회측에서는 안필수(安弼洙)로 하고, 내무부치안국 직원 1명, 사회부 직원 1명을 자격심사위원에 추가하여 이들 4명이 대의원의 대회장 입장을 감시 사정기로 합의하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1954년 4월 1-2일 양일간 서울 문화관에서 노동법 실시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 중앙연맹 결성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 대립된 두 파는 시종 알력과 분쟁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융화되지 못한 채 산회에 이르렀다. 특히 임원선거에서는 노골화된 감투 싸움이 일시 대회의 진행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최종 임원으로는 최고위원에 경전노조위원장 정대천, 철도노조연맹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반공청년운동의 기수였던 김두한이 선출되었으며, 사무총장에 광산노조연맹 위원장 이준수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대회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충실히 따를 것임을 다짐하였다.

A6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大韓勞動組合總聯合會) 전국대회 소집준비위원회 관련 : 김주홍(대한노총 철도연맹 위원장), 정대천(대한노총 경전노조 위원장),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 관련자: 이진수(대한노총 최고위원) 노동조합 중앙연맹 관련 : 정대천(최고위원), 김주홍(최고위원), 김두한(최고위원), 이준수(사무총장)

A7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대회소집준비위원회, 대한노총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

A8 '결의문 '(조선일보, 1954, 4,4)/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94쪽

A9

A1 釜山 美軍部隊 한국인 노동자 파업

A2 1954. 5. 27-1955. 3.

A3 1954. 5. 27 전국 미군중업원노조가 120%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는 쟁의제기/5. 28 최후교섭에서 8월 5일 기한으로 요구조건 수락할 것을 최후 통고/미군측의 무대응으로 8.9에 24시간 시한파업 단행할 것을 사전 통보/8. 6. 파업 돌입/8.10 정상화, 미군측에 재교섭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48시

간 재파업 돌입/9.1 미극동사령부로부터 부분임금인상을 미본토환으로 지급할 것임을 통보 받음/1954. 11. 20. 미본토환 지급 거부로 다시 쟁의발생/1954. 12.1부터 노조측, 140% 임금인상 요구했으나 거부 /1955. 3월부터 일부 미군측의 철수로 쟁의는 미해결상태로 종결, 실업자 속출, 미군노조의 노조원 상실 등의 결과초래

A4 6·25 전쟁 이후 부산항에는 많은 미군 선박이 출입하고 있었으며,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어 거기에 종사하는 각종 한국인 노동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1953년 현재 1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미군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들은 1953년 3월 공포된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미군종업원 노조를 조직하고 있었다.

A5 1954년 5월 27일 전국 미군종업원노조는 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120%임금인상과 기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였다. 미극동사령부와 직접 교섭을 벌이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으나 미군당국의 무반응으로 노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할 것을 조합측에 요구하였다. 미군측의 무반응에 대해 조합간부들은 동월 28일 최후 교섭에서 8월 5일까지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시 파업도 불사한다고 통고하였다.

8월 5일까지 아무 응답이 없자 노조측은 8월 6일 다시 「① 최저임금을 시간당 70환으로 인상하고 현재의 재적인원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백홈(back home)철폐, 스탠바이(stand by)시간 단축, 출근 시에 전(前)노임을 지불할 것 ②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해 미군당국이 8월 8일까지 회답이 없을 시에는 8월 9일 24시간 시한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사전 통보했다.

1954년 8월 6일 오전 6시를 기해 12,000명의 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들은 미군측의 무반응에 대항하여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8월 10일 8시부터 정상으로 직장에 복귀, 미군측에 교섭재개를 요구하였으나 미군측의 냉담한 태도로 노조는 48시간 재파업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국정부의 보사부 당국은 미군종업원노조의 파업을 위법으로 규정, 파업을 중지할 것을 경상남도에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노조간부들은 한국정부측에서 미군당국에 임금인상을 권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파업 기일로 정한 8월 17일을 8월 25일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25일까지 미군당국으로부터의 직접 응답은 받지 못한채, 사회부장관의 주선으로 미군측이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파업을 중단하게 된다.

9월 1일 미극동사령부는 부산 미군노동자들의 노임을 부분적으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미후방기지사령부를 통해 전달해 왔다. 인상의 내용은 1시간당 1급 21환 50전, 2급 28환, 3급 37환, 4급 이상 80환이었으니 노조측이 요구한 평균 110환에는 훨씬 미달하는 것이었으나, 노조측은 우선 이를 수락하고 그 이상의 인상은 다음 기회의 투쟁과제로 남기게 된다.

당시 미군당국은 인상된 임금을 미본토불로 지불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1954년 당시 공정한율은 1불에 180환이었으나 입찰공배되는 시중환율은 1불에 500환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군측은 미본토불로 지급하면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상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정부당국이 외화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었다. 즉 1불 500환으로 계산하여 본토불을 받는 경우와 1불 180환으로 계산하여 미군당국이 한화를 계산하여 노임을 지불할 경우 한국정부의 외화수입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군당국은 미본토불에 의한 임금지불이 한국정부와 그 정책을 따르는 노동자들의 협조로 불가능하게 되자, 담배, 껌, 칫솔, 비누, 화장품 등 현물로 노임의 일부를 지급하려고까지 하였으나 노동자들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11월 중순에 이르러 미군당국은 전액 한화로 노임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미군부대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게 되었으므로 1954년 11월 20일 다시 쟁의를 제기했다. 노조측은 140%의 임금인상을 12월 1일부터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미군당국은 일방적으로 75% 인상을 실시하고 노조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1955년 3월부터 일부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많은 실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군종업원노조는 조합원을 상실하고 그 활동도 자연히 위축되어 임금인상 투쟁은 미해결로 남은 채 후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A6

A7

A8 '24시간 파업단행 미군중업원의 노임쟁의 악화' (경향신문, 1954.8.11)/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p.411/김사옥, 『한국노동운동사』(하), 산경출판사, 1974, 243-265쪽

A9

A1 荷役勞動者들의 對金聯 임금인상쟁의

A2 1954. 7. 20-1955. 6. 30

A3 1953. 9월이후 자유노련 산하 하역노조,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상대로 임금인상 교섭시도/1954. 7. 20. 노조측의 쟁의발생 신고/1954. 8. 2.금련(金聯)측은 노조측의 요구에 동의, 사후처리를 위한 3주간의 냉각기간 설정/1954. 8. 31, 금련측이 임금인상을 실행하지 않아 노조측에서 실력행사돌입, 사회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개최, 직권조정에 의해 금련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하는데 합의하여 쟁의가 일단락됨/1954. 9. 30 금련의 합의이행사항 불이행으로 노조의 48시간 시한부 재파업 단행/1955. 6. 30. 국회 본회의에서 외자청 소관 하역노임에 미달하는 차액을 하역부두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결의서를 채택 정부에 이송

A4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항구에서 수입비료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국 자유노동조합연맹 산하에 망라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1953년 9월부터 하주(荷主)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교섭하고 있었다.

A5 임금인상 교섭이 지속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금융조합연합회(金聯)측에서는 아무런 긍정적인 응답이 없으므로 노조측은 1954년 7월 20일 사회부에 쟁의발생 보고를 하고 동시에 파업을 준비하였다. 금련측은 노조의 실력행사를 막기위해 8월 2일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에 동의한다 하고, 사후처리를 위해 3주간의 냉각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금련은 정부대행기관이던 만큼 정부나 국회에서 임금인상에 필요한 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쟁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노조측은 임금인상 문제가 재정법상에 비료조작비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금련측에서 책정된 조작비를 중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금련측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난이 높아졌다. 심지어 부산항의 노동자들은 금련에 항의하는 가두데모를 8월 31일에 단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동향에 놀란 사회부 당국은 8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직권조정으로 금련측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락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여 쟁의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있는 지 한달이 지나도 금련측에서 협정을 이행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항의 파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9월 30일 인천, 부산, 군산, 목포 등 각 항구에서 17,000여 노동자들이 48시간 기한부 파업에 참가했다. 정부당국은 이 파업이 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형사문제 운운하기까지 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다. 노조측은 그후 금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벌이는 한편 국회에 문제 해결을 진정하였다. 국회는 1955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 금련 산하 하역노임이 외자청 소관 하역노임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외자청 소관 하역노임에 미달하는 차액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결의서를 채택 정부에 이송하였다. 정부는 국회의 결의문을 이송 받고 이 문제에 대해 금련측과 협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금련이 취급하던 비료 하역작업을 외자청이 일괄 취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2년여에 걸쳐 문제가 되었던 금련관계 노임인상 쟁의는 외자관계와 동일하게 인상됨으로써 결말을 보았다.

A6

A7

A8 한국산업은행, 『산업경제10년사』, 1955, pp.320-321/한국노조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406쪽

A9

A1 조선전업(朝鮮電業) 임금인상쟁의

A2 1954. 8. 19-1954. 11. ?

A3 1954. 8. 19. 조선전업노조가 쟁의 제기/1954. 9. 1. 보사부의 조정으로 해결안 제시/1954. 9. 29. 노조측은 보사부의 조정안을 수용, 쟁의취하/1954. 11. 행정당국의 알선과 조정 끝에 임금인상 실현, 쟁의종결

A4

A5 1954년 8월 19일 2,0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선전업 노동조합에서는 「① 임금인상 ②단체협약체결 ③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칙(社則)개정 ④노조간부의 불법추출 반대」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하였다. 이 쟁의는 쟁의 발생일로부터 2주 뒤인 9월 1일에 보사부의 조정으로 해결을 본 것처럼 보였다. 즉 노조측에서 요구한 단체협약 체결문제 및 임금인상 중에서 단체협약은 그 해 9월 2일에 노사 쌍방이 조인하였고 임금인상문제도 빠른 시일 내 대내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고 발표되었고 이에 노조측에서는 9월 29일에 쟁의보고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조정으로 대내적 해결을 시도하려던 조선전업의 쟁의는 노사간의 의견불일치와 사칙의 불이행으로 타협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행정당국의 알선과 조정으로 50여회의 교섭 끝에 동년 11월에 가서야 약간의 임금인상을 실현하고 종결되었다.

A6

A7

A8 ‘상후하박에 항거. 조선전업노조서 쟁의를 제기’ (조선일보,1954.08.22 (2))/ ‘조선전업 노조쟁의 쟁의조건은 부당. 상공부와 회사측에서 일소’ (조선일보,1954.08.24 (2))/ ‘전업의 임금쟁의. 타협으로 원만 해결’ (조선일보,1954.09.04 (2))/한국산업은행, 『산업경제10년사』 pp.322-323.

A1 서울自動車勞組의 파업

A2 1954. 8. 28. -1955. 4. 26.

A3 1954. 8. 28. 서울 버스노조분회대표자회의, 8시간 노동제 확립 등의 요구조건 관철 요구, 파업 결의/1954. 8. 30. 서울 자동차사업조합측은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교통부, 사회부, 서울시경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동을 하려 한다고 그 제지를 호소/1954. 9. 1. 노조측은 서울시 당국에 쟁의행위의 단행을 사전 통보하고 9월 1일 오전 6시를 기해 산하조합원들에게 파업단행을 지시/9. 1. 노조측은 서울시노동위원회의 조정통보를 받고, 조합원들의 행동통일의 어려움을 감안, 오후 7시,파업의 일단 중지를 결정/1955. 4. 21. 4월 자동차사업조합측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해 재파업 돌입을 결의, 사측에 통보/1955. 4. 25, 사측이 노조의 수락, 단체협약 초안이 합의되어 쟁의 일단락

A4 1954년 6월 서울지구 자동차노동조합에서는 하루 18시간 가까이 혹사당하고 있는 버스운전사와 차장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용자 단체인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 대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송조합측에서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구실 하에 노조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같은 해 8월 시내버스 업자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도로손상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에 항의하여 8월 22일 4시간동안 버스운행을 중지한 사건이 있었다. 버스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이 항의를 위해 버스운행을 중지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단행할 수 있으리란 판단을 갖게 되었다.

A5 8월 28일 버스노조 분회대표자회의가 열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 단행을 결의하게 된다. 즉, 「① 8시간 노동제를 확립할 것 ②버스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을 인정할 것 ③18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④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되 현행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것」 등이었다. 자동차사업조합측에서는 노조측의 움직임에 대해 8월 30일 다시 교통부, 사회부, 서울시경 등 관계기관에 노조간부들이 불법행동을 하려 한다고 그 제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노조측은 서울시 당국에 쟁의행위의 단행을 사전 통보하고 9월 1일 오전 6시를 기해 산하조합원들에게 파업단행을 지시했다. 노조측에서는 과거 4개월동안 사업조합측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음을 밝히고 「①운전사의 도급제 폐지 ②8시간 노동제 준수 ③월급기준 인상」등을 제시하였다.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파업지시에 응했으나, 운전사들의 일부는 영세사업주와의 개별적 친분관계 및

도급제로 인한 당일 수입의 저락 등의 이유로 파업단행 3시간 후인 9시경에는 일부 조합원들 중에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하오에는 운행이 정상화되고 말았다. 그러다 오후 4시경부터 다시 운행정지하는 차량 수가 늘어나 오후 6시경에는 많은 버스가 파업에 참가했었다. 노조측은 서울시노동위원회의 조정통보를 받고, 조합원들의 행동통일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오후 7시를 기해 파업을 일단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부는 노사 쌍방이 각각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려 서울시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했으며, 노조측도 새로운 투쟁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조측은 사업조합측에 끈질기게 교섭을 시도하다 1955년 4월 자동차사업조합측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4월 21일 「① 8시간 노동제를 보장하여 2부 교대제를 실시할 것 ② 버스 노동자들에게 월급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해 일제히 파업할 것」을 예고하였다. 사회부와 시당국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초보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사업자측을 불러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할 것을 권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주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락, 1955년 4월 26일 노사 쌍방에 의해 단체협약 초안이 합의되어 쟁의는 일단락되었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p. 410-411/김사옥, 『한국노동운동사』(하, 산경출판사, 1974, 15-25쪽

A9

A1 자유노련의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한 파업

A2 1954. 9.30-1954.12.20

A3 1954. 9.30. 자유노련 산하 노무자 17,000여명이 금융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제히 48시간 총파업에 돌입/1954. 12. 20. 자유노련, 금융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개항 요구조건 제시

A4 전국의 각 항만과 주요 철도역에 종사하고 있던 자유노련 산하 노무자 17,000여명은 금융조합연합회에서 1953년 1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에 대한 투쟁으로 1954년 9월 30일부터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A5 자유노련에서는 9월 22일에 인천, 장항, 군산, 목포, 여수, 마산, 부산, 포항 등지의 자유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조합연합회로부터 하역을 청부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9월 30일까지 임금을 인상·소급지불해야 한다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아 파업이 결행되었다. 그러나 전국 8개 주요 항만에서 48시간 예정으로 단행되었던 파업은 4개처에서만 7시간 정도 계속되었으나 투쟁진영이 혼란되어 총파업은 자유노조 자체의 조직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실제적 의미에서는 실패했다. 이 파업은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아 노동쟁의법의 실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자유노련은 이 파업을 계기로 조직적 취약성을 보완, 1954년 12월로 접어들어 금융조합연합회와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즉 그들은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1954년 12월 20일에 ① 1954년 8월 30일에 체결된 중앙노동위원회와 금융조합연합회와의 노임 150% 인상을 즉시 실시할 것 ② 전기 협정에서 확약한 바에 의하여 1953년 11월 1일부터 소급 실시하기로 된 인상노임 전액을 1955년 1월 20일까지 지불할 것 ③재정법의 절차에 의해 노임지불이 지연되면 사회부 당국은 이에 대한 선후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1955년 1월 20일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등 투쟁의 조직을 강화해 갔다.

A6

A7

A8 ‘금융조합연합회 재산 차압을 수속. 자유노련서 임금 안낸다고’ (조선일보, 1955.01.19 (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06쪽

A9

A1 大邱 内外紡織 쟁의

A2 1954. 10.22.- 1955. 1. 중순?

A3 1054. 10. 10. 대구 내외방직 노조는 김증도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 임금 60%인상 관철 투쟁 결의/1954. 10. 22. 사측의 교섭거부로, 노조측이 정식 쟁의 제기/1954/ 10. 30.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에서 사무국장을 파견, 알선으로 노임 40%인상에 합의, 쟁의 일단락/1954. 11. 7. 내외방직 사장 이순희(李淳熙)가 쟁의에 대한 보복조치로 노조위원장 김증도를 해고함/11. 11. 노조는 경상북도 사회과에 쟁의 신고를 하고 회사측에 노조위원장의 복직요구,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단행 결의 통보/1954. 12. 4.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일체 거부함으로써 노조가 파업을 결행/12. 8. 사측이 노조위원장 김증도의 해고를 철회하여 노동자들도 파업을 종결/1955. 1월 중순,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일부 노조원들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 노조위원장에 백정기를 선출함으로써 대외방직 노조는 사측의 어용노조로 전락, 투쟁방법 상실

A4 1954년 9월 초 대구의 내외방직 노동조합은 임금 60% 인상을 회사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인상에 응하지는커녕 노조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로 압력을 가하여 위원장 허근영(許根英)에게 위원장직을 사퇴토록 강압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10월 10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후임 위원장에 김증도(金增道)를 선출하는 한편, 임금 60%인상을 관철키로 결의하였다.

A5 신임 노조위원장이 회사측에 임금인상 교섭을 했으나 사측은 계속 이를 거부하고 노조에 대해 압력을 가해오자, 노조측에서는 1954년 10월 22일 정식으로 쟁의를 제기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탄압의 기세를 높일 뿐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태는 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에서는 사무국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교섭을 벌인 결과 10월 30일 노임 40% 인상에 합의하여 섬유노조연맹 대표 배석하에 노사 쌍방이 합의해서 조인하여 쟁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장 이순희(李淳熙)는 11월 7일 돌연 노조위원장 김증도를 해고 조치함으로써 쟁의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였다. 이에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 보복 해고조치의 최소를 사측에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노조는 1954년 11월 11일 경상북도 사회과에 쟁의신고를 하고 회사측에 대해서도 해고된 노조위원장의 복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였다. 결국 노조의 대화시도와 요구조건 모두 사측에서 거부함으로써 노조는 12월 4일 파업을 결행하였다. 사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폭력배와 상이군인 등을 동원, 노조간부들에게 박해를 가할 뿐 아니라 경찰과 결탁, 10여명의 노조간부를 연행하여 별다른 혐의 없이 수사하였고 노조 사무국장을 구속하기까지 하였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자 사측은 노동자들의 외출과 면회를 제한하고, 기숙사원과 일반 종업원의 급식마저 단절하는 등 노동자들에 고통을 가하고 파업을 반대하는 백지날인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측이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였으며 탄압이 가중하면 할수록 더욱 반발하게 되었다. 결국 사측은 노조위원장 김증도의 해고를 철회하였으며, 노동자들도 12월 8일 파업을 끝냈다.

이후에도 회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정책을 계속하여, 경찰당국으로 하여금 김증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폭행하거나 완력으로 출근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측은 노조간부나 노조를 적극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 또는 폭행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조위원장을 새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권력과 야합한 회사측의 탄압을 피하고 날로 더해 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서라는 구실로 일부 노조간부가 1955년 1월 중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노조위원장에 백정기를 선출하여 노조는 회사측의 앞잡이 어용노조로 변화하고 말았다. 뒤이어 회사측은 전 노조위원장 김증도를 지지하여 회사에 대항했던 노동자 39명을 해고하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분노는 높았으나 노조가 사측 어용노조로 변한 조건에서 투쟁의 방법을 상실했던 것이다.

A6 허근영(내외방직 노조위원장), 김증도(내외방직 후임 노조위원장), 이순희(내외방직 사장), 백정기(김증도 해고 이후 후임 노조위원장)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401-402쪽/김사육, 앞의책, 26-28쪽

A9

A1 사사오입개헌파동

A2 1954. 9. 6-12. 4

A3 1954. 9. 6. 헌법개정 초안위원회가 작성한 개헌안 국회제출/1954. 9. 8. 정부, 개헌안 공고/1954. 11. 18, 정부, 개헌안 국회본회의 상정/1954. 11. 27. 국회표결 결과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1954. 11. 28. 이기붕 국회의장, 의원총회 소집, 부결안 가결로 번복결의/1954. 11. 29.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총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단독의 가결통과

A4 5.26정치파동을 거쳐 발췌개헌안을 계엄하의 공포분위기에서 통과시켜 직접선거로 제2대 대통령에 재선된 이승만은 발췌개헌안에 공을 세운 족청세력에 대해 1953년 9월 성명을 발표, “파벌을 형성하여 반당행위를 하는” 족청파를 축출하고, 당의 쇄신을 지시, 이기붕을 자유당의 제2인자로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직계의 자유당체제로 돌입했다. 이후 이승만은 중임으로 제한한 헌법조항에 반하여 개헌을 통해 삼선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3대 민의원 선거 2달을 앞둔 1954년 4월 경 출처불명의 개헌취지서가 나돌면서 여당국회의원 및 일부 무소속의원에게 서명공작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 개헌취지서의 요지는, ‘대통령의 종신집권, 국민의 국정발의권, 선거민의 의원 소환권, 헌법개정 및 국체변혁에 관한 중대사항의 국민투표제, 정부의 민의원 해산권’ 등이었다. 이와 같은 출처불명의 개헌공작에 발맞추어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4월 6일 자유당에, ‘개헌 조건부로 입후보자를 공천하라’ 고 지시했다. 그결과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총 203석의 선거구 중 181개구에 공천후보자를 내 114석을 획득, 민국당의 15석, 무소속의 67석, 기타 6석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과정에서 정부와 자유당은 관권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발췌개헌 때 저항이 강했던 야당과 무소속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하여, 조봉암은 등록서류를 괴한들에 탈취당하여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3대 국회선거 후 자유당은 곧 이기붕·임철호·윤만석·한희석·장경근(張璟根)·한동석·조용순(법무장관)·백한성(白漢成, 내무장관)·박일경(朴一慶, 법제국장) 등 9명을 개헌안 초안위원으로 선임하는 한편, 대대적인 개헌공작을 위해 의원포섭에 나섰다. 이 포섭공작은 자유당 비공천당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밖에 선거 빛을 진 의원들에게 자금지원, 용자알선을 통한 회유, 포섭에 불응할 경우 선거사범에 처할 위협 등의 수단이 동원되었고, 그 결과 자유당은 개헌선인 136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A5 국회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에 이기붕, 부의장에 최순주(崔淳周)·곽상훈(郭尙勳, 무소속동지회 소속)을 선출한 자유당은 이어 14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점한 후 1954년 9월 6일 헌법개정 초안위원회가 성안한 개헌안을 자유당 소속의원 135명(김두한의원은 서명불참)과 무소속의 윤재욱(尹在旭)의원 등 136명이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9월 8일 이 개헌안을 공고하였다. 이 개헌안의 주요 개헌안의 주요 조항은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제한 조항 철폐 ▲ 국민에게 헌법 개정 제의권 부여 ▲ 국무총리제 및 국무원의 연대책임제 폐지 및 국무의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불신임권 부여 ▲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 ▲ 경제조항의 개정 등이었다. 민국당과 언론, 지식인들의 반발과 개헌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과 이승만정부는 1954년 11월 18일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거리에는 개헌안 조속통과를 촉구하고 민국당을 용공시하는 벽보가 등장하였다. 11월 18일 상정된 개헌안은 본회의에서 격렬한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11월 27일 끝내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결과는 출석의원 202명(재적 203명중 양일동의원만 반대선언하고 퇴장)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나타나 개헌정족수에 1표가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그러나 경무대방문을 마친 이기붕은 다음날인 28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개헌안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가결된 것이고, 부결선포도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 203명의 2/3는 수학적으로 135.333...인데, 0.333...에서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의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으로 이를 버리면 203명의 2/3는 135명이 된다” 고 보고하여, 의원총회에서 부결선포를 번복 결의하였다. 이후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자유당은 27일 부결선포를 가결로 번복하였고, 이에 격분한 야당은 힘으로 저지하려 하여 여야의원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

다. 끝내 야당의원이 총퇴장한 가운데 자유당의원 전원과 무소속의 강세형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25명중 김두한·민관식 등 두의원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부결선포 번복 가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의 3선출마의 길을 연 이 개헌안은 이와 같이 공포되었으나 그 파문은 컸다. 소동의 장본인인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인책사표를 제출, 자유당 단독국회에서 수리되었으며 퇴장한 민국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 중 61명은 「호헌동지회」를 구성하여 신당결성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자유당은 자유당의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혐의를 받던 도진희·박영중·김두한의원 및 탈당의 우려가 있던 김지태·김형덕 의원 등을 제명처분하였다. 이러한 파문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야당이 등원을 거부함을 틈타 오히려 단독국회를 더욱 강행해 나갔고, 야당은 12월 4일부터 자유당의 단독국회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다고 국회에 출석함으로써 사사오입개헌은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말았다.

A6 최순주(국회부의장, 개헌안통과선포) 등

A7

A8 진덕규·한배호·김학준 외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428-432쪽

A1 철도노련 임금인상 투쟁

A2 1954.12.27-1955.1.26

A3 1954.6.30. 철도노련 제7회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집행부 조직개편/1954.12.27. 철도노련, 임금인상 골자 요구조건 제시, 쟁의 제기/1955. 1. 14.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중앙쟁의위원회를 구성, ‘민주주의에의 고발’ 성명 채택/1955.1.26. 쟁의종결

A4 1954년 6월 30일 철도노련 제7회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집행부의 조직을 개편한 철도노련은 1954년 12월 27일 임금인상 요구를 골자로 하는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쟁의를 제기하였다.

A5 철도노련이 제시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통상임금인 전시수당을 현 기본임금에 가산하고 기본액의 10배를 인상할 것, ② 1954년도 예산으로 통과된 195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대우개선 인상액의 미지불금 반액을 지급할 것(조합원 27,000명에 대한 미지급액 1억 689,000환) ③ 가족부양 양곡의 적기 배급과 일률적인 배급제도를 실시할 것 ④ 현장 후생시설을 완비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를 실시할 것 ⑤ 근로조건을 통해 인권옹호를 기할 것. 이상과 같은 요구조건에 쟁의제기를 관계 당국에 통고한 철도노련에서는 1955년 1월 14일에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쟁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주의에의 고발’이라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교통부에서는 철도부문 노동자들의 쟁의를 처음에는 공무원의 쟁의제기 불가 방침 담화를 발표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노동자들의 일관된 태도로 인해 법정 냉각기간 만료 10일전인 1955년 1월 26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타협하여 쟁의를 종결시켰다. ① 철도노무자에 대해 1955년 1월부터 전시수당을 현 기본급에 가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하기로 하고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실현토록 노력한다 ② 철도노무자에 대해 5천환 베이스의 임금지불을 1955년 1월부터 소급 실시한다 ③1953년도 예산으로 통과된 1월부터 3월까지의 대우개선 인상액의 반액 지불금은 쌍방이 실시 불가피함을 인정한다 ④가족부양 양곡의 적기배급과 일률적인 배급실시를 기한다 ⑤현장 후생시설과 의료시설은 계속 완비하도록 한다 ⑥노동조건을 통해 인권옹호를 기하며 그 최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A6

A7

A8 철노삼십년사편찬위원회, 『鐵勞三十年史』, 전국철도노동조합, 1977, 68쪽/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398쪽

A9

A1 南鮮電氣 노동조합 결성투쟁

A2 1955.2-1956. 2. 23

A3 1953. 9. 16 남선전기 노동조합 결성대회 예정, 그러나 사측의 방해로 저지당함/1955. 2, 다시 노조

결성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2월 19일을 노조 창립일로 예정하고 준비, 사측이 노조결성 주동자들을 분산 발령, 해고 등 방해공작/1955. 2. 25. 노조 결성준비위는 회사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남선전기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거행, 서울시 당국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 2. 24. 사측이 노조 결성준비위원인 신현수(申鉉洙), 용희창(龍熙昌), 김경호(金敬浩), 김진규(金鎭圭) 등 4명을 사규위반이란 구실로 징계 면직처분/2. 28. 노조측이 조합원 4명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쟁의 발생을 신고, 국회에 진정서 제출/7. 8. 국회 제20차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남선전기 사측의 부당조처 등을 철회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1955. 8. 18. 당국과 국회 결의안에도 불응하던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로 쟁의 발생한지 5개월만에 쟁의조정안이 결정/1955. 11. 19. 대한노총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남전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 남전측이 국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할 것을 결정, 실력투쟁 불사할 것 결의/1955. 12. 9 박만서 사장은 상공부 장관 입회 하에 대한노총 최고위원인 정대천(丁大天)과 남선전기노조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 조합측과 새노조결성에 협의할 것 결정/1956. 2. 23. 각 지부 대의원들이 모여 제1회 대의원대회를 개최, 임원을 선출한 결과 그동안 사측의 탄압속에서 투쟁해 온 신현수가 위원장으로 선출 돼 노조결성 투쟁 마무리.

A4 남선전기주식회사는 상공부 산하 귀속 기업체였는데 이승만이 하와이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던 박만서(朴萬西)가 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박만서 사장은 노동운동에 호의적이지 않던 사람으로, 이승만을 배경으로 노동운동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려 하였다. 1949년 조선전업노조가 결성되자 남선전기에서도 자연히 노동조합 결성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6.25전쟁을 맞아 조합결성 문제는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A5 1953년 3월 노동조합법이 결성된 뒤 남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 노조 결성을 추진한 결과 그해 9월 16일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박만서 사장은 “이왕 남전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바에는 남의 회사 사무실을 빌려서 할 수야 있느냐? 대 남전의 체면에 관한 것이니 몇 일만 더 기다려 남전 본사 강당에서 결성대회를 갖도록 할 것이며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니 그렇게 해달라” 고 저지했다.

당시 남선전기주식회사 본사 사옥은 미8군이 사용 중이었고 남전은 서울화재보험회사의 건물을 빌어쓰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 준비위원측은 회사측의 말에 따라 노조 결성대회를 당분간 미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차측은 노조 결성대회가 일단 중지되자 전면적인 방해공작을 개시하였다. 노조 조직에 주동적 역할을 한 김진규(金鎭圭)를 전남으로 전출시키는가 하면 회사 간부를 총동원하여 노조결성 주동자들을 감시규제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회사의 방해공작으로 2년 여 동안 노조결성 움직임이 침체되었으나 1955년 2월 초 다시 노조결성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2월 19일을 노조 창립일로 예정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종업원들에게 노조 결성을 반대한다는 날인 공작을 전개하는 한편, 결성 주동자들에 대한 승진 또는 좌천의 형식으로 분산 발령하여 노조 결성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노조 결성준비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동 2월 25일 남선전기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거행, 서울시 당국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여 설립신고증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박만서 사장은 노조 결성준비위원인 신현수(申鉉洙), 용희창(龍熙昌), 김경호(金敬浩), 김진규(金鎭圭) 등 4명을 사규위반이란 구실로 2월 24일부터 징계 면직처분하였다. 노조측은 ①노동조합 결성에 앞장섰던 조합원 4명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를 할 것 ②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과 방해를 중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 이를 2월 28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쟁의발생을 보고했다. 그리고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옹호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노조측의 진정을 받은 국회는 보건사회부분과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① 남전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 간섭하지 않을 것은 물론 조합운영에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 ②남전은 신현수, 김경호, 김진규, 용희창 4명에 대한 면직 발령을 취소하고 2월 10일 현재로 원상복귀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국회 제20차 본회의는 동 7월 8일 이것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다. 국회의 건의문을 받은 보건사회부와 상공부가 모두 국회 결의문과

같은 내용을 남전회사측에 통보하고, 사회여론도 비등해 지자, 박만서 사장은 정부지시에 따르겠다고 회답하였으나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 후 보사부에서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넘겨져 쟁의 발생한지 5개월이 넘은 1955년 8월 18일에야 겨우 쟁의조정안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① 이 쟁의는 평화적 해결을 기할 것 ② 회사는 4명의 노조원에 대한 면직 조치를 취소하고 8월 26일부로 전근 사령을 교부할 것 ③ 노조 임원은 사규를 존중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또다시 이 조정안마저 거부하였고 쟁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회의 결의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한 박만서 사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여 사측이 조직한 정한기(鄭漢基)를 중심으로 한 어용적인 제2 노동조합을 통해 기성노조의 붕괴를 획책했다.

남선노조에 대한 탄압행위가 계속되자 대한노총은 55년 11월 19일 제1차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남선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전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남전측이 국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12월 15일까지 실천하지 않을 경우 전 조직력을 동원 실력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대한노총의 결의가 발표된 후 국회 보사부와 위원회는 남전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압력을 가했고, 보사부는 남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남전회사의 관할 관청인 상공부의 김일환(金一煥) 장관이 조정에 나서게 된다.

1955년 12월 9일 박만서 사장은 상공부 장관 입회 하에 경전노조위원장이며 대한노총 최고위원인 정대천(丁大天)과 남선전기노조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보고 12월 25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노동조합과 협조하기로 정식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즉 「 ① 노동조합을 인정하되 지방사업소에서부터 상향식 조직을 새로이 하여 정상적인 남선노조를 결성하라 ② 회사측으로 전향했던 정한기와 합작하라 ③ 파면은 취소하고 원상 복귀시키되 만일 그들이 조합임원으로 피선 안 될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임지로 부임하라」 는 것이었다.

박사장이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노조를 자신이 지지하는 정한기를 통해 주도권을 잡게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다음해 1월부터 지방 사업소부터 지부 조직을 착수하여 2월 23일 각 지부 대의원들이 모여 제1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한 결과 그동안 사측의 탄압속에서 투쟁해 온 신현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하여 남선전기 회사의 노동조합 결성투쟁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종결됐다.

A6 박만서(朴萬西, 남선전기 사장), 신현수(申鉉洙, 노조 결성준비위원), 용희창(龍熙昌, 노조결성준비위원), 김경호(金敬浩, 노조결성준비위원), 김진규(金鎭圭, 노조결성준비위원), 정한기(鄭漢基, 사측 어용노조위원장)

A7

A8 전국전력노조, 『電勞 10年史』, pp.97-105/'회사측 상대로 소송제기 준비. 남선전기 勞資 분쟁'(조선일보, 1955.10.07(조간3))/ '노조조직 방해, 남선전기 마산지점 조사' (조선일보, 1955.10.08(조간 3))/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 남선전기 지점사건 "당국서 판정" (조선일보, 1955.10.18(조간 3))/ '법이나? 社規냐? 남전 노조분규에 당국 강경태도(조선일보, 1955.10.19 조간 3)'/ '확증 잡고도 "우물쭈물". 남선전기 고발 하겠다는 보건사회부 (조선일보, 1955.11.03 조간3)'/ '말뿐인 행정당국에 앞서 남선전기를 노총서 고발. 19일 열린 중집위서 결정 (조선일보, 1955.11.21 조간 3)'/ 국정감사반도 회사 책임 추궁 (조선일보, 1955.11.30 조간 3)'/ 남선노조사건 1년만에 겨우 해결 (조선일보, 1955.12.11 조간 3)/김낙중, 앞의 책, 200-203쪽

A9

A1 동아일보 오식(誤植) 필화사건

A2 1955. 3. 15- 1955. 4. 16

A3 1955. 3. 15, 「동아일보」 1면에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중' 의 제목으로 誤植기사 실림/1955. 3. 17, 공보실, 「동아일보」 무기정간처분/1955. 3. 20, 동아일보 정리부장 권오철과 문선공 원동찬을 국가

보안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입건/1955. 4. 16, 무기정간 해제

A4

A5 1955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석유협정 관계를 다룬 기사의 제목에 엉뚱하게 ‘괴뢰’ 라는 글자가 잘못 끼워 넣어져 있었다. 1면의 2단 짜리 ‘고위층 재가 대기중 한미 석유협정 초안’ 이라는 제목 위에다 다른 기사 제목에 쓰기 위해 채자해 두었던 ‘괴뢰’ 라는 두 자를 착오로 첨가하였던 것이다. ‘괴뢰’ 라는 단어는 같은 페이지의 ‘괴뢰 휴전 위반을 미 중대시’ 에 쓰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정판공(整版工)의 실수로 다른 기사 제목 위에 첨가된 것이었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과정에서 잘못 끼여들어간 실수였다. 그러나 신문 지상엔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중’ 이라는 정말 엉뚱한 내용으로 찍혀졌고, 대통령이 괴뢰가 되어 버린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되었다. 당시 신문들이 썼던 ‘고위층’ 이라는 말은 보통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통례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이 실수를 발견한 즉시 연판(鉛版)을 수정하여 재인쇄하는 한편, 잘못 인쇄된 신문을 폐기처분하고, 이미 가판(架板)에 나간 신문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즉각, 수정 인쇄된 신문에 사고(社告)를 통해 오식으로 인한 실수를 정중히 사과하고, 가판에 나간 신문 회수에 나서, 2백 부 상당이 독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량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당국은 평소 『동아일보』의 친야적 논조를 내심 불쾌하게 여겨 오던 차에 오식 사건이 일어나자, 물실호기(勿失好機)로 신문이 발간된 지 5일 후인 3월 20일 정리부장 권오철과 문선공 원동찬을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입건, 이어 3월 17일에는 공보실에서 『동아일보』를 무기 정간 처분했고, 정간 한달 뒤 『동아일보』는 법무부와 공보실의 공동담화에 의해 4월 16일 정간이 해제된다.

A6 불구속 : 권오철(동아일보 정리부장, 국보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원동찬(동아일보 문선공, 국보법 및 명예훼손)

A7

A8 ‘정간명령서’ 김삼웅, 『韓國曲筆史』, 동광출판사, 1987, 44쪽/ ‘정간해제담화문’ (법무부, 공보실), 김삼웅, 앞의책, 44쪽

A9

A1 제8차 大韓勞總全國代議員大會

A2 1955. 4. 1-1955. 9. 15

A3 1955. 4. 1.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1955. 4. 14. 철도노련의 이강연 등 8차 대회 투표권 행사 거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대의원대회 재소집을 요구/1955. 8. 보건사회부의 중재로 대의원대회 재소집 결정/1955. 9.15. 대의원대회 재개최, 최고위원으로 정대천, 김주홍, 이준수가 선출되고 사무총장에 이강연이 선출됨/1955.10. 27. 사무총장에 선출된 이강연이 타살로 발견됨

A4 1955년에 들어서자 4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노총 연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총 산하 개 산별 연맹 중 철도연맹과 전업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연맹(즉, 광산노련, 섬유노련, 미군종업원노조, 전국자유노련, 부산조양사노련, 전국해상노련)은 현재 대한노총 최고위원들이 지나치게 관권(官權)과 타협한다는 불평을 터뜨리며 강력한 산별 노동단체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A5 1955년 4월 1일, 서울 청운동체육관에서 480명의 노조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종래 최고의원이었다던 김주홍, 김두한 등이 제외되고, 최고위원으로 전업노련 위원장 정대천, 광산노련 위원장 이준수, 철도노련 감찰위원장이며 서울철도국노조 위원장인 김용학(金龍鶴)이, 사무총장에는 섬유노련 위원장 김순태(金舜泰)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4월 14일에 철도노련 부위원장 이강연(李康演)을 비롯한 24명의 대한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등이 이번 8차대회 투표권 행사에 부정이 있었다고 지적하여, 이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전국대의원대회의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중 정대천은 수락하였으나 이준수와 김용학은 반대하였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4월 1일의 대회에서 일부 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의 일체 결의사항을 무효로 결의하였고, 보건사회부에서도 대회의 결의사항을 취소하

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이준수, 김용학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의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한 김주홍이 참석한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보사부의 취소명령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55년 8월에 최고위원 중 이준수가 보사부의 조정에 응함으로써 보사부 장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정대천과와 함께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재소집에 응함으로써 김용학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 41명의 전국대의원 중 35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운동 체육관에서 대회가 재개되었다.

대회에서 최고위원 등 임원 재선거가 실시되어 최고위원으로 정대천, 김주홍, 이준수가 선출되고 사무총장에는 이강연이 선출되었다. 그런데 4월 1일의 대회를 무효화하는데 앞장섰으며 9월 15일의 대회에서 사무총장직에 선출된 이강연은 1955년 10월 27일 서울 삼청공원에서 타살(打殺)에 의한 변사체로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강연의 살해자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대한노총의 파쟁사는 계속되었다.

A6 8대 대의원 최고위원 : 김용학(철도노련 감찰위원장/서울철도국노조 위원장, 최고위원 초선), 사무총장: 김순태(섬유노련 위원장), 재선출결과 사무총장에 이강연(철도노련 부위원장)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395-396쪽

A9

A1 구국동지청년회사건

A2 1955. 7. 5

A3 1955. 봄, 이천재 주도의 비밀학생조직인 ‘구국동지청년회’ 결성/1955. 7. 5. 육군특무부대에 의해 ‘구국동지청년회’ 소속 회원 9명 체포.

A4

A5 1955년 봄, 독립노동당 청년특위 소속 이천재, 이춘희 등과 각 대학 소속학생들인 이민우, 정태철(경희대), 오연환(동국대), 한상섭(단국대) 등, 안성지역 유학생회장인 이체병, 그 외 장교선, 맹의제, 성장환, 박봉희, 안명주, 유성하 등이 모여 비밀조직체인 ‘구국동지청년회’를 결성하였다. 조직은 첫째, 정당적 독선과 계급적 사회제도를 부인타파하고 공공선을 기필할 수 있는 정치실현, 둘째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 셋째 국제호혜평등과 군사-문화-경제적 침탈의 부인배제 등의 3대 원칙을 기저로 강령을 작성하였다. 조직의 주된 활동은 정치경제학 이론서와 사회과학 일반서를 학습-토론하는 한편, 각 지방 유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대상을 확대해 갔다. 그러던 중 1955년 7월 5일 육군특무부대에 의해 ‘북한괴뢰집단의 使嗾아래 대한민국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무력폭동과 국내혁명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이천재를 포함한 조직원 9명이 체포, 구속. 동 조직의 총무인 이천재는 육군형무소에서 3년 5개월 복역 후 1958년 8월 만기출소.

A6 구속: 이천재, 정태철, 권태현, 성장환, 이춘희, 오연환, 박봉희, 한명주, 한상섭

A7

A8 이천재 회고록, 『희망』, 대동, 1993. 250-270쪽/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8, 301쪽

A1 대구매일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말라’ 필화사건

A2 1955. 9. 13-1956. 5. 8

A3 1955. 9. 13, 『대구매일신문』에 사설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실림/1955. 9. 14. 국민회 경북지부와 자유당 경북 감찰부장 등 약 20여명의 청년들이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 1955. 9. 17. 사설을 집필한 최석채 주필을 전격 구속/1955. 10. 14. 최석채씨 불구속 기소/1955. 5. 8. 대법원판결로 무

최확정

A4 천주교 대구교구에서 경영하는 『대구매일신문』은 대부분의 지방신문들이 친여적(親與的)인데 비하여 자유당 정권의 폭정과 비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야당적인 논조를 펴는 정론지였다.

A5 『대구매일신문』 필화의 발단은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1955년 9월 13일자 사설이었다. 이 사설은 당시 최석채(崔錫采)주필이 집필한 것으로, 사설에서 최석채(崔錫采)는 고관(高官)의 출영과 각종 행사에 학생을 강제 동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것이 당시의 적성감시위원단(敵性監視委員團) 축출운동을 비난한 이적행위라고 하여 사설이 나간 다음날인 14일 오후, 국민회 경상북도 총무차장 김민(金民)과 자유당 경상북도 감찰부장 홍영섭(洪永燮) 등이 약 20명의 청년을 데리고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하여 사원들에게 증경상을 입히고 인쇄시설을 파괴한 후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매일신문』사에서는 사전에 습격 정보를 입수하고 남대구서에 경호를 부탁했으나, 경찰은 형사 2명을 파견했을 뿐 별다른 대비를 해주지 않는 가운데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당국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사설의 필자를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7일 전격 구속했다. 자유당 정부는 테러범들은 소재불명이란 구실로 체포하지 않고, 엉뚱하게 최 주필을 구속한 것이다.

한편 애국단체연합회라는 어용단체에서는 이 사설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이적신문인 『대구매일신문』을 변호하는 사람은 이적행위자로 간주’ 하겠다는 협박장을 시내에 내붙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어 조사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당의 박순석 의원은 ‘이 사건은 테러가 아니라 의거다’ 라고 주장하였고, 역시 자유당 최창섭 의원은 ‘애국심에 불타서 테러를 한 청년들에게는 국가의 훈장을 수여해야 할 것이로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만큼 그들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우자’ 고 하는 식의 망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매일신문』은 정부나 테러단의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테러가 있었던 다음날 신문은 인쇄시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임시 판형인 타블로이드판으로 찍어내면서도, 테러의 주체는 자유당과 국민회 간부라고 못박고, 사건의 상세한 보도와 함께 문제된 13일자의 사설을 그대로 다시 재록(再錄)하여, 이 사설이 어째서 이적행위인가를 독자들에게 물었다.

구속된 최석채는 테러사건이 있는 지 한달 만인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로 석방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제 4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56년 5월 8일 대법원장 김병로를 비롯한 대법관 전원 합의로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경북도경 사찰과장 신상수의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라는 유행어를 유포시켰으며, 해방 후 필화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최초의 사건이었다.

A6 구속: 최석채(崔錫采, 대구매일신문 주필, 국보법 4조 위반 기소 후 무죄)

테러 관련자 : 김민(金民, 국민회 경북 총무처장) 홍영섭(洪永燮, 자유당 경상북도 감찰부장) 기타 : 신상수(경북도경 사찰과장)

A7

A8 사설, ‘학도를’ 도구 ‘로 이용하지 말라’ (대구매일신문, 1955. 9. 13)-김삼웅, 『한국곡필사』동광출판사, 1987, 47-49쪽/ ‘대구매일 진상규명안도 제출. 개최된 국회의 활발한 움직임’ (조선일보, 1955.09.17 (3))/ ‘대구매일 습격은 "테러". 鄭雲甲내무차관, 현지보고에 언급’ (조선일보, 1955.09.20 (3))/ ‘1대구매일 최錫采주필에 무죄를 언도’ (조선일보, 1955.12.07(3))/해방30년사 편찬위원회, 『해방30년사』, 1975, 762-765쪽/김삼웅, 『한국 곡필사』, 동광출판사, 1987, 44-48쪽/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47쪽/진덕규·한배호·김학준 외 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432-436쪽.

A9

A1 대구 대한방직 쟁의

A2 1956. 1. 5-1960. 4. 19

A3 1956. 1. 5. 대한방직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어용노조간부 축출, 김상연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

출하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쟁의 돌입 결의/1956. 3. 29.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노조위원장 김상연은 위원장직을 자진사퇴, 투쟁을 포기하였고, 노조 간부와 열성 조합원 13명이 해고조치됨/ 4. 2. 조합원들은 노조대의원대회를 열어 배형(裴亨)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쟁의 관철을 위해 투쟁 결의/4. 3. 사측이 무장 경관 20명을 동원, 노조사무실을 점거, 폐쇄하고, 노조원들의 시위에 대해 총대로 난타 해산을 강요/6. 1. 사측의 노조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하자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6. 19. 국회 조사결과 보고, 사측의 부당성 지적, 노조측 요구의 정당성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 5개월여의 심의 끝에 12월 10일에야 「해고자를 복직 시키라」는 내용의 조정안이 사측에 제시/1957. 2. 28.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사측이 거부하자 보사부 당국이 설경동사장을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1957. 4. 13. 한편, 위원장 배형을 중심으로 해고된 대한방직 노조 간부들이 설경동 사장을 서울지방법원에 ‘복직 및 해고 후의 임금 지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재판 진행 중이던 1960년 4.19를 맞아 설사장은 과거에 부당하게 퇴직당한 노동자들을 모두 복직 조치, 노조측은 소송을 취하하여 쟁의는 종결됨

A4 조선방직의 대구공장을 전신으로 1955년 당시 자유당의 재정부장직을 맡고 있던 설경동(薛卿東)이 권력층과 결탁하여 불하받은 후 대한방직으로 변모하였다. 설경동은 1956년 5월 20일 노동자들을 1인당 1개월분의 노임액을 퇴직금으로 지불하고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전원 해고조치하였다. 이에 분개한 노동자들은 회사정문 앞에서 시위투쟁을 벌인 결과, 사측이 1,300명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약속으로 무마하였다. 그러나 그해 연말 설경동은 자기 측근자를 중심으로 겨우 200명 가량의 노동자들만 재고용하고 용노조를 만들게 하였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강화하여 사측으로부터 600명의 종업원을 재고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재고용된 노동자들은 모두 12시간 노동과 사측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A5 1956년 1월 5일 노동조합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어용 노조 간부들을 축출하고 새로 김상연(金相淵)을 위원장으로 선출, 뒤이어 2월 1일 종업원 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쟁의 돌입을 결의하였다. 「① 현 임금 4,500환을 최저 25,000환 수준으로 인상할 것 ② 불하 당시 재채용예정자로 회사측이 공약한 1,392명을 즉시 완전 채용할 것 ③ 기업주측의 노동운동 간섭을 배제할 것 ④ 발전기 고장으로 휴업한 날에 대한 법정 보상금을 지불할 것 ⑤ 부당해고자에 대하여 즉시 해고조치를 철회할 것 ⑥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조합 출입을 방해하고 외부로부터 폭력배를 끌어들여 조합에 협조하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일삼았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대한노총에 대해서는 실천의향도 없이, 제1차로 1956년 3월 1일, 또 2차는 동년 3월 12일 노조측과 적당히 합의해 놓고 뒤로는 노조간부들을 매수와 협박으로 굴복시키는 공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당시 노조위원장 김상연은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여 투쟁을 포기하였고, 노조 간부와 열성 조합원 13명은 협정 이행을 촉구한다 해서 3월 29일 해고조치되고 말았다.

이에 분개한 조합원들은 4월 2일 노조대의원대회를 열어 배형(裴亨)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신임 노조위원장을 포함, 38명의 노조 간부 및 열성 조합원을 또 해고하였다. 그리고 3일부터는 무장 경관 20명을 동원, 노조사무실을 점거, 폐쇄하였으며 노조원들의 시위에 대해서는 총대로 난타 해산을 강요하기도 했다.

대한방직 쟁의에 대한 사측의 탄압과 여론이 분분해지자 국회는 6월 1일 본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의 파견이 결의되었고, 조사결과가 19일 국회에 보고되었으며, 국회는 대구방직회사가 취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정당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대정부(對政府)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보사부는 3,4차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알선안을 마련, 노사 쌍방에 교섭을 시작하였다. 즉, ① 회사는 1956년 3월 1일 및 3월 12일자 협정 중 임금인상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② 회사는 1956년 2월 2일 이후 의원면직자 이외의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 등이었다.

이 안이 성문화되어 대한방직 설경동 사장에게 제시되었으나 설사장은 알선안 마저도 무시 거부하였다. 이에 보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회의 5개월에 걸친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 10일에야

“해고자를 복직 시키라”는 내용의 조정안이 사측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재정부장으로 이승만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설 사장은 국회도, 보사부도, 중앙노동위원회의 모든 중재안도 무시하였다. 결국 보사부 당국은 1957년 2월 28일 설경동사장을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승만 권력의 비호하에 있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검찰측의 미루기 작전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설 사장의 횡포에 쫓겨난 100여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한노총 대구지구 연맹을 근거지로, 대구지구 연맹 김말룡(金末龍) 위원장의 지도하에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위원장 배형을 중심으로 해고된 대한방직 노조 간부들은 1957년 4월 13일 설경동 사장을 걸어 서울지방법원에 ‘복직 및 해고후의 임금 지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원고측인 노동자들은 소송비용이 없으니 승소할 때까지의 경비를 법원이 우선 부담해 달라는 소송구조(訴訟救助) 신청을 내, 1,2심은 물론 3심의 대법원까지도 이 신청은 수락된다. 한편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해고후의 임금지불을 청구한 본안 소송은 제1심에서 기각되어, 제2심에 항소하였는데 2심 판결이 나기에 앞서 1960년 4.19를 맞게 된다. 4.19 이후 설사장은 과거에 부당하게 퇴직당한 노동자들을, 원하는 자는 모두 복직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노조측은 소송을 취하여 쟁의는 종결되기에 이른다.

A6 설경동(薛卿東, 대한방직 사장), 김상연(金相淵, 대한방직 노조위원장), 배형(裴亨, 신임노조위원장)

A7

A8 ‘쟁의종결협약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420/‘국회사회보건위원회의 견해’-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p.421-422/‘소송 공판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423/‘대한방직에 총파업 소동. 임금 인상 쟁의’ (조선일보, 1956.01.31 조각3)/“폭행 때문에 해고?” 대방, 노조측을 반박 (조선일보, 1956.06.02 석간 3)/“근로자 권익을 전혀 무시” 大紡사건에 국회 보건분위 보고 (조선일보, 1956.06.20 석간 3)/‘해고자의 복직 여부 주목. 대한방직 쟁의 잔여임금만 지급’ (조선일보, 1956.07.12 조각2) / ‘대한방직 분류에 당국서 알선’ (조선일보, 1956.07.12 석간 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402-404/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해방후편-, 청사, 1982, 203-205쪽

A9

A1 石炭鑛 노동자들의 쟁의

A2 1956. 1. -1957. 4. 8

A3 1956. 1. 석탄광노조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투쟁을 재개/1956. 6. 10. 석탄공사측이 임금인상 불가입장을 취하자 탄련 위원장 김정원을 비롯, 100여명의 노동자가 상경, 일대 시위투쟁 전개 /6. 11. 석공측이 상공부장관 입회하에 타협안 제시/1956. 11. 2. 6월의 타협안이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월까지도 임금인상이 되지 않아 노조측은 쟁의 결의,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체불임금 지불 등 요구/1956. 12. 30 국회에서 탄가(炭價)인상이 결의, 그 여세로 노조는 쟁의행위 투표를 완료하여, 파업돌입할 자세로, 사측과 교섭진행/1957. 4. 8. 석공측은 탄련 위원장이 제시한 최종안에 따를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에 조인, 쟁의는 노동자들의 승리로 완결

A4 석탄광노동조합연합회는 1954년도에 체불임금의 지불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 약간의 임금인상을 쟁취하였으나, 그 뒤에도 체불임금이 누적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로 최저 생활의 유지가 곤란하게 돼 1955년 9월 다시 쟁의를 제기하였으나 대통령의 긴급조치령에 의해 쟁의는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5 1956년 1월 석탄광노조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투쟁을 재개하였다. 먼저 노동자들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노조대표가 상공부장관, 석탄공사 총재, 군과견단장 등을 방문하고 요구관철까지 실력 행사에 돌입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석탄공사측은 탄가(炭價) 인상이 국회에서 승낙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

수하였다.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탄련(炭聯)위원장 김정원(金正元)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노동자가 당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56년 6월 10일 서울까지 상경하여 일대 시위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노동자들의 지나친 생활난과 강경한 투쟁자세 앞에서 상공부 및 석공측은 1956년 6월 11일 상공부 장관 입회 하에 ① 1956년 6월 21일부터 출근자에게는 임금인상 실현될 때까지 1인당 쌀 1되5홉씩을 지급한다 ② 단체협약은 상호 성의로써 체결에 노력한다는 합의서에 조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공측은 6월 21일의 약속을 어기고 1인당 쌀 1되 5홉씩 준다던 것을 쌀과 잡곡을 6대 4의 비율로 섞어 주었으며, 그나마 9, 10월에 이르러는 임금인상도 되지 않은 채 배급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1956년 11월 2일 다시 쟁의를 제기하여 다음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① 상공부장관 입회 아래 협정한 쌀 1되5홉을 즉시 지급하라 ② 3개월분 미불노임을 즉시 청산하라 ③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인상을 즉각 이행하라」 등이었으며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휴일(週休日)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 등 몇가지 첨가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으로 노조는 국회, 정부, 언론기관들에 불합리한 석탄가격으로 위기에 처한 석탄산업의 실정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1956년 12월 30일에는 석탄가격 인상이 국회에서 결의되었다. 그 여세를 몰아 노동조합은 실력행사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투표를 완료하여,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회사측에 강력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결국 1957년 4월 8일 석공측은 탄련 위원장이 제시한 최종안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고 미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에 조인함으로써 쟁의는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A6 김정원(金正元, 炭聯위원장)

A7

A8 '성명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24쪽 부록 5-10/ '협정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25쪽/ '최저 생활보장 하라. 석탄광 노조서 각계에 호소' (조선일보, 1956.06.06 (2))/ '밀린 양곡을 달라. 석탄광 노조의 태도 강경' (조선일보, 1956.11.03 (조간2))/ '석탄광 조사보고등 합경위분위에 제출' (조선일보, 1957.11.05 (조간1))/ 대한노총경전노조, [勞動] 제4권 4호 및 제6권 2호/ 전국철도노동조합, 『鐵勞二十年略史』, p.27/ 김낙중, 앞의책, 208-210쪽

A9

A1 조국평화통일동지회사건

A2 1956. 8. 15

A3 1956. 5. 25. 기세문과 박용진이 비밀조직 결성을 위한 첫 모임을 가짐/ 1956. 5. 30 조직명칭을 '조국평화통일동지회' 로 정하고, 강령·선언문 등을 작성/ 1956. 7. 17. 광주 시내외 일대에 '선언문' 살포/ 1956. 8. 13. '민족의 살 길' 제하의 글을 광주일대에 배포/ 1956. 8. 15. 특무대에 의해 조직원 기세문, 박용진 등이 체포, 구속/ 1958. 8. 21. 기세문 출소

A4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 이후 진보당 등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일대에서 활동하던 진보적 평화통일운동조직인 '조국평화통일동지회' 에 대한 탄압과 주도세력 등을 구속한 사건

A5 1956년 5월 25일 광주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기세문이 경희대 전신인 신흥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미군 통역관을 지낸바 있는 박용진과 만나 진보적 평화통일운동 조직 결성을 모의한 뒤 조직결성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선전과 조직활동, 반제반파쇼 민족민주운동 등 자유당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전술을 협의하고 조직원 포섭활동으로 들어가 당시 조선대 학생이던 기영호와 동향 후배인 조두형, 이병호, 김용찬, 김춘희 등이 조직원으로 합류하였다. 1956년 5월 30일 저녁 본격적인 조직결성을 위해 모인 이들은 조직의 명칭과 강령·선언문 등을 채택, 조직의 명칭을 '조국평화통일동지회' 로 합의한 뒤, 선언문으로 '조국평화통일선언문' 을 작성하였다. 조직 결성 후 주요 활동으로 7월 17일, 위에서 작성한 선언문을 광주시내 전지역과 광주시외 일부

지역 등에 살포하였고, 이어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민족의 살 길’의 제목아래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 8월 13일에 광주 일대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 15일 오후 조직의 주동자인 기세문과 박용진이 특무대에 의해 체포되고, 이어 다른 관련자들의 연이은 체포로 동 조직은 와해되기에 이른다. 기세문은 1958년 8월 21일에 출소되었으나,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1971년 ‘통일혁명당 재건기도’ 사건으로 재구속되기도 하였다.

A6 기세문, 박용진, 안창신, 조두형, 기영오, 김춘희, 이병호, 김용찬

A7 1971 ‘통일혁명당 재건기도’ 사건

A8 ‘조국평화통일선언문’, 기세문, 「깊은 밤에 햇불을 들고」 『월간말』 1992, 7월, 223쪽/기세문, 앞의 글, 220-236쪽.

A1 철도노조 감원반대투쟁

A2 1956.8. 20

A3 1956. 8. 20. 전국철도노조조합장회의 개최, 감원대책 논의

A4 1956년 8월 정부기구개혁에 수반하여 감원설이 떠도는 가운데 철도부문에서도 일반행정관청과 같이 동일한 비율로 감원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5 철도노련측은 1956년 8월 20일 전국조합장회의를 개최하고 감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철도현장에서 인원부족으로 인해 철도노무자들이 초과근무를 행하는 실정에서 감원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부득이한 감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선행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①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② 현재 비능률적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교체정리 ③ 동일한 율(率)의 실시 ④ 피감원자에 대한 직업알선 등. 그리고 연맹 집합의장단(聯盟執監議長團) 및 각 노조위원장들로 하여금 철도현업원 감원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철도 현업원들에게는 희생자가 거의 없는 성과를 거두고 일단락되었다.

A6

A7

A8 '감원반대 성명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p.418-419, 부록 5-5

A9

A1 월북기도 간첩 김동식사건

A2 1956. 9. 6

A3 1956. 9. 6. 육군 특무대, ‘월북기도 괴뢰간첩 김동식사건’ 발표

A4

A5 1956년 9월 6일 육군특무부대는 ‘월북을 획책 중이던 간첩 김동식(金東植·29세), 안영승(安榮承·31세)과 배후인물로 진보당 창당위원 이용헌(李隆憲)과 이원승(李元承) 등을 검거’한 사실을 발표했다. 특무대의 발표에 의하면 ‘김동식과 안영승은 8·15후부터 남로당계열에서 활동하다가 6·25 이후 북한의 서울정치보위부에서 활동한 자로서 9·28 후 월북하여 평북 만포진에서 대남간첩 및 공작 교육을 받고 1951년 1월과 6월에 각각 남하하여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동시에 정치인에 대한 접근 공작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용헌과 이원승 역시 남로당계열에서 활동하다가 9·28 이후 남한에 잔류하여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관철할 기회를 엿보던 중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反美救國鬪爭同盟의 목적과 남한 진보당의 정치이념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동년 7월 8일 진보당에 입당, 창당위원으로 활동하고 7월 하순 안영승과 김동식을 알게 되어, 이들을 대구시 부근의 동일보육원(東一保育院)의 직원으로 가장, 잠복시키고 이들을 월북시켜 정치자금을 도입하려고 획책 ‘하였다.

A6 김동식(金東植·29세), 안영승(安榮承·31세), 이용헌(李隆憲), 이원승(李元承)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8, 309-310쪽.

A9

A1 제9차 大韓勞總全國代議員大會

A2 1956. 10. 10

A3 1956. 10. 10, 제9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A4

A5 대한노총 제9차 전국대의원대회는 1956년 10월 10일 서울농업은행 강당에서 429명의 대의원 중 419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임기(任期) 대회가 아니었던 만큼 임원 선거를 둘러싼 파벌투쟁은 야기되지 않았으며, 다만 1955년 10월에 변사한 이강연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경전노조 부위원장인 이상진(李相鎭)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고 1년간의 경과보고를 듣는 것으로 끝냈다.

A6 신임 사무총장 : 이상진(경전노조 부위원장) 선출

A7

A8 ‘결의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416쪽, 부록 5-3-1

A9

A1 삼척시멘트 노동자 쟁의

A2 1956. 12. 3-1956. 12. 16

A3 1956. 12. 3. 노조간부 31명이 상경, 체불임금 지불할 것을 요구/1956. 12. 10, 노동자들의 농성지속되자, 사측이 체불임금 지불을 약속/12. 11, 체불임금 즉시 지불에 대한 협정서 작성으로 쟁의 완료

A4 삼척시멘트 공장은 1956년 8월 강직순(姜直淳) 신임 사장이 취임한 이래 4개월 동안 노동자 임금 6,000만환을 체불한 상태였다.

A5 1956년 12월 3일 노조간부를 비롯한 31명의 노동자대표가 상경하여 직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4개월 간의 체불임금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쟁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서울의 삼척시멘트 사무실을 점거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강사장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10일까지 지불하고 나머지는 15일까지 지불할 것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 농성투쟁을 계속했다.

노동자들의 농성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자 보건사회부는 체불임금의 진상을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사측은 체불임금 중 3,500만환은 10일까지 나머지는 15일까지 완불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여 보사부의 고발을 보류토록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농성을 풀지 않고 10일까지 투쟁을 지속하자, 사측은 10일에 이르러 체불임금을 즉시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11일 아침 노자(勞資) 간 체불임금 즉시 지불에 대한 협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의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A6 강직순(삼척시멘트 사장)

A7

A8 "'삼척시멘트 노임문제 해결' 당국 언명'(조선일보, 1956.12.11(2))/ '체납노임 전액 지불을 요구. 삼척시멘트 종업원들 농성 계속' (조선일보, 1956.12.08 조간2)/ '노임체불 당국조사 착수. 삼척시멘트' (조선일보, 1956.12.06 (석간3))/ "'밀린 임금을 달라" 삼척시멘트 노무자들 본사서 농성(조선일보, 1956.12.05 (석간3))/김낙중, 앞의책, 209-210쪽

A1 仁川 P. O. L 勞働者 不當解雇 반대투쟁

A2 1956. 12- 1957. 1. 12

A3 1956. 12. 인천의 평화공사(미군 유류역업)가 계약기간 종결을 이유로 460명의 노동자를 해고함 /1957. 1. 4 노조대표 이한일 등 55명의 노조원들이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귀투쟁 전개/1957. 1. 7 보사부의 알선으로 해고노동자 중 310명의 정상복귀, 나머지 100여명의 복귀는 수락 거부/1957. 1.

11 직장복귀 거부된 80여명의 노동자들이 상경, 복귀를 호소했으나 성과연지 못한채 사건 종결
A4 인천의 미군 유탄역업을 맡고 있던 평화공사(平和公司)가 1956년 12월 노무계약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과거 7년동안이나 기름 하역작업을 맡아오던 460명의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인천부두 노동자들을 새로 채용한 사건이 발단되어 발발.

평화공사측은 하역작업을 담당하던 이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인천 자유노조 연맹에 가입,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쟁의를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자 이들을 전원 해고하고 사용자측에 유리한 부두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했던 것이다.

A5 해고된 노동자들은 자기들에 대한 해고가 쟁의를 제기하고 있는 기간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지적하고, 노조대표 이한일(李漢鎰)을 비롯 55명의 노동자 대표를 서울로 파견, 적극적인 직장 복귀투쟁을 전개했다. 1957년 1월 4일 서울로 올라온 노동자들은 보건사회부 장관실에 모여 농성을 하고, 해고 경위를 설명, 직장 복귀를 위한 알선을 요청하였다.

보건사회부는 알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평화공사측도 보사부의 조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회사측은 해고된 노동자들 중에 310명의 직장 복귀를 수락했으나, 근속기간(勤續其間)이 짧은 100여명의 노동자는 직장 복귀가 수락되지 못했다.

뒤이어 1월 11일 직장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80여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 대한노총 본부와 보사부 장관실을 찾아 다니며 복귀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채 쟁의는 종결되고 말았다.

A6 이한일(노조대표)

A7

A8 김낙중, 앞의 책, 210-211쪽/조선일보, '평화공사의 부당해고사건. 전원복직에 합의' 1957. 1. 8/ 조선일보, '복직안되면 계속 연좌농성. 평화공사의 노무자 시위계속', 1957, 1, 12

A9

A1 密陽 韓國毛織 노동자 쟁의

A2 1957. 2. 15-1959. 하반기

A3 1957. 11, 밀양 한국모직 소속 노동자 800여명, 임금 체불에 집단해고 발생/1957. 2. 14. 노조측, 체불임금 지불요구, 파업결의를 사측에 통보/1958. 3. 11. 해고노동자 20여명, 서울본사에서 사장 김형덕과의 면담 요청, 거부됨, 농성투쟁에 돌입/1958. 7. 1. 54명의 노조대표가 상경, 사장의 면담 요구했으나 거절당함/1958. 7. 4. 보사부 노동국장과의 직접 면담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할 것에 합의/1958. 7. 10. 보사부 당국의 수차에 걸친 소환요구를 거부, 이에 김형덕 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부산지검에 고발조처/1958. 8. 노조측은 서울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및 노임청구 소송을 제기, 법정투쟁을 전개/1959. 하반기, 대한방직회사가 산업은행 관리로 넘어가면서 체불임금의 청산, 소송 취하로 사건 종결

A4 경남 밀양에 소재한 한국모직주식회사에는 1957년 가을 약 1,300명의 노동자가 소속돼 있었다. 그해 11월 약 800명 가량이 해고되고 500 여명이 남아 있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억울함 뿐만 아니라 해고된 지 5개월이 지나도 밀린 임금의 지불을 받지 못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더구나 체불 임금을 못받은 것은 해고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공장에 남아 있던 500여명의 노동자도 같은 형편이었다.

A5 노동조합측은 1957년 2월 15일 체불임금의 지불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 사측에 경고하였다. 해고노동자 20여명은 같은 해 3월 11일, 서울 명동의 한국모직 본사를 방문, 사장 김형덕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20 여명의 해고노동자는 그 자리에서 농성투쟁에 돌입, 체불임금의 즉각 지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는 관철되지 못한 채 수 일만에 농성은 자진 해산되고 만다.

한편 노조측은 1958년 2월 이래 6회에 걸쳐 체불임금의 지불을 촉구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건사회부에 제출했다. 그때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58년 7월 1일 54명의 대표들이 서울로 상경, 사장과

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같은 날 밤 10시경 사장 자택을 방문, 사장과의 직접 담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형덕 사장은 면담 대신 두 마리 맹견(猛犬)을 풀어놓아 두 사람의 노동자가 개에 물려 피를 흘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7월 4일 50여명의 노동자 대표들은 상처 입은 두 동료를 등에 업은 채 보사부 장관실로 물러갔다. 이에 노동국장은 보사부 노동국에서 체불임금지불 요구를 수차례 통고하였으나 김형덕 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노조위원장 박동수만 남고 나머지 대표들은 해산 귀향하였다.

밀양 대한방직 체불임금 쟁의와 특히 당시 자유당 국회의원이던 김형덕 사장 집에서 노동자대표들이 개에 물린 사건은 즉각 각 신문에 보도되었고, 김형덕 사장의 처사는 사회여론의 맹렬한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매일신문은 김사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회사자금을 턱없이 낭비하고, 산하 공장 종업원들의 임금을 10개월 가까이 체불하고 있는 불법적 처사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보사부 당국은 수차에 걸쳐 김사장을 소환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1957년 7월 10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부산지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부산지검은 김사장의 주소지인 서울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동 8월 서울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및 노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법보다는 정치권력의 횡포가 우선하던 자유당 치하에서 보사부의 고발도 노동자들의 민사소송도 별 효력을 보지 못한 채 드디어 대한방직회사는 1959년 하반기에 산업은행 관리로 넘어가고 말았으며 그때서야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소송은 취하되었다.

A6 김형덕(金亨德, 한국모직사장), 박동수(노조위원장)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60-461쪽

A9

A1 서울열차승무원 집단해면(解免)문제 투쟁

A2 1957.6.14-1957.6.20

A3 1957.6. 서울열차승무원2인의 비위사실적발/1957.6.14. 교통부가 서울열차사무소 소속 여객전무 및 열차승무원 81명의 해면조치 지시/1957.6.15. 철도노련 노조위원장회의, 대책논의/1957.6.17. 김주홍 철도노련위원장, 교통부의 조치 부당성 주장, 사의표명/1957.6.20. 교통부가 비위사실적발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리결정으로 일단락

A4 1957년 6월 서울열차사무소의 승무원 2명이 열차 승무중에 범한 비위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자 교통부에서는 1957년 6월 14일 서울열차사무소 소속의 여객전무 16명 전원과 열차승무원 81명을 해면조치하도록 서울철도국에 지시하였다.

A5 교통부의 지시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무시하고 법의 절차없이 임의로 취하여진 조치라는 점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다. 이에 철도연맹에서는 1957년 6월 15일에 소집된 노조위원장회의에서 서울열차 분회장 이은산의 진상보고를 청취하고 강경대책을 논의하였다. 1957년 6월 17일에 철도노련 위원장 김주홍은 교통부의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 인사조치가 강행될 경우 철도노조의 조합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18일에 교통부에서 비위사실적발대상자들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20일에 개최된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16명의 위법자들에 대해서만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A6 김주홍(철도노련위원장)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399쪽

A1 제10차 大韓勞總全國代議員大會

A2 1957. 10.25-1957.12. 19

A3 1957. 10. 25, 서울 농업은행 본점 강당에서 제10차 대한노총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임원개선에서 최고위원에 철도노련 위원장 김주홍, 대한노총 경남 경남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 섬유노조연맹 위원장 하광춘(河光春)이 선출되고 전 대한노총 최고위원으로 전업노련 위원장인 정대천을 상임고문으로 추대됨/1957. 10. 26, 정대천을 중심으로 한 김기옥 등의 김주홍 반대파가 전날의 대회를 무효로 선언, 10월 26일에 대회를 다시 개최, 파벌싸움으로 전개/1957. 12. 13, 보사부당국의 중재와 10차 대회의 부정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공식발표, 12월 19-20일에 대의원대회 다시 개최할 것에 합의/1957.12.19, 서울에 있는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대한노총 제10차 전국대의원대회 재소집, 최고위원 5명으로 늘려 재선출.

A4

A5 대한노총 제10차 전국대의원대회는 1957년 10월 25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업은행 본점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588명 중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0차대회는 임원 개선하는 임기대회였고, 동시에 1958년 민의원 총선거를 앞둔 대회이기도 했다.

임원개선에서 최고위원에 철도노련 위원장 김주홍, 대한노총 경남 경남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 섬유노조연맹 위원장 하광춘(河光春)을 각각 선출하고, 전 대한노총 최고위원이며 전업노련 위원장인 정대천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대한노총의 실권을 빼앗긴 정대천을 중심으로 한 김기옥, 이기주 등 반대파에서는 철도연맹과 전매노조(專賣勞組)에서 부정 대의원을 참석시켰다는 이유로 10월 25일의 대의원대회를 무효로 선언하면서, 10월 26일 다시 전기농업은행 강당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대한노동조합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측에서도 10월 25일의 전국대의원대회가 ① 새로 선출된 김주홍측에서 수십명의 자기파 가짜 대의원을 출석시켰고 ② 과거 여러 노동쟁의에서 기업주측 앞잡이로 암약하던 분자들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선출했을 뿐 아니라 ③ 25일 대회장에서도 김주홍측이 태창방직과 대한방직 노조간부 4,5명을 대회장 부근에 배치하여 금품으로 대의원을 매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노동조합들의 전국 중앙조직이 대한노총 내부의 파벌간 주도권 싸움의 과정에서 두 갈래로 분열되자 보건사회부 당국은 이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었다. 특히 문체의 제10차 대의원대회에 부정대의원이 참석했다는 문제에 대해 보사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서 1957년 12월 13일 공식 발표되었다.(경향, 1957.12.14)

즉 이 대회에 부정(무자격) 대의원을 보낸 노동조합과 그 수는 서울지방철도노조 11명, 조선운수종업원노조 1명, 경성방직노조 4명, 대명광업노조 4명으로 합계 34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파벌별 소속을 보면 서울철도, 서울조양사, 경성방직 등 3개 노조는 김주홍파이며, 조선운수, 서울이용사, 대명광업 등 3개 노조는 정대천 과임이 당시의 노동관계 소식통들에 의해 밝혀졌다. 즉 대한노총의 파벌싸움은 쌍방 모두 부정대의원을 투입하고 주도권을 빼앗기자 이것을 폭로한 것에 불과함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3일 보사부 당국은 양측대표로 지목되고 있던 정대천, 김주홍, 이준수, 김기옥, 이주기, 하광춘, 성주갑 등 7명을 보사부 차관실에 불러 놓고 양측 연석회의를 개최, 사태 수습을 협의케 했다. 회의에서 결론은 12월 19-20 양일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기에 모두 참석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게 되었다.(조선일보, 1957. 12. 14)

공동성명에 따라 12월 19일 서울에 있는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제적의원 535명 중 531명이 출석한 가운데 대한노총 제10차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최고위원수를 종래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재선출하였으나 결과는 정대천(전업노련), 이주기(광산노련), 김기옥(자유노련), 김용학(서울철도노조), 하광춘(섬유노련) 등으로 하광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대천파가 당선되었다. 김주홍만이 패배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야합하고 만 것이다.

A6 최고위원 :정대천(전업노련), 이주기(광산노련), 김기옥(자유노련), 김용학(서울철도노조), 하광춘(섬유노련)

A7

A8 ‘노총 丁大天씨등 일파서 비난"25일 투표에 부정"’,(조선일보, 1957.10.27 (3))/ ‘노총」 내분은 격화일로...새조직체를 지향’ (경향신문,1957.10.31)/ ‘분쟁거듭하는 「노총」’ (경향신문,1957.11.23)/ ‘노총분규 완전히 해소’ (경향신문,1957.12.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396-297쪽

A9

A1 남반부 정치변혁공작대 사건(일명 간첩 朴正鎬 사건)

A2 1957.10.27-1959.5.6

A3

A4

A5 1957년 10월 27일 서울시경찰국은 남파간첩 박정호·김달용(金達溶)·김태형(金泰衡) 등 7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송치하였다. 이어 오제도 부장검사와 조인구·이주식 검사의 수사결과 이들 간첩 일당의 범행 내용이 밝혀지면서 당시 혁신계 통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사건 발표에 의하면, 광복후 북한에서 부상급 간부로 활동하다가 1953년 남파된 거물간첩 박정호는 1956년 8월에 합법적인 정당활동 방식으로 이른바 평화통일선전사업을 전개하라는 지령과 함께 거액의 공작금을 받고, 그해 31일부터 남반부 정치변혁공작대를 조직, 김달용·김태형 등과 함께 혁신계에 접근,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보고를 밀송하였다는 것이다.

박정호 등은 그후 장건상·김경태·오중환 등을 포섭하여 민주혁신당을 조직하게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해 각종 혁신계 정당을 통합한 가칭 대동통일당(大同統一黨)을 창당하도록 하면서, 그 준비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11월 17일 박정호·김달용·김태형·김경태·오중환·이재춘 등 6명을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이만춘(李萬春)을 간첩방조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2월 2일에는 장건상·정이식·윤방우 등 3명을 간첩방조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은 박정호 등 20명에 이르렀는데 박정호는 1958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12월 16일 대법원판결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5월 6일에 형이 집행되었다.

A6 박정호, 김달용, 김태형, 김경태, 오중환, 이재춘 등.

A7

A8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사』, 1985, 126-127쪽/「박정호 외 재판기록」(정부기록보존소 소장)/김민희, 「박정호」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A9 근로인민당재건조작사건, 진보당사건

A1 근로인민당재건조작사건

A2 1957. 11.7-1958.12.15

A3 1957, 9. 9. 박정호 간첩혐의로 구속/1957. 11. 6. 장건상·정이식 등 체포/1957, 11, 7, 장건상 등 근로인민당 출신들의 연루혐의 포함된 「간첩 박정호 사건」 발표/1957. 11. 22, 장건상 전향서 제출/1958. 4. 8. 1심선고공판, 무죄선고/1958. 7. 13 박정호 사건 항소심 판결, 박정호 무기, 장건상등 15명엔 무죄판결/1958. 12. 15. 박정호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박정호 등 사형 확정, 장건상 등 무죄판결

A4 근로인민당재건사건은 1957년 9월 혁신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박정호, 김경태 등이 간첩혐의로 체포된 후, 연이어 11월 장건상·김성숙 등 해방정국의 근로인민당 계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장건상 김성숙, 유병묵(劉秉默) 등 전 근민당 간부들이 북의

근민당 본부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근민당을 재건하여 평화통일을 획책하였다는 내용이였다. 이 사건은 민주혁신당의 창당 이후 그 핵심세력들을 대상으로하였다는 점에서 1950년대 중반 이후 이승만정권이 혁신계의 합법정당활동에 대해 견제와 탄압을 가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였다.

A5 1957년 11월 7일자 「동아일보」에는 「間諜 박정호(朴正浩)사건 政界에 飛)」라는 原題보다 더 큰 활자로 「張建相 씨 등 拘束」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소위 남반부 정치변혁 工作隊에서 구속취조중인 괴뢰간첩 박정호(朴正浩, 52)는 취조 결과 현재 남한에서 태동중인 혁신세력 통일위원회를 상대로 막대한 자금(공작금)을 제공했을 뿐아니라 민혁명위원장 장건상씨 및 大榮製粉 사장 鄭履植 씨등도 박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되였다. 이로서 박에 관련된(12명 朴포함)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였는데..」 이어 8일에는 동아일보가, 「장건상씨, 간첩의 情을 알고 接觸」의 제목으로 장건상의 사진까지 내걸어, 박정호 간첩사건에 중요한 연루자로 경향신문은 11월 16일자 사설에서 “혁신세력의 통일주비위원회가 북한괴뢰의 부상(副相)지위에 있는 박정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결성, 추진”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외교에 있어서 용공 내지 친공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한국의 사회주의세력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신문은 이날 사회면 톱으로 ‘안재홍의 밀서 수수 탄로’ 라는 제목을 뽑고, 안재홍의 장남 안정용 등 3명이 구속되였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와 함께 근민당계의 김성숙 등 10명을 검거하였는데, 김성숙은 근민당 재건 총책으로서 암약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근민당 재건사건은 11월 22일 장건상의 전향서 작성 제출을 계기로 “회개서 석방도 가” 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12월초에는 아무리 증거가 희박하고 공소유지 가망이 없더라도 검찰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근민당 재건사건을 기소할 것을 이호(李濤) 법무장관이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958년 4월 8일에 열릴 예정인 서울지법의 1심 선고공판은 개정되기 20분 전에 사건 담당 조인구(趙寅九)부장검사가 김성숙 등 13명에 대한 추가 공소를 제기, 이 신청의 합의로 공판은 오후로 연기되였다. 조인구가 제출한 추가공소장의 내용은, 「1957년 10월 〈中央政治〉가 발간될 당시 進步黨 조봉암 등과 합작하여 統一問題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괴뢰에 호응하는 평화통일을 協議 실행하였다」는 요지였고, 재판부는 합의 결과 「追加公訴及 辯論再開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1심과 재심에서 장건상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였으나 조인구 부장검사의 불복으로 상고되였고, 1958년 12월 1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무죄석방되어 사건은 일단락 되였다.

A6 박정호:사형, 김태형·김규용:징역 10년, 김경태·오중환:징역 8년, 이재춘·이철용:징역 3년 6월, 장건상·김성숙 등: 무죄

A8 김문갑 증언(1999), “1957년 근민당재건사건은 해방공간에서 조선인민당,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했던 장건상, 김일천, 양재소, 윤방우 등이 혁신정당운동이 전개되자 연락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것으로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다. 당시 이 모임에 있었던 윤일우가 프락치였다고 생각한다. 박정호를 만난 적은 없고, 장건상 선생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事實의 全部를 기록한다’ 『宵海 장건상-자료집』, 도서출판 우당, 1990, 79-81쪽/ ‘간첩박정호와 접선한 14명의 명단’(경향신문, 1957.11.18)/ ‘간첩 박정호·김태형에 사형’(경향신문, 1958.3.25)/ ‘張建相씨 전향진실서 인정? 석방여부 불일중에 결정’(조선일보, 1957.11.26 (조간 2))/ ‘張建相씨 28일석방. 전향서 진실성을 인정’(조선일보, 1957.11.28 (조간2))/ ‘張建相씨 금후조치책 강구? 석방 2-3일 지연’(조선일보, 1957.11.29 (석간 3))/ ‘검찰태도 돌연변경. 張建相씨 구속기소, 증거 불충분으로 崔씨는 석방’(조선일보, 1957.12.03 (조간2))/ ‘張建相等 피고, 12일에 첫 공판’(조선일보, 1958.02.12 (조간2))/ ‘간첩사건의 張建相씨, 18일 병보석’(조선일보, 1958.02.19 (조간 2))/ ‘朴正鎬사건 공판서 張建相피고에 남북협상 참가동기추궁(1958.03.06 조간 2)/ 朴正鎬사건공판서 근민당 정강등 張建相피고 진술(1958.03.08 석간 3)/ ‘재판부, 7일 언도직전에 신구공소사실을 대조검토 - 張建相等 일부피고에 추가공소제기’(1958.04.08 석간 3)/ 김재명, 『한국현대사의비극』, 선인, 2003, 43-44쪽/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역사비평사, 1999, 207-209쪽/ 김민희,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1993, 148-161쪽.

A9

A1 진보당사건

A2 1957. 11. 6 -1959. 7.31

A3 1957. 11. 6. 검찰이 ‘박정호 간첩사건 발표’ /1958. 1. 12. 검찰 조인구 검사가 박정호사건과 진보당관의 연계가능성 시사하는 기자회견 자청/1958. 1. 13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 7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됨/1958. 1. 14 정순경 검찰총장, 조봉암이 북에서 밀파된 김경태, 오중환과 접선, 북괴의 지령으로 평화통일론 주장했다고 발표/1958. 1. 15, 진보당 간부 김기철, 신창균, 김병휘 등 추가 구속/1958. 1. 16. 검찰, 조봉암집 비밀장소에서 불온문건 압수했다고 발표/1958. 2. 3. 검찰, 소위 진보당의 ‘강평서’ 라는 북한의 비밀지령문을 압수했다고 발표/1958. 2. 8. 검사 조인구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을 기소/1958. 2. 20. 검찰이 이중간첩 양명산을 검거했다고 발표/1958. 2. 22. 공보실이 진보당 등록취소 결정/1958. 2. 23. 특무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1.500만환을 수령했다고 발표/1958. 3. 13. 서울지법에서 유병진 부장판사를 부장판사로 진보당 사건 첫 공판 열림 /1958. 3. 27. 2차공판에서 이명하 등 추가구속자 8명을 병합하여 기소사실에 대한 심문/1958. 4. 3. 검찰, 양명산을 정식 기소/1958. 6. 13. 사건발생 5개월만에 열린 1심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간사장 윤길중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진보당 간부 16명에게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1958. 6. 17-19, 변호인단의 변론/1958. 7. 2. 1심 판결에서 조봉암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전원 무죄 선고됨/1958.7.4. ‘반공청년’ 이라고 자칭하는 200-300명의 피청년들이 법원으로 난입하여 “친공(親共)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단하자” 며 난동을 부린 사건발생./1958. 9. 4. 진보당사건 공소심에서 검찰측이 1심 판결에 불복, 상고, 양명산은 1심진술 번복/1958.10. 4.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조봉암·양명산에게 사형, 진보당 간부들에게 12-20년의 징역을 구형/1958. 10. 22. 방재기검사 측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과 집행유예로 출감해 있던 진보당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한 법정구속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가 이를 수용함/1958. 10. 25.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봉암·양명산은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언도/1959.2.20. 상고심 첫 공판. 년 2월 20일 상고심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세완 재판장 아래 주심판사 김갑수(金甲洙), 배석판사 백한성(白漢成)·허진(許璠)·변옥주 등 5명의 합의부였으며, 검찰측에서는 대검찰청 정보부의 오제도 검사가 관여. 변호인단으로는 21명의 피고를 대리해서 임석무(林碩茂)·이태희(李太熙)·신태약·전봉덕·김봉환·김춘봉 등/1959. 2. 27. 진보당 최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봉암과 양명산에는 원심대로 사형을, 전세룡과 이상두에게 징역 2년, 김정학(징역 1년 집유 3년)과 이동현(징역1년)에게 상고기각을, 그리고 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김기철, 이동화, 정태영, 이명하, 권대복,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병휘, 최희규, 박준길, 안경득 등 진보당 관련자 15명에게 무죄를 확정/1959. 9. 17. 조봉암, 조국에의 충절 불변을 확인하는 제헌절 성명 발표 /1959. 7. 31 조봉암 사형집행

A4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극심한 투개표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50%를 겨우 넘는 득표를 획득한 반면, 조봉암은 200만표가 넘는 득표를 얻었다. 이로써 조봉암은 명실상부한 이승만의 정적으론 떠올랐다. 게다가 진보당이 같은해 가을에 창당되면서 1957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건설하고 1958년의 총선에서 자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마저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자 이승만과 자유당의 행보는 더욱 바빠졌다.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우선 진보당 조직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승만정권은 진보당 창당대회와 각 지방별 결성대회를 경찰, 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통일론’ 선풍을 일으킨 조봉암을 구심점으로 한 진보당 지지의 열기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는 선거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에 이승만정권은 조봉암의 좌익 전력을 이용한 간첩사건과 연계시킴으로써 탄압의 기세를 높여갔고 그 과정에서 ‘진보당사건’ 이 발생했다.

A5 1957년 10월, 혁신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박정호, 김경태 등이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이어 11월 6일 검찰은 소위 ‘박정호사건’ 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은, “1957년 11월 6

일 시경 사찰과에서 10월 18일 ‘남반부 정치변혁공작대’의 총책임자 박정호와 박의 대북 연락원 김경태 등 2명의 간첩을 비롯하여, 박에게 공작금을 받고 포섭되어 진보당, 민혁당 등 평화통일 지향의 조직세력에 끼여 있던 장건상, 최익환 및 실업계 정이식 등 1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는 한편…”의 내용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때 경찰은 “진보당의 조봉암에 대해서는 접촉한 사정 외에 포섭된 사실이 없다”고 애매하게 발표했으며, 조봉암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58년 1월 12일 박정호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조인구 부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여기에서 박정호 등 10여명에 대한 공소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이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진보당의 중요정책이었던 ‘평화통일론’에 대한 언급이었다. 조인구 검사는 “평화통일이란 구호는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방편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북진없는 정강정책을 갖는 정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령내용은 바로 진보당의 확대공작에 귀착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럼 진보당이 박정호 사건에 관련되어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제는 진보당이 내건 평화통일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한 후 그것이 북괴의 지령과 동일할 때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여 박정호 관련 부분보다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에 수사의 중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날 신문들은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고, 다음날인 13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외 윤길중, 조규희, 조규택, 이동화, 박기출 등 당 간부 7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같은날 중순경 검찰총장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당은 불법 결사단체’로 규정했고, 서정학 치안국장은 진보당 간부의 구속에 대해 “이들 구속된 진보당 간부는 이미 송정한 박정호·정우갑·허봉희 등 간첩사건 수사중 진보당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뚜렷해져 구속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14일, 정순경 검찰총장은 “조봉암 진보당 위원장 등 일당은 북한괴뢰 김일성의 지령으로 남파된 간첩 박정호·정우갑·이봉창·허봉희 등과 수차 밀회하고…괴뢰집단에서는 작년 9월까지 평화통일운동을 목표로 간첩을 침투시켰으나 동 9월 이후 대남 간첩정책은 진보당 확대공작으로 전환한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15일에 검찰은 추가로 진보당 간부 김기철, 신창균, 김병휘 등을 구속하였고, 같은 날 치안국은 진보당을 돕는 공작사명을 띤 간첩이 1957년 이래 계속 남파됐고 11명의 간첩 명단과 공작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조봉암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것처럼 되었고, 이들의 혐의가 무죄가 되더라도 진보당과 조봉암은 소위 ‘용공분자’로 몰리게 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계속해서 언론을 자극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신문은 이를 여과없이 보도했다.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구속되자 진보당측은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 이유는 평화통일론 문제와 박정호와의 관련부분에서 전혀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장 김재욱(金在沃)은 구속적부심 공개 심리 결과 “진보당은 비밀문서 등으로 북괴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통일노선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을 무시하려는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 간부 중에 도피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다시 2월 3일 소위 진보당의 ‘강평서’라는 북한의 비밀지령문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서는 1957년에 진보당에 입당한 정태영 개인이 작성한 것이었는데, 내용은 국제정세, 정치노선, 투쟁노선 등 당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 광범하게 언급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서가 진보당 자체의 견해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조봉암의 견해와도 다른 것이었으나, 검찰측에 의해 북한의 지령문으로 둔갑했고 결국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은 2월 8일에 검사 조인구에 의해 기소되었고, 3월 13일 서울지법 유병진(柳秉震)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이병용(李炳勇)·배기호(輩基鎬) 판사를 배석으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의 기소장에 의하면 조봉암은 간첩·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밖에 박기출·김달호·조규택·조규희·신창균·김기철·김병휘·이동화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공소장」) 이어 3월 27일의 2차 공판에서는 이명하 등 추가구속자 8명을 병합하여 기소사실에 대한 심문에 들어갔다. 진보당 사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평화통일론, 반공국시, 사회적 민주주의 등 진보당의 정책과 강령에 대한 부분과, 북한간첩과의 연계와 북한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조봉암 및 진보당 관계자들이 박정호 등의 간첩과의 접촉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되었

고, 이 부분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조봉암이 북한에 밀사를 파견했다는 검찰의 주장또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결국 공판의 횡수가 거듭되면서 처음에 혐의로 내건 평화통일론의 위헌성이나 여러 간첩사건과의 관련은 점차 증거능력을 상실해 갔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조봉암을 확실한 간첩으로 몰기 위해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시도가, 바로 양명산(梁明山, 양이섭)의 등장이었다. 1958년 2월 23일, 특무대는 간첩 양명산으로부터 조봉암이 수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이어 28일에는 양명산이 조봉암과 북한 간의 연락책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1955년부터 對北 첩보기관인 HID의 대북 공작원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남북을 왕래하면서 물물교역을 하던 중 간첩혐의로 구속된 양명산은 결국 진보당 재판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검찰측에 의해 4월 3일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5월 15일에는 진보당사건 병합심리를 위해 증거인자격으로 공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양명산을 통해 북한이 조봉암과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판정에서 양명산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조봉암의 간첩혐의는 더욱 굳어졌다. 양명산의 등장으로 새롭게 전개된 진보당사건 재판은 사건발생 5개월만인 1958년 6월 13일에 1심 구형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간사장 윤길중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진보당 간부 16명에게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였다. 구형공판이 있는 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변호인들의 변론이 있었고, 마지막날 조봉암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건을 조작해낸 검찰이야말로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하고 있는 것이며, 평화통일은 절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사다”(임흥빈, ‘죽산 조봉암의 죽음’)라고 진보당 재판의 부당성을 밝혔다. 1958년 7월 2일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진보당 관계 피고인들 중 조봉암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당 간부 중에는 전세룡 조지부 간사에게 당원명부 등을 숨겼다는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유병진 재판장은 선고문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양명산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 불법무기 소지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박정호 등과 관련된 간첩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 판결이 있는 이틀 후인 7월 4일, ‘반공청년’이라고 자칭하는 200-300명의 피청년들이 법원으로 난입하여 “친공(親共)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단하자”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1심 재판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난 1958년 9월 4일 진보당사건의 공소심이 열렸다. 검찰측은 1심 판결에 만족할 수 없었고 곧바로 상고하였다. 주심에 서울고등법원 김용진(金容晉) 부장판사, 배석에 최보현(崔普鉉), 이규대(李圭大) 판사, 검찰관에 고등검찰청의 방재기(方在氣) 검사가 선임되었다. 그러나 1심에서 조봉암의 유죄를 성립시키는데 열쇠를 쥐고 있었던 양명산이 자신의 1심자백을 허위진술이었다고 번복하고 나섰다. 양명산은 1심에서 자신의 자백은 전적으로 특무대의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밝혔다.(이영석, 231-36)

그러나 재판부는 양명산의 번복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측이 양명산의 1심 진술과 2심 번복진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한 증거물과 증인, 특무대 본부 등에 대한 현장검증 요구, 그리고 20여 명에 달하는 증인채택 신청 등은 대부분 거부되었다.(「상고이유서」, 권대복, 251-53) 이같이 재판부의 증거·증인채택 거부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10월 4일 구형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조봉암·양명산에게 사형, 진보당 간부들에게 12-20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기 3일전인 10월 22일 방재기 검사는 피고인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심에서 무죄판결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출감해 있던 진보당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한 법정구속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2심 판결의 방향을 예고하였다. 결국 10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봉암·양명산은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실형을 언도받았다.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우선 박정호, 정우갑 관련 부분과 정태영의 ‘강평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처리했다. 그러나 국가전복을 위해 진보당을 결성한 것, 진보당의 정강정책에 사회주

의의 내용이 들어 있는 점, 평화통일을 통해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 양명산을 통해 북한과 접촉한 죄를 모두 유죄로 처리했다. 결국 이들은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제5호 위반 등으로 판결되었다.('경향신문', 1958. 10. 26) 이에 검찰은 조봉암과 양명산을 제외한 무죄처리된 진보당관계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조봉암과 진보당 관계자들의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1959년 2월 20일 상고심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세완 재판장 아래 주심판사 김갑수(金甲洙), 배석판사 백한성(白漢成)·허진(許璠)·변옥주 등 5명의 합의부였으며, 검찰측에서는 대검찰청 정보부의 오제도 검사가 관여하였다. 변호인단으로는 21명의 피고를 대리해서 임석무(林碩茂)·이태희(李太熙)·신태약·전봉덕·김봉환·김춘봉 등 14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하여 검찰측과 공방전을 벌였다. 결국 1959년 2월 27일에 열린 진보당 사건 최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봉암과 양명산에는 원심대로 사형을, 전세룡과 이상두에게 징역 2년, 김정학(징역 1년 집유 3년)과 이동현(징역 1년)에게 상고기각을, 그리고 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김기철, 이동화, 정태영, 이명하, 권대복,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병휘, 최희규, 박준길, 안경득 등 진보당 관련자 15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조봉암의 경우는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간첩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평화통일론과 계획경제 등 진보당 정책 중 애초 검찰에 의해 기소된 내용들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후 조봉암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지만 상고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재심을 맡아 결국 1959년 7월 30일 재심은 기각되고, 다음날인 31일 오전 11시에 사형이 전격 집행되었다. 이로서 1년여를 끈 진보당사건관련 재판은 '조봉암 사형, 진보당 해산'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이미 1958년 2월 22일 공보실에 의해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져 이후 불법화된 진보당은 핵심을 잃고 분산된 채 재건되지 못하고 이승만정부의 탄압과 감시 속에 은퇴를 강요당해야만 했다. 그 뒤 1년이 못된 1960년 4월 26일, 4·19로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 정국에서도 진보당은 재건되지 못하는 운명을 맞는다.

A6 사형:조봉암(진보당 당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양명산 징역2년 : 전세룡, 이상두, 상고기각:김정학(징역1년, 집유3년), 이동현(징역1), 무죄: 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김기철, 이동화, 정태영, 이명하, 권대복,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병휘, 최희규, 박준길, 안경득

A7

A8 제1심 관계자료: '공소장', 정태영·오유석·권대복 엮음, 『죽산 조봉암 전집』5, 세명서관, 1999, 17-34쪽/ '추가공소장', 정태영 등 앞의책, 35-49쪽/ '변론(요지)', 정태영 등 앞의책, 49-60쪽/ '제1심 판결문, 정태영 등 앞의 책, 61-123쪽/상고심 관계자료: '상고이유서', 정태영 등, 앞의 책, 124-162쪽/ '대법원 판결문', 정태영 등 앞의책, 163-190쪽/ '재심청구이유', 정태영 등 앞의책, 191-192쪽/ '재심 청구 결정문', 정태영 등 앞의책, 193-195쪽/

참고글: 권대복 엮음, 『진보당』-당의활동과 사건관계자료집, 지양사, 1985;;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한길사, 1991; 정태영,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사』, 세명서관, 1995 ; 신창균 회고록, 『가시밭길에서도 느끼는 행복』, 해냄, 1997, 219-223; 박태균, 『조봉암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 역사비평사, 1999 ;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1953-196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A9 박정호간첩사건

A1 안재홍 밀서(密書)사건

A2 1957. 11. 14

A3 1957.11.14 安在鴻의 밀서 전달한 장남 安畧鏞등 검거

A4

A5 1957년 11월 14일 치안국에서는 '북한괴뢰집단의 소위 평화통일촉진협의회대표 안재홍(安在泓)의 평화통일에 대한 밀서를 가지고 남하한 對南 공작대원 안병윤(安秉潤)을 체포하는 동시에, 안재홍의 장남 안정용(安畧鏞) 및 김정복(金貞福)을 검거 '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안재홍의 밀서는 '정계요인을 포섭하는 한편 학원침투를 피할 목적으로 전달된 것 '으로, 구체적인 수신인까지 지정되어 있었다. 조사당국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전 「민족자주연맹」 계로 추측되는 정계요인 5-6명도 검거될 것 '으로 시사하였으나 실제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않았다.

A6 안병운(安秉濶·44세;1946. 10. 29. 월북, 1957. 4. 5. 노동당의 지령으로 안재홍의 밀서소지 남하, 안정용과 접촉), 안정용(安殿鏞·43세; 안재홍의 장남), 김정복(金貞福·31세), 김영자(金英子·25세)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8, 324-325쪽.

* 치안국이 발표한 안재홍의 밀서 요지. [평화통일은 민족과업의 지상과업이며 내자신(安在鴻)도 강요에 의하여 하는 노릇이 아니니 남한에서 평화통일운동에 매진하여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서한을 가지고 간 사람은 절대로 신임하고 그에게 적극 원조를 하라]

A9

A1 류근일필화사건

A2 1957. 12. 14-1959. 2. 18

A3 1957. 12. 14. 서울문리대 동인지 「우리의 구상」에 류근일의 “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 게재,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류근일 구속/1958. 1. 11, 류근일 기소/1958. 2. 18, 첫 공판에서 류근일은 사건 배후 등 조서내용 부인/1959. 2. 18,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

A4 -1957년 12월 14일 서울문리대 학생동인지 「우리의 구상」에 6·25 후의 매카시적인 정치적 분위기의 '상식' 과는 배치되는 글이 실렸다. 글은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체험하고 공산주의도 체험했으나 모두가 틀려 먹었다. 우리는 신형 조국을 갈망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 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무산대중', '단결'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교수들을 당황하게 하였고 법조인들을 긴장시켰으며 동료 학생들을 놀라게 하였다.

A5 1957년 12월 14일 밤 동대문 경찰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동인지 「우리의 구상」에 불온한 내용으로 보인다는 논문 (제목: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을 발표한 서울대 문리과대학 2년 유근일(20세)군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글의 요지는 “이념적으로 민주사회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는 제언적인 내용이었다. 문제가 됐던 구절은 “새로운 형의 조국...” 이었는데, 이 용어가 국체를 건드렸다는 것이었다. 필자 류근일은 1958년 2월 27일 사건 첫 공판법정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울러 배격하고 민주사회주의에 공명하게 되었다” 는 점과 아무런 배후의 사주가 없다는 것을 밝혔으나 대학당국은 글의 내용을 '국제공산당의 노선과 일치' 하는 것으로 판단, 류근일을 퇴학처분시키고 문교부 당국자는 “문리대에 좌익교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고 신문지상에 발표하게 하는 등 이 사건은 당시 서울대 내에 조직되었던 학생서클 내부에 대해 불온·좌익·용공 등의 혐의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1심판결에서 재판부(유병진판사)는 “다소 생경스런 표현이 있으나 논문의 내용은 민주사회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합헌적인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김홍섭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5·16이후 필자 류근일은 동일죄목으로 대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A6 국가보안법위반구속 : 류근일(서울대 문리대 2년, 무죄판결)

A7

A8 “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 (동인지 「우리의 構想」, 1957.12.14)-/ '문제된 "우리의 구상" 문리대교지 논문 쓴 학생 제적' (경향신문, 1957.12.15)/ '서울문리대필화사건 공판, 유근일군 무죄언도' 경향신문(1958. 4.4)/ '필화사건의 柳根一 구속기일 연장 - 증인, 광범위로 소환' (조선일보, 1958.01.04 (석간3))/ '반전되는 서울문리대사건' (조선일보, 1958.01.10 석간3)/ '柳根一의 논문 게재경위 등 판명(조선일보, 1958.01.14 조간2)/ '柳根一피고 문리대사건 첫 공판서 조서내용을 부인(조선일보, 1958.02.28 (조간2))/ '서울대학교 문리대사건 - 당국, 柳根一군 복교에 찬성' (조선일보, 1958.04.04 조간(2))/ '검찰서도 인정한 학문의 자유. 柳根一군 무죄 확정' (조선일보, 1959.02.19 조간 3)/ 권영기, '新進會에서 民統聯까지', 『월간조선』, 1984, 4월호, 256-257쪽

A9 류근일이 활동하던 서울대 내 학생조직인 ‘신진회’ 조직 밝혀짐으로써 최종 와해되기에 이름.

A1 大邱 理容師勞組 파업

A2 1958. 1. 13-1958. 2. 22.

A3 1958. 1. 13, 대구지구 이용사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사측에 제시, 당국에 쟁의발생 신고/1958. 2. 12, 냉각만료일까지 사측의 무대응으로 노조는 긴급대책회의, 2월 15일에 파업돌입할 것임을 사측에 통고/1958. 2. 22. 경북 노무위원회가 노사 쌍방 대표를 불러 회의를 열고 오후 3시 조정안에 타협, 쟁의 종결

A4 대구 시내 산재해 있던 280여개 이발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한노총 대구지구 이용사 노동조합에 단결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1957년 말경부터 사용자측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을 벌여왔으나 업자측이 불응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A5 1958년 1월 13일 대구지구 이용사노조는 대구 노총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① 현재 업주 6할, 종업원 4할의 수입분배 비율을 5대 5제로 할 것 ② 노동시간을 여름 11시간, 겨울 10시간으로 종업시간을 단축할 것 ③ 매월 1월 11일, 22일을 정기휴일로 정할 것]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하기로 결정, 요구사항을 사용자측에 제시하는 한편 경상북도 당국에 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냉각기간 만료일인 2월 12일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노조측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대책을 협의한 결과, 파업단행을 결의, 2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사용자측에 통고하였다.

노조측은 분산해 있는 280개 이발관의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6개반으로 감찰대를 편성하여, 실재없이 행동통일을 호소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쟁의 중 다른 이발사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이발 의자에 앉은 채 버티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당국에서는 노사간 알선에 힘썼지만 쌍방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경상북도 당국은 경북 노무위원회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다. 참고로 경북 노무위원회는 대구 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학자, 사용자 위원 각 1명과 근로자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노무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노사 쌍방 대표를 불러 회의를 열고 오후 3시 조정에 성공하였다.

노사 쌍방은 ① 임금은 현행대로 실시할 것 ②노동시간은 종래보다 30분씩 단축할 것 ③월 2회 공휴를 월 3회로 할 것 ④업자는 일방적 해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에는 노사협의회에 통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이용사 파업은 끝을 맺었다.

A6

A7

A8 김낙중, 앞의책, pp.213-4

A9

A1 동아일보 만화 「고바우 영감」 필화사건

A2 1958. 1. 23-1958. 1.31

A3 1958. 1. 27. 『동아일보』 연재만화 「고바우영감」의 작가 김성환씨가 ‘경무대모욕’ 을 이유로 구속, 즉결심판에 회부, 벌금 450만원에 처함/1958. 1. 31. 『동아일보』, 사설 ‘만화를 허위보도라니 ‘를 발표, 이 사건을 비판

A4 경북일원의 고관들이 대구 동인동 거주의 강성병(姜聖柄)이란 이름 없는 청년에게 농락당하는 이른바 ‘가짜 이강석’ 사건이 1957년 늦여름에 발생했다. 이 청년은 타고난 연극적 소질과 피난민들로부터 배운 서울말 솜씨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 행세를 하면서 1957년 8월 30일 경주로 내려가 경찰서장을 전화로 불러낸 뒤 그 지역 유지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청년의 가짜 이강석 행세는 영천, 안동, 봉화 등지에서도 계속되다 평소 이강석을 알던 경북지사 자체에 의해 가짜 행각이 탄로나 9월 18일 대구지검에 구속되었다.

A5 『동아일보』의 연재만화 「고바우영감」이 문제되어 필화를 입은 사건이 1958년 1월 23일에 발생했다. 그 내용은, 일반 가정의 변소를 치는 인부들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의 변소를 치는 인부를 만나자, 꿈쩍없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그린 풍자만화였다. 당시 세인을 웃겼던 ‘가짜 이강석 사건’이 이 만화의 배경이었다. 서울 시경은 1월 27일 만화작가 김성환 씨를 ‘경무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신문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혐의를 씌워 즉결심판에 회부, 과료 4백 50환에 처하게 했다. 신문 만화를 허위보도로 몰아 작가를 제재한 첫 사건이었다. 『동아일보』는 1월31일자 사설 「만화를 허위보도라니」를 통해 이 사건을 비판하기도 했다.

A6 벌금: 김성환(동아일보 만평가, 과료 4백 50환)

A7

A8 ‘만화를 허위보도라니’ (동아일보, 1958. 1. 31)/김삼웅, 『한국곡필사』, 동광출판사, 1987, 50-51쪽

A9

A1 불온문서 철폐(撤布)간첩단사건

A2 1958. 8. 8

A3 1958년 8월 8일 서울시경찰국, 철폐간첩단사건 발표

A4

A5 1958년 8월 8일 오전 서울시경찰국은 10년 동안 남한 각지에 살포되었던 불온삐라 및 벽보 사건의 주범 및 관련자인 간첩 10여명을 체포하고, 그 전모를 발표하였다. 내용에 의하면,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을 받고 10년간에 걸쳐 남한 각지에서 수십명의 세포원을 포섭하여 남로당 재건공작을 하는 한편 방송망까지 이용하여 북한괴뢰의 선전을 하고 1만여매의 불온삐라 및 벽보 등을 인쇄하여 남한 각지에 살포하는 동시에 반정부 및 반미운동을 해오던 일당 10명의 고정 간첩이 전원 경찰에 의해 체포’ 되었다.

A6 김원식(金源植:36세), 정순택(鄭舜澤:38세), 강호웅(姜鎬雄:32세), 한관남(韓觀南:37세), 김동길(金東吉:23세), 이인구(李仁九:25세), 김동수(金東洙:41세), 이상필(李相弼:43세), 김경수(金慶洙:23세), 이열호(李熱鎬:36세)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8, 338-339쪽/ 「김원식 외 재판기록」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A9

A1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필화사건

A2 1958. 8-1958. 9

A3 1958. 8, 『사상계』에 함석헌 씨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게재/1958. 8.8. 국가보안법혐의로 함석헌씨 구속/1958. 8. 29, 함석헌씨 석방/1958.9, 『사상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풀어 밝힌다 ‘발표

A4

A5 『사상계』 1958년 8월호에 게재된 함석헌 씨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정신적 방향을 상실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만 물질에만 집착해 민족과 윤리를 잃은 국민에게 생각하는 생활을 하자고 촉구한 글로서, 당시 냉전에 편승하여 민족의 정신적·윤리적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승만 체제를 신랄히 비판’ 한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함석헌씨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 반독재 민주항쟁에 나서게 되고, 특히 자유언론의 투사로서 새로운 변모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그는 ‘남한은 북한을 소련·중공의 꼭두각시라 하고,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 하니, 남이 볼 때 있는 것은 꼭두각시뿐이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의 놀음이었다. 민중의 시대에 민중이 살았어야 할 터인데 민중이 죽었으니 남의 꼭두각시밖에 될 것이 없지 않은가’ 라고 물었다.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부제가 붙

은 이 논설가운데 이승만 정부가 특히 문제를 삼은 구절이 이 대목이다. 남한을 복귀와 똑같이 꼭두각시로 표현하여 국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필자인 함석헌 씨와 장준하 사장을 연행하여, 반국가 이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이 한편의 논설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곳곳에서 찬반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20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함석헌 씨는 다시 『사상계』9월호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풀어 밝힌다』는 글을 발표하여, ‘그 글에서 가장 심히 받은 비난은 국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 혁명을 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오해였다’고 말하고, ‘나는 죽어도 사상의 강제를 당하고 싶지는 않다. 타협도 아니요, 내 한 몸의 편리를 위해서도 아니다. 될수록 참을 하기 위해하는 일이다. 참은 스스로 하는 것이요, 참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이다. 참은 완전한 맘의 자유에서만 될 수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20일 만에 필자가 석방됨으로써 일단락 짓게 된 이 사건은 비민주적인 자유당 정권이 한 우국적 종교인의 용기 있는 외침에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다 거센 세론의 반발로 좌절된 사건이라 할 것이다.

A6 구류: 함석헌(「사상계」 필자, 20일 구류)

A7

A8 논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6·25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사상계』 1958. 8월 통권 61호)/ 논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풀어 밝힌다 (『사상계』 1958년 9월호, 통권 62호)/’ 보안법위반혐의로 함석헌씨 긴급구속 (『경향신문』, 1958.8.10)/咸錫憲씨를 불기소 처분 사상계논문집필자 (『조선일보』, 1958.10.01(2))/김삼웅, 『한국곡필사』, 동광출판사, 1987, 53-77쪽

A9

A1 철도노조 디젤기관차 대체로 인한 감원과동

A2 1958. 9. 24-1958.10.10

A3 1958. 9. 22. 교통부, 철도측에 2,056명의 감원계획 발표/1958. 9. 24. 철도노조측이 감원반대 성명 발표, 8개항 요구조건 제시/1958.10.10. 철도노조, 중앙운영위원회가 감원계획의 수정요구한 제출, 수용

A4 1958년 9월 22일 교통부장관은 그해 10월 말까지 2,056명의 감원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철도부문에서는 디젤기관차가 도입되면서 1,700명이 감원되었었다.

A5 2차에 걸친 감원계획에 대해 철도노조측에서는 9월 24일, 다음과 같은 8개 조항의 이유를 열거하여 감원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① 철도현장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인해 전체인원의 50%가 시간외 초과근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50%인원이 보충되어야 한다 ② 상시 철야근무자에 대해 적당한 기간의 휴일을 주지않는 것은 노동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1,500명의 부족인원이 보충되어야 한다 ③ 10월부터 추가개정예산에는 금년도의 감원계획이 없었음 ④ 디젤기관차의 도입으로 금년초 감원이후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보충이 없어 업무량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⑤ 제2차 디젤기관차 도입이 신년초에 실현되면 그에 따라 예상되는 감원실행까지 다른 계획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철도사무원은 기술사무의 집행자로서 이란행정관서의 사무원과 다르므로 단순하게 감원될 수 없다 ⑦ 교통부는 사업관청이므로 합리적 운영방법을 수립하여 자기채산을 위한 운영으로 감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⑧ 실업자에 대한 구체책이 없는 감원은 사회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적 견지에서 감원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감원계획은 처우개선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부득이한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할 수 없다 하여 철도노조측은 1958년 10월 10일에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상시 철야근무자에 대한 주간 법정휴일 부여할 것과 이에 소요되는 1,500여명을 보충한 나머지 인원을 감원수로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감원반대운동의 결과 감원은 실시되었으나 실시요령은 조합측 요구가 수용돼, 현장직에서 약 6%, 관리직에서 약 15%, 국, 청에서 동일한 비율로 실시하여 당초의 2,056명 중 1,090명 만이 감원되었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p.450-451

A9

A1 제11차 大韓勞總 全國代議員大會

A2 1958. 10. 29-30

A3 1958. 10. 29, 부산국제극장에서 제11차 대한노총전국대의원대회 개최/10. 30 규약개정을 반대한 대의원들의 출석거부에도 불구하고, 김기옥과는 대회를 속개, 개정된 규약에 의해 따라 김기옥을 위원장으로 선출

A4 자유당의 기간단체로 어용화된 대한노총의 주도권 싸움을 둘러싸고 10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대천과가 승리하게 된 것은 일시적 방편으로서의 야합의 결과였다. 10차대회에서 정대천에게 협력했던 김기옥 등은 곧 정대천을 상대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것은 1958년의 1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둘러싸고 다시 표면화되었다.

부산부두노조 위원장이며 자유노련 위원장이었던 김기옥은 1958년 1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한노총의 전권(全權)을 독점하기 위해 그 전해 대한노총 제10차 대의원 대회에서 정대천과에 패배하여 탈락한 철도노련위원장 김주홍을 포섭하고 정대천과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공작에 착수했다. 이 공작은 광산노련 위원장 이주기의 동조를 얻는데 성공하여 드디어 임원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노총 규약개정운동으로 나타났다.

A5 1958년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는 그해 10월 29일과 30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대한노총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였던 것인데 대한노총 최고위원의 일원인 정대천, 하광춘 등은 임원개선을 위한 규약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부산대회를 무기연기한다고 공고했으며 그 이유는 대회를 앞두고 임원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규약개정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무기연기 공고에 응하지 않고 일부 노조들이 이 대회를 강행한다면 이 대회는 비합법적 대회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김기옥 위원장과 대립하는 일파는 즉각적인 반발을 제기하였다. 대한석탄노련 위원장인 노응벽(魯應璧)과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 위원장 김말룡(金末龍)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의신립(異議申立)이 그 하나이고, 대명광업 노조의 김관호(金觀浩)와 대한노총 부산지구노조연합회의 최종자(崔種子)의 명의로 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및 결격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립이 그 다른 하나였다. 한편 대한노총의 최고위원들인 김기옥과 이기주는 성명을 발표하고 앞서의 정대천, 하광춘 등의 대회 무기연기 공고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동이므로 무효이고, 대회는 기정 일자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여 대한노총은 다시금 파벌적 분열을 표면화했다.

결국 보사부의 중재로 규약개정은 내지 않겠다는 김기옥과의 약속과, 정대천과의 대회 무기연기 취소가 합의되어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는 10월 29일 5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국제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김기옥과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종래의 집단지도체제를 1인 지도체로 개정하려는 규약개정안을 제출, 정대천과의 맹렬한 반대를 야기했기 때문에 대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사회를 맡은 이기주는 정대천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약개정안의 표결을 강행, 재석 500명 중 339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를 공포하였다. 다음날인 10월 30일 규약개정을 반대한 대의원들의 출석거부에도 불구하고 김기옥과는 대회를 속개, 개정된 규약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위원장에는 예정대로 김기옥이 321표를 얻어 선출되었으며 사무총장에는 이기주가 취임하였다.

이로써 1953년 이래 최고위원제로 집단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던 대한노총은 다시 위원장제에 의해 강력한 1인지도체제가 되고, 김기옥은 그 위원장직을 맡아 대한노총의 완전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정대천과는 거세되고 말았다.

A6 김기옥(부산부두노조·자유노련 위원장), 김주홍(철도노련위원장), 정대천·하광춘(대한노총 최고위

원)

A7

A8 ‘大韓勞總全國代議員大會에 대한 異議申立’,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72, 부록 6-2/ ‘大韓勞總全國代議員大會 및 缺格勞動組合에 대한 異議申立’,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74쪽, 부록 6-3/ ‘대한노총에또분규’ 「경향신문」, 1958. 10. 23/ ‘부산 노총대회 일대 수라장화’, 「경향신문」, 1958. 10. 31/ ‘11차 노동대회 폐막...위원장에 김기옥씨 선출’, 「경향신문」, 1958. 11. 1/ ‘난장판속에 규약수정안을 통과. 노총대회 위원장에 金琪玉씨 선출’, 「조선일보」, 1958. 10. 31(2)

A9

A1 釜山 大韓造船公社 쟁의

A2 1958. 11. 1-1958. 12. 23.

A3 1958. 10월 말 현재, 대한조선공사 7개월의 노임 체불/1958. 11. 1, 노조측, 경남 당국에 쟁의 신고, 체불임금 지불요구/1958. 11. 27. 당국의 협상으로 체불노임 전액을 12월 5일까지 지불할 것으로 약정/1958. 12, 약정기일까지 사측의 불이행으로, 노조측은 부산지방법원에 노임지불차압집행신청 소송 제기/1958. 12. 11, 부산지방법원의 심의로 대한조선공사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판결, 이에 노조측은 냉각만료일인 13일 기한으로 파업돌입할 것 통고/1958. 12. 12, 경찰국과 수상서(水上署)형사가 조선공사에 난입, 노조 임한식(林漢植)을 연행하고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12. 13 아침 노조는 긴급상집회의(緊急常執會議)를 열고, 파업 단행을 결의/12. 14, 노조측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12월 20일까지 노임지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압된 공사 재산 중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결정/12. 19. 노사 연석회의에서 체불임금 전액과 11월분 급료를 23일까지 완불하기로 합의, 합의각서 교환/다음날인 20일부터 파업을 중지, 정상영업이 속개되었고, 23일 약속대로 체불임금 지불

A4 대한조선공사는 1958년 현재 350명의 노동자를 둔 상공부 소관 국영기업체였다. 그런데 이 대한조선공사는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경영이 부실했으며, 1958년 10월 말 현재 7개월분의 노임이 체불되고 있었다.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全國海上勞動組合聯盟) 산하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은 1958년 10월부터 체불노임의 지불을 촉구하였으나 회사측과 상공부 당국은 성의 있는 답변과 대응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A5 1958년 11월 1일 노조측은 경상남도 당국에 정식 쟁의를 신고, 체불노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회사측에 통고하였다. 이에 조선공사 경영진은 경상남도 당국에 행정 알선을 의뢰, 노조측과의 협상을 시도하였다. 노조측은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의 지원을 받으면서 당국의 협상제안에 응하였다. 그 결과 11월 27일 최종적으로 알선이 성립되어, 체불노임 6.749만원 전액을 12월 5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이 경과하여도 사측이 시행해 옹기지 않자 노조측은 경상남도 당국의 알선에 의해 성립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노임지불차압집행신청(勞賃支拂差押執行申請)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심의한 결과 12월 11일 “경상남도 사회과 알선으로 성립된 대한조선공사와 동 노동조합간의 약정에 비추어 이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동공사에서 계속 노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대한조선공사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힘을 얻은 노조는 냉각기간이 만료되는 12월 13일을 기해 전원 파업에 돌입할 것을 회사측에 통고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파업일이 다가오자, 경남 경찰국과 수상서(水上署)형사가 조선공사에 난입, 노조 임한식(林漢植)을 연행하고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당국은 바로 그날 실시될 예정이던 이승만 대통령의 산업시찰에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책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13일 아침 노조는 긴급상집회의(緊急常執會議)를 열고, 전국해상노조연맹 간부들의 후원을 받으며 파업 단행을 결의하였다. 그날 정오를 기해, 전국 해상노조위원장 김사옥(金似郁)은 파업 선언문을

당독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① 노임지불 집행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한조선공사 재산을 강제 차압한다 ② 체불노임 중 단 한푼의 미불이 있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완전 청산시까지 파업을 지속한다 ③ 파업중의 공사내 경비는 노조에서 2개 반으로 편성 담당하며 공사내의 일체 시설을 보호하고 조합원은 경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노조는 부산지방법원 집달리의 동원을 요청, 파업 당일인 12월 13일 노조 의장단 입회 하에 공사 재산에 대한 차압을 단행하였다.

상공부에서는 조선공사의 파업이 알려지자 이철원(李哲源) 사장을 비롯 이사 6명과 감사 2명의 사표를 전부 수리하고, 부사장 한 사람만을 잔무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 경남도지사는 14일 노조 대표와 면담을 간청하여, 경찰국장, 부산해무청장, 해운국장(상공부장관을 대리하여)이 참석한 가운데 해원노조연맹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사태 수습과 파업중지를 요청하였다.

노조측은 14일 밤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12월 20일까지 노임지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압된 공사 재산 중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부당국은 한미합동경제위에서 사태수습 방안을 검토한 결과 17일 회의에서, 대충자금(對充資金)에서 노임지불에 필요한 자금을 방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일 노사 연석회의에서 체불임금 전액과 11월분 금료를 23일까지 완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노사 쌍방은 합의 각서를 교환하고 노조측은 공매처분 공고를 취소, 재산차압 집행을 해제하였으며, 다음날인 20일부터 파업을 중지, 정상영업이 속개되었고, 23일 약속대로 체불임금은 지불되었다.(김, 215-17)

A6 이철원(李哲源, 대한조선공사사장), 임한식(林漢植, 노조대표)

A7

A8 ‘조선공사 종업원들 14일부터 파업. 5천여만원의 노임미불로’ (조선일보, 1958.12.12(2))/김낙중, 앞의책, 215-217쪽

A9

A1 국가보안법개정과정

A2 1958. 11.18-1959. 1. 15

A3 1958. 8. 5. 검찰이 제시한 보안법 개정시안을 대폭 강화한 보안법 개정안을 자유당이 국회에 제출/1958. 11. 8. 일부 언론규제관련 강화조항을 추가하여 국회제출/1958. 11. 21.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개정안 반대성명 발표/1958. 11. 23. 민주당에서 반대성명 발표/1958. 11. 27.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의 범야(汎野) 단일세력인 「국가보안법개정투쟁위원회(國家保安法改惡鬪爭委員會)」를 구성, 신보안법 개정안 반대운동 전개/1958. 12. 2. 자유당이 「반공투쟁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장택상, 간사에 박세경·이원장·이은태), 「개정투쟁위원회」 등을 반공의 이름으로 위협/1958. 12. 19 국회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사이 자유당의원들로 보안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1958. 12. 23, 야당 사회단체,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안법 반대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 날치기 통과 규탄대회, 가두데모 등을 벌임/1958. 12. 24. 자유당소속 한희석 국회부의장이 경위권을 발동, 국회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이던 야당인사들을 끌어낸 후 자유당의원들만으로 30여분만에 보안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개정안, 예산안, 각종 세법등을 무더기로 통과시/1958. 12. 27.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통과는 무효」라는 성명발표/1959. 1. 15. 신보안법 발효

A4 자유당은 5·2총선 당시 통과시킨 협상선거법(1958. 1)을 통해 언론을 규제하는데 일단 자신을 얻었지만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더 원천적으로 야당의 공세와 언론의 비판에 썩기를 막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시 검찰의 일각에서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날로 극심해 가는 북괴의 대남 공작을 대응하는데 미비하므로 새로운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를 기회로 자유당은 오제도·문인구·조인구 등 검찰실무자들의 보안법 개정시안을 대폭 보강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1958년 8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A5 국회에 제출된 신보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차적으로 이적(利敵)행위의 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8일 이 개정안에 다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혼란케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제17조 5항)을 추가하였다. 물론 이 조항은 언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1958년 11월 23일 반대성명을 발표,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안법은 공산분자를 더 잡을 수 있는 잇점보다는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야당을 질식시키며 일반의 공사생활을 위협할 害點이 심대하다”고 지적, 법안반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보다 앞선 1958년 11월 21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도 이 법안의 언론관계 조항이 언론자유와 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반대를 표명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건의서를 보내, ▲적용범위가 광범 모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조항이 있고 ▲심의절차를 신중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무시했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하였다.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대여론은 11월 27일 마침내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의 범야(汎野) 단일세력인 「국가보안법개정투쟁위원회(國家保安法改惡鬪爭委員會)」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공산위협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안법개정을 기필코 달성해야겠다”는 자유당의 성명(1958. 11.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여당은 12월 2일 「반공투쟁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장택상, 간사에 박세경·이원장·이은태), “반공투쟁의 태세를 가일층 강화하여 일체의 용공·회색적 정치세력을 타도한다.”고 맞섬으로써 「개악투쟁위원회」 등의 반대운동에 반공이란 이름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보안법의 연내 통과를 강행하기로 당론을 모은 자유당은 동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던 12월 1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사이 김의준(金意俊)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 각본대로 최규옥(崔圭鈺) 의원의 동의, 임철호(任哲鎬)의원의 재청과 김위원장의 통과 선포까지 3분안에 신보안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자유당의 날치기 통과에 격분한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의원 80여명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범야 각 정당 사회단체, 재야 인사들은 1958년 12월 23일 「보안법 반대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 가두데모 등을 기도하였다. 야당의 이러한 농성사태에 대해 자유당은 “소수당이 타협을 거부하고 농성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격하고 농성의원들을 경위권을 발동하여 축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의 한희석 국회부의장은 경위권을 행사하여 300여명의 경위들로 하여금 농성의원 80여명을 국회본회의장에서 끌어낸 후 자유당의원들만으로 30여분만에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지방자치법개정안, 예산안, 각종 세법등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2월 27일에 “국가보안법 통과는 무효”라는 성명을 냈고, 이어 30일에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59년 초 전국에서 반대데모를 기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으며, 오히려 정부 여당측의 사주를 받은 애국단체연합회의 「민주당 폭거규탄 총궐기대회」가 각지에서 일어났다. 가두시위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 야당은 원내에 「민주구국원내투위」를 결성하고 원내에서는 범야세력이 「민권수호국민총연맹」을 결성하여 투쟁방법을 전환하였으나 이 신보안법은 195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A6 김의준(金意俊, 국회법사위 위원장, 자유당) 최규옥(崔圭鈺, 자유당소속), 임철호(任哲鎬, 자유당)

A7

A8 ‘여.야 보안법 대결 본격화’ (경향신문, 1958.11.27)/ ‘보안법 개악반대 데모불허에 법조계서 물의’ (경향신문, 1959.1.6)/ “자유권 명맥사수” 보안법안 개악반대 국민대회 준비위 발족 (조선일보, 1958.12.24 (조1))/ ‘보안법 개악반대에 모종조치?’ (조선일보, 1958.12.29 석간 3)/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48쪽/한국혁명재판소, 『한국혁명재판사』, 95-96쪽/김중훈, 『한국정당사』, 서울고시학회, 1969, 99쪽/오소백, 『해방22년사』, 문학사, 1967, 327쪽/김중훈, 『한국현대정치사』, 제2권(제1공화국), 한국사료연구소 편, 성문각, 1986, 161-163쪽/진덕규·한배호·김학준 외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443-447쪽.

A9

A1 全國纖維勞聯의 勞動時間 단축쟁의

A2 1959. 2. ?-1959. 10. ?

A3 1959. 2. 전국섬유노련, 8시간노동제 엄수 등의 요구조건으로 쟁의 제기/1959. 10. 8시간 노동제 실시 승인하는 단체협약 체결

A4 대개 8·15 이후 귀속기업체로 있던 방직공장들은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에 의한 값싼 원면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권(利權)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승만과 자유당 중진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적 이권이 온상이었다. 그 결과 방직공장 사주들은 대개 강력한 관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가 노골적인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도 어용화 경향이 높았다. 1958년에 이르러 방직 부문 노동자들의 과중노동은 사회적 여론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섬유노련(I.T.T.L.W.F.)은 1958년 3월 한국 섬유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섬유노동조합대회에 보고되었고, 동 대회는 한국섬유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항의문을 채택, 대한민국 보사부 장관과 대한노총 위원장 등에게 전달하였다.

A5 1959년 2월 전국섬유노조연맹에서는 전국 20여개소에 있는 36,500여 조합원들이 ①8시간 노동제의 엄수 ② 현재 임금 수준을 인하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수용되지 못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쟁의 재개 후, 10월에야 비로소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승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A6

A7

A8 김낙중, 앞의책, 218-219쪽

A9

A1 부산 埠頭勞組의 쟁의

A2 1959. 1. 24-

A3 1959. 1. 24. 부산부두노조, 8개 하역회사를 상대로 노임인상 요구 쟁의 제기, 당국에 신고/1959. 2. 28. 당국의 행정알선으로 노사 쌍방에 합의 촉구, 합의 시행일자 소급문제로 합의 결렬/1959. 3. 7. 냉각기간 만료/1959. 5. 27. 6월 1일을 기해 전원 파업 돌입할 것을 선언/1959. 5. 30. 외자청 부산사무소장의 알선으로 노사 쌍방에 쟁의타협 권고/5. 31. 노조측은 파업 여부 쟁의행위 가부투표 실시, 전 조합원의 절대 지지로 파업 결의/1959. 6. 1. 당국의 행정 알선으로 타협안 제시, 노사 양측의 수용으로 파업 우선 철회됨/1959. 6. 부두노조위원장 김기옥이 한국운수주식회사 임봉순(任鳳淳) 사장과 결탁, 비료조작노임(肥料操作勞賃)과 일괄 타결한다는 명목 하에 타협안에서 쟁취한 노임 인상분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포기케 만든 사건 발생,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A4 1958년 부산부두 노동자들은 3년 전에 체결한 노임협정 단가에 의거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정부의 외자청(外資廳) 당국에서도 1958년 5월 1일에 외자조작요금(外資操作料率)을 일부 개정,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1957년 5월 1일자로 소급 실시한다는 것을 공고하였다. 이와 같은 외자조작율 인상 결정에 따라 하역회사들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하역 노임을 소급 인상지불할 것을 기대하고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미루기를 반년 이상 끌어왔다.

A5 1959년 1월 24일 부산부두노동조합은 8개 하역회사를 상대로 외자(外資) 작업에 대한 노임인상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고 경상남도 당국에 신고하였다. 당국은 2월 1일 행정알선에 이어 2월 28일에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노사 쌍방에 지시하였으나 노임협약 시행 일자를 1957년 5월 1일로 소급 실시하느냐 195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느냐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3월 7일 냉각기간은 만료되고, 사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5월 27일에 이르러 부득이 5,000여 부두노동자들은 6월 1일을 기해 전원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생우(李生雨) 부위원장이 인도하는 부산부두노동조합의 강경한 입장을 알게 된 외자청 부산사무소장은 5월 30일 노사 쌍방의 관계 당사자들을 불러 놓고, 쟁의의 타협

을 권고하고 실패할 경우 부산항으로 입항하던 모든 외자를 인천항으로 돌릴 것임을 위협하자, 노조측은 5월 31일 전조합원에게 파업 여부에 대한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 전조합원의 절대 지지로 파업을 결정하였다.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상황실에는 노사 쌍방 대표와 도당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최종 행정알선을 시도한 결과 결국 도당국이 외자 하역노임 인상협약은 1959년 1월 1일부터 소급 체결 실시하고 1957년 5월 1일부터 1958년 12월 말까지 소급 인상 실시문제는 앞으로 2개월간의 행정알선 기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타협안을 제출하여, 일단 파업은 철회되고 노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부산 현지에서 이생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던 사이 부산부두노조 위원장이자 대한노총과 자유노조연맹위원장 김기옥(金琪玉)은 서울에서 자유당 정객들과 결탁, 노조를 배신하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다. 즉 김기옥은 1959년 6월 한국운수주식회사 임봉순(任鳳淳) 사장과 결탁하여 비료조작노임(肥料操作勞賃)과 일괄 타결한다는 명목 하에 쟁의 과정에서 실질상 쟁취한 노임 인상분의 많은 부분을 포기케 만들고 앞으로 2개월간의 행정알선 기간을 통해 받으려던 1957년 5월 1일부터 1958년 12월 31일까지의 소급인상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기옥의 이와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 1958년 11월 대한노총지구 노동조합연합회 최종자(崔種子), 대한노총 전국광산연맹 대명광업소 노동조합 김관호(金觀浩), 대한노총자유연맹 인천항만자유노조 김인숙(金仁淑) 등이 「'료조작비 23억 2,000여만원 부당횡령 및 노임 12월 2,000만원 배임 횡령사건'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함과 아울러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국회조사단이나 검찰 조사도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자유당의 방해, 압력에 눌려 사건은 모두 잠적하였다.

A6 이생우(李生雨, 부산부두노조부위원장), 김기옥(金琪玉, 부산부두노조 위원장 겸 대한노총과 자유노조연맹위원장)

A7

A8 '오늘 아침 단행? 부산부두노조 파업'(조선일보, 1959.06.01(조간 3))/ '공전하는 부산부두노조. 테로로 분쟁은 장기화'(조선일보, 1959.07.02(석간3))/ '부산부두노조 내분 더욱 격화'(조선일보, 1959.07.02(조간3))/ 부산부두노조약사편찬위, [부산부두노조약사], 1969, pp.115-121/전국부두노조, [한국부두백년사] 1979, pp.281-300/김낙중, 앞의책, pp. 219-221

A9

A1 경향신문 '여적' 필화사건(경향신문폐간사건)

A2 1959. 2. 5-1960. 4. 27

A3 1959.2.5, 『경향신문』 고정칼럼 「여적」에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에 대한 논평 실림/서울 시경은 단평 「여적」의 필자 주요한과 발행인인 한창우를 내란선동혐의로 입건/1959. 4. 20, 정부에 의해 『경향신문』폐간조치/민권수호국민총연맹이 주최한 '언론자유수호국민대회에서' 경향신문 '폐간 조취 철회촉구 선언 발표/1959. 5.1 주한미대사측, 성명발표/1960. 4. 27 대법원의 '발행허가정지처분의 집행정지'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복간

A4 한국 가톨릭의 후원을 받는 『경향신문』은 부산 피난 시절에도 발췌개헌안 파동을 전후하여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장기집권 기도를 강경하게 비판하고 나서, 테러단 '땃벌레'의 습격을 받는 등 반독재적인 논지 때문에 정부의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향신문』은 1959년 1월 11일자 조건에 실린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이기봉 의장은 병구(病軀)를 이끌고 스코필드 박사를 친히 방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근력이 있었다 하거니와, 그 동기는 아마도 스코필드 박사가 시내 모 지(誌)에 기고한 극히 격렬한 비판문 때문이라는 것도 상상되는 바이며, 동 박사가 의장의' 권고 '를 격분한 어조로 거부한 데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찢림을 받았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고 논평하여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경향신문』은 또 계속하여 2월 16일자 3면에 「사장단은 기름을 팔아먹고」라는 폭로기사, 4월 15일자 석간 1면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밝혔다 '는 사실과 다른 기사 등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

A5 정부가 『경향신문』에 발행허가 취소라는 최강경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59년 2월 5일자의 고정 칼럼 「여적(餘滴)」의 내용이었다. 이 칼럼은 이틀 전부터 연재되고 있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글에 대해 논평한 것이며, ‘다수결의 원칙’은 미국 노틀담 대학 교수 페르디난드 A. 허먼스가 『Social Research』 1958년 봄호에 「The Tyranny of the Majority」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을 일본에서 발간하는 잡지 『아메리카나』 1958년 11월호에 일어로 번역 게재한 것을 『경향신문』이 다시 전재한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이 논문을 전재하면서 단평 칼럼 「여적」에서 ‘인민이 성숙되지 못하고, 또 그 미성숙 사태를 이용하여 가장된 다수가 출현한다면 그것은 두말없이’ 폭정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선거가 진정 다수 결정에 무능력할 때는 결론적으로 또 한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 다수 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정부 당국은 『경향신문』을 미군정법령 88호를 적용, 1959년 4월 20일 폐간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 시경은 단평 「여적」의 필자 주요한과 발행인인 한창우(韓昌愚)를 내란선동혐의로 입건했다. 『경향신문』폐간은 국내외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문화인 33명은 ‘경향신문의 폐간은 미군정 법령 88호에 준거하는 것은 독립국가의 위신을 손상하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성토했고, 민권수호국민총연맹이 주최한 ‘언론자유수호국민대회’는 ‘경향신문에 대한 정부의 폐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군정법령 제88호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선언했다. 주한 미국대사 월터 아우링도 5월 1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언론 탄압이 언론과오를 교정하는 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한국 편집인협회는 ‘군정법령은 점령 하에 군정장관이 공포한 한 개 명령이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법 기타 일반 법령에 의할 것이다’면서 국회에 군정법령의 폐기청원을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대법원의 ‘발행허가정지처분의 집행정지’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1년 만인 1960년 4월 27일 복간되었다.

A6 내란선동혐의입건 : 주요한(「여적」필자), 한창우(발행인)

A7

A8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령상’ (『경향신문』, 1959, 1, 11)-김삼웅, pp. 82-85/「餘滴」, (『경향신문』1959. 2. 4)-김삼웅, pp. 86-87/오소백(당시 경향신문 사회부장), ‘증언’, 『해방22년사』/경향신문 사사편집위원회, 『경향신문 사십년사』, 1986, 경기신문사, 146-175쪽/김삼웅, 『한국곡필사』, 동광출판사, 1987, 78-87쪽/김삼웅,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가람기획, 240-243/김삼웅, 『곡필로 본 해방 50년』, 한울, 1995, 92-94쪽

A9

A1 石炭鑛勞組의 임금인상 爭議

A2 1959. 8. 17-1959. 10. 30?

A3 1959. 8. 17. 석탄광노조연합회는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임금 50%인상의 쟁의 제기/1959. 10. 7. 공사측의 무성의로,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일제 파업 결의/1959.10.12. 석탄공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거부/1959. 10. 16. 대한노총이 노조측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성명/1959.10.30. 보사부, 정부의 조정안으로 타협할 것을 권고

A4 1958년 10월 임금 30%인상을 비롯, 잉여인건비(剩餘人件費) 지불 등을 조건으로 제기됐던 쟁의는 1958년 11월 4일의 협정에 의해, 임금인상 문제를 잉여인건비조사 종료시까지 일시 보류한다는 규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잉여인건비 조사가 종료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노조측은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한 결과 쟁의를 결의하였다.

A5 1959년 8월 17일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석탄광노조연합회 산하 8,700여명의 노동자들은 임금 50%인상을 요구하는 쟁의 제기하였다. 그러나 석탄공사측은 인상 임금의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쟁의 타결에

무성의를 보인다. 결국 1959년 10월 7일 노조측이 총파업을 결의하였는데 노조연합회 회장인 노응벽은 기본임금을 50% 인상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함을 숫자상으로 제시하고 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적 알선기간 1주년을 지나고도 36일 동안 알선에 응하여 왔으나 성과가 없었으므로 결국 조합원의 99% 파업지지를 얻어 돌입하게 되었다고 경과를 밝혔다. 석탄공사측은 12일 노조측의 요구를 거부하여 사태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59년 10월 16일 대한노총에서는 성명을 발표, 석탄공사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므로 공사측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전국 조직을 동원하여 투쟁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보사부에서도 10월 30일 정부의 조정안에 따라 타협할 것을 종용하였다. 결국 보사부에서 제시한 임금 10% 인상을 노조에서 수락하고 석탄공사에서도 월평균 4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쟁의는 종결되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연간 26일분의 휴일수당을 53일 분으로 올려 받기로 하였고 노사협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되었다.

A6 노응벽(노조연합회 회장)

A7

A8 전국광산노동조합, [鑛勞 25년사], 1974, pp.74-80/김낙중, 앞의책, 221-222쪽

A9

A1 달성광산 해고반대 쟁의

A2 1959. 8. 27-1959. 11. 19

A3 1959. 8. 27 달성광산 노조측이 노조간부 불법해고 등 10개 시정조건을 제기/1959. 9. 19. 사측에서 8개항 조건 수락, 쟁의 종결/1959. 9. 25. 노조임원선거 실시/1959. 10. 18. 사측에서 1959. 10. 22.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결의, 사측에 9월 19일의 노동위원회 결정사항 등 이행 촉구/1959. 11. 19. 사측이 제시한 8개항 협약에 조인, 쟁의 종결

A4 달성광산 노조는 1959. 8. 27 회사측에서 광산노조위원장 김치순(金治純)을 비롯하여 다른 8명의 노조간부를 8월 17일에 해고한 것에 대해 불법해고 시정 등 10개 요구조건을 제기했는데 행정당국의 조정과 도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1959년 9월 19일 사측에서 요구조건 10개항 중 8개조항을 수락하고 쟁의를 종결했다.

A5 1959년 9월 25일에 위 쟁의에서 중심 문제였던 노조 구성과 관련한 임원선거가 실시되었다. 도 노동위원 4명, 경찰관 그리고 사측 간부의 입회 아래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김치순이 위원장에, 김명선(金明善), 신경창(申敬昌) 두 사람이 부위원장에 재선됨으로써 사측의 노조 침투공세를 누르고 노조측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조직을 강화한 달성광산 노조는 노동계약 재체결 움직임으로 1959년 10월 22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를 결의하고 덕대(德大) 정현표(鄭鉉標)에게 통고하였다. 쟁의 조건은 9월 19일의 도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이행할 것, 하덕대(下德大) 제도를 없앨 것,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쟁의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노조를 해체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를 부당 해고하는 데 실패한 사용주인 덕대측에서는 규정이 모호한 하덕대를 두어 ① 무단 결근 3일 이상 ② 월간 결근 6일 이상, 지각조퇴 7일 이상 ③ 하덕대의 지시없이 작업장 이탈할 경우 언제든지 해고하여도 이의없다는 6개 조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를 노동자의 권익과 노조의 기능을 박탈하는 것이며 자체의 취업규칙이 없는 무계약 상태에서 서약서만 받아 노동자의 권익을 박탈하려는 속셈이라 하여 198명 전원이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자 덕대측에서는 취업을 거부하여 10월 18일 이래 휴광상태로 들어갔다. 도 당국의 여러차례 걸친 중재에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1959년 11월 14일에 실시된 투표에서 200명중 112명이 파업을 찬성투표하여 결의하였고 한편으로는 15일에 행동대를 조직하였다. 노조측의 강경한 태도에 사측은 덕대를 없애고 노조측과 계약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노조는 파업을 11월 19일까지 연기하였다. 그리고 파업을 6시간 앞둔 11월 19일 새벽 사측 대표 정현표와 노조위원장 김치순이 사측에서 제출한 8개항의 협약에 조인하여 해결되었다. 그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장(組長)제도를 과거와 같이 인정하되 조장은 2개조 이상 장악할 수 없게 한다 ② 광산측은 하덕대 제도와 서약서를 11월 19일로 철회한다 ③ 공상자(公傷者)에게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면

직된 노조간부 박옥출과 정갑생을 11월23일까지 원상복귀시킨다. ⑤휴직자 강복선 외 27명을 11월 19일 부로 복직시킨다 ⑥9시간 30분의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1월 23일부터 실시한다 ⑦ 종업원을 해고 할 때에는 언제나 수당을 지불한다 ⑧체불 노임 4개월분을 년내에 지불한다.

A6 정현표(달성광산 대표), 김치순(노조위원장)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pp.454-455

A9

A1 부산지방해무청 해고반대 쟁의

A2 1959. 8. 26-1959. 11. 21

A3 1959. 8. 26. 부산지방해무청 출항사무소, 대양해운 소속 아산만호 선원 44명 등 해고/1959. 9. 1. 아산만호 선원, 무단해고 반대, 해고보상금지급 결의, 쟁의 돌입/1959. 9. 20. 한국해원노조, 대양해운 해고선원의 해고수당미지불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경남도 당국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1959. 10. 22. 해운공사소속 해고선원 561명이 사장 남궁원에게 해고수당 지불요구하는 호소문 발송/1959. 11. 21. 단체협약 체결로 쟁의 종결

A4

A5 1959년 8월 26일 부산지방해무청 출항사무소는 대양해운 소속 아산만호의 선원 44명과 기타 선원 11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대해 아산만호와 그 부속선 선원들은 무단해고의 반대와 해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출항사무소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아산만호 선원들은 1959년 9월 1일부로 쟁의에 돌입하였다. 또한 해운공사 노조도 9월 12일 대명선원제도(待命船員制度)를 없애도록 회사측에 건의하기로 결의하고 선원들의 정당한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쟁의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한국해원노조에서는 대양해운에서 해고된 선원들의 해고수당미지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일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경남도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해운공사소속 해고선원 561명도 10월 22일 회사 사장인 남궁원(南宮遠)에게 해고수당 1,700만원과 연차 및 월차보상금 1,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결국 해운공사노조원들의 쟁의는 1959년 11월 21일에 가서야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종결되었다. 단체협약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및 노동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부의한다는 노조측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60쪽

A1 부산 택시노조의 파업

A2 1959. 9. 3-1959. 12. 24

A3 1959. 9. 3. 부산택시노조, 당국에 쟁의발생 신고, 정식 쟁의 제기/1959. 10. 18. 파업찬반투표 실시, 찬성으로 22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 돌입할 것으로 결의/1959. 10. 22. 행정당국과 대한노총, 사측, 노조가 참석하여 중재시도하였으나 사측이 단체협약을 미룰 것을 제의, 행정알선이 실패/1959. 10. 24, 노조측, 파업에 돌입, 22시간만에 사측이 단체협약에 응할 것으로 파업 중단/1959. 12. 4.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에 불응, 행정소송제기/1959. 12. 21 노조측이 재파업 돌입할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자유당 말기상황에서 파업성사되지 못함

A4 부산시내에서 운행되는 택시 운전자 1,375명은 부산 택시노조를 결성하고 있었는데 1959년 6월경부터 10여차례 걸쳐 택시 업주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교섭하였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회사의 운영이 주로 지입제(持入制)이기 때문에 운전사에 대한 임명과 보수 지불을 택시의 지입주(持入主)가 행하고 있으므로 사측은 단체협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구실로 거부하였다.

A5 이에 택시노조측은 1959년 9월 3일 경상남도 당국에 쟁의 발생을 신고하고 정식 쟁의를 제기하였다. 노조측은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① 2일 노동에 1일 휴일제 실시 ② 운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 보상금 지불 ③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자는 것」이었다.

노조의 쟁의에 대해 경상남도당국이 노사 쌍방에 알선을 시도하였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아, 도 당국은 사건을 경상남도노동위원회에 회부, 직권중재를 의뢰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동조합법 제 34조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노사 쌍방의 상호 의무에 관한 조항 규정에 따라 택시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의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택시회사측은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만다.

이에 노조측은 10월 18일 조합원들에게 파업 여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자 1,211명 중 파업 찬성 1,168명의 표를 얻어 10월 22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경남 도당국은 파업으로 초래될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여 알선을 시도하였고, 노조측도 당국의 성의를 존중하여 파업일을 다음날인 10월 23일로 미루고 행정 알선에 응했다. 10월 22일 밤 철야로 경남도청에서는 노조측에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 대한노총 경남도연합회 위원장, 전국해상노조연맹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삼화, 대역, 안전택시회사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나, 사용자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날 때까지 미룰 것을 요구하여 행정 알선은 실패하였다.

결국 노조는 파업을 단행하여 97.7%의 쟁의 참가율을 보였다. 10월 24일 새벽 파업을 단행한지 22시간 만에 회사측이 단체협약체결에 응하겠다고 협정하여 파업은 일단락되었는데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신규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② 해고시에는 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 ③ 1일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사정상 2일 근무 1일 휴무로 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을 협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하여 그 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10월 파업때의 협정을 위배하였던 것이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12월 21일부터 3일동안 시위를 전개하고 동 24일부터 파업을 재개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자유당 말기 관권의 개입으로 파업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 노동쟁의는 궁극적 해결을 막고 말았다.

A6

A7

A8 김낙중, 앞의책, 222-224쪽

A9

A1 제12차 大韓勞總全國代議員大會

A2 1959. 10. 7.

A3 1959. 10. 7. 서울 3·1당에서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임원선출과 60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절대지지할 것을 결의, 대회 마침

A4 1960년 3월 실시될 정부통령선거가 임박하고 있던 때에 자유당정부는 대한노총의 주도권을 둘러싼 김기옥, 정대천 양파의 파벌투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1959년 후반기부터는 양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자유당 고위 간부들과 보사부 당국의 주선으로 1959년 9월 3일 김기옥, 김주홍, 정대천 3인이 대한노총의 분규를 종식시키고 다가올 정부통령 선거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성명에서 그들은 「대한노총에 내분이 야기되었음은 사실이나 소아를 버리고 대야에 입각하여 그간 내분을 초래케 했던 모든 사태는 이를 백지를 환원시켜 노총 깃발 아래로 대동단결하여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비약시켜 부하된 사명을 완수할 것에 합의하는 동시에 내년에 실시될 정부통령선거의 대파업을 완수함에 힘을 합치기를 전국노동조합 동지 제위에게 간원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정대천과와 김기옥과가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을 지지한다는 사실만은 공통되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대등단결할 수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에도 계속 상대편을 비난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되자 보사부 장관이 다시 나서서 9월 13일 덕수궁에서 쌍방의 화해를 위한 각테일 파티를 개최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 김기옥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노총에서는 경전노조에 대한 제명처분을 10월 6일부로 해제하고, 정대천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전노조는 앞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와는 일체 손을 끊고 대한노총 산하에 단결하겠다는 성명서를 같은 10월 6일부로 발표하고, 동 10월 7일에 개최되는 대한노총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A5 1959년 10월 7일 서울의 3·1당에서 개최된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는 대한노총의 어용화와 부패를 반대하여 그 결성을 추진중에 있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하 노동조합들이 참가를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경전노조에서조차 불과 6명의 대의원밖에 참석하지 않은 채, 대한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사무총장, 선전부장, 법규부장 등 임원을 새로 선출하고, 다음해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절대 지지한다는 결의로 대회를 끝마쳤다.

결국 대한노총은 이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도 집권당의 예측단체로서 어용성을 명백히 하였으며 대한노총회관에 이승만과 이기붕의 정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추진위원회의 간판을 내걸기까지 하여 끝내 1960년 3·15부정선거에까지 가담하였다.

A6

A7

A8 京電勞組, [勞動] 제7권 12호, 1959. 12. 24-27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438-440쪽

A9

A1 2.28 대구 학생 시위

A2 1960.2.28

A3 1960.2.28. 경북고, 대구고, 경북여고, 경북사대고 등 고등학생 시위 / 1960.3.5. 서울, 민주당 선거 강연회에 참석자 1000여 명 가두시위 / 1960.3.8. 대전고 1000여 명 시위 / 1960.3.10. 대전상고 300여 명, 수원농고 300여 명, 충주고 300여 명 등 시위 / 1960.3.12. 부산 해동고, 청주 청주고 등 시위 / 1960.3.13. 오산고 100여 명 시위 / 1960.3.14. 원주농고, 부산의 동래고, 부산상고, 향도고, 북부산고, 데레사여고, 포항의 포항고, 서울의 중동고, 배재고, 대동고, 보인상고, 인천의 송도고 등 시위

A4 3.15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대구에서의 선거전략에 부심 하던 자유당 경북도당은 2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선거유세에 정치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의 참가를 막기 위해 각급 학교장을 소집, ‘일요등교’ 계획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고는 학기말시험, 대구고는 토끼사냥, 경북사대부고는 임시수업, 대구상고는 졸업생 송별회, 대구여고는 무용발표회 등의 명목으로 28일 일요일 등교지시를 내렸다. 이에 이 지시가 내려진 25일 밤부터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의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들이 비밀 회합을 갖고 일요일 등교 후에 항의시위를 하기로 약속했다.

A5 2월 28일 낮 12시 50분, 교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동장에 모인 800여 경북고교생들이 결의문을 낭독한 후 “민주주의를 살리자”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생들을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구 시내 중심가로 행진했다. 대구고도 800여 명이 오후 2시 경 시위에 들어갔고 경북여고생 100여 명도 참여했다. 경북사대고는 시위를 눈치챈 교사들이 학생들을 강당에 가두어 오후 늦게 시위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경북도 자유당 도당 당사, 도지사 관사 등으로 몰려다니며 시위를 벌이다 오후 3시 경 경북도청 앞에 집결했다. 경찰은 7시 40분 경 시위대를 강제해산 하고 주동학생 30여명 등 300여 명을 연행하였으나 민심동요와 시위 확대를 우려한 자유당 중앙의 지시로 모두 석방하였다. 연행자는 모두 석방되었으나 이 시위의 여파는 투표일인 3월 15일까지 이어졌다. 3월 2일 민주당은 이 사건을 최인규 내무장관에서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튿날 경찰의 선거대책 비밀공문 ‘9할 5분 득표를 목표

로 한 사전투표, 환표, 환함' 등을 폭로했다. 이어 3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민주당 선거 강연이 끝난 후 강연회에 참석했던 학생·시민 1000여 명이 “학생은 쫓기하라” “공명선거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3월 8일 대전고 1000여명, 3월 10일 대전상고 300여 명, 수원농고 300여 명, 충주고 300여 명, 3월 12일 부산 해동고, 청주 청주고, 3월 13일 오산고 100여 명, 3월 14일 원주농고, 부산의 동래고, 부산상고, 향도고, 북부산고, 데레사여고, 포항의 포항고, 서울의 중동고, 배재고, 대동고, 보인상고, 인천의 송도고 등 고등학생 시위가 이어졌다.

A6

A7

A8 ‘대구학생 데모사건에 대한 민주당 성명’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길사, 1990, 205쪽 / ‘민주당이 폭로한 비밀지령’, 앞의 책 205-206쪽 / ‘경북고등학생 결의문’ · ‘공명선거전국학생위원회·공명선거추진전국대학생투쟁회 호소문’ · ‘공명선고 호소 학생위원회 호소문’ · ‘대전고등학생 결의문’ · ‘지방유지여러분께 드림(문경고)’, 앞의 책, 234-237쪽 / 한완상 외, 『4·19 혁명론 I』, 일월서각, 1983, 21-29쪽 /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60-164쪽 /

A9

A1 마산 부정선거 규탄시위 (제1차 마산 의거)

A2 1960.3.15.

A3 3.15 제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 투표 및 개표, 민주당 선거 거부 선언, 마산시청 앞 1만여 군중 시위 / 3.16, 최인규 내무, 마산사건 민주당 또는 공산당 지령사주 여부 등 철저 조사 언명, 이대통령, 마산사건 배후관계 규명 의법 처리 지시 / 3.17 치안국장 이강학, 마산사건은 공산당 수법과 비슷하고 사망자는 4명뿐이라고 밝힘 / 3.18 이기붕, 기자회견서 마산사건 질문에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라고 답변, 대한 변협, 마산사건 조사단 파견. / 3.19 이대통령, 마산사건은 난동이므로 의법 처리하겠다고 담화발표, 이기붕, 마산사건 주동자 의법 처단 담화 발표 / 3.28 대한변협, 마산사건 조사단 보고서 발표 : 데모의 원인은 부정선거이며 사건 확대는 경찰의 책임이다

A4 3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3인조·5인조 공개투표, 대리투표, 환표, 환함 등 사전 계획된 부정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당 마산시 당은 투표가 시작되는 시간인 오전 7시 투표소에 들어가 4할 사전투표를 확인,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선거포기를 결정했다. 민주당 간부들의 주도로 시작된 이날 마산 시위는 저녁 7시 30분 경 마산 시청 앞에 1만여 명의 군중이 집결, 경찰과 대치하면서 발생했다.

A5 시위는 3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총무 정남규 등 민주당 간부들이 앞장서고 학생과 시민 1천여 명이 뒤따른 시위대열은 오후 4시 20분 정남규 등 민주당 간부 6명이 경찰에 연행될 무렵에는 이미 5천여 명을 헤아렸다. 이들은 자진 해산하였다가 7시 30분 경에 1만여 명이 마산 시청 부근에 집결했다. 8시 경 시위대가 “부정선거 다시 하라” “투표의 자유를 달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청에 접근하자 소방차가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진압을 시작했다. 시위대는 돌팔매로 소방차를 저지하려 했고 운전사가 뛰어내리자 소방차는 무학초등학교 정문 앞 전주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마산시내가 정전되었다. 이때부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표,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격렬해진 시위대는 밤 9시 30분 경부터 파출소를 불태우기 시작했으며 허운수의 집, 자유당 당사, 서울신문 마산총국, 국민회 마산지부, 남성동 파출소 등을 차례로 공격했다.

정부는 16일 ‘마산데모 관련자를 형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엄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3월 17일 치안국장 이강학은 “마산소요사건은 공산당의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서 배후에 공산당 개재여부를 조사중” 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민주당 및 대한 변호사 협회의 조사활동, 일부 검사들의 공정한 수사 등으로 인해 공산당 개입설이 허위로 드러나자 정부는 3월 23일 내무장관 최인규의 사표를 수리하고 25일에는 구속자 중 정남규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석방, 박종표 경위 등 경찰관 5명을 발표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어 28일에는 치안국장 이강학을 문책·해임하고 30일 대검찰

청 소진섭 차장검사가 “마산사건에 공산당 배후조종의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의혹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마산 봉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3월 16일 서울에서 고교생 5백여 명이 “독재정치 배격하자” “마산동포 구출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안국동 민주당 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17일 전남여고, 진해여고, 서울 성남고, 24일 부산고, 부산상고, 25일 부산 동성중, 데레사 여고, 경남공고, 혜화여고 등에서 각각 시위가 벌어졌다. 또 전북대생 3백여 명은 대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4월 4일 시위를 벌였다.

A6 사망 : 김영호, 김효득, 김영순(이상 남성동 파출소 앞), 오성원(시민극장 앞), 김용실, 심상웅, 김이규(이상 북마산 파출소 앞) / 부상 : 이원자 외 수십명(남성동), 방정명 외 수명(시민극장), 유경옥 외 수명(북마산) / 연행 : 253명

A7

A8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 제1차 마산사건의 진상

“금번 마산사건은 국민의 정부시책에 대한 평소의 불신에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사실과 연일 접촉(接踵)하여 각지에서 일어나는 폭행·구타·살인 등의 불법 행위가 민중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야기된 민중봉기(?)의 성격을 띤 사건이다. 불법 부정이 백주에 공연 자행 되었으며 검·경은 이를 방치하여 불문하니 국민의 생명·재산은 안보할 길이 없고 사회의 기강은 날로 빈폐(頽廢)하여 서중(庶衆)의 울분은 격화일로이던 중 특히 마산시에 있어서도 다대수의 시민에게 변호표를 배부치 않았고 투표소에 야당 참관인은 거의 전부가 입회불능하였으며 또 선거는 주로 경찰에 의하여 집행될 뿐 아니라 그 횡포가 자심하니 이러한 민중의 누적된 울분이 일시에 폭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여름날 흑서에 전신에 돋았던 땀띠가 모이고 모여서 한 개의 종기가 되어 끓아터진 격이다. 그것이 우연히 마산이라는 지점에서 크게 터졌을 뿐으로 순연한 우발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마산 사건 발생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나 경찰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경찰은 무자비하게도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다수의 살상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도주하는 학생들을 추격 살상하였고 다시 나아가 야암(夜暗)을 타서 산간 동리에 무차별 일제 사격을 감행하여 실내에서 놀던 아동에게까지 흉부 관통상을 입히는 등 실로 구불형언(口不形言)의 만행을 자행한 것으로 단정한다.” (김삼웅,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민족·민주·민중선언』, 한국학술정보(주), 25-26쪽)

‘마산발포사건’, 편집부, 『4·19 혁명론Ⅱ』, 일월서각, 1983, 195-205쪽 / 한완상 외, 『4·19 혁명론Ⅰ』, 일월서각, 1983, 29-34쪽 /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64-166쪽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69쪽 / ‘마산발포사건(관련자 : 박종균 무기징역, 김종복 15년, 조희국 4년, 이종덕 15년, 이종한 4년, 심재복 공소기각, 한대진)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4권, 국학자료원, 2001, 1217-1285쪽 /

A9 제2차 마산 시위

A1 부산고등학교 학생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A2 1960.3.24.

A3

A4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3인조, 9인조의 상호감시투표, 무더기투표, 사전투표, 야당에 대한 폭력행사 등 갖가지 불법으로 치러졌다. 부정선거를 준비할 당시부터 부산 시내에서는 데모를 계획하여 전단 300여장을 인쇄하다가 발각된 일도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부산역전에서 배우들을 동원하여 시민위안공연까지 하였다. 또한 개표에서도 갖가지 부정개표수법이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여타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위에 나섰다. 3월 7일, 고등학생 20여명이 공명선거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려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유인물 등을 압수 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서울의 ‘공명학생특위’와 맥을 같이하는 ‘공명선거호소학생위원회’를 조직한 후 영도와 부산역전일대에 다소의 뼈라를 살포하기도 하였다. 이날 연행된 학생은 동아고등학생 姜泳九와 경남고등학생 鄭大元 등이다. 3월 10일 밤에는 부산시 동구청 지하의 곳곳에 많은 뼈라가 살포되었는데 모두가 ‘민권수호학생

투쟁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된 것으로,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도들이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사수하자, 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자, 우리세대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부정과 항쟁하자” 는 내용이었다. 3월 12 일에는 해동고등학생 130여명이 광복동에서 시위를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를 당한 후 유학조 등 12명이 연행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반정부적인 내용보다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이었다. 3월 13일 밤에는 동래고 일부 학생들이 주도하여 부산상고, 동성고, 혜화여고, 테레사 여고 학생 등 3백여 명은 광무교 다리 밑에 집결하여 데모를 감행하려 하다가 미리 눈치를 챈 정사복 경찰에 의해 해산 당했다. 선거를 하루 앞둔 3월 14일도 범넛골 로터리에서 동래고등, 부산상고, 향도고등, 혜화여고, 영남상고, 테레사여고 등 북부산지구 학생들 7~8백여 명이 모여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벌이다가 정사복 경찰의 무력에 수많은 학생들이 구타당하였고, 여학생 20여 명과 동래고등학생 文東玉 외 다수가 연행 당한 채 데모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산에서의 대규모 부정선거 반대 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자극 받은 고등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A5 부산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9백 여명은 3월 24일 아침 9시 경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빠라를 뿌리며 정문으로 또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몰려나왔다. 학생들은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 하자! 경찰은 학생사살을 책임지라! 구속학생 즉시 석방하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생을 구속하려거든 백만 학도 모두를 구속하라!” 는 등 5개 항목으로 된 유인물을 뿌리며 동시에 구호를 외쳤다. 출동한 무장경관의 제지를 받자 이들 학생들은 “평화적인 시위는 우리의 권리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초량 제2과출소 뒷길을 빠져 부산진 역까지 산발적으로 집합했다. 2~3백명의 학생들은 부산진역을 시발점으로 시청 쪽으로 향해 본격적인 데모로 들어갔다. 9시 15분 경 간선도로를 따라 구호를 외치는 데모대는 초량역까지 오는 동안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비교적 질서 있게 시위하던 이 데모대는 초량역 앞에서 경관들에게 약간의 제지를 받았으나 무난히 뚫고 영주동 방면으로 달렸다. 초량입구에서 제일 뒤에 따라가던 학생 하나가 사복경관에게 연행되어 골목길로 끌려가자 데모대는 일단 제자리에 정지하고 일부 학생들은 연행되던 학생의 뒤를 추적했다. 한 두명의 학생이 경관에게 검거되어 연행되자 학생들은 더욱 흥분상태에 들어갔다. 부산소방서 앞에서부터 이들 데모 학생들은 질주하기 시작했다. 영주동과출소 앞에 무장경관 수십 명이 길을 막고 방어선을 친 것을 본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진했다. 교통은 완전히 차단되고 영주동 과출소 앞에서 제지하는 경관들과 학생사이에 난투가 벌어졌다. 경관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해산시키면서 십여 명의 학생이 과출소에 연행되었다. 이렇게 동료들이 대량적으로 연행된 것을 본 학생들은 길가에 널려있는 돌맹이를 던지기도 했다. 이때가 오전 10시. 학생들은 삼삼오오 때를 지어 골목길로 피해 학교로 돌아갔다. 학교 입구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있었으며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관사이에 시비까지 벌어졌다. 경찰서와 각과출소에 연행된 수십 명의 학생들은 오전 10시 30분 대부분 훈계 방면되었다. 당시 경찰들은 부고생들의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 조용히 돌아가시오 잘못하면 후회한다” 고 협박하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서서히 교문으로 되돌아갔다. 우선 교직원들의 명령으로 운동장 한가운데 몰려 앉아 훈계를 받았다. 이때 부산고등학교 이웃에 있는 부산중학교에서 입학식을 앞두고 신입생에 대한 주의가 있었던 관계로 학부형들과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훈계를 받는 상급학생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골목으로 도망쳤던 학생들이 한사람씩 몰려들기 시작하고 학교주위는 구경꾼들과 데모 소식을 들은 학부형들이 몰려들어 아이들 이름 부르기에 바빴다. 학교에서 초량입구까지엔 정사복 경찰관이 감시하느라고 서성대고 있었다. 이 날 경찰은 발포는 하지 않았으나 곤봉으로 학생들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부상당하였다. 부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이날 시위는 부산 시내 중·고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25일 아침 문현동 소재 동성 고등학교 학생 250여 명이 “공명선거 다시 하자, 마산에서의 학생사살사건을 경찰이 책임지라” 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동성중학교 학생 150여 명도 범천동 광무교에서 시내방향으로 전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의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학생들의 권리의식의 신장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즉 부산여상학생들은 4월 1일 재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7명의 교사를 면직시키고 3명의 교사를 좌천시킨 데 항의하여 동맹 휴학에 돌입하였다.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개학날인 4월 6일을 기하여 교사집단해직의 학교처

사에 항의하는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교측에서는 전 교사를 동원, 학생들의 등교를 종용하였다. 교직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7일부터 등교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학생들은 4월 13일까지 등교를 거절하면서 해직 교원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A6

A7

A8 부산학생선언문 : 동포에게 호소하는 글 : 구속하려거든 백만 학도 모두를!

동포여, 잠을 깨라! 일어나라!

짓밟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나라. 내일의 조국 운명을 위해 일어나라, 하늘에 부끄럽고, 광복 위해 피흘려 돌아가신 선열들에 부끄럽고, 공산 적수로부터 강토를 구해 준 민주 우방에 부끄러운 이 추태를 보고만 있겠는가? 바로 지금 온 겨레가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비참하고도 하늘 및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막힌 변을 겪는 우리는, 아직도 억울한 가슴의 상처를 부동켜안고 엎드려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학도들은 일어섰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인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 우리에게도 눈코귀입이 있다. 우리더러 눈을 감으라 한다. 귀를 막고 입을 봉하라고 한다. 공부나 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가슴속에 한 조각 남은 애국심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상관 말라고 한다. 왜 상관이 없느냐? 내일의 조국 운명을 어깨에 뉘 우리들이다. 썩힐 대로 썩힌 후에야 우리에게 물려주려느냐? 우리더러 배우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라.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권모술수 부리기와 정당싸움만 일삼는 그 추태를 배우란 말인가? 국민이여, 잠을 깨라!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다. 주인이 가져야 할 열쇠들을, 우리에게 고용 당한 하인에게 하나 하나 빼앗기고 있다. 피흘려 돌아가신 선열들의 혼을 위로하자. 마산 사건에 억울하게 희생된 혼들을 위로하자. 왜놈과 공산도배와 싸울 때 흘렸던 학도들의 고귀한 피다. 나라 찾은 오늘, 우리는 왜 민주경찰의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려야 하느냐. 구속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그들을 구속하려거든 백만 학도를 모두 구속하라. 삼천만 겨레를 모두 구속하라. 백만 시민이여, 잠을 깨라! 동포여 잠을 깨라! 선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김삼웅,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민족·민주·민중선언』, 한국학술정보(주), 25쪽)

편집실, 『4.19민중사』, 학민사, 1984, 58쪽 /

A9

A1 제2차 마산 시위

A2 1960.4.11.-1960.4.17.

A3 4.11. 김주열 시체 발견, 시위 발발 / 4.12. 국회 본회의, 마산 조사단 파견 결의 / 4.13. 성지여고, 마산여고, 제일여고 시위 / 4.15. 마산상고 시위 / 4.15. 국회 본회의 마산사건을 두고 ‘좌익폭동(여)’, ‘시민의거(야)’ 공방전 / 4.17. 한옥신 부장검사 “공산당 개입은 속단할 수 없다” 고 발표

A4 1960년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 경 마산시 신포동 중앙부두에서 한 낚시꾼에 의해 인양된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3.15 제1차 마산봉기 때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이 당시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눈에서 뒤통수까지 관통 당한 채 27일만에 바다 위로 떠오른 것이다. 김주열을 사망에 이르게 한 최루탄은 당시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에 의해 지급된 직경 5cm, 길이 20cm에 탄피가 알루미늄으로 된 미세 고성능 원거리 최루탄으로, 꼬리부분에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건물 벽을 뚫고 들어 폭발하는 무장 폭도용 무기였다. 김주열이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마산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김주열의 시체가 옮겨진 도립병원에 몰려든 시민들은 참혹한 주검을 확인하고 시위대열을 형성하였다.

A5 시위대는 1960년 4월 11일 오후 6시 경 3만여 명으로 불어나 자유당과 관련이 있는 건물이나 인사의 집을 부수 나갔다. 남성동 파출소에 이어 마산시청, 마산 경찰서, 자유당 허윤수 의원의 집, 북마산·오동동·중앙동·신마산 파출소를 휩쓴 성남 군중은 다시 창원군청, 허윤수가 경영하는 동양주정, 무학주조공장을 부수고 재차 마산경찰서 앞으로 밀려갔다. 애국가, 전우가, 해방가를 부르며 다시 마산경찰서 앞에 모인 시위대는 경찰서 마당에 세워 놓은 서장 지프차를 불지른 후 경찰서 무기고를 부수고 수류탄 13개를 들고 나와 그 중 한 개를 경찰서 건물에 던졌다. 밤 9시 30분 경 경찰들에게 칼빈이 지급

되었고 이때부터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쫓기던 시위대는 자유당 사무실, 서울신문, 국민회, 마산 경찰서장 관서, 마산소방서, 마산시장 박영수의 집 등을 부수고 12시 경 해산했다. 이날 시위로 시위대 2명이 죽었다. 시위는 12일에도 이어졌다. 마산공고 5백 명, 창신고 3백명, 마산여고 4백명, 마산고 5백명, 마산상고 1천 명이 오전 10시 경 다시 시위에 나서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들은 도립병원 영안실로 행진해 가서 김주열의 시신에 경건히 경례하고 자진 해산했다. 그러나 경찰이 전날 시위의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시민들을 연행하자 다시 시위가 벌어졌다. 1만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에 돌을 던졌고, 밤 9시 경부터는 경찰들이 발포하기 시작하여 밤 11시 경 시위대가 해산될 때까지 총성이 계속되었다. 4월 13일, 비가 내리는 속에 10시부터 성지여고, 마산여고, 제일여고 1천여 명이 시위에 나서자 경찰이 소방호스로 붉은 물감을 탄 진화용 물을 퍼부었다. 경찰은 소방차, 최루탄 등으로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오후에 빗줄기가 폭우로 바뀌자 시위대도 잠잠해졌다. 정부는 제1차 마산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 것으로 몰고 가려 하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이 난동에는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좋은 기회를 주게 될 뿐이니 극히 조심해야 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4월 17일 한옥신 부장검사가 “공산당 개입은 속단할 수 없다” 고 발표함으로써 이 정권의 계획은 또 한번 실패를 경험하였다. 제 2차 마산 의거에 이어 15일에는 마산상고, 동래고에서, 16일에는 청주공고 시위가 있었고, 17일에는 진주·창녕·하동· 등지에서 시위가 있었다.

A6 사망자 13명, 총상자 미상, 경찰 연행자가 처음에는 통금 위반 혐의 등 1000명이 넘었으나 이들 중 구속 입건 32명, 불구속 입건 35명, 도합 67명이 소요죄 혐의를 받았다. 사망자 13명은 중학생 1명, 중졸 3명, 고교생 4명, 고졸 3명 그리고 구두담이 1명(국교중퇴, 21세), 40대 상인 1명이었다. 소요죄 입건자 67명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 18명, 노동자 15명, 학생 14명, 공업 4명, 행상 3명, 창녀 3명, 회사원 2명, 이발사 2명, 그리고 간호사 요리사, 식모, 상업, 세탁업 각 1명 씩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 26명, 20대 26명, 30대 8명, 40대 7명이었다.

A7

A8 한완상 외, 『4·19 혁명론 I』, 일월서각, 1983, 34-39쪽 / ‘경남경찰국장 보고전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213쪽 /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67-168쪽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69-70쪽

A9

A1 부산 동래고등학교 4.18 시위

A2 1960.4.18.

A3 4.15. 2학년 데모 기도 / 4.18. 3학년 비밀모임 / 4.18. 오전 9시 10분 시위 발발, 교문 진출 / 9시 50분 거제리 철도관사 제2방위선을 돌파 / 10시 15분 의장동 제3방위선을 돌파 / 10시 25분 제4방위선에서 대치, 경찰은 소방차 동원 / 11시 15분 범일동 삼일극장 앞에서 대치, 경찰은 사격 준비 / 1시 교직원 만류로 학교로 향함

A4 동래고 학생들은 4월 15일에는 경찰의 학원 출입과 감시에 반발하고 2학년 학생들이 데모를 하려다 학교 당국의 간곡한 만류로 해산하고 말았다. 15일 데모가 수포로 돌아간 날 밤에 3학년 간부 학생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4월 18일(월요일), 운동장 모임 중을 신호로 데모를 감행하기로 약속하고, 몇몇 학생들은 전단을 만들고 또 일부 학생들은 플래카드를 만들도록 서로 임무를 나누어 갖고 거사를 기다렸다.

A5 4월 18일 오전 9시 10분 운동장에 운집하고 있을 때였다. 길게 내뿜는 호각 소리를 신호로 “나가자” 하는 소리와 함께 플래카드를 펼치고 교문을 열었다. 학생들은 순식간에 교문을 박차고 뛰어 나갔으나 동래고 교사들의 결사적인 만류로 더 이상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들 중 5백여 명이 겹겹이 쳐진 경찰저지선을 돌파, 서면에 쇄도하여 부산상고학생과 합세할 기세를 보였으나 성공치 못하였다. 교문을 뛰어 나온 일단의 학생들은 동래 거리를 달려 동래여고 앞길을 통해 명륜동 사거리, 온천장으로 향해

달려나가며 전단을 뿌리고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 때 경찰은 동고 학생들의 데모대가 온천장 쪽으로 달려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맹렬한 추격전을 벌여 온천장 입구에서 데모 학생과 경찰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하게 되어 학생들은 넘어지고 쓰러졌다.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 트럭에 실려 동래고교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데모대 제1진이 교문을 빠져나간 후 운동장에 갇히게 된 1천여 학생들은 동편 담에 어깨를 대고 힘을 모아 밀어 붙여 담을 무너뜨리고 철조망을 뛰어 넘고 나와 모두 거리에 나섰던 관계로 데모대 제 1진이 학교에 강제 수용되어 왔을 때는 학교가 텅텅 비어 있었다. 후에 빠져 나온 데모대는 동래 우체국, 동래 경찰서 뒷길을 단숨에 달려나갔다. 한대의 소방차가 데모대 앞을 가로막았으나 학생들의 돌팔매에 차는 박살이 나고 데모대는 건잡을 수 없는 기세로 서면 쪽으로 뺏어 나갔다. 또한 주력 1천여 명은 시내 쪽으로 행진 9시 50분 경 거제리 파출소 앞을 지나 거제리 철도관사 경찰 제2방위선을 돌파, 계속 10시 15분 양정동 파출소 앞에서 동래서와 부산진 경찰서의 의장동 제3방위선을 돌파, 계속 데모를 하다가 10시 25분 제4방위선인 15헌병대 앞에 이르렀다가 증원된 시내 각 경찰서와 도경에서 급파된 백여명의 경찰대의 제4방위선에서 비로소 소방차를 동원했다. 데모대가 10시 50분경 제2방위선인 거제리 철도관사 앞에서 방위선을 돌파하려고 할 무렵 경찰에서는 수여발의 공포와 3발의 최루탄을 발사했다. 제3방위선을 돌파할 무렵에는 학교측에서 출동한 교직원들도 협의해서 중단시키려고 했으나 좌절, 10분 동안 노상에 학생들이 꿇어앉아 해산종용을 거부할 때 경찰대와 격투까지 하고 길 앞을 가로막은 각종 차량 속을 빠져나와 “데모 자유를 달라, 협잡선거 물리치자, 마산학생피살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데모를 계속강행, 경찰의 제지로 철도길을 따라 전포동 산밑으로 방향을 바꾸어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데모대는 범천동 부산상고 학생들과 합류하여 대규모 데모를 재개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내 중심가에 돌입하려는 동 데모대를 제지시키려고 공포와 최루탄을 발사 수명의 부상자를 내고 소방차 한 대가 파괴되었다. 이들은 데모 행진을 하면서 “경찰은 신성한 학원에 간섭 말라, 3·15때 정사복 경찰관 2~3백 명을 출동시켜 학교를 포위한 것은 공포감과 수업을 방해한 것이다, 마산사건 때 동료인 김주열군과 김영길군을 참사시킨 경찰관을 속히 처단하라, 마산사건 행방불명자를 속히 밝혀라, 평화적인 데모는 우리들의 자유다, 피로 찾은 민주주의를 정의로써 이룩하자” 는 등의 빠라를 시내곳곳에 뿌렸다. 남문구에 이르러서 행렬을 가다듬은 학생들은 평화적인 시위에 무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투석을 중지하자고 결의를 했다. 데모대의 뒤에는 수백 대의 버스와 각종 차량이 따르고 있었고 차내의 승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가로의 연변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었고, 학생들은 준비된 전단을 뿌리며 “협잡 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 하자!, 내 조국이여 동족을 살해하지 말라.” 라고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행진을 계속했다. 학생들의 입에서는 노래가 흘러 나왔다.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싸워서 세운 이 나라, 동포야 일어나라 나라를 위해...” 삼시간에 교통은 차단되고 연도의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학원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협잡 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 하라, 피로 찾은 민주주의 정의로써 사수하자,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제동 파출소 앞에 이르렀을 때 경찰들이 총을 들고 나와 데모대를 저지하였다.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드디어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연이어 사격을 시작하였다. 데모대는 또다시 투석전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의 완강한 저항에 경찰도 길을 터주고 말았다. 데모대의 대열이 좌수영을 통과할 무렵 시내에서 동원된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곳곳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었다. 학생들의 각오가 비장했으므로 최루탄이 발사되고 공포를 쏘는 총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으나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가슴으로 밀고 또 밀어 저지선을 통과했다. 데모대가 서면 굴다리 밑에 이르렀을 때는 백여 명의 무장 경찰관이 트럭, 소방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 학생들은 방향을 바꾸어 철길로 올라서 치닫기 시작하여 경찰 저지선을 돌아서 전진해 나갔다. 데모 대열이 제일제당 주식회사 앞의 다리에 이르렀을 때 한 때의 경찰관들이 가로막고 있었으나 “밀어라!” 소리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밀기 시작하자 그 위세에 경찰의 방위선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데모대는 제일 제당을 지나 범넛골 로타리를 돌아 시내 쪽으로 향했다. 어느새 신문사 차량들이 데모대 뒤를 따르며 취재를 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수십만 군중이 몰려 나와 박수갈채로 성원을 보내 주며 눈물을 흘

리고 있었다. 데모대는 경찰의 난폭한 저지만 없었다면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학생들의 손에서는 전단이 뿌려졌고 “피로 찾은 민주주의 정의로써 사수하자.” 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11시 15분 범일동 삼일극장 앞에는 무수한 차량으로 5, 6겹 저지선을 쳐 도로를 차단하고 수 백 명의 경찰관이 차량과 차량 사이, 그리고 바퀴 옆 차량 밑에 엎드려 총구를 겨냥하고 있었다. 데모대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 앞에 모두 주저앉아 버렸으므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기를 권유하기도 하고 경찰 봉으로 위협하고 최루탄을 발사해 보았으나 학생들은 더욱 굳게 짜고 앉아서 일어설 줄 몰랐다. 몇몇 학생이 경찰봉에 얻어맞고 끌려나가자 학생들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 데모대를 따라 줄곧 이곳까지 따라온 선생들은 사태가 심각함을 우려하여 결사적으로 말리기 시작했다. 즉 10여명의 교직원들의 호소에 의하여 학생들은 데모를 중지하고 경찰에 의해 마련된 버스에 실려 서면 쪽으로 학교를 향해 출발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난동죄로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호소한 것이다 교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데모 제1진에게 데모중지를 호소한 까닭에 일단 중지된 것인데 이때 도로연변에는 통행을 제지당한 수백대의 차량과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중이 도열해 있었다. 학생들은 잠시 후 ① 잡혀 간 학우들을 즉시 석방하라 ② 경찰은 온천장 제1데모 부대에서 잡혀 간 학우들을 석방하라 ③ 경찰은 우리들의 여하한 행동에 간섭 말라 ④ 학원의 민주화를 보장하라 ⑤ 데모의 주모자를 색출하지 말라 등 다섯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학생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몇 대의 트럭과 전차를 내주며 타고 갈 것을 권유했으나 신발을 잃은 학생들까지도 걸어갈 것을 자청해 모두 걸어서 다시 동래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목마다 물동이를 들고 나온 아주머니들이 물그릇을 건네주며 감사와 대견함을 표시해 주었다. 데모대가 거제동 파출소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의 분노는 충천했다. 데모대가 통과할 때 발포한 경찰을 잡아오라고 요구하며 학생들이 대로상에 주저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동래 경찰서장이 달려 와서 평화적인 데모대에 절대 자유를 보장하며 사후 책임은 경찰 서장인 내가 지겠다고 약속하여 데모대는 다시 동래로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동래 거리 양편에는 무수한 군중들이 늘어섰고 박수 갈채로 데모대를 격려해 주었다. 이렇듯 시위를 전개하고 교직원과 경찰의 권유로 귀교하면서도 데모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12시 40분경 데모대열이 거제동 조선견직 앞길에 이르렀을 때 마산에서 급파된 세대의 경찰소방차와 한 트럭의 무장경찰대가 그들을 뒤따랐다. 이렇게 증원된 경찰대는 경찰차의 지휘를 받으면서 약 백명의 무장경찰관이 2열 횡대를 지어 세대의 소방차 앞에서 학생 데모대를 뒤쫓았다. 데모대의 제1진은 온천장을 돌지 못했으므로 한 바퀴 돌 것을 결의하고 온천장 쪽으로 향해 나아갔다. 이때가 오후 1시경이었다. 경찰은 데모대가 동래시가를 지나 온천장으로 행하려 하자 뒤따르던 경찰대는 재빨리 학생대열을 앞질러 하오 1시경에는 온천장입구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됐다. 데모대가 온천장입구에 굽어 들었을 때에는 이미 약 100m 전방에 3열 횡대의 무장경관이 다리 건너편에 진을 쳤으며 그 뒤에는 삼대의 소방차가 엔진소리도 요란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백차를 탄 경찰간부는 학교교사들과 함께 데모 학생들의 전진을 제지시키면서 이 이상 나가면 사고난다는 말을 마이크를 통해 소리치고 있었다. 연도에는 만 명을 넘는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다리를 사이에 둔 학생대열과 경찰대의 대치는 약 한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한때는 공포의 분위기가 자아났다. 마침내 대기하던 경찰대와 소방차가 달려들어 쯤체로 물러서지 않는 학생들에게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이에 동고생들은 “평화적인 데모는 우리의 권리다. 우리는 끝까지 행진하자” 라는 데모대들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경찰은 동래에서 데모를 한다는 정보를 받고 마산에서 기동 경찰이 파견되어 왔다. 경찰은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었다. 이 때 동래 경찰서장이 데모대 앞에 나서서 “나는 경찰서장의 입장을 떠나서 여러분의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방위선을 죽음을 무릅쓰고 돌파한다면 사태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며, 여러분의 깨끗한 피가 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무사히 지휘해 오던 내 대신에 경남 도경 교통 차장이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고 건아여! 함께 물러납시다.” 하고 학생들을 달랬고 선생들도 여러 가지로 달래며 만류했다. 데모대는 우리가 깨끗이 학교로 돌아갈테니 경찰도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향을 동래 쪽으로 막 돌리는 순간 난데없이 소방차가 붉은 물을 뿌리며 학생들 행렬 속으로 달려들어 왔고 경찰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일시에 온천장 입구는 난투장이 되었으며 이 광경을 바라보던 시민들도 흥분하여 분노로 몸을 떨며 경찰의 만행을 지탄했다. 학생들은 고려직물회사 뒤 언덕에 다시 모여 힘껏 학도 호국단 노래를 부르고 학교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데모를 마치고 교정에 모인 시간이 오후 2시 40분이었다. 데모대는 교정에서 교가를 부르고 만세 삼창을 부른 뒤 교실로 들어갔다. 동고의 4·18의거는 부산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학생 의거였으며 시간적으로 6시간에 걸친 거사였으며, 거리 상으로 동래고교를 중심으로 온천장과 범일동까지 28Km를 넘는 대행군이였다.

A6 蔣梯模(28회) : 동래고교 2학년, 부산진 경찰서 앞 광장에서 데모대에 가담했다가 경찰이 쏜 흉탄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

A7

A8 동래고등학생들의 선서문 : “우리는 오늘 이 데모를 감당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이것이 어느 외부의 조종이나 권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지난 4월 15일 경찰은 동래고교 주변에 형사들을 수백명이나 동원시켜 학업에 충실하려는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조성시켜 미움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3.15 선거 때에도 경찰은 학교에 출입하기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리고 형사들은 간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진술 조사나, 조사서니 하는 것 등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에 대한 증오감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참아 왔다. 마산 시민과 학생이 다 같은 백의민족인 경찰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사실은 천추의 원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경찰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경찰은 학생을 사살해도 좋다는 법률이 현재 법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는 줄로 안다. 이 승만 박사의 항일 투쟁사에 빛나는 그 숭고한 투쟁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는 정의의 위하여 경찰의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목적을 관철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선서한다.”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240-241쪽)

‘동래고 학도는 이렇게 외치노라’,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41쪽 / 『부산일보』, 1960.4.18, 1960.4.19. / 동래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80년사』, 1978

A9

A1 4.18 고대생 시위

A2 1960.4.18.

A3 12시 50분 고려대생 3천명 인촌동상 앞 집결 / 1시 20분 국회의사당으로 행진 시작 / 2시 20분 국회의사당 앞 연좌시위 / 6시 40분 자진해산, 학교로 출발 / 7시 20분 천일백화점 앞 괴한들에 습격 / 8시 40분 해산

A4 4월 1일 신학기가 시작되어 봄방학을 마친 각급 학교가 신입생 맞이 등으로 부산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학생들은 무엇하느냐” “서울 학생들은 비겁하다” 는 비난과 불평이 공공연히 터져 나왔다. 마산에서는 두 차례나 대규모 유혈데모가 일어났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도시에서도 연일 데모가 터지는데 유독 수도서울에서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데 대해 학생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나 서울 학생들은 무작정 잠자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대 학생 데모가 그 분화구가 되었다.

A5 고려대 데모는 봄방학기간인 3월 중순부터 태동하였다. 방학 중 고려대 정경대 3학년 이세기 등 5개 단과대학 운영위원장들은 졸업생 기념 바클 제작 관계로 자주 어울리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미처 뚜렷한 행동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4월 신학기를 맞았을 때 지방에서 상경한 하급학년 학생들로부터 데모하자는 요구가 강력히 나왔다. 그러던 4월 11일 마산에서 다시 대규모 데모가 터지자 이들 간부 학생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신입생 환영회 예정일인 16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선언문, 격문 등을 비밀리에 준비하였다. 그러나 16일, 김새를 찬 형사들이 학교로 들이닥쳤고 학교측은 신입생 환영회를 무기 연기시켰다. 이에 따라 데모 계획도 연기되었다. 18일 아침 이들은 학교 안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평소 뜻을 함께 하던 대의원들에게 “오늘 낮 12시 50분 점심시간 사이렌을 신

호로 학생들이 교정에 있는 인총 동상 앞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예정된 시각, 학생들의 동태를 알아챈 학교 측은 사이렌을 울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인총동상 앞으로” 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3천여 명이 교정에 모여들었다. 신입생 환영회에 쓰려고 준비했던 타월이 급히 나눠지고 학생들은 “고대” 라고 큰 글씨가 새겨진 타월을 일제히 머리에 동여맸다.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고대신보 박찬세 편집국장이 기초한 선언문을 박수로 채택하였다. 오후 1시 20분, 고려대 3천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민주역적 몰아내자”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 는 플래카드를 선두로 교문을 나와 태평로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달렸다. 이들은 대광고교 앞과 안암동 로타리 입구 등에서 경찰의 완강한 제지에 부딪쳐 앞장선 9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대열을 뿔뿔이 흩어졌다. 학생들은 끼리끼리 골목길로 빠져 나와 오후 2시 20분 경 1천여 명이 의사당 앞에 다시 집결하였다. 마친 개회중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들은 연좌데모를 벌이면서 연행 학생 석방과 “대통령이나 내무장관이 직접 나와 부정선거를 해명하라” 고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① 행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보장하라 ② 행정부는 이 이상 민족의 체면을 망치지 말고 무능정치, 부패정치, 야만정치, 독재정치, 몽둥이정치, 살인정치를 집어치우라 ③ 행정부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라 ④ 행정부는 이 이상 우리나라를 세계적 후진국가로 만들지 말라 등 4개 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결의하였다. 오후 4시, 데모현장에 도착한 유진오 고려대 총장이 학생들의 해산을 종용했으나 학생들은 연행된 동료가 석방될 때까지 해산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연행 학생들은 오후 6시 경 내무장관 홍진기의 특별 지시로 석방되었다. 학생들은 유진오 총장과 고려대 출신의 이철승 의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오후 6시 40분 자진해서 연좌데모를 풀고 경찰차량의 선도를 따라 귀교길에 올랐다. 행렬이 을지로 4가에 다다르자 선두의 경찰차량은 청계천 4가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오후 7시 20분 경 행렬이 청계천 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도로 옆 골목 안에서 괴한들이 뛰어나와 행렬을 습격하였다. 1백여 명의 괴한들은 쇠파망치, 몽둥이, 벽돌 등 흉기로 닥치는대로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선두 학생 수십명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학생들은 사태를 알아차리고 “깡패들이 습격했다. 흩어지지 말고 집결하라” 고 외치면서 대항할 태세를 갖추었다. 학생들이 맞서려 하자 괴한들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렸다. 10분도 채 안된 사이에 학생 2백여 명이 쓰러졌다. 중상자 2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학생들은 울분을 삼키며 학교로 향해 8시 40분 경 해산하였다. 괴한들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대문 특별단부 소속 단원들인 조직폭력배들이었다. 반공청년단 종로구단장 임화수는 이날 낮 고려대생이 데모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단원들 3백여 명을 중앙청 옆 반공회관에 집결시켰다. 임화수는 부하들에게 데모대가 중앙청 쪽으로 향하면 정부지지 데모를 하는 척 하다가 데모대와 충돌하라고 지시하였다. 고려대생들이 국회 앞을 떠나자 폭력배들도 일단 해산하였으나 동대문 특별단부 소속 폭력배들이 천일백화점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귀교길의 학생들을 습격한 것이다. 동대문 경찰서는 이튿날 폭력배 8명을 연행하였으나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의 지시로 이들을 곧 석방하였다. 이 사건을 주도한 임화수 등 폭력배들은 1961년 8월 25일 혁명재판소에서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받았다.

A6 신도환 : 4대 민의원, 1959년 자유당 입당, 대한반공청년단장 (무기)

임화수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 단장 (사형)

유지광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단장 (20년)

임상익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부단장 (7년)

강승일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단원 (5년)

문장주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단원 (무죄)

차순환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단원 (5년)

원민수 : 무직 (3년, 집유)

이수보 : 이발공 조수 (3년, 집유)

김재운 : 하숙육 고용인 (3년, 집유)

강효상 : 무직 (무죄)

원익철 : 화랑영화사 사환 (무죄)

신동호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사정부장 (7년)

김성중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단원 (무죄)

주요한 :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부특별단부 단원 (7년)

김태연 : 화랑동지회 회원, 카바레 수표원 (무죄)

A7

A8 선언문 : “친애하는 고대 학생 계군!

한 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마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예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탁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한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 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비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라.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 계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 하에서는 항일 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 계군!

우리는 청년 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금하라!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말라! “ (김삼웅, 『한국 근현대사 100년 자료집 민족·민주·민중선언』, 한국학술정보(주), 27-29쪽)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16-17쪽 /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69-171쪽 / 한완상 외, 『4·19 혁명론 I』, 일월서각, 1983, 39-43쪽 / 한완상 외, 『4·19 혁명론 II』, 일월서각, 1983, 139-160쪽 / 고대신문사, 『사진·고대학생운동사 1905-1985』,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7, 56-67쪽 / ‘고려대학생데모대공격사건’,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4권, 국학자료원, 2001, 889-1008쪽

A9

A1 4.19 시위(‘피의 화요일’)

A2 1960.4.19.

A3 오전 8시 30분 대광고교생 1천여 명(혜화동) / 9시 20분 서울대 문리대, 법대, 미대, 약대, 수의대, 치대생 3000여 명 / 같은 시각 동성고 1천여 명 / 9시 30분 서울대 사대 1천여 명, 상대 2천여 명 / 10시 고려대 4천여 명 / 10시 20분 건국대 2천여 명 / 10시 30분, 서울대 문리대, 법대, 미대 등 국회 앞에 도착 / 10시 50분 서울대 사대, 상대, 건국대 국회 앞 도착 / 11시 40분 동국대 2천여 명 국회 앞 도착, 중앙청 진출 / 12시 연세대 5천 여 명, 홍익대 1천여 명, 중앙대 4천여 명 / 12시 20분 동국대 데모대 해무청 앞 2차 저지선통과, 국민대 앞 3차 저지선 진출 / 오후 1시 40분 경찰, 경무대 앞 최종 저지선에서 발포 / 2시 50분 경찰, 중앙청 옆 경찰 무기고 앞길에서 무차별 사격 / 3시 정부, 오후 1시로 소급하여 서울 일원에 경비계엄을 선포 / 4시 이기붕의 집 주변에서 실탄사격 / 5시 정부, 경비계엄을 비상계엄으로 바꾸고 통금시간 연장(오후 7시~익일 오전 5시) / 밤 10시 계엄군 서울 진주, 새벽 무렵 시위 진압

A4 4월 19일 조간신문을 펼쳐 본 학생과 시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1면 머리기사로 고려

대 데모의 상보가 실려 있고 깡패들의 데모대 습격 전말이 사회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더구나 고려대생 1명은 깡패에게 맞아 절명한 것 같다는 미확인 보도(후일 오보로 확인됨)까지 게재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 날 전부터 학교별로 은밀히 데모를 준비해 온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10여 개 대학생들은 물론이었고, 데모 계획이 아직 없었던 학교의 학생들마저 깡패 습격 보도를 접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서울대 문리대 생들은 정치학과를 중심으로 데모계획을 짰다. 3.15 선거 때부터 데모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가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거론은 4월 15일 오후 정당론 강의가 휴강이어서 이 때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정치학과 회장 윤식(당시 3학년)이 중심이 되어 거사일은 4월 21일로 하고 경찰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내 전 대학이 일시에 쫓기하도록 다른 대학과 연락을 취하고 격문, 선언문 등은 몇 사람이 초안을 준비하여 잘된 것을 채택할 것 등을 정하였다. 그러다가 18일 낮 고려대에서 먼저 데모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19일 아침으로 거사 날짜를 앞당긴 것이다.

A5 1960년 4월 19일 오전 8시 50분, 동승동 대학가의 서울대 문리대 게시판에 격문이 나붙었다. 문리대와 이웃한 법대, 미대, 교양과정부,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등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도 똑같은 격문이 일제히 나붙었다. 교정에 있던 학생들이 격문에 시선을 쏟고 있을 때 종로 5가 쪽에서 한 무리의 고교생 데모대가 함성을 지르며 동승동 쪽으로 몰려왔다. 오전 8시 30분 교문을 박차고 나온 신설동의 대광고교생 1천여 명이 경찰 저지선에 부딪쳐 종로 5가에서 혜화동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교생들의 함성이 신호이기라도 한 듯 문리대생들은 마로니에 앞 광장으로 우르르 모여들자 미리 준비된 선언문, 격문, 구호 등의 유인물이 배부되었다. 9시 20분, 문리대생 2백여 명이 교문을 나섰다. 바로 뒤이어 법대, 미대, 약대, 수의대, 치대생과 나머지 문리대생들이 데모에 나섰다. 모두 3천여 명의 서울대 데모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태평로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거의 같은 시각 동성고 1천여 명이 데모에 나섰고 9시 30분 서울대 사대 1천여 명과 상대 2천여 명 10시 고려대 4천여 명 10시 20분 건국대 2천여 명이 각각 교문을 나섰다. 10시 30분, 서울대 문리대, 법대, 미대 등의 데모대가 먼저 국회 앞에 도착하고 20분 뒤 서울대 사대, 상대, 건국대가 뒤따라 국회 앞에 도착하였다. 오전 11시, 동국대 2천여 명, 성균관대 3천여 명이 교문을 나섰다. 동국대 데모대는 11시 40분 의사당 앞에 이르자 “동대는 경무대로 가자” 라고 외치면서 중앙청을 향해 나갔다. 그 바로 뒤를 서울대 사대와 동성고 데모대가 합류하였다. 이들이 세종로를 지나면서 새로운 구호가 데모 대열 속에서 터져 나왔다. “이승만 물러가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는 구호였다. 당초 의사당을 목표로 삼았던 부정선거항의 데모의 대열이 어느 새 경무대를 표적으로 하는 혁명의 대열로 바뀌었다. 낮 12시, 연세대 5천여 명, 홍익대 1천여 명이 데모에 나섰고, 같은 시각 중앙대 4천여 명은 한강 인도교를 건넜다. 이 즈음 경기대, 외국어대, 단국대, 국학대, 국민대, 서라벌 예술대가 데모에 나섰고, 서울대 의대, 세브란스 의대, 가톨릭 의대는 흰 가운 차림으로 데모에 나섰다. 숙명여대와 일부 이화여대생도 데모 대열에 뛰어들었다. 한꺼번에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자 경찰의 저지선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 수뇌부는 경무대 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병력을 속속 효자동 방면으로 투입하였다. 내무장관 홍진기를 비롯한 각료들은 오전 10시 경부터 경무대에 모여 경무대 경호책임자 광영주, 치안국장 조인구 등 고위 경찰 간부들과 함께 대책을 숙의하였다. 낮 12시 20분, 경무대를 목표로 삼은 동국대 데모대가 중앙청 앞의 1차 저지선과 해무청 앞의 2차 저지선을 뚫고 국민대 앞의 3차 저지선까지 진출했을 때 무장헌병 1백여 명을 실은 군 트럭 4대가 데모대를 뚫고 효자동 쪽으로 사라졌다. 오후 1시 경 시내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데모에 나설 것을 우려하여 오전 수업을 마치고는 서둘러 학교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강문고, 경기고, 경성전기공고 학생들은 교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교생이 데모에 뛰어들었다. 다른 고교생과 일부 중학생들도 때를 지어 데모에 합류하였다. 이때쯤 서울 시내 데모 군중의 숫자는 10만명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오후 1시 5분, 선두는 효자동 정타 종점까지 진출했고, 중앙청 쪽에서는 후속 데모대가 계속 밀려들었다. 1시 30분, 데모대 선두의 몇몇 학생이 데모 저지용으로 세워 둔 소방차 3대에 올라탔다. 그 중 한 학생이 소방차 2대를 운전, 경무대 언덕길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1천여 명이 소방차 뒤를 바짝 따라갔다. 경찰은 경무대 정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

은 언덕길 중간 지점에서 최후 저지선을 펴 놓고 있었다. 오후 1시 40분, 소방차를 앞세운 데모대와 경찰의 간격이 10여 미터로 압축되었을 때 경찰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삼시간에 경무대 어귀는 수라장이 되고 길에는 7,8 구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경찰의 무차별 총격에 쫓긴 데모대는 잠시 후 동국대생을 선두로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경무대 어귀로 육박하였다. 쫓기던 데모대 가운데 동성고교 등 고교생들은 교모의 가죽끈을 턱에 걸고는 경무대를 향해 다시 돌진하였다. 죽음을 각오한 이들 고교생의 대열에 새로 도착한 연세대 데모대가 합류하였다. 경찰은 계속 총격을 퍼부었다. 이처럼 경무대를 향한 죽음의 행렬은 오후 5시 경찰이 시내 일원에 걸쳐 소탕전을 개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경무대 앞 데모 희생자는 노희두(22, 동국대), 김치호(21, 서울대 문리대) 등 사망 21명, 부상 172명이었다. 오후 2시경, 데모대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세종로 네거리에는 중앙청 쪽에서 시체와 부상자를 실은 구급차들이 연이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오가고 있었다. 이 무렵 데모대 일부는 대법원 구내에 몰려가 있었고 일부는 서대문 이기봉의 집 앞에서 데모를 벌이고 있었으나 주력은 세종로 일대에 집결해 있었다. 이미 데모대와 시민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있었다. 길가에서 박수를 보내는 정도로 소극적이었던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보자 흥분하여 데모에 뛰어들었다. 어떤 여학생들은 물을 퍼날라 데모대원들의 목을 축이게 했고 부녀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주워담아 데모대에 갖다 주었다. 곳곳에서 총성이 요란한 가운데 20만 명으로 불어난 데모대는 도심 거리에 넘실거렸다. 오후 2시 50분, 중앙청 옆 경찰 무기고 앞길에서 연좌데모를 하던 데모대가 무기고를 향해 육박하려 하자 경찰이 무차별 사격을 감행, 최정규(20, 연세대) 등 8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오후 3시, 정부는 국무원 공고 제 83호로써 오후 1시로 소급하여 서울 일원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중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 무렵, 서울신문사와 반공회관이 데모대에 의해 전소되었으며 데모대가 태평로 파출소에서 총격을 가하고 달아나던 경찰관을 뒤쫓아가 소공동 특무대 건물을 에워싸자 건물 안으로부터 총격이 가해져 이종량(17, 경기고 2년)등이 희생되었다. 각 병원에서는 수혈할 피가 모자라 피를 구한다는 벽보를 병원 입구에 내걸었다. 병원 앞은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병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총동원되어 잇달아 실려 오는 부상자의 구호 작업에 정신없이 움직였다. 오후 4시경, 이기봉의 집 주변에도 실탄 사격이 가해져 윤광현(20, 배문고 3년) 등 2명이 숨졌다. 이곳에서 데모하던 최기태(20, 경성전기공고 3년)는 데모대를 배후에서 습격한 정치깡패들에게 동양극장 안으로 끌려가 매 맞아 숨졌다. 오후 4시 30분, 정부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유혈사태가 벌어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도 경비계엄을 선포하였다. 오후 5시, 정부는 서울 등 5개 도시의 경비계엄을 비상계엄으로 바꾸고 통금시간 연장(오후 7시~익일 오전 5시) 등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오후 5시경,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포를 하던 경찰은 흩어진 병력을 경무대 앞에 집결시켰다. 뒤이어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관 3백여 명은 장갑차 2대를 앞세우고 일렬 횡대를 지어 중앙청 앞에서부터 일제 사격을 퍼부으며 데모대 소탕을 시작했다. 태평로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 데모대에 박수를 보내던 전한승(12, 수송국민학교 6년)이 경찰의 일제사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을지로 입구 내무부에서도 데모대에 총격을 가해 서현무(22, 중앙대) 등 7명이 숨졌다. 오후 6시 40분경, 소방차와 트럭에 분승하고 동대문 경찰서 앞을 지나던 데모대에 총격을 가해 다시 1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저녁 8시경, 40여 대의 차량에 분승한 데모대는 동대문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연도의 파출소를 모조리 불질렀으며 파출소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27정으로 무장,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같은 무렵, 다른 데모대는 돈암동과 미아리 일대를 누비다가 성북경찰서 앞에서 6명이 희생되었으며 진영숙(14, 한성여중 2년)은 데모대 버스를 타고 차창 밖으로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의 총격에 희생되었다. 밤 10시, 중랑교 앞에 집결해 있던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시내로 진주하였다. 서울에 진주한 계엄군은 제 15사단(사단장 조재미 준장)으로, 이들은 작전에 앞서 ① 상관의 명령 없이 절대로 총을 쏘지 말 것 ② 민간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 ③ 민간인으로부터 음식 등 기타를 제공받지 말 것 등을 지시받았다. 계엄군은 서울 외곽에서부터 3개 코스로 진입하여 이튿날 새벽 무렵 데모를 진압하였다. 4월 19일의 데모는 거의 전국적인 규모였다. 부산에서는 경남공고, 데레사 여고, 부산상고 등 고교생의 데모가 일어나 시민들과 합세, 격렬한 데모를 벌이다가 계엄이 선포된 오후 5시경 부산진 경찰서와 동부산 경찰서에서 발포하여 19명의 희생자를 냈다. 광주에서는 광주고, 전남대와 시민들 수천 명이

데모를 벌이다가 밤 9시 25분 경 경찰의 발포로 8명이 희생되었다.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인천 등에서 데모가 일어났으나 경찰이 발포를 하지 않아 희생자는 생기지 않았다.

A6

A7

A8 서울대 문리대 격문 : “여기 대학의 양심은 증언한다. 우리는 보다 안타까이 조국을 사랑하기에 보다 조국의 운명을 염려한다. 우리는 공산당과의 투쟁에서 피를 흘려온 것처럼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를 배격한다. 조국에의 사랑과 염원이 맹목적 분격에 흐를까. 우리는 얼마나 참아왔는가. 보라! 갖가지 부정과 사회악이 민족적 정기의 심판을 받은 때는 왔다. 이제 우리는 대학의 양심으로 일어나노니 총칼로 저지 말라. 우리는 살아있다. 동포의 무참한 살상 앞에 안일만을 탐할 소냐! 한숨만 쉴 소냐! 학도여, 우리 모두 정의를 위하여 총궐기하자.”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245-246쪽)

‘서울대 문리대 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44-245쪽, ‘연세대학교 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46-247쪽, ‘동아대학교 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48쪽 / ‘미국무성 성명’,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1990, 220-221쪽 / 한완상 외, 『4-19 혁명론 I』, 일월서각, 1983, 125-138쪽 / ‘4-19 학생혁명’, 『한국현대사회운동사전』, 열음사, 1988, 206-215쪽 /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①』, 한길사, 1990, 109-181쪽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69-95쪽 / 이재오,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171-179쪽 / 한완상 외, 『4-19 혁명론 I』, 일월서각, 1983, 43-54쪽 / ‘동양극장앞 의거학생살해사건(관련자 신연식 사형, 김한용 7년)’,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4권, 국학자료원, 2001, 1009-1022쪽 / ‘광주민주당사공격사건(관련자 : 윤재수 무죄, 박영철, 김재수, 이송학 오귀태 김재근 라유성)’,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23-1032쪽 / ‘경무대 앞 및 서울일원발포사건(관련자 : 유충렬 20년, 광영조 사형, 이상국 백남규 3년6월, 조인구 홍진기 무기징역)’,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43-1215쪽

A9

A1 4.25 교수단 시위

A2 1960.4.25.

A3 오후 3시 전체 대학 교수회의, 시국선언문 채택 / 오후 5시 50분 가두진출 / 오후 6시 50분 국회의 사당 도착, 시국선언문 낭독 후 해산

A4 1960년 4월 19일 이후 숨가쁘게 움직이던 정국은 이승만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와 이기봉(李起鵬)의 공직사퇴, 계엄사령부의 민심수습노력 등으로 인해 그런 대로 어떤 해결점에 접근하는 듯 보였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봉을 퇴진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함으로써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만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격앙되었던 분위기도 표면적으로는 제법 가라앉아 가는 듯 보였다. 그러던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이 데모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변하였다.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은 4월 20일부터 조용히 일기 시작하였다. 4월 19일 학생들의 엄청난 희생을 지켜본 교수들은 죄 없는 학생들만 희생시켰다는 자책감 때문에 여간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소 뜻이 통하는 교수들끼리 20일 밤부터 은밀히 만나 행동방향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각 대학의 교수들의 한 자리에 모여 강력한 내용의 시국수습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우(고려대), 이회승(서울대), 정석해(연세대), 조운제(성균관대) 등 주동 교수들은 4월 25일 오후 3시 서울대 의대 구내에 있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전체 대학의 교수회의를 열되, 비밀리에 연락하여 집회계 없이 회의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이들이 4월 25일로 날짜를 택한 것은 이 날이 서울대의 봉급 지급일이어서 많은 교수들이 학교에 나오리라는 예측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여도 봉급날이기 때문에 별달리 당국의 의혹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배려 때문이었다. 예정된 시각, 5-60명이 모일 것이라는 주동교수들의 예상과는 달리 250여 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모였다. 임시의정 정석해 교수의 주재로 회의는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 이희승 교수 등 9명이 시국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출되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별실에서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오후 5시 30분, 이승만의 대통령직 하야 요구를 골자로 한 시국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참석자 258명 전원이 서명하였다. 시국선언문 채택이 끝나 회의장 안이 잠시 웅성거릴 무렵, 동국대 김영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폐회하는 대로 데모합시다”라고 긴급동의를 냈다. 이 긴급동의를 박수로 채택되자 교수들은 바로 데모 준비에 들어갔다.

A5 1960년 4월 25일 오후 5시 50분, 교수들은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로 나섰다. 도서관과 연구실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 둘 달려나와 스승들의 행렬 뒤를 말없이 따랐다. 질서정연한 데모 행렬이 종로 4가를 지날 무렵, 뒤따르는 학생과 시민들은 7-8천 명을 넘어섰고 종로 화신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는 1만 명을 헤아렸으나 계엄군이나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 오후 6시 50분경, 교수단은 이 날의 목표지점인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하여 시국선언문을 다시 한 번 낭독하고 만세삼창과 애국가를 부른 뒤 해산하였다. 교수단의 데모는 끝났다. 그러나 군중들은 통금 직전인데도 흩어지려 하지 않았다. 이 때 중앙청 쪽에서 탱크 2대가 군중을 해산시키고자 다가왔다. 군인들이 착검을 하고 강제해산의 태세를 취하자 군중들은 오히려 칼끝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한 학생이 혈서로 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앞으로 나섰다. 군중 속에서 “국군만세”라는 외침이 들렸다. 군인들이 주춤하고 있는 동안 화신 쪽과 시청 쪽에서 또 다른 데모대가 몰려왔다. 데모대의 숫자가 불어나자 계엄군은 8시경부터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그러나 물러서려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 등을 불렀다. 방독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병들이 일부가 끝내 함께 울어버렸다. 어느틈에 소년들이 탱크 위로 올라가 “국군만세”를 외쳤다. 자연스럽게 데모대와 계엄군이 하나로 되었다. 데모대의 일부는 서대문 이기봉의 집으로 몰려갔다. 데모대가 정문 옆의 경비실을 부수고 있을 때 계엄군이 진압하러 달려왔다. 데모대가 계엄군을 환호와 박수로 맞이하자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서 있었다. 데모대가 기세를 올리며 이기봉의 집으로 쳐들어가려 하자 집안으로부터 충격이 가해져 몇 명이 다시 희생되었다. 다른 데모대는 임화수의 집(낙원동)과 임화수 소유의 평화극장(종로 5가), 이정재의 집(연지동) 등을 파괴하였다. 이정재의 집은 전소되었다. 이 날의 데모는 밤 11시 40분 경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튿날 통금이 해제된 5시부터 다시 데모가 시작되었고, 26일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① 이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것 ② 3.15 정부통령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과도내각 하에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한다 ④ 개헌 통과 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 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7일 “나 이승만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라는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1공화국은 11년 8개월 12일만에 막을 내렸다. 이처럼 25일 교수단의 데모는 제1공화국 붕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A6 이종우(고려대), 이희승(서울대), 정석해(연세대), 조운제(성균관대)

A7

A8 시국선언문 : “이번 4.19 의거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광정(匡定)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우리는 이제 전국 대학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하(下)와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서울 기타 각지에서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쫓겨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곡해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3.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학생 데모에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대량의 유혈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민주와 자유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집단의 사병이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이 민족적인 대참극과 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야 국회의원 및 대법관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

다.

5.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6.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주모자 등은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에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벌하라.
8. 모든 구금된 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설령 구금된 학생 중에서 파괴와 폭행의 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료의 피살에 흥분하여 일으킨 비정상 상태의 행동이요, 파괴와 폭행이 그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9.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축재한 자는 관·군·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적발 처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라.
10. 경찰의 중립화를 확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11. 학원의 정치 도구화를 포기하라.
12.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와 정치 도구화된 소위 문화·예술인을 배격한다.
13. 학생 제군은 38선 이북에서 호시탐탐하는 공산도배들이 제군들의 의거를 백퍼센트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또한 38선 이남에서는 반공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제군들의 흘린 피를 정치 도구화함에 조심하라.
14.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여,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고 이성을 지켜서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227-228쪽)

‘경북대학교 교수단 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229-230쪽 / 한완상 외, 『4·19 혁명론 I』, 일월서각, 1983, 54-63쪽 /

A9

A1 한미경제협정 반대 투쟁

A2 1961.2.13. -

A3 2.13. '한미경제협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 결성 / 2.14. 성토대회 / 2.18. 공동투쟁선언문 발표 / 2.28. 국회 통과

A4 1961년 2월 8일 한미경제원조협정이 미합중국 대표 주한미국대사 매카나기(McConaughy, W.P.)와 대한민국 대표 외무부장관 정일형(鄭一亨) 간에 조인되었다. 이 협정을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는 경제 및 기술 원조에 적용될 양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계획사업과 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미국 정부가 제약 없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관계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특별사절단 및 그 구성원을 받아들일 것과 그들을 미국의 외교사절단의 일부로 간주하며 그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관세, 재산 취득세와 같은 모든 부과금을 면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재정 및 기술원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미국이 '계속해서 감사감독' 할 권한을 지닌다는 것과 한국정부가 '원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미국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었다. 이 협정이 이와 같이 굴욕적이고 대미의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세력은 즉각 이에 반대하고 2월 14일 16개 정당사회단체가 2·8 한미경제협정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A5 전국의 학생과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이 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미대일 관계에서 민족자주성을 고수할 것""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재침 기도를 배격할 것"등을 요구했다. 공투위는 2월 18일 '미국에 대한 원조 자체를 무조건 반대함이 아니고 오직 민족의 자주성이 침해된 식민주의적 원조만을 결사코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쟁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그 투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선언문에서는 '장면 정부가 4월 항쟁의 진정한 역사적 의의와 혁명정신을 까마득하게 잊고 미국에의 예속과 내정간섭이 우려되는 경제협정에 조인했다'고 공박하고 국회 비준 거부로 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대할 민통련을 중심으로 국민계몽대 등 학생 단체들이 제휴하여 ‘전국한미경제협정반대학생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서로 공동보조를 취하여 2월 21일 국회 개원일에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배부하는 한편, 명동성당 앞에서 성토대회와 공청회를 열고 참가한 사람들과 함께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날 성토대회가 끝난 후 집회에 참석한 2-300여 명이 미국대사관까지 진출했다가 해산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혁신세력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조직체가 결성되면서 마침내 2월 24일 서울 시청앞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한미경제협정반대 시민 성토대회’가 개최되었다. 공투위 주최로 개최된 이 대회에서는 통민청 김배영의 사회로 “반민족적인 한미경제협정의 국회 비준 거부를 위하여 불퇴전의 결의 밑에 투쟁한다”는 공동투쟁선언문이 낭독되었고, 공투위 선전부장 하태완과 사회대중당 선전부장 선우정 등이 연사로 나와 “식민정치 노골화한 28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연설했으며 격문이 살포되기도 하였다.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은 남한에서 전개된 최초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미운동으로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 ‘반외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419가 한국의 민족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운동과정에서 처음으로 ‘양키 고 홈’의 구호가 외쳐졌으며, 민족적 자긍심이 원조국가의 예속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경제협정은 미국 측의 노골적인 비준 촉구 활동과 장면 정권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월 28일 국회 심의에서 통과되었다.

A6

A7

A8 미국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 “전세계의 민주주의적 역량에 의해서 노후한 일본장도를 들고 초라하게 도망하고 만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뒤를 이어 우리의 조국의 절반에 진주한 당신들 미국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해왔다. 파시스트 반동분자들의 뒤를 이어 우리 조국에 들어온 당신들을 우리들이 두손을 들어서 환호했던 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압제와 착취가 너무나 악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호혜의 간판 밑에 우리 조국에 당신들이 준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빈곤의 악순환과 외국상품의 범람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극동의 소반도에서 항상 외세의 압제에 시달려온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과 자결의 갈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골수에 맺힌 희원이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온 외국세력은 이 연약하나마 절대로 정당한 민족의 터져 나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자가의 이해에 몰두하여 매국적 반민족적 일부분자들과 결탁하고 우리의 조국을 분할하고 말았다. 우리의 의사와는 하등의 관련도 없는 이러한 분할은 참을 수 없는 ‘대국주의’의 횡포이며 이상 더 국제정의에 의해서 방임되어질 수 없다. 우리는 전세계 약소국과 후진국 피압제민족과 피식민민족의 이름으로 일절의 이민족 이인종지배를 철폐할 것을 강경히 요구한다. 우리 민족은 38선 분할을 영구히 저주 받을 치욕과 참을 수 없는 국제정의의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미신경제협정 반대투쟁을 일으키는 우리는 자주와 독립에의 지향을 가진 긍지있는 민족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전체의 분노한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여 최근 당신들과 우리 정부간에 체결된 예속적 식민지적 불평등협정에 결연히 반대한다. 당신들이 이번 협정을 체결함에 당해 제시한 전 조약들은 무엇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54년 12월),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50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52년 5월) 등은 전시에 일체의 비판적인, 또한 진실한 의견이 봉쇄된 가운데 당신들과 이승만 일당이 체결한 것이다. 이승만 일당과 당신들 가운데 여러가지 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 일당은 전체민족의 손으로 추방되었거니와 도대체 당신들은 이 제불평등조약을 철폐할 생각은 않고 일보 강화하여 달려들은 우리를 농락하는가? 조목조목 따질 필요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이 협정은 식민적 불평등조약이다. 당신들 미국정부와 그 호위세력은 우리들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또한 우리 민족의 총체적 요구를 압살해서는 안된다. 만약 당신들의 국제적 양심이 이미 귀머거리버렸다면 다음에 우리가 바랄 것은 명백하다. 그때는 사생결단 외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약소민족의 정당하고 결사적인 항거를 전세계 양심 있는 세력은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를 통하여 퇴조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파괴한 패배를 인식해야 한

다. 지금은 이미 17세기는 아니다. 지금은 이미 ‘야만인’ 아시아, ‘인종의’ 아시아는 남아 있지 않다. 전진적 세계사의 양양한 물결 속에서 아시아는 이미 반신불수는 아니며 새로이 호흡하는 기억의 힘센 인민을 포괄하는 건강한 약동체이다. 우리는 이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식욕 돋우는 미끼는 아니다. 당신들이 끝까지 당신들의 왜곡되고 부당한 노선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거나 묵살하지 말라. 우리는 다음을 당신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은 한국민이 자주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기하여 한국과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수립하라!

1. 미국은 앞으로의 대한정책에서 여하한 책략을 써서라도 우리 민족을 예속하지 말 것이며 또 방과제적인 고용자적 제3국을 통해서도 이를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금후의 당신들의 행동을 민족적 분노와 사명감으로서 주시한다.

1. 미국은 신경제협정을 직각 철회하는 데 동의하라. 또한 우리 민족의 정당한 분노와 요구를 적정하게 평가하라.

1961년 2월 14일 전국학생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대회 “ (‘미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290-292쪽)

‘호소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87-289쪽 / ‘대정부 및 국회 건의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89-290쪽 / ‘경제원조협정 체결에 관한 미국무성의 공한’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92-293쪽 /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한미경제협정 비준거부촉구 공개장’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93-295쪽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 평민사, 1990, 220-221쪽 /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4.19와 남북관계』, 민연, 2000, 119-122쪽 / 정창현, 「4월 민중항쟁 직후 혁신정당 운동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한국현대사2』, 풀빛, 1991 /

A9

A1 2대악법반대투쟁

A2 1961.3.11-1961.4.16.

A3 3.11. 2대악법반대전국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 준비위원회 결성 / 3.14.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결성 / 3.16. 악법반대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 결성 / 3.18. 시민 쫓기대회(대구) / 3.21. 시민 쫓기대회(대구, 2차) / 3.22. 악법반대시민성토대강연회(서울) / 3.23. 시민쫓기대회(부산) / 3.24.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쟁위원회 결성(한국노련) / 3.24. 한국노협 반공법 반대 입장 발표 / 4.4. 대한노련도 반공법을 반대 입장 발표 / 4.2. 대구 쫓기대회 / 4.9. 민주당, '금회기 국회통과 포기' 입장 발표 / 4.16. 통일촉진, 악법반대강연회(삼일당)

A4 1961년 3월 8일과 9일, 각 신문을 통해 “정부는 ‘집회와 시위 운동에 관한 법률안’ 을 각의에 상정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으며, 내무·법무 양 장관이 ‘반공을 위한 특별법’ 을 별도로 구상중에 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보도가 전해지자 전국의 언론, 혁신정당, 재야단체, 학생들이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다. 특히 이 법으로 인해 존재의 위기에 처하게 될 혁신계 정당들과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등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는 “4월 혁명에 대한 배반이며 반동적 폭거” 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년단체, 학생단체들은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을 통해 다져진 조직기량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대중운동을 시작한다.

A5 서울시내 각 대학생 단체 대표들은 11일 오후 회합을 갖고 대규모적인 운동 전개를 목표로 ‘2대악법반대전국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 를 위한 ‘준비위’ 를 결성하였다. 이어 16일 서울대학교 민통련 등 17개 단체가 ‘악법반대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 를 결성, 17일 성명서를 내어 “데모규제법은 관제 데모 이외에 일절의 데모도 허용치 않겠다는 발악이며 정당한 데모는 무권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유일한 최후의 권리이다. ... 민족의 진정한 활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하한 반민족적 반민주적 악법의 티끌만

한 출현도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이것을 둘러싼 민족반역자는 추호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밝히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외에 대구, 부산, 마산 등에서 학생공동투위를 조직하여 서울의 전국학생공동투위와의 공동행동을 꾀했다. 청년단체들도 통민청과 민민청 등 11개 단체가 ‘악법반대전국청년단체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선언문에서 “이승만을 무색케하는 공포정치로서 명맥의 유지를 꾀하는 장정권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4월혁명 정신으로 되돌아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혁신당,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삼민당 등 5개 혁신정당과 민자통, 중통련, 조통전 등 3개 사회단체, 그리고 피학살자 유족회, 광복동지회 등 총 10개 정당 및 사회단체도 김창숙, 김성숙, 장건상 등 원로들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고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처럼 2대악법 반대투쟁을 위한 조직적 준비를 마친 진보운동진영은 3월 18일 대구에서 시민 쫓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가두시위를 통한 대중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대구에서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쫓기대회와 가두시위가 열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성명서와 비판문을 발표하며 대중의 분기를 촉구했다. 서울에서의 가두시위는 22일에 열렸다.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위 주최의 악법반대시민성토대강연회에는 3만여 인파가 모여 ‘2대악법철폐, 국가보안법 강화 기도 규탄’ 등 5개 항을 결의하고 쫓기시위를 벌였다. 시청앞 광장을 출발하여 한국은행 앞을 지나 을지로, 종로, 광화문으로 행진을 이어가던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여 50여 명이 부상당하고 123명이 체포되었다. 이날 서울에서 벌인 시위 형태는 하나의 전형으로 구체화되어 전국에 파급되었다. 23일 반민주악법반대경남학생투쟁위원회가 부산역 앞에서 주최한 시민쫓기대회 1만5천여 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연좌시위를 벌인 후 다시 도청앞을 지나 시청 앞으로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뒤이어 25일 부산, 마산, 전주 등지에서 쫓기대회와 가두시위가 벌어졌으며 원주, 이리, 안동 등 소도시, 군단위로 확산되었다. 지역단위의 가두시위가 확산되면서 노동운동 진영의 시위 참여도 활발해졌다. 한국노련은 3월 24일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한국노협과 대한노련도 29일과 4월 4일 각각 반공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교원노조는 이들보다 훨씬 앞서 3월 13일부터 투쟁대열에 합류했을 뿐 아니라 대구지역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처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민주당 정권은 물리적 행동으로 진화에 나섰다. 3월 24일 내무부 장관은 “2대악법반대 데모는 정국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이튿날 법무부 장관은 “어떤 데모가 있더라도 보안법을 보강하려는 전부의 태도에는 변동이 없을 것” 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러한 방침은 4월 2일 대구쫓기대회에서 곧 현실화되었다. 경찰측은 행사장 주변에 2500여 경력을 배치하여 최측의 선전차와 마이크를 압수하고 전단을 뿌리던 학생들을 연행했다. 결국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44명의 행사 관계자를 연행, 소요죄를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강경대응은 오히려 시위군중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민주당은 4월 9일 “금회기의 국회통과를 포기하고 다의 회기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 라는 방침으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무렵 2대악법반대시위는 그냥 중지된 것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다. 4월 16일 ‘민족통일전국학생위원회’와 ‘악법반대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는 2대악법 반대투쟁의 여세를 몰아 진명여고 강당(삼일당)에서 3천여 청중이 모인 가운데 “악법은 통일금지법, 단결로써 민권을 지키자” 는 현수막을 걸고 ‘통일축진, 악법반대강연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다져진 조직력을 통일운동으로 전환시키려 시도했다.

A6

A7

A8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138-148쪽 / ‘악법반대 전국청년단체공동투쟁위원회 결성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95-296쪽 / ‘성명서’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96-297쪽 /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선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98-299쪽 / ‘반공임시특별법을 비판한다’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00-302쪽 / ‘성명서’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02-303쪽 /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반민주악법 심의거부촉구 공개장’ 사월혁명

연구소 편, 앞의 책, 303-306쪽 /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301-319쪽 /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4.19와 남북관계』, 민연, 2000, 122-125쪽 /

A9

A1 대구 ‘가장 장례식, 가장 결혼식’ 사건

A2 1961.3.24

A3 오후 4시 대구역광장에서 2대악법 규탄대회 개최

A4 1961년 3월 8일과 9일, 각 신문을 통해 “정부는 ‘집회와 시위 운동에 관한 법률안’ 을 각의에 상정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으며, 내무·법무 양 장관이 ‘반공을 위한 특별법’ 을 별도로 구상 중에 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보도가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대구에서는 24일 경북학생투쟁위원회 주최로 궐기대회를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최측은 대구시성북로 2가 소재 학생공동투위사무실에서 23일 회동을 갖고 규탄대회 시 국무총리 장면, 법무부장관 조재천 등에 대한 ‘위장장례식’ 및 ‘위장결혼식’ 을 열 것을 계획하였다.

A5 1961년 3월 24일 오후 4시경 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었다. 주최측은 미리 준비한 목제관 2개에 장면과 조재천을 상징하기 위해 각 ‘장씨 입관’, ‘조씨 입관’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규탄대회장에 가장 장례식을 시작하였다. 이어 허수아비 2개에 이승만과 장면을 표시하는 ‘신랑 이승만’, ‘신부 장양’ 이라고 기재하고 위순옥이 이완용의 주례사를 대독해 매국노 이완용이 독재자 이승만을 후견하고 장면 또한 이 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규탄대회 후 시위대는 기세환 등 학생공동투위 간부 등을 선두로 시가에 췌불시위행진을 이어갔다.

A6 丁滿鎭 (22세) 대구대학법정학부 법학과 제4학년 재학 중 1961년 3월 15일부터 2대악법반대경북학생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기세환, 위순옥, 김하춘, 龍南眞

A7

A8 ‘공소장’, 『한국혁명재판사』 제3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299-230쪽

A9

A1 인천 흥한방직 투쟁

A2 1960.5.19.-?

A3 1960.5.19. 해고자 59명 농성 투쟁 시작 / 1960.5.25. 어용노조·민주노조 충돌

A4

A5 1960년 5월 19일, 인천의 흥한방직 공장에서는 1957년 3월에 부당해고된 59명의 노동자들이 어용노조를 규탄하고 복직 및 법정 보상금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25일 공장 내부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들과 기존의 어용노조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A6

A7

A8 한국노총 편,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14-517쪽

A9

A1 대전방직 노동자 연좌 시위

A2 1960.5.26.

A3 1960.5.26. 노동자 800여 명 연좌시위

A4

A5 1960년 5월 26일 대전방직에서 종업원 800여 명이 작업을 중지, 공장 사무실 앞에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임금인상과 8시간 노동제 엄수 그리고 앞으로 노동조합의 의치를 재인식하라는 것

등이었다.

A6

A7

A8 한국노총 편,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14-517쪽

A9

A1 제일모직 대구공장 파업

A2 1960.6.14-1960.8.10.

A3 1960.6.14. 공원과 노조 단식농성 돌입 / 1960.6.20. 쟁의 신고 / 1960.7.4. 공장 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 1960.8.10. 3개항 보사부 중재안에 합의

A4 섬유산업 분야에서 대구의 대한방직이나 내외방직 같은 회사들은 1950년대 노동조합 어용화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4.19 이후에는 과거 부당해고한 노조간부들을 복직시키고 또 복직된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섬유회사들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자기 회사에서도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열망하였고 어용노조 규탄을 비롯한 시위 등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다.

A5 제일모직 대구공장에는 어용노조인 사원과 노조와 새로운 민주노조인 공원과 노조가 있었다. 4.19 이후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전국노협이 제일모직 대구공장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지원하게 되자 회사측은 사원과 노조가 불리하게 됨을 알고 공장을 폐업하고 일부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휴직 조치하였다. 전국노협에서는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해진 이 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며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② 152명에 대한 불법 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③ 불법 폐업을 중단하고 정상 작업을 실시하라 등을 요구하며 1960년 6월 1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경북 도 당국에서도 공장 폐쇄의 불법성을 지적하게 되자 회사측은 6월 20일 조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으나 실지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원과 노조에서는 22일 도 당국에 정식으로 쟁의발생을 신고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자 초조한 노동자들은 법정냉각기간 3주일을 기다릴 수 없어 7월 4일 공장 사무실을 점거, 농성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회사측의 공장 폐업에 관해 아무런 물리적 대응도 하지 않던 경찰은 노동자들이 법정 냉각기간 중에 농성에 들어간 것을 불법으로 규정, 200여 명의 경력을 동원 강제 해산에 나섰다. 1시간 이상의 충돌로 여직공들의 농성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으며 상당수의 여공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공장에서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제일모직 대구공장으로 몰려와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되니 경찰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을 대신하여 계엄군 헌병들이 회사 내의 경비를 맡았으며 농성을 평온리에 진행되었다. 회사측은 결국 ① 회사 내의 신규 양과 노조는 통합 단일화를 위해 모두 해산한다 ② 회사는 두 개 노조의 해산을 확인하고 3일 내에 직장 폐쇄를 해제, 조업한다 ③ 통합 단일 노조는 조업 개시 후 40일 이내에 결성하기로 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사부 당국의 조정을 받아들여 8월 10일 이 투쟁은 종결되었다.

A6

A7

A8 한국노총 편,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14-517쪽 / 『대구매일신문』 1960.6.18. / 「제일모직 분규 수습」 『동아일보』 1960.6.26.(朝) / 「다시금 악화 제일모직 쟁의」 『동아일보』 1960.7.5.(朝) / 「사형사실 판명 여공 수용실에서 - 제일모직 분쟁」 『동아일보』 1960.7.8. /

A9

A1 고려호 선원 파업 사건 (한국해원노동조합 파업 투쟁)

A2 1960.8.-1961.4.

A3 1960.6. 고려호 선원 파업, 3일간, 부산 / 1960.8. 2차 파업, 태평양 해상, 고려호 대만에 표류 /

1960.10. 3차 파업, 일본 횡빈, 선박사고로 중단 / 1961.1.12. 4차 파업, 인천, 76일간 진행 / 1961.4. 노사쌍방 합의

A4 한국해운노동조합은 1960년 5월 극동해운주식회사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성의 있는 응답을 주지 않자 경상남도 당국에 쟁의 발생을 신고하였다. 경상남도 당국은 수차에 걸쳐 알선을 시도했으나 노사간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부산항에 정박중인 고려호 선원들은 법정 냉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찬성 지지표를 얻었다. 회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혀 수락하지 않자 6월 고려호 선원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3일만에 회사측은 경남 도 당국의 알선을 수락, 노사 쌍방은 임금 84% 인상에 합의하고 쟁의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려호 파업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A5 회사 측은 경남 도당국의 알선에 의하여 확정된 노사협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선원 6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조치 하였다. 이에 격분한 고려호 선원들은 8월 태평양 상에서 항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단행, 배가 대만으로 표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 후 고려호 선원 2명은 귀국하게 되고 고려호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운항, 동년 10월에는 일본 횡빈(橫濱)에 입항하였다. 고려호 선원들은 그곳에서 다시 파업을 단행하였는데 불행히도 파업중인 고려호를 외국 선박이 들이받아 고려호의 선수가 크게 파손되어 큰 말썽이 일어났다. 선원들은 파손된 선박의 수리, 선원법 상의 위법 등 사정을 고려, 파업을 중단하였다. 노동조합 측은 그 후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계속 시도하여 노사협정 사항의 이행과 부당 인사조치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1960년 11월 2일 다시 노동쟁의 발생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였으며, 회사측의 반응이 없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1961년 1월 12일 파업선언문을 발표하였다. ① 단체협약을 즉시 체결하라. ② 정원제를 실시하라. ③ 선원의 현 급여의 30%를 인상하여 하후상박을 철저히 실시하라. ④ 외지수당을 인상하라(지난번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법정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라. ⑥ 대명선원의 법정율 지급하라. ⑦ 견습생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⑧ 이번에 귀국 하선한 선원의 전원복구를 실시하라.

1961년 1월 17일 고려호가 인천항에 입항하자 69명의 선원들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회사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측은 화물의 하선 작업을 계속할 속셈으로 검찰 및 경찰을 동원 고려호화 외부의 일체 연락을 두절하고 적재중인 원맥을 자동흡인장치기를 사용 하여작업을 단행하였다. 노동조합 측은 한국노련 김말룡(金末龍) 의장과 한국해운노동조합을 위 원장 등 노조간부를 급히 인천으로 달려보냈으나 이미 경찰이 모든 선박은 경찰의 허가 없이는 일체 움직일 수 없도록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노조간부들은 작업중인 고려호에 접근할 수 없었다. 김말룡 한국노련 의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은 인천 경찰서에 가서 경찰의 부당한 쟁의 간섭 행위를 항의했으나 경찰서장은 상부의 지시라고 회피하고 또 경기도 경찰국장은 자기도 아는 바 없다고 회피하였다. 그러는 동안 하선작업은 끝났고, 노조 간부들은 그대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쟁의는 그대로 계속되었으며 이 쟁의는 보건사회부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관되었다. 1961년 4월에 가서야 중앙노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고재호 대법관을 비롯한 공익위원 등이 참석하고 노동자 측 위원으로는 한국노련 김말룡 의장이 위원으로 출석하였다. 이 전체회의에서 김말룡 위원은 극동해운 사장 남궁연에게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불응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계속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남궁연 사장은 김말룡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불손한 발언으로 대하여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격돌이 벌어졌다. 주먹다짐으로 발전할 기세로 옥신각신하게 되자 위원들의 만류와 남궁연 사장의 사과로 진정되었으며, 남궁연 사장은 마침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김말룡 위원은 남궁연 사장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가 수락한다는 내용을 중재결정으로 확정해 놓을 것을 주장,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결정으로 「단체협약의 체결과 기존 대우의 보장과 선원들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케 하였다. 이것으로 76일간이나 계속된 선원들의 파업을 끝나게 되었으며, 1960년 5월 쟁의발생 이래 1년 가까이 끌면서 4차 파업을 거친 쟁의는 일단락되었다. 이 쟁의에서 극동해운 측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락한 것은 해운분야에서 일하는 노

동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쳐 해운공사 쟁의를 비롯한 대양기선, 한염회사 쟁의 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A6

A7 한국해원노동조합

A8 ‘파업선언문’ 김낙중, 『한국노동조합운동사-해방후편』, 청사, 1982, 298쪽 / 전국해원노조, 『전국해원노동조합사』, 1973, 89-92쪽 / 김사육, 『한국노동운동사』, 산경문화사, 1974, 217-225쪽 /

A9

A1 경성방직 노동자 연좌시위

A2 1960.9.13.

A3 1960.9.13. 노동자 700여 명 연좌시위 / 1960.9.16. 시위대 강제해산, 7명 연행

A4

A5 1960년 9월 13일 경성방직 야간부 종업원 700여명은 노조위원장 이기철의 사임을 요구하고 회사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16일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과 수위실을 파괴하고 농성했는데 7명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고발 연행되고 시위는 경찰에 의하여 강제해산되었다.

A6

A7

A8 한국노총 편,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14-517쪽

A9

A1 전국전매노조연합회 태업 투쟁

A2 1960.11.21.-1960.11.23

A3 1960.10.19. 쟁의발생 신고 / 1960.11.17. 대구전매청 조합원 43명 집단해고 / 1960.11.21. 대구전매노조 간부 단식 돌입, 전국전매노조연합회 5개항 요구, 서울 의주로 공장 비롯 청주 및 대구공장 오전 9시부터 태업에 돌입 / 1960.11.23. 노사쌍방 3개항 합의

A4 전국전매노조연합회는 1960년 4.19 이후 전매청을 대상으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갱신을 요구하여 교섭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자 10월 19일 보건사회부에 정식으로 쟁의발생을 신고했다. 전매청 당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매노조연합회 산하의 노조원 43명이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유당과 밀착하여 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혁명 청장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대구 전매청장 박영달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이 자기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대구 전매청 노조위원장 김영진을 비롯한 41명의 노동자를 1960년 11월 17일 집단해고 조치한 것이다.

A5 11월 21일 대구전매노조 간부들은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뒤이어 11월 23일에는 일부 여성 노동자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가 사태는 험악하게 되었다. 11월 21일 전국 전매노조연합회는 ① 임금 100% 인상 ② 기술수당 지불 ③ 생산장려금 지불 ④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등에 ⑤ 대구전매청에서 부당해고된 43명의 노동자의 즉시복직을 추가하여 이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 6주간 태업할 것을 선언하였다. 전국 전매노련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의주로 공장을 비롯한 청주 및 대구공장 종업원들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태업에 돌입했으며 전주공장은 11월 25일부터 태업에 가세할 것을 발표하였다. 태업에 돌입한 공장들은 사실상 휴업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쟁의 제기 이래 여러 가지로 알선을 시도하다 실패한 보건사회부 당국은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매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 조정에 나선 결과, 11월 23일 노사 쌍방간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됐다. ①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한다. ② 기본임금은 국무회의에서 1961년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 ③ 대구 전매청 해고자 전원을 11월 24일까지 복직토록 한다. 이로써 전매노조의 쟁의는 일단락 되었다. 대구공장에서는 해고되었던 노동자 40여 명이 복직되고 난 다음인 11월 25일에도 1500여 노동자들이 박청장 배척 데

모를 강행, 노조간부들을 난처하게 하였다. 보건사회부에서 파견된 사무관과 노조 간부들의 만류로 데모는 해산되고 쟁의는 끝났다.

A6

A7

A8 한국노총 편,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524-525쪽

A9

A1 전국체신노조 파업 가부 투표

A2 1960.12.

A3 1960.11.3. 쟁의발생 신고 / 1960.12. 쟁의행위 가부투표(5000 조합원 중 3350명 투표, 3065명 찬성) / 1960.12.15 노사쌍방 3개항 합의

A4 전국체신노조는 4.19 후에 임금인상과 월 2회 휴가제 실시 등을 교섭해 오다 성과가 없자 1960년 11월 3일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체신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보사부에 쟁의발생을 신고했다. 즉 ① 기본급료를 150%(85,000환) 인상할 것 ② 노사 쌍방간 합의된 법정수당 지불 ③ 법정 공휴일의 완전 실시 ④ 월차·연차 휴가 완전 실시 ⑤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결의 사항 이행 ⑥ 고용원직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 등이었다. 체신부 당국과 전국체신노조 간에는 몇 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정부측은 국가 재정 형편이 곤란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노조측은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을 내세워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노조측은 법정 냉각기간 만료일인 12월 15일을 앞두고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하였다. 총 5천 명의 조합원 중 3,350명이 이 투표에 참가하고 그 중에서 3,065명이 찬성 투표하여 냉각기간 만료 시의 파업단행을 준비하였다.

A5 체신부 당국은 철도노조 및 전매노조의 경우를 참작하여 체신노조에서도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파업을 사전 방지코자 교섭에 임한 결과 냉각기간 만료일인 12월 15일 노·사 쌍방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① 야간수당은 750환으로 인상 ② 위험수당은 100% 인상 원 60환으로 ③ 기본임금은 1961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노조측이 요구하는 안에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으로 전국체신노조가 제기한 임금인상 요구 쟁의는 부분적인 요구관철로 일단락 되었다.

A6

A7

A8 김낙중, 『한국노동조합운동사-해방후편』, 청사, 1982, 307-308쪽

A9

A1 전국자유노조 부두노동자 파업

A2 1960.12.20.-1961.3.31.

A3 1960.10.25. 쟁의 제기 / 1960.11.15. 파업 경고 / 1960.12.6. 파업 가부투표(37300명 투표, 97.6% 찬성) / 1960.12.20. 제1차 시한파업(36시간) / 1960.12.21. 제2차 시한파업(72시간) / 1961.3.31. 제3차 무기한 파업 결의, 노사 합의, 파업 철회

A4 자유당 시절에 김기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부두노조를 비롯하여 전국 각처 부두노동조합들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4.19 이후에는 많은 노조들이 민주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였다. 1960년 10월에 와서는 전국자유노련 산하에 조직된 부두노조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다.

A5 1960년 10월 25일 전국자유노련은 산하 부두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석탄공사, 교통부, 농림부, 전매청, 외자청 등을 대상으로 쟁의를 제기하였다. 즉 ① 석탄공사 석탄하역 노임 225% ② 교통부 소관 근대화물 작업 노임 374% ③ 국방부소관 근대화물 작업 노임 374% ④ 군항만 수송 작업 노임 226% ⑤ 농림부 소관 정부양곡 하역 노임 166% ⑥ 전매청 전매품 하역 노임 343%

⑦ 외자청 외자 하역 노임 159% 등이었다. 전국자유노련은 제기한 쟁의에 대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자 각종 하역 노임 인상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11월 15일 전병민 위원장은 만약 이 요구조건이 12월 7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하 4만 부두노동조합원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고 12월 6일 9시를 기해 전국에서 노임인상을 위한 파업 가부투표를 실시했다. 3730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7.6%가 파업을 찬동하였다. 그러나 냉각기간 만료일인 12월 7일이 경과하여도 관계당국으로부터는 아무런 긍정적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12월 18일 전국자유노련은 전국 각 부두에 쟁의행위 행동지령권자를 파견, 20일 오전 7시를 기해 전국 부두에서 36시간 시한부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인천, 장항, 군산, 목포, 여구, 마산, 진해, 부산 등 9개 항의 하역작업은 전면 중지되고 부산항에 정박중인 외항선들은 약 5천톤의 체선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조 간부들은 노사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선도 성립하지 않았다. 정부당국은 여전히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전국자유노련 측은 제1차 시한파업이 끝나는 21일 오후 7시부터 제2차 72시간 시한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령하였다. 제2차 시한파업에는 울산부두 노동자들이 합세하여 전국 10개 항구가 완전히 기능을 정지하고 말았다. 2차 파업 동안 부산부두노조와 국방부간에 임금 40% 인상이 합의되었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미창회사만이 도입비료 작업에 한해서 12% 인상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을 뿐이다. 결국 전국자유노련은 산하 노조들로 하여금 1961년 3월 31일을 기해 전국 10개 부두에서 다시 일제히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을 지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 중재를 결정하기로 하고 항만작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파업만은 일단 중지해줄 것을 노동조합 측에 요청, 노조측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수락하기로 하여 즉시 파업 중지의 지시를 산하노조에 전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내용은 임금을 36% 인상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노조측의 159~374%라는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합의는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5.16 쿠데타 발발로 인해 백지장이 되고 말았다.

A6

A7

A8 전국부두노동조합, 『한국부두백년사』, 1979, 309-313쪽

A9

A1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파업투쟁

A2 1961.1.27.-1961.2.1.

A3 1960.6.30. 전국대의원대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개선 후 임금인상 감원방지 등을 결의 / 1960.10.21. 쟁의신고 / 1960.11.17. 철도연맹(기관차 노조 제외)은 산하 9개 노조에서 쟁의행위 가부투표(총투표자 21502명 중 인 19316명(89.9%) 찬성) / 1960.11.30. 노사 쌍방 4개항 합의 / 1961.1.27. 1단계 파업 돌입 / 1961.2.1. 노사쌍방 임금 30% 인상 합의

A4 전국철도노조연맹은 1960년 6월 30일 4.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개선에 이어 토의사항에 들어가 임금인상 감원방지 등을 결의하였다. 그 후 신임노조간부들은 임금인상 등 현안 문제의 교섭을 시도했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노조측은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교통부에 제시 1960년 10월 21일 정식 쟁의신고를 했다. 즉 ① 봉급 8만환 베이스 인상(5급 12호 기준) ② 위험수장 현행 30·24·15 환을 5천·3천·2천 환으로 인상 ③ 현행 여비의 배액 인상 ④ 기관차 승무원의 작업시간 개정 ⑤ 철도종업원의 단독보수제 책정 등이다. 6주간의 법정 냉각기간이 경과해도 교통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못받아 11월 17일 철도연맹(기관차 노조 제외)은 산하 9개 노조에서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실시, 총투표자 21502명 중 89.9%인 19316명의 찬성투표를 얻어 파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된 전국 철도노조의 태도 앞에 교통부 당국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노사 쌍방은 11월 30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위험수당은 현행의 120배로 인상한다. ② 여비는 20% 인상한다. ③ 작업 시간은 208시간을 179 시간으

로 단축한다. ④ 그 외의 단독보수제와 임금인상은 명년 봄에 결말을 보기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측은 파업을 보류, 교통부 당국의 다음 처리를 주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노사합의사항은 교통부 장관과 철도노련 위원장 간에 12월 2일 협정 조인되었다. 단독보수제와 임금인상 등은 법제화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1961년 1월 15일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이 경과해도 단독보수제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임금인상안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50%선의 절반인 25% 선이 논의될 뿐이었다. 철도노련 측은 중앙임금인상투쟁위원회 48명의 위원들은 파업에 실패하면 전원 노조간부직은 물론 직장을 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1961년 1월 27일을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 발표했다.

A5 철도노조 측은 철도의 총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1단계 통신 시한파업, 2단계 차표 판매 거부, 3단계 기관차 연료보급 중단, 4단계 각 역구내 신호중단, 5단계 전면 파업을 계획하여 1단계 파업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열차운행을 위한 불가피한 부분만 제외하고 철도의 모든 유·무선 통신이 1시간 동안 완전 중단되었다. 정부는 계속 파업한다면 군경을 동원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였으며, 교통부 장관은 공무원은 파업에 가담할 수 없으며 파업 가담자는 징계 및 형사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용자측이 단체협약을 어겼으며 파업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며 정부당국의 비민주적 위압적 태도를 비난하고 그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1961년 1월 31일에는 제2차 파업을 2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으로 단행하겠다고 언명하였으며 당시 철도노조와 똑같은 공무원 노조의 처지에서 쟁의를 제기하고 있던 체신노조와 전매노조에서도 정부가 위압적 태도를 계속하면 자기들은 철도노조와 행동통일을 기해 동맹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였다.

결국 노사 협의를 통하여 임금인상은 ① 현업수당 20% 인상 ② 특별급여 8% 지급 ③ 위험근무 수당 등 2% 인상, 합계 30% 인상에 합의되었다. 합의사항은 1961년 2월 1일 교통부 장관과 철도노조 위원장간의 협정서가 조인되어 철도노동자들은 조합원 1인당 17,000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데 성공하고 쟁의는 일단락되었다.

A6

A7

A8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노30년사』, 1977, 128-149쪽 / 김사육, 『한국노동운동사-하』, 1974, 188-216쪽.

A9

A1 농업은행 노조 결성 투쟁

A2 1961.2.16.-1961.3.31.

A3 1960.9.25. 경남지구노조 결성 / 1960.12.20. 서울지구노조 결성 / 1961.2. 강원지구노조 결성, 충남지구노조 결성준비위원회 구성 / 1961.2.16. 노조간부 33명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 1961.2.21. 노조간부 단식농성 돌입 / 1961.3.2. 노조간부 9명 징계 / 1961.3.3. 경남지구노조 파업 돌입 / 1961.3.9. 경남지구노조 해산 / 1961.3.31. 서울지구노조 해산

A4 농업은행은 1956년에 농업금융의 일원화를 위해서 설립, 1958년 다시 특별법에 의하여 출자자를 농민, 농협, 기타 농업단체로 하여 재출발한 은행이다. 출자자가 누구든 그 업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든 농업은행에 고용되고 있는 행원들이란 다른 일반은행에 고용되고 있는 은행원들과 그 처지가 아무 것도 다른 것이 없었다. 1960년 6월 조흥은행을 비롯한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그리고 서울은행 등에 노동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구성된 전국은행노조연합회는 12월 전국 각처에 지점망을 갖고 있는 농업은행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전국은행노조연합회의 성원을 받으며 농업은행 직원들은 12월 16일 농업은행 서울지구노조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일에는 농업은행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은행 서울지구 노조의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선언·강령·규약을 심의 채택하였고 위원장 유병희, 부위원장 송명철, 박영두 기타 인원을 선정하였다. 이어 1961년 1월 1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완료하고 2월 2일 당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을 부여받아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이에 앞서 1960년 9월 25일 은행측의 방해를 받으면서 농업은행 경남지구 노조가 결성되었고 1961년 2월 농업은행 강원지구노조가 결성되었으며 충남지구 노조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다. 농업은행 노조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은행측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농업은행 서울지구 노조에서는 1961년 2월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금인상과 아울러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농업은행 총재 한윤경은 서울지구 노조의 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지구 노조위원장 유병회를 비롯한 전국 노동조합 간부들 33명에 대한 전근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A5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항하여 서울을 비롯한 경북, 강원, 충남 그리고 이번 부당 인사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경남 들 5개 지구 노조는 2월 17일 공동명의로 진정서를 관계 각 기관에 보내 반민주적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이 인사조치에 경남지구노조 간부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경남지구가 이미 임금 4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쟁의 발생을 신고, 법적 냉각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당 인사조치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들은 2월 21일 농업은행 총재를 면담코자 했으나 거절당하고 당일 오후 1시부터 농업은행 본점 강당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투쟁대책을 토의, 우선 농업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이번 인사발령무효확인 소와 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한편 경북지구 노조는 이번 부당 인사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경북 분실장과 도내 각 지부장들이 3.15 부정선거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사태는 팽팽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1961년 3월 2일 농업은행 당국은 서울지구 노조위원장 유병회, 부위원장 송병철, 박영두를 전근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 해직조치했으며, 서울, 강원, 충청지구 노조 간부 6명을 같은 이유로 6개월 간 징계 정직조치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전국 은행노조 연합회에서는 농업은행의 쟁의지원을 위해 단위 노조별로 10만 환씩을 거두었다. 경남지구 노조는 제기했던 쟁의가 해결되지 않자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3월 3일 쟁의행위에 대한 가부투표를 실시했는데 516명의 투표자 중 464명이 찬성하여 파업하기로 결정되었다. 부산 시내 7개 점포 155명은 즉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그 밖의 24개 점포는 3일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행측은 서울에서 직원 30명을 부산에 급파, 업무를 대행케 하였으므로 일상적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파업한 은행원들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일상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파업 이틀째인 4일 오후에는 부산시내 조합원 155명 중 102명이 직장에 복귀했다. 은행측의 강력한 압력도 압력이었거니와 은행원들은 농업은행이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처지가 농민에 비하여 훨씬 유리하면서도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회적 비난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좌절한 경남지구노조는 결국 3월 9일 노동조합 해산 성명서를 내고 말았으며 3월 31일에는 서울지구노조도 해체 및 탈퇴 성명을 발표하고 노사간의 투쟁은 정리되었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해직자 및 정직자들은 1961년 3월 15일 서울지방 검찰청에 해직 및 정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5.16 쿠데타로 인해 모든 노동조합이 해체되자 법원은 5월 19일 기각 판결하였다.

A6

A7 전국은행노조연합회

A8 전국금융노동조합, 『금융노조20년사』, 1981, 54-60쪽

A9

A1 경북2대약법반대규탄대회

A2 1961.4.2.

A3 1961.4.2. 오후 4시 2대약법 반대 규탄대회

A4

A5 4월 2일 오후 4시경 민주민족청년동맹 배국현, 사회당 이석준, 사회대중당 이경구, 문효일, 강창덕,

유상근, 김성발 경북노동조합연합회 김증도 등 13개 정당 사회단체 회원 외 1천여 명의 데모대원과 박지수, 하정기 등이 경북노동조합사무실 앞에 집결하자 학생공동투위 소속 학생들은 시내일원에 “살인법 물리치고 조국통일 이룩하자”, “살인법 만들어 삼천리 강산을 피바다로 만들려는 제2의 이승만도당이여 배고파 못살겠다”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이여 총궐기하자” 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배라를 살포하였다. 또한 “반공의 미명하에 노동자는 안속는다” 고 기재한 플래카드를 앞세워 데모선두에서 선전용 지프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최일은 군중은 함께 “장정권 물러가라”, “악질경찰관 물러가라” “2대법은 살인법이다 죽음으로 막아내자” “2대법 통과되면 통일 불쌍 다봤다”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역전광장에 진출, 2-3만 명의 군중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A6 金汶燾 (재판 당시 50세) 1937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학부 정치과를 졸업한 후 서울 경신중학교교사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본격지에 평북 초산에서 8.15해방을 맞이하여 초산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안주중학교 교사로 근무중 1.4후퇴 당시 남하하여 대구 경북교사로 있다가 1957년 대구농림고등학교로 전근되어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1960년 교원노동조합 경북위원장에 취임.

崔一 (30세) 1955년 연희대학상과를 졸업한 후 1960년 6월경 사회대중당경북도당 선전부장으로 있던 중 12월에 경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고, 1961년 3월 12일 통일민주청년동맹경북도맹을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됨.

李東宰 (33세) 1954년 경북대 정치과를 졸업하고 현재 통일사회당조직위원 및 2대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재정부장

朴智帥 (38세) 21세 시 일본 경도문리학원 국문과 2년을 수료한 후 현재 혁신당·사회대중당통합위원회 집행위원 겸 간사장

朴相洪 (42세) 21세시 김해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민주족청년동맹 경북도연맹 통제위원장 및 민족일보동부지국장

權五鳳 (36세) 1956년 청구대학법과를 졸업한 후 현재 대구시노동연맹 정의부장

李承樞 (32세) 30세시 서울 정치대학 3년을 수료한 후 현재 통민청 경북도연맹 조직부장

李洪周 (32세) 1953년 경북대학교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통일사회당조직위원

河正基 (34세) 1957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민민청 경북도연맹원 및 경명여자중학교 교사

洪永訓 (21세) 1958년 영신중학교 2년을 중퇴한 후 현재 민족통일연맹원으로서 민족일보 원대지국장

李旌熙 (25세) 대구대 정치과 2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2대악법반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 간부

成洛杲 (21세) 청구대학 2년재학중. 2대악법반대학생공동투위 조직부장

申龍善 (20세) 15세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가사에 종사

丁滿鎭 (22세) 대구대학 법정학부 법학과 제4 학년 재학 중 1961년 3월 15일부터 2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A7

A8 『한국혁명재판사』 제3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287-328쪽

A9 2대악법 반대투쟁

A1 4.19 1주년 기념 학생 시위

A2 1961.4.19.

A3 1961.4.19. 4·19 때와 같은 코스로 침묵행진

A4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의 활동으로 4·19 1주년을 맞이할 즈음 학생층의 전반적인 동향은 급변해 있었다. 민통련은 4·19 당시의 학생운동을 어처구니없는 ‘자유의 연가’ 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A5 학생들은 4·19 때와 똑같은 코스를 돌면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이 들고 나온 플래카드의 내용은 대부분 통일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땅이 누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언론인 사회단체 남북 교류”,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

지 말라”, “남북 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 등이었다. 이 중 ” 남북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 “라는 구호는 단순한 계몽 선전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암시한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원래 서울대학교 민통련 간부들 사이에서는 4·19 1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학생회담을 정식 제안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4·19 1주년 기념일에 민중봉기가 일어난 것이라는 위기설과 군사 쿠데타 설이 파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기념행사를 침묵시위로 조용히 치르고, 다만 통일 관련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만 내걸었던 것이었다. 대구서도 시내 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자적 기념식을 치르려 했으나 해산됐다. 학생들과 혁신계가 쿠데타설 등을 의식하고 4·19로 조성된 민주적 질서 자체가 파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날만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자제한 것이었다.

A6

A7 서울대학교 민통련

A8 ‘서울대 민통련 선언문’ 『민족일보』 61.4.20. / 4.19 제2 선언문 『민족일보』 61.4.20. 전문수록 /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41-143쪽 /

A9

A1 민족일보사건

A2 1961. 5. 18- 12.21(조용수 사형집행일)

A3 1961. 5. 18. 쿠데타세력에 의해 혁신계 3천 3백여명과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계자 전격 체포/1961. 5. 19. 「민족일보」 폐간조치/1961. 8. 28. 1심공판, 조용수·안신규·송지영 등 3인 사형 언도, 그 외 관련자 실형언도/1961. 10. 31. 상고공판, 조용수 등 사형 3인에 원심확정/1961. 12. 20. 박정희 최고 회의의장, 조용수 외 송지영, 안신규에게 무기로 감형/1961. 12.21. 조용수,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 집행됨

A4 이승만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지하에 잠복했던 혁신계 세력이 4·19혁명과 더불어 정치적 자유의 바람을 타고 급격히 부상하는 과정에서 혁신계를 대표하는 「민족일보」가 탄생되었다. 1961년 2월 13일 공식 창간된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의 슬로건을 내걸고, 창간사에서는 ‘우리는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천명하였다. 창간과정에서부터 서상일,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이종률, 송지영, 이건호, 안신규 등 혁신계 및 진보적인 인물들과 관계된 민족일보의 주된 논지 또한 당시 혁신계에서 주장하는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이었으며, 편집의 대담성과 진보적인 색채 때문에 발간되자마자 선풍적인 지지와 인기를 모았다. 이러한 민족일보의 반향은 장면정부로부터 창간배후의 자금관계 의혹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곧이어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탄압의 직접원인이 되었다.

A5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혁신계의 통일논의로 인한 국가존립의 위기를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던 군사정권은 쿠데타 발생 이틀 후인 18일에 9개항에 이르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조치의 발표와 함께 3천 3백여 명에 이르는 혁신계 인사를 체포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민족일보의 간부 등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9일 지령 92호에 의해 민족일보는 폐간조치되었다.

혁명검찰당국은 이들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8월 28일에 열린 공판에서 혁명재판소 심판 2부(재판장 김홍규)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형법 등을 적용하여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상두(15년), 양수정·이건호(10년), 정규근·양실근(5년)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다. 상고심 공판은 10월 31일에 열려(상소심판 제1부 재판장 전우영), 조용수와 안신규, 송지영 3명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하는 한편, 이종률, 양수정, 이

건호, 이상두 네 피고인에게는 원심을 파기해 이종률·이상두 징역 10년, 양수정·이건호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의 군사혁명정부가 언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자, 국제신문인협회, 국제펜클럽 등 국제기구에 서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이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도록 종용하고 인도적인 처리를 요망했다. 그러나 12월 20일 박정희 의장은 사형 확정 3명 중 조용수에 대한 형을 확인하고, 안신규, 송지영은 확인 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으며, 조용수는 바로 다음날인 21일 오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전격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A6 사형 : 조용수(민족일보 사장)

무기징역: 송지영(고문), 안신규(상임감사)

징역 10년 : 이상두(논설위원·경북대강사)

징역 5년: 양수정(편집국장), 이건호(논설위원·고려대교수), 이종률, 정규근(상무이사), 양실근(사원)

무죄: 이종률(상무이사), 전승택(총무부국장), 김영달, 조규진(기획부), 장윤근, 김영달 <최고회의 의장 확정 결과>

A7

A8 재판관련 : ‘공소장’, 『혁명재판사』 제3권, 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191쪽 / ‘판결문’, 『재판사』 앞의책, 203, 216쪽 / ‘민족일보사건’, 『한국혁명재판사』 앞의책, 191-272쪽

공소 및 판결 근거 기사 :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모함을 삼가라’ 「민족일보」(이하 동 신문 생략), 1961. 2. 23 / ‘조국통일을 위하여 전민족이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1961. 2. 27) / ‘남북 교역시기는 성숙하였다’ (1961. 4.9)/ ‘이복쌀 이남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1961. 4. 22) / ‘통일외교 실패한 장정권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1961. 4. 22) / ‘통일 위한 선행조건으로 남북한의 학생회담을 열자’ (1961. 5. 4) / ‘조국통일의 선봉에 감사한다’ (1961. 5.5) /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1961. 5. 5) / ‘통일은 먼저 남북교류로 시작하자’ (1961. 5. 6) / ‘학생들의 통일외교를 부정적으로 탄압마라’ (1961. 5. 7) / ‘우렁찬 통일에의 고동 남북학생회담 편의 제공하라’ (1961. 5.7) / ‘통일외교의 전진을 위하여’ (1961. 5.8) / ‘우선 체육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1961. 5. 12) /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1961. 5.15) / ‘통일을 원치않는 태도’ (1961. 5. 16) / ‘민족적 자주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자’ (1961. 5. 16)

기타 참고문헌: 원희복, 『조용수평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5 / 김삼웅, ‘조용수 <민족일보> 필화, 『통일론 수난사』, 한겨레신문사, 1994, 131-151쪽 / 김자동, ‘언론운동으로서의 『민족일보』의 성격’,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A1 서재민 자살사건

A2 1962. 3. 8.

A3 1962. 3. 8. 서울운수노조 소속 노무자 서재민씨 자살

A4

A5 생활고를 비판한 노무자 서재민의 자살사건. 운수노조 서울지부에 의하면 “열일곱살 때부터 쉰 두 살까지 35년간 서울역 뒤 미곡창고에서 하역인부로 있던 서재민씨는 일급식구를 남겨놓고…그가 일평생 땀흘려 일해오던 창고 안에서 가마니를 깔고 덮은채…” 노동절의 벽보도 무색하게 “짐꾼 35년의 결산”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사건의 해결을 포함한 체불 임금의 해결을 관계당국에 진정하였다.

A6 서재민(운수노조 서울지부소속 노무자)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741쪽.

A1 대남 지하서클간첩단 사건

A2 1962. 6. 13

A3 1962. 6. 13 합동수사본부, 대학생 지하서클 간첩단 사건 발표, 주모자 김낙중 체포.

A4

A5 1962년 6월 13일 합동수사본부는 대학생들이 관련된 대남간첩 지하 서클을 확보, 일당 7명 중 6명을 체포한 사실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1962년 5월 20일 주모자인 김낙중(金洛中·28세, 前서울대 문리대, 現고대정치과 3년 在籍)을 체포함으로써 드러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금암(鄭金岩·28세, 고대졸), 안문택(安文宅·25세, 고대졸), 김병오(金炳午·28세, 고대졸), 이원조(李元助·30세, 단국대 2년 중퇴), 한학기(韓學基·29세 고대4년 재학) 등을 체포했으며 같은 씨클 소속인 안신엽(安辛燁·28세 고대재학)은 이 씨클 활동 현황과 자금 조달을 위해 월북한 상태라고 전하였다.

수사본부장은 주모자 김낙중이 1961년 8월 15일 월북한 후 62년 3월 20일에 다시 남하한 것으로 확인했다. 진술에 의하면 남북학생교류, 북진통일의 반대 등을 위해 북한괴뢰의 지도인물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 월북했던 것이라고 하며 그는 이북에 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간첩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각 학교에 비밀 씨클을 만들어 현존하는 각 사회단체에 침투하여 북한괴뢰가 주장하는 남북평화통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라는 지령을받고 월남했으며, 월북 전부터 독서회등 학생동지 씨클을 만들고 국제 평화문제연구회 전 이주당(二主黨)이 주관했던 주간정론사(週間政論社), 농업문제연구회, 신조회, 협진회 등에 관련하여 활약해 왔던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그는 북조선노동당 중앙당연락부의 지령을 받고 있으며 활동 대상은 주로 서울 소재 각 학교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해 6월14일 서울문리대와 법대 사이의 구름다리 부근에서 붓으로 쓴 「反美帝國鬪爭同志會」명의로 된 3매의 붉은 삐라와 「反美救國學生鬪爭委員會」명칭으로 된 삐라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行政協定을 締結하라 ▲양키의 野獸의인 蠻行을 排擊한다 ▲모두 일어서서 총궐기하라(이상 反美救國鬪爭同志會) ▲高大生과 서울 大學生들이여! 약소민족의 悲哀를 어찌 이 이상 더 보고 견디겠는가? 당신들은 朝鮮民族에 對한 蠻行을 배격하며 軍事徒黨의 처사를 반대하며 끝까지 항거하라, 우리들 전체 朝鮮人民들은 당신들의 義舉를 더욱 支持聲援한다(이상 反美救國學生鬪爭委員會). 이 사건에 대해 김낙중은 자신의 회고록 『굽이치는 임진강』에서 공안당국의 조작사건이라고 해명했다.

A6 김낙중(金洛中·28세, 前서울대 문리대, 고대정치과 3년 在籍), 정금암(鄭金岩·28세, 고대졸), 안문택(安文宅·25세, 고대졸), 김병오(金炳午·28세, 고대졸), 이원조(李元助·30세, 단국대 2년 중퇴), 한학기(韓學基·29세 고대4년 재학), 안신엽(安辛燁·28세 고대재학)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1972, 북한연구소, 403-404쪽./『굽이치는 임진강』

A9

A1 미왕산업주식회사 제1차 파업

A2 1962.7.10-1963. 2. 19

A3 1962. 7. 10. 미왕산업주식회사, 전국화학노조 미왕산업분회장 한재선, 부분회장 이병렬, 조사통계부장 김상준, 후생부장 최종민 등 부당해고/1962. 7. 19. 미왕노조측, 임정홍 사장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1963.1.16. 노조 임시총회개최, 쟁의 결의/1963.1.21. 정식 쟁의발생신고/1963.2.8.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제시, 쌍방의 수락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의 거부로 결렬/1963.2.10. 노조측, 영등포 지역 지부산하 조합원 827명 중 706명의 찬성으로 2월 14일 정오를 기해 파업 단행 결의/1963.2.14. 파업돌입,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명이 조합원 7명을 포고령 1호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 보건사회부 노동국장과 영등포 경찰서장이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3일 내 중재할 것을 약속, 파업 중단/1963.2.15. 윤태일 서울시장, 미왕산업 사장 임정홍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에 관한 조정에 불응’ 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 화학노조측, ‘영등포 지역 지부 미왕산업분회 투쟁대책위원회’ 설치/1963.2.16. 사측, 250명의 전종업원 해고, 日給노동자 고용.

A4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소재 미왕산업주식회사(사장 임정홍)는 1962년 7월 10일 전국화학노조 미왕산

업 분회(조합원 87명)의 분회장 한재선, 부분회장 이병열과 김산준 조사통계부장, 후생부장 최종민과 변개철에게 노조해산과 탈퇴를 강요하면서 부당 해고하였다. 이에 조합측은 수차에 걸쳐 해고의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였고 1962년 7월 19일 사장 임정홍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서울시와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사측은 끝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A5 노조측은 1963년 1월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쟁의를 결의함과 동시에 1월 21일 서울시장 및 서울시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쟁의 발생을 통고하였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자의 즉시 복직 ② 미불 노임의 즉시 지불 ③ 상여수당 200% 지급 ④ 목욕탕 설치 및 환기장치 설치 ⑤작업복의 즉시 지급 및 안전관리자 배치 ⑥임금인상(50~200%). 조합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1963년 2월 8일 조정안을 제시하고 쌍방의 수락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의 거부로 결렬되었다. 이에 노조측은 2월 10일 영등포 지역 지부산하 조합원 827명 중 706명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2월 14일 정오를 기해 파업을 단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파업에 돌입하자 영등포경찰서는 정·사·복 경찰 100여명을 동원하여 조합원 7명을 포고령 1호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하고, 회사 주변을 경계태세로 갖추었다. 이 가운데 보건사회부 노동국장과 영등포 경찰서장이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3일내 중재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날 밤 11시 20분을 기해 노조는 농성을 풀고 해산하였다. 2월 15일 윤태일 서울시장은 미왕산업 사장 임정홍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에 관한 조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화학노조는 ‘영등포 지역 지부 미왕산업분회 투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파업 수행에 의한 목표관철을 다짐했다. 그러나 미왕산업측은 노조측의 요구를 외면한 채 2월 16일 미왕산업주식회사로 명의변경하고, ‘새로운 이사진은 구 종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50명의 전종업원을 해고하고, ‘16일 이전 종업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16일 이전에 조직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 19일자 서울신문을 통해 해명서라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A6 임정홍(미왕산업주식회사 사장)

A7

A8 2-19, 사측의 ‘해명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부록 4-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4-746쪽

A1 조광섬유 노동자 부당해고 및 폭행사건

A2 1962. 12.12

A3 1962.12.12. 조광섬유 소속 노동자, 노조분회 결성위한 가입원서 배부 중 공장장에 의해 폭행·감금, 남녀 종업원 6명 부당해고 당함.

A4

A5 1962년 12월 서울 종로구 장사동 소재 조광섬유에서 1백여 남녀 노동자들이 12시간씩 노동에 혹사당하였으나 법정수당은 물론 정기휴일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12일 여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분회를 결성하기 위해 가입원서를 배부하던 중 공장장에 의해 3시간여 감금, 폭행 당하고, 남녀 종업원 6명이 부당 해고당하였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1쪽.

A9

A1 미왕산업 제2차 파업

A2 1963. 2. 19-1963.2.26

A3 1963. 2. 19. 포고령 제1호 위반 혐의 구속인 7인 중 6인이 석방/2.21. 석방 후 출근한 6인에 대해 사측이 출근저지/2.26. 노조,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조합원 19명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어 관철

실패.

A4 미왕산업 제1차 파업이 회사측의 무성의와 술책속에 당국의 부당한 쟁의금지까지 겹쳐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가운데 2월 19일 포고령 제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7명 중 6명이 석방되었다. 그러나 21일 오전 재취업코자 회사에 출근한 이들에게 사측은 취업할 수 없다하여 거부하여 미왕산업사태는 악화되었다.

A5 6명의 재취업이 거부되는 사태에 대해 미왕산업 노조는 2월 26일 다시 총파업을 결의, 돌입하였다. 이날 60여명의 조합원들은 당국의 엄단 위협 아래 회사 정문에 집결하여 「임정홍은 반혁명행위를 지양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복직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 띠를 어깨에 두르고 무언의 농성시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농성은 열성조합원 19명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됨으로써 좌절·실패로 돌아가 미왕산업 사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6-747쪽.

A1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총 탈퇴 및 노조해체사건

A2 1963.3.26-1963.9.9

A3 1963. 3.26, 지연일 금속노조위원장, ‘한국노총 탈퇴 및 노조해체’ 성명서 발표/1963.3.28. 지연일 등, ‘인천철강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이에 금속노조측, 인천제강 노조 결성 무효확인을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함과 동시에 3-26 성명에 서명한 지연일 등 10명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1963.4.3. 한국노총 긴급 중앙위원회 소집, 지연일을 금속노조 위원장직무 무기정권 조치/1963. 4. 5. 금속노조측,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지연일 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의와 임시대회를 정기대회로 대치하는 등 규약개정, 예산편성 및 임원선출/1963. 9. 9. 지연일 (전)위원장, 3-26성명 반성 사과문발표

A4 한국노련결성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조직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지연일 금속노조 위원장은 산하 노조의 한국노련 가입을 지원하면서 한국노총의 산별체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1963년 2월 26일, 금속노조는 한국노련 결성준비위원회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 실무자들에 대한 한국노총의 조직정비 지시에 의해 산하 인천제강 분회장 이만영을 해임조치하고 제명처분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만영은 3월 1일, 한국노총 산하로서의 기존노조를 해체하고 기업단위의 인천제강노조를 결성, 위원장에 선임되어 지연일과 함께 인천지역의 한국노련 조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A5 지연일 금속노조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금속노조 본부는 지연일 위원장이 ‘불순분자들과 야합하여 위원장의 직분을 유기하고 반조직 행위를 자행한다’ 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 노총에 징계조치의 상신을 제기하고 위원장 유고로인해 부위원장 김재범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선임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1963년 3월 26일 지연일(池淵日)위원장과 인천지부장인 문익모(文益模)외 8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총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를 해체한다]는 성명서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발표하고 3월 28일에 [인천철강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금속노조 본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서를 발표하고 산하 각급 조직에 대해 동요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며, 한국노총에서는 같은 날 ‘우리는 정당 또는 정치인이 사이비 노동운동자의 조직분열 행위에 관여함을 결사 배격한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4월 3일에는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지연일에 대하여 금속노조 위원장직무 무기정권 조치를 하였다. 금속노조는 3월 28일 인천제강 노조 결성 무효확인을 보사부장관에게 건의함과 동시에 3-26 성명에 서명한 지연일 등 10명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금속노조에서는 한편으로 서명 가담자들을 회유하여 4월 5일, 한국강업 분회장 김기호, 부평제강 분회장 장인수, 국산자동차 분회장 노재호 등 3인이 ‘무지중 현혹되어 서명에 가담’ 하였다는 해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인천철강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위원회에서도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1963년 4월 12일 금속노조는 위원장 유고로 인한 임원보선 및 당면문제 토의 결의를 위해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지연일 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의를 하는 동시에 임시대회를 정기대회로 대치하고 규약 개정, 예산편성 및 임원선출을 실시하였다. 한편 지연일은 1963년 9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앞으로 탈퇴성명을 완전 철회 취소하면서 무지의 소치를 반성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단위노조를 결성했던 인천지부의 인천제강 분회, 대동제강 분회, 조선철강 분회 등은 산별체제를 규정한 노조법의 개정공포와 인천제강노조 위원장 이만영의 구속, 내무장관의 합법 단체활동을 하라는 경고문 발표 등으로 사실상 불법화되어 7월 하순과 8월 하순에 걸쳐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복귀하였으며, 이리하여 3월 26일 성명과 관련된 ‘노총탈퇴와 금속노총해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A6 지연일(금속노조 위원장), 이만영(인천제강노조위원장), 문익모(금속노조 인천지부장)

A7

A8 금속노조, 「사업보고서」, 1964, D-1~51면/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 책, 582-584쪽.

* 3-26 ‘성명서’

“우리는 현 노총이 주장하는 전국 산별 하향식 조직으로서는 민주주의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총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이를 해체함을 이에 성명한다.

서기 1963년 3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지연일

인천지부장 문익모 외 8명 “

A1 금성사(金星社) 단결권 수호 투쟁

A2 1963. 4. 7-1963. 5. 1

A3 1963. 4. 7. 금성사 소속 170여명 종업원, 노조결성대회 개최/4.8. 조합원 포섭활동 전개하자 사측이 노골적으로 조합결성 방해/4.12. 노사회의에서 사측과 노조측의 대립으로 타협 못 이룸/4.13. 부산시의 중재로 3개항 조정안 마련/4. 23. 6개항 수습방안에 노사쌍방이 합의/5.5. 노총부산시협의회 주최로 금속노조 금성사지부설치대회를 조합원 1,68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A4 1963년 4월 7일 부산시 서면 소재 주식회사 금성사(사장 구정회) 소속 170여명의 종업원은 부산부두 노조 회의실에 모여 노조결성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인 8일, 조합원의 포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사측은 노조 결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종업원들의 몸수색을 하여 노조 가입원서 5백장을 압수하는가 하면 노조결성에 앞장섰던 종업원 11명을 동양기계 공사장과 서울지사에 전근 발령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조합결성을 방해하였다.

A5 회사측의 부당한 압력과 방해에 대해 금성사 분회는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방지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8일에 전 종업원에게 약식 가입원서를 배부함으로써 목적 관철에 분투하였다. 한편 4월 11일 부산지구 전체 노동조합은 부산시협의회를 중심으로 긴급총회를 소집하고 비상대책을 논의한 결과 「부산지구 부당 노동행위 규탄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재(在) 부산 전체 조직의 운명을 걸고 결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4월 12일 낮 12시부터 개최된 노사회의에서는 회사측에서 ‘노조간판을 걸고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분회측도 ① 끝까지 노조간판을 걸고 일하자. ② 회사측은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③ 노조간부와 전체 종업원의 신분을 보장하라. ④ 인사조치한 직원을 복직시켜라 등 5개항의 결의가 맞서 타협을 보지 못하고, 다만 4월 13일 오전 부산시장이 주관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조정안은 ① 금성사는 즉각 문을 열고 종업원을 무조건 취업시킬 것 ②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노조결성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6개월 후에 그 구체적 결성시기는 부산시에서 결정할 것 ③ 노사 쌍방은 각각 이상의 조건을 수락하는 각서를 제출한다 는 것으로 이 조정안은 사실상 이미 결성된 노조를 부당하게 인정치 않는 것임으로 노조는 전면 거부하였다.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직접 개입하여 4월 23일 금성사 부사장과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은 6개항의 수습방안에 합의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① 회사는 5월 1일 이전에 취업 재개하며 ② 금성사는 금속노동조합 지부로, 락희화학
과 락희유지는 화학노조 지부로 설치한다 ③ 현 분회 간부의 신원을 보장한다 ④ 인사조치를 백지로 환
원한다 ⑤ 금성사 조직 재현 및 락희회사 조직은 노총에 일임하며 노총은 이를 적극 지도한다 ⑥이중성
문제는 회사가 즉각 조치한다. 4월 27일에 열린 노사회의에서 양측은 한국노총의 6개항 합의를 재확인
하고 5월 1일부터 취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폐쇄기간 중 미임금 지불을 확약하고 공고함으로써 분규 해
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어 5월 5일 노총부산시협의회 주최로 금속노조 금성사지부설치대회를 조합원
1,68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함으로써 단결권수호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7-750쪽.

A9

A1 부산 락희화학노동자 부당해고 연좌농성

A2 1963.4.26

A3 1963.4.26. 부산 락희화학 노동자 100여명, 노조지부장 하동진의 부당해고에 연좌농성, 경찰의 제지
로 강제해산.

A4

A5 1963년 4월 26일 부산 락희화학 노동자 100여명은 노조지부장 하동진의 해고가 부당함을 지적, [해
고자 복직과 자치 노조의 해산]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이 고
용한 경찰에 의해 제지, 해산되었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1쪽.

A9

A1 고려석면(高麗石綿) 안양공장 쟁의

A2 1963. 5. 11

A3 1963. 5. 11. 고려석면 안양공장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하며 쟁의, 사측이 노동위원회 알선 거부하
고 4원씩 인상할 것 제의, 노조측이 거부/1963.5. 13. 134명의 조합원 파업단행

A4

A5 1963년 5월 11일 고려석면 안양공장 종업원들은 당시 남공 75원, 여공 35원의 기아임금에 항의하여
쟁의를 제기하였다. 사측은 이에 노동위원회의 알선을 거부하고 일당 4원씩 올려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노조측은 전면 거부하고, 13일 134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파업에는 ‘밥은 못먹어도 죽이
라도 먹게 해다오’, ‘하루 품삯 31원이 웬말이나 사장 담배 한갑 값도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
측의 맹성을 촉구하였다.

A6

A7

A8 화학노조, 『10년약사』, 1969. 66-67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2쪽.

A1 삼화제분(三和製粉) 인천공장 쟁의

A2 1963. 5. 27

A3 1963. 5. 27. 삼화제분 인천공장 종업원 68명이 중간착취 배제 및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하며 쟁의
돌입/1963.7.2. 조합원 신인균이 ‘중간착취 배제하라’ 는 내용의 혈서 씌/1963. 7. 3. 동인천 경찰서
소속 100여명이 동원 쟁의 가담자 연행

A4

A5 삼화계분 인천공장 종업원 68명은 1968년 5월 27일 중간착취 배제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쟁의 돌입하였다. 한달이 경과하여도 사측이 무성의로 대응하자 6월 29일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5일간 계속된 파업에서 7월 2일 조합원 신인균이 [중간착취 배제하라]는 혈서를 쓰고, 조합원의 부인 황학연은 [배고파 죽겠다]는 혈서를 파업중인 회사 정문 밖에서 쓰며 결사 투쟁을 다짐하였다. 7월 3일 오후 동인천 경찰 100여명이 동원, 쟁의행위 가담자를 연행하고, 이 소식을 들은 30여명의 노조 가족들이 관할 경찰서 앞에서 연좌 농성하였다.

A6 신인균(노조원), 황학연(노조원 부인)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2쪽.

A1 미태평양 건축회사 종업원 가두데모

A2 1963. 7.22

A3 1963.7.15. 의정부 소재 미 태평양 건축회사 종업원 최도순 씨 등 16명 부당해고/1963.7.22. 남·여 종업원 1,000여명이 부당해고 항의 가두데모

A4

A5 1963년 7월 22일 의정부 소재 미 태평양 건축회사 남·여종업원 1,000여명이 회사 정문 앞에서 7월 15일 최도순 등 16명이 부당 해고된 데 항의하여 가두데모를 감행하였다. 이 데모는 두 줄로 퇴근하던 종업원들이 가슴에 ‘감원 결사반대’ 라는 표지를 달고 ‘대우개선 못할 망정 감원이란 웬말이나’ 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경찰 제1저지선을 돌파, 뼈라를 뿌리고 행진하여 경찰 제2 저지선 마저 뚫고 미1군단 정문을 거쳐 시위한 후 자진 해산하였다.

A6

A7

A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42-743쪽.

A1 6.3항쟁(굴욕적 한일회담반대시위)

A2 1964.3.24-6.3

A3 64.3.24 시위, 4.19전후 시위, 5.20 장례식 시위, 6.3 항쟁. 한일회담 반대로 일어난 3.24 시위가 4.19를 전후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5.20 장례식 시위를 계기로 반정부 투쟁으로 전이됐으며, 전면적인 반정부민주화투쟁인 6.3 항쟁으로 발전. 1964년의 6.3항쟁은 3.24시위로 시작하여 4.17시위를 경과한 초기투쟁,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과 5.25 ‘난국타개학생총궐기대회’ 로 한일굴욕회담에 대한 반대투쟁이 연합적 성격을 띠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의 투쟁, 6월 2일과 6월 3일의 격화된 시위와 6.3계엄령 선포로 1964년의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결정적 투쟁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A4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투쟁에도 개의치 않고 정부는 계속 한일회담을 추진, 3.23. 김종필은 동경에서 ‘5월 초순에 한·일협정이 조인될 것’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같은 발언은 굴욕적인 한일회담 협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시위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해 3.24. 전국 주요 도시에서 8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투쟁이 전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6.3항쟁이라는 거대한 자주화,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6.3항쟁은 직접적으로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운동이었지만 넓게 보면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적 구조하에서 산적해 있던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된 공동투쟁이었다. 즉 박정희정권의 폭정에 대한 항의이자 직접적 생활문제, 한·일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저자세와 일본의 팽창주의 및 미국의 부당한 개입에 반대하는 민족자존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A5 ▶3.24한일회담반대시위(3.24-3.28) : 3.23. 문리대에서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련) 주최로 ‘한일관계강연회’ 를 가진 바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굴욕외교 반대 데모를 하겠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4일 문리대 교정에는 “매국외교 중지하라” 매판자본 타파하라 ‘는 벽보가 게시되었고

오후에 모의화형식이 거행되었다. 학생들은 화형식에서 제국주의자의 상징으로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일본측 수상인 이케다와 공화당의 김종필 의장을 은유하는 이완용의 우상에 불을 지음으로써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결의문에서 “① 민족반역적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동경 체재 매국정상배는 일로 귀국하라, ②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 ③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자본의 척후병을 축출하라, ④ 친일 추구하는 국내 매판자본가를 타살하라, ⑤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하지 말라, ⑥ 제국주의 일본 자민당 정권은 너희들의 파렴치를 신의 양화(釀禍)를 입어 속죄하라, ⑦ 박정권은 민족 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봉쇄치 말라, ⑧ 오늘 우리의 쫓겨간 역사를 증언하려니와 우리의 행동이 ‘신제국주의자’에 대한 반대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고 박정권의 대일협상과 국교정상화 작업을 비판하였다. 같은 날 고려대 1,000여 명의 학생들도 교내에서 집회를 마친 다음 동대문을 거쳐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하여 7시 30분경에 해산하였다. 연세대 학생들도 같은 날 교내에서 열린 함석헌과 장준하(張俊河)의 대일외교반대 강연을 들은 후 교외로 진출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를 받으면서 이대 입구에서 연좌 데모를 벌이다가 일부가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여 고대생들과 합류하였다. 고대생들의 데모를 응원하던 대광고교생들도 6시 30분부터 반도 호텔 앞에서 연좌 데모를 벌이다가 해산하였다. 3.24 데모는 4.19와 5.16 이후 최대의 반정부 데모였다. 서울지역 학생들의 3·24시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부산시경은 24일 오후 비상소집령을 내려 각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경비태세에 들어갔으며, 대구에서도 황색경보를 내리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살폈고, 전남도경도 낮 12시 20분을 기해 황색경보를 발했다. 3.24시위로 283명의 학생과 5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엄민영 내무장관은 24일밤 학생들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에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면 1,2,3단계로 나누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언명했다. 24일 아침 대구를 떠났던 박정희 대통령은 데모 발생 보고를 받고 급거 귀경하여 심야에 각의와 정부, 여당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연행된 학생들의 대부분을 석방하고, 25일 상오 10시 반에 중앙청에서 각 대학 학생대표 3명씩과 문교, 외무, 내무 3장관의 간담회를 열어 한일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과 통금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온건한 수습방안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5일에는 전국 경찰의 비상경계 속에서 시위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오후가 되자 서울대생 1천여 명이 1시 20분경부터 원남동로터리를 경유하여 종로로 행진, 화신로터리를 지나 을지로 입구에서 시청 앞으로 나가는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2천여 명의 연대생들도 11시 30분경부터 ‘한일굴욕외교 반대성토대회’에 들어가 시위감행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만장일치로 시위감행을 결정한 학생들은 12시 20분 150여 명의 ROTC 학생을 선두로 조를 짜서 교문을 나서 서대문을 지나 의사당으로 향했다. 또한 동국대 500여 명, 경희대 1,500여 명은 종로로 진출했고, 중앙대 1천여 명은 중앙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한양대 3,500여 명, 건국대 2천여 명 등은 청와대 입구로 밀려들었다. 시위대는 청와대 부근에서 수도경비사령부 소속군인 2개 중대와 대치했다. 25일 시위는 중·고교생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여했다. 이날의 시위는 실로 4·19 이래 최대 규모로 전개되었다. 25일 오전 정부는 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를 수습키 위해 서울시내 36개 대학 학생대표 92명을 초청하여 수습회의를 가졌으나 모임은 아무런 결론 없이 해산되었다. 학생대표들은 ①한·일회담 무조건 중지, ②체일 대표 소환, ③박대통령과의 면담, ④연행된 학생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극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고광만 문교장관은 각 대학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된 ‘사태수습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우선 연행학생을 석방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주장하여 이에 불응하고 오후 1시경 모두 회의장에서 나와버렸다. 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와 구속학생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며, 제1번호사협회도 구속학생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엄민영 내무장관은 “데모가 평화적이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불법적 데모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정당과 삼민회는 합동의원총회를 열고 ‘대일굴욕외교 반대 원내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6일에도 학생데모는 계속되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대규모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 시위한 고등학생만 약 9천 명에 달했고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6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거리로 진출하여 경찰

과 충돌하였다. 경찰은 청와대 주변에 집결하여 두 겹 세 겹으로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청와대 주위에 전기철조망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헬멧과 방석모로 무장한 군대로 하여금 경비를 서도록 하는 한편, 청와대로 향하는 시내의 주요 도로에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여 시위대의 진출을 차단하였다.

3.26. 정오, 박대통령은 “시위는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회담 협상에는 추호의 흑막도 없으며 만약 있다면 역적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며 한·일회담을 당초의 정부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특별담화로 선언하였다. 박정희정권의 강경·강압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27일 다시 수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굴욕외교를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김종필을 소환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나흘째 데모가 계속되자 경찰과 수도경비사의 데모저지방법도 달라졌다. 청와대 근처에만 있던 저지선이 중앙청 앞까지 전진했으며, 밤사이 새로 만든 수십 개의 바리케이드가 경기도청 앞 대로에 늘어섰다. 군병력도 훨씬 늘어 삼청동 입구에 완전무장한 군인 2개 소대, 중앙청 정문 앞 2개 중대, 기동경찰대, 무술경찰 등이 겹겹이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27일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동경에서 한일회담을 ‘측면지원’ 하고 있던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소환되고 대표단이 개편되었다. 이는 대일교섭이 측면채널을 벗어나 공식외교채널로 복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계속된 학생데모에 대한 박정권의 ‘굴복’ 임과 동시에 학생데모의 일정한 ‘성과’ 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성과’ 는 3.24시위 이후 줄곧 확대되어왔던 시위를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3.28. 김종필이 귀국하는 날 성균관대 등 상당수의 대학이 김·오히라 비밀메모의 내역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김종필이 귀국 후 3.24시위를 주도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일단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갔으며, 지방의 학생들도 학원으로 복귀했고, 30일 오후에는 11개 종합대학 대표들이 박정희대통령과 면담했다. 당시 학생들의 데모는 한일회담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굴욕적인 박정권의 대일자세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현승일 인터뷰’ 『대학신문』 1964.4.2/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한국사회』 까치, 1991, 175~178쪽/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94~98쪽/ 「학생데모 전국에 확대」 『동아일보』 1964.3.25/ 「학생데모 국회로 비화 야, 무차별 탄압을 규탄」 『동아일보』 1964.3.25.]

▶ 전국 대학생 굴욕외교 반대 시위(1964.4.17-4.21)

4.19를 전후하여 학생들의 데모가 재개되었다. 이즈음 서울대, 연대, 고대의 시위주동 학생들에게 정체 불명의 피소포가 날아 들었는데, 여기에는 불온문서, 편지, 100불짜리 달러 등이 들어 있었다. 의문의 소포발송과 더불어 학원 내에는 정치사찰이 강화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은 내무, 법무, 문교 장관의 국회출석을 요구하였고, 문교부가 소집한 전국국립대학교 총장회의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학원사찰은 오히려 학생들의 반감을 사 데모를 유발케 했다” 고 말했다.

4.17. 정오경 200여 명의 서울대학생들이 “한일굴욕외교 반대”, “학원사찰의 즉각 중지” 와 “구속된 김중대 군의 석방” 등을 외치면서 데모를 전개하였으며, 4.18. 낮 12시 30분에는 서울사범대학생 250명도 데모에 돌입하였다. 4.19. 성균관대생 800여 명은 교내에서 4·19기념식을 마치고 시위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정부는 여전히 대일 굴욕교섭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드나드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대일회담을 중지하라”, “나라를 팔아먹는 정부를 거부한다” 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행진했다. 경희대 1천여 명, 연세대 1천여 명, 중앙대 500여 명 등 5,6개 대 대학생 3천여 명은 오전 10시경 시청 앞에서 4·19기념행사를 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데모를 하고 중앙청 쪽으로 밀려가다 경찰과 충돌하고 해산하였다. 이날 시위로 50여 명의 학생을 포함, 125명이 체포되었다. 4·19 4주년 기념행사에서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은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도덕적 반성의 구체적 표명이 한일회담의 전제가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경찰과의 충돌에서 학생 6명이 긴급 구속되고 61명의 학생들이 수배되었다. 데모 구호가 애초의 ‘굴욕외교 반대’ 에서 점차 박정희 정권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변화되어 갔으며, 시위 양상도 격렬해지기 시작하였다.

4.20. 서울문리대생 200여 명은 “붉은 피는 매국정권을 증오한다” 는 플래카드를 들고 데모에 돌입하여

원남동을 거쳐 종로 4가까지 나와 경찰의 제지를 받아 연좌하다 30여 명이 연행되었다. 2시 55분경 성대생 1,500여 명도 교문을 나와 데모에 돌입했다. 성대 데모대는 “정치사찰하는 정보기관을 해체하라”, “한·일회담 중지하고 초당파적인 대표단을 구성하라” 는 구호를 외치면서 종로 2가 탑골공원 앞까지 진출했다. 이날 청주에서도 데모가 벌어졌는데, 학생들은 “5월혁명의 자랑스러운 모독이다” 라는 새로운 구호를 외쳐 주목받았다. 또 건국대생 1천여 명도 교정에 모여 학생총회를 열고 “정부 당국은 5·16혁명이 4·19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4·19정신을 이용, 모욕당할 수 없다” 는 3개 항목을 성명서를 채택했다.

4.21. 성균관대생 1천여 명은 “구속된 애국학생 즉시 석방하라”, “5·16은 4·19의 연장일 수 없다” 는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을 나서 2시 30분경 명륜동 어귀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6명이 연행되었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동국대 1,300명도 이러한 구호를 내걸고 데모에 돌입하여, 경찰과 밀고 밀리는 유혈충돌을 벌였다. 한동안 종로거리는 시가전을 방불케하는 수라장이 되었다. 이날 학생데모대는 경찰의 술한 최루탄 발사에 투석으로 응수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날 곤봉으로 학생들을 마구 내리쳐 많은 부상자를 냈으며 학생 106명, 민간인 21명, 도합 127명을 연행했다. 이날 데모로 학생 80명, 민간인 20명과 경찰 40명이 부상당했다.

4.17. 이후 시위가 계속되자 20일 엄민영 내무장관은 20일부터 법에 의거하여 여하한 데모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21. 문교장관은 각 대학과 전문대학 당국에 대해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퇴학 처분시킬 것이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에 태만한 대학의 학장은 책임을 문책한다” 는 요지의 지시를 하달했다.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시정의 일대 쇄신을 위한 훈련” 제3호를 내려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국기의 대분마저 흔들리게 할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고 말하고, 법질서의 유지, 문교정책과 언론정책의 재검토 등 5개 항목을 지적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22일 정부는 데모진압 강경책을 수립하고, 데모진압이 강경책으로 전환한 이유를 “연발하는 학생데모가 국가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 회고록』 1권, 113쪽; 「경향신문」 1964.5.27/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98~101쪽.

▶ 서울대 문리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1964.5.20)

최두선내각이 총사퇴하고 정일권내각이 들어섰으며 돌격내각으로 자처한 신현확내각은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공약하였다. 13일에는 한일농상회담 재개를 교섭, 18일경부터는 국교수립 전 차관선행을 보도하였다.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박정권이 표방한 ‘주체적 혁명’, ‘근대화혁명’, ‘재건혁명’의 기치와 “국가를 바로 세우고 세대교체를 이룩한다, 자립정체를 달성한다” 는 모든 정책목표가 ‘민족적 민주주의’ 로 집약되었기 때문에, ‘민족적 민주주의’ 에 대한 비판은 군사정권과 박정희가 표방한 모든 화려한 구호의 허구성을 총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중심 고리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민족’ 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반민족적, 비민족적’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저자세의 대일외교를 통해 쉽게 폭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동자들은 5월 20일 아침 8시 반경 등교하여 유인물 1,000매씩을 각 대표에게 분배하고 담당학교 학생 동원 상황을 점검한 다음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교정에서 만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오후 2시경 2,000명의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에 앞서 1시 10분경 각 대학 학교대표 4명이 민족적 민주주의 사장관을 어깨에 메고 대회장으로 들어와 조사 낭독, 화형식, 선언문과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에서는 박정권을 4.19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친일, 친미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지주는 국내의 매관자본임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반외세 반독재가 하나의 구호로 결합되었으며, 이러한 선언문은 군사정권의 많은 의혹사건과 정책, 박정희의 수차례의 변의와 계속되는 빈곤에 점점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던 많은 학생들과 시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장례식을 마친 학생들은 5·16이념, 민생고, 한·일회담, 학원사찰 등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었다. 성토대회는 각 학교 대표가 5·16쿠데타 성토(성대), 민생고 성토(고대), 한일회담 성토(건대), 학원사찰 성토(서울문리대)를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성토대회를 마치고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시위는 ‘축!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이라고 쓴 조기와 민족적 민주주의 시체가 든 검은 관을 8명이 들고 앞장섬으로써 시작되었다. 시청 앞에

서 관을 태우기 위해 교문을 나선 2천여 시위학생들은 이화동 삼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약 5시간 동안 투쟁하다 오후 7시 40분경 해산하였다. 이날 낮 3시 조금 지나 서울대학 교문을 나선 데모학생들은 전에 볼 수 없는 일반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미대사관 앞까지 진출했으나 경찰의 최루탄공세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대학가 여기저기서 농성을 벌였다. 이날 시위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합류한 투석전으로 전개되어 학생, 경찰 서로간에 유혈극을 빚었고, 한때는 경찰간부를 포함한 10여 명의 경찰관을 연금하는가 하면 영업용 트럭까지 빼앗아 돌을 싣고 종로 5가 쪽까지 나아가는 등 기세를 올렸으나, 6시 반쯤부터 동원된 무술경찰대의 철저한 해산작전으로 기세가 꺾여 7시가 넘으면서 뿔뿔이 헤어졌다. 이날 학생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충돌과정에서 학생 87명, 시민 94명 등 181명을 연행하여 그중 10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13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시위계획은 주로 3.24 데모로 이미 수배상태에 있어 김종태(金重泰), 현승일, 김도현(金道鉉)을 주축으로 하여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서울대 사대 대표자적인 학생들과 협조하여 행사 진행과 동원을 분담하였다. 각 대학 대표자들은 경희대 이재우, 건국대 민승, 성균관대 박형길·김광렬 등이었다. 5.16. 저녁 7시 서울문리대 건너편 중국집 진아춘 2층에 서울대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등 5개 학교 투위대표가 참석하여 장례식 준비를 최종점검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문리대팀은 주로 준비책을 맡았다. 김종태는 각 학교별 동원상태 점검, 현승일은 공보관계, 김도현은 선언문과 결의문 작성, 송철원은 민생고 및 학원사찰 성토문 등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최혜성은 자금조달과 유인물 인쇄, 김용술은 모의관 두건 제작 구입을 담당했다. 집행책으로는 장장순이 대회장을 맡고 선언문, 결의문, 각 성토문 등의 낭송자가 학교별로 분담됐다. 성균관대 김광렬은 민생고 성토문, 경희대 이재우는 5.16성토문, 건국대 김영목은 굴욕회담 성토문, 서울법대 정성철은 학원사찰 성토문을 각각 낭독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김종태, 김정남(金正男) 등이 선배들의 자문을 받고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4.19 제2선언문과 민통련 제2선언문을 참고하여 체계 있는 것으로 하되, 학원사찰, 민생고, 한일회담 반대 등의 내용을 삽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장례식의 조사는 김지하(본명 金榮一)가 작성하였다.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주최한 것은 대일굴욕외교반대학생총연합회(한·일굴욕회담 반대 대학생총연합회 : 회장 김종태)였다. 각 대학 학생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장례식 전날 9개대 총학생회장은 ‘장례식은 학생회와는 무관한 집회다’ 라며 각 신문사에 해명하고 다녔다. 서울문리대 학생회장 김덕룡도 ‘학생회와 굴욕투위는 전혀 무관하다’ 며 ‘학생회는 학림제 행사에만 참여한다’ 는 태도를 취했다. 고려대도 김종석 총학생회 교도부장을 통해 ‘공식 불참’ 의사를 발표했다. 1964.5.25.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는 5.20데모 주동자로 구속된 38명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경찰에게 구타·고문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경찰관을 독직혐의로 집단고발기로 결정하였다.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한국사회』 까지, 1991, 186~190쪽 ; 신동호 지음,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6, 43~54쪽 ;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선언문」 및 「조사」는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102~105쪽 ; ‘한일굴욕외교반대 학생총연합회 주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의 결의문 및 선언문(요지)’ 는 월간중앙 75년 1월호 별책부록, 『광복30년 중요자료집』, 1975, 199~200쪽 ;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거해, 천오백 학생 관 메고 데모, 민족분열책임자처단 등 결의문 채택」 (『동아일보』 1964.5.20) ;

▶ 난국타개전국대학생궐기대회 (1964.5.25.-5.30)

1964.5.25.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난국타개궐기대회’ 를 개최하였다. 이 때는 3.24데모를 주동한 한일굴욕회담반대투쟁위와 5.20장례식을 주동한 대일굴욕외교반대학생총연합회라는 조직체는 김종태, 현승일 등의 수배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이러한 시위 주력의 공백상태에 나타난 새로운 학생조직체가 난국타개전국학생대책위원회였다. 이 조직은 한국학생총연합회(한학련)라는 미발족 단체를 모체로 하였다. 전국 34개대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한학련은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할 만한 자체역량은 미흡했지만 공식 학생기구라는 점에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한학련이 5.25궐기대회를 기획한 것은 운동권과 학생운동 주도권 다툼, 단체 내 강경파의 압력, 정부 여당의 거둬들인 악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대회 전날인 24일 고려대에서 22개대 대표들이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소위원회를 구성, 각 대학에서 내놓은 초안을 절충 혼합하여 선언문과 결의문(대정부 경고문 포함),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행동강령 등의 문안을 다듬었다. 난국타개학생총궐기대회라는 대회 명칭도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 박정훈의 제안으로 이때 결정되었다. “전국 34개 대에서 25일 11시를 기해 일제히 총학생회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똑같은 문안으로 정부를 성토했다는 총궐기대회에 돌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부정부패 규명’ ‘학원침입 책임자 처벌’ ‘사법부 침입 책임자 엄단’ ‘구속학생 석방’ 등이었다. 학생들은 “금주 내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 때 4.19 정신으로 실력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행동강령을 내걸었다.

5.25. 서울문리대 4월학생혁명기념탑 앞에서 행해진 난국타개궐기대회는 김덕룡의 선언문 낭독, 이양희의 구국비상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폐회선언 직후 박영호 조영주 등 굴욕투위 학생들이 가두진출을 선동하기 시작하였고, 미대생 1백50여명도 이날 오후 2시경 학원난입경찰관구탄대회를 열고 시위에 들어갔다. 고려대에서는 1천2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가 열렸다. 김중석이 개회사, 박정훈이 선언문, 이경우가 기조연설문을 낭독하고, 데모는 하지 않고 해산해 버렸다. 비슷한 시간에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 국민대 서강대 등에서도 대회가 있었으나 데모에 돌입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아대, 춘천교대, 경북대 등이 집회를 가졌다.

한학련이 주동한 5.25궐기대회는 산발적이고 무기력한 성토회로 끝나고 말았다. 모의과정과 내용부터 정보기관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던 만큼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34개 대학에서 일제히 열기로 했던 총궐기대회는 한학련 소속학교로는 단지 6개교에서만 조출하게 치러져 한학련의 조직력과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비록 실패한 대회이긴 하지만 총궐기대회는 학생회라는 공조직을 당시 학생운동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5.26. 서울의 대학가는 ‘난국타개’를 외치는 학생들의 외침이 끊어올랐다. 이날 성남고교생 1,200명은 대학생들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가두에 진출, 경찰대와 충돌하여 투석전을 벌이면서 “사법부침입 무장군인의 엄중처단”을 요구했다. 오전 11시에는 한양대생 약 800명도 노천강당에서 난국타개총궐기대회를 열었고, 동덕여대 100여 명, 단국대 500여 명, 국제대 100여 명도 궐기대회를 열었다.

27일에는 전남대생이 가두데모에 나섰고 ‘신망 잃은 박대통령은 하야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3.24 이후 65일만에 처음으로 ‘정권 타도’ 구호가 등장한 것이다. 대책위는 5.29. 서울시대 대학 대표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법대 구내다방에서 3차 본회의를 열고, “25일 대회에서 채택한 요구사항이 30일 밤 12시까지 관철되지 않을 때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대정부 통고문’을 채택했다. 이 무렵 시중에는 ‘6월 1일 대규모 데모설’이 떠돌았다. 이튿날인 30일 오후 3시 정정길 구자신 안성혁 김실 이진환 김중석 등 한학련 대책위 대표 6명은 순화동 정일권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 대정부 통고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장기영 부총리 등과 함께 1시간 넘게 대화했지만 아무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1964.5.26. 내무부 장관은 20일 이후의 데모에는 서울대의 용공적 색채가 농후한 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련)’ 소속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으며 일부 정치인과 혁신계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5.25. ‘난국타개궐기대회 구국비상결의 선언’, ‘대정부 통고문’은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106, 108쪽 ;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92~94쪽 ; ‘구국비상결의선언’ 및 ‘행동강령’은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월간중앙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200~201쪽 ; 「학생들 난국타개궐기대회 서울대 고대 연대 동대등」(『동아일보』1964.5.25) ; 「일부학생 데모 배후에 정치인, 민통련 후신 서클서 주동」(『서울신문』1964.5.26)]

▶ 서울대학생 단식투쟁(1964.5.30-1964.6.3)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에서는 “① 데모를 확대시키는 방책으로서 단식투쟁을 실시하고, ② 인원이 증가할수록 계속하고, ③ 6월 1,2,3일 내에 타대학에서 일어나면 우리도 쓰러진 학우를 들것에 메고 가두로 진출한다”는 투쟁계획을 세웠다. 단식투쟁이라는 새로운 투쟁형식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하였다. 5.30. 문리대 학생회 주최로 열린 자유쟁취궐기대회에서 학생들은 모의 최루탄을 불사르는

최루탄 박살식을 가졌다. 최루탄박살식은 그 속에서 ‘부재지주 건재’ ‘9백 50불짜리 차관’ ‘매카시시 또 부활’ ‘친회세 친매판 친봉건’ ‘현상금제도, 사쿠라 장학금’ ‘학원침략, 교수구타’ 등이라고 쓴 종이를 하나씩 거내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후 학생들은 ‘녹두장군’ 곡에 맞추어 노가바(노래가사 바꿔부르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최루탄가’ ‘박화분가’, ‘잘탄다가’를 부르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학생들의 단식농성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시위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단식장의 상황은 교내방송뿐만 아니라 동아방송의 「앵무새」프로 등 대중매체 및 일간지를 통해서 매일 보도되었다. 학생들의 단식투쟁은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의 데모를 전국적인 봉기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특히 쓰러진 학생들이 속출하자 매우 선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6.1. 오전에는 ‘국민총궐기호소대회 및 학원침입·민생고책임자 화장식’이 거행되었다. 김지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김덕룡은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성균관대에서는 ‘김종필 꼭두각시 화형식’이 집행되었고, 동국대에서는 ‘오일륙(吳一陸) 허수아비 피고인에 대한 모의재판’이 열렸다. 애초 단식 참가자는 소수였다. 6월 2일 서울대 문리대 안의 단식투쟁 학생들이 300명으로 불어났고, 법대에서도 새로운 100명이 단식에 들어갔으며, 동국대에서도 20명이 단식투쟁을 선언하였다. 단식의 열기가 확산되면서 정국은 극도로 긴장됐다. 6월 2일 고려대가 서울에서는 최초로 ‘박정권 타도’ 구호를 내걸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서울대에서 상대와 의대, ROTC까지 문리대 단식에 합류하였다. 이날 저녁 수배 중이던 김종태, 김도현 등이 농성학생들 앞에 나타나 격려하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반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현승일과 김도현은 “박정권이 학생운동을 좌익으로 몰아매려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출두하여 운동의 순수성을 보여주자”는 운동권 내부의 합의에 따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신동호 지음,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6, 64~75쪽 ;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108쪽 ; 「서울대문리대생 40명 단식농성 사흘째」(『동아일보』1964.6.1) ; 「비에 젖어 쓰러져도 투지 안 꺾여, 단식학생수도 급증」(『동아일보』1964.6.2)]

▶6.3시위

단식농성의 열기를 이어 학생시위는 6월 3일 전면적으로 확대되었고 초점도 ‘박정권 하야’에 맞춰졌다. 이날 시위상황은 전과를 타고 날날이 중계되었다. 학생과 시민 약5만여 명은 서울시내로 몰려나와 거리에 설치된 철조망을 부수고,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을 밀어젓히며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서가 피습되고 학생들은 네 군데의 교통관제탑을 점거하여 독자적으로 교통통제반을 조직했다. 학생들은 군용트럭 10여 대를 탈취하여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활주했고, 연도의 시민들은 행진하는 학생들에게 환호를 보냈다. 그중 수천 명의 시민들은 직접 학생데모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한양대 3천여 명, 서울대 2천여 명과 고대 2천여 명, 연대 2천여명, 동국대 1,500여 명, 성균관대 1천여 명, 홍익대 1천여 명, 경희대, 중앙대, 숭실대, 건국대생들이 시위에 나섰으며, 수원에서는 서울농대 600여 명이 도보로 경수가도를 달려 북상했다. 대전에서도 충남대생 400여 명과 청주상고생 1,500여 명이 성토회를 마친 뒤 시위를 했다. 데모학생들은 ‘무단정치 박정권은 민족을 위해 물러나라’, ‘씩고 무능한 박정권 타도’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도심에 향해 진출했다. 서울시내 약 1만 2천여 대학생들은 제각기 교내에서 ‘박정희, 김종필 민생고 화형식’, ‘5·16 피고 모의재판’ 등과 성토회를 연 다음 스크림을 짜고 교문을 나서 분산 약화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오후 2시 종로, 을지로, 청계천까지 진출했다. 데모학생들이 지나가는 연도엔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갈채를 보내고 최루탄을 터뜨리는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였다. 연세대생 2천여 명과 홍익대생 1천여 명은 대현동을 거쳐 아현동로터리에서 경찰 600여 명과 대치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했는데, 학생들은 경찰에 보급된 최루탄 상자를 탈취하고 충정로로터리까지 진출했으며 2시 25분 충정로과 출소 유리창을 모두 부숴버렸다. 성균관대학생 1천여 명은 ‘박정희’와 ‘민생고’ 꼭두각시를 앞세우고 시위하여 한때 경찰과 대치하다 몇 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모두 동대문서를 포위하고 “연행학생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학생들을 풀어주었으나 시위대는 계속 도심으로 진출했다. 연도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들어 교통은 완전 두절상태가 되어버렸다. 고려대생들은 안암동 입구 부근에

4,5백명, 안암동로터리 쪽에 7,8십명이 몰려있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안암동 입구부터 안암동로터리 사이의 골목마다 숨어 있다가 연도에 있던 1천여 명의 시민들과 호응하여 경찰에 투석을 가하였다. 2시 15분경 안암동로터리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학생데모대에 합류하였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동국대생 1천여 명, 고려대생 약 200명이 국회의사당에 집결, 연좌데모에 들어갔다. 중앙대생 800여 명과 숭실대생 500여 명은 노량진에서 한강을 건너 광화문에 모여 연좌데모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1시 40분 흰가운을 입은 서울 의대생 약 150명이 구호를 외치다가 청와대 쪽으로 갔으며, 경찰은 1시 50분쯤에야 달려와 데모대를 둘러쌌다. 동국대생 2천여 명과 서울 음대생 150여 명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출하려고 달리다가 을지로 3가 로터리에서 경찰 300여 명과 대치했으나, 곧 저지선을 뚫고 을지로 1가를 거쳐 시청광장을 향해 진출하였다.

충남대 농대생 400여 명도 오전 9시 반 교정에서 학원사찰 중지를 비롯한 현정부 규탄 성토대회를 열고 교문을 나와 시가행진에 들어갔으며, 광주에서도 2개 대학과 2개 고등학교 학생 약 1만여 명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경찰에 맞서 2개의 과출소와 도청건물, 그리고 경찰이 경비하고 있는 민주공화당 본부에 돌을 던졌다. 한편 닷새째로 접어든 서울문리대의 단식농성은 각 대학으로 번져 6월 3일 현재 서울문리대를 비롯해 법대, 동국대 등 각 대학에서 단식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날 오후 18개 대학의 1만 5,000명의 학생들에 의해 벌어진 서울의 데모는 안암동, 신설동, 원남동 등 시내 곳곳을 최루탄 막으로 뒤덮었고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거리는 시위학생과 경찰이 맞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특히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가장 민감하게 보도, 6·3 정국의 여론을 주도했다. 이날 세종로 시민회관 앞과 유숙건물 앞의 제1경찰피켓라인은 일찍 거리로 나온 고려대생을 비롯한 1만여 명의 시위대에 의해 오후 3시 10분경에 무너졌다. 제1저지선이 무너지자 경기도장 앞의 제2저지선과 중앙청 앞의 제3저지선도 순식간에 붕괴됐다. 마지막 제4저지선은 해무청 앞이었고, 시위대는 오후 4시경부터 해무청 앞까지 압박했다. 이날 등장한 구호는 “박정권은 하야하라”, “국민은 배고프다”, “민족분열 일삼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미국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우호국임을 보여달라”, “데모가 난동이나 쿠데타가 난동이나”, “몰수하자 매관자본” 등 박정권과 그의 기반이 되는 매관자본, 배후에서 그를 비호하고 있는 미국에 직접적인 공격의 화살을 겨냥한 것들이었다.

학생들이 청와대 외곽의 방위선을 돌파하고 청와대를 경비하고 있던 중무장한 공수부대를 포위함으로써 시위는 절정에 달했다. 아직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모종의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은 무성했다. 데모대가 세종로 거리를 메우기 시작하고 단순한 반정부 데모의 수준을 넘어서서, 봉기의 양상을 지니기 시작한 오후 3시경 전각료와 야당 간부가 모여 긴급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밤 9시를 지난 시각에 버거 미대사와 해밀턴 하우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헬리콥터로 청와대에 도착하여 박정희와 긴급회담을 열었다. 이때 하우스 장군은 완전무장한 한국군 2개 사단을 서울에 출동시키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의 박정희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 강력한 데모 진압책, 즉 계엄권 발동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밤 9시 40분 박정희 정권은 1시간 40분을 소급한 오후 8시를 기해 대통령공고 11호로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박정희의 계엄선포 특별담화는 집회·시위 금지, 언론·출판 사전 검열, 각급학교 무기휴교령, 통금연장, 영장없이 압수·수색·체포·구속조치, 계엄군법회의 설치 등이었다. 이는 계엄 후 유효적이고 양보적인 통치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언론을 장악하고 학원을 장악하는 것이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계엄 후 언론의 사전검열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부 비판적인 언론인을 구속하고 동아일보에 군인들을 침투시켜 기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박정희는 언론규제와 학원안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수차 강조하였다. 7월 29일 계엄 해제 후 30일 공화당 단독으로 “학원보장 입법 ‘과’ 언론윤리위 법안 ‘을 상정하였고 8월 2일 야당의 방관 속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1964.8.10 전국언론인대회에서 언론윤리위법안 철폐투쟁을 결의하였다.

6.3 시위로 848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학생 시민 176명이 연행되고, 91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불량배’의 난동으로 2개의 경찰서와 1개의 소방서, 7개의 과출소, 시경 순찰대의 시설 및 차량이 파괴되었으며 그중 경찰 백차, 수도경비사 트럭 등 17대가 탈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연행된 인원을

대학별로 보면, 고려대가 206명, 서울법대와 문리대가 384명, 서울상대가 37명, 명지대와 외대, 서울공대, 동국대가 각 1명이었다. 6월 중순 민기식 계엄사령관은 정일권 총리의 정례회견에 배석, “계엄선포 후 구속송치자는 학생 168명, 언론인 7명, 민간인 173명 등 모두 348명”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월 27일 계엄 해제 후 계엄당국은 군재에서 민재로 이송된 계엄사범이 22명이며, 구속자는 172명이고 이 가운데 학생은 115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8월 17일 법무부는 구속학생 숫자가 224명이라고 하는 등 구속자 집계 발표 때마다 달랐다. 그러나 6·3 이전에 자진 출두한 김종태 현승일 김도현 외에 각 대학 시위의 주동급은 거의 검거되지 않았다.

계엄령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임시휴교’에 처해진 상황에서 경희대생 200여 명이 4일 오전 11시쯤 교내 문화탑 앞에 모여 데모에 들어갈 기세였으나, 급거 출동한 군경에 의해 해산되고 그중 30명 가량은 경찰에 연행됐다. 6.4. 오전 부산, 대전, 광주, 목포, 춘천 등지에서는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 4일 오전 중앙청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지방학생들이 서울에서와 같은 난동사태를 벌인다면 정부는 부득이 비상계엄을 지방에까지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서울에서는 당분간 시위는 중단되었다. 하루동안 200명의 시위대가 부상당하고 1,200명이 체포된 6·3 시위는 계엄령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6.20. 계엄 당국은 “26일까지 해당 학교에 나가 혐의사실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적된다”며 37명의 ‘혐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7.6. 정부는 “학생 데모를 공산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 증거문건을 압수하고 도예종(都禮鍾·당시 41세·74년 2차인혁당사건으로 사형)과 김정강(金正剛·서울대 정치학과 3년)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소요 등의 혐의로 각각 현상금 10만원씩 전국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종태 현승일 김도현 등 이른바 ‘데모 3인방’에 대한 현상금이 1만원이었다. 10만원은 간첩 검거 현상금이였다.

박정희정권은 학생데모를 계엄령과 대량검거, 중죄적용(내란죄) 등으로 잠재운 뒤 학생들에게는 조기석방과 학원복귀라는 ‘당근’을 베푸는 고단수 전략을 구사했다. 9월 15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영단으로 사상범을 제외한 6·3사태 구속학생 전원을 석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15조치로 학생운동의 주동급 인물들도 대부분 석방됐으며 10.16. 검찰은 오병철 서정복 황건 하일민 등 인혁당사건 관련학생까지 공소취하했다. 10.28. 김종태 현승일 김도현마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불꽃회 사건의 김정강·김정남을 제외하고는 12.28까지 6·3항쟁 관련 구속학생은 전원 석방되었다. 이어 12.22일 이명박 이경우 김실 이정재 박원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6·3관련 학생재판도 모두 끝났다.

A6 계엄당국이 6월 20일자 각 일간지에 윤천주 문교장관 및 민기식 계엄사령관 명의로 출두를 권고한 데모 주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 법대 : 정정길 김병만 조해령 김정룡 오낙준
- 서울대 사대 : 김각
- 고려대 : 박정훈 최장집 김제하(김재하) 이명박
- 성균관대 : 정일룡 이성구 송영삼 임동철 오성섭 정중룡
- 건국대 ; 유동원 박상채 이태우
- 한양대 : 이정재 이기문 김용달 이길호
- 동국대 : 박희부
- 숭실대 : 김보환
- 홍익대 : 신정섭

A7 고려대 민족사상연구회(민사회), 구국항쟁전국대학생총연맹(구국연맹), 대일굴욕외교반대학생총연합회, 한국학생총연합회, 연대 한국문제연구회, ‘6·3동지회’

A8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 70년사』, 101쪽; 신동호 지음,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6, 76~88, 112~115쪽 ; ‘계엄사포고 제1호 및 제2호’, 「뉴욕타임즈」(1964.6.5.) 당시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113~115쪽) ; 1964.6.3데모관련 구속자 명단(6·3동지회 지음, 앞의책, 123~126쪽) ; 「학생데모 확대일로, 시내 각대 학생 만5천명」(『동아일보』1964.6.3) ; 「서울일원에 비상계엄령」(『서울신문』1964.6.4) ; 「서울에

비상계엄선포」(『동아일보』1964.6.4)

A9 인민혁명당사건(1차), 불꽃회사건.

A1 '무장군인 서울법원난입 사건'

A2 1963.4.21

A3 1963. 4.21 육군공수단 소속 군인 13명, 서울법원 난입/1963.5.22 국회본회의에서 정일권 총리, 무장군인 난입을 애국적 충정으로 규정/5.23.서울법대생은 '법의 존엄 수호 쫓기대회'를 열어 무장군인의 사법부 침입행위를 비난

A4 4.21. 학생시위 주력은 거의 검거망에서 사라지고, 주모급 검거에 실패한 수사당국은 연행자에 대해 무더기 영장신청을 했다. 그러나 모조리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일단의 무장군인들이 법원과 양현 판사의 자택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날 공수부대원의 법원난입 사건은 경찰과 군이 사전에 공모하여 사법부를 위협한 일종의 쿠데타적 사건이었다.

A5 4. 21. 새벽 4시 반경 완전무장한 육군공수단 소속 군인 13명이 법원에 난입한 후 숙직관사 자택으로 몰려가 데모관련 영장발부를 협박했다. 카빈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 군인들은 군용 앰블런스 차를 타고 법원 청사에 들어와 검찰 숙직실과 법원 숙직실에 머물렀다가, 이날의 구속영장 담당판사인 양현 판사의 자택에 난입하였다. 그러나 5.22. 국회 본회의에서 정일권 총리, 양찬우 내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은 모두 무장군인의 사법부 난입이 애국적 충정에서 우리나라였고, 학생들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폭동이라 규정했다. 한편 현 난국의 책임이 일부 야당 정치인, 언론인, 학생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광주발언'에 대해 5.23. 야당은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5.23. 서울법대생은 '법의 존엄 수호 쫓기대회'를 열어 무장군인의 사법부 침입행위를 비난하였다.

A6

A7

A8 「107명에 영장신청, 5.20데모에 법조치」(『서울신문』1964.5.21) ; 「목요일 새벽의 이변, 무장군인들 법원난입사건」 「무장군인 사법부에 압력」(『동아일보』1964.5.21)

A9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A1 서울문리대 학원사찰성토대회

A2 1964.4.23.

A3 1964.4.23. 국회에서 학원사찰 문제화/4.24. 서울시대 28개학 총장, 시국수습을 위한 4개 항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학원사찰을 중지할 것과 학생들은 의사가 충분히 표명되었으니 학업에 전념하라고 호소

A4 1964.4.11. 국회에서 학원사찰이 문제가 되었다. YTP(Young Thought Party : 靑思會)의 정체가 폭로되었는데, 중앙정보부가 청사회라는 학생조직을 통해서 학원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YTP는 1963년 대통령선거 때 윤보선 후보가 'YTP라는 괴조직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단체였다. 이 단체는 1963년 7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용 비밀단체로 재발족, 중앙정보부의 학원공작에 이용됐는데, 원래는 4-19직후 KKP(구국당)로 출발하여 MTP(문맹퇴치회)로 변모, 5-16세력과 밀착한 극우 청년-대학생 단체였다. 학생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앙정보부원이 학생들을 포섭, 매월 2~3000원씩의 정보비를 주면서 학교 움직임을 중앙정보부에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고 사이비 학생단체인 한국사회연구회는 창립시에 30만원을 공화당으로부터 받았으며 서울대 문리대에 YTP 회원이 30명이 된다는 것이었다. 송철원은 우연히 YTP문건을 입수한 후 학원사찰조사위원회(위원장 송철원)를 결성하고, 손정박 최혜성 이영섭 등과 함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등 폭로준비를 하였다.

A5 이현배의 사회로 진행된 성토대회에서 문리대의 송철원은 YTP의 실체를 폭로하고 당국의 학원사찰 중지를 촉구했다. 송철원은 YTP의 전신은 테러단이며 서약서에는 배신을 할 때에는 생명을 바친다는 것과 반공을 회의 제1의로 삼아 혁명과업 수행에 전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폭로하였다. 각

대학에는 주로 모교 출신으로 된 기관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경제력이 약한 학생들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위 불순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이른바 불순학생들에 대해서는 온갖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장학금 지급과 유학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는 등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사실 송철원이 조사를 할 당시 YTP는 실체가 미미한 조직이었으나, 성토대회 이후 대학가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4.24. 서울시대 28개학 총장들은 시국수습을 위한 4개 항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학원사찰을 중지할 것과 학생들은 의사가 충분히 표명되었으니 학업에 전념하라고 호소했다.

송철원은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시위에서 조사를 읽은 직후 문리대 뒤쪽 철조망을 넘어 도망쳤다. 그러나 조사위 활동을 벌였던 장충동 최무웅의 집으로 갔다가 체포되었다. 김종태의 소개를 알고 있었던 관계로 경찰에 검거되어 무자비한 린치를 당하고 경찰병원에 입원하였다. 이것이 송철원 린치사건으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송철원은 동아일보 김원기 기자와 경향신문 박신일 기자에게 연락하여 린치 사실을 폭로하였고 이튿날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구타사건이 보도됐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이병린)와 한국인권옹호협회(회장 박한상)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다. 또한 수배자들을 외곽에서 돕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김원기 기자와 대책을 논의한 후, 김원기 기자는 5월 21일부터 동아일보에 YTP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였고, 결국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A6 손정박, 최혜성, 이영섭, 최무웅

A7 학원사찰조사위원회

A8 신동호 지음,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6, 32~42쪽;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100~101쪽 ; 「YTP 제2의 폭로」(『동아일보』1964.5.21) ; 「산속 건물에 납치 고문, 모기관원이 서울문리대 송군에」(『동아일보』1964.5.23)

A9 ‘송철원구타사건’

A1 서울대학교수협의회, ‘시국수습결의문’ 채택

A2 1964.5.27.

A3 1964.5.27. 서울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 개최, 군인 법원난입사건 관련 ‘시국수습결의문’ 채택

A4 5.21. 군인들의 법원난입 사건과 경찰의 학원난입 등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심각히 도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5.25. 난국타개학생결기대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긴급 교수총회가 열렸다.

A5 5.27. 긴급 교수총회와 결의문 채택은, 5.16 이후 최초의 교수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이었다. 교수들은 “정부는 난국수습에 있어서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실행행사만을 능사로 삼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책을 단행하라”고 요구하였다. 서울대 전체교수협의회 명의의 6개 항목으로 된 시국수습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학생의 학업 전념을 당부하고, 5.20. 미술대 경찰 난입사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전달되었다.

A6

A7

A8 ‘서울대학교 긴급총회에서 채택한 시국수습결의문’은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107쪽 ;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월간중앙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201~202쪽.

A9

A1 언론자유수호투쟁(언론민주화운동)

A2 1964.8.5.-1964.9.10.

A3

A4 대일굴욕외교반대 학생데모로 인해 정국이 불안하자 정부는 그 책임을 ‘일부 무책임한 언론의 선동’으로 돌리고, 1964년 7월 29일의 계엄해제에 앞서 언론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둘렀다. 1964.8.3.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통과되자 언론의 반대투쟁이 고조되었다.

A5 1964.8.5. 언론기관은 일제히 회합을 열고 비민주적인 언론규제악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언론인들은 8.10. ‘전국언론인대회’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 철폐투쟁에 나섰다. 신문·잡지 발행인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비롯해서 일체의 정부선전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자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편의제공을 취소하며, 모든 공무원 가정에서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야당계 신문의 구독을 중지할 것을 명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이들 신문사에 대한 대출을 중단시키고 언론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부산의 『국제신보』, 대구의 『영남일보』, 대전의 『중동일보』와 『대전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당, 종교계, 법조계, 학계인사들로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 발기준비회의를 구성하고, 범국민운동 전개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언론탄압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비난이 거세게 일자 박정희정권은 9월 9일 결국 언론통제를 목표로 제정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는 유화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9월 10일 함석헌을 위원장으로 하여 자유언론수호연맹을 결성하였다.

A6 이병린(李丙璘), 함석헌, 장리욱(張利旭), 장준하, 강원룡(姜元龍)

A7 자유언론수호연맹

A8 까치, 앞의 책, 193쪽;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17쪽 ; 합동통신사, 『합동연감1966, 103쪽 ;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를 위한 전국 언론인대회 결의문’ 및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 (1964.8.10), ‘정부의 언론법반대인사 보복조치에 관한 4개편집국장의 공동성명’ (1964.9.1.), ‘언론윤리위법시행 전면보류에 따른 정부 발표’ (1964.9.10)는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월간중앙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203~205쪽 참조.

A9

A1 황용주 필화사건

A2 1964.11.10.-1966.9.23.

A3 1964.11.10 국회 국방위, 삼민회 소속 한건수의원, 월간 『세대』 지 11월호 황용주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를 문제삼음/11.14. 월간 『세대지』, 석명서 발표, 책임을 통감/11.19. 황용주, 11월 19일 서울지검 공안부에 의해 구속/1965. 4. 30. 황용주사건 공판에서 유죄선고(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66.9.23. 대법원이 원심확정

A4 월간 『세대』 지 1964년 11월호에 실린 당시 MBC 황용주 사장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논문이 반공법 4조 1항 위반 혐의로 필화를 일으켰다. 『세대』 지 필화는 필자가 박정희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으며 문화방송 사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친여적 인사라는 점에서 다른 필화사건과는 궤를 달리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필자가 문화방송 사장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MBC 소유권을 둘러싼 권력 내부의 알력이 필화사건으로 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정가에 낳기도 하였다.

A5 이 사건은 1964.11.10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삼민회 소속 한건수(韓建洙) 의원이 문제의 글이 국시에 위반되지 않는냐고 따진 데서 발단이 되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론’이라는 부제를 단 이 논설은 『세대』 지가 ‘현대 민주주의의 제양상’이라는 제목으로 마련한 특집 중 하나였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과도기적 표현인 것’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다.

황용주는 결론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토 양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계 강대국의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들 남북한의 적대 상황의 해방 작업부터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6.25 동란 이래 휴전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반주체적인 상황에 구애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 우리는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중략) 남북한의 불가침이란 민족정기의 이름 아래 지켜져야 할 명백한 약속과 이에 따른 군비의 축소는 당연한 정도이며, 이상을 말하면 경계선에만 치안을 위한 유엔경찰군의 극소 주둔으로 만족해야 한다. 유엔의 동시가입과 제3국을 통한 대화의 방안도 수립되어야 하겠다. 과거 20년간이나 부질없게 계속된 비난의 소리가 오늘날 무엇을 이 민족

에 플러스하였을까 하는 기본적인 반성 같은, 전체 국민이 홀로 있을 때 본능적으로 솟아나고 있는 인간성의 자연 앞에 성실하자는 것이다.”

이 글이 국회에서, 더구나 야당의원들에 의해 문제가 되자, 검찰은 필자는 물론 『세대』 발행인 이철원(李哲源), 주간 이준희(李俊熙), 편집장 이광훈(李光勳), 기자 김달현(金達顯) 등을 반공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문공부는 잡지를 전부 회수하기 시작했다.

한편 『세대』 사에서는 14일 일간신문에 ‘석명서(釋明書)’를 내고 책임을 통감, 근신하는 뜻에서 12월호와 신년호를 자진 휴간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용주도 구속되기 직전 신문 광고란에 ‘해명서’를 내고 자신이 쓴 논문은 ‘현하 국제정세 속에서 만약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강대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을 경우 같은 사태도 가상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 ‘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설정 ‘이 남북한의 동시 가입을’ 주장 ‘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용주는 11월 19일 서울지검 공안부에 의해 구속되고 이듬해 4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유죄선고(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를 받았다. 이 사건은 1966.9.23.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5년만에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필자뿐만 아니라 논문을 게재한 『세대』지 발행인 이철원 씨를 비롯 잡지 관계자 4명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황 씨의 논문이 반공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① 황씨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전체 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유엔의 남북한 동시가입과 남북연방 등을 제창하여 북괴집단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그는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을 합헌국가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② 유엔군의 한국 주둔은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취해진 무자비한 역사적 필연의 결과이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점령이라고 주장하여 한미간의 유대가 가일층 강화되어야 할 이 마당에 반미감정을 고취했다.

③ ‘중공군은 만주로, 미군은 오키나와로 철수하라’는 미군 철수를 내세우는 동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여 한미간의 이간을 책동했다.

④ 남북한의 불가침이란 민족정기의 이름 아래 명백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에 따른 군비축소화도 당연한 정도라고 하여 남북한의 불가침조약과 남북 군대의 감축을 주장하여 북괴의 주장에 뇌동했다.

⑤ ‘국토 양단의 현실적인 비극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대국의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없게끔 남북한 적대상황의 해방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남북협상을 추구하는 등의 주장을 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

윤보선, 박순천, 김도연 씨 등 당시 야당 지도자들은 11.19. 『세대』지 필화사건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용공적 논의의 온존처는 공화당의 당시라 할 수 있는 민족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의 요소와 주변에 공산당의 전력을 가졌거나 의심받을 만한 좌익계열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시하지 않는다.” 필화사건의 당사자인 황용주는 후에 “글 내용 자체보다는 한건수 의원이 나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사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 측면이 강하다. 나와 박정희의 특별한 관계를 아는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제기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6 이철원(『세대』 발행인), 이준희(『세대』 주간), 이광훈(『세대』 편집장), 김달현(『세대』 기자)

A7

A8 김삼웅, 『한국필화사』, 동광출판사, 1987, 157~161 / '황용주 증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9

A1 이영희 ‘남북동시가입’ 필화사건(『조선일보』 필화사건)

A2 1964.11.21.-1964.12.17.

A3

A4 당시 정부의 외교정책의 원칙은 이른바 할슈타인 정책의 고수로, 북한의 유엔 접근을 철저히 봉쇄한다는 데 외교정책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런 때에 한국이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터부시되고 있던 무렵이었다. 『조선일보』는 1964.11.21. 1면에 「남북한 동시 가입 제안 준비」라는 표제로 아랍공화국 등 중립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활동사항을 분석·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현실적 대응으로서 유엔에 남북한 동시 가입 제안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외무부 출입기자인 이영희(李泳禧)가 취재한 내용으로, 외무부의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토론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한국 외교의 진로를 전망하는 기사였다.

A5 정부는 이 기사가 보도되자 “대한민국의 비영속성에 관한 회의를 시사했다”는 혐의로 선우휘(鮮于輝) 편집국장과 이영희 기자를 반공법 및 임시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지방에 발송한 이 날짜의 신문을 회수했다.

『조선일보』의 이 필화사건으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이영희 기자의 기사가 하나의 정책적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을 피력한 것으로서 정부 외교정책의 지향점이라는 입장에서 이 기자의 구속을 반대했다. 이동원 장관은 오히려 공관에 이영희 기자를 숨겨주면서까지 그를 보호하고자 했다. 반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외무장관 공관을 수색해서라도 체포하겠다고 맞서 이 사건은 정부 내의 미묘한 알력으로 번졌다. 언론계에서는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외무부 출입기자단 등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측의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자협회는 11월 24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의문을 보내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 본질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탄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① 합법적 출판물에 게재된 기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거니와 중앙유통지의 간부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 역시 좀처럼 없으며, ② 압수 수색영장 없이 신문을 압류한 사실, ③ 적을 찬양하고 정부를 비방하려는 기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언론인 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언론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형사지법은 11.27. 구속적부심에서 선우휘를 석방하고, 서울지검 공안부는 12.6.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영희 기자는 12.17. 구속 만기로 27일 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언론계를 떠나게 되었다.

그 후 학계로 옮긴 이영희는 학구생활에 정진,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우상과 이성』, 『80년대 국제정치와 한반도』 등 중후한 글들을 썼으나, 그 저서들이 또 문제가 되어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다.

A6 선우휘(『조선일보』 편집국장), 이동원(외무장관), 김형욱(중앙정보부장)

A7

A8 「남북한 동시 가입 제안 준비」(『조선일보』 1964.11.21.) 기사 내용 :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이 연례보고에서 제의한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아랍공화국·알제리·캄보디아·말리 등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안을 총회 개막 전에 정식 의제로 제출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해외공관으로부터의 보고를 받았다고 20일 정부 고위 소식통이 전했다. 고위 소식통은 이 제안이 있을 경우에 ‘남한 단독 가입 문제’는 전혀 유엔 의제에서 탈락되어 금년 총회를 마지막으로 한국 문제 토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 기자협회가 11.24.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문 : “대통령 각하,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1.21. 『조선일보』 1면에 게재된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이 동사 선우휘 편집국장과 이영희 기자를 구속하고 동 일자 신문을 압수한 처사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위의 두 신문인에 대한 구속이 전적으로 부당하며 민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단정합니다. 전례 드문 신문 압수 조치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적 처사임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당 불법한 당국의 처사를 주시해 온 본 협회는 이 사태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 본질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리고 위협이라는 점에 각하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구속된 두 신문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신문 압류 처사가 즉시 시정될 것과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삼웅, 『한국필화사』, 동광출판사, 1987, 154~156쪽)

A9

A1 방송작가 김정옥 반공법 위반사건(방송극 ‘강아지’)

A2 1965.3.4.

A3

A4

A5 대전 김정옥 부장 대전방송국에서 방송된 방송극 ‘강아지’ 와 관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A6

A7

A8

A9

A1 한일협정비준반대 및 무효화투쟁

A2 1965.2.18-1965.8.27

A3 1965.1.18. 한일본회담 속개, 1965.2.17. 일본외상 시이나 방한, 2.16. 민주당 한일회담 대책 9인위원회 구성, 2.17. 조신히otel 앞 시위, 2.18. 탑골공원 앞 성토대회, 2.19. 한일협정 기본조약 가조인. 한일회담 반대 시위 최초로 대규모적으로 발생. 1965년의 한일협정 비준반대투쟁은 3.31. 전남대 시위로 시작되어 4.10.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일협정 가조인반대투쟁, 5월의 ‘학원자유수호결기대회’, 6월의 한일협정 정조인 반대투쟁, ‘한일협정 비준반대 각 대학연합체’ 의 한일협정 비준반대투쟁, 8월의 한일협정 비준무효화투쟁, 위수령 발동과 ‘정치교수’ 징계, 연·고대의 휴업령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압적 학원탄압으로 한일협정 반대투쟁의 과고가 잦아드는 9월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A4 1965.2.19. 한일협정 기본조약을 전후해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조약가조인반대시위가 벌어졌고, 4월 중순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주최의 굴욕외교반대 시민결기대회를 계기로 대중적 시위로 발전했다.

A5 ▶ 대일굴욕외교 성토대회(1965.3.19-3.31) : 65년 들어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최초로 대규모적으로 일어났다. 3.19. 2시 시청앞 광장에서 굴욕외교반대투위 주최로 수천 명의 참여 속에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가 있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6.3항쟁 이후 최대 인원인 75명이 연행되었고, 경찰과 4명과 시민 1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함석헌·장준하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한편 부산시청 앞과 중앙동 우체국 앞에서도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라” 는 수만 명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이러한 굴욕적 한일협정 반대투쟁은 대학가가 문을 연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3.26. 동국대에 서는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일굴욕외교 반대 성토대회가 있었으나 학교측의 제지로 10분만에 해산되었다. 3.31. 전남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1천여 명이 집결하여 ‘매국외교 결사규탄 성토대회’ 가 있었다. ‘매국외교를 결사 반대한다 “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10시 50분경 군복을 입은 경찰 300여 명과 충돌하여 투석전을 전개하였지만 끝내 흩어졌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20여 명의 경찰이 부상당하고, 32명이 연행되었다. 문교부는 전남대 당국에 시위 주동자를 엄벌하라고 지시하고, 데모사태가 악화되면 총장 등 학교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일 총학생회장 등 7명의 학생이 제적당하였다. 4월 5일에는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 4월 2일 원주 대성고등학교의 시위 주동혐의로 학생 6명이 퇴학 처분 당하였다.

▶한일협정 가조인 반대투쟁 및 평화선사수투쟁(1965.4.3-4.16) : 1965.4.3. 한·일 양국은 2.19. 서울에서의 기본조약 가조인에 이어 동경에서 어업·청구권 및 교포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정식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3일 가조인된 한일협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6일에는 원내외에서 극한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4.3. 가조인 이후 학생들의 시위가 점차 확대되었

다.

학생 시위가 확대되어가자 경찰과 학교당국은 사후적 강경조치에서 나아가 시위를 사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내무부는 4월 10일부터 춘계 치안대책을 명분으로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목적은 각종 보안사범 및 폭력배, 학생범죄를 중심으로 강력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4.9. 동국대생 500여 명은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를 열어 한·일협정 가조인은 무효라는 등의 결의문과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 ‘일본정부에 대한 경고문’을 채택하였다. 4.10. 서울법대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법대생 500여 명은 ‘매국외교반대 성토대회’를 열어 선언문을 낭독하고 “한일협정 가조인을 즉시 무효화하라”, “구속된 학생을 석방하라”, “청순한 학생운동을 비겁한 수법으로 억압말라”는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수하자 평화선’, ‘왜 하나 매국외교’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를 벌였다. 서울법대생들의 시위는 1965년 들어 서울시내 대학에서의 첫 가두투쟁으로,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12. 시위는 더욱 확산·격화되어, 경희대 300여 명과 연세대 2천 명, 동국대 2부학생 200여 명이 성토대회를 열었고, 초급대학연맹회도 한일회담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구속학생 석방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2일 밤에는 고려대 경희대 숭실대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등 6개 대학 학생이 데모를 하다 연행되었고, 13일에는 범대학적으로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가 열렸다. 고려대 1천여 명, 연세대 450여 명, 경희대, 중앙대 숭실대 국학대 성균관대 전남대 동국대 등이 각각 시위를 벌였는데, 이날 시위 도중 부상당한 동국대생 김종배는 이틀 후 사망했다. 경찰은 13일 시위에 4,500여 명이 가담했다고 밝히고, 이중 528명을 연행하여(고려대 203명, 경희대 53명, 동국대 81명, 성균관대 21명, 연세대 48명, 민간인 15명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11명을 구속하고 3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14일 낮 중앙대생 약 1천여 명이 “민족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사수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나와 데모에 돌입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으며, 성균관대에서도 500여 명의 학생이 ‘애국학생 석방하라’, ‘평화선 너 어디 갔느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 밖으로 나와 경찰과 대치했다.

15일에는 경기고생 1천여 명이 시위를 전개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34명 연행), 고려대생 1,200명이 다시 시위를 전개해 185명이 연행되었고 이 중 2명이 구속되었다. 외대생 400여 명도 성토대회 후 “조인 철회”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고, 제주대생 300여 명은 평화선 사수 성토대회를 열고 굴욕외교를 철폐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 후 전원이 교문 밖으로 몰려 나왔다. 또한 대구의 한국사회사업대학에서도 200여 명이 시위를 하다가 23명이 연행되었다. 서울법대생들은 학생총회를 열어 한일회담 반대를 성토했던 후 5일 간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시위가 확산되자 14일 오후부터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대대가 서울 중심부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부대이동을 앞으로의 시위사태에 대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주최 굴욕외교반대 시민궐기대회(1965.4.17)

4.17.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주최의 굴욕외교반대 시민궐기대회가 4만여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효창운동장에서 열렸다. 대회 후 시민들과 학생들은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경찰은 페퍼포그와 최루탄으로 진압하다 결국 1개 중대의 군대와 2대의 헬기까지 동원하였다. 이날 시위로 민정당 김영삼·고흥문·양희수, 민주당의 김대중·한건수 의원 등이 화상 또는 파편상을 입었고, 14명이 구속되었다.

같은 날 서울시내 3개 고교생 3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오전 8시쯤 배재고교생 700여 명은 ‘평화선 사수하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구속학생 석방을 외치며 서소문, 시청 앞을 지나 중앙청 앞까지 데모했다. 중앙청 앞에 출동한 700여 명의 기동경찰관과 대치한 이들은 약 3분간 연좌데모를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로 학생 일부는 숙명여고 쪽으로 빠지고 약 300여 명은 시청 앞으로 밀려오다 경찰에 의해 오전 8시 40분쯤 해산 당했다. 보성중고교생 700여 명도 “구속학생 석방하라”는 성토대회를 열고 9시 교문을 나서 ‘사쿠라 향기에 무궁화 시든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혜화초등학교 입구까지 나와 경찰과 대치, 30분 간 연좌데모를 하다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밀려 9시 30분에 해산했다.

정부는 4.17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19일 오전 공화당 이병희 의원 외 30인의 이름으로 ‘4·17폭동 사태에 관한 대정부 질문’ 을 하기도 했다. 19일 오전 군당국자는 “앞으로 전국 각처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심해질 경우, 만약 경찰력으로 시위를 막기 어려울 때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수도경비사 병력 외에도 군에서 지원해주도록 결정했으며, 이는 위수령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초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정부가 ‘대일굴욕외교반대 투쟁위원회’ 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반발하여 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시민의 평화적 시위를 난동으로 모는 것은 국민탄압을 위한 소위 비상사태의 조작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는 요지의 반박성명을 냈다. 민정당도 “애국학생 김중배 군을 타살한 경찰은 백만 학도와 국민의 분노는 아랑곳없이 단말마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며 정부를 성토했다. 민주당도 “4.17사태는 데모저지가 아니라 가공할 살인적 보복조치였다. 현 정국을 6·3사태로 몰아 투위의 평화적 시위를 폭도시하고 투위를 불법단체화하려는 저의에서 꾸며진 연극과 같다” 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4월 21일 부산수산대 시위, 22일 경북대문리대 시위, 26일 대구 계성고교생 시위, 외대 및 신학대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시위학생에 대해 관인과 발행번호, 발행날짜 조차 없는 현역 징집영장을 발부하여 탄압하였다.

▶한일회담 반대 시민궐기대회 (1965.5.4.-5.8)

5월 들어 첫 번째 대규모 시위가 5.4. 부산시민궐기대회였다. 1만여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한·일회담 즉시 중지, 김·오히라 메모의 백지화, 한·일회담 반대시민에 대한 탄압 중지, 매국외교가 중지될 때까지의 투쟁전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시민들은 대회가 끝난 후 데모를 벌여 약 200여 미터 진행되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아 해산하였다. 8일에는 광주에서 시민궐기대회가 완전무장한 군인과 경찰의 경계태세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약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공원에서 열렸다. 강연이 끝나고 데모를 벌이려던 일부 군중이 광주공원 앞 광주교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기동경찰대와 대치하여 한때 투석과 최루탄 발사로 긴장된 사태를 이루었다.

▶한일협정반대 단식투쟁과 ‘한·미행정협정 반대 투쟁’ (1965.6.12.-6.22.)

5월 19일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대통령이 제2차 회담을 갖고 한·미 현안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조하며, 미국은 가조인된 한·일협정을 환영, 찬성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교섭이 진전되자 학생들은 시위에서 반미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6.12. 서울법대생 200여 명은 5월의 학원 내 투쟁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주장에 “한·미행협 체결에 있어서 호혜평등을 관철하라” 는 주장을 덧붙였다.

서울법대생들은 14일 다시 총회를 열어 한·일회담 조기타결 반대와 한·미행협에서의 미국측 성의를 추구하고 “민족주체성 확립” 과 “부정부패 일소” 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단식장에는 ‘제2의 굴욕 한·미행정협정 반대’ 등의 플래카드가 같이 걸려 있었다. 200시간 단식으로 이어지는 이 투쟁은 각 대학의 단식투쟁으로 파급되면서 한·일협정 조인반대투쟁의 정점을 이루었다.

18일 고대생 1천여 명과 서울상대 300여 명이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19일에는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시내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22일까지 정부 당국이 단식투쟁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울대 전체 학생이 공동행동으로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엿새째 단식을 계속하던 서울법대생 232명 외에 문리대생 63명과 상대생 320명, 사대생 20명이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한·일회담 정식조인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숭실대 외국어대 동국대 등 시내 12개 대학 학생들과 대광 숭실 양정 등 3개 고교생 도합 1만여 명은 교문을 나서 “매국외교 반대” 시위행진을 하였다.

정부는 21일의 대규모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21일 오후 5시를 기해 전국 경찰에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단식학생들의 수도 부쩍 늘어 22일 밤 현재 서울시내 10개 대학과 지방 3개 대학에서 약 800여 명이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했다.

단식 8일째에 접어든 서울법대생들은 158명이 졸도한 가운데 계속 단식투쟁을 전개했으며, 고려대 연세

대 중앙대 숭실대 동국대 외국어대 경희대 등에서 성토대회가 이어졌다. 서울시경은 6·21 데모학생 중 906명을 연행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394명을 즉심, 나머지를 훈방조치했다.

서울대가 전년보다 20일 정도 앞당겨 6월 20일 방학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21일 서울의 사립대학 총장들이 조선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조기방학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21,22일을 기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서울시내 58개 남자고교들도 시교육위원회의 긴급지시로 22일부터 2일 내지 5일간 일제히 휴교에 들어갔다.

한일협정이 정조인되는 날인 6월 22일 전국 대학에서는 성토대회와 시위가 전개되었으나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전면적 가두시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시경은 경찰전문학교생 150명을 포함한 경찰병력 약 4천 명을 동원해 각 지역에 배치하고 결사적으로 시위저지에 나섰다. 특히 이날 낮 12시 45분 트럭 12대 스리쿼터 5대에 분승한 약 300여 명의 무장군인 고대 시위대가 진출했던 안암동로터리에 출동해서 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건국대 명지대 숭실대 수도공대 가톨릭의대 서울대 서울사대 외대 수도의대 홍익대 한양대 등 각 대학에서도 조인반대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6월 22일 데모로 1,134명이 연행되어 이들 중 1명이 구속되었고 34명이 불구속입건되었다.

6.22. 전국적으로 맹렬하게 전개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절차 뿐이었다.

서울법대생들은 22일 오후 5시 한·일협정이 정식조인되자 단식 200시간의 기록을 남기고 자진해산했다. 이날 끝까지 남아있던 64명의 단식학생들은 중계방송을 통해 정식조인 진행상황을 들은 다음 64명 전원이 ‘민족주체성 확립’이라는 혈서를 쓰고 난 뒤 해산식을 가졌다.

▶한·일협정 정조인 무효화투쟁 (1965.6.23-1965.7.14.)

한·일협정 반대투쟁은 휴교조치가 취해지고 협정안이 정조인된 후에도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6.23. 이대, 숙대 등 여자대학과 성균관대 서강대 서라벌예대 가톨릭의대 경북대생들이 한·일협정 조인무효화와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였다. 24일에도 데모는 계속되었으며, 이대생들은 총학생회장 120여 명이 학생관에서 ‘비준반대’와 ‘정부의 교육포기정책 반대’를 내걸고 단식중이었다. 연대생 67명이 닷새째 단식중이었고, 그중 10여 명이 졸도했으며, 서강대생 200여 명과 경희대생 28명도 이날 도서관 앞에서 계속 단식중이었다. 25일도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4개 대학에서 140여 명이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외치며 단식을 계속하였고 총 41명이 졸도했다. 26일에도 연세대 이화여대 수도여사대 경기대 등 서울시내 4개 대학 160여 명의 학생들이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외치며 단식을 계속해 이중 50여 명이 졸도했고, 남고교생 400여 명과 승의여고생 500여 명도 성토대회를 가졌다. 28일에는 연세대 외국어대 경기공전, 고려대 등이 한·일협정 비준을 반대하면서 각각 성토대회를 열었고, 연세대 2천여 명도 가두 시위를 벌였다. 24일부터 28일까지 단식투쟁을 전개한 이대생 45명은 28일 오전 단식투쟁을 끝내면서 성명서와 일본 대학생 및 세계 언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워싱턴 데일리 뉴스』지 편집국장에게 보내는 글 등을 채택했다. 29일에는 학기말 시험을 위해 등교한 고대생 3천여 명의 시위가 있었으며, 7월 1일 서울에서는 연대 고대 건대 감리교신학대생 등이 일단 단식을 끝냈으나 동덕여대 가톨릭의대생 일부는 단식을 계속하였다. 같은 날 오전에는 상명여고생 500여 명이 “한·일협정 비준반대”, “일제품은 아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로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하여 연좌데모를 벌였다. 7월 3일 오전에는 서울의대생과 성북, 동북 두 고교생들이 성토대회를 열고 한때 데모를 벌였고, 이화여고생들은 교내에서 각성회를 열었다. 서울의대생 200여 명도 한·일협정 비준반대 성토대회를 마친 뒤 가운을 입고 150여 명이 시위를 하였다. 7월 7일 대구대생 300여 명이 빗속에서 데모를 강행했으며, 이대생들은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가두서명 결과 약 3만 명의 서명을 얻어 12일 오후 정성태 민중당 원내총무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을 냈다.

7월 14일 밤 8시 40분, 공화당이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하였다. 대학가가 ‘정치방학’으로 급박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일협정 비준반대 각 대학연합체(한비연)’가 조직되었다. 각 대학연합체는 7,8월의 비준국회 시기에 대학가에서는 유일하게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개학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투쟁을 재개시킬 준비를 하였다.

▶한일협정비준 무효화 투쟁 (1965.8.17.-1965.8.26.)

8월 17일 서울법대 학생회는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선언식을 가졌다. 다음날 18일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경희대를 필두로 경기대, 부산 동아대, 서울농대 등이 대대적인 시위에 돌입했다. 경희대는 8월 20일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시탑 앞에서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성토대회를 열었다. 2천여 명으로 늘어난 학생들은 ‘비준무효화 공식, 날치기+일당국회=1’, ‘일당국회 즉시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라’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데모에 돌입하였다. 경기대도 20일 오전 300여 명 학생들이 한·일협정 비준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일당국회에서의 한·일협정 통과 는 무효, 여야 국회의원은 총사퇴하고 재선거할 것,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벗어날 것 등 결의문을 채택 했다. 동아대도 20일 오전 2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일회담 비준무효데모를 전개했다. 학생들은 ‘민족 적 양심으로 매국국회를 해산하라’ 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가두로 나갔다가 경찰과 충돌하여 수명이 부상 당했다.

한·일협정 비준을 규탄하는 대학가의 열풍은 21일에도 계속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문리대·법대, 한양 대 동국대생 등 1,300여 명이 한·일협정 무효화를 외치며 데모에 돌입했다. 고대 연대생 등 2천여 명 도 매국문서, 매국국회, 매국정권 화형식 및 성토대회를 열었다.

8월 23일 대규모 학생시위가 재개되었다. 개학과 더불어 일기 시작한 한·일협정 비준을 규탄하는 대학 가의 시위열풍은 당국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 대학과 고교생에게까지 파급되어 전국 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날 서울시내의 연세대(2천여 명), 외국어대(500여 명), 동국대(2천여 명), 경희 대(600여 명), 한양대(2천여 명), 중앙대(2천여 명), 숭실대(500여 명), 서울사대(40여 명) 및 지방의 전북대(1천여 명), 제주대(100여 명), 충남대와 오산고교생(300여 명) 등 1만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시 위에 참가했는데, 이들은 “한·일협정 비준을 무효화하라”, “일당국회 해산하고 총선거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건국대, 명지대 및 전남대생 1천여 명도 성토대회를 열었다. 연대는 2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 낮 12시 15분경 방독면에 집중한 무장군인 400 여 명이 20여 대의 지프와 트럭에 분승, 서대문로터리와 신촌로터리 일대를 돌며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

시위가 거세게 계속되자 8월 23일 내무부는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와 조국수호국민협의 회, 비준반대 서명교수단, 무궁화애호총연합회, 6·3동지회, 한국학사청년연맹, 초급대학학생연합회, 범태평양동지회 등 8개 단체를 등록되지 않은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공보부, 문교부 등 관계부처에 의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8월 23일 서울법대생 300여 명은 동교 도서관에서 긴급학생총회를 열고 제적된 학생회장 장명봉을 복직 시킬 때까지 24일부터 무기명휴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8월 24일 서울법대생들의 명휴와 함께 “한·일 협정 비준무효화” 를 외치는 대학생 시위는 계속 전개되었다. 기말시험을 거부한 서울대생 2,500여 명과 연대 고대 중앙대생 각각 2천여 명과 단국대(1천여 명), 외국어대(200여 명), 명지대(500여 명), 숭실 대(3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은 학교별로 성토대회를 가진 뒤, 거리로 나와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서울대 고대 연대생들이 시위를 벌이는 거리에는 여러 대의 트럭에 분승한 방독면을 쓰고 무장한 군인 들이 거리를 누비며 ‘무력 시위’ 를 하여 이목을 끌었다. 24일의 시위로 500여 명이 연행되고 24명이 구 속되었다.

시위가 점차 확대되자 8월 24일 밤 박영수 치안국장은 학생데모가 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호와 플래카드 가 반미·반국가적인 경향을 띠고 복괴의 주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호와 플래카드 작성자 및 그 배후자를 색출하여 반공법 및 내란 선동죄로 구속 엄단하라고 관할 경찰 서에 지시했다.

8월 25 낮 5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고대 교정에 침입하여 강의실, 신문사, 도서관, 식당 등에 난입하 여 야전용 곡괭이 자루로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도서관 열람실과 강의실, 여학생회관 안에까지 최루 탄을 쏘고, 학생들을 군화로 짓밟고 곡괭이 자루로 마구 구타하여 수십 명의 학생들을 연행하였다. 이 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학생데모의 뿌리를 뽑겠다” 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박대통령의 학생데모에 대한 강경책 천명에도 불구하고 무장 군인의 캠퍼스 난입으로 격앙된 고대생들을 비롯한 서울시내 각 대학생들은 26일 아침 다시 거리로 밀려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경비사 병력 뿐 아니라 서울 근교의 예비사단, 야전군 소속의 1개사단 병력을 동원하여 연 6일째 계속되는 학생데모에 대처하였다. 정부와 학생들의 극한 대치 속에 서울 일원은 ‘선포 없는 계엄’ 과 같은 상황에 빠졌다. 군 당국은 “앞으로 비상계엄령은 선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면서 “위수령만으로 비상사태를 진압할 것이며 데모는 25일부터 군이 맡아 진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A6

A7

A8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의장의 성명(1965.5.7.)’ 과, ‘한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위주최 한일미국조인규탄민중성토대회 결의문(1965.7.6.)’ 은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월간중앙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209쪽.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39~142쪽/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42~144쪽; 「학생 데모 구호에 반국가적 경향 내란죄 적용」 (『동아일보』 1965.8.25); 「박대통령 시국수습 특별담화」 (『서울신문』 1965.8.26.)

A9 문교부는 1965.8.4. 학생데모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경책의 일환으로 “데모주동학생과 이른바 정치교수징계에 협조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고대와 연대에 대해 9월 6일부터 무기휴업령을 내렸다(「고대 연대에 무기휴업령」 『동아일보』 1965.9.4).

A8

A9 시위 대학생 김중배 사망사건

A1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법 개악책동 저지투쟁

A2 1965.2.28-1965. 3. 10

A3 1965.2.28. 대한상공회의소 ‘종합경제시책’ 건의안 채택/1965.3.10. 전국노동절기념대회에서 상공회의소의 개악움직임 성토·규탄.

A4 1963년 4월과 12월 2차에 걸친 노동법 개악 이후 1965년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법 개악움직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규탄발생.

A5 1965년 2월 28일 대한상의 정기의원 총회는 소위 ‘종합경제시책’ 이라는 제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명목상의 종합경제시책일 뿐 사실상 노동법을 개악하여 근로자의 착취와 희생 위에 기업의 이윤을 축적하려는 전근대적인 책동으로 일관한 내용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현 산별조직을 해체하여 기업별로 약화할 것 ② 여성근로자 1개월에 1일의 생리 유급휴가를 없앨 것 ③ 산전후 유급휴가 60일을 40일로 줄일 것 ④ 현행 일주일에 60시간 이내인 근로시간을 72시간으로 연장하고 시간외 수당을 현행 절반인 25%로 할 것 ⑤ 종업원 상시 고용 50인 이하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말 것 ⑥ 노동법위반업체에 대한 검찰의 강권발동을 하지 말 것 ⑦ 수출산업에 있어 상대국의 신용장이 도달하면 쟁의를 보류할 것 ⑧ 노동쟁의의 중재신청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노총 및 각 산별 노조는 즉시 그 부당함을 규탄하고 3월 10일 노동절대회를 정점으로 일대 규탄 성토하여 대한상의의 노동법개악움직임을 저지시켰다.

A6

A7 대한상공회의소

A8 1965년 ‘전국노동절기념대회’ 성토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29-730쪽, 부록, 3-50/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620쪽.

A9

A1 시위 대학생 김중배 사망사건

A2 1965.4.13.-4.15.

A3 1965.4.13. 시위에 참가했던 동국대 김중배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

A4

A5 4.13시위에 참가했다 부상당한 동국대 김중배가 외부에서 가해진 타박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상으로 이틀 후 사망하였다. 이에 16일 동국대생들은 김중배 군 위령제를 지낸 후 2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내에는 수경사 병력 2개 대대가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였다.

한일협정가조인 반대투쟁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동국대생 김중배 사망사건으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자, 문교부는 16일 오후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정상수업이 어려운 서울시내 고교 이상의 학교는 4월말까지 학교 책임자의 재량으로 임시휴교토록 하라”고 각 대학과 서울시 교육위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월 15일 이후 단식농성에 돌입한 서울법대가 16일 휴강한 데 이어,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임시휴교에 들어간 학교는 동국대(16~30), 서울사대(17~22), 서울법대(16~22), 연세대(19일 하루) 등이었고, 서울시내 65개 고등학교도 휴교에 들어갔다.

A6

A7

A8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32~133쪽.

A9

A1 언론계침투간첩사건

A2 1965.4.8.-10.2.

A3 1965.4.8 중앙정보부, 『경향신문』의 이형백 체육부장 등 간첩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5.8 이준구 사장 구속

A4

A5 전 경향신문사 체육부장 이형백(李馨白) 등 10명이 관련된 이 사건은 북한의 남파간첩인 이문백(이형백의 동생)이 그의 형 이형백을 통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무전간첩단사건으로도 불린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송치된 이들 10명의 피고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이 적용되어 최고 사형에서 집행유예까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4부(김창규 부장판사 주심)는 1965.10.2. 송택봉, 유익재 두 피고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이형백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홍수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 나머지 6명의 피고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A6

A7

A8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66』, 103쪽.

A9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사건 :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와 경향신문 업무부국장 홍화수는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4부(김창규 부장판사 주심)는 1965.11.6. 두 피고에게 반공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죄 등을 적용, 이준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홍화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1964년 1월 중순 대남간첩 이문백의 하부공작원 이형백(당시 경향신문체육부장)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말을 하자 이준구가 이에 동조했고, 이준구·홍화수가 북한의 정보공작원인 윤우현이 동사 동경지부장에 취임, 동신문 배포에 있어 국외공산계열인 조총련본부에 보내겠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공산체제나 계열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준구는 1963년 12월 하순 삼호무역사장 정재설로부터 연말찬조금으로 기부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횡령했고, 그 밖에도 동사사옥 증축찬조금 25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A1 「분지」의 작가 남정현 반공법 위반 사건

A2 1965.7.9.-1967.6.28

A3

A4 1965년 여름은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국내 정세가 소연한 가운데 문인들도 비준반대의 성명서를 발표

하는 등 지식인들이 대사회적 발언이 제고되고 있었다. 이 해 7.9. 한국문인협회가 주축이 된 문인 82명은 5개항으로 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조국의 비운과 민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이 매국 망국적인 악조건의 완전 파기를 위하여 전체 국민의 단결과 결기를 호소하며, 역사의 대도와 민족의 정론에 입각하여 민족의 자주 자존과 국가의 영원한 주권과 국익의 옹호를 위해서 투쟁하는 문화전선의 대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하여, 공화당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 날 남정현은 4개월 전 『현대문학』 3월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분지」 때문에 구속되었다. 작품이 발표되었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작품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조국통일』 5월 8일자에 전재되자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었다.

A5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은 남정현은 며칠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공안부로 송치되었다. 남씨에게 적용한 반공법 4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남정현은 검찰에 송치되어 보름만에 구속적부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서울지검 공안부 김태현(金台鉉) 부장검사는 1년 여의 조사 끝에 남씨를 반공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했다. 남정현의 필화사건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1967.6.28. 1심 선고공판에 의해 사법적으로 처리가 끝났다. 이 날 공판에서 담당 박두환(朴斗換)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설 「분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피고인의 염원을 소설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작품을 집필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 가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작품을 읽은 독자 중 많은 사람에게 반미적·반정부적 감동을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 계급의식을 고취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에 처할 것이나 정상을 참작,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결하였다.

남정현의 이 작품을 둘러싸고 많은 작가와 법조인들이 재판정에 특별변호인으로 나와 변론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변호사 한승헌(韓勝憲)·이항녕(李恒寧), 문학평론가 이어령(李御寧), 소설가 안수길(安壽吉), 문학평론가 백낙청(白樂晴) 등은 “작가가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불온한 동기가 없이도 특정한 법의 저촉을 받게 될 경우, 작가의 창작 의욕은 부지불식간에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고 법정에서 작가 남정현을 변호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북한의 선전매체에 전재된 것과 관련하여 지식인 사이에서는 “만약 북한의 신문, 잡지에 실리게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우리 작가들의 운명은 북한이 쥐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A6 김태현(부장검사), 박두환(판사), 한승헌(변호사), 이항녕(변호사), 이어령(문학평론가), 안수길(소설가), 백낙청(문학평론가)

A7 관계 단체 : 여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발생한 사건의 경우 관계 인물과 함께 관계 단체도 밝혀준다

A8 소설 「분지」의 줄거리 요약 : “..... 홍길동의 비법과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10대손 홍만수는 어머니와 여동생 분이와 함께 8·15 해방을 맞이한다. 어느날 어머니는 밤새 만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무슨 환영대회에 나갔다가 미군에게 강간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미군을 저주하면서 미쳐 죽는다. 어머니를 여윈 만수와 분이는 독립투사인 아버지를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자 가난한 외가에 의탁,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6·25를 만나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 채 군에 입대한 뒤 몇 년만에 고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수 앞에는 결식과 방황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굶주림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만수는 어느날 우연히 동생 분이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분이는 미군 스피드 상사의 정부 노릇을 하면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만수는 분이를 붙들고 어머니를 부르며 목놓아 울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는 분이 집에 얹혀 살면서 미군물품 장사로 연명한다. 스피드 상사는 밤마다 분이를 미국에 있는 본처에 비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으로 못견디게 학대한다. 그런데 어느날 마침 스피드 상사의 부인인 비취가 미국으로부터 남편을 찾아왔다. 만수는 조국의 산하를 안내하겠다고 비취 부인을 향미산으로 유인하여 겁탈해 버린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미국의 펜타곤 당국은 크게 격분하여 미군 부인을 강간한 한국인 홍만수를 주살키 위하여 3억 불을 들여 만든 1만

여의 각종 포문과 미사일, 그리고 전 미군 중에서도 가장 정예사단을 투입, 만수가 숨어 있는 향미산을 포위한다. 그러나 10대조 홍길동의 비방과 정신을 이어받은 홍만수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예수의 기적 밖에 모르는 이방인들에 홍길동의 엄청난 기적을 재연하여 그들의 심령을 뿌리째 흔들어 놓겠다면서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다짐한다……”

; 서울지검 공안부 김태현 부장검사 공소장 요지 : “……대한민국이 마치 미국의 식민통치에 예속되어 주한미군들은 마치 갖은 야만적인 학살과 만행 등을 자행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무한히 위협하며 몇몇 고관·예속자본가 등과 결탁하여 국민 대중들은 기아선상에서 연명만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극심한 것을 말할 자유도 없는 이 나라에서는 이런 민중을 버리고 오직 자본가·정치자금 제공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행정을 하고 있으며, 국민 대중들은 물론 국회의원마저 미국에 아부, 예속되고 약탈의 수단인 원조로써 경제의 명맥을 풀어주고 미국의 예속식민지, 군사기지로써 약탈과 착취,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자들은 미국의 가혹한 강압과 보복을 받으면서도 굴복과 사멸함이 없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다는 양, 남한의 현실을 왜곡, 허위선전하며, 빈민 대중에게 계급 및 반정부 의식을 부식 조정하고 북괴의 6·25 남침을 은폐하고 군복무를 모독하여 반공의식을 헤이케 하는 동시, 반미감정을 조성·격화시켜 반미사상을 고취하여 한미유대를 이간함을 표현하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단편소설 「분지」라는 제목의 작품을 창작하여 1965.2.20. 현대문학사에서 동사 기자 김수명(金洙鳴)에게 창작원고를 수교하여 월간잡지 3월호 『현대문학』 지에 게재, 공표케 하여 북괴의 대남적화전전략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

-변호사 한승현의 변론 요지 : “첫째…… 사물에 대한 과도한 편견으로 인하여 매사를 수상한 용공으로 착색하고, 또 용공이라고 해야만 반공이요, 그런 반공이 애국행위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착각하는 일은 용납될 바가 아니라……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작품이 실정법 질서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는 본건의 기소죄목인 반공법의 차원에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문제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학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운위될 수 있지만 투르게네프의 말을 빌자면 그것은 하나의 개조요, 저항이요, 고발이요, 갈망이며 연소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작품을 말할 때 현실을 렌즈에 담아 그대로 촬영한 것인 양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작품에 있어서 스토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창작상의 기호요, 전개방법이므로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작품이 내포하는 문학성, 사상성, 또는 문학정신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독후(讀後)의 여과·침전 단계를 거쳐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변호사 이항녕의 변론 요지 : “……「분지」는 현실의 부조리,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의 자태, 힘과 윤리의 불균형, 한국군병과 미국군병과의 교류상황, 한국민의 주체의식 등을 우화적, 상징적, 풍자적 수법으로 묘사한 것이므로, 만약 이 작품에 반공법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작가들의 문학활동이 진지하지 못하고 도색(桃色)에 흐를 위험이 있다.” (김삼웅, 『한국필화사』, 동광출판사, 1987, 162~166 쪽)

A9

A1 한일협정비준 반대 성명

A2 1965.6.26-1965.7.14

A3

A4 1964년부터 1965년에 걸친 학생들의 끈질긴 회담 반대투쟁은 국회비준이라는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지식인들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A5 6월 25일 이대 교수단은 3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6.23 시위 당시 경찰의 행위를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탄하는 대정부 항의문을 채택했다. 교수들은 이 항의문을 26일 정일권 국무총리 및 양찬우 내무장관에게 전달했다. 26일 오후 연대 교수단도 6.21-22. 학생 시위에 대한 경찰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는 대정부 항의문을 양찬우 내무장관과 윤천주 문교장관에게 보냈다.

이러한 교수단 성명은 곧 각계로 확산되어 7월 1일에는 대한교련이 학생시위에 대한 경찰의 저지방법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유린하여 민주경찰의 기본자세가 아니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한경직, 김재준, 강원룡, 간신명, 한명우 등 기독교 100여 명의 목사가 영락교회에서 한·일회담 비준반대 성토회를 갖고, 한·일협정에 관한 국민의 애국적 의사표시를 권력으로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7월 4일, 군산과 대전의 기독교회 신도 800여 명의 ‘한·일협정 비준반대 구국기도회’에 이어 5일에는 서울시내 기독교회연합회의 1천여 신도가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7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2천여 교회 약 50만 명의 신도들이 8일부터 10일까지 구국금식기도회를 가졌고, 7월 17일에는 유교와 불교 신도 등 100여 명이 국회의장 앞으로 비준반대 탄원을 했다. 기독교계와 불교, 유교 등 종교계의 회담 반대운동은 7월 14일 국회의 비준동의안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성명서, 연합기도회, 비준반대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월 3일 한·일협정 비준반대 학생데모 저지에 있어 경찰이 학교 안에 모인 여학생에게 최루탄을 발사하여 수십 명의 중경상자를 내고 취재기자를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탈선 경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상사 재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7월 9일 예술원장을 비롯한 문인들도 재경문인 82명의 이름으로 한·일회담의 즉각 파기를 주장했으며, 같은 날 역사학회 등 3개 역사학 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7월 12일 재경 대학교수단 354명은 서울의대 강당에서 회담 반대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들은 5개 항목을 들어 한·일회담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우선 기본조약은 일본 제국주의를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 주권의 약화 및 제반 협정의 불평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굴욕적 전제를 설정했다고 지적하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본 자본의 한국경제 제패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고, 어업협정은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국어업을 일본어업 자본에 예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7월 14일 예비역 장성 11명의 회담 반대성명이 있었다. 여기에는 전 외무장관인 예비역 중장 김홍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전국방장관 박병권, 전 최고위원 박원빈, 전 재무장관 백선진, 전 내각수반 송요찬, 전 국방장관 손원일, 전 법무장관 이호, 전 공군참모총장 장덕창, 전 치안국장 조홍만, 전 육군참모총장 최경록 등이 서명하였다.

이렇듯 비준반대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7월 14일 밤, 공화당은 정부가 제출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전격 발의시켰다.

A6

A7 역사학회, 재경 문인, 재야 혁신계, 대학교수단, 예비역 장성, 조국수호국민협의회

A8 ‘재경대학교수단 한·일협정비준반대 선언문(1965.7.12.)’은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월간중앙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210~211쪽 ;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45~146쪽.

A9

A1 무장군인 학원난입사건과 학원방위단 결성

A2 1965.8.26.-8.27.

A3

A4

A5 위수령 발동 후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 연대와 고대의 무장군인 난입사건이었다. 8월 26일 오후 2시 15분경 6대의 군 트럭과 스리쿼터에 분승한 2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연대 정문에 몰려와 그중 50여 명이 학교 구내로 몰려들어가고, 150여 명은 교문 근처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구경하던 시민과 학생들을 마구 연행하였다. M1소총에 대검을 꽂고 학교 구내에 들어간 50여 명의 무장군인들은 교실과 교정에 있던 학생들이 뒷산으로 달아나자 학교에서 물러났다.

연대에 이어 고대에도 무장군인이 난입했다. 고대생 1천여 명은 위수령 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월

26일 2시 반쯤에 교문을 뛰쳐나와 안암동 로터리까지 나갔는데, 300여 명의 헌병들이 최루탄을 쏘는 바람에 쫓겨 일단 교문 안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3시경 10여 대의 군용차에 분승한 2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25일에 이어 또다시 고대 구내에 들어와 투석한 학생 수십 명을 연행했다.

이러한 군인의 학원침입에 분개한 고대생 1천여 명은 27일 오전 ‘학원방위 학생총궐기대회’를 열어 이를 규탄하고 ‘학원방위단’을 결성하여 “학원을 분쇄한 군은 즉시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성토했다. 8월 29일 서울대생 400여 명도 교정에서 ‘전서울대학 학원방위단’을 결성하였다. 학생들은 “정부가 나치나 파시스트 정권하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던 학원공간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휴교조치엔 구국등교로, 괴뢰총장 임명에는 불승인으로 맞설 것임을 고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학생들은 “학원을 분쇄한 군은 즉시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는 등의 6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8월 27일 부장군인 난동사건에 대해 김홍일 등 예비역 장성 11명은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조국 수호의 간성인 군은 지금의 비상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에서 중립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날 호소문에 서명한 예비역 장성은 김홍일 최경록 박병권 송요찬 손원일 장덕찬 김재춘 백선진 이호 조홍만 박원빈 등이었다. 이대생 4천여 명, 성대생 1천여 명과 연대생 2천여 명도 각각 교내에서 성토회를 열어 무장군인 난입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규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시내 시위 주동학생 12명을 제적하고, 28명을 무기정학에, 4명을 근신 처분에 처했다. 이로써 데모주동 혐의로 징계 처분된 학생은 60여 명에 달했고, 구속학생은 71명이었으며, 제적학생은 32명이었다. 8월 31일 서울중부서는 동국대 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권석충(정외과 3학년)을 반공법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는데, 데모학생 중 반공법 위반혐의로 정식 구속되기는 권석충이 처음이었다.

A6

A7

A8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48~149쪽.

A9

A1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1차-3차)

A2 1964.5.26.-1966.2.

A3 1964. 6.3항쟁 당시의 김종태 등 내란사건, 1965년의 민비연 내란음모사건, 1967년의 민비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각기 명칭은 달랐지만, 사실상 6·3항쟁이라는 한가지 사안에 대한 상징적 정치재판이라고 하여 세간에서는 이를 각각 1,2,3차 민비연 사건이라고 불렀다. 민비연 사건의 핵심인물은 김종태 현승일 김도현 3인방으로 불렸다.

A4 ‘1차 민비연’ 사건은 6·3항쟁 당시의 ‘내란사건’으로 발표됐다. 6·3항쟁 후 당국은 이들 3인방에게 대해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죄 등으로 기소했고, 최고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번번이 목살됐다. 결국 내란죄 부분은 삭제되고 소요 및 집시법 위반 부분만 적용됐다. 결국 이들은 구속 140여 일 만인 1964.10.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받고 석방되었다. 계엄령이라는 초강경 수단이 동원된 6·3항쟁의 원인제공자 중 단 한명에게도 실형을 살게 하지 못하였고, 김종태 등을 인민혁명당이나 불꽃회와 연결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특히 인혁당 사건은 당초 중앙정보부에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지검公安부의 기소거부, 사표제출, 공소장 변경 등의 내용을 겪은 뒤 13명만 가벼운 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년 후인 1965년 9월 16일 발표된 민비연 사건은 ‘2차 민비연’ 사건으로, 사실상 6·3계엄령에 대한 재차 책임 추궁이었다.

A5 1965년 한일협정 비준반대 데모가 가열되자 9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원 11명을 반공법 위반 및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준 혐의로 김한림(한국기독교교장로회 여전도회 서울연합회총무)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김도현(문리대 4)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1964년 3.24시위 이후 계속하여 한·일협정 및 동 비준무효화 데모를 조종, 선동하

고, 구국학생동맹을 조직하여 8월 29일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극한적인 데모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64년 3.24 데모 이후 계속하여 한일협정 반대 및 비준무효화 데모를 조종 선동했다는 것이 ‘내란 부분의 혐의였다. 이들이 구국학생연맹을 조직하여 1965.8.29. 국치일에 고교생까지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감행,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무효를 결의하도록 모의했다는 시나리오였다.

반공법 위반 부분은 실제 사용되지 않은 ‘3.24 제2선언문’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문제된 구절은 ‘제국주의 근성이 발톱 끝까지 긴장된 일본 제국주의...’라는 부분이었다. 이는 「코민테른」에서 원용한 것으로서 ‘미 제국주의’라는 말을 ‘일본 제국주의’로 바꾼 것이었다. 이 선언문을 기초한 장본인인 김지하는 잡히지 않았다.

이러한 혐의로 이날 김중태 최혜성 박재일 이수용 송철원 정준성 박영남 이원범 박영호 우학령 장장순 등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민비연은 9월 16일 정부가 학교 당국에 “정치활동을 하는 학원 내 서클을 해체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이미 해체되었다. 이때 벌써 김중태, 김도현 등 5명의 학생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때의 혐의 내용은 ‘한일협정 비준을 계기로 419와 같은 사태를 빚어내어 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꾸미는 등 학생데모를 선동했다’는 것이었다.

1966년 2월 검찰(서울지검 박종연 검사)은 김중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들도 3-12년씩을 구형 받았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중태가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며 시련이었다”고 말한 대목은 언론에서도 재인용할 정도로 명언이 되기도 했다.

결국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은 무죄가 되었다. 서울형사지법 김용철 부장판사는 폭발물 사용음모 및 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김중태에게만 징역 2년, 나머지에게는 집행유예나 무죄를 내렸다. 더욱이 항소심에서는 6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부 백낙민 김진우 박충순 판사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물론 ‘증거가 없다’며 원심까지 파기해 버렸다.

‘폭발물’ 부분은 이들이 경찰의 데모 저지를 돌파하기 위해 소위 ‘몰로트브 칩테일’이라는 폭음탄을 제조할 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독당 김두환 의원이 연루된 소위 학원방위군 사건(한독당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모두 무죄 방면됨)과도 연결됐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 부분의 책임자였던 김도현과 김지하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3차 민비연사건’은 1967년 7월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한뭉음으로 취급되었다. 이 사건으로 민비연 회원 5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황성모는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 대학시절부터 사회과학을 전공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였다. 학구의 목적으로 공산주의 서적을 계속 탐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려면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되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자 망상하여 오던 끝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절호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하고 1950년 8월 초순 북괴 의용군에 자원 입대하여 북괴 보병 제19사단에 배속 분대장으로 남침작전에 가담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적극 감행하였다. 1950년 10월 11일경 장단 지구 전선에서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 중 1952년 8월경 인민군 입대를 속여 민간인이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석방되었다. 이후 서울 풍문여고 교사로 있다가 1957년 8월 서독 「홈볼트」재단의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 서독 뮌헨대학에 재학 중 1958년 3월 관광차 공산권인 동베를린시를 여행하고 서점에서 국제공산당 강령인 「공산당선언」(칼마르크스, 엥겔스 공저, 1955년도 동백림 「디즈」출판사 발행 독문판) 1권(증 제1호), 「예술과 과학에 관하여」(소련 공산당 철학과 「스타노프」저, 1955년도 동백림 「디즈」출판사 발행 독문판) 1권(증 제2호), 김일성의 자유와 자주독립을 위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명령 및 연설집(1955년도 동백림 「디즈」출판사 발행 독문판) 1권(증 제4호) 등을 구입하여 서독으로 귀환 후 이를 탐독하였다. 그는 서독에서 학업을 마치고 1960년 12월 초순 귀국 시 이를 반입하여 공산주의를 선전, 선동,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때 자료로 사용할 목적 하에 1967년 6월 18일까지 자택에 불법 은닉 보관하였

다. 1958년 3월 중순 동베를린으로부터 서베를린에 귀환하여 동베를린 주재 북괴 동독대사관원으로서 공작요원인 김종근(32세 가량)을 상면하여 김종근에게 ‘① 한국은 정치·경제가 부패하고 인간들이 타락되어 이 정권은 곧 망할 것이다. ②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난센스」 이상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북괴의 공작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③ 해방 이후 국토가 양단된 것은 비극이었으니 이번에는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한 지역에서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또 남북군대를 점차적으로 감축시키며 남북 동수로 치안 유지할 병력만을 남기고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 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는 김종근으로부터 ‘① 북한의 공업화는 자체 역량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② 북한에서는 소질만 있으면 전부 무료로 얼마든지 상급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북괴의 사회주의 공업화정책과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민족은 잘 살수 있다’ 는 내용의 선전 및 교양을 받은 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귀국하면 ‘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책에 따라 지식인, 학생층에 평화통일운동을 전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라. ② 서독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 명단과 성분을 파악하여 보고하라’ 는 지령을 받았다. 동시에 동베를린 소재 북한대사관 소재지 「메모」(약도)와 공작금조로 미화 1,200불을 수수함으로써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북괴 동백림 주재 대사관 대남 공작요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제공받았다. 그는 앞의 지령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① 1958년 3월 일자 미상 경 서독 「뮌헨」 대학 외국인 학생과에 예치된 유학생 「카드」에서 한국인 유학생 권영훈 외 약 30명의 명단 및 본적·주소·출신교·생년월일 등을 발췌하여 김종근에게 제보하였고 ② 1959년 9월 일자 미상 경 서독 「함부르크」 대학에 전학하여 동 대학 외국인 학생과에 비치된 유학생 「카드」에서 한국인 유학생 정신영 외 19명의 명단 및 본적·주소·출신교·생년월일 등을 발췌하여 전시 김종근에게 우송, 제보하였고 ③ 1960년 8월 일자 미상 경 서독 「뮌헨」 대학으로 다시 전학하여 동 대학 외국인 학생과에 비치된 외국인 학생 「카드」에서 동 대학 한국인 유학생 이모 외 5명의 명단과 본적 주소 출신교 생년월일 등을 발췌하여 전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김종근에게 우송 제보하는 등 3차에 걸쳐 지령사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고 ④ 1958년 7월 일자 미상 경 전시 김종근으로부터 우송되어온 (가)북괴 각 분야의 발전상을 선전한 화보 1권 (나)북한 김일성의 8·15 해방 기념에 대한 연설 전문 1권 (다)북괴 농업발전에 대한 책자 1권 등 계 3권의 적서를 받아서 자기 서가에 비치하여 이의 선전내용인 북괴의 건설상과 공업발전상을 「뮌헨」 대학 유학생들에게 화보를 보여주는 동시에 북괴는 기계류를 수요의 80% 이상 생산하고 있어 공업생산이 발달하였다고 북괴의 현실을 과대찬양 선전하여 반 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서독 유학시 동백림에서 구입 보관하였던 전시 공산서적을 번역하여 1965년 4월경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동아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동아문화」지에 1965년 4월 제3집(중 제3호)에 「근대화의 제 문제」(사회구조와 민주주의와의 관련에서)라 제한 논문을 기고였다. 이는 「공산당선언」 내용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노선에 적극 동조 찬양하는 내용으로 문안을 작성 발표하여 서울대학교 학생을 비롯한 기타 지식인들에게 선전함으로써 자신의 공작사명을 수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서독에서 북괴 간첩으로 활약하던 황성모는 1960년 12월 초 귀국하여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따라 평화통일론을 학생층 및 지식인에게 선전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라는 북괴 공작원 김종근의 지령에 의거 1962년 12월 모 정당에 침투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63년 9월 25일 학계와 정계에 구축된 합법적 토대를 이용 학생 및 지식층에 조직을 확대하여 가며 북괴가 주장하는 평화통일방안을 선전, 사회주의혁명기운을 조성하였다(소위 결정적 시기조성) 남한 내 ML주의 세력을 결집하여 4·19와 같은 민중봉기로 대한민국의 합헌정부를 전복하고 남한의 민주주의 제도를 변혁하고 북괴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따라 적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기도하고 이념적으로 공명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과4년 이모를 비롯하여 동 대학생 박모, 현모, 김모, 박모, 조모 등 20여 명을 규합하여 동 대학 내에 합법을 가장한 학생서클로 민족주의비교연구회라는 비합법단체를 창립하고 자신은 지도교수로서 첫 단계로 학생들에게 민족주의연구회를 표방하는 합법적인 간판을 표면에 내세우고 암암리에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 식민 반 보수 반 매관 반 외압 등 불온사상을 고취 선동함으로써 북괴가 지령하는 공작사명을 수행하고 투쟁의식을 조장하여 1963년 12월 초순경과 1964년 2월말일

경 등 전후 2:3차에 걸쳐서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08 소재 자가에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과 학생 김모와 회합하고 「민비」의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토의함에 있어 김모로부터 ' ① 서울상대 교수 박모의 견해인 굴욕적 한·일 회담은 반대하나 현 정권타도는 명분이 없다. ② 전 최고의원 유모의 견해인 5·16 군사혁명에 실패하여 혁명동지가 동지를 잡아먹는 부패정권으로 탈락되었으므로 제2의 군사혁명이 일어나면 혁신정권수립을 위하여 보수계의 박모, 혁신계의 서모, 학계의 박모, 재야정계의 유모 등을 지도층으로 혁신계 언론인 학계인사 등을 망라한 비상국민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③한양공대 전자공학과 학생 유모(전기 유모의 자)의 견해인 한·일 회담 반대 성토와 학생데모의 목적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탈취함에 있다 '는 등의 의견보고를 받은 후 (가) 현 정권의 한·일 회담은 매국적인 굴욕외교로서 민족반역행위이다. (나) 한·일 회담의 성공은 한·일 군사동맹을 성취시켜 군사 「파쇼」 정권인 현 정권이 강화되면 정권타도의 기회가 없어진다. (다) 한국의 지성인은 이 기회에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전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여 4·19 학생 「데모」와 같은 대대적인 「데모」와 난동을 전개하면 제3공화국을 완전 타도할 수 있다. (라) 현 정권이 타도되면 우선 혁신적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보적 보수계와 혁신계 재야계 등 각층에서 지도자를 선발하고 학계 언론계에서 중앙정계에 대량 등장시켜야한다고 주장하여 폭력수단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며 정권을 번복하고 혁신적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기로 김모와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민비를 모체로 서울시내 각 대학교 학생을 망라하여 한·일 회담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배후에서 1964년 3월 24일 5월 20일 6월 3일 등 불법 「데모」를 조종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국헌을 문란케 함으로써 북괴의 지령사항을 실천, 적을 이롭게 하였다. 기타 피의자 등은 1963년 12일자 미상 경부터 북괴 간첩인 황모 교수의 조종 하에 학생이란 신분을 이용 타인이 감지할 수 없는 합법적인 환경 하에서 학원 내에 조직을 확대하여 가며 남북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선전, 사회주의 혁명기운을 조성하였으며 1964년 3월 중순 서울대 문리대 내에서 피의자 등은 황을 중심으로 수차 회합하고 제1단계로 1964년 3월 24일 동 대학교 문리대 교정에서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 화형 집행식을 결행하고 학생 5백 여명을 동원하여 불법적 가두시위를 대대적으로 감행함으로써 그 파문이 전국학생시위를 유발케 하여 국가를 변란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1964년 5월 16일 오후 7시경 동 대학 문리대 출입문 월편 소재 「진아춘」중국요정 2층에서 각 대학 대표 21명이 회동, 김모의 사회 하에 ' ① 현 정부 및 공화당이 주창하는 민족주의는 가식적 허구의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말살하는 의미 하에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대규모적으로 거행키로 하는 한편 국회의사당까지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단행키로 합의 결정하고 동 준비책으로 김모는 연대성대·동대·건대 등 각 학교별로 최소한 1,000명의 학생 동원을 담당하고 현모는 각 신문사에 연락 대대적으로 학생 「데모」를 지지 선동토록 하는 공보활동과 한양대생 등 8,000명 동원을 담당하고, 김모는 5월 20일 선언문, 5월 20일 결의문, 5월 20일 성토문 등 문안작성을 담당하는 일방 당일 진행계획을 토의 결정 후 1964년 5월 20일 오후 2시경 전시 대학교정에서 약 2천명의 학생을 동원, 황소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결행하고 불법적 가두시위를 감행,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수백 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2백30여만원 상당의 공공기물을 손괴하는 등 전시 황모와 모의한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반 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였고 1964년 6월 3일 김모는 서울문리대 교정에서 구속학생식방 농성 연좌 단식 「데모」를 감행중인 동교 학생 앞에 나타나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로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투쟁하지 못함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극한 투쟁하라, 때는 왔다"고 선동함으로써 동일 오후 6시경 동 대학교정에서 단식농성 투쟁하던 학생을 선두로 시내 각 대학생 1,500여 명이 동원, 국회의사당과 중앙청을 향하여 현 정권타도 반보수 친진보, 반식민, 반외압 등의 적색구호를 외치며 불법 「데모」를 감행,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세종로 경찰관 파출소 경찰무기고 등을 파괴, 점거 방화하고 군관민 차량을 탈취, 파괴하는 등의 난동을 자행하여 약 450만원 상당의 공공물을 손괴하는 등 전시 황모와의 합의사항을 실행하여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동조하였으며. 1965년 7월 31일경 김모는 시내 용산구 후암동 27의 7 약혼녀 손모가에서 현 정권이 한·일 회담을 타결하고 8월 15일까지 국회비준을 강행코자하니 국회를 해산시켜서라도 이를 저지해야한다는 신념 하에 다른 피의자들과 폭음만 크게 나는 폭약을 10여 개 만들어서 동년 8월 6·7·8일경 약 8명의 정예학생을 선발 동원하여 중구 명동 소

재 국립극장 앞에 집합시키고 서울특별시청 앞까지 데모를 강행다가 경찰과 대치 중 일제히 사제폭약 10여 개를 투척 폭발케 하고 경찰저지선이 혼란상태에 빠지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국회를 점거, 해산시켜 한·일 조약비준을 파정케 하라는 등 합헌절차에 의하지 않은 폭력수단으로써 정권전복을 기도하고 북괴가 주장하는 사회주의체제하의 변혁을 감행할 것을 음모한 자라고 하였다. 이렇듯 인혁당 사건 관련자 황성모는 서독에 유학하였을 때 동백림(인용자)을 내왕하면서 북한 공작원 김종근과 접촉, 미화 1,200달러를 공작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귀국후에는 귀국후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이념적으로 공명하는 서울대 문리대생 이모, 박모, 현모, 김모, 박모, 조모 등 20여명을 규합하여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조직하고 자신은 이 회의 지도교수로 취임하였다. 또 황성모교수는 이 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혁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불온사상을 고취하고 64년 한일회담 때는 회원인 김모와 폭력수단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번복키로 합의하고 동년 3월 24일, 5월 20일, 6월 3일에 불법 데모를 감행하여 이적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이날 중앙정보부로부터 구속 송치된 지도교수 황성모(41)전 간부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씨 등 8명중 김학준(24)에 대해서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보안법(1조.2조)반공법(4조1항.2항)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① 8명의 피의자중 대부분이 제1차수사단계에서 「민비연」의 반국가단체성을 일부 시인하였으며 ② 지도교수인 황씨가 북괴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점 ③ 5.16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61년5월23일 북괴 동백림 주재 공작원 이원찬가 이 사건에 관련된 임석진에게 “우리과 관계있는 황씨의 검거여부를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 ④ 64년 65년도 「3.24」 「5.20」 등 내란에 가까운 대대적인 난동 「데모」 일어난 것은 모두가 「민비연」이 주동이 되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54명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민비연」이 반국가 단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수사 초점을 두기로 하였으나 구속된 자중에도 앞서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64연도의 서울대 민비연사건」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동일성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같은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피고들은 1967년 12월 14일 1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하였다. 황성모는 “현재의 심정은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고만 싶다. 법의 공정성을 믿고 있으나 하도 터무니없는 사건이므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 우리들이 기소된 것이 민족주의 비교연구를 한 결과 그 이론이 반국가적이라고 하다면 기쁘게 재판을 받겠으나 데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회참여로 기소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비」가 반국가단체라면 우리 나라에 우수한 수사관이 많은데 왜 2년 전에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독일의 국회방화사건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재판이 많은데 이러한 재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왔다. 우리가 재판을 받고있으나 이 재판자체가 언제 또 역사의 재판을 받을지 모른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윤리성을 닦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종률은 “법에 따라 흑백이 가려질 것이다. 「민비」의 구성 후 단 2번의 세미나를 연 것 이외에는 활동한 것이 없다. 세미나에는 「민비」회원뿐 아니라 다른 학생도 참가하였다.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을 하고있는데 이래도 「민비」가 불법단체인가? 문리대학회장이 데모에 참가하면 학생회도 불법단체로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법의 권위와 공정성을 믿고 민주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결백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종태는 “이 사건으로 4번째 교도소생활을 하게되어 중형이나 무죄에 관심을 갖지 않으나 한·일 회담을 반대하였다고 국가변란을 꾀한 역적으로 인정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고 하였다. 현승일은 “국가권력이 개인을 괴롭히려든다면 피할 도리가 없다.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가정해도 학생 때의 일인데 지금 와서 문제삼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고 하였고, 김도현은 “나는 「민비」회원이 아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묻지도 않고 수사기관의 기록만을 믿고 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였었다”고 하였다. 박지동은 “강의만 듣지 않고 폭넓은 공부를 하기 위해 민비에 들어간 것이 이 자리에 서게되었다.”고 하였으며, 박범진은 “국가기관의 정책적인 기소이다”이라고 규정하였다. 검찰은 구형 논고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단체가 국가보안법(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반공법(4조1항 후단)이 규정한 불법단체(예비적 공소사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논거로는 ①피고인들의 사상 및 성분이 공산계열 및 사회주의노선에

부합 또는 동조적이었다(국대안 반대·공산서적 탐독 등) ②3·24, 5·20, 6·3 데모를 주도, 마침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만큼 사회를 혼란시켜 복귀를 이롭게 하였다 ③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복귀의 방송 ④피고인들의 자백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민비의 조직목적이 국가변란 또는 복귀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하거나 복귀를 이롭게 하는데 있었다. 피고인들은 복귀노선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목적으로 민비연이란 위장학술단체를 조직, 6·3년동을 주도하였으니 지성인으로서 행한 순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황성모 피고인은 자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자학생들과 제휴, 본건 범행을 하였고 서독유학시 단독으로 간첩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범정에 추해도 동정할 여지없다. 특히 김종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죄의 질과 양이 상대적으로 중한데도 추호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권순영·김홍한·정희택·문인구·박주운·박한상·박승서)에서는 “사상범은 일반범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증거없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 복귀에 이기는 길이다. 이 사건은 정황증거만 있을 뿐 직접증거는 하나도 없다. 오판의 가장 큰 원인은 ①형식적으로만 증거능력이 있는 상황증거와 ②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경우다. 민비연이 반국가단체라면 조직의 비밀성, 회장과 회원간의 명령계통, 회원간의 공동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또 민비연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놓고도 조직행위만을 기소하고 가입·활동부문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반공법 4조1항을 적용,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이 조항은 헌법위반이다. 이 조항의 범죄구성요건이 확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없이 행동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하였다고 처벌한다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황성모 피고인의 경우 의용군에 끌려가고 자본론·공산당선언 등의 서적을 샀다는 것만으로 간첩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공산당의 이론을 모르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검찰측 증인 임석진과 조영수의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민비가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데모를 해서 복귀에 이롭게 하였다고 하지만 적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한 것이다. 한일 회담반대데모를 하지 않았다면 회담결과가 암담하였을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968년 4월 17일 판결 공판에서 7명 중 황성모·현승일·김도현등 3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황피고인에게 징역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A6 황성모(41. 서울대문리대교수), 이종률(26. 동아일보기자), 김종태(25. 신민당운영위원), 현승일(24.3대민비연회장), 김도현(23. 전민비연회원), 박지동(27. 동아일보기자. 5대회장), 박범진(26. 조선일보 기자. 초대총무부장). 유일하게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조봉계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A6

A7

A8 A8 [법적 한계-「민비연」 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중앙일보, 1966.3.5(3) / [민비연은 반국가단체]「검찰 공작단사건 수사 끝에 단정」, 중앙일보, 1967.7.25(7)/[동백림 거점 공작단사건 첫 공판], 중앙일보, 1967.11.9(1) / [삼엄한 법정안팎], 중앙일보, 1967.11.9 (7) / [민비연사건 첫공판], 중앙일보, 1967.11.16(1) / [공소기각 신청|「민비연」 사건 첫 공판정 안팎], 중앙일보, 1967-11-16(7) / [복귀 공작원은 동창생의 아들], 중앙일보, 1967.11.17(3) / [불법단체로 예비청구], 중앙일보, 1967.12.8(3) / [하오에 구형], 중앙일보, 1967.12.14(1) / [피고 최후진술], 중앙일보, 1967.12.15(3) / [황성모 피고에 무기], 중앙일보, 1967.12.15(1) / [합의중으로 개정연기|가족엔"염려 말라"], 중앙일보, 1967.12.16(7) / [황성모 3년·김종태에 2년], 중앙일보, 1967.12.16(1) / [전원에 항소], 중앙일보, 1967.12.18(3) / [민비연 사건관련 조 병장10년 구형], 중앙일보, 1967.12.21(7) / [황성모·김종태에 2년], 중앙일보, 1968.04.17(3) / [민비, 검찰상고기각], 중앙일보, 1968.7.30(7) / [황성모·김종태 씨도 출감], 중앙일보, 1969.7.9(3)/김정강, ‘불꽃회의 결성과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2001, 65-69쪽./「김종태·현승일·김도현의 내란죄 공소장(1964.6.16)」 『경향신문』 1964.6.18/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481~485쪽) / 신동

호 지음,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6, 135~143쪽 /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52~153쪽.

A9

A1 인민혁명당사건

A2 1964.8.14-1965.5.29

A3 1964.8.14.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사건' 발표 / 1964.8. 송치 47명을 서울시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김병리, 장원찬 검사 등이 공소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 거부 / 1964.9. 한옥신 검사는 47명 중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 재수사 결과 14명 공소 취하, 12명은 반공법 위반으로 공소 변경(양춘우는 추가 기소) / 1965.1.20. 1심 선고공판. 도예종 반공법 4조 위반 징역 3년, 양춘우 징역 2년 선고, 나머지 11명 전원 무죄 / 1965.5.29. 한옥신 검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부에서 선고 공판, 1심을 뒤엎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도예종 징역 3년, 양춘우·박현채·정도영·김영광·김한덕·박중기는 각 징역 1년, 이재문·전무배·김경희·김병태·임창순·김금수는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A4 1964년 3월 24일 한일 굴욕외교 반대시위로부터 63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정권은 중대한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5·16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박정희 정권은 밖으로부터 압력과 내부로부터 오는 항거의 갈등 속에서 정권을 보다 더 튼튼하게 다질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세칭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여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인혁당 사건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였다. 인민혁명당은 4·19 이후의 정치공간에서 혁신계 청년운동에 관여하였던 청년 세대들이 중심을 이룬 조직이었다. 이들은 5·16 이후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합법적인 조직을 통하여 혁명적인 운동 인사들을 결집시켜, 장기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군사 정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조작사건은 4·19 이후 혁신적인 청년운동 및 학생운동의 잔류세력을 제거하고 6.3항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A5 인민혁명당 사건의 발단은 학생운동의 배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였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의 배후조직 중의 하나였던 불꽃회 대표 김정강의 일기에서 인민혁명당의 도예종과의 관련성이 드러남으로써 단서가 주어졌다.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는 '인민혁명당'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정보부에서는 47명을 송치하였으나 서울시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김병금, 장원찬 검사가 공소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함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한국인권옹호협회에서는 인혁당사건의 무료변호를 맡기로 결정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막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피고인들에게 가해진 혹독한 고문내용을 폭로하였다. 그 뒤 한옥신 검사가 47명 중 26명만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하였으나 재수사 결과 14명이 공소 취하되고 나머지 12명은 반공법 위반으로 공소 변경되었다. 1965년 1월 20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재판장 김창규)는 피고 13명 중 도예종에게 반공법 4조를 적용해 징역 3년, 양춘우(추가기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도예종 징역 3년(구형 10년), 양춘우 징역 2년(구형 7년), 박현채 무죄(구형 5년), 정도영 무죄(구형 5년), 김영광 무죄(구형 7년), 김금수 무죄(구형 5년), 이재문 무죄(구형 3년), 임창순 무죄(구형 5년), 김병태 무죄(구형 3년), 김경희 무죄(구형 5년), 김무배 무죄(구형 3년), 박중기 무죄(구형 5년), 김한덕 무죄(구형 7년).

1965년 5월 29일 한옥신 검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부(정치원 부장판사)에서 선고공판이 열려 1심을 뒤엎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도예종 징역 3년, 양춘우·박현채·정도영·김영광·김한덕·박중기 징역 1년, 이재문·전무배·김경희·김병태·임창순·김금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중앙정보부의 발표문에 나타난 인민혁명당의 핵심인물 김영춘에 대해서는 엇갈린 내용. 처음 발표 때

는 김영춘에 대해 남파한 간첩이라고 발표. 그러나 김형욱은 김영춘이 김배영의 가명이라고 밝혔다.

◆ “인민혁명당 총책 김배영은 처음에 구속되었은 물적증거의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틈을 타서 우동읍과 같이 북한으로 월북한 사실이 발생하였다. 이 사실이 다소 신문에 알려지기는 했으나 나는 김배영이 머지 않아 다시 남하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김배영이 아니라 김영춘이란 가명으로 발표해 두고 예의 주목하고 있었다(김형욱, 1985 『김형욱회고록』 2, 129쪽). 문제는 50년대 중반 남파돼 4.19시기에 영남일보에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라는 통일론을 연재했던 김영춘이라는 인물이 실재 존재했고, 60년대 중반에 체포됐다는 것이다. 김영춘은 남로당계 인물로 해방직후 예천에서 교사로 활동했으며, 1960년대 중반 간첩죄로 체포되어 1970년 전후에 사형당했다고 한다(전 남로당원 이일재, 전 북한 노동당 조사부 부부장 신경완의 증언). 특히 김영춘의 글은 『영남일보』에서 주최한 통일문제 공모에 당선된 글로서, 당시 『영남일보』 편집국장 이영세 (5.16직후 체포되어 고문을 받아 석방된 후 곧 사망)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대구에서 활동하던 도예종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 게재를 결정했다고 한다. [김민희, 1993,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230쪽]. 4.19시기에 도예종과 김영춘이 서로 알고 있었던 셈이다. 또한 김형욱의 회고는 우동읍(우홍선)은 월북한 사실이 없고, 김배영은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인민혁명당사건이 발표나자 월북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6 도예종(무직), 박현채(한국농업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상대 강사), 정도영(합동통신사 조사부장), 김영광(원봉건설회사 서무과장), 김금수(운전업), 이재문(대구 매일신보 서울분실 기자), 임창순(태동고전연구소 주간), 김한득(목재상), 허 작(동래 동성초등학교 교원), 김병태(농협 자문위원, 농협 자문위원, 농협 대학 강사), 강무갑(무직), 이영석(한의사), 박상홍(서적상), 김동희(민중서관 사원), 오병철(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4), 김무배(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김영한(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 사원), 도예택(문호사 편집원), 박중기(한국여론사 취재부장), 서정복(서울대 철학과4), 송상진(건축재료상), 이종배(제일은행 행원), 김배균(회사원), 황건(서울대 법학과4), 하일민(서울대 대학원1), 박영섭(군인), 김정강(서울대 정치과3), 김정남(서울대 정치과4), 김중태(서울대 정치과4), 현승일(서울대 정치과4), 김도현(서울대 정치과4), 백승진(서울대 사학과2), 김승균(성대 동양철학과4), 정만진(서울대 법학과4), 이영호(명지고등학교 강사), 이병일(광업), 장상호(무직), 김득수(무직)

A7 불꽃회, 민족주의비교연구회, 김배영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A8 ◆중앙정보부의 발표 요약. 중앙정보부는 북괴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 일부 현역 언론인 및 대학교수, 학생 등 57명으로 조직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그중 41명을 검거했는데 나머지 16명도 전국에 수배 중에 있다. 김 정보부장 발표에 의하면 1962년 1월 서울 남대문구 부암동의 우동읍 집에서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던 전기 우와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 간사장이던 도예종 등이 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노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발족한 ‘인민혁명당’은 북괴 지령에 따라 한일회담반대 학생 데모를 조직적으로 일으키는 방향으로 개편, 강화하여 ‘3.24’ 학생 데모가 일어나자 ‘불꽃회’ 간부 등을 포섭,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 국가변란을 음모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당을 위시한 전국의 일반, 특수 당부조직에 착수하여 언론계 등 각계 각층 인사 50여명을 포섭, 전국의 군, 면당과 군소 직장 안에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왔음이 드러났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 ‘수사진전에 따라 불원 2차발표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부장은 ‘인민혁명당이 합법정당의 중진급도 포섭대상으로 하여 암약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아직은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발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의 사건분석

인민혁명당은 1961년 9월 11일-18일까지 평양대극장에서 개최한 북한노동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보고 중 4-19봉기를 당이 지향하는 목표로 이끌지 못한 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당을 갖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결론하고 남한인민들을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노동자 농민

들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데 기초를 두고 지하당조직을 위하여 특수사명을 띠고 남파된 김모의 지도하에 1962년 1월경 창당 발기하였는데 북한의 정강정책을 토대로 강령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구성분자의 대부분이 좌익전과자 및 혁신계열에서 활동하던 자들로서 조직망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시키고 위원장 김모가 동년 월북경 월북하여 북한에 보고하였고 동년 10월 월북중인 김모와 접선하고 자금조달차 간부 김배영을 월북시켜 북한과의 연계를 혁고히 하는 동시에 중앙상임위원회, 중앙당 대회, 중앙위원회 등 조직구성을 개편 완료하고 계속하여 서울시당을 비롯한 각시도당부 및 특수부 전국학생 지도부와 서울학생 지도부 등을 조직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따를 것과 대정부투쟁에 있어서는 학생궐기, 군동원, 인민봉기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과 영합, 공산통일정부를 수립함을 궁(438쪽)극의 목적으로 하고 중앙학생지도부로 하여금 서울문리대내의 민비연대표 박범진을 동교내 불꽃회대표 김정강, 동 민통련대표 박한수 등에게 학생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양으로 가장하고 배후에서 선동하여 3·24학생데모를 유발시켰고, 서울시내 각 대학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데모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극한투쟁으로 유도하여 6·3사태에 까지 발전시켰던 것이다.

피검된 34명 중 21명이 전 남로당이거나 혁신계열이었다. 당국의 강력한 반공정책과 국내대세의 압력으로 용공분자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어 표면상 동면기에 흡사하였으나 내심으로 반항심과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용공분자들이 정세의 변천에 따라 언제든지 조직재건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파세력확장에 그들의 잠재세력을 총 집결할 것이며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혁신계열은 청년학생층을 중요한 포섭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 본사건 관련자 구성으로도 충분히 판단되었다. (중앙정보부, 1973년 『북한대남공작사』 제2권, 439쪽)

◆전 노동당 중앙위 조사부 부부장 신경완의 증언

“인혁당과 이북의 노동당은 조직적 연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노동당에서 이남으로 밀과했던 김모 공작원이 인혁당과 개별적으로 관계했으나 제대로 조직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남로당의 구좌익출신과 인혁당의 연계는 틀림없다고 보인다. 다만 김모 공작원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혁당의 노선이나 입장을 볼 때 노동당의 노선이 올바르게 관철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것은 조직적 연계가 없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혁당 지도부 도예종 등이 독자적인 당을 만들면서 이북과의 연계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19후인 61년 초에 인혁당지도부는 부산대 조교수(=동아대 철학과 김상한 교수) 한사람을 월북시켜 노동당과의 연계를 시도한 적인 있다. 이때 이 조교수는 밀선이나 조총련을 통해 월북한 것이 아니라 이남의 대북특무기관인 HID방첩선을 타고 월북해 노동당 대남연락부의 의심을 샀다. 그를 통해 노동당과 연계하려 했던 인혁당의 접근에 대해 의심을 품은 노동당은 그를 산간지역의 협동농장으로 배치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64년에 인혁당사건이 터지자 그제서야 인혁당의 실체를 알게 되어 노동당 대남연락부가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음이 확인됐고 이북에서는 이를 매우 아쉬워했다. 그 뒤 월북했던 이 조교수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통일신문의 부주필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인혁당이 이북과 연계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조직적으로 완전히 독자적인 상태로 활동하다가 사건이 터져 당조직이 깨지게 됐던 것이다” (유영구, 「통일혁명당 내막(續)」 『월간중앙』 1992년 2월호, 559쪽)

◆장원찬(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혁당사건 담당검사로서 기소를 거부, 사표를 제출)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수사를 해도 정보부 발표대로 그들이 북쪽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피의자 모두가 ‘인혁당’이란 단어 자체를 전에 들어본 일이 없고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증도 전혀 없었다. 인혁당이란 실체가 있었다면 정강·정책이라든가 심증이 갈만한 무슨 종이쪽지라도 있어야 할텐데 답답했다...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해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다” (김재명, 「유신독재의 제물 인혁당사건」 『월간중앙』 1989년 2월호, 292-293쪽)

편집부 엮음, 『공안사건기록』, 세계, 1986, 9~16쪽 / 조희연, 『현대한국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105~106쪽.

A9 불꽃회사건, 김배영사건

A1 불꽃회사건

A2 1964.7.18.-1965.1.27

A3 1964. 7.6. 6.3항쟁 배후로 도예종과 김정강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수배/1964.07.18 楊燦宇내무장관, 학생데모 金正剛 주동으로 하는 <불꽃회> 조종했다고 발표/1965. 1. 23. 서울지검, 김정강에 5년, 김정남에 2년 구형/1965. 1. 27. ‘불꽃회’ 선고공판, 김정강에 징역2년 선고

A4 64년 6월 3일 오후 9시40분 제3공화국 첫 계엄령이 발표됐다. 다음날 일부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반짝시위에 그쳤다. 며칠후 계엄 당국은 학생데모가 공산주의의 세력의 사주를 받았으며 그 근거로 ‘반국가단체 불꽃회’를 발굴해 발표했다.

A5 7.6. 정부는 “학생 데모를 공산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 증거문건을 압수하고 도예종(都禮鍾·당시 41세·74년 2차인혁당사건으로 사형)과 김정강(金正剛·서울대 정치학과 3년)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소요 등의혐의로 각각 현상금 10만원씩 전국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10만원은 간첩 검거 현상금이였다. 7.18. 내무장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집결체인 ‘불꽃회’가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며 30여명의 이름을 계보도와 함께 발표했다. 이 조직의 핵으로 지목된 김정강 김정남 이태일은 물론 데모 현장에서 뿔 박재인 최동진 백승진 김현출 박영조 박삼옥 등에게까지 혐의가 두어졌다. 박종열 서정복 김승균 김시현 손병선 황건 심재택 박한수 조동일 정상렬 박범진 등 4·19세대까지 모조리 리스트에 올랐다.

불꽃회 사건이 터진 것은 김정강이 조직구상을 하면서 메모해 둔 노트가 경찰에 입수됐기 때문이었다. 불꽃회를 만든 김정강은 “불꽃회는 나와 김정남(金正男·61·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4년)이 64년 초에 만든 문리대 마르크스주의 연구 서클이었다. 멤버는 5~6명이였다. 법대 공대 상대 사범대에도 비슷한 조직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름은 각서클이 스스로 정하기로 했다. 당국에 검거되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뒤집어 씌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연세대와 고려대, 대구 부산 광주에도 준비되고 있었다. 역량이 갖춰지면 ‘반제학생동맹’과 같은 전국조직을 만들 생각이였다. 그러던 중 문리대의 불꽃회가 문제가 된 것이다. 불꽃회란 이름은 레닌이지하활동을 하면서 만든 ‘이스크라(불꽃)’라는 잡지에서 따왔다. ‘한줄기 불꽃이 러시아 대평원을 태우리라’는 그 책의 구절이 몹시 감동적이였다”라고 밝혔다.

불꽃회 수첩, 혹은 김정강 메모로 알려진 ‘증거문건’은 한 권의 노트였다. 김정강은 “계엄 후 도피 중 사돈의 팔촌쯤 되는 친척 집에 몇일묵었다. 갖고 다니던 노트를 그 집 벽장에 숨겼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분의 집까지 수색을 당했던 것이라. 검거된 후 계속버티니까 그 노트를 코 앞에 내밀더라. ‘간첩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불꽃회는 조직적인 반국가단체로 변해 검찰에 넘어갔다. 담당 검사도 ‘단체가 안 되는데...’하며 ‘나도 미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 불꽃회의 강령과 규약, 메모 등 10페이지 정도를 직접 썼다. 노트를 읽어봤던 사람은 김정남 뿐이였다. 강령에서 당시의 상황을 반(半)식민·반봉건 사회로 규정하고, ‘박정희 파쇼정권’을 당면한 적으로 삼았다. 조선반도(한반도)를 대표할 정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라고 인정했다. 규약은 조직 운영 방식과 입회·탈회 조건 등 4~5개 내용이였다. 나머지는 활동하면서 가졌던 인식, 선배와 동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 등을 메모해 놓은 것이였다. 몇몇 선배의 이름도 있었다. 그 중간에 ‘도예종씨와 모윌 모일 모시에 만났다’는 구절이 있었다. 도씨의 이름에 당국은 긴장했던 것 같다. 당시 공안당국은 혁신계였던 도씨를 최대의 반정부 위협인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김정남(전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은 “김정강 노트를 읽은 적이있었다. 강령은 ‘5·16 쿠데타 세력을 미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변견(番犬·잡지키는 개)’이란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모험심이 강했던 김정강씨가 자신의 머리 속에 있던 생각과 구상을 적어 놓은 것이였다. 발표된 연루자도 불꽃회와는 무관했으며, 이른바 계보도라는 것은 당시학생 시위를 주도하던 친구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노트에 북한 김일성을 인정하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였다. 결국 6·3의 명분을 제압하려는 당국에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노트를 보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김정남에게는 불고지 혐의가 씌어졌으나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노트 주인인 김정강은 북한에 대한 고

무찬양 혐의로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30여명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결국 ‘반국가단체’를 조직하려했다던 불꽃회 사건은 김정강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단죄하는 단독범행으로 마무리 됐다.

A6 김정강(金正剛;25세) : 불꽃회 창설자, 서울 문리대 정치과 3년, 신진회 회원, 민통련 대의원, 1963년 4월 수도경비사 군법회의에서 반국가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김정남(金正男;22세) : 불꽃회 조직책, 서울 문리대 정치과 4년, 민비련 회원

A7

A8 A8 조선일보, ‘내무부 학생데모 배후 진상발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의 집결체 「불꽃회」서 조종, 주동은 金正剛’, 1964. 7. 19/조선일보, ‘金正剛등 23명 구속적부심기각,’ 1964. 8. 1/조선일보, ‘김정강 등 구속기소’, 1964. 8. 1/조선일보, ‘불꽃회사건, 어제구형’ 1969. 1. 24/조선일보, ‘金正剛에 징역 2년, 불꽃회 사건선고’, 1969. 1. 28/조선일보, ‘불꽃회사건, 향소를 기각’, 1965. 5. 22/김정강, ‘불꽃회의 결성과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59-89쪽/도진순·정창현, ‘1950-70년대 한국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역사와현실』 4호, 1990, 305-339쪽
신동호 지음,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6, 89~92쪽 ; 세계 편집부, 『공안사건기록』, 「인민혁명당」사건(1964. 8, 14), 9~16쪽 ;

A9 6·3시위, 인혁당사건

A1남파간첩 金培榮사건

A2 1967.3.25-1967.11.21.

A3 67.11.21.오전 중앙정보부 김배영 등 무전간첩단 6명 체포 발표.

A4 4.19시기 통일민주청년동맹으로 활동했던 김배영은 5.16군사쿠데타 후 도예중 등과 함께 ‘인민혁명당’을 결성한 후 일본으로 밀항, 월북했다가 다시 남파됨.

A5 1967.11.21. 정부는 “북괴로부터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등 요인암살과 국가전복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전인민혁명당 간부 등을 포섭, 암약해 온 북괴 초급지도부책 김배영 등 무전간첩단 6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배영(35)은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괴 노동당 대남사업총국 연락부 대남무전간첩으로서 1962년 10월 인민혁명당원으로 활약하다 자금조달을 위해 밀항도일한 후 제일총총련 간부인 실형 金培俊과 접선, 1964년 12월 20일 북괴공작선으로 평양에 넘어가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 지하당을 조직하고 대통령 및 중앙정보부장 등 정부요인 암살, 국가를 전복하라는 지령을 받고 1967년 3월 25일 원산에서 배편으로 남하, 전부터 교제가 있던 윤수갑씨 집에 잠입, 윤을 데리고 함께 월북, 윤을 북괴노동당에 입당시켜 먼저 남파시키고, 자신은 1967년 9월 5일 공작금품을 다수 수령해 가지고 넘어와 윤의 집을 안전거점으로 삼고, 김복수, 이수암, 강무갑 등을 각각 하부망책으로 포섭하고 또다시 10월 20일 부산에 거주, 무직인 趙太衍을 포섭하려다 검거되었다.” 김배영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윤수갑은 무기형을 받고, 복역 중 90년대 석방됐다.

A6 윤수갑, 이수암, 김복수, 강무갑 등

A7

A8 송효순, 1978 『북괴도발 30년』 북한연구소, 448쪽/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1992 『분단의 절창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9쪽

A9 1차 인민혁명당사건

A1 전국 외국기관노조 파업

A2 1965.10.19-「」

A3 1965.10.19. 전국외국기관노조부산지부 임금인상, 보너스 연 2백% 지급,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부산시 노동당국에 쟁의 신고 / 1965.11.12. 사용자 신한건설 요구조건을 거부 / 1965.11.14. 오후 2시 KSC 노조 간부 150명, 경기도 의정부시 동방예식장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1965.11.15. 오전 7시를

기해 미 부산지구사령부(세칭 하야리아부대)청소하청업자인 신한건설(사장 박소근)을 상대로 무기한 파업돌입. 한국노총 11월 15일 상오 KSC지부 등 전국 6만 4천 여명의 연맹 산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체불노임지급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집계, 발표 / 1965.11.18. 오전 외국 기관 노동조합 KSC 지부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요구조건을 미군측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실력행사 날짜를 결정,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성명서를 발표.

A4 미군 산하 KSC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는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의 작전상 필요한 ①시탄약 및 보급품의 운반 ② 요새지의 구축 및 보수 ③ 도로 정비 및 보수 등을 임무로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해 징용되어 한국 노무사단을 형성, 미군의 잡역을 도왔다. 그러나 휴전과 더불어 1955년 3월 국회결의에 따라 전시 근로 동원법은 해제되었지만 주한미군의 잡역을 돕기 위해 KSC는 해제되지 않았다. 이들의 신분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측은 준군사단체라고 규정, 지난 1965년 2월5일 외국기관노조 KSC 지부로 발족된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았다. 이 한국노무단은 101 노무단이란 명칭으로 국방부에서 마련한 현역 대령이 단장으로 있는 아래 현역 영관급 장교가 약7명이 있고, 각 중대로 편성과 주·문산·법원리 등지에 2천명, 동두천에 7백명, 의정부에 1천5백명, 서울 2백명, 장호원 1백명, 회덕 1백50명, 왜관 2백명, 평택 1백7명, 김포 2백명의 분포로 약5천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장은 86명이 되는데 이들은 현역 중위 비슷한 KSC의 계급장을 달고 1백 여명의 하사관과 함께 노동자들을 통제한다. 노동자의 봉급은 초심자가, 4천원, 6개월 후면 4천 2백원, 9개월 후면 4천 9백원을 받으며 작업복을 지급 받고 [퀵시트]에서 합숙시키며 대만미의 식사를 제공받는다.

미8군 민사처에서 고용하는 노무자는 평균 임금이 월 1만 3천원인데 비해 KSC 노무자들은 준군사단체라는 구실로 포탄 등을 운반하는 위협한 잡역을 하면서도 온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어 1965년 2월 5일 노동조합을 결성, 대우개선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미군측은 준군사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방부에 통고, 국방부는 법무부에 유권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무부는 "제101 노무단에 소속된 예비역 장병 및 소속 대원은 현역 군인·군속 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신분으로 고용되어 미군 충당 자금으로 지불되는 임금을 목적으로 탄약과 보급품의 운반 등 노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의 향상을 위해 자립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고 KSC의 노동운동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KSC를 총 관리하는 서울 흥릉에 있는 US관리본부에서는 1965년 4월20일 노조지부장 조병기를 해고하는 한편 열성노조원 9명을 해고시키고 노조결성에 적극적이었던 60여명을 부당 전출시켰다. KSC 지부는 최후로 지난 6월 15일 쟁의를 제기하고 쟁의신고를 냈는데 노동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노동법을 적용하는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KSC지부 조합원 5천 여명은 미군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해줄 것을 제일 요구조건으로 걸고 [보너스]지급·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KSC가 창설된 이후 6백 86명이 전사하였으며 1백 43명이 사망, 40명이 순직, 1백41명이 실종되었다.

A5 전국외국기관노조부산지부는 1965년 11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미 부산지구사령부(세칭 하야리아부대)청소하청업자인 신한건설(사장 박소근)을 상대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 지부는 10월 19일 임금인상, 보너스 연 2백% 지급,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부산시 노동당국에 쟁의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냉각기간만료일인 11월 12일까지 사용주인 신한건설이 요구조건을 거부함으로써 이날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 미군 산하에서 한미행정협정 미체결로 단체협약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전국외국기관노조 KSC(한국노무단) 지부 노동자 5천여 명은 노조의 대표권 인정과 보너스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 오는 11월 25일까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최종 실력행사인 파업에 들어가기로 95.1%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였다. 11월 14일 오후 2시 KSC 노조 간부 1백 50여 명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방예식장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12, 13양일간 실시한 실력행사가 투표참가자 3천9백96명 중 95.1%가 파업에 찬성하였음을 밝히고 이와 같이 결의하였다. 이들은 (1) 노조의 대표권 인정 (2) 보너스 연 2백% 지급 (3) 퇴직금을 1959년부터 소급, 누진제로 지급할 것 (4) 해고된 지부장의 복직을 요구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11월 15일 상오 KSC지부 등 전국 6만 4천 여명의 연맹 산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체불노임지급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집계, 발표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미8군 당국은 15일 KSC의 노동쟁의 문제에 비공식적으로 언급, "현재로서는 공식논평을 가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하였다. 이 당국자는 KSC가 "순수한 민간단체인지 반군·반민단체인지 그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쟁의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평을 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11월 18일 오전 외국 기관 노동조합 KSC 지부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요구조건을 미군측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실행행사 날짜를 결정,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A6 박소근

A7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A8 『중앙일보』 1965.11.15(3) / 『중앙일보』 1965.11.17(3) / 『중앙일보』 1965.11.18(7)

A1 외국기관노조 파주지부 파업

A2 1966.2.5 - 1966.4.6.

A3 1966.2.5 외기노조 파주지부 문공분회 파업 / 1966.2.5.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미군이 강제진압 / 1966.2.8 전국외기노조 파주지부 문공분회 쟁의 협상안 타결 / 1966.2.10. 미8군의 일방적 노동조건 및 임금, 그리고 인사규정에 반대하여 전국 외기노조 13개 지부 노조원 2만 4천여 명의 파업가부투표 / 1966.2.10. 파업찬반투표 완료.조합원 2만3천8백68명 중 98%인 2만1천5백73명이 파업에 찬성/1966.4.6. 전국외기노조 산하 13개 지부 2만 5천 여명의 회원이 일제히 시한부 파업

A4 외기노조 2만 3천 8백 68명은 전국 미군부대에서 월 평균임금 1만3천원(「보너스」 포함)을 받고 각종 군사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나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미8군의 일방적인 인사규정과 노동조건 및 임금 아래 일해왔다. 그리하여 인사규정도 없이 몸종처럼 학대받아왔으며 KSC 노무자들은 준군사단체라는 굴레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여기에 미국인 감독관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부당한 해고가 발생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미국인 감독자의 해임 요구에 대한 보복 행위로 외기노조 파주지부 지부장 강주원을 무단 정직시킨 것에서 발생하였다. 외기노조 파주지부 문산공병분회 8백 여명은 미국 AAE(미국합동 건설주식회사)와 노사관계를 맺고 월 평균 임금 1만 2천 원을 받았다. 이들은 문산에 있는 미 시설 공병대 REU에 투입 내부장치, 전기시설, 파이프 수리, 난방 목공의 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AAE에서는 미국인 감독자 30여명을 두고 이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데 감독자 중 셋째는 비인도적인 감독자라고 지탄을 받아 종업원들은 외기노조 파주지부 문산공병분회를 통해 AAE 사장에게 8차에 걸쳐 감독관의 해고를 요구하였다. 노동자 김상목의 경우, 1965년 12월10일 상오10시 파견대 사무실 안에서 감기가 들어 작업하기 곤란하다고 말하자 셋째는 “45구경 권총으로 너의 두부를 쏘면 아프지도 않고 깨끗할 것 아냐”라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김형진 노병철 강효택 한판술의 경우에는 주차장 공사 중 경사면에 물이 많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작업을 다시 하게 하여 결단성 없는 지시에 작업지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시킬 뿐 아니라 머리 없는 병신이라는 등 욕설을 퍼부며 「배지」 번호를 적고 협박, 작업의욕을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셋째는 종업원들이 물탱크를 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더러운 논물을 먹었지만 우리는 소독된 물을 먹는 문화인이라”고 한국사람들을 모욕하였다. 이러한 셋째의 비행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에 대해 꾸준히 진정을 해왔으나 회사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1966년 2월 3일 오후 3시 AAE에서는 나종윤과 김철을 “미국 물품을 절취하여 팔아먹었다는 투서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직 통고하고, 외기 노조 파주지부장 강주원에 대해서는 “너의 부하가 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정직 통고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징계에 반발하여 외기노조 파주지부에서는 항의농성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의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미군 헌병이 구타하여 부상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5 1966년 2월 5일 오전 8시30분쯤 부당 해고에 반발, 농성 항의하려던 미군부대 종업원들이 완전 무장

한 미군 헌병들의 총검에 찔리고 개머리판에 맞아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경기도 무주군 임진면 문산리 미 합동건설회사(AAE) 에서 일어났다. 이날 전국 외기노조 파주지부 산하 1천 1백여 명의 노동자들은 2월 4일 아침 AAE회사 대표 마슈가 전국 외기노조 파주지부장 강주원(40) 등 3백에게 도둑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한 데 대하여 반발, AAE회사 영내에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는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시작,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8백 여명이 연좌시위를 벌이자 미군측에서는 “영내는 미국 땅이니까 영외에서 데모를 하라” 고 몰아냈으며 노동자들은 “이곳은 우리의 근무 장소이다. 근로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제시하러왔다” 고 맞서자 방독면까지 쓰고 완전 무장한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헌병 32명이 출동, 해산하라면서 최루탄 4발을 발사하였다. 노동자들이 해산을 거부하자미군 헌병들은 앞장섰던 김두운(39) 임용관(35) 김경화(31) 김진희(35) 최만봉(35) 박병모(45) 이순근(36) 도민현(31) 등 8명을 대검으로 찌르거나 개머리판으로 때려 그중 중상자 김진희는 머리와 등에 세 군데를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 외기노조 문산분회에서는 2월 4일 오후 6시 지부 운영회를소집,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인준을 지부에 통고, 2월 5일부터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사고 당시 한국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미군 영내에는 들어가지 못해 손을 쓰지 못하였다. 부상자들은 “질서정연하게 농성하려는데 가로막아 섰던 미군들이 갑자기 총칼로 찔렸다” 고 말하였다. 노동자들은 부대 영내에 집결 ① 지부장 등 3명의 종업원의 즉각적인 복직 ② 한국인 종업원에 대해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는 협서트를 당 회사 측에서 추방시킬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사태가 악화되자 AAE회사 사장 메이어드는 외기노조 파주지부 운영위원 13명과 협상을 시작하였고, 외기노조 파주지부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 제2보병사단·영선 부대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7일 상오부터 동정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 8군 공보과는 2월 5일 “3백 50명의 AAE회사 고용원들이 문산에 있는 제2사단 부대의 영내에서 시위를 하였다. 사단 공병참모 센터즈 중령이 협상을 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센터즈 중령은 시위자들에게 작업을 시작하든지 영외로 물러나든지 택일하라고 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자 헌병 1개소대가 착검한 총을 갖고 시위대를 둘러쌌다. 최루탄 3개가 터지고 총 옆구리로 시위대를 밀어내었다. 현장에 있었던 한 미군 대변인은 한사람의 목 오른쪽에 가벼운 상처가 금했다고 하였다” 고 발표하였다. 미군측은 2월 5일 하오 사태수습을 위한 긴급 노사회의회에서도 “영내에서의 데모를 금지하려고 한 것은 정당방위” 라며 피해보상을 거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국외국기관노조는1965년 9월부터 미 8군을 상대로 ① 퇴직금 누진제(10년에 28개월, 20년에 75개월)실시 ② 임금 평균 30% 인상과 하후상박제(下厚上薄制) 실시 ③ KSC 기본권보장 ④ 숙사종업원(「하우스 보이」 및 「하우스메이드」)의 임금인상과 인사규정 제정 ⑤ 가족수당지급 ⑥ 조합비 공제 ⑦ 조합임원 전임제 허용 등 쟁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서도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고 있었다.

2월 10일 밤 미8군의 일방적 노동조건 및 임금, 그리고 인사규정에 반대하여 전국 (외기노조) 13개 지부 노조원 2만 4천여 명은 2월 9일 오전 7시부터 각지구별로 일제히 파업가부투표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외기노조는 이미 1월 25일 쟁의신고를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에 제출하고 쟁의에 들어가 이날 부평, 의정부, 동두천 등 전국 13개 지부에서 파업가부투표를 실시한 것이었다. 외기노조원 2만 3천 8백 68명은 전국 미군부대에서 월 평균임금 1만3천원(「보너스」 포함)을 받고 각종 군사지원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미8군의 일방적인 인사규정과 노동조건 및 임금 아래 일해 왔었다. 이광조 외기노조 사무국장은 쟁의행위의 쟁점이 한·미 행정협정 미체결에 따른 미8군의 단체협약 거부에 있음을 밝혔다. 7개 요구조건 중의 하나인 「하우스보이」 및 「하우스메이드」는 지금까지 미8군 인사처의 인사규정에도 없이 몸종처럼 학대받아왔으며 KSC노무자들은 준 군사단체라는 올라미 아래 자유노무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혹사당해왔다. 이번 파업가부투표에는 외기노조 산하 KSC지부와 일본상사지부 등은 참가하지 않았다. 2월 10일 완료된 파업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만3천8백68명 중 98%인 2만1천5백73명이 파업에 찬성하였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외기노조 파주지부 문공분회는 2월 8일 노사협의를 통해 미군과 ① 미군인 감독

「섭세트」의 경질 ② 도둑누명을 썼던 한국인의 복직 등 제반 수습책에 합의하였으나 15일이 지나도록 미군측에서 약속 이행을 하지 않자 2월 24일까지 확실한 회답이 없으면 다시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있고 여론이 악화되자 미군에서는 노동청의 입회 아래 쟁의협정을 체결하고 타결하였다. 그러나 4월 6일까지 미군에서는 타결된 쟁의협정을 위반하고 오히려 격화된 처우개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전국외기노조는 산하 13개 지부에서 군 작전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요원을 뺀 2만 5천 여명의 회원이 일제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외기노조는 또 제1차 시한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7일 하오2시에 긴급중앙위원회를 소집, 2차로 무기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외기노조는 미군 측의 협정위반 이유로 ① 퇴직금의 경우 10년에 해고 또는 정년퇴직자는 21개월 분, 사직자는 17개월 분, 징계해고는 10개월 분을 주기로 협정을 하였으나 정년해고 때는 1~2개월, 사직 때는 최고 6개월 분을 삭제하였으며 징계 때는 퇴직금을 안주기로 한 것 ② 임금의 경우 하후상박에 의한 14~20%인상률 약속하였으나 사무계 직원에게는 평균 12.7%만 인상한 것 ③ 미군 측이 감원계획을 갑자기 계획하고 있는 것 등을 들었다.

A6 김두윤(39) 임용관(35) 김경화(31) 김진희(35) 최만봉(35) 박병모(45) 이순근(36) 도민현(31)

A7

A8 「미 무장헌병들이 칼부림|한인종업원 8명부상」, 『중앙일보』, 1966.2.5(7) / 「양태조|임병돈 복직 등 실현 안되면 다시 실력행사 할 듯」, 『중앙일보』, 1966.2.24(7)

A9

A1 IDC 노동자 검거사건

A2 1966.3.21.

A3 1966.3.15. 국제용진사(IDC) 파업 / 1966.3.17. 노조 간부 이진식 외 3명 구속 / 1966.3.12. IDC 총무 최윤석, 사원 최기원 구속, 노조 회장 이창, 부회장 이문찬 등은 수배 / 1966.3.21. 서울시경정과, IDC 총무 최윤석·사원 최기원씨 등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노동조합 회장 이창·부회장 이문찬씨 수배

A4

A5 3월 15일 서울을 비롯한 판문점 일선지구 등 전국의 108개 미군초단과 통신시설에 근무하는 108명의 한국인 종업원들이 15일 밤11시를 기해 일제히 직장을 이탈, 행방을 감추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미군당국에서 하청을 맡아오던 「뉴질랜드」의 IDC회사에서 한국상사인 신정으로 그 관리가 넘어오게 되자 처우가 나빠질 것을 우려, 파업에 돌입하였다. 15일 자정을 기해 업주가 바뀌자 대우가 나빠질것을 우려, 사전신고 없이 불법파업에 들어간 외기노조 IDC분 회원 108명은 지난 17일 낮3시 대한노총의 불법파업을 즉시 중지하고 취업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이중 약70%가 취업했으나 다시 18일 상오 근무지를 벗어나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27개 미군초단과 시설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재 일을 않고 있으며 시설은 미군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경은 이 파업이 IDC간부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17일 동사 한국인 대표 이진식씨 등 3명을 정식 구속했다. 1966년 3월 21일 서울시경 정보과는 IDC(국제용진사) 총무 최윤석(31) 사원 최기원(29)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노동조합 회장 이창(34) 부회장 이문찬(32)씨를 수배하였다. 이들은 3월 15일 미국 초단과 통신 중계소가 지금까지 관할하던 IDC로부터 한국의 신정산업사로 하청되자 대우가 나쁘다고 불만 1백 여명 노동자를 선동, 파업하였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에게 이적죄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였다.

A6 최윤석, 최기원, 이창, 이문찬

A7

A8 [불법으로 직장 이탈], 중앙일보, 1966.3.17(7) / [파업 돌입], 중앙일보, 1966.3.18(3) / [2명 구속·2명 수배], 중앙일보, 1966.3.21(3)

A9

A1 민주사회당 창당발기위원장 서민호 의원 ‘반공법’ 위반사건

A2 1966.5.16.-[]

A3. 1966.5.16. 중앙정보부 민사당 임시 대변인 이필선을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 1966.5.24. 민사당 간부 김윤식, 임창수 중앙정보부에 연행 / 1966.5.27. 민사당 창당발기위원장 서민호 의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966.6.3. 서민호 구속 / 1966.9.5. 서민호 보석석방

A4 1961년 5월 16일 집권할 때부터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반공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반공정책은 때로는 반대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통일논의를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6년 5월과 6월 사이에 발생한 민사당 주요 간부들에 대한 구속은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사당은 5월 10일 창당발기인회에서 남북한의 서신교환과 상호교류 및 남북협상을 제안하였다. 박정희 정권을 이를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A5 중앙정보부는 5월 16일 중앙정보부는 민사당 임시 대변인 이필선(39)을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이것은 민사당 발기인대회에서 「남·북한서신교환」 「언론인과체육인의 상호교류」 등을 주장, 발기인 취지문에 이를 명시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협상」과 통일방안에 동조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한편, 서울지검공안부장인 이종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서울지검공안부 김태현 부장검사 직무대리에게 수사 지휘하도록 명령했으나 김 부장검사직무대리는 이를 거부, 끝내 사건을 맡기면 사임하겠다고 맞섰다. 이필선의 구속에 이어 5월 24일에는 김윤식(임시대변인)씨 임창수(발기인)씨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고 5월 27일 서민호(창당준비위원장)와 회계책임자인 여신택, 운영위원인 김하경·조규택, 임시대변인 윤병한 등과 함께 연행되었었다. 6월 2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민사당 창당발기위원장 서민호를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6월 3일 구속하였다. 그의 혐의는 1966년 5월10일 민사당 발기인대회에서 창당취지문을 만들 때 「남북한서신교환」 「언론인 및 체육인의 상호교류」를 주장한 것과 5월 27일 창당준비 확대대회에서 “우리가 집권한다면 남북한통일문제에 대해 북한의 김일성과 직접 대결할 용의가 있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반공법 4조1항에 규정된 북한의 활동에 대해 동조한 것이었다. 또 하나의 혐의는 민사당 운영자금으로 일본 조총련계 인사로부터 1966년 4월 4백 여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며 월남파병문제에 대해 각 기관에 배부된 전단내용이 반공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6월 2일 있었던 제1차 영장심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재신청 발부되었다. 서민호는 1966년 6월 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6월 10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다음날 서민호는 서울고법에 항고하였다. 6월 15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에서도 구속적부심은 기각되고 6월 22일 서민호는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되었다. 다음날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필선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석방하였다. 이어 서울지검은 7월 11일 반공법 4조 1항(북괴활동 찬양시무)과 형법37조(경합범)를 적용, 구속 기소하였다. 그밖에 서민호와 함께 입건되었던 민사당 임시대변인 이필선(32) 동당창당준비위원 윤병한(49) 김하환(61) 김윤식(53) 박종면(60) 여현택(43)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서민호가 전적인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에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서민호씨는 ①월남파병에 관해 “일개 정파의 정권유지와 내외상인의 자본축적수단으로 젊은 고귀한 피를 헐값으로 팔아 넘기려하고 있다” 는 등 요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②창당발기취지문을 통해 남북한의 서신 언론인 체육인 친척 등을 교류하자고 내세웠고 ③집권하면 김일성과 통일문제를 직접 담판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활동을 찬양 동조하였다는 것이었다.

9월 1일 서민호의 변호인단은 ①서민호의 구속사유는 조총련계 자금 4백만원을 유입했다는 혐의였으나 수사 결과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기소장에는 이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으며 ②구속영장원본에 검사의 서명이 적혀 있지 않아 형식적인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서민호의 구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취소신청을 법원에 냈다. 9월 5일 서민호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1966년 12월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서민호에게 반공법 4조1항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자유도 언론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무제한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 이 한계를 넘어서면 범죄행위로서 처벌을 받게된다” 고 전제하고 서민호의 북한의 활동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동조하고 북괴의 활동을 이롭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아야한다고 논고하였다.

A6 서민호, 이필선(32, 민사당 임시 대변인), 윤병환(49, 민사당 창당준비위원), 김하환(61), 김윤식(53), 박종면(60), 여현택(43)

A7

A8 [이필선씨를 구속], 『중앙일보』, 1966.5.17(1) / [잇단연행에 초조한 동요], 『중앙일보』, 1966.5.28(2) / [서민호씨 구속결정], 『중앙일보』, 1966.6.2(1) / [도주우려없다], 『중앙일보』, 1966.6.2(1) / [공화당선 유감표명], 『중앙일보』, 1966.6.2(1) / [서민호씨를 구속], 『중앙일보』, 1966.6.3(1) / [어제의 반공은 소용없어], 『중앙일보』, 1966.6.4(1) / [법사위 반공법 적용], 『중앙일보』, 1966.6.7(1) / [구속적부심 신청], 『중앙일보』, 1966.6.7(1) / [서민호씨 적부심 10일 하오로 연기], 『중앙일보』, 1966.6.8. 3면 / [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중앙일보』, 1966.6.9.6면 / [서민호씨 항고|구속적부심 기각에], 『중앙일보』, 1966.6.11(1) / [불인정.인정 활로 찾아 전력|혁신계 갈팡질팡], 『중앙일보』, 1966.6.11(2) / [결과범 규정을 「목적범」으로|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국가 안전유지법(가칭)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 심의소위 성안], 『중앙일보』, 1966.6.13(1) / [적부심항고도 기각], 『중앙일보』, 1966.6.15(1) / [서민호씨 송치], 『중앙일보』, 1966.6.22(3) / [민사당대변인 이필선씨 석방], 『중앙일보』, 1966.6.24(1) / [통일논쟁 등등 질의를 종결|통한부 설치 용의는?], 『중앙일보』, 1966.7.2(1) / [서민호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1966.7.11(1) / [구속취소신청|서민호씨변호인], 『중앙일보』, 1966.9.1.7면 / [서민호의원보석], 『중앙일보』, 1966.9.5(3) / [서민호씨출감], 『중앙일보』, 1966.9.6.7면 /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1966.12.17.7면

A1 삼성의 사카린밀수규탄투쟁

A2 1966.9.15-1967.10.11

A3 1966.9.15. 삼성 계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이 『경향신문』에 최초 보도 / 1966.9.19. 박정희 대검 특수부에 재수사 지시 / 1966.9.20. 민중당 청년당원 국회 앞에서 시위 / 1966.9.22. 국회의원 김두한의 ‘오물투척사건’ 이 발생 / 1966.9.27. 서울대 학생들 삼성재벌 밀수 규탄성명서를 발표 / 1966.10.9. 민중당은 10월 9일 오후 효창구장에서 「특정재벌밀수진상폭로 및 규명 국민 쫓기대회」를 개최 / 1966.10.15. 장준하 대구의 유세에서 ‘밀수왕초’ 발언 / 1966.10.26. 서울시경 장준하를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구속 / 11. 12. 오후 부산 유세에서 조운형 의원 ‘밀수왕초’ 발언 / 1966. 조운형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 1966.12.21. 김두한 병보석으로 석방 / 1966.12.30. 장준하 보석 신청후 석방 / 김두한은 12월 21일 병보석으로 석방 / 1967.10.11. 삼성 회장 이병철 한국비료 주식 51% 국가에 헌납.

A4 삼성(三星)에서 울산(蔚山)에 짓는 ‘한국비료’가 대량의 사카린을 그 건설 자재로 위장해 밀수한 사건이 1966년 9월 15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이전부터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단속반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료공장을 짓는다며 들어오는 차관을 이용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카린을 밀수한 사건이었다.

A5 이 사건은 재벌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밀수를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1966년 9월 15일 삼성재벌 사카린 밀수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여론이 들끓자 9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밀수 사건 전면 재수사를 지시하였다. 대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재수사를 시작한 지 18일만인 10월 6일 전모를 밝혀냈다. 이창희 한국비료 업무담당 상무 등이 회사의 내자조달을 위해 4월 중순 차관자금으로 사카린 원료인 OTSA 60톤을 밀반입하여, 5월 14일 금북화학에 매각해 관세·특별관세 등 520여 만원을 포탈하였다.

이러한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회 각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9월 20일 민중당의 청년당원 약 40~50명은 국회의사당 앞길에서 ‘박정권은 밀수재벌을 극형에 처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백선학(청년3부장).양건주(교양부장).이교선(청년부 차장) 등 5명은 ‘밀수재벌은 각성하라. 대중서민은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 2백여장을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9월 25일 낮 12시쯤 신한당 영등포을구당 부당원 이명승(46)씨 등 청년당원 30여명은 ‘밀수비호한 박정권은 물러가

라’, ‘오물로 더럽혀진 무능국회는 해산하라’ 는 등의 유인물을 뿌리며 가두시위를 벌인 뒤 자진 해산하였다. 9월 27일 서울대 학생들이 삼성재벌 밀수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학가는 64년 이래 집요하게 매판세력 타도의 구호를 외쳤던 정열로 민족주체성 확립의 ‘반외세, 반매관’ 정신을 상기하고 재벌의 밀수행각을 민족적 범죄로 단정하였다. 10월 8일 서울대 법대 250명도 밀수규탄성토대회를 열었고, 10월 17일 서울대 문리대 ‘반밀수재벌학생투쟁위원회’ 는 “민족의 피를 뺀 이병철을 즉각 구속하고 민족적 대죄를 진 악덕재벌의 재산을 몰수하라…조국의 경제적 질서를 도피시키고 살찌가는 밀수의 아성과 미쓰이를 비롯한 일본 상사를 즉시 추방하라” 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9월 27일 서울대 학생들은 오후 7시 서울대 앞 낙산다방에 모여 이 사건을 국민 앞에 철저히 진상 규명하지 않으면 방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카린’ 밀수 사건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당국에서는 성명을 발표한 학생회장단(회장 정형근·법대 3년)의 행동을 중시, 주동자를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윤보선 신한당 총재는 10월 3일 “우리는 밀수를 조장하고 밀수재벌을 비호하는 밀수정권을 타도해야만 살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10월 7일 오전 서울대 문리대 구내에 ‘반밀수재벌 학생투쟁위원회’ 라는 이름의 밀수재벌 규탄문이 뿌려졌다. 이 전단에서는 “정부지불보증의 차관자금으로 일본에서 「사카린」 을 밀수입한 삼성재벌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선언문과 악덕 일본상사를 추방하고 정부는 재벌의 밀수행위를 옹호하려는 태도를 지양하라” 는 등 네 가지의 결의문으로 되어 있었다. 민중당은 10월 9일 오후 효창구장에서 「특정재벌밀수진상폭로 및 규명 국민 쉼기대회」 를 열고 “국회를 통해 밀수 사건의 의혹을 가려내겠다” 고 다짐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수많은 청중(주최측 4만, 경찰 1만5천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김영삼 전진한 김대중 부완혁(초청연사) 류진산 장준하 이충환 박순천 씨의 순서로 성토강연을 한 뒤 해산하였다. 이날 강연이 끝난 뒤 김상현 의원 등 민중당 서대문 갑구당 청년당원 10여명이 시위를 벌였으나 하오 6시경 경찰기동대에 의해 저지당하자 해산하였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연단 앞 잔디밭에서 연설을 듣고 있던 한상기(48·서대문구 만리동·상인)씨가 갑자기 일어나 1백원 짜리 지폐 50여장(5천여 원)을 청중들에게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신한당은 10월 19일 정무위·당무위 합동회의를 열고 특정재벌의 밀수행위에 대해 이를 규탄하고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규탄대회를 빠른 시일 안에 서울에서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 밀수사건을 규탄하는 유세를 진행하였던 장준하(사상계 대표)와 조윤형 의원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10월 15일 대구의 수성천(壽城川)변에서 민중당(民衆黨) 주최로 밀수규탄성토 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연사로 나간 장준하는 ‘① 박정희씨는 밀수왕초이며 ② 밀수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김종필 일파에게 분배를 잘못된 때문이며 ③ 「존슨」 대통령의 방한은 박정희씨가 잘 나서 보러오는 것이 아니고 청년의 피가 필요해서 오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10월 26일 서울시경은 그를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날 구속되면서 장준하는 “나의 신념은 변함 없으며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민중당은 장준하 구속을 ‘선거를 앞둔 야당탄압’ 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따졌다. 11월 1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중당 조윤형 의원은 “한비문제를 세사람이 요정에서 말한 것을 녹음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정보정치 하에서 공화당 정부가 한비 밀수를 몰랐겠느냐는 심증에서 총책임은 박대통령에게 있다” 것인데 어찌서 장씨가 구속되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12월 12일 첫 공판에서 장준하는 “박정희씨를 밀수의 왕초라고 말한 것은 박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기 때문에 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장 피고인은 한비사건에 관련, 정치자금분배 운운한 것은 확증은 없으나 일부 정당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렸고 세상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관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구속과 함께 11월 12일 오후 부산 유세에서 조윤형 의원은 “장준하씨가 「박정희씨는 밀수의 왕초다」 라고 발언, 구속되었지만 박정희씨가 밀수의 왕초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며 전국민이 느끼고 있다” 고 발언하였다. 이 때문에 조윤형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는 보석신청을 냈고 12월 30일 이를 받아들여 석방되었다. 교도소를 나오며 장준하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로 나오게 되었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의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다.

한편, 9월 22일 국회의원 김두한은 국회에 출석한 정일형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에게 오물(똥물)을 투척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두한은 국회의장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공화당 국회의원 김택수는 그에게 15만원의 영치금을 주었다. 그런데 영치금 중 일부는 서울 교도소 교도관에게 뇌물로 건네졌다. 그는 교도소 수감 중에 거듭되는 소환을 기피하려고 할복을 기도하였다. 1966년 11월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두한은 “국회의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특정재벌밀수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격분, 위협하려고 가지고 있던 오물을 뿌리게되었다”고 말하였다. 김두한은 오물살포사건이 난 후 정부와 국회의원들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잘못하였다는 생각이 났었기때문에 공개사과를 한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연행되었다고 말하였다. 김두한은 12월 21일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일형 내각은 총 사퇴기에 이르렀다.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삼성회장 이병철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여론을 무마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뒤 삼성은 1년 2개월이나 끌면서 "헌납 사건은 정부와 일부 과격한 언론의 조작극이며 문제의 각서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저항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격노하여 교섭을 맡았던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을 해임하고 내각이 총 사퇴하는 등 정치적 파문이 커졌다. 결국 이병철은 1967년 10월 11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A6 장준하, 김두한, 이병철

A7

A8 이병철의 성명서전문. 『중앙일보』, 1966.9.22(1)/「별과금 통고로 이미 끝났다」, 『중앙일보』, 1966.9.16(3) / 「"정상절차 따라 처벌했다".금수품 아니며 내 책임 하에 처리」, 『중앙일보』, 1966.9.17(7) / ["양벌죄 적용 불가 재심사 필요없다"|부산지검, 사카린 원료밀수 사건에 결론], 『중앙일보』, 1966.9.19(3) / [전면수사를 지시], 『중앙일보』, 1966.9.19(1) / [국민대회 개최 신한당서 결의], 『중앙일보』, 1966.9.20 (1) / 금북화학사장 등 4명 구속| [한비 부산사무소장도|특수반서 철야심문 이일섭씨의 소재수사도 의뢰|사카린원료밀수사건], 『중앙일보』, 1966.9.21(3) / [민중당원들 시위 의사당 앞에서], 『중앙일보』, 1966.9.20(3) / ["「한비」를 국가에 바치겠다"], 『중앙일보』, 1966.9.22(1) / [한비법인체를 입건|관세법 위반혐의로], 『중앙일보』, 1966.9.2(6) / [신한당원들 데모 영등포서], 『중앙일보』, 1966.9.2(6) / [이창희 상무 구속|관련 사실 일부를 시인], 『중앙일보』, 1966.9.28(3) / [어제 성토대회], 『중앙일보』, 1966.10.10(1) / [장준하씨 구속], 『중앙일보』, 1966.10.2(6) / [한비 사건결산], 『중앙일보』, 1967.02.24(3) / [한비 건설에서 헌납까지], 『중앙일보』, 1967.10.12(4) / 1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편, 『장준하문집 : 민족주의자의 길』, 사상, 1985, pp312~312.

A9

A1 금호운수 파업

A2 1967.2.10.-「」

A3 1967.2.10. 노동자 파업통고 / 1967.3.7.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아침을 굶고 태업 / 1967.3.13. 모든 제복을 벗어 물통에 집어넣는 투쟁을 시작. 회사측은 업무방해혐의로 노동자들을 고발 / 1967.3.14. 서울 금호운수 노동자 회사측에 파업통고, 회사측 2명을 부당 해고. 4명이 특수업무방해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연행 / 1967.6.12.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 / 1967.6.26. 도피중인 사장을 발견 / 1967.6.27. 도피중인 사장 김종훈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 / 1967.9.5. 노동청 근로기준법 제36조(정기지불) 위반죄로 금호운수를 고발 조치

A4 박정희의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참한 노동조건을 타개하려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단행하였다. 금호운수 파업은 저임과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5 1967년 3월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2-145 금호운수(사장 김종훈) 소속 70명의 여차장들이 회사측에 파업을 통고하였다가 2명이 부당 해고되고 최영숙(21)양 등 4명이 14일 상오 특수업무방해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들 70명의 여차장들은 2, 3개월씩 밀린 월급을 요구하고 날마다 계속되는 몸수색에 항의, 지난 2월 10일자로 파업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사측이 9명을 부당 해고하자 61명의 동료 여차장들은 3월 7일부터 3일간 아침을 굶고 태업을 하다가 3월 13일 오전 12시쯤 기숙사에서 모두 제복을 벗어 물통에 집어넣자 회사측에서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였다. 경찰에 연행된 4명중 김영미(20)는 해고된 사람으로서 옷을 물통에 집어넣은 일도 없다고 맞섰다. 이들 여차장들은 숙식비 3천원과 기타 공제금을 제하고 월 1천 5백원부터 2천원씩 받고 일해왔다. 그런데 6월 12일 다시 노동자들은 밀린 봉급을 내라고 파업을 벌였다. 금호운수는 「버스」 26대의 운행허가를 받고 있으나 차량이 남아 그 동안 9대밖에 운행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노임은 2달 이상이나 밀려왔다. 파업에 참가했던 6월 27일 상오 서울 금호운수 소속 운전자·차장·정비공 등 1백 30여 명은 밀린 봉급과 수당 2백 18만여 원을 주지 않고 숨어 다니던 사장 김종훈(48·북가좌동 42의5)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차장 60여명과 운전자 30명을 포함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넉 달치 봉급을 받지 못해 3차례에 걸쳐 수색~서울역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정지 등 파업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또 6월 26일 하오 10시쯤 서울 종로 3가 모 식당에서 사장 김씨를 찾아내어 수색동 205 금호운수 사무실에서 14시간 동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운수는 맨 처음 35대의 시내 「버스」로 운행했으나 빗에 젖어 폐차처분 등 운영부진으로 현재는 4대의 「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9월 5일 노동청은 체불된 노임을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하였다. 노동청은 일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물론 근로의욕을 저해한다고 지적, 각 시·도, 근로 감독관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업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정기지불) 위반 죄로 입건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노동청은 이 날 금호운수 등 4개 업소를 적발 고발 조치하였다.

A6 김종훈, 최영숙, 김영미

A7

A8 [여차장 4명 연행], 『중앙일보』, 1967.3.14(7) / [밀린 봉급 내라], 『중앙일보』, 1967.6.12(4) / [노임 넉 달 체불], 『중앙일보』, 1967.6.27(7) / [체불노임 다 주라|추석 맞아 노동청서 지시], 『중앙일보』, 1967.9.5(7)

A9

A1 대규모 무전(無電)간첩단 사건

A2 1967. 5. 17

A3 1967. 5. 17. 육군방첩부대, 무전간첩망 조직 일당 18명을 검거, 발표

A4

A5 1967년 5월 17일 육군방첩부대는 경북 및 전남·북 해안 일대에 무전간첩망을 조직, 복귀지령에 따라 6년 동안 암약해 온 경북대 의대 교수 김대수(金大洙) 등 단첩 일당 18명을 검거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육군보도부 발표에 의하면 김대수 등은 ‘① 학원 내 불온서클 조직, ② 반정부데모선동, ③ 지하당 조직 확대공작, ④ 선거방해 및 정당후보자 대통령 당선공작, ⑤ 군부·정계침투, ⑥ 정보수집 및 거점 구축 등 복귀의 지령대로 계속 복귀와 무전통신 등의 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이였다. 이 조직에는 의학박사·중학교감 등 지식계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조직책임 김대수는 세브란스의전을 졸업(1940년), 해방 후 남원에서 남로당에 가입 민청 부위원장으로 부역했다가 복역 후 1960년 9월 26일 渡美유학 중 전쟁 중에 월북한 동생 김형수(金亨洙·41세)·남수(南洙)·진희(眞姬) 등과 서신으로 접선이 되었다. 그후 1962년 2월 8일간첩으로 남파된 형수를 대구 자택에 은닉시키면서 제자 김풍길(金豊吉·31세, 경북대의대교수)을 설득, 함께 북로당에 입당하고 무전간첩으로 포섭되었다. 이들은 무전 송수신방법·A3조작법·암호조립 및 해독법 등을 교육받고 美貨 2,000달러, 송수신난수표 각 1조, 암호해독문 1조, 무전기·라디오 등 공작금품을 받아 암약해오다 육군 방첩부대의 4개월여에 걸친 공작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1967년 체포된 남파간첩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통일혁명당 창당을 준비하던 지방조직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A6 김대수(金大洙·경북대의대교수), 김형수(金亨洙·41세), 김풍길(金豊吉·31세, 경북대의대조교수)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2, 434-435쪽.

A1 1967년 6·8총선 부정 규탄투쟁

A2 1967.6.8.-1967.11.27.

A3

A4 1967년 6월 8일은 1963년 민정이양이 이루어진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총선거였다. 정부는 1967년 5월 2일 제7대국회의원선거를 6월 8일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5월 8일 공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대선 체제를 풀고 총선에 대비하였다. 공화당은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총선에서도 최소한 6대 국회의 의석인 110석선을 확보할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대선의 지구별 개표결과에 따라 취약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진행하였다. 당 총재인 박정희를 비롯해 당 중진들은 집중적으로 유세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전이 열기를 띄기 시작하자 5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시찰을 명목으로 지방출장을 떠났다. 신민당은 이를 공화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으로 즉각 고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금품살포와 지역사업공약이 남발되었다. 5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원유세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인정하였다. 신민당은 2월 26일 지구당 위원장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5월 8일 국회의원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무장에 김의택, 차장에 정해영, 고흥문을 임명하였다. 신민당은 5·3대통령선거의 무효불법 투쟁을 6·8총선의 전략으로 삼고 최소한 과반수 당선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 선거는 대통령의 연임만을 허용하는 ‘중임규정’이 있는 헌법조항 때문에 ‘삼선개헌’의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였다. 즉 공화당은 개헌선인 2/3선의 확보를 위해 각종 선거부정을 저질렀고, 신민당은 이에 맞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으로 선거를 치렀던 것이다. 6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개투표, 대리투표, 빈대표, 올빼미표 등 신조어를 남길 정도로 부정이 저질러졌다.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신민당 중앙당에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전문이 이어졌고 여수, 벌교에서는 공개투표, 부산에서는 대리투표, 의성, 공주, 보성에서는 환표(표바꿔치기), 대전에서는 무더기 투표 등 전국 투표구와 개표장에서는 부정투개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동대문 갑구에서는 난동이 있었으며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항의시위가 빗발쳤다.

6월 10일까지 계속된 개표결과 공화당은 개헌선인 117석을 돌파, 2/3이상인 총 129석(지역구 102, 전국구 27)을 차지하였으며, 야당은 총 45석에 당선되었다. 선거결과가 확정되자 신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선거를 사상 유례 없는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규탄투쟁에 돌입하였다.

A5 신민당은 6월 9일 “공화당은 6·8 선거의 선거운동 과정과 투표 과정에 있어 갖은 불법·부정선거를 감행하고 또한 개표에 있어서도 완주 남해 김해 등지에서 무더기 표가 쏟아지는 등의 부정개표를 감행하였으며 특히 동대문 갑구에서는 공화당 입후보자가 3천여 표 ‘리드’ 당하자 고의로 개표를 중단하는 등 폭한들에 의한 공포 분위기를 획책, 암흑개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김수한 신민당 선전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완전 범죄적인 금력과 관권의 부정선거 결과로서 공화당의 도시에서의 참패와 농촌지방에서의 과잉당선을 빚어내고 있음은 개헌선의 확보로써 민주주의 장송을 예고하는 일당 독재를 조성시켰다”고 비난하였다. 또 이날까지 부정선거로 인해 신민당에서는 순천·무주, 남해, 전주, 남원, 진안·무주·장수, 화순·곡성, 제천·단양, 여주·양평, 안동, 김해 아산, 김제, 고양·과주, 완주 등 총 14개 지역에서 선거포기 및 선거참관인 철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날 순천·무주, 하동, 남해, 화순·곡성, 상주, 남원 등지에서는 신민당 주도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민당은 6월 9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유진오 대표위원 주재 아래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정선거에

향의하는 신민당의 투쟁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부정선거 규탄 군중대회 개최 및 시위진개, ② 원내에 들어갈 경우 부정선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 및 6·8 부정선거 진상조사와 관계책임자의 인책 주장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며, 법적 투쟁 방법으로는 ①부정선거의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제기 ②부정선거관계 공무원들의 고발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수환 신민당 선전부장은 “이번 선거결과 공화당이 개헌선을 확보하였음을 중시, 공화당의 영구집권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전체 국민들과 함께 개헌 저지에 사력을 다할 방법”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당 대표위원 유진오는 6월 10일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15부정선거를 무색케 한 6·8부정선거의 관련자 및 관계공무원 엄단과 대통령 자신도 응분의 인책을 하고 국민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며 ‘박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기피 호도하고 국민의 공분을 끝내 외면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될 정국의 혼란과 여하한 사태발생에 대해서도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신민당은 6월 12일 당선자회의를 끝낸 뒤 44명의 당선자와 100여 명의 당원들이 안국동 당사에서 중앙청까지 ‘6·8 부정선거 다시 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중앙청 앞 광장에서 유진산 신민당 당수가 “6·8선거는 선거 ‘쿠데타’ 다”, “부정선거를 즉시 무효화하고 총선거를 다시 하라” 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기동대 2백여 명이 달려들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날 중앙청 앞에서는 선거부정을 규탄하고 재선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되었다. 이날 밤 경찰은 시위를 벌인 신민당원 중 강필선(49·아산시 지구당위원장)씨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어 6월 14일 열린 신민당 운영위원회에서는 ‘6·8선거 무효화 및 즉시 재선거 실시, 부정선거 최고 책임자 김종필 민주공화당 의장, 정일권 국무총리,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엄민영 내무부장관의 인책’ 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당선자의 의원등록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날의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6·8선거를 ‘선거쿠데타’ 로 규정하고 박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6·8부정선거무효화 투쟁위원회’ 집행부서를 조직하고, 각 시도의 지구당에도 같은 조직을 설치하였다. 이날 구성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유진오/부위원장 - 조한백, 서범석, 정일형/총무-이충환/기획-부완혁/선전-김대중/동원 연락-김재광/법률-신태약/집행위원 - 유진산, 이재형, 고흥문, 정해영, 김영삼, 장준하, 태완선, 이병하, 김응주, 유옥우, 유청. 이와는 별도로 청년당원 40여명은 당사에서 6·8선거무효화투쟁을 뒷받침할 ‘구국동지회’ 를 구성하고 회장에 장준하를 추대하였다.

신민당 당수 유진오는 6월 14일 담화를 발표하여, 정부가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휴교와 학생들에 대한 강압조치를 계속 취한다면 과국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6월 16일 경기도 화성지구 신민당 차점자인 김형일이 재검표에 의해 당선자인 공화당의 권오석 보다 996표를 더 얻어 당선이 번복되자 신민당의 부정선거 규탄 열기는 더욱 높아졌다. 신민당은 6월 18일 열기로 하였던 부정선거규탄국민권기대회를 정부의 집회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안국동 로타리에서 강행하였다. 경찰 기동대가 청중들의 참여를 방해하자 당원과 경찰 간에 투석전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신민당 당사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였다. 유진오는 ‘6·8총선거는 정부와 경찰관, 금력, 협박 등에 의해 치러진 부정불법선거인데도 박정권은 이를 우발적인 사건으로 호도하려 한다’ 고 비난하였다. 신민당 고문 윤보선은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공화당은 갖은 부정을 감행, 승리를 위장하고 있으며 국민은 공화당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총력기할 것” 을 촉구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총선거 무효화 재선거 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과와 부정책임자 엄단, 부정선거 가담 공화당 후보 및 공무원 처단, 전국의 선거보복 중단과 관계자 엄단,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학생과 시민에 대한 탄압 중단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정선거 처리’ 등의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신민당은 제6대 대통령 취임일인 1967년 7월 1일에 맞춰 6월 30일부터 중앙당과 지방의 지구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단식농성 중이던 신민당 대표위원 유진오는 “부정선거의 원흉을 단죄 처단하고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박정희씨가 국헌 준수의 실증을 국민앞에 입증하는 길이고 시국수습의 첩경” 이라며 “6·8부정선에 향의하는 애국 학도와 야당 인사 및 시민에 대해 불법연행과 학원휴업령을 단행하고 선거 보복행위로 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책임의 포기” 라고

비난하였다. 7월 1일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자 신민당에서는 ‘민권선언대회’를 열었으며, 고성능 스피커로 취임식장인 중앙청을 향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토를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 100여 명이 신민당사로 난입하여 스피커와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를 말리는 신민당 당원들과 난투극이 벌어졌다.

신민당은 선거소송 마감일인 1967년 7월 8일 7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면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소장에서 “68선거의 부정양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공화당, 행정기관 및 폭력단으로 편성된 연합군에 의해 무방비한 국민 대중의 주권은 완전히 압살되고 민주주의는 장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대법원 특별과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후보자·선거인 등 개인이 낸 것만도 전국 131개 지역구 가운데 1백 지구, 1백 33건으로 선거소송사상 신기록을 냈다. 유진오 신민당 대표가 전국 1백31개 지역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일소장의 선거무효소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31건으로 취급되어 26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다. 1건당 20만 1백원으로 소송물 가격을 결정하고 1건의 선거소송에 1320원 50전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하였다. 이에 수입인지값만 해도 17만 8천 3백 여원이었다. 이날까지 접수된 소송 중에서 개인이 낸 선거무효소송 133건 중 신민당이 103건, 민주당 10건, 자유당 7건이며 통한당·대중당·통사당 등 군소 정당과 공화당에서 2건의 소송을 냈다. 정의당과 민중당·무소속(제명자)에서 1건씩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8지역구, 전북의 11지역구, 제주의 2지역구로 선거소송을 내지 않은 지역이 하나도 없는 1백%이고 경기도 13지역구중 인천 갑구를 제외한 12지역구, 강원이 원주·원성을 빼는 8지역구, 경남이 창녕을 제외한 14개 지역구로 다음 순위이다. 서울의 유일한 공화당 후보(박준규)의 당선구인 성동 을구에서 낙선자인 신민당의 홍용준씨가 소송을 제기, 홍일점이 되었다.

선거소송은 사상 최고기록의 소송건수라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① 사광옥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전면선거무효소송 ② 1개 정당에서 전 지역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일 소장의 일괄 선거 무효소송 ③ 산청·협천 지구 신민당 낙선자 이상신이 공화당 당선자 김삼상을 걸어낸 국회의원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사건 등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 청구원인에 의하면 ① 유령유권자를 조작, 부정대리투표 ② 야당 지지자에게는 투표통지표를 주지 않아 주권행사를 방해 ③ 국회의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방사업의 공약을 남발, 유권자를 이해유도 ④ 각급 공무원의 행정조직 및 산하 관공영 조직을 이용한 전국적인 공무원의 득표공작 ⑤ 공개투표 ⑥ 야당 운동원 및 참관인에 대한 「테러」 ⑦ 빈대표, 「피아노」 표 등 개표시의 부정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정선거 양상은 ① 화성지구의 「피아노표」, 빈대표, 올빼미표 등 개표 부정 ② 보성 지구의 공공연한 공개투표, 경찰과 면 직원의 공개투표지시 ③ 인천 을구 등지의 개표소 난동 ④ 서천·보령지구의 무더기 사전 다리미표 ⑤ 영천지구의 공무원에 의한 부정선거지령 ⑥ 군산·옥구 지구의 야당 참관 방해와 투표함 호송 방해 및 정족수 미달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의 참석 ⑦ 고창 지구의 대리투표와 부 면장의 대리투표 지시 ⑧ 화순·곡성지구의 대통령 지시각서(8호) 위조에 따른 유권자의 이해 유도 ⑨ 속초·양양·고성 지구의 무더기, 다리미표 ⑩ 대전 지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무더기 투표 등이었다.

또 68 국회의원 선거는 6월 28일 현재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총 4294명(구속 180명)의 국회의원 선거사범 가운데 ① 호별방문 등 부정선거운동이 1465명 ② 대리투표·무더기투표 등 사위투표가 703명 ③ 일반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553명 ④가두방송·전단살포 등 각종 제한 규정위반이 404 ⑤ 선거의 자유방해가 260명의 순이었다. 선거사범은 신민당이 940명(구12) 공화당 443명(구56) 군소 정당의 358명으로 되어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97명(구2) 공무원이 5백53명(구23) 일반인이 1903명(구83)이었다. 7월 10일 공화당과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채 제7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자 신민당 당선자들과 당원 등 100 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거리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당선자 8명을 포함한 5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 21일 국회 본회의 속개와 더불어 신민당 당선자들은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의원 등록을 거부해가며 투쟁하는 것은 결코 의회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박정권에 의해 유린된 선거의 자유를 되살려 의회민주정치를 확립하기 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8총선의 무효를 천명하였다.

신민당은 8월 14일 전국 131개 지구에서 정부와 여당이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각종 부정 불법선거 내용

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한 ‘68부정선거백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신민당의 낙선 지구장 위원장들은 당선 및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86개 지구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민당의 등원거부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구 후보 10번으로 당선된 김성용이 10월 10일 자진 등록하 신민당은 즉각 그를 제명 처분하였다. 이로써 신민당의 국회의원 수는 45명에서 44명으로 줄어들었다. 제7대 총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치러지자 대학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날마다 이를 규탄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6월 9일 연세대생 2백 여명은 ‘온갖 부정으로 이루어진 68총선거는 무효’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선거탄성토대회를 열었고, 신민당 충남 제6 지구당(서천·보령) 당사 앞에서 신민당 당원과 군민3천여 명이 모여 부정선거규탄 시위를 벌였다. 부정개표에 격분한 신민당 화성지구당원 2백 50여 명은 6월 10일 오후에 이어 6월 11일 오후 4시 ‘불탄 표 찾아내고 부정원흉 찾아내라’ ‘민권은 통곡한다 부정투표, 사기개표’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신민당 화성군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 때마침 내방한 윤보선을 따라 수원시 남문까지 시위를 벌였다. 화성군 17개 읍면에서 올라온 이들 당원들은 밤11시까지 군 당사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전북 부안군 신민당원 80명은 부정선거 무효화를 외치고 6월 10일 오후 8시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6월 10일 보성과 무안에서는 신민당원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이 가세하여 소규모 시위를 벌였다. 6월 11일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중앙감리교회 2층에서 각기독교회 교직자 20명과 신도 200여명이 모여 ‘68부정선거규탄춘천시독교인궐기대회’를 열었고 군산에서는 3천 여명이 신민당 군산·옥구지구당원들과 함께 시위를 하였다. 6월 12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대 법대생 5백 여명은 서울대 합동 강의실에서 ‘68 부패·사기·타락선거’의 무효를 선언하는 학생총회를 열고 낮 12시40분부터 약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오전 12시 40분 교수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가두로 나온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가두로 진출한 학생들은 이화동 로터리에서 대기중인 경찰과 충돌, 2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이어 학생들의 대열은 창경궁 쪽으로 진출하였는데 이곳에서 곤봉을 휘두르며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고, 학생들 1백65명이 연행되었다. 이날 시위를 막기 위해 약 7백 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또 이날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신민당 제주도 제1지구 (제주시·북제주) 조직부장 고철수(37)씨, 총무부장 김옥 (37)씨, 선거사무장 장두인(40)씨 등 13명의 신민당 당원은 6월 10일 밤 8시 반쯤 ‘망국선거 타도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 중 서무부장 임두수 (40)씨, 상무위원 이제현 (32) 씨와 당원 2명 등 4명이 구속되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오전 12시쯤 1백여 명의 신민당 당원들이 당사 앞에서 평택군청까지 행진하며, ‘68 선거는 무효다’ ‘협잡선거 다시 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약1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뒤 자진해산하였다. 신민당 광주 을구당 간부 약 40여 명은 6월 12일 오전 11시 10분 부터 ‘박 정권 물러가라’, ‘표 도둑을 잡자’, ‘68 선거는 무효다, 부정선거 규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민당 전라남도 당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6월 12일에는 서울대 법대, 경북대생들이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시위에 참가하였던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생 2백여 명은 문리대 교정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음날 오후 8시 15분 문리대의 4·19 기념탑 앞에서 ‘망국의 투표함 소각식’을 갖고 고무신·막걸리·‘피아노’ 표로 가득 찬 투표함을 불태웠다. 이날 서울 시내 7개 대학의 8천 여명의 학생들이 항의시위에 나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자 서울시경은 13일 0시를 기해 관내에 감호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군산에서는 5천여명의 시민과 신민당원들이 68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박동필 군산 시장과 이화영 옥구 군수를 처단하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는 다음날 더욱 확산되었다. 6월 14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철야농성 「테모」를 벌이던 문리대·법대·상대생 2백 여 명은 ‘망국선거 다시 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로 진출하다 경찰 기동대에 충돌하여, 법대 2년 유형환(21)이 경찰봉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문리대 독문과 3년 오길남(25) 등 1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충돌로 동대문 경찰서장 이규섭 총경이 머리에 돌을 맞아 한일병원에 입원하였다. 학생들은 교정으로 돌아가 연좌시위를 벌였다. 고려대생 2천5백여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 부정선거를 규탄, 정부는 휴업령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기로 결의하였다. 연세대는 오전 11시 20분 노천극장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68 원흉을 가차없이 처벌

하라’, ‘학원의 자주성을 짓밟는 휴업령을 정부는 중용말라’ 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로 진출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경희대생 1천 여 명은 오전 10시 교정에서 ‘6·8 부정선거 성토대회’ 를 열고 가두로 진출하다가 대기중인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오후 1시 경희대생 5백 여 명은 고려대 앞까지 행진하자 고대강당에서 농성 중이던 2백 여 명의 고려대생들이 합류해 안암동로터리까지 행진, 경찰기동대와 맞서 투석전을 벌인 뒤 해산하였다. 오전 9시 동국대생 8백 여 명은 교정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9시45분 교문을 나와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대는 동국대 입구에 대기중이던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고, 93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다.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일단 해산하였던 시위 학생들은 오전 11시경 1천 5백 여 명이 다시 거리로 진출하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았는데 이로 인하여 동국대 식품공학과 1학년 유권호 군 등 3명이 부상당하였다. 홍익대생 2백 여명은 오전 11시 교내에서 부정선거 성토대회를 열었다. 중앙대생 약 1천 여명은 오전 10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내에서 성토대회를 벌였다. 한신대생 3백 여명은 오전 9시 3백여 학생들은 정규 예배에 이어 교정에서 ‘6·8 선거는 부정선거’ 라고 선언하고 위장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기로 결의, 상오 10시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한양대생 2천 여 명은 노천극장에서 성토대회를 열어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교문을 나서 시위에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들은 오전 11시경 성동서 앞까지 진출, 연좌시위를 벌이다 2백여 기동경찰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쫓겨 일단 학교로 후퇴하였으나 김충근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학생들은 다시 12시쯤 교내에서 몽둥이와 돌을 들고 나와 성동서 앞에서 기동경찰과 정면 충돌해 투석전을 벌였다. 이날 충돌로 경제과 2년 김철대가 갈비뼈를 맞아 중상을 입는 등 학생 20여명과 권혁기(34) 순경 등 5, 6명이 돌에 맞아 부상하였다.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민간인 3명과 학생 34명을 연행하였다. 이어 학생들은 오후 1시30분 3백 여명의 학생들은 광무극장 앞에 집결, 을지로 2가까지 행진하였다. 건국대생 백여명은 오전 11시부터 운동장에 모여 농성투쟁을 벌이는 한편 2백 여 명의 학생은 상오 11시부터 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부전선거를 규탄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숭실대생 6백 여 명은 14일 정오 교정에 모여 6·8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서강대 학생 5백 여 명은 오후 부정선거에 항의, 시위에 들어가 한전서부영업소 앞길에서 연좌시위중 학생 4명이 연행되었다. 전주 우석대생들은 오후 1시 15분 50여명의 학생이 교정에 모여 6·8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탄하였다. 수도여사대생들은 오후 1시15분 5백 여 명이 교정에 모여 6·8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탄하였다. 이날 시위에는 대학생들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참가하였다. 이날 오전 8시20분 보성고 학생 약 2천명은 동교 교정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고 가두 시위에 나섰다. 성남고생들도 오전 8시 약 2천 여 명이 모여 ‘여·야 정치인은 국회의원 등록을 거부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학교로 돌아갔다. 성동실여고 학생 2천여명은 교정에서 ‘부정선거를 무효화하라’ 는 유인물을 뿌리며 성토하였다. 경신고생 1천 5백 여명은 오전 10시 교내에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 고 성토하였다. 단국고 3백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부전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성토대회를 가졌다. 동성고생 2천여명은 오전 11시 교문에서 가두시위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중동고생 1천 여명은 14일 아침 성토대회를 열고 교문을 나와 중앙청 앞까지 진출, 경찰과 맞섰다. 경기고생 3백여명은 교정에서 부정선거를 성토하였다. 휘문고 학생 5백여명은 오후 1시경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가 종로 3가에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강훈고생 1천여명도 오후 1시부터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상과 같이 6월 14일 서울 시내 10개 대학 1만 2천 여명과 4개 고교 3, 2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자 서울 시내 11개 단과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편, 6월 14일 군산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신민당 당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신민당 전북 제2지구당 정책위원장 최영빈(47) 씨를 비롯한 간부 3명을 연행하고 부위원장 백치옥·양희철씨등 3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배하였다. 한편, 지방에서도 학생들을 주축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부산대 문리대 등 5개 단과대생 2천 여명은 운동장에 모여 6·8 부정선거 규탄성토 대회에 이어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청주에서는 청주상고를 비롯, 각 중·고교에 6·8 총선을 규탄하는 2만여장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충무에서는 신민당 경남 제3지구당원 약 1백여명은 13일 하오 8시40분부터 횃불을 들고 한 시간 동안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주에서는 이날 오전 12시30분 신민당원 2백 여명과 시민 약7백 여명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하오 1시20분쯤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고 신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서준용·최학림씨 등 당원 1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6월 15일 전국 21개 고교와 5개 대학이 시위에 들어가고 3개 대학이 단식에 들어가자 정부 당국은 6월 15일 전국 22개 대학, 57개 고교에 휴교령을 내림으로써 강압적으로 학원시위를 봉쇄하였다. 6월 16일 전국 16개 고교와 2개 대학이 시위에 들어가고 3개 대학이 단식에 들어가자 정부는 계속하여 전국 28개 대학과 219개 고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시위에 나선 서울대생들 중 105명이 경찰연행되었다. 이들 중 이현배(23·문리대 사학과 3년) 조영대(22·법학과 3년) 등 19명은 주모자로 분류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 외 나머지 86명은 서울대 교수들에게 인계하는 형식으로 석방되었다. 신민당은 6월 19일 오후 4시 서울 관훈동 중앙당사 안팎에서 6·8 선거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신민당 간부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난투극이 벌어졌다. 오후 4시 경찰의 진압으로 시위가 어렵게되자 당사 옥상에 연단을 마련한 신민당은 유진오 윤보선 함석헌씨 등 11명의 연사가 선거부정을 규탄하였고, 청년당원 장원준(37·강원도 홍천)이 부정선거에 항의해 면도칼로 할복을 시도하였다. 이에 앞서 ‘부정선거 무효다’는 수건을 머리에 두른 1백여 당원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유인물을 뿌렸고 이들은 경찰과 맞섰다. 경찰은 강연이 끝날 무렵 거리에 나와 있는 신민당 당원들과 당사 안에 최루탄 10여 발을 던져 다시 난투극이 벌어졌고 양쪽 20여 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어 오후 6시 20분께 유진오 당수를 앞세운 간부 1백여 명은 화신쪽으로, 정일형 등은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하였다. 경찰은 유진산 장준하 등 당원 31명 일반시민 98명 학생 12명 등 1백41명을 연행, 군중을 해산시켰다. 서울시경은 이 가운데 장준하 유진산 등 2명을 입건하고 신민당 부녀부장 이우약(52)과 청년당원 안봉규(21) 등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는 즉시에 돌려거나 훈계 석방하였다.

6월 21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학생 대표들이 모여 ‘부정부패일소전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정선거규탄 성토대회를 열었다. 6월 23일에서 30일 사이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등에서 ‘학원주권수호’와 ‘부정선거규탄’을 내걸고 산발적인 시위를 감행하였다. 6월 29일 오전 10시 연세대생 2백여 명은 107 강의실에 모여 6·8 부정선거 성토대회와 결의문 채택을 한 다음 3·1절 노래 등을 부르며 교정에서 시위하였다. 이들은 ‘피로써 지키려다 상아탑의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상오 11시쯤 3·15부정 선거와 6·8부전선거 결혼식을 관권·금력중매, 정부 주례로 가졌다. 학생들은 이 날 머리에 붉은 글씨로 바를 정자를 쓴 흰 띠를 두르고 성토를 하였다.

6월 30일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대 학생회장단과 투쟁위원회는 6·8총선 무효화 투쟁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고려대생 1천 5백 여명은 ‘박탈된 학원주권, 쫓겨나야 다시 찾자’, ‘부패타락선거를 다시 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을 나섰다. 이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아 투석전을 벌였고, 오후에 시내로 빠져나온 약 5백여명의 학생들은 명동의 국립극장앞에 집결, ‘대학이 문교부의 시녀냐, 문교부는 대학의 주인이냐’는 등을 쓴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시청앞의 국회까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의사당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찰 기동대 약 5백 명과 부딪쳐 포위 당해 정경학과 2년 이완열(21)군 등 1백 여명이 연행되고 해산하였다. 7월 3일에는 서울 시내 14개 대학 1만 여명이 부정선거규탄 시위에 참가하였다. 7월 3일 서울 시내 고교가 무기한 휴교를 계하고 7월 4일부터 각 대학에서는 조기 방학을 실시함으로써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막을 내렸다.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계속되자 정부와 공화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박정희는 6월 10일 선거사범에 관하여 “그것이 비록 지역적인 개개사건이라도 전체적인 불명예란 감이 있다”고 말하고 신직수 검찰총장에게 “전수사계통을 직접 지휘하여 일체의 선거사범을 사건의 대소나 여야를 막론하고 짧은 시일안에 적발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난동을 빚은 서울 동대문과,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및 경기도의 인시와 화성군 등 7개 지구 선거사범의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리하여 공화당의 권오석의원(경기 화성)은 6월 12일 부정개표사건혐의로 구속되기에 앞서 7대 국회의원 당선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화당에서는 부정사건이 노출되고 있는 약 20개 지구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6월 12일 당 기위원회에서 경기도 화성의 권오석의원과 동대문구의 조직부장 천정균, 선진분과위원장 이용길을 제명 처분하였다. 이외에도 나머지 18개 지구의 투개표부정사건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를 하고 위해 중앙당 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어 6월 14일 열린 당무위원회는 '6·8선거과정에서 일부 지구의 선거부정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당기위원회에서는 전남 보성에서 당선된 양달승을 제명조치하고, 15일 중앙당사에서 제7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를 열어 '우리 당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사직에 의해 당해지구 당선 과정에 추호라도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면 언제라도 깨끗이 의원 자리를 물러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결의하였다.

야당과 국민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계속되자 박정희는 6월 16일 담화를 발표하여 6·8총선에서의 부정사건이 현저히 들어났거나 말썽이 된 화성과 보성 이외에 평택 이윤용, 대전의 원용석, 서천·보령 이원장, 군산·옥구의 차형근, 고부의 신용남, 화순·곡성의 기세풍, 영천 이원우 등을 제명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또 같은 날 구속중인 당원 25명과 충남 대전의 당원 34명을 일괄 제명하였다. 몇 가지 조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투쟁이 계속되자 공화당은 7월 10일 정기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한편 여당 인사들의 야당에 대한 설득도 계속되었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7월 6일 신민당 대표 유진오를 방문하여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하였고, 7월 11일에는 국회 의장 이효상이 다시 유진오를 방문하였다. 야당의 투쟁이 계속되자 박정희는 부정선거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해제 하며 공화당에서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9·20서한'을 보냈다. 그에 따라 공화당은 9월 25일 다시 당기위원회를 열어 양찬우, 최석림, 박병선, 이호범 등을 제명하고, 낙선자인 김종환, 김중환, 채영석 등을 제명하였다. 이어 10월 3일 공화당의 전국구 의원인 이동원, 이원엽, 이병욱, 김익준 등은 '야당의 등원으로 국회 공전의 중지부를 찍기 위해'라며 공화당에 제명을 자청, 수락되어 무소속이 되었다. 11월 2일 김종필은 신민당 대표 유진오를 방문해 여야 전권대표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고, 양당의 전권대표들은 보름간의 협상 끝에 11월 20일 '합의의정서'에 합의하여 11월 27일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29일 등원하여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막을 내리게 되었다.

A6 박정희, 유진오, 권오석, 양달승, 김종필, 김형욱, 정일권, 신직수,

A7 민주공화당, 신민당, 6·8부정선거무효화투쟁위원회, 부정부패일소전학생투쟁위원

A8 [부정선거 규탄 데모], 『중앙일보』, 1967.6.09(3) / [난장판 개표|'부정' 판친 뒤엔 폭력 난무], 『중앙일보』, 1967.6.09(3) / [부정·암흑개표 감행], 『중앙일보』, 1967.6.09(1) / [공화당 「개헌선」 넘는 압승|서울·부산선 신민당 우세], 『중앙일보』, 1967.6.09(1) / 중앙일보, 1967.6.10(7) / [부정선거 다시 하라], 『중앙일보』, 1967.6.10(7) / [불탄 투표지 등 발견], 『중앙일보』, 1967.6.10(7) / [공화130 신민44 대중1석|7대 국회의석 분포 확정], 중앙일보, 1967.6.10(1) / [곳곳서 '데모'], 『중앙일보』, 1967.6.12(3) / [본사 김 기자에 못매], 『중앙일보』, 1967.6.12.(3) / [경찰, 신민 당사 난입], 『중앙일보』, 1967.6.12(3) / [하동서는 단식], 『중앙일보』, 1967.6.12(3) / ["소각지령 모른다"], 『중앙일보』, 1967.6.13(7) / [유 당수 앞장서 데모], 『중앙일보』, 1967.6.13(7) / [군산서도 데모], 『중앙일보』, 1967.6.13(7) / 「휴교 철회도 요구», 『중앙일보』, 1967.6.13(7) / [문 문교 . "데모학생 처벌은 학교장 재량으로"], 『중앙일보』, 1967.6.13(7) / [사태 따라 전면휴교, 데모로 대학가 긴장], 『중앙일보』, 1967.6.13(7) / [고려·연세·성균·동국·건국·경희·한양대|또 7개 대학 휴교], 『중앙일보』, 1967.6.14(3) / [대검, 부정 5개 지구 직접 수사 군산·대전·보성·영천·평택], 『중앙일보』, 1967.6.14(3) / [말로만 투쟁운운 말라], 『중앙일보』, 1967.6.14(2) / [법이 있으니 법대로 처리], 『중앙일보』, 1967.6.14(2) / 「법적 처리에 재선거 관철», 『중앙일보』, 1967.6.14(1) [군산에선 5일째|부대생 2천여명도], 『중앙일보』, 1967.6.14(3) / ["당선사퇴"를 요구], 『중앙일보』, 1967.6.14(3) / 데모 계속], 『중앙일보』, 1967.6.14(3) / [지방대생들도], 『중앙일보』, 1967.6.15(7) / [3대1의 만류], 『중앙일보』, 1967.6.15(7) / [교내선 단식농성], 『중앙일보』, 1967.6.15(7) / [학생 데모 연 나홀째], 중앙일보』, 1967.6.15(7) / [고교에도 휴업령], 『중앙일보』, 1967.6.15(7) / [6·8후유증·수습의 길은|계

에 의견을 물어본다], 『중앙일보』, 1967.6.15(4) / [6·3 회고하며 굳은 표정], 『중앙일보』, 1967.6.15(2) / [재선거 범위…정국 전환점 될 듯|교착 지속, 정부 수습책 불변], 『중앙일보』, 1967.6.15(1) / [부산·대전·평택에서도], 『중앙일보』, 1967.6.16(3) / [고교생 데모뒤편], 『중앙일보』, 1967.6.16(3) / [교사는비우고 도서관에|경관도 지쳐 철모를 베고], 『중앙일보』, 1967.6.16(3) / [검찰의 책임 사설], 『중앙일보』, 1967.6.16(2) / [데모 학생 17명 입건|민간인 15명 즉심에, 서울 시경], 『중앙일보』, 1967.6.15(7) / [5~6명 구속 검토, 서울대 데모 주도자], 『중앙일보』, 1967.6.17(7) / [신학대생들 데모], 『중앙일보』, 1967.6.17(7) / [또 학생 데모, 부산선 최루탄 발사], 『중앙일보』, 1967.6.17(7) / [평행선상의 정국, 교차점은 없는가?|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여·야의 전기 모색], 『중앙일보』, 1967.6.17(3) / [정국경색완화에 전기|박 대통령 담화와 남겨진 과제], 『중앙일보』, 1967.6.17(1) / [전면 재선거 용의 촉구], 『중앙일보』, 1967.6.17(1) / [휴교한 각급 학교 내 3일 켜나 개학], 『중앙일보』, 1967.6.22(7) / [사냥개로위협|야 참관인 축출], 『중앙일보』, 1967.6.23(3) / [중등교련서도 시정촉구 성명], 『중앙일보』, 1967.6.23(3) / [동래고교장 해임], 『중앙일보』, 1967.6.23(3) / 「데모 못 막은 고교장 해임], 『중앙일보』, 1967.6.21(3) / [월말엔 협상 전망], 『중앙일보』, 1967.6.21(1) / 「데모로 한때 긴장], 『중앙일보』, 1967.6.20(7) / [6개 고교 수업 재개], 『중앙일보』, 1967.6.19(3) / ["부정을 은폐한 인상"], 『중앙일보』, 1967.6.19(3) / [내각 주내 일괄 사표], 『중앙일보』, 1967.6.19(1) / [신민 당원 3천명도], 『중앙일보』, 1967.6.17(7) / [데모 고교생 중퇴], 『중앙일보』, 1967.6.17(7) / [범야 결속 안에서 들한 반응], 『중앙일보』, 1967.6.28(2) / [정 내각 3부 장관만 경질|정 총리 등은 재임명], 『중앙일보』, 1967.6.28(1) / [경희대생 데모], 『중앙일보』, 1967.6.27(7) / [예산서 데모], 『중앙일보』, 1967.6.26(3) / [풀리는 휴업령], 『중앙일보』, 1967.6.26(3) / [동래고서 해임됐던 흥 교장], 『중앙일보』, 1967.6.26(3) / [극한투쟁 불사], 『중앙일보』, 1967.6.24(7) / [정국수습|나의 제언], 『중앙일보』, 1967.6.24(4) / [정국수습|나의 제언], 『중앙일보』, 1967.6.24(4) / [고교 휴교를 연장], 『중앙일보』, 1967.07.03(3) / [경비에 2천명 동원], 『중앙일보』, 1967.07.01(7) / [대학 휴업령 해제], 『중앙일보』, 1967.6.30(3) / [성대생도 데모], 『중앙일보』, 1967.6.30(3) / [고대생 데모], 『중앙일보』, 1967.6.30(3) / [연대생들 교내 데모], 『중앙일보』, 1967.6.29(7) / [「7·1대회」를 재확인], 『중앙일보』, 1967.6.29(1) / [총·학장, 선도책 논의], 『중앙일보』, 1967.6.28(3) / [성토타회만], 『중앙일보』, 1967.07.05(3) / [검찰서 환문], 『중앙일보』, 1967.07.04(7) / [학생 646명 연행], 『중앙일보』, 1967.07.04(7) / [일부선 폭행까지], 『중앙일보』, 1967.07.04(7) / [대학생 「데모」 계속], 『중앙일보』, 1967.07.04(7) / [주동자 등 모두 구속], 『중앙일보』, 1967.07.04(7) / [데모·방학문제에 묻는다], 『중앙일보』, 1967.07.04(7) / [침울한 「캠퍼스」 |10개 대학 방학], 『중앙일보』, 1967.07.04(7) / [최루탄 공급 중지], 『중앙일보』, 1967.07.04(1) / [정국수습협약], 『중앙일보』, 1967.07.04(1) / [대학생들 또 데모], 『중앙일보』, 1967.07.03(3) / [선거 거부정 공무원 업단], 『중앙일보』, 1967.07.03(3) / [정국경색 한달 쯤 여·야의 동향], 『중앙일보』, 1967.07.08(4) / [최루탄 공급 말도록], 『중앙일보』, 1967.07.08(1) / [성북서장 직위해제 고려], 『중앙일보』, 1967.07.07(3) / [경북대생 데모], 『중앙일보』, 1967.07.6(7) /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1967.07.6(7) / [고대 김우현군,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1967.07.6(7) / [때리는 경관 구속|한 치안국장 경고], 『중앙일보』, 1967.07.6(7) / ["「정국타개」 대야 계속 접촉"], 『중앙일보』, 1967.07.05(1) / [일부지방대도 방학], 『중앙일보』, 1967.07.05(3) / [민간인 3명에만 영장], 『중앙일보』, 1967.07.05(3) / ["연행학생|구타말라"|검찰지시], 『중앙일보』, 1967.07.05(3) / [김 정보부장 담화내용], 『중앙일보』, 1967.07.20(1) / [신민당원들 데모], 『중앙일보』, 1967.07.18(7) / [대학의 자주적 권위], 『중앙일보』, 1967.07.11(3) / [명예롭지 못한 신기록|「선소」 2백66건|6·8 총선 후유 분석], 『중앙일보』, 1967.07.11(3) / [투쟁계획 고스란히 새나가|차만 마시고 홀로 돌아가], 『중앙일보』, 1967.07.11(2) / [실효 있는 투쟁을], 『중앙일보』, 1967.07.11(1) / [여당 개원 비난], 『중앙일보』, 1967.07.11(1) / [7대 국회 개원|공화당의원만으로], 『중앙일보』, 1967.07.10(1) / 국회앞서 데모], 『중앙일보』, 1967.07.10(1) / [폭행 경찰관 면직처분], 『중앙일보』, 1967.07.08(7) / [신민 정국 수습

과 공화 당내 수습], 중앙일보, 1967.08.01(3) / [이 의장 수습 안 26일 제시], 『중앙일보』, 1967.07.24(1) / ["부정구수에 탄력"], 『중앙일보』, 1967.07.22(1) / [데모학생 폭행한|권순경 파면], 『중앙일보』, 1967.07.22(7) / [상산장례에선 협조무드|장례날 「데모」 하겠다.], 『중앙일보』, 1967.07.21(2) / [학생지도체제를 강화|전국대학 총·학장회의], 『중앙일보』, 1967.08.08(7) / [데모학생 단속 지시|학원탄압의 진실보], 『중앙일보』, 1967.08.10(1) / [문여는 대학가], 『중앙일보』, 1967.08.14(3) / [개학 앞서 협력체제], 『중앙일보』, 1967.08.18(3) / [경비임무 반대], 『중앙일보』, 1967.08.18(3) / [학원대책검토], 『중앙일보』, 1967.08.17(1) / [대학 개문], 『중앙일보』, 1967.08.16(3) / [문교부선 "즉각 시정"], 『중앙일보』, 1967.08.22(7) / [대학 개학|「데모」 사태로 「정치방학」 60일만에], 『중앙일보』, 1967.08.21(3) / [상대 데모학생제적 학원 탄압 행위], 『중앙일보』, 1967.09.18(1) / [데모 주동한 두 고대생 복교], 『중앙일보』, 1967.09.20(3) / [학장사표를 반례], 『중앙일보』, 1967.09.19(7) / [상대 학장 등 사표], 『중앙일보』, 1967.09.18(3) / [학사증 시비|문교부 「비상책」 과 학계의 반발], 『중앙일보』, 1967.11.04 6면 / [고대생에 선고 유예], 『중앙일보』, 1967.12.02(7) / [6개월만의 악수에 여, 야 잇고...신민당 첫 등원 날 의사당 안팎], 『중앙일보』, 1967.11.29(3) / [변칙 5개월 종막|여·야 협상 전후 투시도], 『중앙일보』, 1967.11.20(2)

A9

A1 동백림 사건

A2 1967.7.8.-1970.12.25.

A3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 동백림 사건 발표 / 1967.8.29. 검찰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 31명을 구속, 5명은 불구속기소, 6명 불기소 처분 / 1967.11.1. 구속 기소된 농촌문제연구소소장 주석균 구속집행정지 결정 / 1967.11.9. 오전 10시 첫 공판 시작 / 1967.12.13. 1심 선고공판에서 34명 전원에게 유죄 선고 / 1967.12.18. 항소 / 1968.2.27. 윤이상 병보석으로 석방 / 1968.4.13. 항소심 선고공판. 22명 가운데 주석균등 7명을 제외한 15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판결 파기 / 1968.7.6. 이응로 보석으로 석방 / 1968.7.30. 상소심 선고공판, 12명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환송 / 1969.1.24. 윤이상과 김성철 형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 / 1969.3.7. 이응노와 최정길 형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져 석방 / 1969.3.29. 윤이상 서독으로 귀환 / 1969.3월 31일 대법원 선고 / 1969.12.25. 정하룡·정규명, 조영수등 성탄절 특사로 출소 / 1970.1.13. 행방불명된 천상병 시인 발견

A4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힘겹게 이기고, 공화당이 개헌선인 2/3선을 확보하게 되자 전국에서 부정선거규탄운동이 일어났다. 정부와 여당은 대대적인 인사조치로 부정선거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다. 공화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9명을 제명하고 3명을 의원직 사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와는 달리 학생운동을 비롯한 광범위한 계층에서 68부정선거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여론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으로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을 조작, 발표하였다.

A5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는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사건」에 대한 제1차 사건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밝혀진 북괴망원과 주모자로부터 포섭된 자와 그 대상자는 학계·언론계·문화계·저명인사 등 각계각층에 걸쳐 약194명에 달하고 있으며 입건 또는 구속수사 중인 자는 107명” 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기소를 위해 총 66명의 관련자들을 서울지검에 넘겼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8월 29일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의 관련자 가운데서 3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6명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하였다. 이날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이 적용되었는데 모두 자격정지까지 병과되었다. 불기소 처분된 5명의 관련자 가운데 배씨는 북괴를 찬양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 강사 하태길(31), 「노트르담」 대학 화학과 연구원 강성중(31)씨 등은 26세부터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들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으며 강빈구씨의 처 강·하이드론 게란드(31·서강대학강사)씨는 정을 모르고 부부의 정에 끌렸다는 이유로 서독에 귀국시키기로 했으며 임석진

씨의 여동생 임애자(29)씨도 오빠에게 추종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기로 했다. 다음은 동백림사건 관련자 등의 기소 처분이다. 구속기소(18명) 윤이상(50·음악가) 이수자(41·부산시 동구 좌천동 498) 최정길(28·서독 「키젠」대학경제과 3년생) 정규명(39·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이론 연구원) 강혜순(33·동대문구 제기동 45) 박성옥(36·서독 광부) 김성철(33·서독 광부) 김종대(33·독일 「파이델베르크」통역학부 강사) 어준(40·현대계기 주식회사 전무) 강빈구(35·서울상대 조교부·법학박사) 이국종(36·무직·마포구 아현동 457의3) 천상병(38·부산시 수정동 970) 임석훈(32·서백림공대 유기화학과) 이응로(64·화가·마포구 도화동 9의124) 박인경(42·이응로의 처) 주석균(65·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 김광옥(33·동양 「카플러랙템」회사 기술과장) 최창진(41·전북대 문리대 조교수) ◇불기속기소(4명) 황춘성(33·서울고동국교 교사) 어원(51·전국외기노조 오산지부 상무) 어정희(43·구인의원 간호원) 권태숙(43·서울대신국교 교사) ◇불기소(5명) 배준상(37·서독쾰른대학 대학원생) 강성종(31·이학박사·노르트담대학 화학과 연구원) 하태길(31·캘리포니아대학 강사) 강·하이드론케란트(31·서강대학강사) 임애자(29·여·임석진의 동생).

11월 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동백림 사건 관련, 구속 기소된 농촌문제연구소소장 주석균(65)피고인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1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렸다. 이종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①범인의 수나 범죄의 질이 건국사상최대 규모의 간첩사건이었다 ②범인들이 국내·외에 상주하며 범행을 해온 국제적인 사건이다 ③이나라 최고지성인들의 범행이다 ④가정환경이나 지위로 보아 그럴수가 없는 피고인들의 범행이었다 ⑤피고인들이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합법적 지위를 쟁취했다는 점들을 들어 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검찰측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이 지난 57년부터 서독·불란서·미국 등 해외에 유학 또는 장기체류 하거나 국내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적화를 노리는 북괴의 대남공작에 호응, 동백림을 거점으로 「모스크바」경유 평양을 왕래하면서 북괴 요인들과 만났고 구라파전역의 해외교포 포섭 및 교포동태 등을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하였다. 공소장 낭독이 끝난 다음 "공소사실이 틀림없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대해 윤이상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왕래했다」는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반국가행위는 대체적으로 부인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서독정부는 재판진행상황을 관찰키 위해 법무성 고문인 「그린발트」를 파견하였다. 11월 27일 재판부는 적십자국제위원회 대표 「앙드레·듀랑」에게 구속 기소된 작곡가 윤이상, 동양화가 이응로 피고인 등 7명에 한해서 접견을 허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되어 구속 기소된 윤이상은 감방 안에서의 작곡 활동을 허가받아 오페라 「나비의 꿈」 후반을 완성하였다. 12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종원 부장검사는 정하용, 조영수, 정규명, 천병희, 윤이상 최정길 등 6명에게 사형, 임석훈 강빈구 어준 이응노 등 4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24명에게는 최고 15년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공판법·간첩·외환 관리법위반 등 죄가 적용되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일부가 일시적인 잘못으로 동백림과 평양에 간 사실이 있으나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어두워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만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한 반공법이 제정된 줄을 몰랐다”고 말하였다.

12월 9일 오전 열린 12회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김성철의 변호인 주도윤을 비롯, 태학기·안명기(어준·어원·어정희·황춘성 피고인 변호인)변호인 등은 “피고인들이 6·25때 납북된 숙부나 형등 친척의 소식을 알고자하여 북괴 공작원들과 만났을 뿐이었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지령은 받았지만 조사상 기밀 등을 탐지,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국종의 자진 무료 변호를 맡은 강대형 변호인은 “이 피고인이 강빈구 피고인을 북괴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으며 우정으로 돌보아준 잡비 정도를 받아 썼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강빈구의 변호인 이용훈 변호사는 “강피고인이 간첩이라면 박 대통령의 저서 등을 독일어로 번역, 해외에 선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공판정에는 국제 「펜·클럽」회원인 백철·모윤숙·전숙희·김용호씨 등이 나와 방청하였으며 재판부에 이응로·윤이상 피고인 등에 대한 관대한 처분

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계속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다. 윤이상 = 아내 이수자 피고인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은인이다. 이 사건에 아내는 죄가 없다. 내가 남긴 작품의 세계 자유 우방국가에서 공연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간접의 죄를 벗겨주기 바란다. 이수자(윤이상의 처)= 병든 남편이 한 작품이라도 많이 남기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이 작품들은 장차 우리나라의 보배다. 정하룡= 한때 내 마음 속에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도사리고 있었으나 「메피스토펠레스」는 이제 없다. 법의 엄정한 심판을 달게 받겠다. 이순자(정하룡의 처)= 남편이 간첩이라는 기막힌 죄명만은 벗겨달라.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조영수=한번 잘못된 실수인데인간이 되게 해달라. 처 김옥희 피고인은 내게 맹종했을 뿐이다. 김옥희(조영수의 처)= 남편이 공산지역에 갈 때 말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최정길= 부모에게 잘못을 사죄하는 어린아이에게 죽어야 한다고 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이 죄인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으니 용서 해 주십시오. 정규명= 다 하지 못한 학문·인생. 미완성으로 끝나게 된 것이 유감이다. 강혜순= 내가 납북된 오빠 소식을 알고 싶어한 것이 남편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이용로= 내 생명은 그림 그리는 것 밖에 없다. 여생을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박인경= (이 피고 처)= 세상 사람이 모두 오해를 해도 나만은 남편이 간첩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 외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상을 못 주시지만 무기 징역은 너무하다. 주식균= 복괴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점만은 기록을 잘 검토하시어 흑백을 가려주시면 죽은 후에라도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강빈구= 반공국시를 나만큼 절실하게 아는 사람도 없다. 귀국 후 처와 함께 조국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었다.

이어 12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김영준 부장판사·김인섭 판사·정동운 판사)는 관련자 3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 외국환관리법 위반등 죄가 검찰의 공소대로 적용되었다. 다음은 선고된 형량이다. <피고별 선고량(괄호 안은 구형량)> 정하룡(39·경희대 조교수·정박) 무기(사형) 이순자(37·정의 처·국회도서관 임시직원) 3년(징10년·자10년) 조영목(34·외국어대 강사·정박)=사형(사형) 김옥희(30·조의 처·청와대 경호실장 부속실 통신원) 3년(징10년·자10년) 김중환(49·한일병원 피부과장·의박)=15년(징15년) 손영옥(44·김의 처)=형면제(징1년·자3년) 윤이상(50·작곡가)=무기(사형) 이수자(41·윤의 처)=3년 집예5년(징5년·자5년)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사형 강혜순(33·정의 처)=3년(징10년·자10년) 박성옥(36·서독 광부)=5년(징10년·자10년) 김복순(33·박의 처)=1년 집예2년(징1년·자3년) 이용노(64·동양화가)=5년(무기) 박인경(42·이의 처)=3년 집예 5년(징5년·자7년) 어준(40·현대계기 전무)=무기 황춘성(33·어의 처·교동국민교 교사)=형의 면제(징1년·자3년) 주식균(65·한국농업문제 연구소장)=1년 집예3년(징3년·자5년) 천병희(29·성신여사대 강사)=15년(사형) 최정길(28·서독 기센대학 경제과 3년)=15년(사형) 김성칠(33·서독광부)=3년6월(징5년·자7년) 김종대(33·서독 하이델베르크대학 강사)=3년 집예3년(징2년·자3년) 강빈구(35·서울상대 조교수·법박)=무기 이국종(36·무직)=1년집예 2년(징1년·자3년) 천상병(38·문필가)=1년 집예3년(징3년·자5년) 임석훈(32·서백림공대 유기화학과생)=10년(무기) 김광옥(33·동양커피플렉스회사 기술과장) 3년(징5년·자7년) 최창진(41·전북대 조교수) 1년 집예2년(징2년·자4년) 공광덕(36·잘즈부르크대학 정치과생) 3년6월(징5년·자7년) 김진택(26·서독광부)=1년 집예 2년(징2년·자4년) 정상구(30·위싱턴대학생)=3년6월(징5년·자7년) 정성배(34·불란서 자료수집소 번역사·정박)=선고유예(징2년·자4년) 어원(51·전국외기노조 오산지부 상무)=6월 집예1년(징1년·자3년) 어정희(43·어원의 매·구인병원 간호원)=6월 집예1년(징1년·자3년) 권태숙(43·서울대신국민교 교사) 형의 면제(징1년·자3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수자, 박인경, 김종대, 천상병, 이국종, 최창진, 김진택, 정성배(선고유예)씨 등은 출감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영수(34·전 외대 강사) 등 18명이 1심 판결에 불복, 22월 18일 항소하였다. 당 폐결핵,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었던 윤이상은 1968년 2월 27일 오후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1968년 3월 13일 시작되어 4월 13일에 선고된 항소심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22명 가운데 주식균등 7명

을 제외한 15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판결을 깨고 정규명 정하룡 임석훈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던 조영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윤이상 어준등에게는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 강빈구에게는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하였다. 또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15명 가운데 임석훈·정하룡을 제외한 13명에게는 1심보다 2년~5년이 줄어든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7명에게는 1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순자 등 여피고인들과 김광옥·최창진에게 2년~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이들은 이날 석방되었다. 다음은 이날 선고된 형량이다. (괄호안은 1심선고량) 조영수(35·전외대강사·정박)무기(사형) 정규명(40·「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학연구원)사형(사형) 윤이상(51·작곡가 병보석중)징역15년(무기징역) 강빈구(36·서울대상대교수·법박)징역10년(무기징역) 정하룡(35·경희대 조교수·정박)사형(무기징역) 어준(41·현대계장 전무)징역15년(무기징역) 천병희(30·성신여사대강사)징역10년(징역10년·자격정지15년) 최정길(29·서독「키젠」대학생)징역10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중환(45·한일병원 피부과장·의박)징역 10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임석훈(33·서백림공대 박사과정)사형(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이응노(65·화가)징역3년(징역5년·자격정지5년) 박성옥(34·서독광부)징역5년(징역5년·자격정지5년) 김성철(34·서독광부)징역3년6월(징역6월·자격정지3년6월) 공광덕(37·「잘즈부르크」대학 박사과정)징역3년6월(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정상구(31·미「위성턴」대학생)징역3년6월(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이순자(38·정하룡의처·구속집행정지중)징역3년집유5년(징역3년·자격정지3년) 김옥희(31·조용수의처)징역3년집유3년6월(징역3년·자격정지3년) 강혜순(34·정규명의처)징역3년집유3년6월(징역3년·자격정지3년) 김광옥(34·「커피블랙탐」회사 기술과장)징역3년집유3년6월(징역3년·자격정지3년) 주식균(66·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징역1년(징역1년·자격정지3년·집유3년) 천병상(39·시인·불구속)징역1년집유3년(징역1년·자격정지3년·집유3년) 최창진(42·전북대조교수·불구속)징역1년집유2년(징역1년·자격정지1년·집유2년) 한편, 1,2심에서 유죄판결을 고 대법원에 상소중인 동양화가 이응로 피고인(65)이 7월 6일 대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

1968년 7월 30일 열린 상소심에서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김치걸·주심 주운화 사광옥 최윤모)는 검찰과 피고인이 상소한 21명 중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정하룡 임석훈 등 3명을 포함한 12명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부분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법령 적용의 잘못이 있으며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었으며, 이응노 등 9명에 대해서는 고법의 형량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2심선고량·징=징역·자=자격정지·집=집행유예) 정규명(40·「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학연구원)파기환송(사형) 정하룡(35·경희대조교수·정박) 파기환송(사형) 임석훈(33·서백림공대박사과정) 파기환송(사형) 조영수(35·전외대강사·정박) 파기환송(무기징역) 윤이상(51·작곡가·병보석중) 파기환송(징15년·자15년). 어준(41·현대계장사전무) 파기환송(징15년·자15년) 강빈구(36·서울상대조교수·법박) 파기환송(징10년·자10년) 천병희(30·성신여사대강사) 파기환송(징10년·자10년) 최정길(29·서독「키젠」대 경제학과 학생) 파기환송(징10년·자10년) 김중환(45·한일병원피부과장·의박) 파기환송(징10년·자10년) 박성옥(34·서독광부)상고기각(징5년·자5년) 김성철(34·서독광부)파기환송(징3년6월·자3년6월) 공광덕(37·「잘즈부르크」대 박사과정) 상고기각(징3년6월·자3년6월) 정상구(31·미「위성턴」대학생) 파기환송(징3년6월·자3년6월) 이응노(65·동양화가·병보석중) 상고기각(징3년·자3년) 이순자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두 번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간첩죄등을 적용, 첫번째 항소심 선고형량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조영수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윤이상피고인등 9명에겐 징역3년에서 15년까지를 각각 선고하였다. (괄호안은 첫번째 항소심 선고형량) 정규명(40·「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사형(사형) 정하룡(35·경희대 조교수) 사형(사형) 임석훈(33·서백림공대 박사학위과정)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사형) 조영수(38·외대강사) 무기(무기) 윤이상(51·작곡가)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어준(41·현대계장전무)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강빈구(36·서울상대 조교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천병희(30·성신여사대강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최정길 (29·서독 「키센」 대학생)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김중환(45·전한일병원 피부과장)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정상구 (31·미 「워싱턴」 대학생)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김성철 (34·서독과견광부)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징역3년·자격정지3년) (38·정하룡의처·구속집행정지중) 상고 기각(징3년·자3년·집5년) 김옥희 (31·조영수의처)상고기각 (징3년·자3년·집5년) 강혜순 (34·정규명의처)상고기각 (징3년·자3년·집5년) 김광옥 (34·동양 「커피플렉스」 기술과장·불구속)상고기각 (징3년·자3년·집5년) 주석균 (66·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불구속) 상고기각(정1년·자1년·집3년) 최창진 (42·전북대교수·불구속) 상고기각 (징1년·자1년·집2년) 한편, 윤이상은 1월 24일 형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되어 3월 29일 서독으로 돌아갔고, 같은날 김성철도 석방되었다. 또 3월 7일에도 이응노와 최정길에 대해 형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져 석방되었다. 3월 31일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판사)는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정규명(40) 사형 정하룡(35) 사형 조형수(35) 무기 어준(41·현대계장전무) 징역·자격정지15년 강빈구(36·법학박사·전서울상대교수) 징역·자격정지10년 천병희(29·전성신여사대강사) 징역·자격정지10년 김중환(45·한일병원피부과장) 징역·자격정지7년 정상구(31·미국 「워싱턴」 대학생) 징역·자격정지3년6월. 그뒤 1970년 성탄절 특사에서 동백림 사건에 관련,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가 2회에 걸쳐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정하룡·정규명, 무기징역이 확정했다가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던 조영수 등 3명이 모두 석방되어 관련자 전원이 석방됨으로써 사건을 종결되었다.

A6 임석진(36) 명지대 조교수·철학박사 정하룡(34) 경희대 조교수·정치학박사 조영수(34) 전 동국대 외대 강사·정치학박사 천병희(29) 서울대 사대강사·독문학석사 황성모(42) 서울대문리대부교수·철학박사 최창진(41) 전북대 조교수 강연구(35) 서울대 상대교수·정치학박사 김중환(44) 서울대 의대교수 강하이 드룡(28·서독인·강연구의 처)서강대 강사 김종대(33) 「프랑크푸르트」 대 강사 정규명(39) 「프랑크푸르트」 대 조교수 강성종(35) 미 노트르담대 화학연구원 주석균(65) 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 장덕상(32) 중앙일보 「파리」 특파원 이응노(63) 재불화가 윤이상 (50) 재서독음악가 박민중(50) 재서독 음악가 이희세(37) 재불 화가 공광덕 「살즈부르크」 대학강사 노봉유(38) 재불 유학생 조상권(34) 재불 학생회장 이순자(37) 국회도서관직원 정하룡의 처 어준(41)현대계기전무 김광옥(31) 동양 「커피플렉스」 기술과장 정성배(42) 재불 정치학박사 방준(33) 불TWA항공회사 사원 김옥희(30) 모기관 「타이피스트조영서의 처 어원(50) 외국기관노조 오산지부 상무 김종태(27) 신민당 운영위원 박협(44)재불 변호사.

A7 민족주의비교연구회

A8 편집부 엮음, 『공안사건기록』, 세계, 1986, pp17~60 / [동백림 거점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발표|관련자 194명 중 입건·구속 17명 주동자 7명 평양 왕래], 중앙일보, 1967.7.8(1) / [동백림 거점 북괴 공작단 사건 제2차 발표문], 중앙일보, 1967.7.11(6) / [윤이상 부처는, 평양방문 지령이행], 중앙일보, 1967.7.12(1) / [북괴 대남 공작단 사건], 중앙일보, 1967.7.12(4) / 유학생에 장학금], 중앙일보, 1967.7.13(1) / [공작금 만 「달러」 받아|유학생 포섭기도], 중앙일보, 1967.7.13(1) / [농업정책 등을 비방], 중앙일보, 1967.7.14(1) / [제5차 발표 문], 중앙일보, 1967.7.14(4) / 암호로 보고 11회], 중앙일보, 1967.7.15(7) / 북괴 공작 단 사건], 중앙일보, 1967.7.15 8면유학생 동향 등 보고], 중앙일보, 1967.7.17(3) / 북괴 공작 단 사건 제7차 발표문], 중앙일보, 1967.7.17(4) / 유학생과 재외공관 . 흥중인], 중앙일보, 1967.7.18(3) / 한·독 관계], 중앙일보, 1967.7.19(2) / "66명은 검찰에 송치 공작단 사건 한·독 위기 있을 수 없다"], 중앙일보, 1967.7.20(1) / [김 정보부장 담화내용], 중앙일보, 1967.7.20(1) / [6명을 구속기소], 중앙일보, 1967.7.22(7) / 서독·불 우학생 10명|혐의 없어 출국조치], 중앙일보, 1967.7.22(1) / [김부장 담화문], 중앙일보, 1967.7.22(1) / [" 「민비연」 은 반국가단체"|검찰 공작단사건 수사 끝에 단정], 중앙일보, 1967.7.25(7) / 윤이상씨 등 22명 기소], 중앙일보, 1967.7.29(7) / 공작단사건 13명에|접견금지 명령], 중앙일보, 1967.7.31(3) / 공광덕씨 등 4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1967.8.2(3) / 이순자 구속정지], 중앙일보, 1967.8.19(7) / 가족면회 허용], 중앙일보, 1967.10.14(7) / 주석균 피고에 구속집행정지], 중앙일보, 1967.11.2(7) / 동백림 거점 공작단

사건 첫 공판], 중앙일보, 1967.11.9(1) / [삼엄한 법정안팎], 중앙일보, 1967.11.9(7) / 공작단 사건
 첫 공판 | 사실 심리 내용], 중앙일보, 1967.11.10(3) / 동백림 세 번 갔다" | 입치 두려웠으나
 친지 안부 궁금해], 중앙일보, 1967.11.11(7) / 평양간 사실 시인], 중앙일보, 1967.11.15(3) / 검찰의
 신문 내용], 중앙일보, 1967.11.15(3) / 평양서 처남만났다|정규명피고진술, 4·19기록영화 관람도], 중
 앙일보, 1967.11.16(7) / 동백림가선 3시간관광|독서천여권에 좌경책은 20권뿐], 중앙일보,
 1967.11.16(7) / 동백림사건 공판을 관찰], 중앙일보, 1967.11.18(1) / [공작단 사건 5회 공판|"A3 연
 락받았다"], 중앙일보, 1967.11.22(3) / 증인 8명 채택], 중앙일보, 1967.11.23(7) / 증인 5명 채택],
 중앙일보, 1967.11.24(3) / 이용노 피고에 관대한 처분을], 중앙일보, 1967.11.25(7) / 변호인 반대신
 문], 중앙일보, 1967.11.25(7) / "평양 가서 참상 봤다"], 중앙일보, 1967.11.27(3) /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 중앙일보, 1967.11.28(7) / 처남 보러 평양에], 중앙일보, 1967.11.29(3) / 검찰증인 임석
 진씨 "한번 점 찍히면 피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 1967.11.30(7) / 변호사인측 증인 3명 채택], 중앙
 일보, 1967.12.1(3) / 미결수 감방서 익는 오페라 「나비의 꿈」], 중앙일보, 1967.12.2(7) / 윤태림
 숙대총장 등 열두명 증인채택], 중앙일보, 1967.12.2(7) / 강 교수 등 증인대에|서독정부 고문 「그」 교
 수도 방청], 중앙일보, 1967.12.4(3) / 내일 구형|34명 사실심리 끝내], 중앙일보, 1967.12.5(7) / 동
 백림 공작사건 구형], 중앙일보, 1967.12.6(1) / [논고 70분], 중앙일보, 1967.12.6(3) / 교수 6명에
 부부 네쌍], 중앙일보, 1967.12.6(3) / 변론과 최후 진술.9일 속개], 중앙일보, 1967.12.7(7) / 피고들
 최후 진술], 중앙일보, 1967.12.9(7) / 작품을 봐서라도 관대히|여생을 조국에 이바지 할 기회를"],
 중앙일보, 1967.12.11(3) / 공작단 사건 공판녹화 위해], 중앙일보, 1967.12.12(7) / 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중앙일보, 1967.12.13(1) / [공작단 사건 공판정안팎 34일만의
 선고 | 외국기자도 20여명], 중앙일보, 1967.12.13(3) / 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중앙일보,
 1967.12.14 8면8명 어젯밤 출감], 중앙일보, 1967.12.14(7) / 반공이라는 당위의식], 중앙일보,
 1967.12.14(2) / 공작단 사건 18피고 항소], 중앙일보, 1967.12.18(3) / 동백림사건 재판을 보고], 중
 앙일보, 1967.12.19(1) / [돈독해야 할 한독간 우의], 중앙일보, 1967.12.19(2) / 오페라 『나비의 꿈』
 옥중 완성], 중앙일보, 1968.2.17(7) / 윤이상피고 병보석허가], 중앙일보, 1968.2.27(7) / 내일2심
 공판], 중앙일보, 1968.3.12(7) / 변호인측 보충신문], 중앙일보, 1968.3.13(3) / 옥중오페라 | 나비의
 꿈, 「본」으로 | 연습에만 4개월이나], 중앙일보, 1968.3.13(3) / 공소사실시인], 중앙일보,
 1968.3.14(7) / 공소상변경을 허가], 중앙일보, 1968.3.16(7) / 동백림 사건에 관대한 처분을], 중앙일
 보, 1968.4.12(3) /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중앙일보,
 1968.4.13(7) / 윤이상씨 감형환영], 중앙일보, 1968.4.15(3) / 이용로 피고 보석], 중앙일보,
 1968.7.6(7) / 대법, 내일 선고], 중앙일보, 1968.7.29(3) / 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
 정], 중앙일보, 1968.7.30(7) /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중앙일보, 1968.7.31(3)
 /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요지>], 중앙일보, 1968.8.2(4) / 대법,벽보사건 중시], 중앙일보,
 1968.8.3(7) / 곳곳에 비난벽보], 중앙일보, 1968.8.3(7) / "민주질서를 파괴"], 중앙일보,
 1968.8.5(1) / [사법권의 독립과 신성], 중앙일보, 1968.8.5(2) / 벽보사건 조사위구성], 중앙일보,
 1968.8.6(1) / [벽보사건|검·군·경합수반체제 강구], 중앙일보, 1968.8.8(7) / 동백림사건 심리한 최대
 법원 판사 사표], 중앙일보, 1968.8.15(1) / [벽서사건 정부태도추궁|야, 특조위구성을제의], 중앙일
 보, 1968.8.16(1) / [사법부의 엄존], 중앙일보, 1968.8.16(2) / 오비이락」의 파문], 중앙일보,
 1968.8.16(3) / 종로에도 괴비라], 중앙일보, 1968.8.22(7) / 공소장변경을신청 동백림사건항소심 평양
 왕래사실시인], 중앙일보, 1968.11.14(7)/ 공작감애령 시인], 중앙일보, 1968.11.15(3) / 공소장 변경
 허가], 중앙일보, 1968.11.18(3) / 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중앙일보,
 1968.11.21(7) / 12월5일 선고공판], 중앙일보, 1968.11.22(3) / 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
 규명 피고 사형], 중앙일보,1968.12.5(7) / 검찰서 9명 상고], 중앙일보, 1968.12.13(3) / 서독특사 입
 경], 중앙일보, 1969.1.13(1) / [북괴 발악상 설명], 중앙일보, 1969.1.15(1) / [정치·경제 협조 증
 진], 중앙일보, 1969.1.18(1) / [한·독관계 정상화], 중앙일보, 1969.2.1(1) / [윤이상 피고등 검찰,

상고취하], 중앙일보, 1969.2.7(3) / 윤이상씨 석방], 중앙일보, 1969.2.25(7) / 이응노화백 석방], 중앙일보, 1969.3.7(3) / 미안한 마음그지 없다], 중앙일보, 1969.3.8(7) / 윤이상씨 서독으로], 중앙일보, 1969.3.29(7) / 정하룡·정규명 사형|동백림사건 재상고심 선고], 중앙일보, 1969.4.1(7) / 첫 공판 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중앙일보, 1969.4.1(7) / 동백림사건 관련·60세이상자등], 중앙일보, 1969.8.4(3) / 재소자에 「8·15」 총전|특사 798·감형 1,762명], 중앙일보, 1969.8.14(7) / 평양왕래등 사실시인], 중앙일보, 1969.8.18(3) / 주운화 대법원판사 사표], 중앙일보, 1969.8.21(7) / 법복벗은 「일신상의 이유」], 중앙일보, 1969.8.22(3) / 평양왕래·포섭활동 시인], 중앙일보, 1969.8.25(7) / 광복절 사면 3천 5백 55명], 중앙일보, 1970.8.13(7) / 광복절특사2백88명 출감], 중앙일보, 1970.8.15(3) / 특사 75면 내일 출감], 중앙일보, 1970.12.24(7) / 시인 천상병 씨가 살아있다.], 중앙일보, 1972.1.13(5)

A9

A1 전국철도노조 생존권 투쟁

A2 1967. 12. 22.

A3 1967. 12. 22.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쟁의 신고 / 1968. 1. 22. 실력행사 가부투표와 98.6%의 찬성

A4

A5 1967년 12월 22일 전국 철도노조는 처우개선을 요구조건으로 한 노동쟁의를 신고하였다. 철도노조는 이날 작업수당 가족수당 인상등 5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위한 중앙투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철도노조는 올 들어 철도종사원의 퇴직이 평년의 3배가 넘는 3천1백62명이라고 지적,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 직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받고있는 평균임금 1만6백30원으로는 5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면서 최저 2만2천6백98원까지는 승급되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1968년 1월 22일부터 철도노조는 각 직장 단위로 실력행사 가부투표에 들어갔다. 실력행사가부투표에서 투표참가자 2만 8천 9백 여명(95·4%)중 98·6%인 2만 8천 5백 98명이 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1·21무장공비서울침입사건」과 최근 철도·전매노조의 쟁의를 계기로 공익 및 기간산업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자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공화당은 2월말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노총이 오는 10일·노동절에 근로자대회를 열고 국민소득이 연간2백 「달러」수준에 오를 때까지 파업을 양겠다는 파업권반상결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A6

A7

A8 [전국 철노쟁의 신고], 『중앙일보』, 1967.12.22(3) / 「실력행사가부투표」, 『중앙일보』, 1968.1.22(3) / 「“98%찬성”의 압력」, 『중앙일보』, 1968.2.17(6) / 「양력행사 방법결정」, 『중앙일보』, 1968.1.24(3) / 「노동쟁의 제한방안 검토」, 『중앙일보』, 1968.3.5(1)

A9

A1 광부들의 연료정책 반대 시위

A2 1968.1.16.

A3 1968.1.16. 연료정책시정투쟁궐기대회.

A4 석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광산연료라는 위치 때문에 정부는 그 증산에 주력하여 왔다. 1957년에 2백 44만톤에 불과하던 석탄생산이 4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1967년 1천 1백60만 톤에 달하였는데도 1966년에는 연탄과동까지 겪어야 하였다. 1967년도 연료 수요량을 당초의 1천 3백 14만 톤에서 1천 7백 38만 7천 톤으로 수정하고 부족량 5백 23만 톤을 기름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시책으로 탄광업은 1년도 되기 전에 사양 산업으로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면세까지 겹쳐서 유류사용은 단연 증가하였다. 증기 1톤당 원가를 비교할 때 무연탄은 5백87원 드는데 「병커C」유는 4백 76원 밖에 안들었다.이리하여 유류 수입고는 1965년의 2천 8백 80만 「달러」로부터 1966년에는 4천만 「달러」, 67년는 6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석탄생산은 1967년 1월부터 월까지는 계획고에 대하여 백%에 달하였으나 10월·11월·12월에는 각각89%, 72%, 69%로 쇠락 하였다. 이것은 축탄량이 65년말과 66년말에는 각각 97만톤과 94만톤이던 것이 67년말에는 2백 23만톤으로 배를 훨씬 넘는데 이를 정도로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폐광이 속출하게 된 탄광업계는 1967년말 현재로 10억 2천만 원의 체불 노임을 지니고 작년 10월·11월 두달 동안에 5천 6백 11명의 광부를 해고하였다.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은 광부들의 산발적인 시위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A5 1968년 1월 16일 강원도 장성 도동회관 앞길에서 광부 1천 여명이 정부의 연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강원탄광의 광부 1천여명은 정부의 연료정책시정투쟁궐기대회를 열고 유류 대체로 인한 감원반대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어 1월 18일 오전 전국광산노조투쟁위원회 제3도계 지구 연료정책 시정투위 (위원장 김억원·33) 산하 2천 여명의 민·공탄광 노조원들은 도계 문화관에서 궐기대회를 마치고 시위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속히 연료대체정책을 시정하라’ 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유류대체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도계역 앞에서 자진 해산하였다.

A6 김억원

A7

A8 [2천광부 궐기대회], 『중앙일보』, 1968.1.18(7)

A9

A1 서울대 사범대 독서회 사건

A2 1968.4.3.

A3 1968년 4월 3일 서울사대독서회 사건 발생.

A4 1968년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삼선개헌을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 이르렀다. 그에 따라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가장 큰 반대세력이었던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른바 ‘서울사대 독서회사건’ 을 조작해내기에 이른다.

A5 1968년 4월 3일 서울지검公安부에서는 서울대 사범대 일부 졸업생과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독서회’ 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였던 김기수 등 5명을 반국가단체 구성·음모(국가보안법 위반) 및 찬양·동조·표현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아온 2명은 기소중지, 달아난 1명을 수배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무력침공에 앞서 공산당의 지하조직을 획책, 구성원들이 불온서적을 돌려가며 탐독, 공산당식 점조직을 확충하려 하였다는 혐의였다. 김기수는 서울대 사범대 교육과 2학년에 재학 당시인 65년부터 신입생 노모, 이모 등을 포섭, 10여회에 걸쳐 “우리의 임무는 남한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일으키는 것” 이라는 강좌를 해오며 북한노동당 하부조직으로 사범대 내에 ‘중앙위원회’ 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기로 합의, 신입생 10여명으로 우선 ‘독서회’ 를 만들고 67년 4월초 서울시내 사직공원 뒤 활터에서 앞의 노모, 이모 두 사람을 불러내 노트를 찢어 만든 북한기를 오른손 들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바쳐 공산당 수령에 충성을 맹세한다’ 는 등의 선서식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A6 구속기소 - 김기수(서울대 사범대 교육과 졸), 김이부(서울대 사범대 졸, 전국중학교 교사), 김각(서울대 사범대 3), 최향전(무직,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졸), 이양호(현대서림 주인), 기소중지 - 이종태(서울대 대학원생, 서울상대 졸), 정동오(철공장 경영, 고려대 졸)

A7

A8 [서울사대생 등 5명 기소], 『경향신문』 1968. 4. 4(3) /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258쪽.

A9

A1 낙원시장 철거민 입주권 보장 항의 시위

A2 1968.4.9.

A3 1968.4.9. 낙원시장 철거민 입주권 보장 요구 시위.

A4

A5 1968년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낙원시장 철거상인 3백 여명은 당국이 구낙원시장을 철거할 때 입주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 연좌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종로구 운니동 「에덴」예식장에서 김만규 종로구청장이 공약한 낙원 「수퍼·마켓」의 입주권을 기존 상인들에게 주지 않고 모회사에 일괄 넘겨 주려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에 나섰다.

A6 김만규

A7

A8 [철거상인 연좌항의], 『중앙일보』, 1968.4.9(7)

A9

A1 동양기계 파업 및 단식농성

A2 1968.4.5- 1968.4.11

A3 1968년 4월 5일 동양기계 단식농성 / 4월 6일 노동청 진상조사 착수 / 4월 8일 단식농성 중이던 노동자 이상봉 등 3명 출도후 입원, 대한노총 영등포 지구협의회 정식 관여 결의 / 4월 10일 노동청의중재안을 회사측이 거부, 노동청 회사장부 압수 / 4.13 대한노총 동양기계노사분규에 동정시위를 벌이기로 결의 / 4월 11일 회사측과 노동자의 합의

A4

A5 1968년 4월 5일부터 동양기계에서는 부당해고와 휴업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4월 6일 노동청 서울시 근로감독관은 진상조사에 나서 회사측은 ①정당한 예고없이 사원들에 대해 부당한 해고를 한다고 통고한 점 ②아무런 신고 없이 휴업을 한점 등 근로기준법을 공공연히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4월 8일 4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동양기계공업 노동자 이상봉(31.영등포구 신대방동118)등 3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대한노총 영등포구지구협의회(회장 서례근)는 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동양기계분회의 노사분규에 협의회에서 정식 관여하기로 결의하고 농성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18개 지부로부터 각각 2천원씩, 분회로부터는 각 1천 원씩을 모으고 필요한때는 인력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동양기계공업의 노사분규를 조정하기 위해 노동청은 직접조정에 나섰다. 4월 10일 회사측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노동청은 ① 오는 30일까지 전 종업원을 취업시키며 종업원은 업체의 시설보호와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측은 모든 사태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익을 보장한다 ③ 노사간의 모든 문제는 노사협의회에서 행한다 ④ 종업원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한다는 등 협상안을 내놓고 합의를 중용하였으나 회사측은 무조건 ‘선해산 후타협’을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회사가 계속 협상을 거부하므로 이날 동양기계의 월급대장 등 관계장부일체를 제출받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한편 대한금속노조 영등포지역분회서는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의 노조원의 생계보조를 위해 쌀 5백 가마를 도와주기로 하는 등 동정시위마저 벌여 사태는 더욱 번졌다. 4월 10일 하오 노동청은 김정렬 근로감독관 등 8명의 직원을 동양기계공업회사에 보내 출근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건강진단서류, 임금대장, 취업규칙, 퇴직금지불관계서류, 연차월차유급휴가실시명세서, 안전보호관리자및 요원선임관계서류 등 9개 장부를 압수하였다. 노동청은 동양기계노사분규의 직권조종이 회사측의 거부로 실패하자 65년부터 현재까지 동양기계측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가려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노총 영등포지역협의회에서는 4월 13일 동양기계노사분규에 동정시위를 벌이기로 결의, 협의회장 서예근(51) 이름으로 10일 하오 2천명 노동자들의 옥외집회계를 경찰에 냈다. 이 같은 내외적인 압력에 견디지 못한 회사측이 4월 11일 오후 6시 종업원 징계와 해산 고집을 철회하고 4개 항목에 합의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회사측에서는 종업원들의 노조결성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임금인상문제는 앞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A6 이상봉, 서예근, 김정렬.

A7

A8 [노동청, 진상조사], 중앙일보, 1968.4.8(3) / [농성3명졸도 동양기계 분류확대], 중앙일보, 1968.4.9(8) / [노동청 중재도 거부], 중앙일보, 1968.4.10(3) / [동양기계 장부압수], 중앙일보, 1968.4.11(7)/ [동양기계 분류 단락], 중앙일보, 1968.4.12(3)

A9

A1 동자동 철거민 항의 시위

A2 1968.4.16.

A3 1968.4.16 동자동 철거민 대표 1백여명 정착지 이주요구 시위.

A4

A5 1968년 4월 16일 서울 동자동 철거민 대표 1백 여명은 서울시에 몰려와 정착지를 시흥동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가 정착지로 정해진 성북구 중계동이 이미 모 학원에 불하된 땅이어서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또 5월 14일에는 서울시 서대문구 금화산 일대 (천현동, 냉천동, 북아현동) 무허가 판잣집 주민 4백 여명이 서울 시청에 몰려와 김현옥 시장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1961년 이전에 집을 짓고 그 동안 재산세, 취득세 등을 계속 물어왔으며 작년 국회 의원 선거 때는 김시장이 직접 활터 앞에 와서 “양성화 해 주겠으니 집을 고쳐라” 고 약속하여 평균 2만원씩 들여 집을 고쳤는데 갑자기 15일까지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시영 「아파트」를 짓기 위해 1억 7천 만원의 국고 보조를 받고 무허가 주민(4천여가구)들을 철거토록 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동한 기동 경찰대원 50여명과 김영제 서대문구청장 등 직원들은 “기존 건물 양성화 공약을 지켜라” “허덕이는 생활 속에 「아파트」 필요 없다” 등 들고 온 플래카드를 뺏고 몰려갈 것을 권유하였다.

A6

A7

A8 「정착지를 시흥으로」, 『중앙일보』, 1968.4.16.8면

A9

A1 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법 개악책동 저지투쟁

A2 1968. 6.1-1971. 12. 27

A3 1968.6.1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법개정건의안 국회에 제출, 노총측 이에 즉각 반발, ‘총궐기’ 결의/1968.7.5. 국회 경제화학심의회와 보건사회부에서 경제인연합회의 개정안 유보결정/1969.2. 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①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인하 ② 부녀 및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 대폭 연장 ③ 유급 휴일 일수의 대폭 축소 ④ 귀책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제외 ⑤ 산전, 산후 휴일 축소 ⑥ 부당노동행위 규제명령 및 쟁의중재제정의 효력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법 건의/1969.3.3 노총, ‘대한상회의의 몰지각한 노동법 개악책동을 규탄한다’ 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1969.3.10 노동절, 특별 결의문을 채택/1969.12.20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임시특례법’ 국회통과

A4 사용자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965년의 개악책동에 이어 노동관계법을 개악하여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하는 손해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개악책동을 소위 ‘건의’ 라는 미명하에 1968년 6월과 12월, 그리고 1969년 2월에 걸쳐 집요하게 진행시켰다.

A5 1968년 6월 1일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경제건설과 수출산업의 진흥’ 을 이유로 기존 근로기준법상에 규제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과 유급 휴가제의 단축 내지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노총은 6월 1일 ,즉각적으로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근로 기준법의 개악을 결사 배격’ 하면서 2백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총궐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같은 전체 노동계의 반대로 경제인연합회의 개정결의안은 경제과학심의회와 국회 보사위에서 7월 5일 일단 저지되었

으나 그 후 정부 경제부처는 현행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15%이내에서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생산선 임금제를 주장하고 나서, 이에 힘을 입은 듯 1968년 12월과 1969년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은 동법 개악책동을 관계요로에 건의하였다. ①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인하 ② 부녀 및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 대폭 연장 ③ 유급 휴일 일수의 대폭 축소 ④ 귀책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제외 ⑤ 산전, 산후 휴일 축소 ⑥ 부당노동행위 규제명령 및 쟁의중재제정의 효력제한 등. 이에 3월 3일 노총은 ‘대한상회의의 물지각한 노동법 개악책동을 규탄한다’ 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고, 3월 10일 노동절에는 이에 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1969년 후반 노동관계법 개악과 임금규제 등을 ‘신년(70년) 경제정책종합건의’ 속에 포함시켜 당국에 건의하였다. 그 골자를 보면, ① 법정 근로기준의 인하 ② 산별조직의 해체와 직장별 조합의 환원 ③ 제2조직의 허용 및 쟁의의 억제 ④ 생산성 임금제 ⑤유니온샵 제도의 불법화 등이었다. 이에 대해 노총은 즉각 ‘18세기적인 노예노동의 강요’ 라고 규탄하는 한편 이의 결사분쇄를 다짐하는 성명을 11월 8일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계의 결사적 반대는 결실을 보지 못한채 사용자 단체의 개악책동과 동시 진행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이 1969년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어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법’ 에 의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봉쇄됨으로써 일대 패배와 함께 노동운동은 원천적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다.

A6

A7

A8 3·3 노총성명, ‘대한상회의의 물지각한 노동법 개악 책동을 규탄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30-731쪽, 부록 3-51-2/3-10 노총 특별 결의문,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시책 건의]규탄 결의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30쪽, 부록, 3-51-1/11-8 노총성명, ‘대한상회의의 노동법 개악 및 임금규제 책동을 규탄하면서 50만 조직노동자의 운명을 걸고 결사 투쟁할 굳은 결의를 천명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32쪽, 부록 3-53

A9

A1 자본시장육성법안 제정 반대투쟁

A2 1968.6.27-1968.7.3

A3 1968. 6. 27. 정부·여당, 전문 52조의 ‘자본시장육성법안’ 국회상정, 제66회 임시국회 종결일인 7월 4일까지 통과할 것 계획/1968. 6.28. 노총측, 동법안의 통과저지 투쟁 결의/1968. 6. 29. 노총 중앙위원회 소집, 중앙위원 전원으로 대책위원회 구성, 저지 투쟁전략 숙의/1968.7.1. 노총 제88차 중앙위원회,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강화, 3단계 투쟁전략을 수립, 제1단계로 대정부·국회 활동, 제2단계로 정부관리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 전개, 제3단계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1968.7.3. 해운노조 산하 조합원 3천명을 비롯, 철도, 광산, 전력, 체신 등 정부관리 기업체 및 공무원 노조 지부 등에서 3만 5천명의 백지위임 사표 제출, 오후 국회 재경위원회, 문제된 동 법안 제2장 제4조를 삭제하고 동 법안의 금회기내 국회 통과 보류하기로 결정

A4 1968년 6월 27일 정부와 여당은 ‘주식의 분산을 통해 노동대중의 경영참여와 내자조달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한다’ 는 명분아래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 종업원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보상금 등을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담은 전문 52조의 자본시장육성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남준의원의 제안으로 제66회 임시국회회기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통과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A5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여당의 ‘자본시장육성법안’ 에 대해 「① 국영기업 및 대기업의 건전한 주식공개와 ②종업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 회사라는 관념을 갖게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③ 1인 체제의 관리능력이 한계성에 달해 다수의견의 집합이 필요한 최근의 경영추세로 자본시장 육성법안이 필요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6월 28일 노총측은, ‘노동자의 정지조건부 채권인 임금급부의 일부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유

재산권의 침해이며 위법' 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중대 법안이 노동 대표에게는 극비로 부쳐진 채 정부·여당 및 경제단체간에 수개월에 걸쳐 협의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 을 표시하면서 2백만 전체 노동자의 역량을 집결하여 동 법안을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어 29일에는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공화당 관계자를 출석시켜 노동단체를 소외시킨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동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과 동시에 중앙위원 전원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지 투쟁전략을 숙의하였다. 7월 1일 속개된 제88차 중앙위원회는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강화하는 한편 3단계 투쟁전략을 수립, 제1단계로 대정부·국회 활동을 벌이며 제2단계로 정부관리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제3단계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7월 3일 해운노조 산하 조선공사, 해운공사, 준설공사, 조합원 3천명을 비롯, 철도, 광산, 전력, 체신 등 정부관리 기업체 및 공무원 노조원이 속해 있는 노조 지부에서 3만 5천명의 백지위임 사표를 제출받은 노총은 '국회 및 정부의 위헌적인 자본시장 육성법안의 전격 제정책동을 규탄하면서 이의 저지를 위해 결사투쟁할 2백만 노동자의 굳은 결의를 천명' 하고 각 지부에 동원지시를 내려 재경 노조원 1천여명을 동원 대기시키고 국회 등지에서 시위 전개를 표명하였다. 전체 노동계의 반대와 저지투쟁에 의해 3일 오후 국회 재경위원회는 문제된 동 법안 제2장 제4조를 삭제하고 이 법안의 회기내 국회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노총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투쟁한 전국 관련 노동자들은 이 법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고, 나아가 경제인연합회의 부당한 악법 제정책동을 분쇄하였다.

A6

A7

A8 7-3, '노총 성명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622-623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621-622쪽.

A9

A1 통일혁명당 사건

A2 1968.8.26-1972.7.

A3 중앙정보부는 1961.8.23일 오전 통일혁명당 간첩단사건의 진상을 발표./ 이 보다 앞서 1968.8.20. 북한 753부대 참모장으로 부터 이문규 부부를 구하라는 특별지령을 받고 무장공작선으로 제주도 에 도착한 북한군 14명이 발각되어 교전 끝에 12명은 사살되고, 이관학·송승환 등 2명은 체포 / 1968.9.29. 투옥된 김종태는 서울구치소를 탈옥, 도주하려다 붙잡힘으로써 특수도주 미수죄가추가 / 1969.1.27.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6부(재판장 : 이상원 부장판사)는 '통일혁명당'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종태·김질락·이문규·이관학·송승환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간첩죄)·내란예비음모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신광현·정중운·오병철 등 4명의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또 재판부는 윤상환 등 나머지 21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최고 징역 15년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등 관련 1고인 30명 전원에게 유죄선고 / 1969. 5. 26.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 윤운영 부장판사)는 '통일혁명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질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등 4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등을 적용,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 신광현·정중운·이재학·오병철 등 4명의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1969. 7. 10. 김종태 사형 집행 / 1969. 9. 23. 2심 재판에서 김질락, 이문규, 사형 확정 / 1969. 11. 6. 이문규 사형 집행 / 1969. 11. 28. 윤상수 사형집행 / 1972. 7. 15 김질락 사형집행

A4 박정희 군부과시즘의 공세 속에서 운동의 합법적 공간은 지극히 협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혁적 사회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초는 지극히 협소화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배체제와 대결하여 변혁적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고 기층 민중운동의 성장 및 변혁운동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전위적인 제 세력의 활동 시도는 비공개, 비합법적인 형태로 전개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은 이른바 60년대, 70년대의 조직사건들로 표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비합법 혁명조직으로서는 사건화된 것이 68년 8월

발표된 통일혁명당사건이었다.

60년대초 선진적인 학생운동인자나 학생운동 출신인자들은 4·19 이후 정치적 경험과 한일회담 반대투쟁기의 경험을 통해 이념적으로 대단히 심화되어갔다. 더구나 5·16이후 위축되었던 정치적 분위기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통해 해빙되고, 군사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운동적 공간이 확대되면서, 4·19 이후 혁신적인 청년운동, 학생운동을 하였던 세력 및 60년대 전반의 일부 학생운동 세력들은 사회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세 세력은 군부과시즘의 대두와 한일회담의 반대투쟁의 실패라는 상황에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은 군부과시즘의 대두로 인한 지배체제의 강고화에 대응하여 자연발생적 대중투쟁 역량을 어떻게 조직적인 혁명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부과시즘의 극복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변혁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운동역량과 북한의 혁명역량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태동된 것이 통일혁명당이었다. 1968년에 검거된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일혁명당 전라남도 창당준비위원회(일명 임자도 조직)의 구성원들(최영도, 정태묵, 김수상 등), 통일혁명당 서울시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원들(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신영복 등), 남조선해방전략당의 구성원들(권재혁, 이일재 등)이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정책도 변화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4·19가 실패한 이유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광범위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의 부재”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서의 지하당 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우선 북한은 대남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크게 개편하였다. 1961년 1월 북한은 종래의 노동당 연락부, 민족보위성 경찰국, 내무성 반탐정치 등 대남공작기관을 통합하여 연락국으로 승격 개편하였고 초대 연락국장에 이효순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1964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조선혁명론’과 ‘3대혁명 역량강화론’으로 표상되는 남한 혁명의 독자성에 대한 정식화이다. 즉 남한에서 건설되는 지하당은 북조선노동당의 지부가 아니라 남한의 역량에 바탕을 두되 북한의 지원을 받는 정당으로 위치규정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기존의 연락국을 대남사업총국으로 개편, 강화시켰고 남한에서의 지하당 건설에 본격 매진하도록 하였다.

A5 1969년 창당을 선언한 통일혁명당의 조직 모체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는 1964년이였다. 한국에서 통일혁명당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 모순은 대중운동의 성장에 대한 미국과 지배세력의 반혁명적 대응으로서 종소적 군부과시즘의 등장과, 그러한 등장을 계기로 한 국민적 저항의 연쇄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 이후 잠복하고 있거나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던 구 좌익혁명운동세력, 혁신계 세력, 50년대 학생운동 과정에서 성장하였고 혁신계 정당의 외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념적 청년운동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통일혁명당이 조직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김종태로 대표되는 구남로당의 영향을 받은 인자, 그리고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추동을 받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형성한다.

통일혁명당의 핵심인물이었던 통혁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태는 1929년 경북 출신으로 일본 마포중학교를 나온후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산하단체인 치안유지대에서 활동하였다. 1946년 대구 10월인민항쟁에 참여해 피신생활을 하였고 이후 남로당에 관계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후 그는 둘째형 김상도(3대 국회의원, 자유당)의 비서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4·19 직후 출소하여 경북노동연합회 지도고문으로 참여하고 『한국노동신문』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고시공부 하고 있던 조카 김질락을 설득해 서울로 올라가서 책을 만들자고 권유하였다.

김종태와 함께 상경한 김질락은 김종태를 비롯하여 학생운동 출신인 이문규, 김진환 등과 만나면서 『청맥』지 발간을 준비하여 1964년 7월 31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다음날인 8월 1일 『청맥』 제1호를 발간하였다. 김질락은 『청맥』의 편집장이 되었고, 그의 후배인 이문규가 주간이 되었다. 이후 『청맥』의 역할은 민족주체 의식과 반미사상의 선전 선동의 무기,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청년, 지식인, 학생의 결집의 구심력, 당 내의 지도적 핵심의 발굴 및 당의 전위적 인자의 포섭, 민심의 방향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여론조작에의 능동적 참여 등으로 구체화되어갔다. 『청맥』은 비교적 학술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 동시에 매우 비판적이고 참신한 논문을 게재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자연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권두언을 문제삼아 김질락을 소환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청맥』은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새문화연구회’라는 학술단체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후 김질락과 이문규는 김종태로부터 조직적인 ‘교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맥』에 핵심적인 인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비쳐졌다. 그리하여 이문규는 김질락과 다투어서 나간 것으로 위장하여 『청맥』을 떠나 학사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명동의 학사주점을 인수하여 광화문으로 이전한 다음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실내에는 낙서판을 마련하고 시화와 그림을 전시하여 분위기를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개조하였고, 민요음악을 틀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것을 생각하였으며 주주들을 중심으로 60년대 학사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최영도와 함께 입북한 경력을 가진 정태묵은 북으로부터 2,300만원의 자본금을 수령하여 서울에 삼창산업사를 설립하고 목포에 동성서점도 설립하였는데 김종태는 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서울시 조직건설을 준비하였다. 동시에 김종태는 이와는 별도로 경북지경의 조직건설에 착수하였다. 경북조직의 건설은 그가 과거에 관여하였던 대구지역의 남로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였다. ‘한국노동신문사’ 부사장을 역임한 신광현은 초기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고, 정종소, 이장현등도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후 김종태는 경북조직의 구성원 정종소 등을 통하여 이들과 대구 노동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일재, 권재혁 등의 ‘남조선해방전략당’과의 연합을 시도하였다.

김종태는 이문규와 김질락의 포섭, 『청맥』의 발간과 학사주점의 운영은 서울 중심의 당 기간조직을 실현하기 위한 예비작업이었다. 비밀 조직활동을 같이 해오던 중 1965년 11월말 어느 정도의 사상적 교양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김종태는 전위당의 건설안과 그 위상, 당세포이 조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종태는 당의 명칭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통일혁명당’으로 정하고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들은 지식인,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조직화를 시도하는 한편 각종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산하 학생조직을 동원하여 1967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부정행위 반대투쟁과 미국 부통령 험프리 방한 반대투쟁 등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1968년 8월 24일 소위 70년대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지하당을 망라, 결정적 시기를 만들어 민중봉기와 국가전복을 꾀하였던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총 158명을 타진, 그 전모를 발표하고 그중 1차로 73명(구속 50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폭력전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을 위해 게릴라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구축과 민중을 선동하여 봉기시킬 수 있는 지하당 조직에 혈안이 되어 고도로 지능화한 수법으로써 국내 각계각층에 손을 뻗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칭 통일혁명당 간첩사건은 ‘건국후 북한의 지하당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북한은 이들의 보고를 과대망상적으로 과신, 평화통일을 무력통일로 전환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북한의 공작수법은 이번 사건에서 살펴보면 핵심조직인 지도부는 은폐해놓고 지식인, 학생, 청년층을 포섭하여 학술연구를 가장한 9개의 위장단체를 조직하고 이것을 자연발생적인 것처럼 조작하여 용공적인 조직형태로 발전시켜 점차로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에 규합시킴으로써 무장봉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 ‘소위 혁신의 탈을 쓴 용공사상의 배경과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반국가적인 언동을 일삼으면서 불평불만을 선동하는 용공불순분자 색출에 가일층 분발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모택동식 전법과 ‘베트콩’의 게릴라전법에 동학란식 민중봉기전법을 수용,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을 구성, 이를 기간으로 활동해온 가칭 통일혁명당 간첩단은 학사주점, 새문화연구회, 청년문학작가협의회, 불교청년회, 동학회, 청맥회, 민족주의연구회, 기독교청년경제복지회, 경우회 등 9개의 씨클을 갖고 있었다고 중앙정보부는 발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이 조직이 재남 고정간첩인 김종태를 중심으로 김질락(청맥사 주간)·이문규(학사주점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문리대를 비롯, 각 대학 출신 혁신적 엘리트로 구성되었고, 이중 주모급들은 전후 4차례나 북한을 왕래하면서 김일성을 만났고 북한대남사업 총국장 허봉학(인민군 대장)으로부터 지령과

미화 7만불, 한화 2천 3백 50만원의 공작금을 받아왔으며 ‘통일혁명당’을 혁신정당으로 위장, 합법화하여 각계 각층에 침투시켜 핵심분자를 통해 반정부(6·8부정선거 규탄) 반미(미국 험프리 부통령 내한 반대) 데모를 벌이게 하는 등 정치, 사회적 불안요소 비난을 빚자한 대정부공격과 반정부적 소요를 유발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조직의 주요 임무와 활동은 ‘민중봉기, 간첩의 무장집단 유격대화, 무력투쟁에 있어서 수도권 장악을 위한 준비, 북한으로부터 인수할 무기수령 양륙지점 정찰 및 특수전술 교관요원의 포섭, 월북’ 등 14개항에 달한다고 중앙정보부는 발표하였다.

이 조직은 청택지를 기관지로 운영, 혁신적인 지식인과 학생층의 사상전환에 중점을 두는 한편, ‘선조직 후공격’ 전략으로 전 남로당계 인물을 포섭, 정예조직으로 지하에 잠복시키고 9개 씨클을 표면활동시켜 각종 정보를 수집, 북한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또 이문규 부부로 하여금 서울 명동과 광화문에 학사주점을 경영케 하여 청년학생을 선동하는 집합장소로 썼고 재일조총련 국내 지하조직인 가칭 ‘남조선해방전선당’과 접선, 여기서 막대한 공작금을 받아 조총련계인 동해상사와 비슷한 위장기업체의 설립을 꾀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구속된 자들 중에는 북한의 ‘9·9절’에 백두일이라는 가명으로 재차 월북하려던 김종태와 전직 국회의원 김상도, 문학평론가 임중빈, 그리고 공무원, 교직원, 문화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부는 통일혁명당 전남도당사건 27명의 피의자중 정태묵(45·무전간첩)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팔만(51·농업)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중 주범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 등 세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및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박신규 김홍구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였다. 검찰은 김학춘 등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 구형하였다. 검찰은 “정·최피고인 등이 62년 1월 이후 평양을 왕래(1~4회) 북괴노동당에 가입, 공작금 1045만원과 무전기 4대·권총·암호표 등을 받아 지하당조직 지령을 완수하기 위해 목포 등을 중심으로 북괴노동당 전남도당을 지하당으로 조직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지만, 확신범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없는 인물로 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논고하였다. 다음은 1심 구형량이다. (징=징역·자=자격정지) 정태묵(45·무전간첩) 사형 최영도(46·무전간첩) 사형 윤상수(50·전중학교사) 사형 박신규(41·전국민교교장) 무기 김홍구(48·서울삼창산업사장) 무기 김학춘(33·무직) 징15년 자15년 정태상(42·농업) 동 최수남(26·농업) 동 최병복(29·농업) 동 정태인(32·어업) 징5년 자5년 김인태(33·전대중당대변인) 징2년 자2년 최병대(55·농업) 징1년 자1년 오종득(54·농업) 동 최용모(36·농업) 징3년 자3년 이팔만(51·농업) 징1년 자1년 강지원(43·농업·여) 징2년6월 자2년6월. 법원에서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 정태묵(45·무전간첩) 최영도(46·무전간첩) 윤상수(50·전 중학교사) 등 세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최영도, 최수남 두 피고인에 대해서만 62년도에 있는 회합죄에 대해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판결을 내리고, 박신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김홍구 피고인 등 12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전대중당 대변인 김인태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집행유예2년에서 3년까지를 선고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사건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불고지죄로 기소된 사람들이다. 다음은 선고형량이다. (괄호 안은 구형량, 징=징역, 자=자격정지) 정태묵(45·무전간첩)사형 최영도 (후·무전간첩) 사형 윤상수(50·전 중학교사) 사형 박신규(41·전 국민교장) 무기 김홍구(48·서울삼창산업사장) 지역15년(무기) 김학춘(33·무직0징역7년9징15 자15) 정태상(42·농업) 징역7년(징15 자15) 최수남(26·농업) 징역5년 (징15 자15) 최병복(29·농업) 징역5년(징15 자15) 정태인(32·어업) 징역2년(징5 자5) 김인태(33·전 대중당 대변인) 징역1년·집행유예2년(징2 자2) 최병대(55·농업) 징역1년·집행유예2년 (징1 자1) 오종득(54·농업) 징역1년·집행유예2년(징1 자1) 최용모(36·농업) 징역1년6월(징3 자3) 이팔만(51·농업) 징역1년·집행유예2년(징1 자1) 강지원(43·여·농

업)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징2년6월 자2년6월).

2심에서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죄 등을 적용, 1심 구형량과 같이 사형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최영도(46)가 교도소 안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심에서도 정태묵과 윤상수는 사형을, 나머지 피고인들도 유기형이 선고되었다. (팔호안은 구형) 정태묵=사형(사형) 윤상수=사형(사형) 박신규=징역10년·자격정지10년(무기) 김홍구=징역7년·추징금15만원(무기) 김학춘(33·무직) 징역5년·추징금11만3천원(징역15년) 정태상(42·농업) 징역4년(징역15년) 최수남(26·농업) 징역4년·추징금5천원(징역15년) 최병복(29·농업) 징역3년(징역15년) 정태인(32·어업) 징역2년·집유4년 추징금25만원(징역15년) 김인태(33·전 대중당대변인) 징역1년·집행유예2년(징역2년) 최병대(54·농업) 상동 오종득(54·농업) 상동 이팔만(51·농업) 상동 강지원(43·여농업)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징역1년6월) 최용모(36·노동) 징역1년6월·추징금 1천5백원(징역3년) A6 정태묵(45), 최영도, 윤상수(50·전 중학교사), 박신규(41·전 국민교장), 김홍구(48·서울삼창산업사장), 김학춘(33·무직), 정태상(42·농업), 최수남(26·농업), 최병복(29·농업), 정태인(32·어업), 김인태(33·전 대중당 대변인), 최병대(55·농업), 오종득(54·농업), 최용모(36·농업), 이팔만(51·농업), 강지원(43·여·농업).

A6 김종태(동국대 졸, 자동차 매매업, 청맥사 설립, 통일혁명당 당수), 김질락(서울대 문리대 졸, 김상도 의원 비서, 청맥지 주간, 경남매일신문 논설위원, 통일혁명당 지도부 형성 지도책,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이문규(서울대 문리대 졸, 청맥사 편집장, 동남상역 상무, 학사주점 초대 대표, 통일혁명당, 남조선 혁명당 지도부 지도책), 이재학(서울대 문리대 졸, 교학사 사원, 보험회사 사원, 학사주점 2대 대표), 오병철(서울대 문리대 졸, 동아출판사 사원, 64년 7월 인혁당사건으로 구속, 그해 10월 공소취하 석방. 통일혁명당 교양책), 윤상환(고려대 졸, 우진산업 상무, 조양문화사 사원, '데비드 윙' 사 상무, 조국해방전선 교양책), 신향식(서울대 문리대 졸, 노동청 근무, 동아출판사 사원, 60년대 학사회 상무간사, 조국해방전선 구성원), 허정길(중앙대졸, 농촌지도원), 이해경(서울대 문리대 재학, 비봉중학교 교사, 학사주점 구성원), 김병영(숙명여대 졸, 이문규와 부부, 명신공민학교 교사), 순준철(경북외대 및 대학원 졸, 해군대위, 해군 포항병원 근무, 이문규 도피후 연락담당), 권재혁(서울대 문리대 졸, 미 몬타나주립대 조지타운대 경제학 전공, 국제참지사 서울사무소 지배인, 45년 9월 남로당 입당, 63년 8월 이일재와 노농계급당 구성, 전략당 조직총책), 이일재(대구해성고졸, 46년 9월 남로당 입당, 전략당 지도원), 이강복(조도전대 중퇴, 47년 남로당 입당, 회사 수위, 전략당 지도원), 이형락(가명 이권, 성도중학 졸), 조현창(진주고 졸, 라디오 부속상), 나경일(일본상반중 중퇴, 한국나이론 공원), 김봉규(평남의명중 3년 중퇴, 전략당 가입, 무면허 치과의사), 노 정훈(건국대 3년 중퇴,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건대지부 위원장, 통일사회당 준비위원회 상임위원, 전략당 마포조직책, 의류제조업), 박점출(초등학교 졸업, 노동), 오시황(사회대중당 입당, 운전사), 노인영(고려대 졸, 서울대 대학원 중퇴, 과학기술처 행정주사), 이종태(서울상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졸업, 인구문제연구소 연구원보), 임중빈(성균관대 국문과 졸, 희망출판사 기자, 교육평론가), 김희순(성균관대 법정대 졸, 국방대학원 문관, 전 해군 3급 문관), 임규택(동국대 졸, 회사원), 권오창(32, 무직), 신광현(44, 상업, 대구상업학교 졸업, 통일혁명당 경북 조직책), 조종소(42, 주리아화장품 수금원, 양정중 졸, 국민학교 교사, 한국노동신문 편집부 차장), 이장원(31, 농업, 남성현고등공민학교 졸), 이영운(28, 공군정훈장교, 서울사대 졸), 오병현(28, 무직, 중졸), 박영숙(37, 무직, 동국대 화학과 2년 중퇴, 김종태의 처), 김상도(54, 신민당 제14지구당 위원장, 대구교남학교 2년 중퇴, 전민의원, 자유당 감찰징계위원장), 신영복(27, 육군중위, 서울상대 졸, 숙대 강사, 육사 교관), 박성준(28, 서울상대 3년 재학), 이수인(28, 무직, 서울상대 졸, 공군중위 제대, 전 법무장관 비서), 김병권(47, 상업, 대구수창초등학교 졸), 심재주(26, 신문사 견습기자, 서울대 문리대 졸), 신남휴(25, 해군소위, 서울상대 졸, 사상계 사원), 김국주(22, 외환은행원, 서울상대 2년 중퇴), 은철수(23, 한국은행원, 서울상대 졸, 대학원 재학), 박경호(23, 서울대 문리대 정치과 3년 재학), 박진환(39, 상업, 동국대 정치과 4년 중퇴), 양동림(41, 무직, 전남여고 졸)

A7 새문화연구회(68년 5월 월북한 서울대 문리대 출신 김진영이 주도), 청년문학가협회(성균관대 출신 평론가 임중빈이 주도), 불교청년회(성균관대 출신 김희순이 주도), 동학회(서울대 문리대 출신 노인영이 주도), 민족주의연구회(동국대 출신 권오창이 주도), 경우회(서울상대 출신 이종태가 주도), 기독교청년경제복지회(약칭 EWS, 서울상대 출신 박성준이 주도), 청맥회(서울상대 출신 신향식이 주도, 학사주점(60년대 학사회), 조선민족해방통일전선, 남조선해방전략당

A8 [통혁당(가칭) 간첩사전진상|정보부 발표], 중앙일보, 1968.8.24(7) / [가칭 통혁당 사건], 중앙일보, 1968.8.26(2) / [통혁당 23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1968.9.4(3) / [통혁당 사건 첫공판], 중앙일보, 1968.11.22(3) / [지난9월 탈옥미수], 중앙일보, 1968.11.23 (7) / [청맥에 백만원 투입|지리산 백운농장 거점공작도], 중앙일보, 1968.11.25(3) / [시유지4천여평 착복], 중앙일보, 1968.11.26(7) / [월북때 공작금받았다], 중앙일보, 1968.12.6(3) / [김상도피고병보석], 중앙일보, 1968.12.7(7) / [김종태 공작금 받았다], 중앙일보, 1968.12.11(3) / [이문규도피자금 제공], 중앙일보, 1968.12.13(3) / [김진환피고 10년], 중앙일보, 1968.12.25(3) / [네 피고 첫 군재 통혁당 사건], 중앙일보, 1969.1.7(7) / [두 피고 공소사실시인], 중앙일보, 1969.1.8(3) / [김진환 5년 선고], 중앙일보, 1969.1.11(7) / [김·신 두피고 대질], 중앙일보, 1969.01.11(7) / [간부 월북 도와줬다], 중앙일보, 1969.1.14(7) / [신영복 사형구형], 중앙일보, 1969.01.16 (7) / [신영복에 사형], 중앙일보, 1969.01.27(3) / 김종태 향소포기], 중앙일보, 1969.4.1(7) / [북괴 대형무장간첩선 나포.오늘아침 목포앞 흑산도 근해서|정보부 발표], 중앙일보, 1969.6.13(1) / [쾌속정과 방첩], 중앙일보, 1969.6.14(2) / [김종태 사형집행], 중앙일보, 1969.7.10(7) / [신영복 사형], 중앙일보, 1969.7.24(7) / [김상도 1년], 중앙일보, 1969.09.02 (7) / [김상도 오늘출감], 중앙일보, 1969.9.3(3) / [김진환피고에 징역2년확정], 중앙일보, 1969.9.17(7) / [이문규 사형집행], 중앙일보, 1969.11.6(7) / [김찬락의원 재번 기각], 중앙일보, 1970.10.2 (7) / [통혁당] 사건 김질락도 사형집행], 중앙일보, 1972.07.17(7) / [대규모 고정간첩단 검거 | 임자도 거점 암약, 27명 송치], 중앙일보, 1968.07.20 (1) / [사건관련자는 백18명], 중앙일보, 1968.7.20(1) / [임자도 간첩단 사건 분석 | 전남 노동계에 공작 목표 | 무장조직으로 발전시도], 중앙일보, 1968.7.20(1) / [임자도 거점 북괴지한당 사건 (정보부발표)], 중앙일보, 1968.7.20(7) / [침자에의 방책], 중앙일보, 1968.7.23(1) / [임자도간첩기소], 중앙일보, 1968.8.8(7) / [통혁당 사건 첫공판], 중앙일보, 1968.11.22(3) / [세차례 북괴왕래| 공작금 백만원 수령시인], 중앙일보, 1968.12.5(7) / [지하당 조작자금수령], 중앙일보, 1968.12.12(7) / [정태목 등 셋사형], 중앙일보, 1968.12.19(7) / [정태목·최영도·윤상수에 사형. 임자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중앙일보, 1968.12.27(3) / 향소심첫공판], 중앙일보, 1969.4.4(3) / 정태목·윤상수 사형|박신주·김홍구는 무기], 중앙일보, 1969.04.19(7) / [정태목·윤상수에 사형], 중앙일보, 1969.4.30(7) / [임자도 간첩사건 정태목 사형집행], 중앙일보, 1972.07.29 7면 [2명 사형 확정임자도 간첩 상고심], 중앙일보, 1969.8.27(3) / 편집부편, 『통일혁명당』, 나라사랑, 1988 / 편집부편, 『통혁당-역사성격투쟁-문헌』, 대동, 1989 / 『애국시대』, 대동, 1989

A9 통일혁명당 재건사건

A1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A2 1968.8.24.-1969. 11. 4(권재혁 사형 집행)

A3 1968. 8. 24.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 사건 발표/1968. 9. 9. 서울지검 공안부, 통혁당사건 관련 남조선해방전략당 권재혁(43) 등 11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구속기소/1968. 12. 21.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결심공판, 권재혁 등 4명에 사형 구형, 그 외 관련자 8명에 무-10년형 구형/1969. 5. 27. 향소심공판, 권재혁에 원심(사형)확정/1969. 9. 23 대법원 선고공판, 권재혁 사형 확정/1969.11.4 권재혁(남조선해방전략당) 사형 집행

A4 5.16군사쿠데타 후 합법공간 활동의 한계를 느낀 사회운동가들은 비합법 형태의 전위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고 발표된 권재혁, 이일재 중심의 조직도 이런 흐름에

있는 전위조직 중의 하나이다. 이 조직은 통일혁명당과는 출발이 다른 조직이었으나 권재혁이 통일혁명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종태와 여러 차례 만나 조직을 통합하기로 결의함으로써 1968.8. 통일혁명당사건이 터지면서 함께 조직사건화됐다.

A5 1968년 8월 24일 통일혁명당 관련 사건 발표 때 남조선해방전략당은 같은 사건으로 취급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검찰은 1968년 12월 21일 상오 세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등 네 피고인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내란·예비음모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였다. 담당검사는 “관련 피고인들이 북괴의 최후 발악적인 만행이라든지 북괴가 노리는 남한내의 지하당 조직책동에 적극적으로 호응, 반국가단체를 구성활동 했기 때문에 북괴 지령하에 양민을 학살하는 북괴 공비의 만행 이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하고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구현한다” 고 하였다. 검찰은 주범 권재혁이 67년 2월과 68년 3월 두차례에 걸쳐 도일, 재일조총련간부와 북괴공작원으로부터 일화40만원과 난수표등을 받고 노동자계급을 주축으로 빈농청년학생들을 규합, 이른바 70년도의 결정적 시기에 폭동으로 공산주의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으로 남조선해방전략당을 조직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포섭되어 반국가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피고별 구형량> 권재혁(43·회사원) 사형 이일재(43) 사형 이형락(37·상업) 사형 이강복(58·회사원) 사형 허정훈(31·의류상) 무기징역 김봉규(53·무면허 치과의) 무기징역 박점출(41·노동) 무기징역 조현창(35·라디오부속상)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김병권(46·공업) 징역15년 자격정지10년 오시황(39·운전자)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나경일(37·직공)징역10년 자격정지7년 김관홍(30·공무원) 징역10년 자격정지7년 . 1969년 1월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국가보안 법·반공법을 적용, 권재혁(43)·이일재(43) 두 피고인에게 사형, 이형낙·이강복 두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나머지 8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15년·자격정지 15년에서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들이 반국가 단체인 남조선 해방전략당을 조직, 70년대의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봉기를 하려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경일·오시황두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전략당에 가입한 것은 인정되나 폭동음모를 했다는 사실은 증거가 없다고 말하였다. (괄호안은 구형량) 권재혁 (43·회사원)사형(사형) 이일재(43)사형(사형) 이형낙(37·상업)무기징역(사형) 이강복(58·회사원)무기징역(사형) 노연훈(31·의류상)징역15년·자격정지15년(무기) 김봉규(53·무면허치과의사)징역10년·자격정지10년(무기) 박점출(41·노동) 징역15년·자격정지15년(무기) 조현창(55·상업)징역5년·자격정지5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병권(46·공업)징역7년·자격정지7년(상동) 오시황(39·운전자)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징역15년·자격정지7년)나경일(37·직공)징역5년·자격정지5년(상동) 김관홍(30·공무원)징역5년·자격정지5년(상동)

서울고검 이동봉검사는 69년 5월 19일 상오 열린 남조선 해방전략 당사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권재혁(43·회사원) 이일재(43) 이형낙(37·상업) 이강복(38·회사원)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노정훈(31) 김봉규(53) 박점출(41)등 세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을 적용,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였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1심 선고량) 권재혁사형(사형) 이일재사형(사형) 이형낙사형(무기징역) 이강복사형(무기징역) 노정훈무기징역(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김봉규무기징역(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박점출무기징역(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조현창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병권징역15년 자격정지10년(징역7년 자격정지7년) 오시황 징역10년 자격정지 7년(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나경일우동(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관홍우동(우동)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병준 부장판사)는 5월 27일 상오 서울고법 1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권재혁에게 사형,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일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피고인에게는 최고징역10년에서 집행유예 5년까지를 각각 선고하였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 선고량) 권재혁 사형·추징금28만원 (사형) 이일재 무기징역 (사형) 이형락 징역10년 (무기징역) 이강복 징역10년 (무기징역) 노연훈 징역10년 (징역15

년) 김봉규 징역7년 (징역10년) 박점출 징역10년 (징역15년) 조현창 징역3년·집유5년 (징역5년) 김병권 징역5년 (징역7년) 오시황 징역3년·집유5년 (징역3년6월) 나경일 징역3년·집유5년 (징역5년) 김판홍 징역3년·집유5년(징역5년) 대법원형사부는 1969년 9월 23일 열린 상고심 공판에서 권재혁에 대해 법해석문제를 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양형은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A6 권재혁(43·회사원), 이일재(43), 이형낙(37·상업), 이강복(58·회사원), 노연훈(31·의류상), 김봉규(53·무면허 치과의사), 박점출(41·노동), 조현창(55·상업), 김병권(46·공업), 오시황(39·운전자), 나경일(37·직공), 김판홍(30·공무원)

A7

A8 [통혁당(가칭) 간첩사전진상|정보부 발표], 중앙일보, 1968.8.24(7) / [2차 11명 기소], 중앙일보, 1968.9.9(3) / [네 피고에 사형|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 중앙일보, 1968.12.21(7) / 권재혁·이일재에 사형|해방전략당사건 선고], 중앙일보, 1969.1.18(7) / [권재혁·이일재·이형낙 사형], 중앙일보, 1969.5.19(3) / [권재혁만 사형], 중앙일보, 1969.5.27(7) / [권재혁사형], 중앙일보, 1969.9.23(3) / 경향신문, '대규모 복괴간첩단 통일혁명당 일망타진' 1968. 8. 24/중앙일보, '2차 11명 기소', 1968. 9.9/ 중앙일보, '네 피고에 사형-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 1968. 12.21/경향신문, '해방전략단 사건, 피고인 권재혁, 이일재에 사형', 1969. 1. 18/경향신문,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4피고에게 사형구형', 1969, 2, 5/조선일보, '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도 사형확정', 1969. 9. 24/조선일보, '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 사형집행' 1969. 11.6/이일재, '전략당사건, 그 진상을 밝힌다,' 『사회운동』 1, 사회운동연구소, 1989, 147-151쪽/김지형, '해방전략당과 남민전 사건을 말한다,' 『남북을 잇는 현대사산책』, 선인, 2003, 271-287쪽/편집부, 『공안사건기록;1964-1986』, 세계, 61-85쪽/편집부편, 『통일혁명당』, 나라사랑, 1988 / 편집부편, 『통혁당-역사·성격투쟁·문헌』, 대동, 1989 / 『애국시대』, 대동, 1989

A9 통일혁명당사건

A1 삼선개헌반대투쟁

A2 1968. 12. 17 - 1969. 10. 17

A3 1969.1.7.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 3선 개헌필요성 발언 / 1969.1.10. 박정희 대통령 연두회견(개헌 논의에 언급 / 1969.2.3. 공화당 의원총회·개헌 찬·반 논쟁 / 1969.2.4. 박대통령, 공화당 내에서 개헌거론 금지 지시 / 1969.4.8.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의결 / 1969.4.15. 48항명 주동자로 양순직 예춘호 정태성 박종태 김달수 의원 공화당에서 제명/1969.5.7.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 개헌 필요성 역설/5.10.공화당, 개헌문제에 관한 국민의 고려촉구/5.21, 신민당 전당대회, 개헌저지 결/6.2. 길재호 공화당사무총장 개헌안 내용에 언급/6.5.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준비회의결의/6.7.서울대 법대생 첫 개헌반대 성토대회/6.27. 고대생 첫 개헌반대 가두시위/7.7.박대통령, 개헌문에 관해 「7·7 담화」 /7.12 길재호 공화당사무총장 사임/7.17.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위발기/7.19. 신민당 서울서 개헌반대 유세 개시/7. 25.대통령 개헌투표로 국민의 신임 물겠다고 특별방송/7.26. 개헌지지 첫 성명을 예편장성들 광고/7. 29.공화당 당론조정 의원총회/7. 29.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흥만 의원 3선개헌 지지성명/7.30.신민당 소속 연주흠의원 3선개헌 지지 성명/8. 7.122명 의원, 국회에 개헌안 제안/8. 8. 의사당서 신민당 의원 농성/8. 9.개헌안 국회 본회의 보고 없이 정부에 직송 공고/8. 14.공화당 국민투표법안 국회 제출/8.14.보성 일부 재선거/8. 30.공화당 전당대회 개헌 추진 결의/9.3.공화, 논산에서 개헌 지지유세 개시/9.7.신민당 전당대회서 당 해체 결의/9. 8.개헌안 공고기일 만료/9. 9.개헌안 국회 본회의 상정/9.10.개헌안 제안 설명/9. 11.개헌안 국회질의 토론 개시/9. 14.특별위원회의실로 본회의장을 옮겨 개헌안 통과/10.17.국민투표로 개헌안 통과.

A4 1968년 말부터 국내 정계의 초점은 '삼선개헌' 문제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치러진 68총선에서 이미 개헌선을 확보하였고, 자연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의 중임규정을 철폐하는 '삼선개헌' 이었다. 1968년 8월 신민당 대표 유진오는 부산에서 개헌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도 같은 당의 박병배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개헌에 관한 최초의 발언은 1968년 12월 17일 터져 나왔다. 공화당 의장인 윤치영은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원하면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뒤이어 1969년 1월 6일 공화당 사무총장 길재호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금년 중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날 윤치영은 다시 공식 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공화당 정책위원장 백남억도 1월 9일 당무회의에서 삼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박정희는 1월 10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임기중에 개헌할 의사는 없으나 꼭 필요하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사실상의 개헌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개헌발언이 잇따르자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분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이 ‘48항명파동’이었다. 박정희의 부결 지시가 있었음에도 국회에서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고, 공화당에서는 4월 15일 항명파동의 책임을 물어 양순직, 예춘호, 정태성, 박종태, 김달수 등을 제명하였다. 이렇듯 당내 준비를 마친 공화당은 본격적으로 삼선개헌을 추진하였다.

5월 7일 윤치영은 충분한 시기를 두고 개헌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에서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개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야의 삼선개헌반대투쟁이 계속되던 7월 25일 박정희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개헌문제를 통해 자신의 신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박정희의 특별담화가 발표되자 공화당은 7월 28일 당무회의에서 삼선연임 허용과 국회의원 각료 겸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확정하였다.

8월 7일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정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공화당 총무 김택수는 공화당 108명, 정우회 11명, 신민당 3명 등 총 122명 서명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농성에 들어갔고, 9월 14일 새벽 2시 25분 국회의사당 건너편 제3별관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날치기로 통과된 삼선개헌안은 국민투표에 상정되었고, 10월 17일 국민투표 결과 찬성률 65.1%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삼선개헌은 박정희 일인 독재가 영구화되는 과정이었으며, 1972년 유신독재의 전조였다.

A5 박정희의 장기집권책인 삼선개헌이 추진될 기미를 보이자 재야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1969년 1월 14일 신민당은 정무회의에서 ‘호헌5인위원회(전당대회 의장 김의택,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영규, 정책심의회 의장 정헌주, 사무총장 고흥문, 원내 총무 김영삼)’를 구성하였고, 2월 3일 정쟁법 해금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삼선개헌반대범국민발기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3월 31일에는 신민당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삼선개헌 저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유진오 신민당 총재는 “삼선개헌은 민주주의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말하며, 당의 운명을 걸고 개헌저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국민의 쉼기를 호소하는 주요 도시 유세에 나섰다. 신민당은 5월 3일 광주에서 개헌반대 유세를 열고 ‘박대통령은 개헌문제에 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공화당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에 맞선 야당과 재야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신민당과 정치정화법 해금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온 범국민기구는 각계 대표 36명이 회합하여 6월 5일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월 17일에는 발기인대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재준 목사를 선출하였고, 고으로 윤보선, 유진오, 함석헌, 이재학, 박순천, 장택상, 이희승, 김상돈, 정화암, 임영창 등이 추대되었다. 신민당과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는 7월 14일 서울 유세를 기점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헌 반대유세를 진행하였다.

원내에서도 삼선개헌 반대투쟁이 벌어졌다. 김영삼 신민당 원내 총무는 “앞으로 일체의 원내 협조를 거부한다”고 선언, 6월 13일부터 제 70회 임시국회에서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헌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 대정부 질의는 6월 23일까지 계속되었다.

삼선개헌 반대투쟁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적극 동참하였다. 6월 12일 서울법대생 500여명이 학교 강당에 모여 ‘호헌수호서울법대학생총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경희대 500여명, 경북대

2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학생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문교부는 6월 25일 방학중에 일체의 학생집회를 금지하였고, 홍돈철 문교부장관은 6월 26일 요즘 “학생들이 지나치게 사회문제에 민감한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중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말하였다.

고려대생 5백 여명은 6월 27일 오후 12시30분 ‘정부는 개헌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시위에서 농대 입학과2년 학생 1명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고 연행되었고, 또 다른 1명도 연행되었다. 이에 앞서 법대 학생들이 주동이 된 ‘민주헌정수호위원회’ 학생 6백 여명은 오전 11시 운동장에 모여 ‘학원 내 자치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라’, ‘선병덕군 (27.법대학생회장)의 부당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학내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대구 계명대생 400여 명은 ‘헌정수호성토회’ 를 개최하고 “우리들을 더 미치게 하지 말라” 고 외쳤다.

6월 28일 오후 고려대생 8백 여명은 ‘3선개헌이 조국근대화냐. 정권은 짧고 조국은 영원하다’ 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안암동 로타리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학교로 돌아온 학생 7백 여명은 강당에 모여 ‘학원사찰을 중지하라’, ‘처벌학생을 구제하라’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개헌음모의 역사적 죄악성을 뉘우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 는 등 총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성토회를 연 뒤 학교측의 종용으로 해산하였다. 이날 시위에서 경찰은 이날 사학과1년 김승남(20)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연행하였다가 학교측의 각서를 Tm 고 모두 훈방하였다.

고려대생 7백여명은 6월 30일에도 다시 시위하였고, 진압에 나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학생들은 7월 1일 학교측에서 이날부터 실시 예정이던 교양과목 시험을 16일로 연기하고 정문을 닫아버리자 교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시위를 벌였다. 학교당국이 교문을 열어주어 되돌아간 학생들은 ‘망국적 개헌음모를 분쇄하자’ 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가두로 진출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학교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나홍준(농학과1년) 등 학생 50여 명을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연행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고대생들은 경찰의 경비가 심해 국립극장 쪽에 모이지 못한 채 오후 3시 30분경 을지로 입구에서 2백 여명이 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쫓겨 을지로 입구로 몰려다니다 오후 4시 40분경 해산하였다. 경찰은 민간인을 포함한 고대생 1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고, 그중 김웅(기계4년) 등 21명을 즉시에 회부하고 나머지 1백 여명을 훈방하였다. 6월 30일 연세대생 2천여 명은 노천극장에 모여 ‘3선개헌반대시국선언대회’ 를 열고 5개 항목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가두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자 투석전을 벌인 뒤 학교로 되돌아왔다. 이날 시위에서 이공대 화학과 1년 임창빈(21)이 경찰이 쏜 최루탄 파면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차중훈(19.이공대 화공과 1년) 등 4명의 학생이 경찰봉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학생들은 이날 상오부터 시작된 1학기말 시험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다. 같은 날 부산대생 6백 여명은 교정에서 3선개헌을 반대하는 성토회를 연 뒤 교내를 벗어나 가두시위를 벌였다.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다시 교정에 모여 연좌시위를 계속하다 학교측의 설득으로 하오 2시30분쯤 해산하였다. 이날 서울대생 2백 여명은 ‘3선개헌 절대 반대’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나서 시위를 벌였다. 이보다 앞서 서울대생 6백 여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동교 강당에 모여 8개 항목의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연4일째 성토회를 벌였다. 한편 이날 밤8시30분쯤 서울대 교양 과정부 학생들의 시위를 만류하던 6명의 교수가 경찰봉에 맞아 다쳤다. 이날 학생들은 오후 8시 학교에서 1.5km지점인 공천건널목까지 진출, 대기하고있던 경찰 150여 명과 맞섰다. 학생들은 ‘경찰에 연행된 5명의 학생들을 보내달라’ 고 주장, 투석전을 벌여 경찰은 최루탄 10여 발을 쏘며 경찰봉으로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는데 시위를 막으려고 이들 사이에 끼여있던 교수 6명이 경찰봉에 맞아 부상하였다. 경희대생들은 정경대, 법대, 의대생들 4백 여명이 주동이 되어 7월 1일 오전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로 학교로 돌아왔다. 7월 1일 오전 3선 개헌반대 제3시국대회를 연 연세대생 2천 여명은 교문을 나와 ‘3선개헌 저지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대기 중이던 경찰과 대치하며 투석전을 벌였다. 이날 투석전으로 행정과 4학년 김정웅과 서대문경찰서 최윤성 경위가 머리에 각각 돌을 맞는 중상을 입었다. 한편 연세대는 30일 오후 긴급교무위원회를 열고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1학기말 시험을 7월 7일로 연기하

였다.

7월 1일 오전 10시 서울대 공대생과 서울대 교양 과정 학생 1천 2백 여명은 3선개헌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나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교정에 모여 약 20분 동안 성토대회를 연 다음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학교에서 2km떨어진 공능철도건널목에서 출동한 10여 명의 기동경찰관들과 대치, 약 30분 동안 투석전을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경찰이 학생들의 시위압용으로 처음 등장한 가스 분사기를 사용하자 학생들이 이에 대항 가스 분사기 2대를 빼앗아 부셨다. 경찰은 경찰봉에 얻어맞은 최영필(공대2년) 등 84명을 연행하였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는 서울대 공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외국어대 등의 학생들이 3선개헌에 반대하는 성토 또는 시위를 벌였다. 7월 2일 오전 10시 외국어대생 1천 여명이 교내에서 3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열고 교문을 나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4·19영혼은 통곡한다’, ‘민주헌정 수호하자’ 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고려대생과 합세하기 위해 홍릉으로 넘어가다가 출동한 기동경찰관 2백 여명과 대치, 투석전을 벌인 뒤 해산하였다. 서울대 문리대생 5백 여명은 7월 2일 오전 10시 20분 성토대회를 열고 ‘황소왕조’ 장례식을 가진 뒤 제3선언문을 채택, 교문을 나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경찰의 최루탄 세례를 받고 법대 교정으로 쫓겨 들어갔다. 12시10분 문리대생들은 법대생 2백 여명과 합세, 다시 교문을 나오면서 ‘전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가두로 진출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고 다시 교정으로 쫓겨 들어갔다. 학생 1백 50여 명은 문리대 정문앞에 앉아 ‘3선개헌 철회하라’ 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대 법대 시위학생들은 2일 오후 교문 앞에서 사복 차림의 동대문서 정보과 안승표 형사(36)을 교정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 사고가 나자 6백여 경찰은 정상천 서울시경국장의 진두지휘 아래 이날 저녁 6시 50분부터 9시간 동안 법대 주위를 포위, ‘폭행한 학생의 명단을 내놓으라’ 고 버티어 3일 새벽 3시 학교당국은 경찰에 시위학생 178명의 명단을 내주고 시위학생들을 학교버스로 귀가시켰다. 정상천 시경국장은 학교 정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법대 이한기 학장 등 교수들과 만나 “학교측에서 구타한 학생 10명 내외의 명단을 제시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원 내로 들어가서라도 찾아내겠다” 고 경고하였다. 밤 9시 30분 박희범 문교부차관이 현장에 도착, 최문환 서울대 총장, 손영경 문교부 장학실장, 이한기 법대학장, 민병태 문리대학장 등과 정상천 시경국장. 동대문서장이 서울대 총장실에서 3시간동안 회합한 결과 교수회의를 열어 구타학생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두열 치안국장은 3일 새벽 3시 현장에 나타나 서울대 총장실로 총장을 방문, “절대로 학원 내에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도록하겠다” 고 학교 당국에 약속하였다. 학교당국은 설득이 불가능하자 구타 학생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학생 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날 성균관대생 1천여 명이 개헌반대 성토대회를 연 뒤 교문을 나와 시위를 전개하다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교정으로 물러나 성토대회를 벌였다. 또 오전 10시 서울대 공대생과 교양과정부 학생 6백 여명은 1호관 앞마당에 모여 성토대회를 벌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는 7월 5일까지 임시휴강하고 7일부터 학기말시험을 치르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연세대생 3백 50여 명은 노천극장에 모여 3선개헌반대시국선언결기대회를 열어 제4선언문을 낭독한 후 전국대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전국언론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각각 채택하였다. 이어 학생들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나섰으나 대기중인 경찰에 제지되자 10여 차례의 투석전을 벌였다. 고려대생 4백 여명은 오전 10시 30분쯤 고려대 강당에 모여 ‘학교당국은 휴교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였다. 이들은 오후 1시 20분쯤 교문을 나섰다가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에 앞서 고려대생 5백 여명은 오전 12시 35분경 ‘망국적 3선개헌음모를 규탄하자’ 는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을 나와 시위, 대기중인 경찰과 10여분간 투석전을 벌였다. 중앙대생 5백 여명은 오전 10시 학생관앞 교정에 모여 ‘반민적개헌안에 민심은 통곡한다’ 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3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벌였다. 학생들은 ‘민족적 분열을 조장하는 학원사찰을 즉각 중지하라, 3선개헌안을 즉각 중지하라.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산하였다. 이어 오후 1시 시험을 마친 5백 여명의 학생들은 학생관앞 교정에 다시 모여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하였으나 교문이 닫혀 있어 교문 안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동국대생들은 3선개헌 반대시위를 벌이기 위해 오전 11시 30분경 교문 밖으로 나오다가 출동한 기동경찰의 제지와 교직원들의 만류로 학교 안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경찰 「헬리콥터」 1대가 동국대를 날며 학생들에게 해산할 것을

중용하였다. 이들은 오후 1시 20분경 장충단공원 앞길에서 3선개헌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 약 20분동안 투석전을 벌인 뒤 해산하였다. 경찰은 법대1년 김영곤 등 9명을 연행하였다. 경희대생 7백 여명은 2일 오전 10시 교내 운동장에서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교문을 나와 회기동 삼거리까지 진출,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의 강력한 제지로 교정 안으로 밀려들어갔다. 중앙고 학생 5백 여명은 오전 10시 50분 시위를 벌이려고 교문을 나서다가 교직원들의 만류로 되돌아 들어갔다. 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경북대생 2백 여명은 본관앞 로터리에서 3선개헌반대 성토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날마다 계속되자 7월 3일에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 휴교 조치를 취하였고, 7월 3일부터 각 대학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학생들은 가두시위, 화형식, 성토대회, 단식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전북대생 5백여명은 7월 3일 오전 10시 교정에 모여 3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외국어대생 1백 50여명은 가두시위를 전개하려 교문 밖으로 나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하였다. 우석대생 5백 여명은 3일 오전 11시 10분쯤 가두시위를 하려다 정릉파출소 앞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하였다. 건국대생 1천 여명은 교내에서 3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마친 뒤 교문 밖으로 진출, 대기 중이던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고려대생 7백 여명은 3일오전 12시 고려대 강당에서 성토대회를 연 뒤 가두시위를 두 차례나 벌였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고 밀려 교문 앞에서 농성하였다. 다른 2백 여명은 성동역앞을 거쳐 서울대사대 앞까지 진출, 서울대 사대생 2백 여명과 합세해 경찰과 대치하다 사대교정으로 밀려갔다.

시위는 7월 4일에도 계속되었다. 고려대생 7백 여명은 4일 오전 9시경 교정에서 ‘황소집단의 개헌음모 타도’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개헌반대성토대회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어 언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한 뒤 ‘자유당과 공화당’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학생들은 가두로 진출해 기동경찰과 대치, 투석전을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통계과 1년 이유곤(20) 등 20여 명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고 정외과 2년 박동진(21) 등 3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서울대 공대생 4백 여명은 학교를 벗어나 중랑교까지 나와 시위하다가 경찰에 쫓겨 교문으로 들어갔다. 한편 서울대 공대 지철근 교수 등 20여 명의 교수와 교직원들은 서울대 학교버스로 뒤따라나가 학생들을 설득, 50여명을 승차시켰으나 경찰기동대는 학교로 돌아가는 길목을 막고 시위학생들을 포위하였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3대의 버스에 승차시켰을 때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박영호 청량리경찰서장의 지휘로 포위망을 좁히고 저항하지 않고 앉아있던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던지며 경찰봉으로 때리고, 학생들을 설득하러 나온 교수와 교직원을 차고 때렸다. 경찰은 귀교하려고 학생들이 타고있는 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최루가스를 넣어 학생들이 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창문으로 뛰어내리자 이들에게 다시 곤봉세례를 퍼부어 50여명의 부상자를 내게 하였다. 이 같은 과잉단속으로 공대공업교육학과 2년 이규탁 등 15명이 증상, 46명이 부상하였는데 한성섭(20·조선과2년)은 두부과열로 서울대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건국대생 1천 여명은 3일에 이어 4일 오전 10시경 개헌반대성토를 마친뒤 ‘3선이 근대화냐, 개헌음모를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한양대생 3백 여명은 3일에 이어 4일오전 성동경찰서 앞까지 진출, 기동경찰대의 제지로 학교로 후퇴하였다. 이들은 다시 오후 1시30분쯤에는 1천 5백여 학생들이 계당교 앞까지 진출하였으나 경찰에 저지로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50명을 포함한 서울대생 2백 여명은 4일 오전 11시쯤 성동경찰서 앞까지 진출, 경찰의 제지로 학교로 되돌아갔다. 서울시농대생들 1백 50여명은 4일 전 10시 30분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로 학교로 되돌아갔다.

7월 5일 건국대생 2백 여명은 2교시 시험이 끝난 오전 11시경 휴식시간을 이용, 교문 앞에서 3선개헌반대 시위를 벌이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시험을 치렀다. 한양대생 7백 여명은 5일 낮12시쯤 교정에서 단과대학별로 3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갖고 ‘최루탄 절약해서 자립경제 이룩하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로 학교로 되돌아갔다. 연세대 의과대생 1백 여명은 4일 낮부터 ‘음성적인 개헌조작을 즉시 중지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72시간 시한부 단식투쟁에 들어가 의대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성균관대생 7백 여명은 7월 7일 교문을 나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 학교로 돌아갔다. 이에 앞서 성

균관대생 4백 여명은 오전 9시 동교 대성전 앞에 모여 3선개헌 반대 및 경찰관의 약대생 납치구타사건에 항의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약대 4년 이종진군의 납치구타사건에 대해 “내무부장관은 즉시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하였다. 성균관대는 7일 오전 1학기말 시험을 무기 연기하여 사실상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희대생 7백 여명이 7일 오전 교정에서 3선개헌 성토대회를 마친 뒤 가두로 진출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인 뒤 교내로 돌아가 농성하였다. 연세대생 2천 여명은 오전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제 8 시국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학생들은 7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된 1학기말 시험을 거부하고 가두로 진출, 대기중인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한편 오전 12시 20분경 시위학생 가운데 3백 여명이 이화여대 옆길에서 서대문 골레방 다리까지 시위를 하다 기동경찰의 제지를 받고 투석전을 벌였다. 이날 시위로 건축과 1학년 허광서(21) 등 7명이 경찰봉에 맞아 머리에 부상,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고, 정동석(행정학과 1학년) 등 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경찰 헬리콥터가 출동해 시위대의 해산을 종용하였다. 동국대생 3백 여명은 오전 12시쯤 교정에 모여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갖고 12시10분쯤 교문 밖으로 나와 시위를 전개하였다. 한양대생 3백 여명은 오전 11시30분 교정에서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갖고 교문 밖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부산대생 7백여명과 동아대생 1천 여명도 오전 9시경부터 교정에서 각각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난 뒤 가두시위를 벌였다. 전북대 이리공대 3백 여명의 학생들은 이날 오전 강당에 모여 개헌반대성토대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이려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리 남성고와 원광고는 7월 6일 밤 12시 교사회의를 열고 학생시위를 막기 위해 7일과 8일을 휴교하였다. 이날 오전 8시경 공주교대생 2백 여명 이날 아침 학교측의 갑작스런 4일간의 휴강에 반발, 오후 2시까지 학교 강당에서 농성하였다.

학생들의 시위는 7월 8일에도 계속되었다. 8일 오전 10시45분경 연세대생 50여 명은 교정에서 3선개헌 반대 제9차 시국선언대회를 열어 6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오전 11시 해산하였다. 경희대생 1백 여명은 7일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3선개헌반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농성학생들은 7일 시위가 끝난 뒤부터 3일간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계명대생 2백 여명은 7월 9일 오후 1시 20분 교정에서 개헌반대 시위를 벌이다 교문에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성토대회에서 ‘3선개헌 음모자는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대구의 대륜고와 대구고 학생들은 교내에서 3선개헌 반대성토대회를 벌였다 이어 대구고생들은 교문을 빠져나와 2.28탑 쪽으로 몰려가다 16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동래고는 7월 11일 오전 0시를 기해 무기휴교령을 내렸다. 학교측은 10일 오후 1천 5백 여명의 학생들이 3선개헌반대를 결의하고 교정에서 연좌 시위를 벌일 기세를 보이자 이를 제지 귀가시켰다. 그러나 학생회 간부 20여 명은 학교독서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첫째는, 휴교령이나 조기 방학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연기된 학기말과 방학 일정이었다. 서울대 7월10일~20일(6월26일~7월9일) 법대·문리대는 2학기 시험이 미뤄지고 공대는 7일, 연대 7월13일~8월20일(7월10일~12일), 고대 7월19일~8월19일(7월4일~7월18일), 중앙대 7월11일~8월24일(7월1일~10일), 성대 7월11일~8월25일(7월1일~10일), 한양대 7월11일~8월5일(7월1일~10일), 동국대=3일부터 7일까지 휴교. 7월11일~8월25일(7월7일부터), 경희대=3일종강. 7월13일~8월31일(2, 3, 4학년은 7월7일~12일, 1학년은 7월11일부터), 우석대=7월20일~8월31일(7월12일~19일), 한국외국어대=7월14일~8월24일(3일예정이던것을 7월8일부터), 건국대=7월8일~8월25일(7월1일~7일) 등이었다. 둘째는 시위 주동학생들에 대해 각 학교별로 징계를 하는 것이었다. 7월 19일 서울대 법과대 교수회의는 3선개헌반대 시위를 벌였던 법대생 중 주동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회장 박봉규(행정과3년)를 제적하고 이병재(법과3년) 등 9명에 대해서는 무기정학과 자퇴서 등과 ‘앞으로 「데모」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시키기로 결의하였다. 7월 21일 확인된 법대 교수회의의 결의 내용에 따르면, 학교당국의 자퇴서 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또는 무기정학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의가 결의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적 - 박봉규(학생회장·행정과 3년)/자퇴서 제출요구(불응하면제적)-안형수(법과3년)/무기정학-이병재(법과3년), 이신범(법과3년), 송두한(법과3년)/

각서제출요구(불응하면무기정학)-김용민(행정과 , 강연범(행정과2년), 최만수(법과2년), 문강용(법2년), 강대석(법과3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교수회의는 19일 오후 시위를 주동한것으로 알려진 사회학과 2년 이철(21)을 제적하고 이중소(20· 화공학과1년)과 정중호(21·종교학과1년)에게는 자퇴서를 받기로 하였으며 김인규(20·정치학과1년)와 이호용(시· 정치학과1년)은 무기정학처분하고 다른 11명의 학생에게서는 ‘앞으로 「데모」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서울대 문리대는 7월 22일 오후 부·과장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위 주동학생으로 알려진 서원석(21·정치과3년)은 제적, 학생회장 박영은(21·사회사업과3년) 등 3명은 무기정학, 서중석(21·사학과3년) 등 5명에게는 자퇴서를 받기로 하고 대의원 의장 김룡(21·물리학과3년)등 13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데모」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권유하는 등 모두 22명을 교수회의에 넘겼다. 이날 결정된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적=서원석(정치학과3년)/자퇴서제출=서중석(사학과3년) 강지원(정치학과2년) 김형관(정치학과2년)/무기정학=조학송(정치학과3) 박영은(사회사업과3) 유흥준(미학과3) 외2명/각서제출=송태준(철학과3년) 김룡(물리학과3년) 이상준(사회학과3년) 정동욱(언어학과3년) 김명석(수학과2년) 주영고(사회학과3년) 안영욱(사학과2년) 배병순(사학과2년) 김인범(철학과3년) 외4명. 서울교대는 7월 24일 오전 3선개헌반대 시위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2년 노행웅을 제적, 이량우(2년) 등 2명을 무기정학, 이추권(2년) 등 6명은 근신, 박숙자(1년) 등 7명은 견책 조치하였다. 경북대는 7월 24일 오후 2시 교수회의를 열고 6월23일부터 7월12일까지 개헌반대 시위를 주동한 총학생회장 진원주(27)와 유정선(21·법학과 4년) 등을 제적하고, 안대한(21·법대 4년) 등 8명은 무기정학, 홍윤순(21·사회학과 4년) 등 14명을 근신 처분하였다. 고려대학교는 7월 30일 3선개헌반대시위데모 주동학생으로 지목된 조춘구(경제과 4년)을 제적하는 등 16명의 학생들에게 징계조치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무기정학=이원건(경제·4년) 이상수(법학·3년) 윤준하(정외·3년)/6개월유기정학=선기병(행정·3년) 김민환(신문방송·4년) 이구영(정외·3년) 곽승진(정외·3년) 김종필(경제·3년) 성상근(법학·2년) 신승식(법학·2년)/견책=조성준(법학·3년) 정우성(법학·3년) 송인성(정외·3년) 김건승(경제·3년)/복학불허=이문순(천학·3년). 이상 각 학교별로 진행된 징계 조치에 의해 전국적으로 총 79명의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으나 개헌안이 통과되자 이들에 대한 구제가 학교별로 이루어졌다. 또 개헌반대 시위로 처벌을 받은 고등학생은 9월 23일 현재 전국에서 총 69명으로 집계되었다(제적 9명, 무기정학 51명, 유기정학 9명). 이 가운데 서울시내 고교생은 제적 7명, 무기정학 40명, 유기정학 9명 등 모두 56명이며 지방고교생은 13명이었다.

한편, 조기방학으로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학원가의 삼선개헌반대투쟁은 개학과 더불어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8월 25일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고대생 교내에서 집회를 가졌고, 8월 27일 1백 여명은 교내 인촌동상 앞에 모여 ‘애국운동인3선개헌반대투쟁을 박해하지 말고 7·28 학생처벌을 전면 철회하라’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9월 1일 영남대 법정대학생 3백 여명이 3선개헌반대 성토회를 열었다. 이들은 ‘3천만은 호소한다 3선개헌 철회하라’는 등 4개 항목의 플래카드를 들고 성토회를 벌였는데 법정대 학장 이종학 교수의 만류로 해산하였다. 9월 3일 연세대생 1천 여명은 교내 노천극장에 모여 ‘3선개헌반대 시국선언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① 위정자는 3선개헌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민주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② 정부당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 4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일단 해산하였던 연세대생 2백 여명은 다시 동교 「언더우드」 동상 앞에 모여 3선개헌 반대 성토회를 갖고 ‘국민이여 쫓겨하라 호헌의 기치아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 앞까지 몰려나왔다가 경찰과 대치하였다. 9월 1일부터 서울법대생 50여 명은 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3선개헌 반대 제3선언문」을 외치며 농성하였다. 9월 3일 고대생 3백 여명은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제지하자 연좌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학생 최상인(19· 법학과2년)을 연행하였다. 9월 3일 대전대생 2백 50여 명은 교내에서 구국기도회를 열고 3선개헌 반대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으나 경찰의 제지하자 연좌시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학생들은 이날 구국기도회에서 ‘학원자유를 보장하라’, ‘학원사찰을 금지하라’, ‘3선개헌안을 철폐하라’는 등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조성구(19·1학년) 등 19명을 연행하였다.

9월 4일 성균관대생 7백 여명이 ‘3선개헌에 학원은 통곡한다’ 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문을 나서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로 학교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이날 성대 화학과 1학년 원혁수 등 10명과 민간인 민병부(21·성북동217)를 연행하였다. 9월 5일부터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임원 8명은 자정부터 3선개헌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동교 학생회관에서 기한부 단식농성을 벌였다. 9월 6일 서울대 미대생 76명은 동교 제1강의실에 모여 3선개헌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선문을 통해 정부의 3선개헌작업을 규탄하고 전국예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한 뒤 해산하였다.

9월 8일 서울대 의대생 4백 여명은 대학강당에 모여 3선개헌반대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3선개헌을 반대하는 성토를 벌였다. 같은날 충북대학생 2백 여명은 대학 본관 앞 잔디밭에 모여 3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3선개헌을 이이상 더 좌시할 수 없다’ 는 성토문을 읽다가 조건상 학장 이하 교수들의 만류로 성토문 낭독을 중단한 뒤 본관 앞에 학교측이 설치해놓은 ‘중단없는 전진 속에 이룩되는 민족중흥’ 이라는 「플래카드」 를 철거하라고 외치면서 농성을 벌였다. 연세대생 1천 5백 여명은 9월 9일 노천극장에서 3선개헌반대 제18차 시국선언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역사는 민중의 것, 그것은 자유에의 끝없는 전진이며 생존권의 확대를 향한 도도한 물결이다. 누가 이 민중의 지고한 의지를 꺾을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언론은 순교자적 사명감에 입각하여 그 본원적 책임을 완수하라’ ‘정부는 청년학생의 병역의무를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는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시국선언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3선개헌 저지하여 민주헌정 사수하자’ 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이날 투석전에서 시경기동대 소속 박형수 순경과 이태성 순경이 머리에 돌을 맞아 중상, AP통신 서울지국 사진기자 김천길(32)도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학생 「테모」 학생을 막다가 「폐퍼.포그」 1대 방패 3개 경찰봉 5개 방독 「마스크」 1개 방석모 1개 등을 학생들에게 빼앗겼다.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또 다시 휴교령을 내렸다. 9월 10일까지 전국에서 9개 종합대학교와 8개 단과대학 등 모두 17개교 대학이 임시 휴교하였다. 그리하여 9월 25일 현재까지 종합대학교 17개, 단과대학 20개, 초급대학 2개교 등 모두 40개교가 휴강하였다. 또 서울 시내의 경기고를 비롯한 동국·서울·성남·건국상고·대광 ·동성 등이 휴교하였고, 전국에서는 총 19개 고등학교가 휴교하였다.

그러나 9월 8일부터 3선개헌을 반대하는 성균관대 호헌투쟁위원회 학생 30여 명은 학교당국의 휴교조치에도 법정대 중강당에 책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아 의부와외의 접촉을 끊은 채 연3일째 단식 농성하였으며, 9월 10일 서울대 의대생 80여명은 학교 도서실에 모여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벌였다. 같은 날 이화여대생 3천 여명은 노천극장에서 ‘3선개헌을 반대한다’ 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성토대회를 열었다. 숭실대 학생 5백 여명도 채플실에서 3선개헌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3선개헌 작업과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는 선언문을 채택, 교수들이 문을 잠그자 담을 뛰어넘어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비틀거리는 황소여, 너 갈 길을 잃었느냐’ , ‘테모저지 근대화가 조국 근대화냐’ 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가두로 나섰다가 경찰의 제지로 연좌시위를 하였다. 이때 ‘좀더 구호를 크게 외쳐라’ 라고 소리친 상도동 신복반점 종업원 김덕목(24)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9월 10일 오전 9일 학생들에게 실시한 개헌 찬·반에 관한 「양케트」 분석결과에 대해 개헌반대가 93.3%, 개헌찬성이 6.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6백 여명은 교시탑 앞에서 ‘3선개헌 저지하여 민주헌정 수호하자’ 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세우고 성토대회를 벌였다. 서울대 치대 학생 1백 50여 명은 10일 아침 교정에 모여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벌이고 다른 대학의 휴교령 즉각 철회와 학원 사찰 중지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고려대학교 교양학부 대의원 23명은 9월 10일부터 203강의실에서 3선개헌 반대 철야농성을 시작하였다. 한편 9월 12일 상오 11시50분쯤 고려대학생 2백여명은 동교 강당에서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벌였다. 학생들은 낮12시10분쯤 3선개헌 반대 「플래카드」 를 들고 안암동 「로터리」 쪽으로 1백쯤 가두 「테모」 를 벌이다가 대기중인 경찰에 밀려 들어갔다. 이화여대생 약5천 명은 9월 12일 동교 대강당에 모여 3선개헌 반대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낮 12시 20분에 끝난 채플 시간에 이어 계속된 이 기도회에서 학생들은 성경시편1장과 찬송가 3백

34장을 인용, ‘불의를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같은 날 낮 12시50분쯤 서강대 교수 존데일러 신부가 왼쪽 팔에 흰 완장을 감고 “대한아, 슬피한다. 시드는 언론자유” 라는 글이 쓰여진 명함 크기의 종이를 왼쪽 가슴에 달고 서울 종로1가 45번지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 앞길을 걸어가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9월 13일에도 학생들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서울대생 80여명은 아침 일찍부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개헌안의 국회표결 결과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열었다. 이화여대생 약 3백 명은 중강당에 모여 3선개헌반대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서 학생들은 ‘유대 민족을 구한 여자에국자 에스터를 본받자’ 고 선언하며 현 시국을 주시할 것을 결의하고 30분만에 해산하였다. 무기휴강에 들어간 서울대 문리대 정문에는 기동경찰 50여명이 경비를 띄고 있으며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휴강중인 고려대에도 경찰이 이른 아침부터 대기,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일일이 조사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청주대 학생간부 40여 명은 9월 12일 대학 휴게실에서 모임을 갖고 ‘휴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는 등 4개 사항을 결의하였다. 무기한 휴교에 들어간 연세대학교정에는 도서관을 드나드는 1백 여명의 학생 이외에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고 학교 정문 앞과 부근골목길엔 1백 여명의 이동 경찰이 대기, 학교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조사하고 학생일 경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였다. 경희대는 새벽부터 60여명의 기동 경찰대가 학교 주변을 경비, 학생들의 학교 접근을 일체 막았다. 9월 16일 연세대 의대생 약2백 명은 강당에서 3선개헌철회성토포대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어떤 질곡과 영어가 우리를 감금하고 억누르려해도 우리는 정의를 위해 행동할 뿐’ 이라며, 16일 아침 집에서 서대문경찰서 형사에 의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연행되던 의대 학생회장 이상준(24·분과3년)의 석방을 요구하며 교문 앞에서 기동경찰과대치, 농성을 벌였다. 이날 낮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의대생 모두가 자진 연행되어 갈 것을 결의, 대기 중이던 경찰 트럭에 1백 58명이 실려 서대문경찰서로 갔다. 학생들은 경찰서에 가면서 ‘망령한 공화당, 자유당이 기다린다’, ‘변칙통과된 3선개헌을 즉각 철회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개헌안변칙통과규탄 시위를 벌이던 건국대생들을 막으려했던 동부경찰서 기동경찰관 60여명이 교정 안까지 진압에 나섰다. 같은날 중앙대 학생 50여명은 서울 용산소방서 앞에 모여 3선개헌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조희명(20·전기공학과2년) 등 8명을 연행하였다. 한편 신민당에서는 개헌안에 서명하였던 조흥만, 성낙현, 연주흠 세의원을 변절, 야당 전열을 이탈하였다며 이들의 의원직을 빼앗기 위해 9월 7일 44명의 의원을 제명한 뒤 당을 해산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신민당은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와 함께 개헌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공화당의 대응은 강경하였다. 신민당 원내 총무 김영삼은 초산테러를 당하였고, 정성태 의원 등 3명은 ‘개헌반대 천리도보’ 를 위해 광주에서 출발 서울 부근까지 왔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귀가당하였다.

김재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각계에 개헌저지투쟁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한변호사협회 전회장 신순연 등 11명(신순연, 김은호, 신태약, 성태경, 김선태, 용남진, 주?윤, 이승필, 이상규, 염창열, 황은환)의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9월 12일 상오 ‘호헌선언문’ 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메시지’ 를 ‘대한변호사협회 유지일동’ 으로 발표하였다. 호헌선언문은 “3선개헌은 헌법의 전문과 본문조항에 위배되며 민주헌법은 국민의 권익증진이나 공공복지를 위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데 특정인의 이른바 영도력에 의존하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하며, 현 정권의 위헌행위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3선개헌에 반대하고 민주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들을 비롯하여 문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들의 반대가 잇따랐다. 동아일보에서도 삼선개헌반대 사실을 실었다. 8월 8일자 사설에서 “우리는 개헌 주장의 동기가 결코 합치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국가의 안전과 활력을 기대하는 데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출발한 그 동기가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헌은 그런 목적을 오히려 위태롭게 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 주장하였다. 공화당의 정구영 의원은 끝까지 개헌을 반대하였다. 8월 7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개헌안의 찬부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서도 계속되었다.

또 8월 8일부터 신민당 의원들은 농성을 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자 8월 9일 의장 직권으로 정부에 이송

하였다. 정부는 당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공고하였다. 공고기간이 끝나고 9월 9일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9월 10일부터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이어졌다. 여야의 공방은 12일로 끝났지만, 9월 13일 유진산의 발의로 개헌안철회권고결의안이 상정되어 부결되었다. 이날 오후 국회의장 이효상이 개헌안 표결을 제안하였으나 야당은 의장석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9월 14일 삼선개헌안이 공화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자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한 찬성율을 높이려 애썼다. 한편 신민당 의원 장준하는 8월 30일 의정부 중앙국민학교 교정에서 열린 신민당 주최 3선개헌반대 시국강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중흥의 영도자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파멸로 이끈 ××××자다. 박대통령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월남보다 더 큰 혼란과 불안에 싸이게 된다”고 말하여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체포되었다.

야당은 개헌안의 변칙통과를 기점으로 여당과의 일절의 대화를 끊고 ‘정권타도’를 내걸며 원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9월 20일 창당대회를 가진 뒤 ‘현정권 타도’를 내건 군중대회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3선개헌 반대문안’도 개헌반대운동에서 방향을 바꾸어 현정권타도를 위한 장기투쟁을 발표하였다. 신민당 김영삼 총무는 “모든 수단을 동원, 극한적 방법으로 무한투쟁 벌일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또 김영삼·고흥문·김재광·김대중·장준하·김형일 의원 등 6인소위위원회를 구성, 앞으로의 개헌무효화 투쟁방안을 마련토록 위임하였다. 한편 김재준문안위원장은 9월 16일 “헌안은 국회의 공고도 없이 의사당 이외의 비밀장소에서 공휴일 심야 일부 의원들의 사적인 밀회에서 처리된 것이므로 국정 의결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주권의 수호와 신장을 위해 금후 독재정치 타도운동에 전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부와 공화당은 ‘안정이나 혼란이나’를 내세우며 삼선개헌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김종필을 비롯한 공화당 간부들은 전국 순회강연을 진행하였는데, 10월 6일 공주에서 김종필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위신 추락 및 국민이 원치 않는 또 한번의 군의 정치참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측근 위원들에게 개헌 찬성을 종용하였다”고 하여 군의 쿠데타설을 내비쳤다. 신민당은 ‘복원창당대회’의 ‘국민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공화당의 9·14변란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지는 못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종말을 재촉할 뿐이다”고 하였다. 또 공화당은 개헌유세를 위해 국민학교를 휴교시키기도 하였다. 9월 30일 공화당의 개헌지지 유세 때문에 속초국민학교는 휴교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공화당은 개헌지지유세를 이날 오전 10시 속초국민학교 교정에서 열기로 하였다가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장소를 금호동육대원극장으로 옮겼다. 공화당은 비 때문에 청중이 동원되지 않자 버스를 동원, 양양·고성 지의 유세장으로 실어 날랐다.

9월 13일 오전 11시10분쯤 머리를 깎은 박세이 가슴에 태극기가 그려진 흰 도포를 입고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조선일보사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으로 뛰어나와 3선개헌 반대 유인물 한 뭉치를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9월 16일 밤 8시 30분쯤 서울남산 팔각정에서 박정부(27·충남 논산군상월면대대령리)가 ‘3선개헌을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몸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산책 나온 사람들의 만류로 몸에 화상을 입었다.

한편, 10월 16일까지 3선개헌반대시위로 문을 닫았던 전국 40개 대학 가운데 부산수산대·국민대·서강대 등 3개 대학이 전혀 문을 열지 않았고, 17개 종합대와 9개 단과대학 등 26개 대학이 부분적으로 문을 열었다. 송실대·대구계명대·제주대·서라벌예대·한국신학대·홍익대·관동대·감리교신학대·감리교대전신학대·카톨릭의대·예수교장로회신학대 등 11개 대학은 완전 개강하였다

A6 장준하, 김재준, 박정희, 윤치영, 김종필

A7

A8 A9 [부정 등 대정부 질의]중양일보, 1969.6.13(1) / [경기공업생들 데모], 『중양일보』, 1969.6.24(7) / [개헌성토는 과민한 탓], 『중양일보』, 1969.6.26(7) / [고대생 데모], 『중양일보』, 1969.6.27(3) / [고대생 이틀째 데모], 『중양일보』, 1969.6.28(7) / [학생전담반 구성], 『중양일보』, 1969.6.28(7) / [고대생 사흘째], 『중양일보』, 1969.6.30(3) / [2천 연대생 데모], 『중양일보』, 1969.6.30(3) / [부대 6백명도], 『중양일보』, 1969.7.1(7) / [경희대생 두패로], 『중양일보』,

1969.7.1(7) / [교대생 나홀찌], 『중앙일보』, 1969.7.1(7) / [연세대생 2천명 학기말 시험 연기], 『중앙일보』, 1969.7.1(7) / [교수 6명 곤봉맞아], 『중앙일보』, 1969.7.1(7) / [서울공대·교양학부], 『중앙일보』, 1969.7.1(7) / [6개대생 데모·성토], 『중앙일보』, 1969.7.1(7) / [이의장 사과에 공화 반발], 『중앙일보』, 1969.7.1(2) / [배경에 의혹"], 『중앙일보』, 1969.7.2(1) / [강경으로 치닫는 여야], 『중앙일보』, 1969.7.2(2) / [개헌반대데모], 『중앙일보』, 1969.7.2(3) / [데모 「과잉저지」 추궁|국회질의 김의원 피습사건 수사부진도], 『중앙일보』, 1969.7.4(1) / [군장비 동원안했다], 『중앙일보』, 1969.7.4(1) / [「데모」 1주째…연 3만여명|서울시경 집계 12개대학생참가], 『중앙일보』, 1969.7.4(3) / [피해학생 조위구성], 『중앙일보』, 1969.7.3(7) / [전북대선 5백명], 『중앙일보』, 1969.7.3(7) / [외대생들 일단 해산], 『중앙일보』, 1969.7.3(7) / [우석대생들 일단해산], 『중앙일보』, 1969.7.3(7) / [건국대생들 대처], 『중앙일보』, 1969.7.3(7) / [고대생들 농성중], 『중앙일보』, 1969.7.3(7) / [형사 한때 피납], 『중앙일보』, 1969.7.3(7) / [일부대학은 방학], 『중앙일보』, 1969.7.3(7) / [데모 「과잉저지」 추궁|국회질의 김의원 피습사건 수사부진도], 『중앙일보』, 1969.7.4(1) / ["잔디밭에서라도 국회를"], 『중앙일보』, 1969.7.4(2) / [데모] 1주째…연 3만여명|서울시경 집계 12개대학생참가], 『중앙일보』, 1969.7.4(3) / [고대생 결의문채택], 『중앙일보』, 1969.7.4(3) / [서울공대생 충돌], 『중앙일보』, 1969.7.4(3) / [건국대생 천여명], 『중앙일보』, 1969.7.4(3) / [한양대생 이틀째], 『중앙일보』, 1969.7.4(3) / [교대 남녀학생참가], 『중앙일보』, 1969.7.4(3) / [시립농대생들도], 『중앙일보』, 1969.7.4(3) / [조기방학지장없나 질의], 『중앙일보』, 1969.7.5(1) / [정치의 책임], 『중앙일보』, 1969.7.5(2) / [휴교등 재량권], 『중앙일보』, 1969.7.5(7) / [건국대생 2백명도], 『중앙일보』, 1969.7.5(7) / [한양대생들 데모], 『중앙일보』, 1969.7.5(7) / [연대생 72시간단식], 『중앙일보』, 1969.7.5(7) / [길가던 학생 2명을 연행], 『중앙일보』, 1969.7.5(7) / [서울대·고대 방학 단국대도], 『중앙일보』, 1969.7.5(7) / [사실무근" 박내무], 『중앙일보』, 1969.7.5(7) / [근처에만 던졌다"], 『중앙일보』, 1969.7.5(7) / [과잉저지를 항의], 『중앙일보』, 1969.7.5(7) / [「데모」 해산길에 봉변], 『중앙일보』, 1969.7.5(7) / [집회·시위 두 장관 해석 엇갈려], 『중앙일보』, 1969.7.7(3) / [무단휴강에 반발|공주교대생 농성], 『중앙일보』, 1969.7.8(7) / [29개대 조기방학], 『중앙일보』, 1969.7.8(7) / [계명대생들 데모], 『중앙일보』, 1969.7.10(7) / [동래고 휴교], 『중앙일보』, 1969.7.11(3) / [학생회장 제적], 『중앙일보』, 1969.7.21(3) / [국회소집요구], 『중앙일보』, 1969.7.22(1) / [이가 안맞는 여당과야당], 『중앙일보』, 1969.7.22(2) / [방학동안에 징계], 『중앙일보』, 1969.7.22(7) / [데모주동학생 1명제적], 『중앙일보』, 1969.7.23(3) / [징계중지 요구], 『중앙일보』, 1969.7.23(3) / [신민 임시국회소집요구], 『중앙일보』, 1969.7.24(1) / [징계대상 줄이기로], 『중앙일보』, 1969.7.24(7) / [1명제적], 『중앙일보』, 1969.7.24(7) / [학생처벌 논의], 『중앙일보』, 1969.7.25(3) / [두 경북대생 제적], 『중앙일보』, 1969.7.26(7) / [개헌지저한적없다.], 『중앙일보』, 1969.7.28(1) / [샤쓰에 "개헌반대"], 『중앙일보』, 1969.7.29(7) / [학생 징계 취소 촉구], 『중앙일보』, 1969.7.29(1) / [3명 무기정학], 『중앙일보』, 1969.7.30(3) / [학생회장 퇴학처분], 『중앙일보』, 1969.8.2(7) / [데모학생 징계], 『중앙일보』, 1969.8.4(2) / [징계받은 데모주동 경북대생 7명에 징집영장], 『중앙일보』, 1969.8.6(3) / [데모 예상학생 징계], 『중앙일보』, 1969.8.7(7) / [징집장의 순결성], 『중앙일보』, 1969.8.7(1) / [계명대 처벌 거부 방침], 『중앙일보』, 1969.8.8(3) / [퇴학 7명·정학 77명], 『중앙일보』, 1969.8.8(3) / [발부영장 회수], 『중앙일보』, 1969.8.8(3) / [데모 주동 정학 학생], 『중앙일보』, 1969.8.8(3) / [3명 퇴학·18명 정학], 『중앙일보』, 1969.8.9(7) / [농성 풀로 「데모」], 『중앙일보』, 1969.8.9(1) / [정부 개헌안을 공고|본 회의 보고 앓고 직송], 『중앙일보』, 1969.8.9(1) / [대전공전 10명 정학], 『중앙일보』, 1969.8.12(7) / [처벌백지화 요구], 『중앙일보』, 1969.8.12(7) / [제적 경북대생 입대], 『중앙일보』, 1969.8.13(3) / [국민투표법 전격 제안], 『중앙일보』, 1969.8.14(1) / [공화당의 국민투표법안], 『중앙일보』, 1969.8.15(2) / [국민투표법안 그 내용과 문제점|엄격히 제한된 찬반 운동], 『중앙일보』, 1969.8.15(1) / [개헌안공고 철회요구], 『중앙일보』, 1969.8.18(1) / [국민투표법안에 위헌요소], 『중앙일보』, 1969.8.19(1) / [선 개헌 반대 데모|주화부한국학생들], 『중앙일보』, 1969.8.19(2) / [수배학

생 자진출두], 『중앙일보』, 1969.8.21(7) / [대학교개혁], 『중앙일보』, 1969.8.21(7) / [정확 학생에자
 퇴를 권고], 『중앙일보』, 1969.8.21(7) / [데모주동학생집영장발부], 『중앙일보』, 1969.8.23(7) /
 [학원사찰타파 처벌초래요구|고대생 교내데모], 『중앙일보』, 1969.8.25(7) / [문제학생들 리스트작성|
 충남도경서지시], 『중앙일보』, 1969.8.25(7) / [공청회 연설 요지], 『중앙일보』, 1969.8.25(1) / [고대
 생 「데모」], 『중앙일보』, 1969.8.26(3) / [고대시험연기], 『중앙일보』, 1969.8.26(3) / [학원의자유
 스스로 지키자], 『중앙일보』, 1969.8.26(3) / [합세청년 구속키로], 『중앙일보』, 1969.8.27(3) / [데모
 고대생 7명 구속 품신], 『중앙일보』, 1969.8.27(3) / [데모학생·해임교수 새학기에 복교허용],
 1965.12.15(3) / [학생처벌 변칙결의], 『중앙일보』, 1969.8.27(3) / [운동규제조항 그대로], 『중앙일
 보』, 1969.8.28(1) / [학원정상화되면|징계학생구제], 『중앙일보』, 1969.8.28(7) / [고대생9명 입건|데
 모때 투석혐의], 『중앙일보』, 1969.8.28(7) / [데모방지책 논의|경북대, 학장회의], 『중앙일보』,
 1969.8.28(7) / [데모학생 검거지침|도서 경찰에시달], 『중앙일보』, 1969.8.28(7) / [고대생 한명연행
 데모사진에 선봉], 『중앙일보』, 1969.8.29(3) / [학생데모에 대비 특별기동대편성 경북도경에], 『중앙
 일보』, 1969.8.29(3) / [국민8할이 반대|유총재주장], 『중앙일보』, 1969.8.30(1) / [데모 주동자 징
 집], 『중앙일보』, 1969.8.30(7) / [개헌반대 결의문 백여 고대생 데모], 『중앙일보』, 1969.8.30(7) /
 [처벌학생 구제못해], 『중앙일보』, 1969.8.30(7) / [고대생들에 끼어 데모한 청년 구속], 『중앙일보』,
 1969.8.30(7) / [불법개헌을 획책|공무원동원위해 투표법 강행], 『중앙일보』, 1969.9.1(1) / [전교생
 양게트], 『중앙일보』, 1969.9.1(3) / [서울대학교도], 『중앙일보』, 1969.9.1(3) / [전북대 개학연기],
 『중앙일보』, 1969.9.1(3) / [도보천리 개헌반대 의사표시길에], 『중앙일보』, 1969.9.1(3) / [비상사국
 선언], 『중앙일보』, 1969.9.1(3) / [개헌 반대 데모], 『중앙일보』, 1969.9.1(3) / [유세후에 가두 데모
 신민16명 연행 훈방], 『중앙일보』, 1969.9.1(3) / [대학생과 신민당원 데모한 14명을 입건], 『중앙일
 보』, 1969.9.2(7) / [서울대 3개대 휴강], 『중앙일보』, 1969.9.2(7) / [총·학장재량으로 데모수습],
 『중앙일보』, 1969.9.2(7) / [경북대 4개대도], 『중앙일보』, 1969.9.2(7) / [3개대생 철야농성], 『중앙
 일보』, 1969.9.2(7) / [제지받고 교정으로], 『중앙일보』, 1969.9.2(7) / [2명입건 5명즉심], 『중앙일
 보』, 1969.9.2(7) / [천여명 「데모」 스크림짜고 가두로], 『중앙일보』, 1969.9.3(3) / [교양부도 개강연
 기3백여명 교문나서], 『중앙일보』, 1969.9.3(3) / [3백여명 가두데모], 『중앙일보』, 1969.9.3(3) /
 [1·2·3년 휴강], 『중앙일보』, 1969.9.3(3) / [대전대생 「데모」], 『중앙일보』, 1969.9.3(3) / [어제 전
 주도착], 『중앙일보』, 1969.9.3(3) / [7백여 성대생 한때 교문나서], 『중앙일보』, 1969.9.4(7) / [문리
 대생 3명 데모혐의연행], 『중앙일보』, 1969.9.4(7) / [공대생들 데모], 『중앙일보』, 1969.9.4(7) / [개
 헌지상공청|왜 반대해야하나], 『중앙일보』, 1969.9.4(3) / [고대생1명을 연행], 『중앙일보』,
 1969.9.5(3) / [춘천농대 개학연기], 『중앙일보』, 1969.9.5(3) / [서울 공대 무기휴강], 『중앙일보』,
 1969.9.5(3) / [징계학생 79명], 『중앙일보』, 1969.9.5(3) / [기말시험 안친 경북대생 80여명|ROTC 체적
 요구], 『중앙일보』, 1969.9.5(3) / [내일 해체 전당대회], 『중앙일보』, 1969.9.6(1) / [기교정치], 『중
 앙일보』, 1969.9.6(2) / [도보시위 대전에 동행자 늘어 9명], 『중앙일보』, 1969.9.6(7) / [8개 대학휴
 교], 『중앙일보』, 1969.9.6(7) / [대화없는 대학은 마지막".사표낸 이한기 서울대 법대학장의 고충],
 『중앙일보』, 1969.9.6(7) / [세번이나 동독왕래], 『중앙일보』, 1969.9.8(3) / [다섯의원 「재킷트」
 「데모」], 『중앙일보』, 1969.9.8(3) / [경북대학 문제학생 학교서 돈줘 야외로], 『중앙일보』,
 1969.9.8(3) / [기숙생2백명 새벽에 「데모」], 『중앙일보』, 1969.9.8(3) / [5백명 거리로|경찰과 투석
 전], 『중앙일보』, 1969.9.8(3) / [교문앞서 저지], 『중앙일보』, 1969.9.8(3) / [대전시장 환송받고],
 『중앙일보』, 1969.9.8(3) / [정상 처리에 합의했지만...], 『중앙일보』, 1969.9.9(2) / [개헌정가 열전의
 뒤안], 『중앙일보』, 1969.9.9(3) / [전국 13개대 휴강], 『중앙일보』, 1969.9.9(7) / [입건 1즉심20 무
 기 휴강키로], 『중앙일보』, 1969.9.9(7) / [기동경찰과 맞서 투석전], 『중앙일보』, 1969.9.9(7) / [임
 시 휴강 발표], 『중앙일보』, 1969.9.9(7) / [1명 연행 8명 수배], 『중앙일보』, 1969.9.9(7) / [무기한
 휴강에], 『중앙일보』, 1969.9.9(7) / [5백명이 농성], 『중앙일보』, 1969.9.9(7) / [데모진압용 신무기
 개스탄 발사총등장], 『중앙일보』, 1969.9.9(7) / [17개대 휴교], 『중앙일보』, 1969.9.10(3) / [5백여명

가두로], 『중앙일보』, 1969.9.10(3) / [18명 경찰에 연행], 『중앙일보』, 1969.9.10(3) / [제명의원 6명 부당 허용], 『중앙일보』, 1969.9.11(1) / [입막고 장기집권기도|신민 질의], 『중앙일보』, 1969.9.11(1) / [경희대생 2명연행], 『중앙일보』, 1969.9.11(7) / [내일 국회앞에], 『중앙일보』, 1969.9.11(7) / [국회 개헌질의·답변 지상중계 속], 『중앙일보』, 1969.9.12(2) / [강제 귀가 도보천리|정성태 의원 어제 서울에], 『중앙일보』, 1969.9.12(3) / [32개 대학 휴강], 『중앙일보』, 1969.9.12(3) / [데모 고대생], 『중앙일보』, 1969.9.12(3) / [철야농성을 계속], 『중앙일보』, 1969.9.12(3) / [개헌반대 성토대회], 『중앙일보』, 1969.9.12(3) / [고대생 하숙서 연행], 『중앙일보』, 1969.9.12(3) / [투위, 성토대회], 『중앙일보』, 1969.9.12(1) / [경찰 50여명이 지켜], 『중앙일보』, 1969.9.13(7) / [개헌일지], 『중앙일보』, 1969.9.15(4면) / 7개대학 개강, 『중앙일보』, 1969.9.15(7) / [천여명 가두 「데모」], 『중앙일보』, 1969.9.15(7) / [신민회원 16명 연행], 『중앙일보』, 1969.9.15(7) / [32개대학휴교], 『중앙일보』, 1969.9.16(3) / [20일 전국시위계획|신민], 『중앙일보』, 1969.9.17(1) / [데모 국민투표법으로 규제], 『중앙일보』, 1969.9.17(1) / [신민회], 『중앙일보』, 1969.9.17(3) / [내일부터 직장점거], 『중앙일보』, 1969.9.17(7) / [연행 백59명 혼방|연세대], 『중앙일보』, 1969.9.17(7) / [3명에 영장신청|건국대], 『중앙일보』, 1969.9.17(7) / [국민투표법 및 시행령의 공포], 『중앙일보』, 1969.9.18(2) / [데모정보에 휴강], 『중앙일보』, 1969.9.18(3) / [부산상고무기휴교], 『중앙일보』, 1969.9.18(3) / [건국대생셋 구속], 『중앙일보』, 1969.9.18(3) / [발효전 투표법적용], 『중앙일보』, 1969.9.18(3) / [국민투표법 무효화투쟁], 『중앙일보』, 1969.9.19(1) / [신민, 내일 창당대회], 『중앙일보』, 1969.9.19(1) / [데모] 선동에 무죄], 『중앙일보』, 1969.9.19(3) / [휴강중에 변칙수업], 『중앙일보』, 1969.9.19(3) / [농성데모 앞췌다 보장 있어야 개강], 『중앙일보』, 1969.9.19(3) / [신민13일만에 재창단], 『중앙일보』, 1969.9.20(1) / [선탈], 『중앙일보』, 1969.9.20(1) / [국민투표법 어떻게 시행되며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1969.9.20(3) / [경기고교장·교감해직], 『중앙일보』, 1969.9.20(7) / [학년·학급시차 등교], 『중앙일보』, 1969.9.20(7) / [계명대생 2명구속], 『중앙일보』, 1969.9.20(7) / [공주교육대 휴강], 『중앙일보』, 1969.9.20(7) / [본사기자부상], 『중앙일보』, 1969.9.20(7) / [신민당 의원 산발적 데모], 『중앙일보』, 1969.9.20(7) / [이사준비하는 이의장], 『중앙일보』, 1969.9.20(2) / [신문기자의 신체의 자유], 『중앙일보』, 1969.9.22(2) / [국민투표법적용 곳곳서 입건사태], 『중앙일보』, 1969.9.22(3) / [부산서도 간부4명], 『중앙일보』, 1969.9.22(3) / [신민부위원장등2명], 『중앙일보』, 1969.9.22(3) / [연행중에 집단구타], 『중앙일보』, 1969.9.22(3) / [대구서도 3명 입건], 『중앙일보』, 1969.9.22(3) / [데모 뒤편에 징계학생구제], 『중앙일보』, 1969.9.22(3) / [학원정상화] 투쟁.신민], 『중앙일보』, 1969.9.23(1) / [휴교 사태와 교육], 『중앙일보』, 1969.9.23(2) / [데모로잃어버린 대학강의실|도서관 만이라도 열었으면], 『중앙일보』, 1969.9.23(3) / [고교69명 징계], 『중앙일보』, 1969.9.23(3) / [건대생 1명 구속], 『중앙일보』, 1969.9.23(3) / [오육중 데모저지에 투입], 『중앙일보』, 1969.9.23(3) / [연행된 데모주동 대학생], 『중앙일보』, 1969.9.24(3) / [음대생 5명 입건], 『중앙일보』, 1969.9.24(3) / [전 경기고교장 등|구제운동 퍼기로], 『중앙일보』, 1969.9.24(3) / [데모학생 셋 구속], 『중앙일보』, 1969.9.24(3) / [이세교육 마비상태], 『중앙일보』, 1969.9.25(1) / [포문연 개헌 결전|국민투표서전의 여·야전략], 『중앙일보』, 1969.9.25(3) / [10월초 휴교해제 서울시 고교], 『중앙일보』, 1969.9.25(7) / [징계학생은 구제], 『중앙일보』, 1969.9.27(7) / [대학 10월 중간에 개학|「투표전」 원칙세워준비], 『중앙일보』, 1969.9.27(7) / [고교의 정상수업], 『중앙일보』, 1969.9.29(2) / [학생8명 첫기소], 『중앙일보』, 1969.9.30(7) / [징계 고교생 월초에 해제], 『중앙일보』, 1969.9.30(7) / [일부대학·고교개학], 『중앙일보』, 1969.9.30(7) / [교위서 개학거부], 『중앙일보』, 1969.10.1(3) / [고대생가장 데모|청년1명을 기소], 『중앙일보』, 1969.10.1(3) / [구속못해 영장반환], 『중앙일보』, 1969.10.1(3) / [41개대 부분개교], 『중앙일보』, 1969.10.1(3) / [경기·동성 고 개학], 『중앙일보』, 1969.10.4(7) / [징계 학생구제], 『중앙일보』, 1969.10.4(7) / [충북·청주대 4학년 개강], 『중앙일보』, 1969.10.4(7) / [주말까진 정상화], 『중앙일보』, 1969.10.6(3) / [반대운동 지나치다], 『중앙일보』, 1969.10.7(1) / [고교 모두 개학], 『중앙일보』, 1969.10.10(3) / [대학행사 거의 연기], 『중앙일보』, 1969.10.13(3) / [4개대만 미

개강], 『중앙일보』, 1969.10.13(3) / [서울회전으로 유세결산], 『중앙일보』, 1969.10.14(1) / [휴교중인 40개대학], 『중앙일보』, 1969.10.16(7) / [대학, 주내 모두 개강], 『중앙일보』, 1969.10.20(3) / [건국상고·동국고만] 제적학생 구제안해], 『중앙일보』, 1969.10.20(3) / [고대23일개강 성대27일부터], 『중앙일보』, 1969.10.21(7) / [7개대학 전면개강], 『중앙일보』, 1969.10.23(7) / [계엄학생전원구제방침], 『중앙일보』, 1969.10.24(3) / [수업일수 30일 단축 | 문교부 대학서신청하면허가키로 대학교무처장회의], 『중앙일보』, 1969.10.24(3) / [대학모두개강], 『중앙일보』, 1969.10.27(3) / [투표관여 공무원 처벌을], 『중앙일보』, 1969.10.27(1) / [서울대·고대.징계학생 전원구제], 『중앙일보』, 1969.10.30(3) / [용산고생 데모], 『중앙일보』, 1969.11.1(7) / [건대생등 11명 보석], 『중앙일보』, 1969.11.12(3) / [11명 징계해제], 『중앙일보』, 1969.11.12(3) / [학생징계 철회요구]구제된 고대생 11명], 『중앙일보』, 1969.11.13(7) / [3학년만 등교], 『중앙일보』, 1969.11.17(3) / [캠퍼스 화제], 『중앙일보』, 1969.11.25(5) / [3선 개헌.국내], 『중앙일보』, 1969.12.16.(4)

A1 여수역 점거시위

A2 1969.4.1.

A3 1969.4.1. 여수시 덕충동 주민들 여수역 점거시위 / 1969.4.3. 여수경찰서 19명을 소요·기차통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 1969.4.4. 신민당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 / 1969.5.28. 24명의 구속자, 소요·기차통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음.

A4

A5 1969년 4월 1일 전남 여수시 덕충동 철도 연변에 사는 무허가 판잣집 주민 4백 28가구 2천 5백 여명은 순천철도국이 철도 연변무허가 건물을 강제 철거한 데 항거, 여수역 구내로 몰려 철길에 눕는 등 시위를 벌여 오전 10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여수발 서울행 특급 62열차(풍년호) 등 열차가 떠나지 못하였다. 경찰은 시위가 벌어지자 여수·순천시 등지에서 3백 여 경찰관을 긴급 동원,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철거민들이 투석으로 맞서 여수경찰서 김기삼 순경(38) 등 30여명의 경찰관과 전덕심(37) 등 30여명의 철거민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거민들은 6백 여명의 어린이까지 등교시키지 않고 철길 위에 누워 기차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후 여수 덕충동 철도 연변 철거민 시위사태를 현장에서 수습하던 김보현 전남도지사는 시위 수습책으로 철거민 4백 28가구에 밀가루 1부대와 돈 5천 원씩을 주기로 하였다. 또 당장 잠 잘 곳이없는 철거민들에게는 천막을 빌려주기로 하고 농성중인 시위대의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4월 3일 여수찰서는 이들 중 19명을 소요·기차통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신민당은 여수등 일부지역의 철도연변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정부가 강제철거시키고 있는 것은 거주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계장관을 불러 이 문제를 국회에서 따질 방침을 밝혔다. 송원영 신민당대변인은 4월 4일 철도반이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단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한편, 구속된 사람들은 1969년 5월 28일 순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은 소요·기차통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A6 고부식, 김보현, 김기삼, 전덕심

A7

A8 [2천주민 철로막고 농성|송곳창들고 경찰맞서], 『중앙일보』, 1969.4.1.7면 / 「19명을 구속」, 『중앙일보』, 1969.4.3.5면 / 「"거주의 자산침해"」, 『중앙일보』, 1969.4.4(1) / 「전원에 집유」, 『중앙일보』, 1969.5.29(3)

A9

A1 인천 공작창 민영화 반대 시위

A2 1969.4.19.

A3 1969.4.19. 인천 공작창 노동자 민영화 반대 시위

A4

A5 전국철도노조와 인천 공작창 종업원 8백 여명은 1969년 4월 19일 객·화차 제조창인 인천공작창 민영화에 대하여 “철도근대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연간 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다”는 성명을 내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영화를 반대하기로 하였다. 전국철도노조와 인천공작창 종업원 8백여명은 19일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객·화차 제조창인 인천공작창 민영화에 대하여 “철도근대화와 중소기업육성에 역행할 뿐아니라 연간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다”는 성명을 내고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영화를 반대하기로 했다. 5월 23일 철도청 인천공작창 종업원 8백여 명은 낮 12시부터 하오 1시까지 공작창 광장에 모여 인천공작창 민영화 반대 쫓기대회를 가졌다. 인천 공작창 불하 반대투쟁위원회(회장 이찬혁)는 신진자동차에 불하하려는 정부의 뜻을 결사 반대하며 이 요구가 관철 안되면 극한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투위측은 인천공작창이 민영화되면 연간 4억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서울지구에 열차보수창 건설이 불가피해져 50억원이 더 필요할 뿐 아니라 노조를 인정 않는 신진자동차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등 6개항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A6 이찬혁

A7

A8 [인천 공작창 민영화 반대], 중앙일보, 1969.4.19(7) / [인천 공작창 민영화 반대], 중앙일보, 1969.4.19(7) / [인천공작창 민영화 반대], 중앙일보, 1969.5.24(7)

A9

A1 천호동 철거민 연좌시위

A2 1969.4.28.

A3 1969.4.26. 광장교 밑 철거시작 / 1969.4.28. 서울시 천호동 광장교 밑 철거민 철거에 항의하여 동부경찰서 입구에서 항의시위

A4

A5 1969년 4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천호동 481 광장교 밑 철거민 3백 50가구 2천 2백 여명이 무허가 판잣집 철거에 항의, 서울 성동구 구의동 동부경찰서 입구에 모여 연좌시위를 벌였다. 철거민들은 수년 동안 살아오던 집을 성동구청이 ‘특정인에게 모래 채취권을 주기 위해 대책도 없이 지난 26일 하오 갑자기 철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6

A7

A8 「2천여 판잣집 주민」동부서 입구서 테모, 철거에 항의], 『중앙일보』, 1969.4.28(3)

A9

A1 한강로 철도부지 철거민 강제철거 항의시위

A2 1969.5.12

A3 1969.5.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 철도부지의 철거민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거에 대한 항의시위

A4

A5 1969년 5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철도 부지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는 부녀자 70여 명이 국회의사당에 몰려가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부당한 일’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천 4백 가구의 주민들이 대부분 임대료, 재산세 등을 물어가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는데 당국이 경기도 광주로 환지(換地)해주는 것을 전제로 15일까지 철거 계고장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부녀자들은 20분 동안 국회 경비경찰들과 승강이를 벌이며 항의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어 해산하였다.

A6

A7

A8 [의사당앞서 데모], 『중앙일보』, 1969.5.13(8)

A9

A1 구러시아 공관 부지 철거민 철거반대 시위

A2 1969.6.9.

A3 1969.6.9. 서울시 서대문구 정동 15-1 전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철거민들 항의시위

A4

A5

1969년 6월 10일 서울시의 어린이 공원 건설 계획으로 집이 헐리게 된 서대문구 정동 15의1 전 「러시아」 공사관 부지에 살고 있는 5백 70여명의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철거 반대에 동조, 9일부터 등교 거부를 하였다. 이 어린이들은 오는 12일까지 현재 살고 있는 무허가 집을 헐어야한다는 서대문구청의 계고장이 8일 밤9시쯤 전달되자 철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결의, 9일 정오쯤엔 부모들과 함께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곳 정동 공원 건립 책정 지구의 철거 대상 건물은 9백 15동에 4천 1백 2명이 살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 주민들을 역촌 구획 정리 지구와 불광 구획 정리 지구에 천막을 쳐서 수용하고 정동 지역에 1천 만원을 들여 수영장과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를 갖춘 어린이 공원을 만들 예정이었다.

A6

A7

A8 「철거 아동 등교 거부」, 『중앙일보』, 1969.6.10(8)

A9

A1 경남지구 지하당 조직사건

A2 1969. 9. 29

A3 1969. 9. 29. 중앙정보부 경남지구 지하당 조직사건 발표, 간첩 임종영과 김삼연 등 일당 10명 체포.

A4

A5 1969년 9월 29일 중앙정보부는 ‘통일혁명당 재건 및 1970년대 북괴무력적화통일에 영합할 것’ 과 ‘개헌반대, 유언비어유포, 군사기밀 탐지’ 등의 지령을 받고 남파, 경남을 무대로 암약하던 간첩 임종영(林鐘永·29세, 밀양군 삼량진읍 임천리 461)과 김삼연(金三淵·35세, 부산시 중구대교동 1가 39) 등 2명을 삼량진과 부산에서 각각 체포, 이들과 관련된 일당 10명도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1969년 9월 11일 밀양군 삼량진읍 00이발소 앞 노상에서 검거된 임종영은 1969년 4월 8일 일본에 밀항, 조총련 오사카 제일급 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외종형 김해원(金海元·46세) 집에 은거하다 북괴간첩 高모(35세)와 접선, 5월 29일 공작선을 타고 월북하여 3개월 동안 밀봉교육을 받은 뒤 8월 30일 공작금, 무전기, 난수표 등을 갖고 삼량진읍 임천리 461번지에 잠입, 지하활동을 펴왔다는 것이다.

한편, 1969년 9월16일 부산시 중구 대교동 1가 00양복점 앞에서 붙잡힌 김삼연은 부산·삼천포 등지에서 밀수행각을 일삼다 일본에 밀항, 1967년 4월16일 오사카시에서 북한간첩 趙모와 접선, 월북하여 간첩훈련을 받은 뒤 개헌 반대와 진해 해군기지 침투방법 탐지 등의 밀령을 받고 8월 30일 삼천포 부근 해안을 통해 부산에 잠입, 9회에 걸쳐 북한과 무전연락을 하는 등 암약해 왔다고 발표되었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검거된 후 압수된 자료 중에서 {청맥전선} 등 통일혁명당 관련 자료들이 나와 '통일혁명당재건사건'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6 임종영(林鐘永·29세, 밀양군 삼량진읍 임천리 461), 김삼연(金三淵·35세, 부산시 중구대교동 1가 39)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2, 492쪽.

A9

A1 전북지구 지하당 조직 간첩사건

A2 1969.10.8

A3 1969.10.8 치안국, 호남 일대 지하당 조직 간첩사건 발표.

A4

A5 치안국은 1969년 10월 8일 호남 일대를 무대로 지하당조직과 해상연락거점 구축, 반정부 군중봉기 등을 꾀하며 암약 중이던 북한노동당 소속 간첩망의 전북 조직책 진락현(50세), 조직원 박종엽(41세) 및 선박연락거점책 최만춘(49세)과 관련자 7명 등 모두 10명의 간첩단을 체포했다고 발표.

발표내용에 의하면 조직책 진락현은 본적이 전북 임실군 임실면 성가리로 6·25때 전북 도청 농민동맹 군중문화부장 겸 전북 인민위원회 농산부장 등 요직으로 부역, 9·28수복으로 월북후 1년 6개월 간의 밀봉교육을 받고 1968년 10월 28일 간첩조원 박종엽과 황해도 연백 해안에서 공작선을 타고 어물상으로 위장, 인천 해안으로 침투한 것. 이들은 전북 남원·광주·군산 등지에서 친척 및 연고자와 철도, 부두, 운수, 노조 등의 노무자를 포섭, 반정부 군중봉기를 획책하며 암약해 오다 교육받은 남한 정세와 실정이 현저히 다른 것 등에 충격을 받고 1969년 9월 21일 이리(理里)경찰서에 자수해 옴으로써 검거된 것으로 발표됨.

박종엽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태생으로 9·29수복 때 월북, 회천건설사업소장직에 재직 후 3년간 장기 밀봉교육을 받고 진락현과 같이 남파되어 군산·전주·진안·완주·서울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최만춘은 군산 거주 중에 남북귀환 어부인 동생 최만옥의 소개로 1968년 6월 26일 월북, 평양에서 2개월 동안 밀봉교육을 받고 개야도(開也島)와 연도(煙島)에 연락거점을 구축, 지령을 받고 월북자 가족을 포섭하는 등 조직확대 공작을 하던 중에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1969년 8월 25일 북한이 통일혁명당 당중앙위원회가 결성을 선포한 후 검거된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통일혁명당 선언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혁명당재건사건'으로 분류된다.

A6 진락현(50세), 최만춘(49세), 박종엽(41세)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2, 499-500쪽.

A1 통일혁명당 재건 간첩사건

A2 1969. 10. 16

A3 1969. 10. 16.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 재건 간첩단' 검거 발표

A4

A5 1969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는 소위 「통일혁명당」재건과 개헌반대 등 지령을 받고 침투한 무전간첩 한영식(韓榮植·42세)을 10월 15일 새벽 4시 20분 투숙 중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명성여관에서 검거, 15일 밤 韓과 접선하고 있는 고정간첩 김춘식(金春植·40세) 및 이들에게 포섭된 육본통신감실 문관 김명식(金明植·35세) 등 17명 도합 19명을 검거하고 공작금 1백 20만원, 무전대 2대 등을 노획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이 고향인 韓은 6·25때 북한의원군으로 월북, 평남 관개사업소 지배인 등을 역임하다가 1966년 8월 5일부터 간첩 교양을 받고 1969년 10월 2일 임진강을 건너 파주를 거쳐 서울로 잠입했다. 이후 韓은 월북자 가족을 찾아 안부를 전하면서 이들을 포섭, 국내 고정간첩 김춘식과 접선케 하고 고려대, 서울문리대 학생 간부들을 포섭하고 개헌 반대·학생혁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파괴된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다 검거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이 사건은 통일혁명당재건사건의 하나로 검거된 관련자들에게서 통일혁명당 선언서, 청맥 등의 관련자료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A6 한영식(韓榮植·42세), 김춘식(金春植·40세), 김명식(金明植·35세)

A7

A8 송효순, 『北傀挑發三十年』, 북한연구소, 1972, 502쪽.

A1 외국인 투자기업체 노조활동 규제입법 저지투쟁

A2 1969.10.29-1969.12.27.

A3 1969.10.29-11.4, 제1회 한·미 민간 경제위원회 합동회의 개최/1969.11. 노동청과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별법(이하 ‘특별법’)’ 성안/1969.11.24, 외국인 투자기업체 중 노조결성 11개업체 조합원 12,408명, 일괄사표제출, 노총측, ‘특별법’ 결사반대성명서 발표/1969.12.4. ‘특별법’ 경제장관회의 거쳐 국무회의에 회부/1969.12.6. 제101차 노총 긴급중앙위원회, ‘노동기본권 수호투쟁위원회’ 설치/1969.12.13. 서울 신문회관에서 노총전국총괄기대회 개최, ‘특별법’ 규탄/1969.12.15. 영등포 건설회관에 노동자 대표 천여명이 집결, ‘노동기본권 수호 투쟁기대회’를 개최/1969.12.21. ‘특별법’ 국회보사위 통과/1969.12.22. ‘특별법’ 국회법사위 상정, 공화당 단독으로 전격 통과/1969.12.27. 노총측 긴급 중앙위원회 개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악법’으로 규정,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분쇄할 것을 결의

A4 1968년 11월 미국 오크전자회사측이 ‘빈번한 쟁의와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을 발단으로, 1969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에 걸쳐 워커히에서 개최된 ‘제1회 한·미 민간 경제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미국측은 대한투자 문제점의 하나로 ‘임금상승 속도가 외국에 비해 높다’고 정식 제기하였다. 이에 노동청과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실은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외자유치를 위하여’ 1969년 11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별법’안을 성안, 12월 3일 차관회의를 거쳐 12월 4일 경제장관 회의를 통과,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 회부시켰다.

A5 전국 135개 외국인 투자기업체 중 노조가 결성된 11개업체의 각 산별 대표는 조합원 12,408명의 일괄사표를 받아 두기로 결의하고, 11월 24일 동 법안을 결사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어 12월 6일 개최된 제101차 노총 긴급중앙위원회는 [노동기본권 수호투쟁위원회]를 설치하고, 12월 13일에는 서울 신문회관에서 전국 총괄기대회를 개최하고, 위헌 악법을 규탄 성토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영등포 건설회관 강당에서 노동자 대표 천여명이 집결하여 ‘노동기본권 수호 투쟁기대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쟁의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임금을 저하시키며 인권을 유린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규탄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전체 12월 21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하고 22일에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노총 투쟁위원회는 500여명의 재정 간부를 긴급 동원하여 국회앞에서 결사 반대하는 가두시위까지 벌였으나 22일 밤 전격적으로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처리 통과되었다. 이에 27일 노총은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악법’으로 규정,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분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끝내 철회되지 못하였고, 노총의 운동기조인 ‘노동조합주의’라는 기업 내 경제투쟁주의 원칙을 깨뜨리고 노총의 정치참여의식을 일깨워 1970년 1월 노총의 정치참여 선언으로 이끈 계기가 되었다.

A6

A7

A8 11-24, 노총 성명서 ‘외국인 투자기업체 종업원의 노동쟁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노동기본권의 침해이며 위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34쪽, 부록 3-55/12-13. ‘노총총괄기대회 성명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35-736쪽, 부록 3-56/12-27, ‘노총 결의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736-737쪽, 부록 3-57/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623-625쪽.

제2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69년 민주화운동관련 단체 항목 기초조사

01 암장그룹

02

03

04

05 1955. 봄-

06 부산

07 비합법

08

09

010 1953년 부산사범학교를 입학한 이수병은 사회과학 이론서클 모임 결성을 주도, 같은학교의 김종대와 동기생들인 김정위 박영섭 유진곤, 그리고 당시 부산고등학교 재학중이던 김금수 이영호, 박중기 등과 뜻을 같이하여 사회과학이론 토론 서클인 ‘일꾼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이승만의 반공탄압이 격렬해지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일꾼회’라는 이름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어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우려, 회원들간의 논의 끝에 1955년 봄 ‘암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사회과학이론을 연구 학습하였다.

011 암장그룹은 매주 1회 학습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사회과학이론 학습을 통해 사회를 보는 과학적 인식을 심화시켰으며, 박치우의 평론집 [사상과 진실], 민주주의민족전선 발행의 [조선연감], 홍명희의 [林巨正], 이태준, 임화 등 문인들의 작품을 통해 민족적 정서를 공감해 갔다. 뿐만 아니라 그룹의 중심인 이수병은 토지개혁,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리 등을 예로 당시 남북간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는 등 국내외 시사문제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안목을 보이기도 했다. 암장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고교졸업 후에도 계속되어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국강연회나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대중을 각성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이수병을 중심으로 한 이 암장의 활동은 이미 작은 학습 단위를 넘어 초보적이거나 전체 변혁운동의 핵심적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1960년 초 ‘민주민족청년동맹’ 결성에 핵심인물로 참여하게 된다.

012 이수병(경희대), 김금수(부산고 출신, 민민청 중앙간사, 민자통활동), 박영섭(민민청 조직국장, 인혁당 관계), 박중기(부산공고출신, 민족자주청년동맹 간사장, 민자통 청년부장 역임), 이영호(부산고-서울대출신), 김종대(74년 인혁재건위사건 연루), 김정위, 유진곤 등.

013 민주민족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인민혁명당, 경략연구회

014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편, 『암장』 지리산, 1992, 45-57쪽

01 신진회

02

03

04

05 1956. 말-1958. 1월 말

06 서울

07 반합법(반공개)

08

09

010 1956년말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재학생들인 김지주, 하대돈, 유근일 등이 중심이 되어 민병태 교수를 지도교수로 조직된 이념지향의 독서회모임.

011 초기에는 김지주, 하대돈, 유한열, 김형열, 서정균, 유근일 등이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회원 5인의 추천을 통해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기적인 토론회 외 이동화 등 진보적 인사를 초빙, 강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1957. 12. 5) 독서와 발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민족주의, 독일사회민주당, 영국의 페이비언협회 등 비공산주의적 서구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았다. 1957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유근일 필화사건’ 과 그 직후에 발생한 문리대 불온벽보사건 등으로 신진회 회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독서회 활동이 자연 위축되어 점차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 1958년 1월말에 공식해산식을 갖게 된다. 동대문서 사찰과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리대 제7강의실에서 행해진 이 해산식에는 신진회 회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해산으로 신진회의 제한적 활동은 더욱 타격을 입으면서 이후 지하서클로 맥을 이어갔고, 57년 이전에 입학한 초기 신진회 회원들이 대거 脫학생운동화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된다.

012 김지주, 하대돈, 유근일, 서정균, 김형열 등

013 후진사회연구회, 민족통일연맹

014 윤식, 「나의 대학생활」, 『進歩·正義·自由를 위한 노트』, 을지사, 1981, 859-864쪽/김경재, ‘축복받은 입’ 으로 외로이 불러 온 사랑노래 ‘, 『사월의 노래』 사월회, 1993, 24쪽/권영기, ‘신진회에서 민통련까지’, 월간조선, 1984, 4월호, 256-258쪽/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오십년사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오십년사』, 1997, 27-28/정기영, '4월혁명의 주도세력'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1990, 138-139쪽

(김경재 회고 중, “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하고 외치던 윤식, 이영일 등 ‘민자통’ 선배들도 일년여 감옥엘 갔다 오더니 서서히 변신하기 시작했다. …가장 진보적 서클로 알려지던 신진회의 주역 김지주 선배는 재벌기업의 사원으로 변신하였다.” 김경재, 앞의 글, 24쪽에서)

01 후진사회연구회

02

03 없음

04 없음

05 1958. 10-

06 서울

07 반합법(비공개)

08

09

010 1958년 1년간 실질적 와해기를 거쳤던 신진회는 1959년 제대한 선배들의 복학을 계기로 1958년에 입학한 정치학과생들을 중심으로 신진회 재건을 위한 모임을 결성, 명칭을 ‘후진사회연구회’ 로 개칭하고 민주사회주의를 연구한다는 회칙을 정하였다.

011 윤식(尹植), 이수정(李秀正), 유세희(柳世熙), 박종열(朴鐘烈) 등의 후배그룹의 충원으로 ‘민족과 계급’ 혹은 ‘사회주의’ 등에 대한 독서와 토론회를 지도, 조직하였다. 이 시기 이들의 잠재적 활동성은 이후 4·19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윤식(정치 3), 문리대 4·19선언문을 작성한 이수정(정치3), 격문을 쓴 서정복(철학3), 그밖에 황선필(정치3), 유세희(정치3), 박종열(정치3), 이영일(정치3) 등이 모두 이 그룹이었다. 이수정의 경우 1957년 문리대 필화사건으로 「우리의 구상」이 폐간된 후 새로 창간된 문리대 신문인 「새세대」 창간에 참가하여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012 윤식(정치 3), 이수정(정치3), 격문을 쓴 서정복(철학3), 황선필(정치3), 유세희(정치3), 박종열(정치3), 이영일(정치3)

013

014 권영기, ‘신진회에서 민통련까지’, 월간조선, 1984, 4월호, 255-257쪽/정기영, 앞의 글, 139쪽

01 신조회→사회법학회

02 없음

03 없음

04 없음

05 1956-

06 서울

07 반합법(공개)

08

09

010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1956년에 조직된 이념지향의 서클. 1957년 12월의 ‘유근일 필화사건’ 이후 거의 활동을 중지했다가 ‘사회법학회’의 명칭으로 다시 발족. 1958년 4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김기두 교수, 김치선 교수, 우기도 교수의 격려사가 있는 후 회칙을 심의 통과. 임원 선출 결과, 회장에는 법과 4학년인 최상징이 피선되었고, 그의 간부와 평의원 6명이 피선. 이날 회의에서 학회의 목적을 “노동법, 경제법, 사회정책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며 학회활동을 통한 교양증진”이라고 밝혔고, 김치선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011 신조회는 노동법에 관심을 쏟아 노동현상실태조사 등에 주력했다. 1958년의 인천부두노동자 실태조사에 이어 1959년의 영월 탄광광부 실태조사의 결과는 그해 12월 25일자 한국일보 지상에 발표되기도 했다. 사회법학회의 노동현장 실태 조사는 이후 4·19 후에도 계속됐다. 1960년 10월의 대구 방직 공장 여공 실태조사, 1961년 3월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 등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어 노동관계 보고서가 부족하던 당시로서는 큰 반응을 일으켰다.

012

013

014 권영기, ‘신진회에서 민통련까지’, 월간조선, 1984, 4월호, 257-259쪽/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오십년사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교수민주화운동오십년사』, 1997, 28쪽

01 농업문제연구회(農業問題研究會)

02 농연(農研)

03

04 없음

05 1950- 1975?

06 서울

07 합법(사단법인)

08

09 없음

010 결성과정

011 한국농업문제연구회의 주요 활동은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했던 금요토론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요토론회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저명 경제학자들은 거의 다 주제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主題가 농업문제였기 때문에 金俊輔, 朴東昂, 朴根昌, 趙東弼 등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발표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금요토론회는 주제 발표보다도 토론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더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토론참가자들은 대학의 젊은 강사들과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兪仁浩, 金炳台, 朱宗桓, 崔鐘軾, 崔朱喆, 韓準石, 鄭秉學 등이 당시 토론에 참가했던 대학교수이다. 그리고 金柄夏, 陳興福, 崔泰鎬, 林炳潤, 朴玄塚, 李鐘勳, 李炳泰, 金鐘國, 沈鐘燦, 嚴正振, 吳景熙, 朴珉植 등이 대학원생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금요토론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그후 학계로 진출하여 교편을 잡거나 경제단체 조사부 등에서 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금요토론회

는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일은 당시 이 토론회에서는 반공체제의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농업문제연구회의 회장인 南庭 주석균 선생의 자유주의적 경향이 높았던 이유에서 토론회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토론회에서는 마르크스나 레닌의 이론으로부터 케인즈, 슈페터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주제와 영역에 제한없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농업문제연구회의 주요 사업은 금요토론회를 통한 학문적 연구활동 이외에 農村經濟 調查事業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촌 각지에 있는 分會가 중심되어 분회원들이 작성하는 家計簿를 통해 농가 경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사업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민간기구로서는 유일하게 農業生産費 및 農家生計費 등을 집계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농가의 수가 부족하고 標本性이 약했기 때문에 한국농업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지만 농업문제에 관한 이론 전개를 실증적 조사에 의해 뒷받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김낙중, ‘남정 주석균선생님을 생각하며’, 『南庭 朱碩均論叢』 上·下, 열음사, 1988)

012 주석균, 박근창, 김병태, 박현채, 이견우, 이우재, 김낙중 등

013 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1972)→한국농어촌연구소(1985)

014 南庭 朱碩均先生 論叢刊行委員會, 『南庭 朱碩均先生 論叢』, 上, 열음사, 1991, 698-671쪽; 南庭 朱碩均先生 論叢刊行委員會, 『南庭 朱碩均先生 論叢』 下, 4-5쪽

01 여명회(黎明會)

02 없음

03

04 진보당 조직부 내 특수조직

05 1957. 1. 초-

06 서울

07 반합법

08 회장단(회장, 부회장) 이하 총무, 조직부의 부서와 연구위원회를 두었다.

09 없음

010 진보당의 서울특별시당부 학생부장이던 권대복을 중심으로 1957년 1월 상순경 서울 시내 각 대학 내에 진보당을 지지하는 학생층의 모임을 구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진보당 부위원장 김달호 법률사무실에서 안준표, 김용기, 권태창, 김덕휘, 조용진, 황현민, 원일상, 박종오, 최의규 등이 회합, 여명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권대복을 선임하였다.

011 1957년 1월 17일 이후 서울 시내 각 대학교 내에 여명회를 조직하기 위해 대학별 세포책을 두고 조직활동에 들어갔다. 각 대학별 세포책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세포책에 김주태, 국학대학 세포책에 김용기, 신흥대학교 세포책에 원일상, 홍익대학 세포책에 신은섭, 성균관대학 세포책에 이상두, 고려대학 세포책에 김덕휘, 중앙대학 세포책에 황둔민, 동국대학 세포책에 김환문, 국민대학 세포책에 김철영, 연세대학 세포책에 김석영, 외국어대학 세포책에 박원규, 동양한의원 세포책에 정용주, 서울대학 의과대학 세포책에 한보상 등 14개 대학 내 세포책을 두고 회원을 확보했다.

012 권대복(회장), 김주태, 원일상(이상 부회장), 성장환(총무부장), 김용기(조직부장), 이상두(연구위원회장), 황철민(연구위원회부위원장)

013 없음

014 ‘조직부 특수조직 사업계획’ 권대복, 『진보당』 지양사, 1985, 143-145쪽/여명회 간부명단 및 구성, 권대복, 『진보당』-당의활동과 사건관련 자료집, 지양사, 1985, 433쪽/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 역사비평사, 1999, 181쪽

01 민주혁신당

02 민혁당

03

04 없음

05 1956. 11. 8(창당준비위)-

06 서울

07 합법

08 중앙당 조직으로 정치위원회와 통제위원회를 두었다. 정치위원회는 당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통제위원회는 재정위원회, 간사장, 정책심의회각분과위원회, 국회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간사장 휘하에 선전국, 조직국, 상무국을 두었고, 조직국 하부에 지방부가 소속되었다.(이기하, 293쪽)

09 一. 우리는 共產獨裁 官僚壓制 資本專制 其他 一切의 腐敗勢力을 排擊하고 內閣責任制實施로 革新政治의 實現을 期한다.

二. 우리는 合理的이고 計劃性있는 經濟體制를 確立하여 民族資本을 育成하며 農民 勞働者, 俸給生活者 및 小市民의 生活를 保障하는 福祉社會의 實現을 期한다.

三. 우리는 안으로 防衛態勢를 確立하고 밖으로 民主友邦과 緊密한 提携下에 民主勢力에 決定的勝利를 얻을수 있는 民主方式에 依한 祖國統一課業의 完遂를 期한다.

四. 우리는 教育制度를 刷新하여 漸次的으로 國家保障制를 實施한다.

五. 우리는 民族의 自主性을 堅持하고 互惠原則에 依한 友邦과의 外交를 強化한다.

010 1956년 5월 15일 대통령선거 이후, 진보당 추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모든 혁신세력을 총집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으나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독자적으로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함으로써 진보당 추진위 상무위원 가운데 서상일, 이동화, 최익환, 고정훈 등 23명은 “진보당 고수파의 태도는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치운동과 이념운동을 식별함에 있어 우리들과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혁신대동운동을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 부득이 그들과 결별하여 민주혁신당 결정에 초지일관할 것을 성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탈하여 김창숙·장건상·정화암·박용희·신숙·나용균 등 재야인사들과 접촉, 민주혁신당을 창당할 것을 선언하였다(한국일보, 1956. 10. 6) 이들은 1956년 11월 8일 서상일, 박용희, 신숙, 조현식, 김성숙, 김홍식 등 59명의 서명자와 함께 민주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당준비 선언문과 강령을 발표하였다. 준비위원 44명 중 주요 인물은 박용희, 신숙, 최익환, 서상일, 김성숙, 조현식, 고정훈, 이동화 등이었다.

이후 1956년 12월 1일 세칭 대중당을 추진해 오던 구 근민당계열의 김창숙, 장건상 등이 민주혁신당과의 합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민혁당에 합류함으로써 장건상이 민혁당 창당준비위원장, 서상일은 부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1957년 7,8월 무렵, 서상일계와 장건상 간에 내분이 발생했는데, 서상일은 민혁당을 혁신운동의 통합기반에 간주한 것과 대조적으로, 장건상은 그것을 혁신운동의 한 부분으로 보고 혁신세력의 대동단결을 외침으로서 양자간 뚜렷한 노선차이를 보였다. 그 와중에 1957년 8월 3일자 신문에 장건상, 김성숙 등 6명은 서상일 등이 혁신세력 대동단결에 비협력적이라고 공개장을 냈고, 이에 6일에 민혁당 창당준비위원회 상무집행위에서는 총무위원 장건상, 김창숙, 오중환(吳重煥), 상무위원 김일천, 양재소, 윤방우 등 6명을 반당행위자로 규정하고 제명처분을 결정하였다.(한국일보, 1957. 10. 15) 이로써 민혁당 준비위원회는 1957년 8월 10일 서상일, 김성숙, 이동화, 고정훈, 조현식, 최익환, 김철 등을 중심으로 81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당 준비위원회를 결성, 각 부서별 책임자를 선임했다.(한국일보, 1957. 8. 11) 그리고 1957년 10월 15일 전국 대의원 596명중 555(5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렸고, 간사장에 서상일을 선출하였다. 간부로 정치위원회 위원장에 신숙, 부위원장에 김성숙, 정치위원으로 서상일·김홍식·이동화·안호상 등이 선출되었다. 창당대회에서 민혁당은 사회적 민주주의와 피흘리지 않는 통일을 표방하였고, 한국의 현단계는 관권의 발가벗은 힘과

민권의 절명적(絶命的) 항거라고 규정하였다.

011 1956년 5월 진보세력들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조봉암에 대한 지지에 고무되어 모든 혁신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한편으로 11월 10일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결성되고, 다른 한편으로 8일 서상일 등 진보당 이탈파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패하였다. 민주혁신당의 준비위원 중 주요 인물은 박용희·신숙·최익환·서상일·김성숙·조현식·고정훈·이동화·김철 등이었다. 그들은 민주혁신당의 발기준비 중 당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장건상계열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1957년 10월 15일 결성대회를 열어 간사장에 서상일을 선출하였다. 강령에서 민주혁신당은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국민대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 민주정당’임을 밝혔다. 당의 목표는 진정한 사회복지국가의 건설이고, 이를 위하여 의회를 통한 민주적·평화적 변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엔 감시하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지지하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다양한 혁신계열이 통합하여 5월 17일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민주혁신당은 해산되었다.

012 서상일(간사장), 신숙(정치위원장), 김성숙(정치부위원장), 김홍식·이동화·안호상 등(이상 정치위원), 최익환(통제위원장), 장백산(통제부위원장), 우문(禹文, 선거대책위원장), 안정용(당무국장), 주기영(조직국장), 강위정(姜僞情, 선전국장)

013

014 ‘민혁당추진 결정’(『한국일보』56.8.27)/ ‘민주혁신당은 무엇을 하려고하는가’(『한국일보』56.8.28’ / 책임제 추진. 민혁당 창당준비 선언문 등 발표(조선일보, 1956.11.09 석간(1))/ ‘민주혁신당 준비위 각 부서를 결정’ (조선일보, 1957.01.11 조간(1))/ ‘민혁당 徐相日씨과 6일 당무회의.張建相씨등 합작과 제명?’ (조선일보, 1957.08.06 석간(1))/ ‘민혁당서울준위결성’, (한국일보 8.11)/ ‘민혁당 상위 55명이 성명. 徐相日씨 은퇴권고, 張建相씨는 불신임’ (조선일보, 1957.10.11 조간(1))/ ‘민주혁신당 발족. 15일 결당대회 혁신정치를 표방’ (조선일보, 1957.10.16 석간(1))/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pp.287-294/권회경, 『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인터내셔널』, pp.29-30/박태균, 『조봉암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 pp.268-300/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역사비평사, 1999, 169-199쪽; 이동화가 작성한 민혁당 선언, 강령, 정책대강, 당헌 전문은 한태수, 『한국정당사』(신태양사, 19610, 337-380쪽에 실려있음

01 진보당

02 없음

03

04

05 1955.9 -1958. 2. 22(등록취소)

06

07 합법→불법화

08 1) 중앙당부 조직으로 전국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통제위원회를 두었고, 중앙집행위원회 하부로 당무부, 재정부, 조직부, 노동부, 농민부, 사회부, 선전부 교양부, 의원부의 각 부처를 두었다. 이와 별도로 진보당은 특별위원회를 설치, 총무위원회,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출판사업창설위원회의 기구를 두었고, 기획위원회 하부로 노동, 상공, 내무 등 8개의 분과와 서기국을 두었다. 한편 진보당은 일반조직 외에 특별조직을 두고 있었다. 「당헌」 제3조에는 행정구역체계에 따른 일반당부와 함께 특별한 지역 또는 지역에 특별당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진보당의 「특별당부조직준칙」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반조직과는 별도로 행정구역의 동이(同異)에 관계없이 국내의 “특별한 지역(특별지구당부), 특별한지역(특별지역당부), 특별한 사회층(청년·부녀·학생 특별층당부)”에 특별당부를 두고 북반부지역 및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외국지역에 특수당부를 둘 것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학생·문화계·교육계·종교단체·농민·노동자·어민·경찰·군·여성계, 기타 각종 직장 등의 분야에서 특수조직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2) 각 지방당 결성과 조직

지역	결성일	주요인물
경남도당	1956. 12. 9	한홍교·이덕명·임갑수·이상문(이상 의장단),한홍교(위원장), 임갑수·최양기(부위원장), 옥영진(간사장), 배일성·김명갑(당무), 허명·김영환(조직), 남명진(재정), 장주표·김재봉(선전), 문부식(노동), 서태완(사회),하태환(교양), 이한주(통제위원장), 정복환(부위원장)
경북도당	1957. 4. ?	이동하(위원장), 이영옥·윤지화·조병관·손학익(부위원장), 권영완(간사장), 추연환(부간사장), 이경해(당무), 이병휘(선전), 권영완(조직), 추연환(연락), 음태호(노동), 박팔룡(사회), 김재춘(교양), 송전도(통제위), 백팔봉(통제부위)
서울특별시·경기도당	1957. 4. 15	조봉암(위원장), 김달호(부위원장), 안경득(간사장), 홍순일(당무), 허영무(조직), 박지수(선전), 권대복(학생부장), 정예근(통제위원)
전남도당	1957. 7. 18	윤길중(위원장), 조중환·임기봉(부위원장), 임춘호(간사장), 서진걸(당무), 박세원(조직), 김이현(선전), 김철중(재무), 장현철(노동), 박하국(사회)
전북도당	1957. 7.12	양해룡·조기하·김위제(이상 의장단), 양해룡(위원장), 김대희·온삼엽(부위원장), 정명환(간사장), 임건영·강진원(부간사장), 강진원(당무), 양정옥(선전), 온삼엽(조직), 김성배(재정), 황인권(노동), 한명수(사회), 임병기(교양), 진봉균(통제위), 조병갑(통제위부)

09 강령

1. 우리는 원자력혁명이 재래할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응하여 사상과 제도의 선구적 창도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복지의 달성을 기한다.
2. 우리는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을 기한다.
3. 우리는 생산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의 육성과 농민 노동자 모든 문화인 및 봉급생활자의 생활권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흥번영을 기한다.
4. 우리는 안으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 민주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5. 우리는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점진적으로 국가보장제를 수립하고 민족적 새 문화의 창조로서 세계문화에의 기여를 기한다.

010 이승만과 자유당집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집결하기 위한 신당운동에서 제외되었거나 참여를 스스로 거부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혁신정당을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955년 9월 1일 ‘광릉회합’이 이루어졌다. 이 회합에는 조봉암·서상일·장건상·정화암·최익한·서세충·박용희·정이형·남상철·양우조 등의 원로와 신도성·윤길중·김기철·김경태·이명하·김수선 등 신진세력을 합쳐 모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합에서는 혁신정당을 모색하기로 합의, 이후 몇차례의 회합을 거듭하면서 신당의 성격을 사회민주주의 내지 민주사회주의로 집약하였다. 세칭 ‘광릉회합’을 계기로 건국과정에서 탈락되었던 혁신세력의 재규합은 당초 범민주 단일야당의 결성을 목적으로한 것이었지만 1955년 9월 19일 민국당이 중심되어 보수 신당인 민주당이 결성되자, 혁신계는 반보수 혁신정당결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광릉회합 3개월 만인 1955년 12월 22일에 조봉암 직계 세력과 장건상·정화암·김성숙·박기출·신숙 등의 민족주의세력과 서상일·신도성 등 민국당 이탈세력이 회합을 거듭한 끝에 ‘(가칭)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여기서 진보당 추진 대표로 조봉암·서상일·박기출·이동화·김성숙·박용희·신숙·신백우(申伯雨)·양운산(楊雲山)·장지필(張志弼)·정구삼(鄭求參)·정인태(鄭寅泰) 등 12명의 발기인을, 총무대표위원에 최익환, 선전대표위원에 윤길중을 각각 선출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발기취지문과 강령초안을 발표하고, 혁신정당의 과업으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 두가지를 내걸었다. 진보당추진위원회는 1956년 3월 31일 서울 중앙예식장에서 진보당 창당 전국추진대표자대회를 소집하고,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조봉암, 부통령 후보에 서상일을

지명했다. 그러나 서상일은 “평생 정치 교육자로 여생을 봉사하겠다” 고 고사함으로 부통령 지명은 유보시킨 채 (뒤에 박기출 지명), 오후 회의에서 정강·경제정책·당 기구(안)등을 심의한 뒤 66명의 추진 준비위원회와 부서에 대한 인선을 마친 다음 의안부(議案部) 책임간사인 신도성의 제안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당 추진 대표 전원으로 구성기로 결의했다. 제3대 대통령선거 이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당의 정식발족과 이를 위한 범진보세력의 대동단결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1956년 8월에 지방의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 지방당을 조직하고 그 여세를 몰아 중앙당을 결성하고자 했다. 이에 진보당추진위원회는 1956년 7월 13일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결당일자를 8월 30일로 결정, 8월 10일 상무위원회에서 정강정책 심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서상일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진보세력 대동추진’ 이 결말을 볼 때까지 결당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봉암측에서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다시 결당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 다시 ‘혁신대동 추진위원회’ 가 설치, 서상일·박기출·윤길중 등이 재야 정치인과 절충을 벌이면서 조현식·김경태(金景泰)·안정용(安景鏞) 등의 재야인사 대표와 김홍식·김원국·신태권 등 국회 헌정동지회 대표를 참가시켜 9인위원회를 구성, 이에 다시 김영기·신중목·신태악 등 공화당계 인사를 포함한 12인위원회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협의체에 불과한 12인위원회는 ‘혁신세력 대동’ 을 위한 기초로 ①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백지화한다 ② 조봉암을 당 지도부에서 후퇴시킨다 ③ ‘진보당’ 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결국 진보당의 확대강화 운동의 명분으로 출발한 ‘진보세력 대동추진운동’ 이 마침내 ‘진보당 말살운동’ 으로 발전하게 되자, 10월 2일 진보당 추진 위 상무위원회에서는 기존 방침에 따라 10월중 진보당 결당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서상일과 그 지지세력은 10월 8일 진보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민주혁신당’ 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에 진보당에서는 10월 9일 서상일·김성숙·이동화·고정훈·최익환·최재방·안도명·신용순 등 8명을 제명처분하였다. 이제 조봉암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들로 진보당은 1956년 11월 10일 전국 대의원 900명 중 85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市)공관에서 창당대회를 소집했다. 대회는 당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김달호와 통제위원장에 김위제, 동 부위원장에 김기철, 간사장에 윤길중을 선출하고 이대통령과 유엔총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는 한편, 선언문과 5대강령, 9개정책 및 당헌의 통과, 272명의 중앙위원 등을 선출했다. 이어 12일에는 제1차 중앙상무위원회를 개최, 창당대회에서 위임된 중앙부서 인선문제를 인준 완료했다.

011 진보당의 주요활동은 당 결성과정과 직접 관계되었던 혁신계통합운동에 관계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권하에서 금기시 되었던 ‘평화통일론’ 을 전면 제시하였던 것이다. 보수세력의 협공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득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승리를 얻은 조봉암은 이후 독자적인 정당실천보다는 야당연합의 결성을 통한 합법공간에서 반이승만 연합신당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범민주 단일야당에의 합류를 목적으로 했던 혁신세력의 재규합은 민국당 중심의 보수 신당인 민주당을 결성하기에 이르자 반보수 혁신정당 결성을 지향, 진보당 창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조봉암에게 독자적인 정당 실천의 중요성은, ‘조국과 민족과 국민을 존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유일한 길’ 이라는 점에 있었다. 여기서 합법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보당 강령 전문에서도 표현되었듯이 ‘비폭력적 방식·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해 의회의 절대다수를 점함으로써 수행’ 해야할 것으로 정리할 경우 합법공간의 획득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진보당 창당과정에서는 시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첫째, ‘선 이념통일 후 창당’ 과 ‘선 창당 후 이념통일’ 의 대립이 그것인데, 진보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 된 뒤, 장건상과 정화암 등이 내건 전자와, 조봉암의 후자간 대립은 결국 1955년 9월 1일의 광릉회합으로 재결집의 기회를 찾아가던 혁신계가 분열을 맞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진보세력 전체의 합의와 선거 일정과 창당 시점의 관계 설정문제이다. 진보당의 정식 창당은 1956년 5월의 제3대 정부통령선거 준비로 연기되었으나, 그것은 연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선거의 장을 통해 창당작업의 대중적 지평의 확보를 위한 조직 점검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자신감을 얻은 조봉암은 여세를 몰아 신당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서상일과 장건상, 정화암 등은 보다 광범한 민주혁신세력의 결집을 위해 진보당 결당을 늦출

것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급격하게 부상된 조봉암·진보당을 대신해, 조봉암의 2선 퇴진과, ‘민주혁신당’을 새로운 당명으로 내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혁신계의 단일정당운동은 대립과 분열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진보당의 이념과 노선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이 강조하고 있는 민족문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진보당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노선은 ‘민족적 사회민주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창당 선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통일된 자주독립 대신에 국토의 분단과 사상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자유와 질서와 안전 대신에 억압과 혼란과 폭력이 횡행하여 건설과 진보와 번영 대신 파괴와 퇴영과 공핍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진보당을 제3의 노선이자 진보주의의 방도로서 ‘민족적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진보당의 민족문제 인식은 활동에서 평화통일론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혁신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대립점이 통일론에서 크게 형성되었고 진보당의 통일론이 이후 통일운동의 시초가 된 점에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방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보당의 통일론은 ‘광통회합’에서 처음 제기되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승리하의 평화적 남북통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과 자유당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무력복진통일론이었고, 선거를 통한 통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만 선거를 실시, 선출된 대표로 기존 남한국회에 편입시키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진보당은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강령에 명시하였으며, 정책에서도 무력통일론의 불가능성을 지적,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 바탕에서 “유엔을 통한 민주적이고 평화적 조국통일”만이 민족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진보당의 통일론은 기존의 보수 정치세력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비록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저에는 탈냉전 중립주의적 지향이 보인 점이다. 진보당 정치세력의 이념은 공산 독재도 자본주의 독재도 반대한다고 표방했던 만큼 비소비미(非蘇非美)적 중립주의 지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둘째, 진보당은 민족 내부의 상이한 집단 사이의 공존과 대화를 주장했다. 즉, 통일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정치세력간의 실제의 인정과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바탕에 흐르고 있었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무렵에 작성된 『우리의 당면과업』에는 남한 제반 정치세력간의 행동통일체 구성제안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통일을 위해 보수 양당은 물론 해방공간의 중간파와 남북 협상파, 보도연맹 관계자, 민족청년당 계열 모두를 포괄하는 행동통일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조봉암은 사사오입 개헌 후 야당통합운동에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하였고, 1957년 11월 26일 자유당과 민주당에 국토통일 추진을 위한 행동통일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조봉암과 진보당의 이러한 제안은 현실정치면에서 자신들의 기반확충을 위한 포석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진보당의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는 분단극복 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즉, 민족내부의 타협과 결집을 통해 미소 양 진영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 했던 해방공간 중간파의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운동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진보당의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통일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추구하되 냉전적 시각이 아닌, 탈냉전 중립적 시각에서 양자간의 타협점을 마련하며, 이와 함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민족내부의 화해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냉전진영과 남북한 사이에, 또한 남한 내부의 상이한 사회집단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족적 결집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극화가 당시에는 북진통일의 구호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의 논리는 평화의 구호로 표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비록 구체화되지 못했지만 단순히 전쟁에 반대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극단적 논리로 유지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이한 지향을 가진 집단간에 공존을 추구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었다.

012 중앙당 각 부서별 임원: 조봉암(위원장), 박기출, 김달호(이상 부위원장, 박기출은 재정간사 겸), 윤길중(중앙당 간사장), 이명하(부간사장, 조직간사 겸임), 최희규(총무간사), 임기봉(노동간사), 조규희(선전간사), 김병휘(교양간사), 윤복덕(사회간사)

중앙상무위원회 명단: 윤길중·조규택·이창호·강진호·이성진·김병휘·신창균·박준길·서진걸·송

건(송재규)·온삼엽·김하돈·성낙준·임갑수·박지수·정동익·홍순범·서재록·조규희·안준표·안경득·황민암(황구성)·이규석·이명하·이봉래·최희규·곽현산(곽순모)·선우봉·이흥렬·전세룡·한병욱·조중찬·김규찬·윤복덕·김창수·최운기

각 위원회 별 임원명단

·통제위원회-김위제(위원장), 김기철(부위원장), 홍성익·차영호·이문필·서정계·정성업·여덕현·정예근·이한주(경남)·김정학(경북)·박병홍(전남)·김대희(전북)(이상 위원)

·총무위원회-장지필(위원장), 원우관·이희재·정중·송우석·송두환·김안국·김한규·임기봉·조기하(이상 임원)

·기획위원회-김안국(위원장), 정중(부위원장), 성낙준·서진걸·이창호·원대식·이흥렬·하태환(이상 노농분과), 송건·최운기(이상 상공분과), 선우봉·원일상(이상 내무분과), 정중·윤지화·김동서·박지수·권대복·박지호·안경득(이상 문교사회분과), 안우석·안준표·오용제(재정경제분과), 이길환·황민암(교체분과), 김용성(조사통계분과), 김계생·문색민(이상 서기국)

·재정위원회-신창균(위원장), 홍순범(부위원장), 김창수·강진호·김규찬·이기복·선우기준·성낙준·이수근·이두환·윤죽향(경남)·윤지화(경북)·장동호(강원)(이상 위원)

·통일문제연구위원회-송두환(위원장), 이성진(부위원장), 조기하·원우관·이희재·김기철·이수근·조규희·안경득(이상 위원)

·출판위원회-박기출(위원장), 이광진(부위원장), 김일록·이송암·이흥렬 등(이상 위원), 송건·이봉래 이하 4명(이상 사무국)

013

014 ‘진보당 발기 취지문’, 권대복, 『지양사』, 1985, 12쪽/ ‘선언문’, 권대복, 앞의책, 13-15쪽; 정태영·오유석·권대복 엮음, 『죽산조봉암전집』4, 세명서관, 1999, 54-57쪽/ ‘강령’ 권대복, 앞의책, 16-36쪽; 정태영 등 엮음, 앞의책, 58-87쪽/ ‘정책’, 권대복, 앞의책, 37-54쪽; 정태영 등 엮음, 앞의책, 86-108쪽/진보당의 고민, 『한국일보』56.7.2/서상일과의 불화, 『한국일보』1956.8.10/진보당 결당대회 연기, 『한국일보』56.8.25/민혁당추진결정, 『한국일보』56.8.27/상호이견을 해소, 『한국일보』56.9.8/신당운동에 신앙상, 『한국일보』56.10.6/진보당서 대거 이탈기세, 『한국일보』56.10.8/탈당을 성명, 『한국일보』56.10.9/진보당결당대회, 『한국일보』56.11.11/혁신표방코 진보당 발족, 『한국일보』56.11.12/진보당 중앙부서 결정, 『동아일보』1956.12.28/조봉암, 「평화통일의 구체적 방안」, 『신태양』, 1957, 4월호, 57쪽/「토론:4政黨의 送年 年頭 對決」, 『현대』, 1958, 1월호, 47-48쪽/조봉암, 『우리의 當面課業-對共產鬪爭의 勝利를 위하여』, 혁신문예사, 1954, 63-77쪽/박태균, 『조봉암연구』, 창작과비평사, 1995, pp.268-300/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한길사, 1991, 225-273쪽/정태영, 『한국 사회민주주의정당사』, 세명서관, 1995, 365-381쪽/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 역사비평사, 1999 참조/서중석, 「조봉암, 진보당의 진보성과 정치적 기반」, 『역사비평』, 가을호, 역사비평사, 1992, 24-26쪽/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1953-196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64-84쪽/김학준, 「남북한에 있어서의 통일논의 존재」, 『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비평사, 1982, 228-229쪽/조현연, 「1950년대 진보당의 당 활동과 1999년 진보정당운동」, 『죽산조봉암전집』6, 세명서관, 1995, 217-235쪽/신창균회고록, 『가시밭길에서도 느끼는 행복』, 해냄, 1997, 200-219쪽.

0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02 전국노협

03 석탄광노련, 부산지구노련, 광산노련, 대구지구노련, 대한생사노조, 장성탄광노조 등

04

05 1959. 8-

06

07 반합법

08 의장제 조직. 중앙위원장 1인과 11인의 중앙위원, 역원으로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쟁의지도위원회, 법규연구지도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징계감사위원회를 두었다.

09

1. 우리는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권수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한다.
2.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을 통해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고 노자(勞資) 평등의 균등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3.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주권을 확립하고 국제노동운동과 제휴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010 대한노총의 어용화와 파벌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58년 대한노총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김기옥이 대한노총 규약을 고쳐가며 위원장제를 만들어 대한노총의 1인독재체제를 수립하자 이에 반 김기옥과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운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9년 8월 11일 서울 경전노조 회의실에서 전국 37개 노동조합연합체 중에서 24개 연합회 대표 32명이 모임을 갖고 김기옥이 주도하는 대한노총의 비민주적 처사들을 비난 규탄하고, 가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현 대한노총의 부패 타락을 지적하고,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전국적 중앙연합체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동 협의회의 선언문, 강령 등을 기초하며 준비위원회의 부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으로 김정원(金正元), 김성환(金成煥), 김말룡(金末龍), 한기수(韓基洙), 신현수(申鉉洙), 노응벽(魯應壁), 김규성(金奎星), 김영태(金永泰), 김경호(金敬浩)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8월 20일 다시 회합을 갖고 선언과 강령을 채택하는 동시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 위원장에 김정원, 부위원장에 이상진(李相鎭), 김말룡을 선출하고, 이두형(李杜炯), 정대천, 이주기, 노응벽, 최유식(崔有植), 김영태를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결성대회를 1959년 9월 25, 26일 양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맹렬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많은 노동조합들이 이에 동조하게 되었다. 대한노총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의 통합을 위한 시도가 보사부 장관의 적극 알선으로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9월 25, 26일로 예정되었던 전국노협 결성대회는 뒤로 미루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국노협은 대한노총에 통합조건으로, ① 대구에서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무효화 ② 심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산, 인천 두 지역의 부두노조를 노동자 본위의 조합으로 다시 조직할 것 ③ 행정당국은 대한노총의 유령 조합원 12만명을 정리할 것 ④ 철도노조에서는 법에 의한 연차대회를 조속히 소집할 것 ⑤ 김기옥은 8월 30일의 임시 대회 이후에 해고한 노동자 372명을 즉시 복직시킬 것 등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위한 5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수락할 것을 요구했었다.(조선일보, 1959. 9. 3-5) 이와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한노총은 결국 경전노조 위원장 정대천만을 다시 대한노총으로 포섭하는데 성공, 정대천은 전국노협 결성준비위원회의 집단적 의도와는 달리 동년 10월 6일부로 앞으로 전국노협과는 일체 관계를 끊고 대한노총 산하에 대동단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탈하고 말았다. 경전노조의 탈락에도 전국노협의 결성 추진은 계속되어 1959년 10월 26일 서울 태화관에서 비밀리에 회합을 열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 생사노조를 비롯한 14개 노동조합 대표 21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의장제를 채택키로 하고 각 임원을 선출하였다.

011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자유당 정권의 경찰국가적인 독재 탄압 하에서 표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나, 어용노조 밑에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에게 민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데 크게 고무 격려가 되었다. 특히 전국노협 결성 추진과정에서 핵심인물인 노응벽, 김말룡 등이 1958년 11월에 제소한 대한노총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에 관한 소송(김기옥의 1인독재체제 수립)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내린 사건은 경전노조 위원장인 정대천이 어용성을 포기하지 못한 채 전국노협 결성준비위원회에서 탈락한 뒤에도 계속해서 전국노협 결성을 추진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결국 전국노협의 결성은 1960년 3월 10일 노동절에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등 많은 역할을 통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4.19 민주혁명의 대열에 나서게 하였다.

012 김말룡(중앙위원장), 심순택·강수면·김갑수·이팔갑·김운한·이세영·김호택·박월식·양의성·배형(이상 중앙위원), 한대연(사무총장), 한동옥(정책위위원장), 김은호(쟁의지도위원장), 강기엽(법규연구지도위원장)

013

01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선언강령·취지문」 김낙중, 앞의책, 249-250쪽/경전노조, 「勞動」, 제7권 제8호, 1959. 8. 36쪽/ '노협 또 하나의 노조. 내일 말에 결성' (조선일보, 1959.08.23(3))/ '새로 발족하려면 노조협의회. 결성을 무기 연기' (조선일보, 1959.09.27 (5))/ '26, 27양일에 결성대회. 노협 설립 준비위서 결정' (조선일보, 1959.10.11(3))/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445-447쪽

01 정치문학회

02 정문회

03

04

05 1950년대 말-1960년대 초(4·19이후 해체?)

06 서울대 내 학회

07 반합법

08

09

010

011 '문학으로 정치하고, 정치로 문학한다' 는 기조아래 다분히 자유주의적 기풍의 비밀 서클.

012 김성우, 노재봉, 신동호, 김경재, 김질락, 이문규 등.

013

014 김경재, '축복받은 입' 으로 외로이 불러 온 사랑노래', 『사월의 소리』, 사월회, 1993, 15-25쪽/ 「김정강 증언록」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01, 선인

01 민족건양회 民族建揚會

02 민양

03

04

05 1945.1.5.-?

06

07 반합법

08 수석의장(김창숙), 의장(성재 이시영→석천 안경근→해공 신익희), 총책임간사(도봉 박 진), 사학연구부 책임간사(도남 조운제), 정치실천부 총무간사(문한영)

09

010 민양은 1945년 1월 5일 서울 가회동 朴震의 집에서 '사학 및 실천' 이라는 '작은 집결' 을 표방하면서 창립되었다. 이 자리에서 민양은 "민족혁명 자주자력의 강화로써 外勢領御, 통일건국 그 다음의 논책의 史路대로 전진" 을 목표로 정하였다. 민양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종률은 '민양' 을 '참다운 民族史責黨을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조직' 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당세의 일부' 로 민자통을 발기하는데 주동이 되었다. 그리하여 민자통 준비 초기 단계에서는 큰 역할을 하였고 민족주의계열과 학계를 중심으로 상층부에서 상당수의 민자통 성원을 구성해 내기도 하였다.

011

012 수석의장 金昌淑, 의장 李始榮, 부의장 安敬根, 총책임간사 朴震, 사학연구부 책임간사 趙潤濟, 총

무간사 文漢榮

013 민족자주통일협의회

014 문한영 증언(1993), “민양은 이종률선생이 주도해 만든 조직으로 원로들이 시국문제를 토론하는 성격이 강했다. 4.19이후에 민족자주통일협의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5.16군사쿠데타가 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장이었던 이종률선생이 내가 후임 의장으로 활동했다고 진술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민족통일방안대강’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317-318쪽 / 이종률, 『민족혁명론』, 돌샘 234-244쪽 / 산수이종률선생기념사업회 엮음, 『산수이종률저작자료집』에 1집, 들샘, 2001 /

01 민족문화협회

02 민문협

03

04

05 1956. -1960. 4.19직전

06 경남

07 반합법

08

09

010 한국전쟁 이후 부산지역에서 이종률의 문하생을 중심으로 1956년에 결성된 조직. 여기에는 김종수(부산대 국문과 졸업, 대신여중 교사)가 책임간사, 허수복(부산대 영문과)이 보조간사로 활동. 그 외 김정환, 이주홍, 김태홍 등 진보적 교수 문화인들이 동참하였다.

011 민족문화협회는 주로 항일문화행사와 항일민족운동을 소재로 한 역사강연 등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행사들을 주로 개최하였다. 이후 1959년에 들어서면서 민문협은 비교적 온건한 문화운동에서 적극적인 정치사회적 민족운동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012 김종수(책임간사, 부산대 국문과 졸업, 대신여중 교사), 허수복(보조간사, 부산대 영문과)그 외 김정환, 이주홍, 김태홍 등.

013 민주민족청년동지회

014 김지형,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연구」,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94, 46쪽

01 통일민주청년동맹

02 통민청

03

04

05 1960년 후반-5.16

06

07 반합법

08

09

010 1950년대 중반 이후 청년학생들은 합법, 비합법 서클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체계적인 학습으로 사회를 보는 거시적 안목을 습득했다.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성민학회, 통일청년회 회원들과 일부 신진회 성원이 합류해서 통일민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이 통민청의 모체다. 성민학회는 자유당 말기부터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부산지역에서 먼저 결성되었고 서울에도 지부 비슷한 조직이 결성되었다. 부산의 김배영, 김한덕, 서울의 김영옥 등이 주요성원이었다. 통일청년회는 당

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수선(金壽善)의 비서로 있던 김영광이 1950년대 말에 조직했는데 1975년 ‘인혁당사건’으로 사형당한 이 우홍선도 이 모임의 회원이었다. 통일민주청년동맹은 이 두 서클의 중심 인물들이 4·19 이후 새로운 정세에 대응해서 결성한 조직이었다. 여기에 신진회 출신의 양춘우 등이 합세하였다. 한편 통민청이 사회당의 외곽조직으로 최백근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초기 통민청 조직과정은 사회당과 무관하다. 그러나 이후 활동에서 최백근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당에 참가하여 외곽단체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011 통민청의 활동은 민족·자주·민주를 사상적 모태로 하였다는 점에서 민민청과의 사상적 거리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통민청은 민민청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전남지방과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는 김낙중, 김영광(金永光), 양춘우 등 청년층이 주요한 역할을 맡았고 대구에서는 우홍선, 이재문 등이 활동에 참가하였다. 전남지방에서는 학생신분으로 청년운동에 참가하게 된 김시현(金是現) 등이 실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통민청은 학생운동의 통일적 지도를 위해 민민청과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5·16쿠데타의 발발로 이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통민청(준비위원회)은 1961.2.8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뼈라를 서울시내에 뿌렸고, 2.13에는 “한미경제협정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상품시장 예속국으로 합법화시키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기도”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항구적 예속화와 조국의 민주통일에 배역되는 한미경제협정인준을 범민족적 항쟁으로 봉쇄해야 한다” (『민족일보』 1961.2.14.1면)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2대악법반대투쟁에 적극 참가했으며, 민자통의 중간간부층으로 주요간부들이 활동하면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012 김낙중, 김낙중, 김영광, 김배영, 진병호, 김영옥, 이규영, 황금수(이상 서울중심 활동가), 우홍선, 이재문, 이종문, 배건식, 최일(이상 대구활동가), 김시현, 박복규, 김수영(이상 전남대생), 이문교, 유광원, 박명서 등.

013 인민혁명당

014 전라남도통일민주청년동맹사건(관련자 : 김시현 7년)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 기록사 총서』 7권, 국학자료원, 2001, 1117-1127쪽 / 김동춘·박태순,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122-124쪽 / 김민희,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185-187쪽 / 김지형,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연구」, 경기대사학과 석사논문, 1994, 51-54쪽

01 민주민족청년동지회(민민청전신)

02

03

04

05 1960. 초-

06 부산 경남일대

07 반합법

08

09

010 민족문화협회 소속 활동가들과 이후 통민청에 참여하는 김한덕, 김배영 등이 함께 모여 조직한 서클.

011 학문연구와 강연회 등 활발한 대중운동을 벌임. 이후 조직이 확대되어 1960년 5월 ‘민주주의민족운동청년협의회’로 개칭.

012 조광일·김영대·오영식·김달수·문동수·서석동·최종근·권종현·하상연·박창중·배다지·김상찬·이영석·한명수·권오덕·노치관·이응성·이종택 등.

013 민주민족청년동맹

014 김지형,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연구」, 경기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94, 46-47쪽.

01 공명선거추진전국학생위원회

02 공명학생위

03

04

05 1960. 2. 9-

06 서울

07 반합법

08

09

010 1960년 2월 9일 오전, 흥사단 사무실에서 5·5 의거동지회원들인 한백화(韓百和), 박기정(朴基正), 정국로(鄭國老)와 재학생측으로 고려대학생 하은철(河銀喆), 건국대학의 복진풍(卜鎭豐), 박정무(朴正茂), 조웅(趙雄), 유인재, 신태현, 이대우, 박영용 등이 모여 합법공간에서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학생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근교 홍익대학교 학생 박희영(朴禧永)의 집에서 약 26명의 학생들이 모여 동 위원회 발기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결의된 단체명은 ‘(가칭)공명선거탈취전국대학상공동투쟁위원회(공투)’ 이었다. 발기회의에서 2차 확대회의와 결성식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경찰의 정보망에 발각되어 이후 발기인 모두 고초를 겪었다.

011 이 조직은 발기인 대회 직후 경찰에 발각되어 조직체로서 공식적인 활동은 전개하지 못하였고, 이후 유사명칭의 조직들에서 활동원들이 분산되어 활동하게 된다.

012 발기 주역 및 초기 주역 명단

건국대학 : 복진풍, 조웅(본명:조병규), 박정무, 노원태(본명:노정원), 박영용

국민대학 : 한백화, 오병규(이상 졸업생)

고려대학 : 이기택, 문정수, 하은철, 정국로, 정준석, 임도종

동국대학 : 박기정, 이우대, 유인재

이화여대 : 서계숙

숙명여대 : 김인숙

송실대학 : 조창도

외국어대학 : 이태준

경남대학 : 이용곤(졸업생)

서울법과대학 : 최갑수

유도대학 : 김용식

홍익대학 : 박희영, 홍두표(졸업생)

성균관대 : 신태현, 봉재웅, 신재홍

그외 학생회원명단 : 김동섭, 김상기, 김서봉, 김일동, 권영철, 박치옥, 이동춘, 이문용, 주일성, 조춘만, 황관의 등.

013 ‘공명선거추진전국학생투쟁위원회(공투)’, ‘공명선거추진전국위원회 학생특별위원회(공명학생특위)’

014, ‘발기취지문’, 정국로, 『한국학생운동사:1945-1960』, 도서출판 반, 1995, 354쪽/동아일보, 1960. 2. 29/동아일보, 조선일보. 1960. 3.1/한국일보, 1960. 3.2/정국로, ‘4·19 학생혁명에 관한 연구’, 1978. 건대석사논문. 119-122쪽/정국로, ‘한국학생운동의 재조명’ 숙대신보, 1983. 11.3/6·1회편, 『4월민주혁명사』, 제3세대, 1992. 170-171쪽/유치송, 『해공 신익희 일대기』,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84. 773-776쪽/이기택, ‘현승중인터뷰’ 『월간조선』, 1987. 4월. 346쪽/이상우, 「한국학생운동 40년사」, 『월간학원』, 1984. 8월, 130-145쪽/권영기, 「4·19세대 그후 26년」 『월간조선』, 1986. 4. 312-327쪽/김석환, 「4·19, 6·3, 긴조, 5·18세대」, 『월간 중앙』, 1988. 4. 502쪽

01 공명선거추진전국위원회 및 동 학생특별위원회

02 공명학생특위

03

04 공명선거추진전국위원회

05 1960. 2. 28-

06 서울

07 반합법

08 6인의 고문단, 위원장 체제, 4인의 최고위원, 3개의 분과(기획, 조직, 선전), 학생특별위원회 체제.
09

010 1960년 2월 8일 발족된 ‘공명선거추진위원회’ 에 이어 보다 범국민적인 조직체의 구성에 착수한 민주당과 재야세력은 동년 2월 28일 오후 을지로 대성빌딩에서 ‘공명선거추진전국위원회’ 를 발족하였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민권수호연맹, 재야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문화계, 종교계, 흥사단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여기에는 앞서 발족된 ‘공명선거추진전국학생위원회’ 의 주역들도 다수 참석하여 범국민적 운동에 힘을 결집할 것을 결의, 그에 따라 학생 상임위원으로 학생 다수를 포함시켜 ‘학생특별위원회’ 를 별도로 조직하였고, 대표로는 고려대 상경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 이기택(李基澤)을 내세웠다.

011 1960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 41주년 기념식장인 서울운동장의 곳곳에서 동 학생특별위원회 소속 학생들에 의해 수천 매의 전단이 뿌려졌다. 이 전단은 2월 28일 대구 고교생들에 의해 벌어진 시위에 앞서 2월 27일 민주당 당사의 등사판을 이용해 3·1절 기념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모학생 체포에 나섰고, 현장에서 김용식은 연행되었다. ‘특위’ 소속 회원들은 그날 밤 우이동에 있는 해공 신익희 묘 사당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모의하고, 동 ‘특위’ 명의로 격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특위’ 소속 학생들은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운동장에서 벌어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면의 유세 직후 벌어진 대규모 학생시위에 가담·주도하였다. 그러나 3·15 선거가 임박하여 ‘특위’ 는 자유당과 경찰의 분열책동으로 사실상 와해에 직면하게 된다. 3월 10일 이전에 약 한달간 공동투쟁을 전개해 온 ‘학생특별위원회’ 주역 가운데 일부가 이탈하였고, 이 단체에 맞서 학도호국단 소속 학생들이 자유당 지지선언을 발표하는 등 투쟁의 장애요소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3월 8일 동 ‘특위’ 를 탈퇴하는 성명서와 함께 별도로 박영용, 노원태, 김동섭 등 주도세력들이 별도의 조직인 ‘유석학생동지회’ 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핵심 주역들의 이탈로 3월 10일 이후 ‘특위’ 는 교외활동에서 교내활동으로 위축되어, 학생간부활동에 주력하였다.

012 고문 : 김장숙, 장택상, 김성숙, 고희동, 김준연, 임영신 위원장 : 장리욱, 부위원장 : 김팔봉 이관구, 최고위원 : 김병로, 전진한, 장리욱, 백남훈, 기획 : 황호영(책임), 조직 : 송명천(책임), 선전 : 김수한(책임) (이상 공명선거추진전국위원회), 학생특별위원회 ; 하은철, 복진풍, 유인재, 이기택, 권영철, 황관의 외.

013

014 ‘공명선거추진위, 28일에 발족. 범야국민운동 전개’, 조선일보, 1960. 2. 28(석간)/ ‘「공명선거추진전국위」 결성. 공개투표를 분쇄, 위원장에 張利郁씨 선출…각계인사로 구성’, 조선일보, 1960. 2. 29(석간)/ ‘공명선거추진위서 전학도에 격문’ 조선일보, 1960. 3. 2(석간)/ 정국로, 『한국학생운동사:1945-1960』, 도서출판 반, 1995, 358-361쪽/ ‘빼라 및 전단’, 정국로, 앞의책, 363쪽/정국로, 「한국사강론」, 흥문당, 1982. 352쪽/ ‘3·15 선거전과 학생데모사건’, 『사상계』, 1960. 4. 188쪽/혁명동지회편, 『4월혁명』, 528쪽/

01 사회혁신당

02 사혁당

03

04

05 1960. 4-19 직후 -1960. 11월 전

06 서울

07 합법

08

09

010 4-19 이후 과거 정보장교였던 고정훈이 구정치인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구국청년당을 조직, 사회혁신당으로 개칭.

011 구국청년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보다 기존 정치구조의 즉각적인 개혁에 관심을 두었다. 4월 혁명을 내각책임제개헌으로 변질시키려는 국회에 ‘국회해산,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였으며, 또한 이승만정권 당시 일어난 ‘김구암살사건’, ‘조봉암사건’, ‘뉴델리사건’, ‘김성주사건’의 이면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한편 7-29 총선에 맞추어 사혁당은 남북한 사이에 ‘비정치적 교류’와 남한에서의 공산주의활동 합법화를 제의하면서, 민의원에 총남대표 1인을 입후보 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이보다 앞선 1960년 6월 2일 당대표인 고정훈의 전격 구속으로 이후 당은 소멸되었다.

012 고정훈

013 통일사회당

014 고정훈, 『촛불처럼 비누처럼』, 예지사, 1981, 56-57; 77-79쪽/정태영, 『한국사회민주주의정당사』, 세명서관, 1995, 542쪽/김경대, ‘4월혁명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권, 한길사, 1990, 30-31, 46쪽

01 대구지구 교원노동조합

02 대구교조

03

04 경북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맹

05 1960.5.7.-?

06 대구

07 반합법

08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 상무 집행위원회 산하에 총무부, 조직부, 선전부, 문화부, 후생부, 조사통계부, 감찰부, 쟁의부, 체육부, 부너부를 둔다.

09 우리는 여하한 정당 및 관권에서의 독립을 기함 /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함 / 우리는 신분보장의 절대확립을 기함 / 우리는 학원의 완전한 자유 민주화를 기함 / 우리는 단결하여 4.19 학생의거의 성과 거양을 기함 / 우리는 교육능률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발전 옹호를 기함 / 우리는 민주주의적 자주국가 육성과 세계평화에의 공헌을 기함

010 이승만 하야 후 대구시내 각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무기력한 처신에서 벗어나 교육자적 양심으로 돌아가려는 갈등과 고민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자 1960년 4월 27일 대구 경북여고 교사 여학룡, 서성은, 손종섭 등은 대구시내 각 학교에 유인물을 돌렸다. 그 내용은 민주혁명에 발맞추어 교사들이 앞으로 취할 행동에 관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3시 경북여고 동편 교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6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 대한교육연합회의 어용성을 성토하고 교원조합 결성준비위를 결성하였다. 1960년 5월 7일 오후 3시 반, 대구상업고등학교 강당에서 대구시내 43개 중·고등학교 교원 28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총회가 열렸다. 임시의장에는 결성준비위원 가운데 최고령인 여학룡, 김문심을 선출하고 경과보고에 이어 결성준비위원회에서 채택된 7개항의 강령과 전문 47조의 조합규약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고 위원장에 김장수, 부위원장에 여학룡, 송영기를 선출하였다. 6-25 전쟁 후 처음으로 생겨난 교원노동조합이었다. 한편, 5월 7일 대구국민학교(대구초등학교) 강당에서는 시내 45개교 교사 1천3백여 명이 참가하여 초등교원노동조합을 구성했다. 이들은 5개 항의 강령과 46개 조의 규약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011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투쟁, 노동조합법 개약 반대투쟁, 교직단체법 반대투쟁, 임금투쟁, 법정수당 쟁취투쟁, 학원정화운동, 2대약법 반대투쟁, 교육실천활동 등 (세부 내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항목 참조)

012 위원장 정호강, 부위원장 신우영, 소효영

013

014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21-27쪽 / 『한국혁명재판사』 제3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1107-1114쪽

01 부산지구 교원노동조합

02 부산교조

03

04

05 1960.5.-?

06 부산

07 비합법

08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 상무집행위원회 산하에 총무부, 선전부, 조직부, 문화연구부, 후생부, 조사통계부, 감찰부, 쟁의부, 체육친선부, 여성부를 둔다 / 무임소상임위원을 둔다

09

010 대구지방에 이어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부산이었다. 1960년 5월 초 발기와 준비위원이 구성되어 5월 15일 오전 10시에 초량동 대도극장에서 부산지구 중등교원노동조합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국민학교 교사들도 5월 12일 동광국민학교에서 교원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중앙초등학교 강장에서 부산지구 초등교원노동조합 결성대회를 열었다.

011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투쟁, 노동조합법 개약 반대투쟁, 교직단체법 반대투쟁, 임금투쟁, 법정수당 쟁취투쟁, 학원정화운동, 2대약법 반대투쟁, 교육실천활동 등 (세부 내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항목 참조)

012

013

014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27-29쪽

01 경북지구 교원노동조합연합회

02 경북교조

03 대구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달성군, 의성군,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영일군, 월성군, 영천군, 경산군, 예천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금릉군, 선산군, 상주군, 문경군, 충기군, 봉화군, 군위군, 영주군 (26개 시군 35개 분회, 울릉도 제외)

04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

05 1960.5.29-1961.5.16.

06 경상북도

07 반합법

08 울릉도를 제외한 26개 시·군에 35개 분회가 조직되었다 / 상무집행위원회 산하에 총무부, 조직부, 쟁의부, 선전부, 문화부, 후생부, 조사통계부, 감찰부, 보건부, 부녀부를 두었다

09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원의 민주화를 기한다 / 우리는 총단결로서 여하한 정당 및 관권에서의 독립을 기한다 / 우리는 겨원의 신분보장을 확립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한다 / 우리는 교육능력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기한다 /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의 육성과 세계평화에의 공헌을 기한다.

010 중앙조직 없이 각 시·군 단위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조합은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연락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연합회라는 큰 단위로의 단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5월 29일 오전 11시에 대구시내 종로국민학교 강당에서 경상북도 26개 시·군 35개 조합에서 파견된 대의원 및 위원장 등 2백여 명이 참가하여 경북지구 교원노동조합 연합회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 초 경과보고에서 경북지구 내 조직 개황이 보고되었는데 울릉도를 제외하고 시·군 지역의 조직이 완결된 상황이었다. 가입교사 수는 초등이 24개 조합에 5천6백19명, 중등이 11기 단위조합에 1천4백18명이었다. 임시의장에는 이목을 선출하여 5개항의 강령과 전문 10개 조의 규약을 통과시킨 다음 위원장 김문심, 부위원장 이목, 신우영을 선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과도정부의 문교부 장관 이병도는 교원노조를 해체하라고 발표했으나 경북교조는 “우리들의 권리는 역사적 과정을 볼 때 전제군주로부터 싸워서 뺏을 권리는 항상 빼앗길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이 없으면 반드시 권리는 탈취당하는 것이다. 냉정히 경계하고 감시하여 침해가 있을 시는 싸울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다.

011 도연합회 결성을 마친 경북교조는 곧 이어 조직 내부의 체제정비와 이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한 실무에 역점을 두었다. 6월 19일에는 도연합회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원노동조합의 사무처리 규정과 회의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회의진행에 서툴렀던 교사들에게 회의진행에 관한 교양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역단위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경북교조는 이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결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원노동조합 합법화 투쟁, 노동조합법 개악 반대투쟁, 교직원단체법 반대투쟁, 임금투쟁, 법정수당 쟁취 투쟁, 학원정화운동, 2대학법 반대투쟁, 교육실천활동 등 (세부 내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항목 참조)

012 의장단 및 상무집행위원 : 위원장 김문심, 수석부위원장 이목·신우영, 부위원장 정우득·김홍모, 총무부장 이상원, 조직부장 김근식, 쟁의부장 김규성, 선전부장 김동석, 문화부장 이성식, 후생부장 이상락, 조사통계부장 이원승, 감찰부장 박봉조, 보건부장 이경철, 부녀부장 황춘선

013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014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31-45쪽 /

01 민주구국동지회

02

03

04

05 1960.5.-10.22

06

07 반합법

08

09

010 대구에서는 여타지역에서 419 후 이승만의 하야를 승리로 간주하고 그것에 도취해 있을 무렵에 이미 교원노조로 상징되는 대중운동이 태동하였고 정당에 가담하지 않은 일부 지도층 인사들도 별도로 결집하여 민주구국동지회라는 사회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 일제시대 독립지사, 선렬의 친지, 유지들로써 약 60여명이 모여 민주국가 건설에 헌신 이바지할 것을 창도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구국동지회는 뚜렷한 정치이념이나 노선을 표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은 아니지만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비하면서 간접적인 정치참여를 시도한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었다. 1960년 10월 경북시국대책위원회로 확대되었다.

011 1960년 11월 9일 시국대책위원회사무실에서 안민생, 김성달, 權啓煥, 邊信德, 張相鎬, 成熙慶 등 17-8명이 집합하여 통일문제시국대강연회를 개최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오후 2시경 대구시 종로소재 경북시국대책위원회사무실에서 당시 위원장이던 안경근 및 총무위원회 기획부장이던 안민생, 김성달 등은 평화통일에 관한 시국강연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들은 11월 12일 오후 2시경 대구 종로국민학교 교정에서 통일문제시국대강연회를 개최하여 청중 약 3천여 명이 운집한 강연회에서 중앙대 교수 유병목, 서울대교수 주홍모가 「국제정세와 통일문제」란 연제로 강연을 하고 金永培(경북대생)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남북통일을 싫어할 어떠한 이유도 배격되어야 한다. 현정부는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식 통한론의 주창과 같은 보람 있는 국제기운을 재빨리 받아들여 통일에의 자세를 굳게 하자. 통일을 겁내는 장내각은 소아병적인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며 중립노선도 자립노선” 이라고 연설하였다. 이들은 시국강연회를 마치고 청중에게 통일방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중립화통일안 찬성이 37%, 남북충선거안 찬성이 20%로 집계되었다.

012 安敬根 (66세) 1918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3년 운남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티베트 만주 등을 전전하면서 망명생활. 해방 후 1946년 5월경 귀국하여 일시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론에 공명하여 1948년 5월경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회의에 참가 활동하였으나 동회담이 실패로 귀착되자 대구시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중 1960년 5월경 민주구국동지회를 조직 활동하다가 10월 22일 경북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고 11월 26일 시국대책위원회의 해체와 동시 경북민족통일연맹위원장에 취임하여 활동

安民生 (51세) 1923년에 만주에 입국하여 1934년경부터 약 8년간 한국인소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숙부인 안경근을 따라 1946년 5월경 귀국한 후 상업에 종사. 1960년 5월경 민주구국동지회에 , 10월 22일 경북시국대책위원회에 각 가입하여 활동 중 11월 26일 시국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경북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됨과 동시 연맹의 총무위원회기획부장직에 취임하여 활동

安潛 (56세) 1924년 대구교남학교를 중퇴하고 1945년 경부터 메리야쓰공업협회 감사원, 觀相業, 편직공업조합 상무이사 등에 종사하다가 1960년 11월 경 경북민족통일연맹에 가입하여 선전부장으로 활약. 안민생과 함께 민통련의 강령 규약 선언문 작성. 안민생 등과 함께 민자통중양협의회 결성대회에 참석

姜信用 (54세) 1927년 일본 관서대학상과 1년을 중퇴한 후 1945년 10월경부터 서울중앙신문사인천지사장, 인천신문사판매부장, 조선일보사인천지사장, 비판신문사인천지사장, 서울시사신문, 국제신보, 국도신문대구지사장 등으로 각 종사하다가 1960년 10월경 부터 대구일일통신사를 경영. 1960년 12월 말경 민족통일연맹에 가입하여 외무위원회섭외부장으로 활약

白奎千 (47세) 1942년 일본 입명관대학전문부 법과 3년을 중퇴한 후 일본 각지를 전전하면서 토목청부업에 종사하다가 1945년 귀국한 후 1954년 8월 1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58년 7월 29일 만기출소. 1960년 10월경 경북민족통일연맹에 가입한 후 1961년 2월경부터 조사위원장으로 활약

李正相 (56세) 대구시에서 한문을 수학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51년 경부터 대구시 원대동에서 침술원을 경영. 1960년 사회대중당에 가입하여 대구시 을구 당총무로 활동하던 중 10월 경에 동당을 탈당하고 11월초순 경북민족통일연맹에 가입 총무위원장으로 활약.

金星達 (49세) 1932년 3월경 대구공등실수학교 3년을 졸업한 후 대구시에서 금성골덴공장(직물공업)을 경영. 1960년 9월경 경북시국대책위원회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1월 민족통일연맹에 가입하여 부위원장 및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상임위원회 의장으로 활약

013 경북시국대책위원회 → 경북민족통일연맹

014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제5권, 국학자료원, 2001년, 507-537쪽/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국시사』 3권, 1973년 168-169쪽.

01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02 사대당 준위

03

04

05 1960.5.12.-1960.11.24.

06

07 합법

08 당무위원회 산하의 총무위원회, 통계위원회, 당무위원회, 조직위원회, 선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인권옹호위원회, 기획위원회, 국토통일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두었다.

09

010 1960년 5월 12일 발기한 사회대중당은 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 순으로 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자생적으로 결성되었다. 혁신연맹의 영향을 받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전라북도 그리고 구근민당·진보당계와 민족주의민주사회당계와의 조직분규가 있었던 충청남도 도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차례로 결성되어 1960년 6월 17일 3·1당(구 진명여고 강당)에서 혁신세력의 총집결체인 사회대중당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가졌다. 사회대중당은 그 선언문에서 “사회대중당의 사상적 기초 내지 이론적 지도원리가 최고형태의 민주주의, 즉 민주적 사회주의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그 국제적 공통적 성격과 아울러 그 한국적 성격의 일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고 부연하였다. 특히 진보당의 성격과 궤를 같이하는 SI(Socialist International)계의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일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소비에트 독재·팽창주의에 반대하는 일,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일, 자주통일국가를 이루는 일, 만민공락의 민주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 등에 한국적 특수성을 함께 갖춘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011 결성대회를 마친 사대당 준위는 총선대세에 들어갔으며, 233개 민의원 선거구에 121명의 공천후보를 내세웠고 참의원에는 7명의 공천 후보를 내세웠다. 한편, 사회대중당과는 별도로 선거에 임한 한국사회당은 사회대중당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를 포함 18개 민의원 선거구에 공천 후보를 냈고 참의원에는 2개 선거구에 공천후보를 내세웠으며, 혁신연맹은 민의원에 13명, 참의원에 1명을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대당 준위는 민주당과의 보혁구도를 보였던 7.29 총선에서 민의원 4석(서상일, 윤길중, 박권희, 박환생)과 참의원 1석(이훈구)를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총선참패의 여파는 바로 내분으로 이어졌다. 우선 창당 초기부터 갈등관계를 표출했던 진보당계와 민혁당계 사이에 터지기 시작했다. 김달호와 서상일의 대립이 진보당계와 민주혁신당계의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상호제명을 위협한 끝에 1960년 10월로 예정된 각급 지방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9월 15일 비진보당계 전 간부진이 사대당 준위를 이탈했다. 주도권 다툼의 조직투쟁이 이데올로기 문제로 이어져 비진보당계는 자신을 우파, 진보당계를 좌파로 몰아부쳐 진보당 사건 당시를 연상케 하기도 하였다. 중앙당이 소모적인 분열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 경상남도를 위시한 각 도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들은 혁신정당통합운동에 열을 올렸다. 사회대중당, 혁련, 한국사회당을 단일정당으로 묶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당의 분열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지역당 통합으로써도 막을 길이 없어 일단 중앙당 수습에 힘을 집중했다.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서상일, 김달호 양인이 도당 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이선으로 후퇴함으로써 분열은 한 때 수습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민혁당계가 발표한 결별선언 취소문제를 둘러싸고 진보당계와 민혁당계가 다시 설전을 벌임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10월 15일, 독로당, 사대당 준위의 민혁당계, 한독당, 한국사회당, 혁련 등 5개 정당 단체들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단일정당을 결성하여 보혁양당계를 지향할 것을 표방하고 ‘혁신통합신당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에 맞서 진보당계는 정당단체연합이 아닌 개인의 규합운동을 전개하여 민참의원과 지도급 인사 중심의 혁신세력단일화 운동을 펴 11월 중순 창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진보당계 내부에서도 혁신정당 통합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이 계속되다. 이러한 동안 비진보당계 혁신통합신당결성준비위원회 측은 10월 25일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사회주의 실현을 기하는 국민대중정당을 발족한다” 고 선언하였다. 이리하여 사대당 준위는 진보당계와 민혁당계로 1차 분열이 일어나고, 뒤이어 진보당계가 다시 윤길중계, 김달호계, 비윤·김계의 3계파로 2차 분열이 일어나 혁신계는 이들 이외에 한국사회당, 독로당, 한독당, 혁련 등으로 4분5열되었다. 김달호는 사회대중당 고수동지회를 결성, 사회대중당 결당촉진위원회를 조직하여 11월 24일 사회대중당을 결성했다. 최근우는 11월 27일 사회당을 결당했고, 장건상은 1961년 1월 6일 윤길중을 혁신당 준위에서 제명하고 1월 8일 근민당, 혁련,

구진보당 등 일부세력으로 3·1당에서 혁신당 결당대회를 가졌다. 그 외 윤길중계 진보당 계열은 비진보당계 민혁당, 민련, 근민당 세력과 합작하여 새로운 혁신정당을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서상일 등 원내 혁신계 의원 전원과 혁신계 원로·중견이 거의 총망라된 통일사회당 준비위원회가 1961년 1월 21일 발기되었다. 통사당 준위는 결당을 서두르지 않고 지방조직부터 다져 나갔다.

012 발기인 : 김달호(진보당) 김성숙(근민당·민혁당) 조현식 유병목(근민당) 유한중(한독당·근민당) 송남헌 이동화(민혁당) 이훈구(민족주의민주사회당) 박노수 박기출(진보당) 서상일(민혁당) 정화암 윤길중(진보당) 윤우현(부산혁신세력총집결) 홍형의 최근우(근민당) 김기철

당무위원회 : 대표총무위원 서상일(민혁당계), 간사장 윤길중(진보당계), 그 외 총무위원 이동화, 박기출, 김성숙, 유병목, 이훈구, 김달호, 송남헌, 정화암, 조현식, 김기철, 지방 조기하, 신창균, 임갑수, 유한중, 송두재, 김조섭, 통제위원회 위원장 최근우, 통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하, 통제위원회 위원 윤명찬, 조중찬, 홍성환, 이시우, 장백산, 문창국, 온재열, 김규찬, 변관수, 이흥노 조영성, 손정수, 정례근, 지방 김철, 이영옥, 이호면, 문병희, 전범성, 최진우, 당무위원회 위원장 송남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기찬, 선전위원회 위원장 유명목

특별위원회 : 재정위원회 위원장 구익균, 선거대책위원장 조현식,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 장홍염, 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동화, 국토통일위원회 위원장 박노수

013 근로인민당 → 진보당 →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 통일사회당 창당준비위원회, 사회당, 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사회대중당

014 정태영, 『한국사회민주주의정당사』, 세명서관, 1995, 533-578쪽, 596-597쪽 /

01 민주민족청년동맹

02 민민청

03

04

05 1960.6.12.-

06 부산, 대구, 서울 등

07 반합법

08 기구부서 및 간부 : 통제위원회 의장 김규원(수산대 청년 교수)·최종근(김상찬의 원고), 집행위원회 의장 박상우(부산대 민주화투쟁 주역), 간사장 김상찬, 부간사장 하상연·손의현, 선전국장 하상연, 조직국장 박창중, 투쟁국장 조현중, 총무국장 권종현, 정치권징부장 배준홍

부산조직 : 부산진구 위원장에 조광일, 영도위원장에 김영대, 동래구위원장에 오영식이 선출되었으며 부산지역만 맹원이 1천여 명에 달했다. 이후 중앙맹부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간부가 서울로 이주. 부산간사장은 배다지, 이영석, 임형구 등으로 자주 바뀜

대구조직 : 중앙맹부가 결성된 직후 김상찬이 대구 경북민족통일연맹 사무실에서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등과 회동하고 1960년 여름 청구대학 강당에서 약 천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경북 민민청 맹부를 결성하였다. 초대위원장에 서도원, 간사장 도예중, 조직국장에 권달섭, 선전국장에 송상진, 투쟁국장에 강왕수, 통제위 의장에 박상원 등이 선출되었다.

서울조직 : 중앙맹부를 서울로 이전하여, 서울 간사장에 김금수를 선출했다.

09 기본강령 : ① 우리는 미래사회를 담당할 민족역군으로서의 정대한 인격과 선진적인 과학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우리 조국의 역사과정은 특권 보수나 사회민주주의 등 개량 및 관념주의가 아니며 민족민주혁명임을 이해하고 모든 민족역량을 총집결한다. ③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의 청년의 권익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노력 청년 및 여성 청년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④ 우리는 세계민주 방향의 청년운동과 제휴한다.

전략강령 : ① 민주인간으로서 민주민족인으로서의 심상(心相)과 사회적 생활 기능의 배양 ② 청년의 자주적이며 통일적인 운동의 전개 ③ 민족민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의 정치 조직을 지지하며 청년

의 과당적 정치 도구화 경향을 반대 ④ 청년의 사회및 정치 깡패화 경향의 철저한 단속 및 선도

010 민민청은 부산의 이종률 교수의 사상적 영향과 지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종률은 일제하에서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경험이 있는 독립운동가로서 해방 이후에는 한독당 기관지의 정치부장, 『경제신문사』 편집국장, 청구대(현 영남대)와 부산대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4·19 후에는 부산 『국제신문사』 편집고문을 맡으면서 4·19를 ‘3,4월 혁명’으로 규정,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승만 독재에의 항거가 아니라 “식민지로서 지내온 대중의 빈궁과 불평이 지속되고 다시 심해진 것과 8·15 이후 현 민주당의 전신인 한민당을 여당으로 한 미군정의 실시와 대한민국의 수립을 전후한 민주당의 반민족적 처사와 그 뒤를 이어받은 자유당의 반민족적 사실 등에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긴 대중들이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며 “이승만의 주장이던 ‘무조건 통합론’의 정치이론도 부인되어야 하고 일철의 기회주의 중간과 이론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화제가 되었다. 민민청은 천하정 독서 그룹 가운데 민주민족청년동지회에 참여한 몇 사람이 청년운동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일차적으로 천하정 그룹이 아닌 김한득, 김배영 등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1960년 5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민주주의민족운동청년협의회’로 명칭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5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는데 주요성원은 노치관, 이웅성, 이종택, 조광일, 김영대, 오영식, 김달수, 문동수, 서석동, 최종근, 권종현, 하상연, 손의현, 박창증, 배다지, 김상찬, 이영석, 김영대, 한명수, 권오덕 등이었다. 그 후 6월 12일 부산시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민주민족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채택, 발표 결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외존의 봉건 및 폭리적 반민족세력의 반민주적 집결체를 하루속히 일소하고 양심적인 범민족지도자 세력을 규합하는 면에서 민족자주경제체제의 일환인 서민적 민족자분을 형성하고 험벗고 굶주림 속에서 방황하는 서민대중을 구출해야 하겠다”는 요지의 취지문과 “민주주의 전민족 세력의 주도하에 평화남북통일을 단호전취하여 민주조국의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결의문과 “반동체제 지역들의 청년운동과 제휴한 세계민주방향 청년운동에의 일익성 견지”라는 요지의 투쟁강령이 낭독되었다. 민민청은 청년교수 김덕규를 의장으로, 부산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박상우, 독립운동 경력의 조문기 등을 집행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 간사장에 김상찬, 부간사장에 하상연, 손의현, 통제위 의장에 최종근, 총무국장에 권종현, 조직국장에 박창증, 투쟁국장에 조현중 등 이종률의 제자인 부산대 출신들이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011 민민청은 1960년 10월 30일 동강국민학교 강당에서 통일강연회 개최했다. 이 때는 4.19뒤틀마무리가 한창이고 통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아직 낮았을 때이지만 통일강연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운동을 대중속으로 확산시키면서 대중적 통일운동 단체를 형성해보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여기에서 주홍모, 김정한 등이 강연에 나서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주장했다. 이어 12월 30일에는 부산 창선동에서 열린 문화인 망년회는 이종률 교수, 김용겸 사회당경남위원장,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 김정한 등이 연사로 나섰다. 이종률은 자주적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주장했으며, 김용겸은 국가보안법 비판했다. 당시 행사장에 걸린 ‘쟁취 민족자주 평화통일’ ‘촉진 남북한 문화교류’ ‘타도 반민족해족세력’ 등의 구호는 이들의 활동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민민청은 이러한 활동 목표 아래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과 2대약법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들은 2.8한미경제협정을 우리의 자립경제를 말살하고 선진국들의 하청업적인 예속경제로 재편하려는 음흉한 흥계로 간주하고, 조직을 총동원해서 반대운동에 동참하였다. 이어 3월 22일 2대약법반대 군중대회에서 조현중, 손의현, 김상찬 등이 시민들의 운집을 위한 선전공작 수행했다. 민민청은 당시 ① 민주주의 도살하는 반공법, 데모규제법의 제정이나 국가보안법의 보장을 절대 반대한다 ② 국회의원은 이러한 민주반역의 최대 악법심의를 과감히 거부하라 ③ 전체 국민대중은 반민주악법 반대에 총궐기하라 등의 구호를 주로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민민청은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961년 5월 6일 학생 300명을 판문점으로 보내기 위한 실무자회담이 장충공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서도원, 도예중, 김금수, 이수병, 김상찬, 하상연, 등이 참가하였다.

012

013 창신학회(박기출이 창립. 이종석, 김배영, 김한득, 김수연 등이 중심), 민족사학보존회(부산대와

동아대 사학과 출신 중심, 김현진 문영만 김영곤 도광호 성기호 등 약 10여 명), 후진성극복학생회·부산민통련(부산지역 대학생조직, 박창중, 정동수, 성기호 정동수, 조평래, 하일민, 손의현, 손병선, 김경연, 손재실, 최석환, 이근영, 구재곤, 나태균, 연구찬 등), 암장그룹(9명으로 한정된 서클 형태의 조직으로 극히 짧은 기간의 한시적 그룹, 이수병, 김금수, 박중기, 박영섭, 이영호, 유진곤, 김종대, 최종국, 김경위 등), 그 외 김규철 장영수 성기호 이종대 이근영 외 몇 명으로 된 진보적 조직

014 - 결의문 : 1. 정의를 위하여 분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인격 및 과학적인 자기교양에 치중한다. / 2. 34월 민주민족항쟁의 표상의 기 쟁탈 청년학도옹변대회를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사당 또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하되 실행방침은 집행위원회에 일임한다. / 3. 34월 민주민족항쟁 및 8·15해방 15주년 축하 범민족 청년대회를 8월 15일을 전후하여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하고 그 실행방침을 집위에 일임한다. / 4. 34월민주민족항쟁에 가담하여 부상을 당한 학생들의 학비전액과, 항쟁에 가담한 학생 중 민주·역군으로서의 정열과 학력은 우수하지만 학업자금이 곤란한자의 학비 전액 또는 일부 보조금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써 지급하게끔 요로에 건의하고 그를 추진시키되 실행방침은 집위에 일임한다. / 5. 이승만 숭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재 청년들의 머리를 깨끗하게 정회시키고 민주적 집단지도체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청년두뇌 청강운동을 일으킨다. 그 실행방침을 집위에 일임한다. / 6. 동아일보 국제신보 등 언론들의 34월 희생학도 위령탑 건립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 준비활동은 일원화되기를 요망한다. / 7. 앞으로 있을 반보수 민주민족 총선에 있어서 마산시에 [34월 민주민족항쟁의 영웅], 부산 투쟁의 격전지인 부산진갑구에[그 항쟁 부산의 영웅], 서울 투쟁의 격전지인 종로갑구에 [항쟁 서울의 영웅]을 선출한다. 이는 당당한 희생적인 심상과 발군의 과학력과 용감하고 기술성 있는 투쟁력을 지닌 인물로서 단일후보를 하게한다. 그 선정방법은 서울교수단 및 교노조대표, 부산교수단 및 교노조대표, 34월 정기학도단대표와 민족문화협회 대표, 부산문필가협회 대표, 그리고 본맹 대표와 기타 민주성 단체 대표와 회동하여 정하며, 그 소집은 집위에 일임한다.

- 4·19 1주년에 제하여 : 4·19의 짧은 피는 횡령당하였다. ‘34월 민족항쟁’의 격전을 이룬 ‘4·19’ 1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동포대중들의 생존적 위압은 날로 증가 하고 전체민족이 열망하는 민족통일은 반민족적 특권층에 의하여 방해되고 있는 등 ‘34월’ 그 날의 항쟁에서 뿌려진 ‘젊은 피’가 헛되이 특권보수주이자 또는 기회주의 부동층 정치배에 의하여 완전히 횡령당하였다. ‘배고파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고 외치는 수백만 절량민과 수백만 실업자 및 양식민족인들의 삶의 부르짖음은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는 과거 이승만 정권의 행정적 상속자로서의 본질을 여실히 폭로하는 헛된 ‘반공’ 과 기만적인 ‘건설’ 을 앞세우고 ‘보안법 가악’ 과 ‘테모규제법’ 을 강압으로서 또는 매수로서 제정하려는 이때에 우리는 선열들의 광복투쟁과 34월 항쟁의 그 투혼을 계승하여 동포대중들의 민족적 자각을 촉구하면서 평화와 자유와 부복이 깃드는 통일조국을 건설코자 전체동포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1) 419는 혁명이 아니었다.

집권자 및 그 주변세력들과 어용학자 및 몰지각한 일부 학생단체들은 ‘4·19혁명’ 또는 ‘4월혁명’ 운운으로써 동포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혁명이란 경제, 사회, 정치의 사회전반적인 변혁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할 때 변혁된 것이 무엇이며 발전된 것이 무엇인가? 일제에서 해방된 조국을 외세에 의존하여 양심적인 민족세력을 배격하고 진정한 민족지도자를 음모살해하고 소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여 절대주의적 전제 권력체제를 영속시키려던 반민족의 원흉 이승만을 해외로 안치시키고 이승만체제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금일의 집권층은 4색 당쟁과 흡사한 파쟁과 악랄한 강압정책과 매수행위를 감행하는 등 동포대중은 굶주림과 공포의 도탄에서 헤매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혁명이라 할 것인가? 3,4월항쟁에서 뿌려진 붉은 피는 수많은 선열의 민족항쟁의 피를 이어받고 2·8투쟁과 광주학생투쟁의 그 투혼을 이어받은 ‘34월 민족항쟁’ 이었다. 이 민족항쟁은 34월로서 그친 것이 아니요 그 후에도 항진하고 있었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이 쟁취되어 민족혁명이 안수되는 날까지 줄기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2) 특권보수는 물론 사이비혁신 운운의 기만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이 땅 우리 민족진영의 진로는 특권보수가 아니며 사이비혁신이 아니다. 봉건잔존세력과 외압세력 및 민족매판자본세력이 야합하여 전체민족의 이익을 덧밟고 소수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민족적 세력이 오늘날 이 땅의 보수세력이었다. 그리고 ‘3·4월 민족항쟁’의 성과로서 혁신을 부르짖고 우후죽순처럼 대두한 소위 혁신제정파는 이념적인 결속이 없이 자신의 출세를 위한 기회주의 부동산중정객들의 출몰로 인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할 뿐 전체민족의 역사적 전진을 위하여 공헌한바가 무엇이 있는가? 현재 우리겨레가 처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 반봉건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독립과 그 면에서의 통일조국건설과 나아가서 세계사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 엄연한 사변을 무시하고 ‘사회주의’ 운운의 관념론을 표방하는 일절의 세력은 민족진로를 오도하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3·4월 항쟁’ 이후 이들 보수 및 혁신 제정파들의 정권욕으로 인하여 쓰라린 역사적 시련을 당하고 있으나 이제 진정한 민족자주를 표방하여 양심적인 범민족세력은 민족혁명노선으로 민족진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현정부와 국회는 악법으로 백성을 탄압할 것인가?

정부는 2개악법을 철회하라. 악법을 제정하여 정권을 지속한 집권자가 역사상에 있었던가를 집권자 자신들도 잘 알 것이다. 집권집단의 눈으로 볼 때에 데모가 난동인 것이며, 데모를 하는 자는 생존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이다. 데모를 탄압하여 또다시 ‘피’를 볼 작정인가. 보안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이승만의 수법인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악법으로서 백성을 강압하려는 어리석음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깨닫고 악법반대 ‘데모’ 대원 중 구속된 일반인 및 학도들을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백성의 분노를 자극하는 악법통과를 강행하기 위하여 조작한 어용단체를 해체하라.

4) 군경 및 일반공무원은 정의 편에 서라.

민족항쟁의 대열에 총을 쏜 자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군, 경, 관이 모두 다 민족이며 형제일진대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리라는 생각만 하여도 몹서리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사육적 특권을 보수하려는 정치에 양심을 팔아가며 죄의식을 느끼는 공무원이라는 허울좋은 굴레를 하루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 민족 전체의 자유와 복리를 가져오는 정의의 편에 가담하여야 할 것이다.

5) 민족통일의 시기는 닥쳐오고 있다.

‘북진통일론’으로 민족통일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던 반민족도배들도 3·4월항쟁으로 인하여 민족친화와 민족변영의 길이 오직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 오늘날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결과적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 무리들이다. 소위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국토건설을 시도한 장정권의 정책은 무계획과 허위성을 폭로하였다. ‘통일 없이 못 살겠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민족양심의 명령이며 배고파 해매는 동포들의 뺨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제 국내적으로 통일세력은 강화되고 국제적으로도 통일기운은 성숙하고 있다. 장면정부도 유엔정치위원회에서의 스티븐슨안의 결의를 외교적인 승리라고 수락하였으므로 이제 남북대표자들의 회동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남북의 서신, 인사, 경제교류가 촉성되는 면에서 민주민족적인 통일조국건설이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여기에 우리 애족동포들은 일부 반민족세력이 이를 거부할 때 계도할 것이요 정부가 이를 지연시킬 때는 불신할 것이요 국회가 이를 촉진시키지 않을 때 대중의 힘으로 해산시킬 것이다.

3·4월 민족항쟁에서 희생된 영령들은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각성과 투쟁을 지하에서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민족진로를 어지럽힌 반혁명세력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간파하여 학원에서 공장에서 가두에서 또한 각기 지역과 직장에서 민주민족통일 조국건설에 항진해야 할 것이다.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59-163쪽 / ‘경상북도민주민족청년동맹사건(관련자 : 서도원 7년, 권달섭 5년, 강왕수 5년)’ ‘경상남도민주민족청년동맹사건(관련자 : 권종현 5년, 김영대 공소기각)’ ‘부산민주민족청년동맹사건(김상찬 7년),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6권, 국학자료원, 2001, 1129-1175쪽 / 『김상찬 수고』

01 피학살자유가족협의회

02

03

04

05 1960. 6. 12-

06

07 반합법

08

09

010 1960년 5월 11일, 한국전쟁 중 군대에 의해 무고하게 학살당한 주민의 유가족이 당시 신원면장이었던 박영보를 생화장시킨 이른바 거창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양민학살 진상규명운동’은 민중운동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 군대가 공비토벌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양민을 학살하였고, 이승만정권은 이같은 만행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은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419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1946년 대구 10·1사건 당시 일반피살자와 한국전쟁 기간 중 정당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살해된 보도연맹원 및 일반 민중의 유가족들은 억울한 피해를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과정속에서 계기로 이승만 정권의 만행이 폭로되면서 유족들이 각지에서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고, 학살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회는 군단위에서 출발하여 6월 15일 경북유족회, 8월 28일 경남유족회 등 도단위 조직이 결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10월 20일 전국유족회가 결성되었다.

011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은 학살진상규명·처벌과 관련한 본활동과, 4월혁명 이후 확산된 통일운동의 참여로 특징된다. 먼저 유족회는 1961년 2월, 24명의 민의원을 통해 정부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학살의 진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외형상 피학살자 명예회복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질적으로는 제1공화국을 포함한 국가기구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당을 위시한 지배세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이 운동이 대부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절대빈곤상태에 있던 농민의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유족회는 또한 학살진상규명 활동 외에, 1961년 1월 결성된 ‘민족자주통일협의회’에 대중단체로 참여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012

013

014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 『해방22년사-자료편』, 문학사, 1976, 5-28쪽/한상구,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권, 한길사, 1990, 173-202쪽/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1953-1961』 서울대출판부, 2001, 172쪽/, 김지형,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연구」, 경기대 사학과 석사논문, 1994, 55-56쪽

01 국민계몽대

02

03

04

05 1960.6.-?

06 서울을 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

07 합법

08 국민계몽대 대장 안병규 외 21명의 참모위원과 중앙조직에는 총무부, 조직부, 섭외부, 선전부를 두고 그 아래에는 준비반, 서기반, 연락반, 기획반, 동원반과 몇 개의 대내반, 대외반을 두었다. 지방조직은 각 도 및 군 단위 조직을 전국적으로 편성하고 연락책임자를 두었으며 각도 및 군 단위 조직의 업

무연락과 독찰을 위해 중앙본부에 기동반을 두어 순회활동케 했다.

09 행동강령 : 우리는 공정한 학생신분으로 국민을 계몽하고 4월혁명 정신을 보급하고자 한다 / 우리는 국민계몽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정치의식과 주권의식을 고양하고 올바르게 충실한 민주주의 수립을 기하고자 한다 / 우리는 국민계몽을 통하여 신생활 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 / 우리는 국민계몽운동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조하고자 한다

010 학생들은 4·19 이후 독재정권을 야기한 대통령중심제의 대응방안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방자치제나 정당제도 및 중앙관료제가 불완전한 상태 하에서 혼란을 야기할지 모르는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은 책임정치와 정치 윤리성을 망각한 정치인들의 시류 아부성 개헌으로 4월 혁명의 정신을 왜곡한 처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특정정치세력 차원이 아닌 참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정치적 중립세력을 모색하였다. 1960년 4월 25일 이승만 하야 발표 이후 경찰력의 기능상실로 사회치안 질서를 담당할 학생들이 사회질서 회복에 진력한 후 학원으로 돌아와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민주적인 학생회를 결성, 학원의 민주화를 이룩한 학생들에게는 제2공화국의 탄생을 위한 7·29 총선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전국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는 농민들의 정치적 후진성, 비판력 결여, 지식인만으로 민주주의가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학생들은 낙후된 농민의 계몽활동에 나서게 된다. 1960년 6월 10일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결성된 서울대 학생회에서 전국적인 국민신생활운동과 농촌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국민계몽대 결성을 최초로 결의, 6월 20일 경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단대별 국민 계몽반을 조직하고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문리대를 중심으로 통합조직을 결성하였다. 7월 2일 오전 11시, 1천여 명 참석 하에 문리대 운동장에서 문리대 국민계몽대 결단식을 거행하고 바로 도단부를 결성하였다. 같은 날 치대에서도 188명이 참석, 계몽대 결대식을 거행, 의대에서는 매년 실시하던 무의촌 진료를 국민계몽운동과 병행 실시키로 결의하고, 사대에서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문맹퇴치, 성일교육을 강력히 실시키로 결의했다. 법대와 같이 단대별 계몽대가 미결성된 대학에서는 개인적으로 타대학 계몽대에 합류하기로 하고 7월 4일까지 단대별 계몽대 조직을 완료키로 했으나, 수의대, 약대는 7월 6일 결대했으며, 상대는 7월 8일 결대 및 발대, 사대는 7월 12일 결대, 13일 발대했다. 농대는 7월 16일, 상경 보고회를 갖고 농촌계몽대를 위한 하기대학을 개설했다. 1960년 7월 16일 10시 문리대 운동장에서 서울대 국민계몽대 결대식을 거행, ‘전국 대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국민계몽대 선언문’을 낭독하고 반혁명세력을 조상한다는 상징적인 영구를 선두로 시가행진을 했다. 7월 7일부터 전국 각지로 계몽대 출발, 8일에는 서울과 도시지역의 책임을 맡은 계몽대원들이 “새나라 새터에 새살림”이라는 플래카드를 선두로 시가행진을 하고 새생활운동을 개시했다.

011 국민계몽대의 계몽활동은 대체로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7월 8일부터 7월 26일 즉 7·29 총선 3일 전까지로 선거 계몽기간, 2기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새생활운동 기간이었다. 전국 각지에 배치된 계몽대원들은 시골의 장터나 학교운동장, 정견발표회장 등을 이용하여 대중 앞에서 ① 국민계몽대의 결성 취지 ② 4·19의 의미와 생생한 체험담 ③ 제2공화국 탄생을 앞둔 7·29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방식 설명 ④ 내각책임제와 우리나라 정당 실태 설명과 투표의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견해 설명을 각 대원이 한 항목씩 10분에서 15분 정도 연단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군단위로 배치된 대원들은 민폐를 없애기 위해 대원들의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배치를 했으면 교통은 철도의 화물칸이나 도보를 이용했다. 또 『4월민주혁명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화보를 제작하여 각 마을 어귀나 장터에 전해하였고 각 군청이나 면사무소 또는 경찰서 게시판에 국민계몽대 선언문과 강령을 부착, 홍보에 힘썼다. 계몽대 본부에서는 지방에 파견된 대원들을 지원 독려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본부기동대 제1진이 전국 각지로 출발했고, 제2진은 23일 안동방면으로 출발, 선거계몽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지영관 대원(치대4년)이 강원도 정선에서, 25일에는 안철환 대원(문리대 물리학과 3년)이 부산에서 변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8월 5일에는 창녕·삼천포 지구의 재선거로, 11일에는 영양·광산지구 선거관리를 위해 기동대 3·4진이 현지로 출발했다. 이러한 선거계몽활동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행되었다.

1960년 7월 7일 문리대 운동장에 모인 561명의 학생들은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하고 5개조

로 새생활운동반을 편성, 결대식을 가진 후 시가행진을 함으로써 새생활운동이 시작되었다. 새생활운동의 근본정신은 빈곤한 농촌의 실상을 무시한 도시인들의 허영과 사치, 향락과 안일을 몰아내고 독재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기생한 모든 사회악을 척결하자는 데 있다. 이들은 사회나 당국, 언론계 등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망국 사치품 건국 국산품’ ‘한 가치 양담배에 불타는 우리 조국’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곳곳을 누비며 양담배퇴치·회수운동을 벌였다. 7월 16일, 회수된 2천여 갑의 양담배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소각했고, 7월 21 부산시청 앞에서 양담배를 소각하고 이 불에서 점화한 횃불을 들고 시가행진을 했다. 또 시내 998개소 다방을 돌며 커피 안마시기 운동을 벌이고, 불건전한 유흥업소 퇴치운동을 벌여 사회에 건전한 기강확립을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유흥가에서는 리어카에 확성기를 달고 다니며 건전한 생활을 외쳤고 이에 유흥업협회는 자발적으로 신생활운동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7월 19일에는 농대 계몽대원 863명이 새생활운동의 확산을 위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상경, 시가행진을 벌였다. 다음날은 서울 일원에서 구악을 일소한다는 뜻으로 청소작업을 벌이고 수원으로 돌아갔다. 이 때 트럭 전복으로 농대생 30여 명이 부상당했다. 7월 21일부터는 시내 유흥가와 유휴지 등에서 관용차 부정사용을 단속하였다. 관용차의 부정사용을 적발한 새생활계몽대원들은 8월 18일 부정사용된 관용차 91대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9월 20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생활계몽대원 5백여 명이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 “파쟁에서 손을 씻고 나라일에 충실하라” “부당한 압력으로 불법 운행되고 있는 가넘버 차를 즉시 폐차 처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에 세워둔 가넘버 표시 지프차 59대를 실력으로 시청 앞 광장으로 끌고 가 부정차량을 국민 앞에 전시했다. 당일 저녁 6시 당국에서는 1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 부정차량을 차주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격분한 신생활계몽대원들은 다음날 대학본부 앞에서 학생들에게 경과보고를 한 후 국회 앞에 집결하여 시경국장의 사과와 새생활운동의 입법화, 한미행정협정의 조속 체결을 요구, 민의원 의장의 새생활운동의 입법화 추진약속을 받아냈다. 정신개혁운동의 일환인 새생활운동을 입법화하자는 추세 속에서 9월 24일에는 시내 58개 고등학교생 6천7백여 명이 서울대 국민계몽대 지휘 아래 새로이 새생활운동대를 결성하고, 또한 10월 8일에는 전국 대학생 대표 4명이 장면 총리를 예방, 새생활의 입법화 추진 약속을 받았다. 국회에서는 양담배 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항간에서는 한미행정협정의 체결기운이 촉진되었다.

012

013

014 ‘서울대 국민계몽대 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284-285쪽 / ‘전국 대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85-287쪽 / ‘격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287쪽 /

01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02 한국교총

03

04

05 1960.7.17.-1961.5.16.

06

07 반합법

08 각 학교별 분회, 시·군 단위 조합, 도연합회로 구성되었다. 각 시·군 단위 조합을 초·중등·대학 별로 조직하였지만 시·군 단위의 연합체는 구성하지 않고 특별시 및 도단위에 초·중등·대학을 합친 연합체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총연합회를 구성하였다.

09 선언 :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아세와 부패를 거듭함으로써 일로의 자멸의 길을 걸어오던 우리 교육계도 4월의 민주혁명을 계기로 이제는 교육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할 역사적 단계에 다다랐다. 우리 교육자는 우리의 지중한 과업과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고 교육자로서의 실력과 인격을 높이어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하며 서로의 편달과 단결을 통해서 학원의 민주적 발전에 전력하고 아

올리 법에 명시된 바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및 제권리의 확보를 기하고자 한다. 전국의 교육자들은 이 목적의 환수를 위하여 여기에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고 우리의 교육사 위에 신기원을劃하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며 또 과감히 투쟁할 것을 이에 엄숙히 선언한다.

강령 : 우리는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 우리는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한다 / 우리는 민주국가 건설로써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행동강령 : 교육의 내용과 제도상의 결함을 시정하고 운영의 공정을 기한다 / 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도의 양양을 기한다 / 학원 내의 연구토론·집회의 자유를 보장케 하고 시설의 충실을 기한다 / 교권을 확립하고 법에 명시된 교원의 제권리를 찾는다 / 부당한 면직·전직·퇴직·감봉 등을 금하며,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 교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기한다 / 교원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 / 학원의 외부간섭을 일절 배격하고 학원의 자치제를 확립한다 / 반공을 철저히 하고 오열의 잠입을 경계한다

010 1960년 7월에 접어들면서 과도정부와 지방 행정관료들의 교조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고 교원노조도 조직을 동원하여 규탄대회 등 대중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교조의 조직력과 단결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따라서 교원노조는 총연합회 결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간다. 7월 3일 대구시내 포정동에 자리한 청구대학 대강당에서는 전국에서 참가한 2백여 명의 대표자와 대구지구 교원노동조합원 1천5백여 명이 모여 전국 규모의 첫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7.29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 민의원·참의원 입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과 자유시민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세력과 독재적인 관권에 대항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집회 후에는 전국 대표자회의가 열려 교원노조가 전국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추후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개편과 조직체계의 확립을 기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의사회관에서는 전국 대의원 186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조일문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한변호사회장 신태악, 자유법조단 정구영, 한국사회당수 전진한 씨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선언·강령·규약을 토의 결정하고 명칭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개선과 관련, 예민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자동적으로 사임되었음을 선언하고 총연합회 위원장의 선출은 차기 2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대의원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위원장 조일문의 정치적 경향(조일문은 족청계 인사로서 남북협상 때는 한독당 대표로서 김구와 동행하여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에 대하여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 현직교사가 아닌 비 교사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도 규약에 저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훈제, 김희조 씨의 회원자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011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은 경제적으로 우대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12개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편성과정에서 교원에게 지급하기로 되었던 90억 원 가량의 금액을 완전히 삭감한 것이 직접적 동기가 되어 법정수당에 대한 문제가 한국교총의 투쟁목표로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경북 교원노조였다. 1960년 11월 2일 경북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는 법정수당을 정부 예산계상에서 삭제해 버린 것에 대한 건의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튿날 초·중·합동대의원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에서는 “교육활동은 오로지 정신적 밀받침인 우리들의 교육자적 신념과 물질적 밀받침인 경제적 생활보장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라며 현재 보수 3~4만 원으로는 최저생활도 유지할 수 없으며, 법치주의 원칙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잡부금, 사친회비를 없애야 하며, 교원의 보수는 원칙상 국가재정으로 지급하여 학원의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의문은 18일 개최된 전국도연합회 의장단 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되어 투쟁목표로 삼도록 결의하였으며, 21일 한국교총이 직접 장면 총리에게 건의하였다. 법정수당 요구가 투쟁목표로 설정되자 경북교조는 대구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11월 25일 중앙국민학교 강당에서 조합원대회를 열었다. 이어 한국교총은 12월 11일 부산에서 제4차 전국 대의원회의를 열고 행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경고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한국교총의 투쟁은 해를 넘겨 1월에는 농성투쟁 등으로 이어졌다. 교사들은 스스로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 사회 민주화를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였다.

이 투쟁은 교사들의 일터인 학원을 개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학원정화의 구호가 집단적인 시위 및 집회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은 1960년 6월 13일 대구에서 개최된 대구지구 초·중교원노조의 합동규탄시위였다. 수업을 끝낸 조합원 1천5백여 명은 각 분회별로 대구역 광장에서 오후 5시 반에 집합하였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구정권을 배경으로 하여 부정·불법을 자행한 악질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감은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학원모리배 근절하자” “국정교과서 자유판매 실시하라” “학원에 물품강매 일소하라” “부패학원 정화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월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원 내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 전반의 반혁명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운동은 자연스레 사회운동의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1961년 3월부터 정치적 중대현안으로 제기된 ‘반공임시특별법’과 ‘테모규제법’ 문제에 대해서 교원들도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교총의 반대입장 결정은 3월 13일 한국교총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어 “반공임시특별법 자체가 노동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는 악법임이 분명하므로 만의 일이라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된다면 교원노조는 교원노조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노동법개악 때와 같이 극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 법안 반대의 범국민운동에 가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기초해 한국교총은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에 가담하여 투쟁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교총은 교과서 대금 인하투쟁, 공납금 전폐운동, 학생예술제전 개최, 신생활운동, 문맹교육운동 등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012 의장단 : 수석부위원장 강기철(서울지구), (이하 부위원장) 서창선(충남·북지역), 라철주(전남·북지역), 김종원(경남·북지역), 이동걸(경기·강원지구)

중앙위원 : 계훈제, 김월룡, 김수찬, 김종길(이상 서울지구), 심재갑, 이민구, 김호진, 오양환, (이상 경기지구), 정주일, 최규현, 황규홍, 서강호(이상 충남지구), 천건, 이춘영, 오성욱, 박재선(이상 전북지구), 윤동현, 김규연, 오국주, 주경동(이상 전남지구), 김문신, 이목, 김호규, 김장수, 방영복, 정호강, 박형진(이상 경북지구), 김갑룡, 김도인, 서석주, 황락규, 박유현, 황석연, 김창범, 최영준, 이봉구, 이길(이상 경남지구), 이양구, 최진경, 장최림, 이창길(이상 제주지구)

013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

014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46-64쪽 / 『한국혁명재판사』 제3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1041-1106쪽 /

01 민족자주통일협의회

02 민자통

03

04

05 1960.9.15.-?

06

07 반합법

08 중앙위원회 의장단 구성 : 대표의장 金昌淑, 대표부의장 安敬根, (이하 공동의장)李勳求, 盧正一, 崔權愚, 李東華, 金達鎬, 張建相, 鄭淳鍾, 許英伯, 趙棋賀, 朱鉦卿, 趙文台, 金星淑, 李源赫, 趙潤濟, 咸錫熙, 金星達, 吳之湖

상임위원회 구성 : 의장 金星達, 부의장 趙文台, 부의장 朴來源, 사무총장 朴震, 사무차장 咸錫熙, 총무위원장 李英玉, 총무부위원장 趙錫河, 조직위원장 文漢榮, 조직위부위원장 都禮鍾, 조직부장 金相贊, 조직부 차장 金培英, 선전위원장 李載春, 선전위 부위원장 金鐵岳, 출판선전부장 河相演, 재정위원장 申仁澈, 외무위원장 李興魯, 부녀위원장 崔滿理, 서무부장 姜登仁, 조사부장 金達洙(金百忍), 지방부장 奇世忠(奇峻成), 청년부장 朴重基

09 1. 우리는 민족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 통일을 기한다. 2. 우리는 민족자주역량을 총집결한다. 3. 우리는 민족자주의 처지에서 국제 우호의 돈독을 기한다.

010 민자통은 1960년 9월 초 박진, 이종률, 문한영 등 민족건양회계 인사들이 천도교 인사 박래원과 주홍모 교수 등과 함께 결성한 민족자주통일 준비위원회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 9월 15일 40여 명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숙, 이강, 서상일, 허영백, 정순중, 문희중, 김수선, 신인철, 문용채 등 독립운동 원로들과 혁신정치인들을 통일추진위원으로 추대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10월 10일 경운동 천도교 강당에서 보다 확대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김창숙, 부위원장은 주옥경과 장건상이 맡았다. 1960년 12월 무렵에는 경북 민통을 대표하는 장상호와 김성달, 그리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사회당 세력이 가담했다. 이들의 합류를 계기로 민자통은 본격적으로 제반 혁신정당, 통일운동단체, 각종 대중단체를 망라한 연합체적 조직을 결성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61년 1월 15일 4개 혁신정당과 각종 통일운동 단체 대부분, 피학살자 유족회 등 기타 혁신계 사회단체들을 포괄하여 1천여 명에 이르는 준비위원의 명단과 강령을 발표하고 2월 25일 정식으로 대의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대회를 열었다. 한편, 통일사회당 관계자들은 중립화통일론을 통일방안으로 확정짓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월 21일 민자통을 탈퇴하여 삼민당, 광복동지회, 천도교·대종교 인사 일부와 함께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을 구성하였다. 민자통 중앙협의회 간부직은 사무총장을 박진이 맡은 것을 비롯해 민족건양회 계와 그 영향력하에 있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였다. 한편 민자통 실무진이라 할 수 있는 부장급은 대부분 민민청과 통민청의 청년층들이 맡았다.

011 민자통 결성 후 핵심세력인 사회당과 민민청 · 통민청 회원들은 한국사회변혁론에 대한 토론을 벌여 한국사회에서 민족자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합의하고 민족의 통일로써 한국사회의 모순이 완성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민자통은 이러한 인식 하에 통일론을 개진하고 대중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민자통이 사회변혁운동의 선상에서 통일운동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독재정권의 타도만으로 역사가 전진하지 못한다”라는 4·19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통일운동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운동만 한다고 해서 계급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통일운동과 계급 · 계층별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공동체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해야만 역사의 변혁적 전진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노선에 입각하여 민자통은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2대법 반대투쟁, 그리고 남북학생회담 지지투쟁을 주도해 나갔다. 2월 14일 “망국적 2·8한미경제협정을 배격한다”는 점에 동조하는 16개 정당 · 사회단체 대표 35명이 사회대중당에서 회동한 후 ‘2·8 한미경제협정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결성하였다. 공투위는 2월 18일, 16개 정당 ·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지도위원과 간부진 등을 선임하고 “미국의 대한원조 자체를 무조건 반대함이 아니고 오직 민족의 자주성이 침해된 식민주의적 원조만을 결사코 반대한다”는 공동투쟁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는 “장면정부가 4월항쟁의 진정한 역사적 의의와 혁명정신을 까마득하게 잊고 미국에의 예속과 내정간섭이 우려되는 경제협정에 조인하였다고 공박하고 국회비준의 거부로 동 협정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또한 공투위는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한미경제협정 비준거부를 촉구한 공개장을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국제법상으로는 국제도의상으로 주권국가간의 조약협정이 평등원칙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이번에 체결된 한미경제협정은 ① 제3조 1항의 ‘제약없이 관찰하고 검토할 것을 허용한다’는 규정은 미국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규정이며 ② 제6조 중 면세조치와 외교관에게 부여한 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규정은 공개밀수를 의미한 것이며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③ 미국정부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는 어구는 일방적인 규정이며 이와같은 조약이야말로 식민적 야욕을 폭로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투위는 이어 2월 24일, 서울 시청앞에서 ‘한미경협반대시민성토대회’를 열었다. 이 날 성토대회에서는 통일민주청년동맹 김배영의 사회로 “반민족적인 한미경제협정의 국회 비준거부를 위하여 불퇴전의 결의 밑에 투쟁한다”는 공동투쟁선언문이 낭독되었고, 공투위 선전부장 河泰煥, 사대당 선전부장 鮮于正 등이 연사로 나와 “식민정치 노골화된 2·8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으며 격문이 살포되기도 하였다.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한미경제협정반대라는 대중투쟁에 뛰어든 민자통은 이후의 대중운동에서 더욱 중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위기에 직면한 장면정권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이라는 2대법의 제정을 추진하자 민자통은 ‘반민주악법반

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악법반대공투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 시안을 보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는 반공법이 아니다. 선량한 국민을 공산당으로 몰아 넣는 망민법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남북평화통일론이라든지, 중립화통일론이라든지, 남북교류론 등을 반국가단체 동조찬양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흉계가 이 2대악법에는 내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2대법안 반대투쟁은 격렬한 대중시위로 발전하여 나갔다. 대학생들은 각 대학대표들로 ‘2대악법반대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년들도 통민청 · 통일청년단 · 민족혁신청년연맹 · 민족성개조연맹 · 민주학생통일연맹 등의 단체가 연합해 ‘2대악법반대전국청년단체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각 지방별로 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교원노조가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므로써 2대법안 반대투쟁에는 거의 모든 민중세력이 참가하게 되었다. 19일 이후 연일 전국에서 가두시위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22일 시청앞에서 정당 · 사회단체 · 청년학생단체가 공동으로 성토회를 개최하였는데 약 3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4·19 이후 최대의 시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 시위에서는 “장정권 타도하자”라는 수준을 넘어 “외세에 의존하는 장정권 물러나라”, “미국놈들 물러가라” 등의 반미구호가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민자통이 주도한 2대법안 반대투쟁은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비교해 볼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광범한 대중의 참가를 유도해 내었다. 한편 민자통은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이 제의한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지지하기 위해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 약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학생회담지지 / 정당 · 사회단체도 남북정치협상의 태세를 갖춘다 / 남북학생회담에 지원 성금운동을 전개 / 유엔군은 길을 스스로 열라 / 학생들을 보호할 것을 맹세’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012 사회당 · 사회대중당 · 혁신당 일부 · 동학당 일부 · 삼민당 · 광복동지회 일부 · 구국동지회 · 민족건양회 · 민주민족청년동맹 · 통일민주청년동맹 준비위 · 천도교 일부 · 천도교 부녀회 · 유도회 일부 · 4월학생혁신연맹 · 피학살자유족회 · 교원노조 일부 · 출판노조 일부 · 교수협회 일부 · 사회문제연구회 · 학사회 · 사회과학연구회

013

014 ‘중앙민족자주통일협의회사건(관련자 : 박진 이재춘 문한영 신인철 박래원 이영옥 강등인 김달수 이종신 기세충 정순중)’ ‘충청남도민족통일협의회사건(관련자 : 김영수 김차경 이현수)’ ‘전라북도민족자주통일협의회사건(관련자 : 조기하 최성무 안제원 김용철 권태옥)’ ‘전라남도민족자주통일협의회사건(관련자 : 김창순 오지호 임금택)’ ‘경상남도민족통일협의회사건(관련자 : 유혁)’ ‘민족자주통일방안심의위원회사건(관련자 : 조운제 이종률)’,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7권, 국학자료원, 2001, 1-187쪽 /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68-187쪽 /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4.19와 남북관계』, 민연, 2000, 107-136

* 민족자주통일협의회준비위원회 명단(민국일보, 1961.1.19)

강위정 강용구 강신린 강등인 강원식 강대철 강창덕 강재호 강재은 강신조 강무갑 강용운 강용수 강의신 강기철 강대휘 강신용 강석봉 강석원 강대봉 강형모 강기운 강석현 강기봉 강운집 강석두 계연집 고정훈 고영환 고윤형 고 봉 구익균 구성희 구원희 구정섭 구왕근 국순홍 국기열 광봉수 광삼일 광순근 김영운 김재곤 김두식 김재윤 김관수 김숙자 김공휴 김정숙 김시현 김성숙 김성숙 김기태 김종범 김무진 김진탁 김진영 김범부 김종열 김성달 김백인 김금수 김재봉 김수선 김진용 김용수 김성근 김광수 김지연 김수현 김영한 김배영 김영옥 김진탁 김명신 김용호 김석수 김석근 김홍직 김창순 김홍운 김종철 김성래 김일곤 김만수 김려생 김영준 김세용 김명출 김진갑 김승한 김문권 김영문 김희울 김수길 김종순 김지수 김영숙 김오당 김상익 김진원 김진식 김창섭 김종관 김청운 김득수 김원희 김진 김응삼 김진태 김재현 김상진 김한구 김영광 김선적 김용기 김영수 김기철 김규찬 김명국 김명세 김인환 김달호 김병휘 김진두 김경순 김철중 김선흥 김재희 김종달 김광남 김영환 김판암 김용진 김정철 김영일 김명

선 김재영 김명환 김승태 김용겸 김수현 김정준 김상한 김병석 김재봉 김기동 김성도 김원태 김동호 김
 상찬 김수수 김우신 김용성 김경태 김의동 김삼도 김순구 김영모 김충섭 김세향 김용관 김해성 김규식
 김철준 김정문 김영달 김치한 김봉기 김근화 김용만 김세준 김중근 김진방 김영식 김기홍 김태문 김우
 곤 김익수 김대상 김학선 김달진 김재호 김재위 김호현 김석창 김정수 김봉영 김종택 김용수 김용길 김
 정길 김장경 김자동 김창일 김동광 김수암 김자송 김순호 김순효 김일우 김남형 김재현 김성섭 김중학
 김점환 김오기 김 철 김용은 김학수 김윤두 김우중 김덕수 김동규 김철중 김승현 김이현 김세원 김성
 복 김현희 김채언 김보식 김정규 김용성 권중길 권태섭 권 선 권오봉 권수산 권종수 권정진 권계환 권
 용직 권석식 권태석 권태옥 권영석 권우준 권준성 남성희 남영희 나경환 나창순 나태섭 나관수 나재하
 노백용 노광수 노한국 임병기 임중찬 임권일 임응규 임경택 임무창 임채규 임기련 임병춘 임 순 임인
 광 임창순 두응규 도광호 도암이 도예종 은대창 맹정섭 명노성 민영완 민병광 문용준 문일민 문한영 문
 회중 문상규 문용채 문창수 문창호 문종국 문재옥 문동수 문부근 문태근 문상헌 박명서 박명진 박완식
 박 진 박래원 박윤희 박형익 박지현 박노수 박춘봉 박찬훈 박서은 박철희 박동실 박장래 박영호 박병
 목 박용선 박준길 박국헌 박용석 박수형 박형필 박두의 박부남 박지용 박태인 박정기 박재영 박문수 박
 종현 박승현 박봉남 박희운 박종달 박명규 박홍한 박달준 박홍석 박장호 박충한 박호준 박병우 박희진
 박지수 박기실 박기목 박신신 박승화 박문수 박영기 박인선 박종선 박두진 박노경 박재규 박재석 박정
 부 박길훈 박일일 박상홍 박춘배 박용희 박남현 박태선 박영○ 박용식 박수현 박우흙 박운학 박중환 박
 태순 박영진 박봉중 박필원 박재하 박성준 박완하 박종길 박석호 박경열 박광원 박문희 박운경 박종섭
 박홍구 박영산 박병홍 박성창 박건양 배성기 배재훈 배성도 배달수 배성룡 배덕수 배재황 배호길 배준
 홍 배병휴 배기성 배황섭 배병렬 백남현 백낙언 백창현 백종성 백갑진 백기만 백명관 백운현 백현기 백
 운봉 백남신 배경무 백연기 백영달 변창환 변상권 반기화 방한상 변신덕 서상일 서석봉 서세원 서상덕
 서인달 서병언 서유성 서정순 서채봉 서봉수 서희영 서봉교 서희영 서병옥 서도원 서봉석 서도암 서만
 달 서윤기 서용수 서울중 서정일 서상영 서선도 서동렬 선우정 성낙훈 성희경 성 도 성순영 성재경 성
 낙헌 성기광 설태훈 설진기 설호일 손석규 송홍락 손주형 손운양 손정식 손영호 손기우 손은현 손덕
 만 손준문 손위무 손재권 손성익 손정호 손학익 송남현 송윤범 송두재 송영○ 송성채 송조환 송세동 송
 전도 송상근 송일환 송순익 송순창 송순수 시병희 신언민 신기호 신인철 신홍순 신창균 신 철 신동립
 신치균 신학우 신대영 신광현 신석균 신 숙 신두완 신응훈 신연호 신일양 신대식 신이용 신용관 신
 철 신영갑 신석봉 심순섭 심인봉 심재완 심선경 심엽섭 심문식 안홍모 안필수 안철수 안재환 안준표 안
 두현 안계명 안경근 안경호 안국제 안 잠 안승규 안민생 안병권 안상표 안승해 안창준 안병조 안양일
 안종선 안무열 안순진 안중현 안기범 안태순 오 역 오덕근 오장근 오경현 오석주 오대용 오상수 오광
 선 오시황 오명일 오세영 오중근 오재인 오동수 오일도 오윤식 오재종 온재열 양 강 양재소 양희채 양
 응모 양우조 양정성 양일우 양채학 양우주 양해록 여운복 여옥동 여운홍 엄재용 엄상수 엄규찬 엄백농
 연현배 엄보섭 엄무영 엄기섭 우철세 우동읍 우중수 우중직 우황기 우기섭 유시경 유병목 유한덕 유월
 강 유민수 유기영 유병현 유만오 유동준 유재호 유한중 유택열 유작지 유호영 유홍우 유인지 유재인 유
 갑중 유옥근 유기찬 유호근 유호준 유 혁 유금자 윤문섭 윤영희 윤지화 윤표영 윤선용 윤명근 윤길중
 윤병오 윤천근 윤원구 윤명찬 윤성식 윤 일 윤판균 윤정현 윤병호 윤오덕 윤기선 윤용환 윤정봉 윤근
 용 윤일도 윤재립 윤영덕 윤명수 윤성환 윤경수 위창사 원대식 이경해 이기릉 이규영 이규정 이양래 이
 기연 이세기 이찬영 이병희 이경석 이철민 이종익 이학우 이의성 이종배 이택래 이정호 이 탁 이현익
 이흥로 이복산 이명하 이용범 이영수 이남식 이석영 이철수 이장영 이성재 이청세 이상호 이병직 이도
 영 이장근 이진형 이찬을 이상혁 이창호 이봉운 이동화 이상현 이종철 이용희 이흥열 이영호 이수병 이
 시우 이석순 이재영 이종화 이봉재 이홍수 이영수 이문규 이귀방 이운성 이명식 이석준 이종호 이정진
 이능희 이찬수 이정만 이덕명 이남은 이태호 이덕명 이태용 이용희 이성태 이봉수 이동이 이만용 이우
 약 이상욱 이정숙 이종호 이달경 이대용 이용광 이종동 이정범 이정상 전용안 이영업 이운형 이집우 이
 한기 이계량 이영옥 이종수 이상조 이만석 이철수 이 현 이봉석 이정규 이영세 이종현 이삼근 이영만
 이실경 이세제 이재학 이홍주 이민두 이건식 이수갑 이종석 이창희 이기도 이원정 이상두 이용로 이순

회 이재준 이관옥 이동수 이원섭 이철우 이현경 이재업 이석우 이기홍 이호면 이명제 이광희 이승수 이
 춘학 이철수 이만섭 이영 이진영 이상오 장대회 장일순 장세덕 장백산 장홍엽 장동호 장두식 장일우
 장승락 장철승 장지원 장상호 장기항 장건상 장명섭 장중석 장석희 정희주 정태섭 정태훈 정병섭 정일
 무 정운관 정기화 정운채 정행범 정명학 정정섭 정태영 정창조 정도영 정인훈 정기환 정인호 정하용 정
 화암 정상구 정순중 정재동 정영신 정만수 정순조 정희영 정영준 정동수 정진기 정상화 정축호 정철동
 정진화 정히동 정영한 정영근 정동희 정구호 정연학 정기화 정상훈 정관 정선보 정해룡 전세룡 전의
 룡 전중화 전재경 전능 전호일 전홍석 전일남 전일 전재용 전원미 전임용 전창일 전준성 전용재 전
 영수 조운제 조석하 조승돈 조문태 조억제 조준기 조성대 조현식 조덕기 조시원 조승일 조덕선 조중호
 조태욱 조중찬 조병운 조남기 조이연 조성운 조인복 조광해 조용수 조복향 조현철 조중설 조정규 조칠
 규 조수은 조경희 조형하 조운용 조규택 조도환 조규진 조수윤 조규남 조현 조규준 조관환 주경연 주
 영하 주해관 주옥경 주재룡 주격 지군실 진병호 진양현 제영순 진필수 채희열 최백근 최치길 최임수
 최해경 최기창 최성무 최창환 최만리 최천활 최문우 최정태 최병렬 최상징 최익환 최성원 최만혁 최운
 택 최성덕 최종근 최인섭 최시교 최상태 최해청 최천택 최겸규 최두만 최복양 최용석 최봉주 최남수 최
 만희 최익성 최정운 최유정 최홍국 최운호 최창조 최근 최준섭 최근우 친복용 추교석 추영희 하승연
 하상연 하상지 하내청 하응달 한광석 한복완 한태연 한홍진 한태준 한일섭 한왕균 한원국 한백용 한치
 환 한정길 한경택 한성복 한정기 한위미 한영격 한일봉 한상용 한상호 한길원 한혜정 한용연 한백용 한
 치용 한영춘 함석희 함의원 허영백 허호은 허경옥 허점 허만기 허영항 현희영 현병문 현병술 홍장년
 홍재일 홍정일 홍순남 홍순갑 홍사태 홍성환 홍순 홍범○ 홍형의 홍일곤 홍정희 홍정식 홍득초 황생
 주 황엽주 황전수 황갑주 황남시 황전수 황빈 황순필 황수찬 황석규 황일정 황보선 탁봉금 윤순혁 윤
 동명 윤복득

01 민족통일연맹

02 민통련

03

04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민통전학련)

05 1960. 11. 1-1961. 8?

06 서울 소재 각 대학 및 지방 대학

07 반합법

08 회원 - 총회 - 대의원회-중앙위원회(20~25인)-기획위원회-조직위원회-통일문제연구회, 집행부서(총
 무·재무·공보·섭외·출판·동원·여학생) 등.

09 1. 우리는 민족의식과 민족적 양심에 입각, 민족통일로 매진한다. 2. 우리는 젊은이로서 세대의식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일치단결한다. 3. 우리는 본 연맹의 규약·강령 및 모든 결의를 준수한다(이상 선
 서)

010 1960년 ‘7·29’ 선거에서 혁신세력의 참패를 경험한 학생운동진영은 제도적 절차를 이용한 민주화와
 개혁의 가능성에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고 계몽주의적 방식에 호소한 대사회적 실천활동의 한계를 깨닫
 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학생운동의 방향은 통일운동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그 주역은 신진회, 신조회
 등 진보적 학생그룹 성원들이었다. 1960년 9월 24일과 24일 양일간 개최된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 주최
 의 “민족통일의 제 문제” 라는 ‘전국학생시국토론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갖게 하
 였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보수정객들의 통일방안을 비판하면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새로
 운 통일방안의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기에 이
 른다. 이러한 분위기를 실천적 조직체로 결집한 것이 1960년 11월 1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가칭)발기
 준비대회’였다. 이 발기인대회는 발기문, 선서, 대정부·사회건의문, 규약 등을 채택했을 뿐 아니라 조
 직기구까지 편성한 사실상의 민통련 출범대회였다. 이후 11월 18일에 회원 300명을 확보한 가운데 서울
 대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되어, 5조항의 조직 기본방침을 밝혔다. 서울대 민통련이 활동을 개시하는 동안

다른 대학들에서도 조직결성이 추진되어, 1960년 11월 10일 경북대학교 민족통일촉진 학생연구회가 결성되고, 12일에는 경희대학 민족통일연구회가 결성된 것을 필두로, 112월까지의 건국대, 국학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에서 민통련이 발족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부산대, 수산대, 경북대, 대구대, 전남대 등에서도 조직작업이 추진되는 등 1961년 5월 무렵까지 서울과 지방의 18개 대학에서 민통련이 결성되었고, 경북고등학교에도 민통련이 결성되었다. 민통련의 규모는 각 학교별 편차가 컸다. 서울대학교 민통련의 경우 발기 당시 회원수가 264명이었지만 5월에 이르러서는 500명 가량으로 늘어났다. 반면 다른 학교의 수는 100여명 내지 5-6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때문에 1961년 5월 경 모든 학교 민통련 회원을 합하면 2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011 1960년 11월-12월에 걸쳐 조직된 민통련은 방학기간을 통해 조직확대 등 운동력량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다른 학생단체들과 제휴 또는 연대하여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2대약법반대투쟁 등 두가지 대중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운동역량을 신장시키게 된다. 이 두 약법반대투쟁기간 동안 민통련은 서울에서만 간부학생 23명이 체포되고 그 중 4명이 구속·수감되는 타격을 입었다. 4월 초 개학과 함께 각 대학 민통련들은 본격적인 통일운동 전개에 앞서 우선 회원확충과 선전활동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하고 미조직 대학의 단위조직 창설을 서두르는 등 준비작업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조직정비를 끝낸 서울대 민통련을 중심으로 남북학생회담제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민통련은 우선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의 투쟁경과를 보고하고 학생대중의 광범위한 통일운동 참여를 촉구·유도하는 내용의 ‘학우들에게 보내는 글’(1961. 4. 10)을 작성,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학우들의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자 ‘여론조사서’를 배포 수집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4·19시국선언’을 통해 그 동안 내부토론을 통해 정리된 변혁운동의 기본전략 방향을 밝히고 민족통일운동의 본격적인 전개를 예고했다. 이 시국선언문은 4월항쟁의 실패원인이 “혁명주체세력의 취약성과 청년운동의 역사적 한계성으로 인해 혁명의 피문은 전리품을 반혁명적 보수야당에게 횡령” 당하고 이 반동세력이 “외세와 결탁하여 혁명을 중도에서 정지시킨 데” 있다고 분석하면서, “혁명의 과학적 논리는 이조와 일제시대 8·15를 통해 한결같이 이 민족을 지배해온 매관·매료적 사대주의자와 농촌사회에 있어서의 봉건적 착취 및 외족의 위장된 간섭과 지배를 거세하는데 전개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반외세·반매관·반봉건 투쟁을 변혁운동의 기본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통련 맹원들이 주도한 서울대의 4·19 1주년 행사에서는 ‘4월혁명 제2선언문’을 낭독한 후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5월3일 서울대 민통련은 대의원총회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민통련은 남북학생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도 병행해나갔다. 우선 민통련의 지방조직과 조직확대를 촉진하고, 학생회담에 파견할 대표단 인선과 환송단 구성, 그리고 판문점까지의 행진방법 등을 협의,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제하는 유엔군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공개장은 남북학생회담을 위해 유엔군 관할지역인 ‘판문점에서의 행진을 감행한다면 경비지구의 통과를 허용하고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겠는가?’를 질의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정부와 여당이 거듭 분단 불가피론과 협상불가론, 남북학생회담 불허방침을 천명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서민호, 양일동, 홍춘식 등 보수야당인 신민당내 청조회와 비한민당 계열 소장파 의원들이 남북협상과 제한된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보수진영 내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4월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군부쿠데타설이 이 무렵 매우 구체성을 띠게 되면서 민통련은 한편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쿠데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간부역량 노출을 자제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회원과 대의원 명단 등 주요조직 문건들을 파기하는 한편 대중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홍보·선전활동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통련은 5월 14일 ‘남북학생통일촉진 및 회담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요구’를 발표했는데, 민통련의 전술적 후퇴단계에서 발표된 이 문건은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한 여론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족일보』와 『한국일보』등 2개 일간지에 유료광고로 게재되기도 했다.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민통련 간부들은 일

체의 문건을 파기한 후 탄압에 대비했으나 결국 각 대학 민통련 간부 수백 명이 연행·구금된 끝에 그 중 9명이 1961년 9월 30일 혁명재판소에서 소급법인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 위반혐의로 징역 15-5년의 실형을 언 도받았으며, 그 중 이수병·류근일(각 15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1962년 4월 18일 형면제로 석방되었다.

012 서울대학교(윤식, 이영일, 황건, 심재택, 유근일, 박종열), 성균관대학교(김승균, 김상문), 외국어대학교(연현배), 항공대학교(이상익), 건국대학교(노원태), 경희대학교(이수병, 전기호), 국학대학교(곽태영), 연세대학교(김국진), 전남대학교(김시현), 조선대학교(이문교), 경북대학교(정재창, 기세환, 이재형), 대구대학교(정만진), 부산대학교(손병선, 김배균), 수산대학교(나택균)

014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사건’,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6권, 국학자료원, 2001, 947-1027쪽 / ‘학생서클 민족통일연맹’ 『민족일보』 1961. 2. 23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127-133쪽 / ‘발기문 및 선서’, ‘대정부·사회건의문’, 황건, ‘민통련과 민족통일운동’,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한길사, 1990, 158-159쪽 /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발기문 및 규약’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한길사, 1990, 306-314쪽 / ‘여론조사서’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19-324쪽 / ‘학우들에게 보내는 글’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4-325쪽 / ‘공동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6-328쪽 / ‘결의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8-329쪽 /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9-330쪽 / ‘남북학생회담 개최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우리의 요구’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31-333쪽 / ‘정부와 기성세대에 준다’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33-334쪽 / ‘성명서’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34-335쪽 /

01 사회대중당

02 사대당

03

04

05 1960.11.24.-?

06

07 합법

08 총무위원회, 조직위원회,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09 우리 당은 민주사회주의의 원리에 서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합체이다. 당은 자본주의와 좌우의 전체주의와 대결하여 일체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사회대중을 해방하고 개인의 존엄이 중시되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하 당의 5가지 기본 원리와 3가지 성격)

010 사대당 창당 준위의 김달호는 ‘사회대중당 고수동지회’를 결성하여, 민혁당 계와 윤길중 계를 다 같이 비난하면서 결당을 서둘러 사회대중당 결당촉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60년 11월 18일 김달호 계는 윤길중, 김기철, 이명하 등의 축출을 결의하고 11월 2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길중 계는 ‘김달호의 사대당 창당을 비롯한 일체의 활동을 분파행동이니 현혹되지 말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김달호 계 사대당의 정통성을 부인했지만 김달호는 11월 25일 ‘사회대중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011

012 김달호(당대표), 김병휘 조중찬 윤성식 이성재 전창일 김명세 박형필 김관암 정인훈 김기두 김충섭 나창순

013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014 ‘중앙사회대중당사건(김달호 15년, 김명세 12년, 조중찬 12년, 김병휘 5년, 박형필 10년, 윤성식 6년, 이성재 5년, 선우정 7년)’ ‘인천시사회대중당사건(조규희 10년, 최진우 무죄, 강석화 3년 집유 5년)’ ‘이리시사회대중당사건(김대회 3년 집유, 송병채 3년 집유, 양민영 5년 김효대 7년)’ ‘전라남도사

회대중당사건(김철중 10년) ‘경상남도사회대중당사건(윤우현 10년, 김철 7년) ‘함안군사회대중당사건(안창준 무죄)’,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6권, 국학자료원, 2001, 679-819쪽 / 정태영, 『한국사회민주주의정당사』, 세명서관, 1995, 533-578쪽, 596-597쪽 / 권희경, 『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 인터네셔널』, 태양, 1989, 49-62쪽

01 경북민족통일연맹

02 경북민통련

03

04

05 1960. 11. 26-

06 대구·경북일대

07 반합법

08

09

010 1960년 10월 22일, 민주구국동지회의 후신으로 확대된 ‘경북시국대책위원회’는 다시 11월 26일 보다 강력한 형태인 ‘경북민족통일연맹’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날 대구 청구대학강당에서 열린 민족통일경북연맹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는 통일 전이라도 우선 우리들의 기본인권에 관한 부모처자와 소식 조차 모르는 일이 없도록 남북간의 자유와 삶을 위한 경제적 교류와 정치적 목적 외의 인사왕래 및 문화교류는 급속히 실현되어야 하고 세계의 그 어떠한 힘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과 선언문 등을 채택·결의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경북 민족통일연맹은 약 1개월 반 만에 1만여 명에 가까운 맹원을 포괄하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011 안경근, 안민생, 백규천 등은 1960년 11월 26일 오후 2시경 대구 청구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민족통일경북연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는 통일 전이라도 우선 우리들의 기본인권에 관한 부모처자의 소식조차 모르는 일이 없도록 남북간의 자유와 삶을 위한 경제적 교류와 정치적 목적외의 인사왕래 및 문화교류는 급속히 실현되어야 하고 세계의 그 어떠한 힘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 선언문 등을 채택 결의하여 발표하였다. 또 안경근 안민생 백규천 강신용 이정상 안잠, 文昌鎬, 성희경 등은 1961년 2월 25일 오후 2시경 민족통일연맹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회를 열어 평화통일에 관한 강연과 빠라를 살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오후 1시경 대구 달성공원에서 민족통일연맹 주최로 3·1민족통일촉진경기대회를 청중 약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대회석상에서 연사인 金忠燮(대구대교수, 영남일보 논설위원), 崔一, 李余模(민민청) 李炳賢(청구대생) 등은 “미소가 문화교류를 하는데 어찌 우리가 못한단 말이나. 남한의 면포와 북한의 비료, 전기를 교역하고 통일을 위한 실정을 알기 위하여 인사교류, 서신왕래, 기자교류를 하자. 1962년의 3·1절 행사는 통일된 민족의 광장에서 하자. 일체의 외부세력을 배격한다. 선건설후 통일론을 배격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오후 6시경부터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라는 플래카드와 선전용 지프차를 선두로 대회장에서 대구시 북성로2가를 경유 중앙동을 거쳐 반월당까지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빠라를 살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경북민족통일연맹은 1961년 이후 대구지역에서 열렸던 2대악법반대투쟁 및 통일촉진투쟁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대구의 군중집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배후의 힘이 되었다.

012 안경근(위원장), 김성달(부위원장), 이정우(총무위원장), 안민생(총무위원회기획부장), 강신용(외무위원회섭회부장), 백규천(조사위원장), 안잠(선전부장)

013 민족자주통일협의회

014 ‘誓決文 및 선언문’ 『한국 혁명재판사』 제4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510쪽 /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사건’, 『혁명재판사』 제2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513-37쪽 / 김동춘·박

태순,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113-114쪽 / 김지형,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42-45쪽 / 영남일보, 1961. 1. 29

01 사회당

02 사회당

03

04

05 1960.11.27.-?

06

07 합법

08 중앙당: 중앙위원회, 당위원회, 조직위원회, 선전위원회, 당무위원회, 재정위원회, 부녀부
전남도당: 당위원회, 당무위원회, 조직위원장, 선전위원회, 재정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09

1. 우리 당은 민족자결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통일국가의 완성을 기한다.

1.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유발전을 꾀하며 빈부차이를 극도로 축소시키는 경제조직의 혁신을 기한다.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기한다.

1. 민족고유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주우방국가들과 균등한 문화교류를 하여 고도의 민족문화 건설을 기한다.

1. 민주우방국가들과 호혜평등외교를 긴급히 함으로써 항구적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한다.(이상 강령)

010

011

012 창당준비위원회 주요인사 : 전남-김철, 강석봉, 한길상, 이기홍, 최백근, 국기열, 이호면, 김세원/
영남-김정규, 김상한, 신영갑, 김용겸, 유혁, 김진한, 김수현, 배기성, 송세동, 문희중, 김배영, 유한중, 백기만, 두응규, 강창덕, 강대휘, 신대영, 전능, 이석준 등/그외-유병목, 하태환, 김영옥, 황금수, 진병호, 이규영, 이계덕, 주명희, 구희서, 최순자, 최생금, 김성익, 진양현 등 경기·충청지역 출신.

중앙당: 최근우(중앙위원장), 김정규(조직위원장), 최백근(조직부위원장), 유병목(선전위원장), 문희중(당무위원장), 서동열(재정위원장), 이현경(부녀부장, 본명 이계덕)

전남도당: 국기열(당위원장), 이호면(당무위원장), 강석봉(도당 부위원장 겸 재정위원장), 한길상(부위원장), 김철(도당 고문), 임무창(선거대책위원장), 김주(부녀부장)

013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014 ‘중앙사회당 사건(관련자 : 문희중 15년, 유한중 7년, 하태환 15년, 진병호 무죄, 이석준 10년, 최백근 사형, 김영옥 5년)’ ‘경상북도사회당사건(관련자 : 강대위 7년, 강창덕 7년, 전능 무죄, 권용직 3년 징역 5년, 신대영 10년, 두응규 공소 기각, 김경구 공소기각, 김소쇠 3년 징역 5년, 신현달 3년 징역 5년, 이강립 무죄)’ ‘경상남도사회당사건(김용겸 12년, 송세동 무죄, 김재봉 5년, 신영갑 무죄)’,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6권, 국학자료원, 2001, 565-647쪽 / 정태영, 『한국사회민주주의정당사』, 세명서관, 1995, 596-597쪽 / 김세원, 『비트』, 일과 놀이, 1993, 338-345쪽

* 선언문

우리 당은 4월 혁명의 역사적 과업을 계승하여 일체의 반민족적 요소를 배격하고 광범한 민주혁명 세력을 총집결함으로써 일변도적인 국제적 고립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혼합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경제를 확립하고 수탈과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할 것을 궁극적 이념으로 한다.(이상, 김세원 『비트』 참조)

01 조국통일민족전선

02 조통전

03

04

05 1961.1.8.-[?]

06

07 비합법

08 조통전의 조직은 대회 이외에 결의기관으로 중앙위원회가 있을 뿐이었다. 중앙위원회의 조직구성은 정부위원장 및 국·부장과 각 도대표 1명씩을 합쳐서 되어 있고 집행부로는 정부위원장, 총무국, 재정국, 조직국, 기획국, 청년학생국, 통제국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 각부가 있고 거기에는 각국장 및 부장이 선출되어 있었다. 조통전의 가입원서에는 한반도지도가 붙어있고 남한과 북한이 빨간색으로 손을 그려 악수하고 있는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09

010 조통전은 1960년 12월 초순경 정순학, 강진원, 하태환 등 3인이 상의하여 발기한 단체로, 1961년 1월 8일 정순학, 강진원, 김동립, 김진철, 하태환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한미장에서 정식으로 결성대회가 열렸다. 결성대회에서 조통전 성원들은 “집권당은 공산당에 대한 패배의식에서 공염불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민주당정권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발기취지문과 강령을 채택하였다.

011 조통전은 주로 민족통일운동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8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 2대약법반대투쟁에 민자통을 비롯한 혁신세력과 공동투쟁에 나섰으며 남북학생회담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월 10일 조통전 선전국은 “민주당의 맹省과 통일노력을 촉구함”이란 제목으로 “민주당은 왜 중립화통일 남북협상, 남북인사교류, 남북교역, 남북서신왕래 등 중대한 통일문제를 기피하는가”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서울시 각 언론기관 및 정당 사회단체에 발송하였다. 1961년 1월 11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은하여관 제9호실 조통전사무실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정순학, 강진원, 김동립, 김진철, 정형모, 하태환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① 남북한의 민간단체대표가 통일달성을 전제로 하고 우선 긴급 당면과제인 서신거래, 남북교역, 문화교류, 시찰단교환, 기자교류 등을 위하여 완충지대 내의 적당한 장소에 모여 상임기관을 설치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② 앞의 내용을 실천해가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한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상임기관의 설치장소에 모여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조국통일추진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통일방안이 결정되었다. 1월 31일 조통전은 위원장인 정순학의 이름으로 “앞아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일어서서 통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자. 우리는 모두 뼈를 지어 휴전선이고 뒤통고 밀고 나가자. 남한만 가지고 북한보다 부강해 질 수 없으니 우선 남북서신거래, 경제교역, 인사왕래 등 남북교류를 단행하도록 하자”는 요지의 ‘조국통일촉구호소문’을 발송하였다. 또 1961년 2월 4일에는 역시 정순학이름으로 ‘언론인에게 드리는 통일노력촉구호소문’을 시내 각 언론기관에 발송, “언론인 여러분의 영웅적인 분투노력으로 우선 통일의 예비적 단계로서 서신교환, 경제교역, 인사왕래 정도의 남북교류가 실현되고 미소 양대세력권내에서 해방되는 민족자결의 통일독립이 전취될 수 있도록 그 가지신 바 위대한 破邪顯正의 특권을 다만 통일노력촉구에 총집중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하며 통일의 위업이 달성되는 날 언론인 여러분은 인민의 이름으로 달아 주는 훈장을 타게 될 것이다”라고 호소하였다. 1961년 2월 9일 조통전 선전국은 “케네디행정부의 통한안을 반박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국문제해결에 있어서 유엔이 기본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엔의 역할보다도 우리 민족의 자주원칙에 입각한 민족자체에 의하여 力行되어야 한다. 유엔은 통일독립민주한국이 탄생될 때까지 한국에 잔류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통일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된다고 보니 통일선거실시에 앞서 적당한 시기에 철수하여야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1961년 3월 15일 조통전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민자통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대약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고 선전국장 하태환, 조직국장 이병일, 사무국장 강진원을 파견하였다. 5.16군사쿠

데타 이후 체포된 조통전 성원들은 재판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남북이 통일되어야 자주적으로 국가의 기초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느낀 나머지 그 방법으로 조국통일추진전국위원회를 조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여 왔다” 고 주장하였다.

012 조통전의 중심인물은 모두 4월민중항쟁 이후 결성된 사회대중당준비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원장인 정순학, 부위원장인 최성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이나 혹은 조선노동당과 연결되어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중요 성원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사로 활동한 지식인들이다. 한마디로 조통전은 우익적 경력과 튼튼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의 결합이었다.

직책과 이름/ 출신지/ 주요 경력/ 판결

-위원장 鄭順學(40)/ 전북익산/ 일본광업소기사, 독촉국민회회원, CIC문관, 건축업, 민주당, 민주혁신당, 사회대중당, 민의원선거 낙선/ 15년

-부위원장 崔成萬(43)/ 전북정읍/ 이리공고 교사, 태인중 교감, 대한철광주식회사 돌산광산책임자, 사회대중당, 조국통일민족전선 조직국장/ 10년

-사무국장 姜振元(32)/ 전북고창/ 중앙대 중퇴, 대한통신사 기자, 고창중 민주학생연맹가입(구류11일), 노동당가입(50.8), 진보당 전북도당 당무간사, 사회대중당 전북도당 상임위원/ 10년

-통제국장 金東林(43)/ 사리원/ 간도 용정중 졸업, 일본대학법문학부 졸, 사리원상업학교 교사, 한국전쟁때 남하하여 인장업 종사, 진보당 가입, 사대당/ 7년

-기획국장 金鎭澈(34)/ 거제도/ 서울대문리대 4년 중퇴, 면서기, 의용군으로 활동중 포로, 영천수용소, 석방, 60년 12월 조통전 가담/ 10년

-지도위원 鄭亨謨(51)/ 경북고령/ 일본관서대법과 졸, 교사, 미군정청 보건후생부행정관, 보건부 사무관, 근민당 대구시 당원, 한국전쟁때 의용군광주훈련소장,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1년·집유3년(56.8), 진보당가입(57.5) 진보당 중앙통제위원, 민자통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위원/ 10년

-선전부장 河泰煥(35)/ 경남함안/ 서울감리교신학교졸, 교육계종사, 민의원낙선, 진보당경남도당 교양부장, 가축업, 사회대중당 준비위원, 민자통 중앙상임위원, 사회당 선전위원회 선전부장/ 사회당 사건 15년

-조직국장 李炳逸(38)/ 일본 관서대, 학도병징집, 고려통신사(49), 민국당 전북도당 집행위원, 민국당 탈당, ‘북로당직속 남한정보수집위원회 전주지구 사건’으로 구속(50.1), 징역5년,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위 기획위원, 1964년 ‘인혁당사건’으로 체포됨

-李種信(40)/ 장수/ 전북공론사 총무부장, 장수국교 교사(46), 전북민청 선전부 차장, 전북민전 상무위원(47), 월북(48.4), 남하하여 삼척중 교사, 포고령위반사건으로 구속, 한국전쟁때 탈출, 자수, 1개월 후 석방, 부산감리교 신학교수학, 한국기독교시보사 경남지사 경영,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 조국통일민족전선 발기, 곧 탈퇴, 민자통 가입, 상임위원, 민자통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위원/ 민자통 사건 15년

-청년부장 崔性穆

013

014 ‘공소장’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3권, 1962년, 329쪽 / ‘상고이유서’,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앞의책, 382-418쪽 /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1953-1961』, 서울대출판부, 2001, 165-166쪽, 290쪽

01 혁신당

02 혁신당

03

04

05 1961.1.8.-?

06

07 합법

08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통제위원회로 구성되었다.

09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정치제도의 확립을 기한다 /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며 기아를 추방하고 부의 균등 형유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한다 / UN 협조 하에 국토를 통일하고 영세중립국으로써 세계평화 달성에 기여한다

010 사회대중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윤길중 계를 제명하고 1960년 11월 25일 김달호계의 주도로 사회대중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자극받은 장건상 옹립세력은 1961년 12월 10일에 혁신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윤길중과 합의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윤길중은 1961년 1월 혁신당과의 관계를 단절을 선언했다. 이에 혁신당 준비위원회는 1961년 1월 6일 윤길중을 제명하고, 1월 8일 근민당, 혁련, 구진보당 등 일부 세력으로 3·1당에서 혁신당 결당대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011

012 장건상(당대표), 이형우 장홍염 권대복 허영무 곽순모 황구성 정예근

013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014 ‘혁신당사건(관련자 : 장건상 5년, 권대복 15년, 곽순모 6년, 황구성 10년, 허영무 6년, 정예근 6년)’,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기록사 총서』 6권, 국학자료원, 2001, 541-563쪽 / 정태영, 『한국사회민주주의정당사』, 세명서관, 1995, 556-558쪽, 596-597쪽 / 『한국혁명재판사』 제3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541-563 / 곽순모 편, 『민주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민사연 교양총서1, 1984, 122-135쪽

01 통일사회당

02 통사당

03

04

05 1961.1.21.-?

06

07 합법

08 통사당은 정치위원회, 당무위원회, (특별위원회)재정위원회, 통일촉진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국민대중운동위원회, 국회대책위원회, 중앙상임통제위원회 등을 두었으며 당무위원회 산하에 총무국, 조직국, 선전국, 기획국, 국제국, 의회국 등을 두었다. 또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에 각각 도당 조직책을 선출하였다.

09

010 진보당계가 3분되어 김달호 계 사회대중당과 장건상·진보당 계 혁신당이 창당되고 나머지 윤길중 계 진보당 세력은 비진보당계 민혁명·민련·근민당 세력과 협력하여 새로운 혁신정당을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서상일, 윤길중, 김성수, 고정훈, 권오돈 등 김달호, 장건상, 최근우의 각 파를 제외한 혁신계 원로와 중견간부가 총집결되고 원내 6석의 의원들을 포함한 거대한 혁신정당의 주류를 형성, 1961년 1월 21일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011

012 이동화(당대표), 서상일 윤길중 송남헌 정화암 문용태 이명하 김기철 金成淑 金星淑 신창균 양호민 최석채 윤죽향 박기철 박준길 임갑수 박권희 정상구 고정훈 조현식 이훈구 한왕균 정태영 안준표 황빈 김철 안필수 구익균 배일성 박문필 조중환 임춘호 이일행 김철중 장일순 김필란

013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014 ‘중앙통일사회당사건(관련자 : 서상일 3년 집유 5년, 金星淑 3년 집유 5년, 金成淑 3년 집유 5년, 정화암 3년 집유 5년, 이동화 7년, 윤길중 15년, 송남헌 3년, 김기철 6년, 구익균 3년 집유 5년, 고정훈 10년, 조현식 3년 집유 5년, 이명하 3년, 황빈 3년, 한왕균 3년)’ ‘경상남도 통일사회당사건(박민철

5년, 배일성 5년, 임갑수 5년, 윤죽향 5년, 김필란 5년)’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 기록사 총서』 6권, 국학자료원, 2001, 831-930쪽 / 정태영, 『한국사회민주주의정당사』, 세명서관, 1995, 558-560쪽, 596-597쪽 / 권희경, 『한국혁신훈당과 사회주의 인터네셔널』, 태양, 1989, 63-82쪽

01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02 민통전학련.

03 서울대학교 민통련,

04

05 1961.5.5.-1961.5.16

06

07 반합법

08

09

010 1960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민통련이 결성된 이후 학생층의 통일열기는 사회운동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 11월 10일 경북대학교 민족통일촉진 학생연구회가 결성되고, 12일에는 경희대학교 민족통일연구회가 결성되는 등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학생단체는 전국에 확산되어 1961년 5월 무렵까지 서울과 지방의 18개 대학(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항공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국학대학교, 단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청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수산대학교)에서 민통련이 결성되었고 경북고등학교에서도 민통련이 결성되었다. 1961년 2월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과 3, 4월 2대약법반대운동을 주도하고 5월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이 단체들은 1961년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를 갖고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011 각종 위기설이 감돌던 4.19 1주년 기념일이 지나가자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민통련은 1961년 5월 3일 대의원회의에서 논란 끝에 남북학생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이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① 빠른 시일 안에 남북 학도회담을 열며 ② 회담의 의제는 학도간의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대회, 예술·학문·창작교환, 체육대회의 개최이며 ③ 남북 행정당국은 학생들의 결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 준비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안은 전국적인 결의로 다시 확인되었다. 이날 민통전학련 관계자들은 학생회담 장소는 관문점으로 하며, 회담 시일은 5월 이내로 하고, 지역별로 회담대표를 선정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다. 남북학생회담 제안은 남북 모두에게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혁신계 통일운동의 결집체인 민족자주통일협의회는 남북학생회담 제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였다. 반면 장면 정권은 학생회담 제안은 허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신민당의 영구 윤보선 대통령도 우려를 피력했다. 문교부는 5월 1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총·학장회의를 개최하여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학생회담에 대해 북측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5월 5일 노동당, 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 정당과 내무상이 학생회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6일 밤에는 김일성 대학 강당에서 조선학생위원회와 조선민주청년동맹 대표들과 각 학교 대표 5백여 명이 집회를 열고 조선학생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통전학련은 5월 14일에 이르러 ‘남북학생 및 통일촉진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우리의 요구’ 라는 제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실었다. 여기서 ① 남북학생회담의 지지 여부를 알기 위해 국민 또는 전 학생의 투표를 실시할 것 ② 남북 학생회담을 위한 친선사절단 교환, 학생기자 교환, 체육예술단 교환 등 비정치적 부분으로 한정하고, 만약 정치적 문제가 제기되면 회담을 중지할 것 ③ 대표단은 학생회, 일반 학생, 민통련 각 3분의 1씩 구성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추진은 정부의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장면정권은 방해하지 말라” 라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5.16 쿠데타 발발로 결국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012

013

014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발기문 및 규약’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②』, 한길사, 1990, 306-314쪽 / ‘여론조사서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19-324쪽 / ‘학우들에게 보내는 글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4-325쪽 / ‘공동선언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6-328쪽 / ‘결의문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8-329쪽 /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9-330쪽 / ‘남북학생회담 개최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우리의 요구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31-333쪽 / ‘정부와 기성세대에 준다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33-334쪽 / ‘성명서 ‘사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34-335쪽 / 『한국혁명재판사』 제3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년, 947-1027쪽

01 2.8한미경협반대공동투쟁위원회

02 공투위

03

04

05 1961.2.14 결성

06

07 반합법

08 16개 정당사회단체의 연합체

09

010 2.14. 2.8한미경협을 배격한다는 점에 동조하여 사회대중당에서 회합한 혁신당 외 16개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2.8한미경협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날 대표들은 2월 9일 사대당의 제창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당초 참석을 승인했던 23개 정당사회단체들 중 17개 단체대표 35명의 출석으로 결성되었다.

011 2.14 민자통 대표 합석회 사회로 진행된 결성 집회에서 민족적 자주성과 국가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8한미경협은 매국적인 것으로 이승만정권 때부터의 예속화정책이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우선 국회에서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후 한미경협반대 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012 사회대중당, 혁신당, 민자통, 조국통일민족전선, 전국학생조국통일추진위, 전국학생혁련, 전국실업구호대책위, 통민청, 민민청, 한국실업자협회, 전국고학생연맹, 전국피학살자유족회, 4월혁명단, 민족통일연맹(상대), 동경구례학우회, 서울대 민통련

013 2대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014 『민족일보』1961.2.15.

01 2대악법반대전국대학생투쟁위원회

02 악법반대전국학생투쟁위

03

04

05 1961.3.16 결성

06

07 반합법

08 10개 학생단체의 공동투쟁위원회.

09

010 3.8 장면정부가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서울시내 각 대학생단체 대

표들은 3월 11일 서울 시내에서 모여 2대악법반대전국대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후 대학 대표로써 준비위원회 구성하였다. 16일 서울시내 대학생 수십명이 모여 악법반대 전국대학생공투위를 결성하고, 각계인사를 초청 공청회를 열 것과 국회의원을 개별 방문하여 2대악법의 폐기를 종용키로 결정하였다.

011 2대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준비위원회는 2대악법에 반대하는 ‘공고문’을 발표하는 한편, 2대악법 반대 전국청년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2대악법반대시위를 전개하였다. 특히 3월 18일 경북학생공투위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는 1만여 군중이 운집하여 “2대악법 통과되면 4월혁명 끝장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횃불시위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012

013

014 『민족일보』 1961.3.13-3.23.

01 반민주악법반대전국청년공동투쟁위원회

02 악법반대청년위

03

04

05 1961.3.13 결성

06

07 반합법

08 11개 청년단체의 연합체

09 주요 행동강령. 1)장면정권은 국민기본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혁명적인 이대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1)정부는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1)정부는 관제공산당을 조장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지하라 1)정부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경제부흥을 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라 1)우리는 민족자주독립정신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한다 1)우리는 반민주적인 2대악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혁명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민족일보』 1961.3.14).

010 장면 정부가 3월 8일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혁신계 청년단체들은 두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반대에 공동전선을 펴기로 합의하였다. 12일 각 청년단체 대표들은 반민주악법반대전국청년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내 각 청년단체와 서클 대표들이 모인 이날 회의서는 성토대회, 삐라살포, 데모등의 파상적인 투쟁을 전개한 후 최악의 경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투쟁도 전개하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13일 악법반대 전국청년단체 공투위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반민주적인 이대악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혁명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민족일보』1961.3.14.).

참가단체:통일청년단 민족혁신청년연맹 민족성개조연맹 통민청 민주학생통일연맹 민족통일청년연맹 전국혁신청년연맹 조국통일민족전선 전국피학살자유족회청년학생위원회 전국학생혁신연맹 민민청

011 악법반대청년위는 13일 결성식을 마치고, 시내에 삐라를 뿌리는 것을 시작으로 살포

012

013

014 『민족일보』 1961.3.13-3.23.

01 2대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02 2대악법공투위

03

04

05 1961.5.15 결성

06

07 반합법

08 13개 정당 사회단체의 연합체

09 투쟁강령 1)민주수호정신에 입각해서 반민주악법에 반대하는 원내투쟁을 효과적으로 단행키 위하여 광범하고 강력한 대중운동을 추진한다 1)원내외 투쟁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일반대중에 호소하는 원외투쟁을 활발히 전개한다 1)원외에서는 과감한 거족적인 극한 투쟁을 전개한다(『민족일보』1961.3.16).

010 통사당,사회당,혁신당,사대당 등 4개정당은 12일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각당 간부들의 접촉으로 공동투쟁전선을 모색해오던 4개 정당은 13일 각 정당 대변인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악법반대 공투위는 3.15. 선언과 공동투쟁강령을 채택한 후 임원을 선출하였다.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 3명씩 회합한 회의에서 반공임시특별법데모규제법 및 국가보안법 보강 등의 반민주적 법률의 제정을 절대 반대하고 철저히 분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투쟁위에서는 장면정권의 반민주악법 제정을 규탄 분쇄하기 위하여 일체의 분파적 당리당욕을 초극하기로 서약하였다.

011 19일이후 연일 악법반대 공투위 주최로 전국에서 악법반대 가두시위가 계속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2일 시청 앞 성토대회에 3만여 시민이 참가하여 4.19이후 최대의 시위를 기록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혁신계의 주요정치인, 학생투위의 간부에 대한 예비검속이 행해졌다. 그 후 서울에서는 가두시위가 줄어든 반면, 지방에서는 연일 데모가 계속되었으며, 4월 2일 ‘대구데모’에서는 경찰과 충돌하여 49명이 연행되었다.

이러한 2대악법 반대투쟁은 한미경협반대투쟁과 맥을 같이하는 운동이었고, 전민중적 연대투쟁 그리고 넓은 의미로 통일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012 지도위원: 김창숙 장건상 최근우 이동화 김달호 김성숙 문용채 채원개 피학살자유족회대표

기획위원:정당사회단체별 각 3명씩 도합 33명 실무부장: 총무 조기하 조직 유한중 선전 고정훈 재정 박권희 청년 권대복 부녀 최만리 학생 윤성식 의원 윤길중 섭외 조규택 동원 한왕균

참가정당사회단체 :통사당 사회당 사대당 혁신당 민자통 중통련 삼민당 피학살자유족회 광복동지회 일부 조국통일전선

013

014 『민족일보』 1961.3.13-4.5.

01 인민혁명당

02 인혁당

03

04

05 1962.1-

06

07 비합법

08 당 중앙위원회와 전국학생지도부로 구성되었다. 전자의 위원장에 도예중, 조직위원 박현채, 교양위원 정도영, 총무위원 이종배, 교양부 연락원 김영한, 연락책 김금수, 조직부책 이재문 등이었다. 서울시당부에 김병태, 경북도당부에 박상홍, 전국학생지도부 위원장에는 임창순, 조직책 서정복, 교양책 김영광, 의장 오병철이었다.

09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 등

010 전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우동읍, 전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 김금수, 경북 간사장 도예중, 전 사회대중당 간사 허작, 전 진보당원 김한덕, 전 빨치산 출신 박현채 등이 1962년 1월 서울 남대문구 부암동 우동읍의 집에서 전 통민청 김배영의 사회로 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규약을 토대로 발족하였다. 도예중은 전국조직을 담당, 1963년 12월 중앙상임위원회 중앙당대회 중앙당위원회 시의 조직을 완료하였고, 서울시당을 위시한 전국의 일반 당부와 특수부조직에 착수하여 학생부, 노동부, 농민부, 청년부, 언론기관부, 합법정당부의 주요인물로서 정도영, 박현채, 김병태, 전무배, 이재문, 오병철, 임창순(전 성균관대학부교수), 박상홍, 김한득 등 50여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 전국의 군, 면당과 군소 직장 내에 세포조직 결성을 시도하였다.

011 3.24 시위가 있자 박현채를 총지휘책임자로 하여 데모주동학생 포섭에 나서서 오병철, 서정복은 조선일보사 기자 박병진과 서울대 법대생 황건을 예비당원으로 포섭했고 또 이에 박과 황은 서울대 문리대 ‘불꽃회’의 김정강, 김정남,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김종태, 김도현, 현승일과 성균관대 김승균, 대구대 정만진, 중앙대 출신 박익수를 포섭했다고 한다.

1964년 불꽃회 김정강이 체포된 후 압수된 그의 노트에서 도예중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공안당국이 조사가 시작돼 도예중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체포돼 조직이 와해되었다. 당시 이른바 ‘인민혁명당’ 조직원들이 실제로 인민혁명당이란 명칭을 썼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조직명칭과 관계없이 전위적 성격을 띤 조직이 실재했던 것은 김정강, 김상찬(전 민민청) 등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인민혁명당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불꽃회사건 관련자들은 조직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012 주요활동가 : 중앙정보부 발표에 따른 관련인물.

도예중(都禮鍾;49세) :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장, 무직, 민민청 경상북도 간사장, 민자통 중앙조직 부책
박현채(朴玄採;30세) : 중앙상무위원회 조직위원, 한국농업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상대 강사, 전남 지구 빨치산 문화부 중대장(인민군 유격대), 195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불기소 처분

정도영(鄭道永;39세) : 중앙상무위원회 교양위원, 합동통신사 조사부장.

김영광(金永光;34세) : 전국학생지도부 교양책, 원봉(元峯)건설회사 서무과장,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 간사장, 민족일보사 기자

김금수(金錦守;28세) : 중앙상무위원회 연락원, 운전업, 민민청 중앙간사장

이재문(李在汶;31세) : 중앙상무위원회 조직부책, 대구 매일신보 서울분실 기자

임창순(任昌淳;51세) : 전국학생지도부 위원장, 태동고전연구소 주간, 민자통 통일방안심의위원, 1960년 7월 29일 선거법위반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

김한득(金漢得;33세) : 경상남도 당교양책, 목재상, 사회대중당 부산진구 조직위원장, 민자통 부산진구 조직위원

허작(許灼;31세) : 발기인 및 초대 경상남도책, 동래 동성국민학교 교원, 진보당 상임위원(비밀당원)

김병태(金炳台;37세) : 서울시 당책, 농협 자문위원, 농협대학 강사, 진주 관문동 민청위원장(6.25 당시)

강무갑(姜武甲;46세) : 경상남도 당책, 무직, 사회대중당 김해지구에서 낙선

이영석(李寧錫;35세) : 경상남도 당책, 한의사, 사회대중당 동래 창당위원

박상홍(朴相洪;45세) : 경상북도 당책, 상업(서적상), 1961년 4월 2일 데모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복역

김동희(金東熙;27세) : 서울 학생지도부책, 민중서관 사원

오병철(吳炳哲;27세) : 전국학생지도부 의장, 서울 문리대 철학과 4년

전무배(全武培;33세) : 서울시 당 교양부, 서울신문사 정치부기자, 민족일보사 기자

김영한(金英漢;30세) : 중앙상무위원회 교양부 연락책, 미국인회사 사원(더 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

민족일보사 기자

도에택(都禮澤;31세) : 경상북도당 교양책, 문호사 편집원, 1961년 5월 19일 특정범죄처벌에 의한 임시 특례법위반으로 피검·훈방됨

박중기(朴重基;29세) : 서울시 당원, 한국여론사 취재부장, 민족자주청년동맹 간사장, 민자통 중앙협의회 청년부장

서정복(徐正福;24세) : 전국학생지도부 조직책, 서울 문리대 철학과 4년, 후진사회연구회 회원, 신진회 회원, 인권옹호협회 회원

송상진(宋相振;37세) : 경상북도당 간사, 건축재료상, 민민청 경상북도 사무국장, 1961년 12월 특정범죄처벌에 의한 특례법위반으로 피검·훈방됨

이종배(李鍾培;29세) : 중앙상무위원회 총무부 연락원, 제일은행본점 은행원

김배균(金培均;27세) : 부산 학생지도부책, 회사원, 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

황건(黃建;24세) : 후보당원, 서울법대 법학과 4년, 민통련 조직위원장, 사회학회 평의회의장, 1961년 9월 군사재판에서 반국가행위로 10년 징역형을 받고 1962년 4월 형면제로 석방

하일민(河一民;24세) : 후보당원,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년, 민통련 대의원, 1962년 11월 소요죄로 징역 8월·선고유예 1년 처분을 받음.

박영섭(朴英燮;28세) : 후보당원, 군인(미16공병대 A중대 병장), 암장전선(岩裝戰線) 회원, 민민청 조직국장

정만진(鄭滿鎭;24세) : 후보당원, 서울대 법학과 4년, 2대악법반대 경북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영호(李英鎬;28세) : 후보당원, 명지고등학교 강사

이병일(李炳逸;42세) : 후보당원, 광업, 노동인민당 당원, 사회대중당 전라북도 당위원장, 조국통일민족전선조직국장, 민통련 중앙조직위원

장상호(張相鎬;45세) : 후보당원, 무직, 1962년 9월 반국가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김득수(金得洙;37세) : 후보당원, 무직, 혁신동지총연맹 회원, 민자통 농어민부 부장, 1961년 5월 반국가행위로 불기소처분을 받음(1964. 8. 14. 서울신문)

013 경략연구회, 인혁당재건위사건

014 세계 편집부, 『공안사건기록』, 「인민혁명당」 사건(1964. 8, 14), 9-16쪽; 편집부 엮음, 『공안사건기록』, 세계, 1986, pp9~16. / 조희연, 『현대한국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1993, 105-106쪽./ 김재명, 「유신독재의 제물 인혁당 사건」, 『월간중앙』, 1989년 2월호, 292-295쪽.

01 (가칭)민주노동당 창당 발기 준비위원회

02

03 전력노조, 금융노조, 운수노조, 체신노조, 화학노조, 해상노조, 연합노조, 광산노조.

04

05 1963. 1. 11-1963.2.16

06

07 반합법

08 조직

09

010 1963년에 접어들면서 민정이양을 앞두고 정당활동이 재개됨을 계기로 노동단체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수호·신장하기 위해 노동자대표의 의회진출과, 노동계 이익을 대변할 정당창설이 요구되었다. 이에 김정원 광산노조 위원장과 8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수차례 모임을 가진 뒤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한국노총의 이규철 위원장 등을 설득하여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오히려 한국노총측에서는 발기위원들에 대해 각개 격파로 설득, 회유하면서 와해공작을 펼쳤다. 이 가운데 1963년 1월 11일, 김정원 발기위원장은 ‘우리는 반공, 자유, 민주

주의를 기초로 하는 사회정의 구현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가칭 민주노동당을 창당코자 한다..용공, 중립, 독재, 빈곤, 부패를 강력히 배제한 자유, 빵, 평화의 실현을 위하는 노동자의 집결체로서 전국 노동자의 열렬한 기대에 수응코자 한다..' 는 내용의 창당 취지문을 언론(한국일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노동계의 정당창당 발기 사실은 정부일각에 큰 파문이 되었으며, 한국노총의 집행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강령의 내용으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반행위로 단정, 창당 준비활동을 중지시켰다. 이에 1963년 2월 1일 김정원은 '뜻을 같이 하는 산별 노조 위원장 일동' 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 '현 노총이 모(某) 당에 기울어짐으로써 뼈저리게 느꼈던 전철을 밟아 정당의 이용물이 되려 한다' 고 단정하면서 모당과 끊을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노총은 2월 4일 산별노조 위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13개 산별노조 위원장과 광산노조 부위원장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강령에 표방된 엄정중립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성을 견지하며 정당을 초월한 독자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려는 우리의 행동노선에 하등의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한다' 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창당발기준비위원회에 가담했던 전력, 금융, 운수, 체신, 화학, 해상, 연합 등의 각 산별 위원장들은 이미 노총과 외부압력에 의해 번의하였고, 한국노총에서는 창당활동 중지 경고에 불응한 김정원에 대해 1963년 2월 16일 제20차 중앙 위원회에서 광산노조 위원장 무기정권처분을 내렸다. 이로서 민주노동당 창당운동은 유산되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011

012 민노당 창당 발기 준비위원회: 김정원(金正元), 안강수(安康洙), 이우복(李愚福), 조창화(趙昌華), 남준현(南俊鉉), 조규동(曹奎東), 박영성(朴泳成), 최재준(崔載峻)

013

014 '창당 취지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585쪽/ '2·1 성명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589-590쪽, 부록 2-4/ '한국노총 2·4성명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의책, 590쪽, 부록 2-5 / 김정원, '민주노동당의 태동과 유산', 『노동문제』 제1집,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1971. 4쪽.

01 연세대 한국문제연구회

02 한연회

03

04

05 1963년 10월 창립

06 서울

07 반합법

08

09

010 1962년 가을학기부터 김용서, 어수영, 김만규 등이 시작한 오시회(五時會)를 모태로 결성되었다. 김용서, 어수영 등은 4.19 시기 연세대 민통련 회원이었다.

011 연세대의 6.3항쟁을 주도했다. 연세대 63운동은 공조직인 총학생회, 그 산하 등록서클인 한국문제연구회, 비공식 조직인 서울고 인맥등 3대 세력의 연합이 주도하였다. 3단체의 주도적 인물은 안성혁이었다. 한연회는 서울대 민비연, 고려대 민사회 등과 함께 63 당시 데모 이론을 공급하고 행동가를 배출한 운동권 양성소였다. 한연회는 대학가 대자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장문의 격문을 전지에 써서 연세대 앞 골다리에 도배했고, MT를 실시하기도 했다. 연세대 3.34시위를 있게 한 함석헌, 장준하 초청 강연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안성혁은 "함석헌 선생은 고교시절 교회 활동 때 이삼열과 함께 한번 강연회에 모신 적이 있어 수월했지요. 이날 강연회 덕분에 데모에 들어갔을 때 3천여 명이 백양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라고 회고한 바 있다.

012 안성혁(초대회장), 오건환(2대 회장), 박영남(3대회장), 이영철(한연회 재건 주도), 김용서 어수영, 김만규, 오건환 등

013 1965년 8월 위수령이 난 후 서클 재등록 때 이영철 주도로 10월 한연회 재건. 이영철은 나중에 서울대, 고려대 등의 이념서클과 함께 ‘한국연구학생연맹’을 조직,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대학연합 학생운동의 기틀을 구축.

014 신동호,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5), 129-130쪽

01 불꽃회

02

03

04

05 1964. 1학기중

06 서울

07 비합법

08

09 “미제국주의가 조작하고 그 직접적인 번견으로 되어 있는 독재적 괴뢰정권의 지배하에서 또 미제군대가 직접조국의 남반부를 점령한 조건에서 인도의 ‘네루식 중립주의’ 나 ‘스칸디나비아식 개량복지주의’가 통할 수 없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중략).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대도를 전진하는 것만이 오직 애국적 혁명학생의 취할 길이다(요지)” (『서울신문』1964.7.18일자).

010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합법 마르크스주의 서클결성을 위해 김정강·김정남 등이 주도하여 1964년 전반기에 결성.

011 이들은 이론학습으로 「마르크스·레닌」 저작물을 포함, 스탈린, 모택동, 유소기 등 중국 혁명가들의 저작물, 이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섭렵하였다. 특히 중국의 이론에서 ‘민족해방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여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혁명단계를 ‘민족통일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한일회담 반대투쟁과 서울대 내 민비련과 연계하여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조직확대 측면에서 서울대 각 대학(법대, 공대, 상대, 사범대)과 연세대, 고려대 등에 유사조직 역량을 꾸렸으며, 지방으로도 조직역량을 확대, 김승균을 지방연결 총책임으로, 광주의 김시현, 부산의 손병선 등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였다(이상, 김정강 증언, 한국정신문화연구회편 참조)

012 김정강(서울대 정치학과), 김정남(서울대 정치학과), 김승균, 김시현, 손병선 등.

013 민족주의비교연구회

014 조선일보, ‘내무부 학생테모 배후 진상발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의 집결체 「불꽃회」서 조종, 주동은 金正剛’, 1964. 7. 19/조선일보, ‘金正剛등 23명 구속적부심기각,’ 1964. 8. 1/조선일보, ‘김정강등 구속기소’, 1964. 8. 1/조선일보, ‘불꽃회사건, 어제구형’ 1969. 1. 24/조선일보, ‘金正剛에 징역2년, 불꽃회 사건선고’, 1969. 1. 28/조선일보, ‘불꽃회사건, 항소를 기각’, 1965. 5. 22/김정강, ‘불꽃회의 결성과 활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59-89쪽/도진순·정창현, ‘1950-70년대 한국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역사와현실』 4호, 1990, 305-339쪽

01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02 범투위, 투쟁위

03

04 민정당, 삼민회 등

05 1964.3.9-

06

07 반합법

08 범야공동투쟁기구

09 구국선언문, 경고문

010 정부가 한일회담의 ‘3월타결, 5월조인’ 으로 조기타결방침을 세우자 민정당, 삼민회 등 야당은 3.6. ‘범야공동투쟁기구’ 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3.9. 투쟁위원회는 ‘구국선언문’ 과 '경고문 ‘을 채택하고, 야당의 총집결체인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를 확정함으로써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구국선언문에서 투쟁위는 한일회담 즉시 중지, 일본의 반성 촉구, 3천만의 생명선인 평화선 수호를 위해 온 국민이 쫓겨갈 것을 호소하였다.

011 3.15. 오후 2시 경남중학 교정에서 약 3만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대일굴욕외교반대 강연회’ 가 개최되었다. 같은 시간 목포에서도 한일회담 반대 유세가 시민 약 2천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3.19. 투쟁위의 지도위원장이며 민정당 대표최고위원인 윤보선은 “만일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고 한일회담을 기어코 조인,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구국운동에 앞장서겠다” 고 한일회담 조기타결반대 결의를 표명하였다. 3.15.-20.까지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반대대회를 계속하였다. 3.21. 2시 서울고등학교 교정에서 4만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원외투쟁의 마지막이 되는 ‘대일굴욕외교반대 강연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사들은 “단 3억불로 평화선을 팔 수 없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일협상은 일본의 경제식민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청구액 27억불 전관수역 40리를 내용으로 하는 야당측 대안을 받아들일 것” 을 주장했다. 유세후 학생들을 앞세운 청중들이 세종로 네거리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다. 한국 내의 투쟁위에 호응하여 ‘재일본한국청년동맹’ 과 ‘재일한국학생동맹’ 회원들은 동경에 있는 소방회관에서 “굴욕외교를 중지하라” 는 등 경고문을 채택하고 법적 지위 관철을 요구하였다.

3.26.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 서울시지부는 자민당사에서 대일굴욕외교반대궐기대회를 열고 한일회담의 중지와 대표단 소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궐기대회가 끝나자 거리로 나가 데모를 시작했으며, 김종필을 비롯한 정상배를 국외로 추방하라는 전단을 뿌렸다.

3.26. 삼민회 소속 김준연 의원은 “대일청구액 1억 3천만 불을 미리 받았다” 고 발설한 데 이어, 4.2. “박정희·김종필 라인이 일본으로부터 약 2천만 불의 선거자금을 받았다” 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4.3. 투쟁위원회는 “매국적 대일굴욕외교를 감행하고 있는 박정권은 애국적인 데모와 전국민의 여론을 묵살하고 철면피하게도 가면전술과 현혹전술을 써가면서 한일회담을 계속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앞으로 한층 더 단호한 행동으로 구국투쟁을 전개하겠다” 고 선언하였다.

012

013 대일굴욕외교 반대 원내투쟁위원회(민정당과 삼민회, 3.26.)

014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0, 92-96쪽, 98쪽 ; 「정치인들도 데모, 굴욕외교반대궐기대회를 마치고」 (『동아일보』 1964.3.26) ; 「야당원들 가두시위 궐기대회후 파고다공원서 해산」 (『서울신문』 1964.3.26) ;

01 통일혁명당

02 통혁당

03

04

05 1964.3.15.-1969.8.25(통혁당 당중앙위원회 결성)

06

07 비합법

08

09 통혁당은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수행,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제도 수립, 민족 재통일 성취"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목표로는 "첫째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철폐와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 둘째 파쇼독재체제의 일소와 사회 민주주의의 실현, 셋째 민주적 토지

개혁과 농어촌 빈곤 일소, 네째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실현, 다섯째 민주적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처지 개선, 여섯째 여성의 권익보장과 사회적지위 향상, 일곱째 민주적 민족문화 창달과 지식인의 생활보장, 여덟째 교육쇄신과 무료교육제.장학금제 실시, 아홉째 선진적인 의료보험제 실시와 무상치료제 실시, 열번째 자위적 민족군대 창설, 열한번째 자주외교 구현과 반제 평화애호국과의 교류, 열두번째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성취" 등의 사항을 들고 있다.

010 통혁당은 1968년 8월 24일 '통일혁명당간첩단사건'으로 발표되면서 처음 이름이 알려졌다. 북한은 통혁당 조직과정에 대해 김종태, 최영도, 김질락, 정태복, 이문규 등이 면밀한 준비에 기초해 1964년 3월 15일 서울에서 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성모임에서 창당준비선언문을 채택하고 당의 명칭을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라는 의미에서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창당준비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러 지역에 기층당조직들을 결성하고 당의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다진 결과 1969년 8월 25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결성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64년 3월 15일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김질락은 후에 통혁당이 창당된 것은 1965년 11월 말이라고 증언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반제 반봉건 반식민의 민주사회를 거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목적이며, 남한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하당조직이 불가피하다”(김질락, 72쪽)는 결론을 내리고 통일혁명당의 목적과 성격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김종태와 다른 지도간부들이 노동자계급과 농어민층을 주로 포섭하기로 하고, 이문규는 학사주점을 중심으로 청년 학생 지식인층을, 김질락은 『청맥』을 중심으로 언론계와 학계에 각각 침투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특히 군대조직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정과 역량에 따라 포섭하되 극히 신중을 기하기로 하고 조직형태에 있어서는 직선 및 단선의 형태를 취하는 동시에 점조직을 원칙으로 고수하도록 하였다(김질락, 76쪽). 이 증언은 서울시당 창당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통혁당 서울시위원회는 위원장 김종태를 중심으로 김질락·이문규를 비롯한 청년지식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산하조직으로 청년문화학협회·민족주의연구회·기독교청년경제복지회·신문화연구회·불교청년회·경우회·청맥회 등을 조직했다. 또 이 단체들을 지도하는 비합법적 통일전선체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을 결성하였다. 위원회의 기관지로는 합법적 월간지였던 <청맥>이 있었다. <청맥>의 주요 내용은 '반미·반독재를 선전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계몽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서울시위원회는 1968년 8월 24일 158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구속으로 해체되었다. 전남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최영도를 중심으로 노동자·농민·사업가를 대상으로 활동했으나 1968년 7월 20일 27명의 조직원이 체포됨으로써 와해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에 따르면 "김종태가 전후 4차례에 걸쳐 북괴 대남사업총국장인 허봉학으로부터 지령과 미화 7만 달러, 일화 50만 엔, 한화 2,350만 원의 공작금을 가지고 가칭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여 혁신계정당으로 위장, 합법화하여 반정부·반미 데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공격과 반정부적 소요를 유발시키려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통혁당이 주장하는 남한의 당면목표는 반봉건적인 사회체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 제도수립과 민족통일을 위한 이른바 민중민주주의혁명 성공에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혁당의 강령과 정책은 북한의 주장과 거의 같은 것으로 주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철폐하고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는 거점적인 공장과 농촌, 교육·문화·언론 부문, 국군 중하층 장교 속에서 수백 명의 당원 조직, 전라남도 위원회는 호남지방의 농민, 교육, 정계 인사 속에서, 경북위원회는 대구, 부산의 노동자 속에서 각각 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외에 1961년부터 남조선 해방전력당의 혁명가 그룹, 경북대학교 의학부 김대수 그룹, 김규남, 박대인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60여명 등 여러 그룹이 당건설에 참가하였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011 북한은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먼저 조직하고 후에 공격하라”는 원칙에 따라 각종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각계각층 대중 속에서 당의 중핵을 선발. ‘한일회담’에 반대한 1964.3.24 투쟁과 6.3투쟁,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한 1965.8월투쟁, 1966. 8월의 미·일수뇌방한반대투쟁, 1967.6.8부정선거 반대투쟁과 대통령취임 반대투쟁 등을 조직, 지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질락의 수기에 따르면 1966

년도 사업에 대한 총화에서 “조직에 있어서 학생조직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고대, 연대, 중대, 동대, 이대, 숙대 등 서울 시내 각 주요 대학에는 이미 조직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 만큼 민족주의단계의 교양이 끝난 포섭대상자들이 선정되어 있었고, 직업별로는 언론계, 학계, 방송국, 국회 등에 포섭대상자가 물색되고 있었다. 군대는 육사, 공사, 해사, 해병대, 공수단 등에 조직의 전초병이 수색전을 펴고 있었다. 사회종교단체로는 CCC, 불교청년회, 경우회, 동학연구회, 새문화연구회, 60년대학사회, 청맥회 등에 조직성원들이 투하되고 있었다. 이미 조직된 조직체 가운데 이날 보고되지 않은 조직은 김종태가 직접 지도하는 노동자, 농민조직과 각 지역별 조직뿐이었다”고 한다(138쪽). 또한 사업방향으로는 “조직면에서 우선 학생조직은 조속한 시일내에 미조직된 중요 대학에 조직을 포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각 대학별로 소조를 조직완료하고 동아, 조선, 한국, 경향, 중앙 등 5개신문사에 조직을 침투시킨다. 군대조직에 대해서는 점조직 형태를 고수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선, 단선으로 한다. 아울러 조직성원 전원에 대한 사상교양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140쪽).

당기관지 「혁명전선」(1968.3. 창간, 비합법신문)은 당내 교육지였고, 「청맥」(1964.8. 창간, 합법 월간지)은 대중 계몽지로 1967.6월호까지 약 45만 4천부 발행되었고, 1972년 9월 비합법 계간지로 복간되었다고 한다.

012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최영도, 정태목

013 한국민족민주전선

014 대동편집부 엮음, 『통혁명당』-역사·성격·투쟁·문헌, 대동, 1989, 73-77쪽/ '김질락의 수기' 편집부, 『어느 지식인의 죽음』 1991, 행림./中央情報部 編, 『북한의 대남공작사』 1, 2권/편집부 편, 『통일혁명당』, 나라사랑/조희연, 「전후 한국사회운동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제4호5/편집부 편, 『공안사건 기록』 세계/유영구, 「통일혁명당 내막」 『월간중앙』 1992년 1월호, 2월호

◆ 1967년 4월 방북 시 이문규의 정세보고 내용

“오늘날 남조선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불법 강점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계급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정세는 점차 제국주의의 퇴조 내지는 몰락과정에 있음에 비추어, 남조선의 혁명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민주적인 자주통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의 주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반제, 반봉건, 반식민주의의 투쟁을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고, 나아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조선혁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분석, 요해하고 혁명의 성태를 정확히 타산하여 부정적인 면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켜 역량을 총화하며 단 한번밖에 없는 혁명전야를 맞이하기 위해 견결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자연 발생적인 투쟁이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은 단련되고 훈련된 지도핵심에 의하여 지도되는 지하당조직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장기적이고 간고하며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철통같은 지하당조직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지하당 조직은 엄격한 조직생활과 현실투쟁을 통하여 당에서 검열받은 자로서 물에서는 고기와 같이 균중공작을 능소능대하게 전개하고 당의 규율을 생명과 같이 지키며 혁명의식이 투철한 직업적 혁명가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지도핵심에 의하여 훈련되고 교양된 당원은 당의 기본 전사요, 기본투사로서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당 규율을 엄수하며, 당사업을 정확히 인식 요해하고, 소조활동을 통하여 당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지하당은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합법, 비합법, 반합법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지하당임을 자처하고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각계각층에 대한 균중공작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혁명의 특수성을 정확히 분석, 요해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특수성을 정확히 분석, 요해

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우리당의 주변에 견결히 묶어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군중공작에 있어서는 혁명의 골간이며 주도적이고 선진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을 우리당의 주력부대로 삼는 동시에 남조선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계급을 그 동맹자로 결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당은 남조선의 특수성에 비추어 양심적이고 선진적인 청년, 학생, 지식인을 당 주변에 묶어 세워 이들을 혁명적 인텔리로 양성하는 동시에 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혁명가임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남조선혁명을 하루 빨리 달성하고 당의 지도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여러 혁명 선배들을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는 동시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이렇게 평양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적지나 다름없는 남조선에서 그 누구의 지시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무한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남조선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야말로 우리 자신들보다 몇 배나 훌륭한 혁명가임을 나는 여러 혁명선배들 앞에 감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 (『어느 지식인의 죽음』, 237-239쪽)

◆ 1967년 4월 방북 시 김질락의 당사업 보고내용

“우리는 많은 당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가 맡은 사업은 『청맥』발간 사업입니다. 우리 통일혁명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당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청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맥』은 첫째로 선전, 선동의 유일한 무기로서 민족주체의식의 제고와 반미사상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이며, 둘째로 『청맥』은 그 주변에 많은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청년, 학생, 지식인들을 묶어 세우는 구심력이 되고 있으며, 세째로 당내의 지도적 핵심을 발굴하여 당의 전위적 인물을 포섭, 교야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청맥』은 민심의 방향을 쉽게 포착할 수 있고 여론조작에 재빨리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맥』은 창간 당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우리들의 의욕과 계획을 포기해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나는 『청맥』을 책임맡은 사람으로서 청맥 폐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선전 선동조 좋지만 청맥 때문에 정간은폐의 원칙이 파기되고 조직이 위협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식인의 죽음』, 240-241쪽)

01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

02

03

04

05 1964.5.16. -5.20.

06 서울

07 반합법

08 각 대학의 한일굴욕회담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및 투쟁위 소속 학생들의 연합 조직.

09

010 1964.5.16. 오후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등 5개 학교 투위대표가 모여 5.20장례식의 준비책과 집행책을 정했다. 서울대의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송철원 최혜성은 각자 대회의 준비에서 한 부분씩을 맡았다. 집행책으로는 동국대 장장순이 대회장을 맡고, 성균관대 김광렬이 민생고 성토문 낭독을 맡았다. 경희대의 이재우는 5.16 성토문을 건국대의 김영목은 굴욕회담 성토문을, 서울법대의 정성철은 학원사찰 성토문을 각각 낭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하는 5.20 민족적 민주주의장례식에 대해 각 대학 학생회는 반대입장을 취했다.

011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관하였다. 5.20시위로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등 13명이 지명수배

되었다. 이후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다음해인 1965.4.7. 평화선사수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012 김종대 현승일 김도현 송철원 최혜성 장장순 김광렬 이재우 김영목 정성철

013 각 대학 한·일골육의담반대투쟁위원회, 학생평화선사수투쟁위원회(1965)

014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417~419쪽.

01 난국타개전국학생대책위원회

02

03

04 한국학생총연합회(한학련)

05 1964.5.25.-

06

07 반합법

08 학생연합단체

09

010 한국학생총연합회(한학련)를 모체로 한 조직이다. 한학련은 1963년 11월 20일 서울시내 32개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모여 교내 학생운동에서 교외 학생운동으로 번져나가자는 이념으로 조직체를 갖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되었다. 한학련은 대중집회보다 회장단의 집단행동으로 정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사를 표명하는 활동을 주로 전개함으로써 학생연합단체로서의 성격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의 첫 집단행동은 3월 25일 중앙청을 방문하여 정부측 입장을 요구한 것이었다. 4월에는 청와대 면담에서 한·일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난국타개학생대책위원회는 미발족된 한학련의 후신이었다.

011 난국타개학생대책위원회는 5.25. 난국타개학생총궐기대회를 주도함으로써 6.3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012 서울대 정정길, 고려대 구자신 김중석, 연세대 안성혁, 성균관대 송영삼, 경희대 이건환, 동국대 김실, 한양대 이정재, 이화여대 김행자, 숙명여대 이경숙

013

014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420~421쪽.

01 한일협정 비준반대 각 대학연합체

02 한비연

03

04 각 대학 학생회

05 1965.6.30-8.19.

06

07 반합법

08 전국각대학 연합체

09

010 1965.6.22. 일본에서 한·일협정이 정조인되자 각 대학에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졌고 고등학교마저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동안 한·일협정 반대를 위해 단식투쟁을 해온 서울법대생들은 한·일협정이 조인되자 200시간 단식기록을 남기고 일단 해산했다. 이어서 한·일협정 정조인을 규탄하는 데모와 단식이 6.23. 이화여대, 6.24. 연세대를 필두로 하여 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 숙명여대 수도사대 경기대 덕성여대로 이어지며 투쟁이 계속되었다. 한편 이화여대 지휘부 진민자(총회장), 신춘자(법대회장, 현재 이름 신인령), 차명희(법과학회장)는 단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에 고심하던 중, 구속중이던 서울법대 학생회장 장명봉이 6월 말에 보석으로 출감하여 이화여대 단식투쟁장을 격려차 방문하던 날 각 대학연합으로 비준반대 심포지엄을 6.30. 대성빌딩에서 개최하기로 제안·합의했다.

이 모임을 계기로 한비연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011 1965.6.30. 오후 3시 이화여대 주최 심포지엄에서 시내 6개대학 대표들이 ‘한·일협정 비준 후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각 대학 대표자들은 각 대학연합체 제1차 회의를 갖고 7.13. 연세대 의대에서 연합체 발족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1965.7.1. 연대의대 학생회장 김영수가 이끄는 단식투위들이 일장기와 일본상품 소각식을 가졌고, 이화여대 진민자와 신춘자는 108시간의 단식투쟁을 끝맺고 한·일협정 비준반대 가두 서명운동을 벌였다. 건국대학교는 문영재 중심의 200여 명의 단식투쟁위가 단식을 종결하고 일장기 및 한·일협정 정조인서 소각과 밀수범 친일 아부 자본가 처단 화형식을 갖고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1965.7.13. 오후 3시 한비연이 정식 발족되었다. 여기서 현재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 6개 대학 모임을 전국대학으로 확산시켜 명칭을 ‘한·일협정 비준반대 각 대학연합체’로 결정하였으며, 제1차 투쟁일정을 7.15. 대성빌딩에서 한·일협정 비준반대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965.7.15. 11시 제1차 한·일협정 비준반대궐기대회를 대성빌딩 강당에서 열었다. 1965.7.18. 오후 1시 연대 의과대 학생회의실에서 한비연 제3차회의를 갖고 보다 적극적인 투쟁방법을 논의하였다. 1965.7.21. 오전 10시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서신을 전달하였다.

1965.7.25. 오후 2시 서울문리대 교정에서 각 단체별 연합회의가 열렸다. 당시 투쟁조직은 63사태 때 구속자로 만들어진 63동지회와 서울문리대 출신의 모임인 민족수호학사총연맹, 그리고 한비연 뿐이었고 투쟁은 언론을 통한 성명전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63동지회와 학사총연맹의 회원들은 거의 다 졸업하였거나 수배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행동적 투쟁은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김도현, 최혜성은 개학 후 좀더 효과적인 투쟁의 결과를 위하여 3개 모임의 회동을 제의하였다. 이날 토의결과 비준반대집회를 공동 개최하고 한비연이 본격적 투쟁을 시작했을 때 63동지회와 민주수호학사총연맹이 대학별로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1965.7.26. 한비연은 박순천 총재 진영이 강력한 투쟁으로 선회하여 야당과 국민이 공동투쟁할 때 비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박순천 총재를 개별 설득할 것을 합의하고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였다. 서울법대의 장명봉, 이대의 진민자, 신춘자, 연대의 김영수, 동국대의 권석충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후 1시 30분경 합정동 박순천의 집에 도착하여 박순천 총재와 김대중 민주당 대변인을 만나 면담하는 자리에서 야당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생명을 건 투쟁대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대중 의원은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일협정 반대도 국회 내에서 여당을 타협적으로 설득하고 저지하여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65.7.29. 오후 3시 연대 뒷산에서 한비연 제4차 회의를 가졌다. 그간 6개 대학으로 투쟁해왔던 한비연이 건국대와 경희대, 외대의 참여로 9개 대학으로 확장되었다. 후에 중앙대도 참여하였다. 1965.8.5. 오후 4시 연대 뒷산에서 한비연 제5차 회의를 갖고 한·일협정 비준반대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8.7. 국립극장 노상 성토대회를 준비하였으나 정보의 사전 누출로 실패하자 7명씩 조를 짜서 종로, 청계천, 을지로로 분산되어 플래카드를 들고 다시 나타나 달리는 일명 신출귀몰작전을 감행했다. 8.10. 오전 10시 동국대 교정에서 한비연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서 권석충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장명봉은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8.12. 오후 3시 서울문리대 교정에서 한비연 주최로 매국국회 해산 촉구대회 겸 제3차 성토대회를 가졌다. 국회비준을 이틀 앞둔 12일은 각 대학연합체의 마지막 투쟁의 날이 되었다.

1965.8.14. 밤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이 통과되자 한비연을 비롯한 투위모임에서 무효화투쟁을 위하여 대책에 분주하였다. 8.15. 각 대학 대표들은 경기도 송추 유원지에서 한비연 제6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일부 대표들이 효과적 투쟁을 위해 최루탄에 맞설 수 있는 공격무기(사제폭탄; 화염병)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다수의 각 대학 대표들은 이러한 공격무기가 순수한 학생들의 투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훗날 각 대학 대표들이 검거 당할 때 이 사제폭탄 혐의를 미끼로 내란선동죄와 반공법을 적용받았다.

1965.8.17. 서울법대 학생회는 한·일협정 비준무효 선언식을 갖고 비준무효화와 폐기를 위한 강력한

실력행사를 선언한 데 이어 다음날인 18일 한일협정 비준 성토회를 열었다. 8.19. 한비연은 당시 한국에 상륙하여 급성장하는 일본 사이버종교 참가학회 본부를 기습할 특공대를 조직하고, 명칭을 ‘무궁화수호대학생총연합회’로 위장하여 호소문을 준비하고 창신동 참가학회를 기습하였다. 호소문의 요지는 “과거 일진회와 흡사한 저들의 망국적 소행은 우리 민족의 민족적 양심으로 물리쳐 그 화를 끼치지 않도록 하자”였다.

012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데모가 각 대학에서 일제히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비연 대표들은 큰 수난을 겪게 되었다. 동국대 권석충은 반공법, 이대의 진민자, 연대의 홍현삼량, 서울대의 진치남, 경희대의 송창달은 내란선동죄로 구속되었다. 서울법대의 장명봉, 김우기, 외대의 백낙환, 경희대의 김경남, 건대의 문영재, 이대의 신춘자는 도피했다. 특히 장명봉은 1학기중인 6.12. 시위주동자로 구속·수감된 후 보석으로 출감한 상황에서 한비연 활동을 계속해온 관결 사전 구속영장이 나와 있었다.

한비연 대표들은 거의 전원이 학교에서 제적 처분의 중징계를 당하였다. 그후 한비연 대표들은 제적학생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파면 및 자퇴교수의 복직을 위한 운동도 계속 전개하였다.

013 무궁화수호대학생총연합회

014 63동지회 지음, 『63학생운동사』역사비평사 2001, 422~434쪽.

01 조국수호국민협의회

02 조수협

03

04

05 1965.7.31.-

06 서울

07 반합법

08 13개 단체 협의체

09

010 공화당이 단독으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전격 발의하자 4월혁명동지회, 천도교 구과교인, 재경유립단, 재교수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한·일회담 비준반대성명을 냈고, 교수단 등 13개 단체는 연합하여 회담비준저지에 나서기로 하였다. 7월 31일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위한 연대투쟁 조직으로서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단, 예비역 장성, 종교인, 문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하였다.

011 7월 31일 대성빌딩에서 결성대회를 가졌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는 결성대회 선언문을 통해 “조인된 한일협약은 일본에게 경제침략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우리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고 비난하고, ①국회비준저지와 협정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②정부는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 협약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재출발의 자세를 취하라, ③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를 초월하여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④미국은 극동정책에 있어 다시금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권한다는 등 4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8월 11일 한·일협정 비준반대 범국민투쟁기구인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와 ‘조국수호국민협의회’는 ‘최대최선의 연합전선’을 펴기로 합의하고 비준저지대책을 위한 8인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11시 13분, 한·일협정 비준안이 공화당의 ‘날치기 방식’에 의해 국회 한일협정 비준동의안 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8월 14일 공화당만의 일당국회는 일사천리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심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일당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지만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계속되자 정부는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경찰은 8.20. 제본중이던 『사상계』 9월호에 삽입된 조국수호국민협의회 한일협정 반대광고 일체를 압수했다. 팜플렛은 표지에 데모 학생들의 사진이 실려 있고 “위헌 매국의 한일협정은 왜 파기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15개 항목이 적혀있었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조국수호국민협의회 사

무실을 수색, 동 팜플렛 2천 7백여매을 압수했다.

8월 23일 내무부는 조국수호국민협의회를 비롯한 8개단체를 등록되지 않은 불법단체로 규정, 관계부처에 의법조처할 것을 요청했다. 내무부에서 발표한 8개단체는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위, 조국수호국민협의회, 비준반대 서명교수단, 무궁화애호총연합체, 6·3동지회, 한국학사청년연맹, 초급대학 학생연합회, 범태평양동지회 등이다.

8월 25일 김홍일 예비역 윤군중장 등 퇴역장성 11명은 “정부가 야당 및 학생의 비준무효화투쟁을 군대까지 동원하여 강원의 힘으로 폭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구성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8월 28일 김홍일 박병권 박원빈 김재춘 등 조국수호협의회 회원 4명이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이적행위자라고 비난했다는 혐의로 29일 전격 구속되었다. 또한 9월 8일에는 이들 네 명을 내란선동으로 추가 기소했다. 즉 이들이 한일협정비준반대 학생 데모를 선동했고, 국치일인 8월 29일을 기해 정권타도를 기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학생데모를 격동시켜 난동화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수호협의회가 8.20 이후 모든 데모의 모체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012 이들은 각계의 대표로 21명의 집행위원을 뽑았는데, 학계에서는 권오돈 조운제 정석해, 독립운동가는 김홍일 신봉재, 기독교에서는 서명호 박윤영, 경제인으로는 유창순 민인은, 문학인으로는 양주동 박두진, 법조인으로는 이인 김춘봉, 천도교에서는 박연수, 여성계로는 최은희, 유림은 오양, 일반사회인은 함석헌, 청년으로는 하은철 정원찬, 예비역 장성으로는 박병권 손원일 박원빈 등이었다.

013

014 ‘한일협정비준안통과에 항의, 의원직 총사퇴에 즈음한 민중당 선언(1965.8.12.)’은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월간중앙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210~211쪽 ; 6·3동지회 지음, 앞의 책, 146~147쪽 ; 「팜플렛 4만장 압수」(『서울신문』1965.8.21) ; 「비준반대 등 8개단체 의법조처를 요청」(『동아일보』1965.8.24) ; 「퇴역장성 4명 구속기소」(『서울신문』1965.8.30) ; 「김홍일씨 등 4명 추가기소 내란선동으로」(『동아일보』1965.9.8).

01 고려대 민족사상연구회

02 민사회

03

04

05

06 서울

07 반합법

08

09

010 민사회는 4·19에 앞장섰던 김경탁 교수를 지도교수로 한 고려대 이념서클의 원조격이다. 사조회의 후신으로 ‘고대 민비연’으로 통하기도 했다.

011 민사회는 고려대 6·3지도부 역할을 하였다. 6·3항쟁 때 전면에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비연과 같은 가혹한 탄압은 모면했고, 민사회 회원으로는 유일하게 김병길이 구속되었다. 민사회원 중 「고대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이태영은 학내 여론조성과 선언문 원고작성 등으로 6·3항쟁지도부를 후방에서 지원했다.

012 김원국, 윤성천, 신광옥, 이진강, 이태영 등 법대생 중심

013

014 013 신동호,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1995), 115-117쪽

01 구국항쟁전국대학생총연맹

02 구국연맹

03

04

05

06

07 반합법

08 전국대학교 정외과 회장단 모임

09

010 고려대 박정훈 주도로 전국대학교 정외과 회장단 모임을 기반으로 결성하였다. 원래 구국연맹의 명칭은 ‘(반식민지)국구...’ 이었는데 이념적인 색채를 풍기는 ‘반식민’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대중조직으로 탈색시킨 것도 박정훈이었다.

011 구국연맹은 서울대 김중태를 중심으로 한 대일굴욕외교반대학생총연합회와 전국 34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인 한학련 등과 함께 63정국을 이끈 3대 전국학생조직이었다. 1964년 고려대 5.25난국타개궐기대회, 6.2시위를 주도했다.

012 서울대 권근술(정치학과) 김명현(외교학과) 연세대 이염, 고려대 박정훈, 성균관대 정일룡, 동국대 정기용, 건국대 방상래 등

013

014 신동호, 『인물로 보는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1995), 112-114쪽

01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02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

03

04

05 1969.7.17-1969.11.11

06

07 반합법

08 회장, 고문, 상임 운영회의(30명 이내), 각 시도지부

09

010 1969. 2.3. 정정법에 묶여 정치활동을 제한받았던 해금인사인 김영선·이철승·김상돈·김선태·윤길중·조중서 등은 서울 시내 「금문도」 식당에 모여 「3선개헌」 반대국민 투쟁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각계의 민주세력을 총동원하여 공화당 의회 추진되고있는 비민주적인 개헌기도를 과감히 분쇄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을 냈다. 그리하여 정정법 해금자가 주동이 된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발기준비위원회는 2월달 내로 신민당을 비롯한 정계·학계·종교계·문화계 등 인사들이 참석하게되는 발기대회를 열어 범국민운동체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철승은 개헌반대투쟁에 있어 신민당과의 제휴문제에 언급, “신민당은 야당의 제1선에서 활약할 뿐더러 개헌반대 국민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으므로 발기인대회에 신민당이 참석하도록 교섭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신민당과 정정법 만기 해금 인사들은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의 개헌발언을 계기로 개헌저지운동을 본격화 하였다. 유진오 신민당총재는 5월 8일 “공화당이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평계로 개헌을 음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3선개헌은 박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달린 만큼 박대통령은 집권당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선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 “여하한 형태의 개헌도 신민당은 반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신민당의원들의 개헌저지투쟁을 다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신민당은 또 오는 21일 전당대회에서 개헌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 지방유세를 벌일 것이라고 송원영 대변인이 말하였다. 한편 개헌저지 범국민투위의 결성을 추진해온 이철승은 이날 “공화당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신민당 전당대회가 끝나

는대로 투위의 전국적인 조직을 서두르고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철승은 “공화당이 개헌을 발의할 때에 조직에 착수하면 늦을 것이므로 5월과 6월중에 각시·군별 조직으로 개헌저지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신민당과 정쟁법 만기인사들로 구성될 ‘3선개헌저지범국민투위 준비주비위원회’는 곧 개헌저지대책을 협의하여 만든 조직체이다.

1969년 7월 17일 오전 서울 대성빌딩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위원장에 김재준 목사(전한국신학대학장)를 선출하고 고문으로 윤보선·유진오·함석헌·이재학·장택상·박순천·이희승·김상호·정화운·임창영 등을 추대하였다. 3백 29명의 발기인중 2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27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선언문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행동강령 등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은 “주권자인 국민이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에 복종한다면 자유민주 한국의 임종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국민은 헌정수호대열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또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3선개헌을 강행할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는 파탄되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계속 시도한다면 승공노선에 지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취임 당시에 현행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정신으로 돌아가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범국민투위는 상설기구로 운영회의(30명 이내)를 두며 각 시도지부도 설치하였다.

010

011 주요 활동은 개헌반대 지방 유세를 다녔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선개헌 반대투위는 전국 각지에서 개헌 반대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여 개헌의 부당함을 알렸다. 개헌이 점차 현실로 되었던 8월 17일 이리, 김제, 정읍 세곳에서 개헌반대시국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유진오 신민당총재는 “경제건설은 무한한 것이고 소련과 중공이 있는 한 침략의 위협은 상존하는 것이므로 경제건설이나 국방이 3선개헌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장기집권은 어떤 이유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윤길중은 “3선개헌은 4·19혁명에 대한 도전이다. 3선개헌으로 역사를 역행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고, 김영선은 “6천억원의 외채로 경제를 파탄 직전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경제건설을 위해 3선개헌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상돈은 “헌정권의 부정부패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격심하다. 부정부패의 온상을 뿌리뽑기 위해서도 정권교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송방용은 “생산비도 안되는 곡가로 농촌은 파탄상태다. 농촌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3선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며 개헌을 비판하였다.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위는 8월 24일 수원·경주에서, 25일 부여에서 각각 개헌반대 유세를 벌였다. 유진오 신민당 총재는 수원 세류국민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헌정권은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론을 분열시켰을 뿐더러 부정부패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정권이 바뀌는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3선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외국차관을 들여오면서 2할씩을 헌정권에 바쳐야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처음으로 유세에 나선 투위의 김선대는 “박대통령 주변의 일부 부패 특권층이 그들의 부패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3선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구 수성천변에서 개헌반대강연회를 가졌다. 연사로 나온 유진오 신민당총재는 “공화당이 개헌안을 불법으로 이송, 공고한 것이나 국회 표결에서 무더기로 일괄 투표하려는 것은 3선개헌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과 표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유진산 이재형 김영삼 김대중 김수환 서민호 이철승 윤길중 양일동 등의 연사들은 “개헌안이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존망의 위기를 가져오며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 개헌에 반대할 것을 호소하였다. 개헌반대투위는 9월 3일 하오 대전 천변에서 개헌대강연회를 열었다. 유진오 신민당총재는 강연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3선개헌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개헌자금을 뿌리고 있으며 이 돈은 외국차관에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연설에 나선 신민당의 유진산 이재형 김영삼 김대중, 투위의 서민호 김영선 이철승 등도 3선개헌은 이 나라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며 정치적인 불행과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월 12일엔 서울종로구 종로1가 서울빌딩 308호실에서 2백 여명의 투쟁위원이 모여 3선개헌반대 성토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 향심의 불같은 공동지표를 쟁취하기 위해 3천만 민중의 동력을 모아 결연히 투쟁하자”는 내용의 궐기문을 낭독하고 인쇄된 궐

기문 5백 여장을 3층에서 종로거리로 뿌렸다. 성토대회를 마친 위원들은 ‘3선개헌반대’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에 나서려다 대기 중이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발기위원 손동근(36) 등 4명을 연행하였다. 또 서울빌딩 주위에는 전 서울시장 김상돈과 함석헌 등이 서성대다가 경찰이 ‘다치실 염려가 있으니 모셔다 드리겠다’ 면서 경찰 「세단」에 태우려다가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되자 투위는 강력하게 이를 비난하며 투쟁을 선포하였다. 9월 16일 김재준 위원장은 “개헌안은 국회의 문회 공고도 없이 의사당 이외의 비밀장소에서 공휴일 심야에 일부 의원들의 사적인 밀회에서 처리된 것이므로 국정의결사항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국민주권의 수호와 신장을 위해 금후 독재정치타도운동에 전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012 김재준 목사, 함석헌, 장준하, 유진오, 이철승, 김영삼, 김대중, 김상돈. 발기인에는 이내린·김향봉(법개)·설창수·오영진·이상철·사준(문화계)·이동화·정화운(혁신계)·임창영·(재미) 등도 포함되었다.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재열·조한백·심일동·김의택·고흥문·김영삼·김재광·김대중·정현규·김원만·장후하·김영선·이철승·윤길중·조개현·황병호·계복정·이내린·김후변·최용한·김철·이성열·이기택·박정열·이영선 이동화·이상훈.

013

014 『중앙일보』 1969.2.3(1) / 1969.5.8(1),1969.7.17(1) / 1969.8.18(1) / 1969.8.25.(1) / 1969.8.30(1) / 1969.9.16(1)

【1954-1969년시기 민주화운동 관련 일지】

<1954>

- 3.24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대회 소집준비위원회와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전국중앙연맹체를 공동 조직할 것에 합의.
- 3.31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대회 소집준비위원회와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가 두 파의 합류를 위한 기술적 문제 토의 위한 회합.
- 4.1 서울 문화관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중앙연맹 결성 대회 개최.
- 5.27 전국 미군종업원노조가 120%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는 쟁의제기.
- 5.28 미군노조, 최후교섭에서 8월 5일 기한으로 요구조건 수락할 것을 최후 통고.
- 6.30 철도노련 제7회 전국대의원대회개최, 집행부조직개편.
- 7.20 자유노련 산하 하역노조, 임금인상을 위한 노조측의 쟁의발생 신고.
- 8.1 미군노조, 파업 돌입.
- 8.2 금련(金聯)측이 하역노조측의 요구에 동의, 사후처리를 위한 3주간의 냉각기간 설정.
- 8.10 미군노조, 파업 정상화했으나 미군측에 재교섭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48시간 재파업 돌입.
- 8.19 조선전업노조가 쟁의 제기.
- 8.28 서울 버스노조분회대표자회의, 8시간 노동제 확립 등의 요구조건관철 요구, 파업 결의.
- 8.30 서울 자동차사업조합측은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교통부, 사회부, 서울시경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동을 하려 한다고 그 제지를 호소.
- 8.31 하역노조, 금련측이 임금인상을 실행하지 않아 노조측에서 실효행사돌입하자 사회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개최, 직권조정예 의해 금련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락하는데 합의하여 쟁의가 일단락 됨
- 9.1 조선전업,보사부의 조정으로 해결안 제시.
서울자동차노조, 서울시 당국에 쟁의행위의 단행을 사전 통보하고 9월 1일 오전 6시를 기해 산하조합원들에게 파업단행을 지시, 같은 날 노조측은 서울시노동위원회의 조정통보를 받고, 조합원들의 행동통일의 어려움을 감안, 오후 7시,파업의 일단 중지를 결정.
- 9.6 국회, 헌법개정 초안위원회가 작성한 개헌안 국회제출됨.
- 9.8 정부, 정부, 개헌안 공고.
- 9.10 미군노조, 미극동사령부로부터 부분임금인상을 미본토환으로 지급할 것임을 통보 받음.
- 9.29 조선전업노조측은 보사부의 조정안을 수용, 쟁의취하.
- 9.30 하역노조, 금련의 합의이행사항 불이행으로 노조의 48시간 시한부 재파업 단행.
자유노련 산하 노무자 17.000여명이 금융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제 48시간 총파업에 돌입.
- 10.10 대구 내외방직 노조는 김증도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 임금 60%인상 관철 투쟁 결의.
- 10.22 대구 내외방직 노조, 사측의 교섭거부로, 노조측이 정식 쟁의 제기.
- 10.30 대구 내외방직 노조,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에서 사무국장을 파견, 알선으로 노임 40%인상에 합의, 쟁의 일단락
- 11.7 대구 내외방직 사장 이순희(李淳熙)가 지난 쟁의에 대한 보복조치로 노조위원장 김증도를 해고 함.
- 11.11 대구 내외방직 노조는 경상북도 사회과에 쟁의신고를 하고 회사측에 노조위원장의 복직요구,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단행 결의 통보.
- 11.18 정부, 개헌안 국회본회의 상정.
- 11.20 미군노조, 미극동사령부측의 미본토환지급 거부로 다시 쟁의발생.
- 11.27 개헌안 국회표결 결과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됨.
- 11.28 이기붕 국회의장, 의원총회 소집, 부결안 가결로 번복결의.

- 11.29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총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단독의 가결통과. 이른바 4사5입 개헌파동.
- 12.1 미군노조, 140% 임금인상 요구했으나 거부. 미결상태로 남음.
- 12.4 대구 내외방직 노조,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일체 거부함으로써 노조가 파업을 결행.
- 12.8 대구 내외방직 노조, 사측이 노조위원장 김증도의 해고를 철회하여 노동자들도 파업을 종결.
- 12.20 자유노련, 금융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개항 요구조건 제시.
- 12.27 철도노련, 임금인상골자 요구조건제시, 쟁의제기.

<1955>

- 1.26 철도노조연맹, 노조의 요구조건 70%를 수락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대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쟁의 해결.
- 2.10 만20세 이상 학생에 병역 소집 실시
- 2.25 남선전기노동조합 결성대회 거행. 서울시 당국에 노동조합 건립을 신고하여 설립 신고증까지 받음.(1953년 3월부터 노조결성준비위를 구성하여 노조결성을 추진하여왔으나 회사측의 방해공작으로 지연되어왔음)
- 2.28 남선전기노동조합, 박만서사장의 신현수, 용희창, 김경호, 김진규 등 4명의 면직처분에 대해 「①노동조합 결성에 앞장섰던 조합원 4명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 할 것과 ②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과 방해로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 쟁의를 제기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쟁의 발생을 보고,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옹호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
- 3.15 「동아일보」 1면에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중」의 제목으로 誤植기사 실림.
- 3.17 공보실, 「동아일보」 무기정간처분.
- 3.20 동아일보 정리부장 권오철과 문선공 원동찬을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입건. 이른바, 동아일보 오식(誤植) 필화사건.
- 4.1 제8차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서울 청운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48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종래 최고위원으로 있던 김주홍, 김두한 등이 제외되고, 최고위원으로 전업노련 위원장 정대천, 광산노련위원장 이준수, 철도노련 감찰위원장이며 서울철도국노조 위원장인 김용학이 각각 선출, 사무총장에는 섬유노련 위원장 김순태가 선출.
문교부, 각 고등학교에 주2시간 군사교련 실시를 지시
- 4.14. 철도노련 부위원장 이강연을 비롯한 24명, 대한노총산하노조위원장들은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에 투표권 행사에 부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전국대의원대회의 재소집을 요구.(정대천 수락, 이준수·김용학 반대, 중앙노동위원회 8차대회 무효로 선언.)
- 4.16 「동아일보」 무기정간 해제
- 4.21 자동차 노조, 자동차사업조합측에서 버스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① 8시간 노동제를 보장하여 2부 교대제를 실시할 것 ②버스 노동자에게 월급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1일 메이데이를 기해 일제히 파업하겠다」고 예고.
- 4.26 자동차노조, 노사쌍방에 의하여 단체협약 초안이 합의되어 쟁의 일단락.
- 6.30 국회 본회의는 금연산하 하역노임이 외자청소관 하역노임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외자청 소관 하역노임에 미달하는 차액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의서를 정부에 이송.
- 7.5 육군특무부대에 의해 「구국동치청년회」 소속 회원 9명 체포.
- 7.8 국회 제20회 제72차 본회의, 「①남선전기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 간섭하지 않을 것은 물론 조합운동에 제반 편의를 제공할 것 ②남선전기노동조합은 신현수, 김경호, 김진규, 용희창 4명에 대한 면직발령을 취소하고 2월10일 현재로 원상복귀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에 이송.

- 8.18 남선전기노동조합, 쟁의 조정안 결정. 「①이 쟁의는 평화적 해결을 기할 것 ②회사는 4명의 노조원에 대한 면직 조치를 취소하고 8월 26일부로 전근 사령을 교부할 것 ③ 노조 임원은 사규를 존중할 것」(노조측은 수락, 회사측은 무시)
- 9.11 남선전기노동조합, 임금인상, 체불노임청산, 단체협약체결 등을 요구하며, 다시 쟁의를 제기.
500대 1환율유지를 위해서 대통령 긴급조치령으로 모든 관영요금을 위시하여 물가를 억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으며, 석탄공사측에서 임금인상이 실현될 때까지 출근비란 명목으로 종업원1인당 백미 1승반씩 무상으로 지급할 것과 미청산노임을 즉시 지불할 것을 약속하므로 노동조합측은 쟁의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음.
- 9.13 「대구매일신문」에 사설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실림.
- 9.14 국민회 경북지부와 자유당 경북 감찰부장 등 약 20여명의 청년들이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사건 발생.
- 9.15 대한노총전국대의원대회 재개, 401명의 전국대의원 중 355명의 대위원이 참석. : 최고임원에 대한 재선거, 최고위원에는 정대천, 김주홍, 이준수가 선출. 사무총장에는 청도노련부위원장인 이강연이 선임.
조봉암, 서상일, 장건상 등 20여명이 회합하여 광릉에서 혁신계 통합 확인.
- 9.17 대구매일신문,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사설 집필한 사설을 집필한 최석채 주필을 전격 구속(「대구매일」필화사건).
- 10.14 최석채씨 불구속 기소.
- 10.24 조봉암, 대관원 회합을 하여 신당 조직에 있어서의 3원칙을 수립함과 동시에 신당조직을 위한 가칭 진보당 발기준비 준비위원회 결성. 「①혁신세력의 규합 ②정치의 혁신 ③계획성 있는 경제정책의 구현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하의 평화적 남북통일」 표방.
- 10.27 대한노총 8차대회무효화에 앞장섰고 9월1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게된 이상연 타살에 의한 변시체로 발견.
- 11.9 대한노총, 제1차전국집행위원회에서 남선전기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전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남선전기노동조합측이 국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12월15일까지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조직력을 동원 실력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
- 12.9 남전 박만서 사장, 상공부장관의 입회하에 경전노조위원장이며 대한노총 최고위원인 정대천과 남선전기노조 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
- 12.22 조봉암 서상일 외 9명의 대표명의로 가칭 진보당 발기취지 발표.
- 12.25 남선전기노조, 합의 조건 통고 「①노동조합을 인정하되 지방사업소에서부터 상향식 조직을 새로이 하여 정상적인 남선노조를 결성하라 ②회사측으로 전향했던 정한기와 합작하라 ③파면은 취소하고 원상복귀시키되 만일 그들이 조합임원으로 피선 안 될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임지로 부임하라」는 것.

<1956>

- 1.5 대구 대한방직 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어용 노조 간부들을 축출하고 새로 김상연을 위원장으로 선출.(1955년 조선방직대구공장을 자유당의 재정부장직을 맡고 있던 설경동이 불하. 설경동은 5/ 20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2,600여명의 노동자 해고. 어용노조 결성)
- 1.12 진보당 추진준비위원회 조직.
- 2.1 대한방직 노조, 종업원대회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쟁의 돌입결의. 「①임금 4,500환을 최저 25,000환 수준으로 인상할 것 ②불하당시 재채용 예정자로 회사측이 공약한 1,392명을 즉시 완전 채용할 것 ③기업주측의 노동운동 간섭을 배제할 것 ④발전기 고장으로 휴업한 날에 대한 법정 보상금을 지불할 것 ⑤부당해고자에 대하여 즉시 해고 조치를 철회할 것 ⑥단체협약을 체결할 것」(->회사측은 노조간부들을 매수와 협박으로 굴복시키는 공작 진행, 노조위원장

- 김상연 자진 사퇴하여 투쟁포기·노조 간부와 열성적인 조합원 13명은 협정이행을 촉구한다해서 3월 29일 해고 조치)
- 2.23 남선전기노동조합, 1월부터 지방사업소부터 지부조직을 착수하여 각 지부대의원들이 모여 제1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한 결과 지금까지 회사의 탄압을 받으며 투쟁해온 신현수가 위원장으로 선출.
- 3.6 대한노총 최고위원이며 전업노련 위원장 정대천, 전업노련 산하의 노동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재출마염원데모를 벌이며, 부통령에는 자유당에서 지명한 이기붕을 절대 지지한다고 함.
- 3.10 이대통령 재출마요청대회(학생동원)
- 3.12 대한노총,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승만이 대통령 재출마를 승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13일 정오를 기하여 교통부문 노조에서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중대결의를 하고 이 결의사항을 이승만에게 전달.
- 3.13 대한노총, 우마차까지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하며 이승만의 대통령 재출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조봉암, 박기출 3대 대통령 부통령 후보출마
- 3.31 가칭 진보당 추진대표자회의
- 4.2 대구방직 노조, 노조대의원대회를 열어 배형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회사측,5월31일 105명 무단해고)
민주·진보당 정부통령 후보 단일화 운동전개
- 5.5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사망
- 5.8 대구매일 필화사건으로 구속된 최석채씨, 대법원판결로 무죄확정.
- 5.14 조봉암 낙선 2,163,808표, 이승만 5,046,437표.
- 5.25 기세문과 박용진이 비밀조직 결성을 위한 첫 모임을 가짐.
- 5.30 기세문 등, 조직명칭을 ‘조국평화통일동지회’로 정하고, 강령·선언문 등을 작성.
- 6.10 탄련, 위원장 김정원을 비롯한 100여명의 노동자가 당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상경하여 일대 시위투쟁을 전개.(탄련은 56년 1월부터 다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투쟁을 재개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노조대표들이 상공부장관, 석탄공사 총재, 군과견단장 등을 방문하고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력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
- 6.11 탄련, 상공부장관 입회하에 석탄공사측과 합의서 조인. 「①1956년 6월 21일부터 출근자에게는 임금인상이 실현될 때까지 1인당 쌀 1되 5홉씩을 지급한다 ②단체협약은 상호 성의로써 체결에 노력한다」(석탄공사측은 약속을 어기고 쌀과 잡곡을 6대4의 비율로 섞어 주었으나 9, 10월에 이르러서는 임금인상도 되지 않은 채 배급 중단)
- 6.19 국회, 대구방직노조진상조사단 파견하여 대구방직회사가 취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정당하게 해결하도록한다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설경동, 보사부의 알선안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무시)
- 7.17 ‘조국평화통일동지회’, 광주 시내의 일대에 ‘선언문’ 살포.
- 8.13 ‘조국평화통일동지회,’ ‘민족의 살 길’ 제하의 글을 광주일대에 배포.
- 8.15 특무대에 의해 ‘조국평화통일동지회’ 조직원 기세문, 박용진 등이 체포, 구속.
- 9.6 육군 특무대, ‘월북기도 괴뢰간첩 김동식사건’ 발표.
- 10.10 대한노총 제9차 전국대의원대회, 서울 농업은행 강당에서 429명의 대의원 중 149명이 참석하여 개최. :10월에 변사한 이강연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경전노조부위원장인 이상진을 사무총장으로 선임.
- 10.20 대한 학도 방공 쫓기대회(학생동원)
- 11.2 탄련, 다음의 요구조건으로 다시 쟁의 「①상공부 장관 입회하에 협정한 쌀 1되 5홉을 즉시 지

- 급하라 ②3개월분 미불노임을 즉시 청산하라 ③단체협약 체결과 임금인상을 즉시 이행하라」
- 11.10 시공관에서 진보당 창당 대회,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 12.3 삼척시멘트노조, 4개월간체불된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며 서울에 있는 시멘트사무실로 몰려가서 단식농성 투쟁. (10일간의 농성 끝에 체불임금 즉시 지불에 대한 협정서를 작성하고 내려감)
 - 12.9 중순 *진보당, 부산시 소재 새한중학교 교정에서 성락준 외 3백여명이 회합하여 진보당 경남도당 결성.
 - 12.26 서상일 중심 민주혁신당과 장건상 중심의 대중당이 합동하고 발당문제를 토의. 합당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장건상, 부위원장에 서상일, 상무위원 77명 인선.

<1957>

- 1.4 인천 유류보급창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노조대표 유한일을 비롯한 55명의 노동자 대표 상경하여 보사부장관실에 모여 농성, 해고경위를 설명하고 직장 복귀를 위한 알선을 요청. (회사측, 해고 노동자중 310명의 직장복귀, 100여명의 노동자는 직장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음)
- 1.11 인천 유류보급창의 직장 복귀가 이루어 지지않은 80여명의 노동자들이 서울에 상경, 대한노총 본부와 보사부 장관실을 찾아다니며 직장복귀를 호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채 쟁의 끝남)
- 2.15 밀양 한국모직노조,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게 들어갈 것을 경고.(1957년 가을 약1,300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해 11월 약 800명 가량이 해고되고, 해고노동자와 남은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18 보사부,대방 설경동사장을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 (검찰 불기소처분·설경동, 어용노조 결성)
- 3.11 밀양 한국모직, 해고노동자 20명 부양가족과 더불어 서울명동에 있는 한국모직 사무실에서 농성 투쟁. (성과 없이 돌아감)
- 4.8 탄련,석탄공사측은 탄련이 제시한 최종안에 따라 임금인상하고 미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에 조인.
- 4.9 서울법대생 맹휴. 대통령 양자입학 문제.
- 4.13 대구방직, 배형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조간부들은 대한노총대구지구연맹을 근거지로 김말룡위원장의 지도하에 법정 투쟁. 설경동사장을 걸어 서울지방법원에 「복직 및 해고후의 임금 지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소송비용이 없으니 승소할 때까지의 경비를 법원이 우선 부담해 달라는 소송구조 신청. (제1심에서 기각되어 제2심에 항소하였는데 2심판결 나기에 앞서 4-19를 맞음. 4-19로 모두 복직)
진보당,시내중구 명동소재 시공관에서 이광진의 5백여명회합하여 진보당 서울시당 결성.
- 4.15. 조봉암, 정태영으로부터 「실천적 제문제」라는 강평서 받음.(판결문)
진보당 사무실에서 최진우 등 30여명이 집합하여 진보당 경기도당 결성.
진보당, 대구시 중앙동 소재 경북도당 사무실내에서 당원 이영국 등 20여명 결집하여 진보당 경북도당 결성.
- 7.12 홍익대학 허실재단 철거 요구로 홍익대학생들 맹휴 시작.
진보당, 전주시 고사동 소재 진보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 조병용 외 30여명이 집합하여 진보당 전북도당 결성.
- 7.18 진보당 전북도당 결성. 위원장에 윤길중.
- 8.8 민혁당 창당준비위의 상무집행위, 만장일치로 총무위원 장건상, 김창숙, 오중환, 상무위원 김일천, 양재소, 윤방우 등 6명을 제명. 그 이유로 시대착오적인 지하세력과 암암리에 합작하여 민주혁신세력을 말살하려는 반당」 행위 지적.
- 8.10 제명된 장건상씨 일파는 서상일씨 측에서 제명처분하였다는 것은 포복 절도할 일이며 장건상씨

를 중심으로 민주혁신당 중앙위는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 그들의 죄명이란 혁신세력 대동통일 운동이라고 지적.

서상일 중심 민혁당준비위, 16개 선거구대의원회를 갖고 서울시당 창당준비위를 위원장 최익환, 부위원장 이두산으로 구성.

9.10 성균관 대학생들, 재단부패규탄 결의.

9.20 조봉암, 근민당 재남 잔류파인 김성숙, 양재소, 김일우 등 10여명과 합세할 것을 시도. 종로1가 진보당 사문실에서 진보당측 대표로서 조봉암, 윤길중, 김달호, 이명하, 김기철, 조규희, 최희규, 근민당측 대표로서 김성숙, 양재소, 김일우 외 7명 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 (진보당 판결문)

10.15 진보당에서 이탈한 서상일계 민족혁신당 발족

10.25 대한노총 제10차 전국대의원대회, 서울 서대문 농업은행 본점 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588명 중 375명이 참석한 사운드 개최. : 오전 중의 개회사, 축사, 경과보고 등에 이어, 오후의 임원개선에 들어가서 최고위원에 철도노련 위원장 김주홍, 대한노총 경남연합회 위원장 성주갑, 섬유노조연맹 위원장 하광춘을 각각 선출하고, 전 대한노총 최고위원이며 전업노련 위원장인 정대천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고 결의. 대한노총의 실권을 빼앗긴 정대천과 대의원들은 철도연맹과 전대노조에서 부정 대의원을 참석시켰다고 비난하며 퇴장. 100여명가까운 대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철도노조와 섬유노조를 중심으로 278명의 대의원들은 그대로 남아 회의를 계속했으며, 사무총장에 이준수를 선출하고 기타 총무, 조직, 기획 등 각부서의 임원들과 회계감사위원들에 대한 인준투표를 시행하여 대회종료.

10.26 정대천을 중심으로 한 김기옥, 이주기 등 반대파에서는 10월 25일 대의원대회는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농업은행강당에서 대회 개최. 대한노동노협회의 결성준비위원회측에서는 전날 전국대의원대회가 무효라고 주장「①새로 선출된 김주홍측에서 수십명의 자기파 가짜 대의원을 투표에 참석시켰고 ②과거 여로 노동쟁의에서 기업주측 앞잡이로 암약하던 분자들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선출했을 뿐 아니라 ③25일의 대회에서도 김주홍측이 태창방직과 대한 방직 노조간부 4,5명을 대회장 부근에 배치하여 금품으로 대의원을 매수했다는 것」

조봉암, 『중앙정치』10월호에 평화통일에의 길-진보당의 주장을 만천하에 천명한다라는 제목 하에 게재.

진보당, 광주시 충무로 소재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당원 조중화 외 20여명 집합하여 진보당 전남도당 결성.

10.27 북한 부상급에 해당하는 간첩 박정호 체포.

11.6 ‘박정호사건’ 발표. . 장건상, 정이식, 오중환, 이재춘, 최익환 등 박포함 12명 구속. 남반부의 정치변혁공작대의 총책임자로 구속된 간첩 박정호는 현재 남한에서 태동중인 「혁신세력통일위원회」를 상대로 공작금 제공.민혁당 위원장 장건상, 대한제분사장 정이식 씨등도 박으로부터 자금 받음. 검찰에서는 박이 작년 초 조봉암씨와도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에 접하고 수사 중.

장건상씨의 참모격이며 민혁당준비위원 윤방우 구속. 윤은 53년도에 남하해, 혁신세력통일에 대한 공작을 계속하는 한편 민혁당원으로 감독했다고 발표됨.

11.14 치안국, 安在鴻의 밀서 전달한 장남 安最鏞등 검거.

11.22 장건상, ‘전향서’ 제출.

12.2 박정호사건, 최익환 구속해제 출감.

12.3 장건상, 정이식, 윤우방 등 3인 국가보안법 위반및 간첩방조혐의로 구속기소.

12.13 제10차 대한노총전국대의원대회 부정대의원이 참석했다는 문제에 관한 보사부 진상발표: 대회에 부정대의원을 보낸 노동조합과 그 수는 서울지방철도노조 11명, 조선운수중업원노조 10명, 서울이용사노조 4명 서울조양사노조 1명, 경성방직 노조 4명, 대명광업노조 4명으로 합계34명.

이들의 파벌별 소속을 보면, 서울철도, 서울조양사, 경성방직 등 3개 노조는 김주홍파이며, 조선운수, 서울이용사, 대명광업 등 3개 노조는 정대천파임이 밝혀짐으로써 쌍방이 다같이 부정대의원투입한 것 폭로됨. 12월 19,20일 양일에 새로 대한노총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여기에 모두 참석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

- 12.14 서울 문리대 「우리의 구상」 필화사건이 발생. 동대문 경찰서는 14일밤 서울대학교 학생동인지 「우리의 구상」에 붙은한 내용으로 보인다는 논문 (제목:무산대중을 위한 체제로의 지향)을 발표한 서울대 문리과대학 2년 유근일(20세)군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12.19 대한노총 제10차 전국대의원대회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재적위원 535명 중 531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개최. 최고위원에 정대천(전업노련), 이주기(광산노련), 김기옥(자유노련), 김용학(서울철도노조), 하광춘(섬유노련) 등으로 하광춘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정대천파가 당선. 김주홍탈락하고 김기옥 등은 야합.(이후 김기옥은 정대천을 상대로 주도권쟁탈전을 벌이는데 김주홍을 포섭하고 광산노련 이주기의 동조를 얻어 대한노총 규약개정운동을 벌임)

<1958>

- 1.12 치안국 ‘평화통일’ 구호 및 간첩 박정호와의 접선혐의로 진보당 수사 발표.
진보당 간부 윤길중, 조규희, 조규택, 이동화, 박기출 체포, 구속.
- 1.13 대구지구 이용사노조(대구시내 산재해 잇는 280개 이발관 종업원들로 결성), 대구 노총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①현재 업주 6할,종업원 4할의 수입분배 비율을 5대 5제로 할 것 ②노동시간을 여름에는 11시간, 겨울에는 10시간으로 종업시간을 단축할 것 ③매월 1일 11일,22일을 정기휴일로 정할 것」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쟁의를 제기하기로 결정, 요구사항을 사용자측에 제시하는 한편, 경상북도 당국에 재의의 발생을 신고.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외 당 간부 7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정순경 검찰총장,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당은 불법 결사단체라 주장.
서정학 치안국장, 진보당은 정우신 등7개 간첩과 접선혐의 있다고 발표.
- 1.14 정순경 검찰총장, 조봉암이 북에서 밀과된 김경태, 오중환과 접선, 북괴의 지령에 따라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고 발표.
- 1.15 진보당 간부 김기철, 신창균, 김병희 등 구속.
- 1.16 검찰, 조봉암집 비밀장소에서 모종의 불온문건 압수했다고 발표. 조봉암이 장건상, 김성숙등과 김일성의 지령을 실천하기 위한 7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야 혁신세력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간첩 박정호, 김경태 등은 이에 침투했다고 발표.
- 2.3 서울시경,괴뢰측에서 조봉암에게 보내왔다는 비밀지령의 일부를 비공식발표. 그 내용은 기초공작, 총선거 대비공작, 의회내 투쟁, 정권획득의 공작
- 2.12 간첩 박정호와 국보법위반 김성숙·장건상 씨 첫공판. 장건상 제외 19명 출두.
- 2.15 대구지구 이용사노조, 일제히 파업.
- 2.18 장건상, 병보석
- 2.20 양명산 검거하였다고 발표.
- 2.22 대구 이조, 경북 노무위원회는 노사쌍방 대표를 불러 회의를 열고 조정 「①임금은 현행대로 실시할 것 ②노동시간은 종래보다 30분씩 단축할 것 ③ 월 2회 공휴를 월 3회로 할 것 ④업자는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고 해고시에는 노사협의회에 통고할 것」
양명산이 조봉암에게 수교한 공작금수령증 압수
- 2.23 특무대, 조봉암이 괴뢰 임해(양명산)로부터 받은 인삼, 녹용 등에 대한 답례로서 만년필 등을 증정하기도 했으며 괴뢰로부터 딸을 통해 300만환을 받았고 수차에 걸쳐 1,500만환을 지급받았다고 발표.
- 3.13 진보당 사건, 서울지법 유병진 부장판사, 조인구 부장검사 관여로 공판개시

- 3.17 검찰, 양명산이 진보당 확대공작비로 미화 22,000달러와 한화 1천500만원을 조봉암에게 수교했다고 발표.
- 4.7 박정호 간첩 사건의 21명중 6명만이 유죄언도를 받고, 나머지15명은 모두 무죄. 윤재판장은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이미 비법화된 근민당의 재건을 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 밝힘. 박정호:사형, 김태형, 김육용, 김경태, 오중환: 징역15년, 이재춘: 징역4년
- 4.10 장건상, 근민당재건사건으로 재입건
- 5.15 제9회공판. 양명산과 조봉암의 첫대질심문. 양명산은 조봉암과의 접선, 간첩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조봉암은 북한과의 연락관계 부인.
- 6.27 대한노총 중앙상무위원회, 고일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방직 어용노조의 해체를 요구하며, 해고된 배형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조합만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의. (10월 대한노총 전국대회에서 김기옥 일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자 대한노총은 고일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고일하를 대한노총본부 조사통계부장으로 겸임케 함)
- 7.1 밀양 한국모직, 54명의 노동자 대표들이 서울로 상경, 사장면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사장집으로 찾아갔는데 두마리의 맹견이 노동자를 물어 뜯어 두 사람의 노동자가 개에 물려 상처를 입고 돌아감.
- 7.2 진보당 사건 언도공판. 조봉암, 불법무기소지, 국가 변란의 실행 혐의로 징역 5년. 양명산, 국가변란협외죄로 징역5년. 나머지 17명 무죄언도.
- 7.4 밀양 한국모직 50여명의 노동자 대표들은 상처 입은 두 동료를 등에 업고 보사부 장관실로 다시 물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노조위원장 박동수만 남고 귀향.
‘반공청년’이라 칭하는 괴청년들이 법원으로 난입.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사법부 기능마비.
- 7.10 밀양 한국모직, 보사부당국 김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부산지검에 고발. (부산지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부산지검은 김사장의 주소지인 서울지검으로 사건이송. 8월 노동자들 서울지방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및 노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투쟁제기->별효력을 보지못한 채 59년 하반기 대한방직회사가 산업은행관리로 넘어가자 체불임금 청산받고 소송은 취하됨)
- 8.8 함석헌 필화사건
서울시경찰국, 첩포간첩단사건 발표, 주모자 김원식 등 10여명 체포.
- 8.13 박정호 사건 항소심 판결, 박정호 무기, 장건상등 15명엔 무죄.
- 9.4 진보당 사건 첫공판. 서울 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배심판산 조규대, 최진현, 담당 검사 방재기 검사 관여. 양명산 특무대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며 1심진술 번복.
- 10.25 진보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조봉암, 양명산 등에 원심을 파기하고 간첩 및 국가보안법 적용 사형언도.
- 10.28 이승만, 국무회의에서 “한 법 밑에서 일심과 이심의 형량차가 너무 크다”고 언급.
- 10.29 대한노총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 부산극장에서 개최. 5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 김기옥파, 종래의 집단지도제를 1인 지도제로 개정하려는 규약개정안을 제출, 정대천파 맹렬한 반대, 사회를 맡고 있던 이주기는 정대천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약개정안의 표결을 강행하여 500명중 339명의 찬성을 얻어 그 통과를 공포.
- 10.30 규약개정에 반대한 대한노총의원들의 출석거부에도 불구하고 김기옥파는 대회를 속개하여 개정된 규약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 예정대로 김기옥이 321표를 얻어 선출. 사무총장에는 이주기가 취임. 정대천파 거세
조봉암·양명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 11.1 전국 해상노동조합연맹 산하 대한조선공사(상공부 소관의 국영기업체) 노조, 7개월분의 노임체

불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쟁의 신고.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섬유노동조합대회, 국제자유노련과 국제섬유노련에 의해 3월에 이루어진 한국 섬유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보고하고, 한국섬유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항의문을 채택하여 대한민국 보사부 장관과 대한노총위원장 등에게 전달.

대한노총 부산지구 노동조합연합회 최종자, 대한노총 전국광산연맹 대명광업소 노동조합 김관호, 대한노총자유연맹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 김인숙은 부산 부두노조, 자유노조연맹, 대한노총등 주요 노동단체의 위원장직을 독점하고 자유당과 결탁하여 비리를 자행하는 김기옥을 「비료조작비 23억 2,000여명환 부당횡령 및 노임 12억2,000만원 배임 횡령 사건」으로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국회에 진정서.(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자유당의 방해와 압력으로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짐)

- 11.11 대한노총석탄광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노응벽, 대한노총 대구지구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말룡, 대한노총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관호, 대한노총부산지구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관호, 대한노총부산지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종자, 각각 보사부장관에게 58년 10월 29, 30일자 대한노총 제11차대회결의사항중 규약변경 및 임원개선 결의가 불법무효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 부산 및 인천 부두노조는 보사부 당국이 십장 또는 반장을 위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명시한 바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중간착취적 불법노조이므로 이들 조직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은 불법 무자격 대의원이라는 사실도 지적.(목살당함, 그와 별도로 이들은 그 문제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 12.10 진보당 사건 일심 담당 서울지법 유병진 부장판사는 법관 연임에서 거부됨.
- 12.13 대한조선공사노조, 파업단행. 전국 해상노조위원장 김사육이 파업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문 채택. 「①노임지불 집행에 대한 부산지법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한조선공사재산을 차압한다 ②체불노임 중 단한푼의 미불이 있어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며, 완전 청산시까지 파업을 계속한다. ③파업중의 공사내 경비는 노조에서 2개 반으로 편성담당하며 공사내의 일체 시설을 보호하고 조합원은 경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의장단 입회하에 공사재산 차압 강행.
- 12.16 간첩 박정호사건, 대법원판결, 박정호 사형, 金泰衡·金達溶:징역10년, 김경태·오중환:징역8년, 이재춘·이철용:징역3년6월
- 12.19 대한조선공사노조, 노사연석회의에서 체불임금 전액과 11월분 급료를 12월 23일까지 완불하기로 합의(12월 23일 약속대로 지불)

<1959>

- 1.24 부산부두노동조합, 8개 하역회사를 상대로 外資작업에 대한 노임인상을 요구하는 쟁의제기. (3년전에 체결한 노임협정단가가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 수준이하. 외자청당국에서도 외자 조작요율을 일부개성, 인상하였는데 회사측이 외자청으로부터 57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받은 소작료를 가로채려 단체협상체결 미루어옴)
- 2.13 제일교포 복송 반대 데모(학생동원) 6월까지 계속
- 2.20 진보당 사건, 상고심 첫공판. 대법원 재판장 백한성, 주심 김갑수, 배심 배정현, 고재호, 하옥주, 관여검사 오제도 검사.
- 2.25 전국섬유노조연맹, 전국 20여개소에 있는 36,500여 조합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쟁의제기. 「① 8시간 노동제의 엄수 ②현재의 임금수준을 인하하지 말것」을 요구.(58년 국제여론을 반영하여 쟁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조차 즉시 관철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그대로 넘어감. 9월에 가서 다시 쟁의 제기, 10월에 가서야 8시간 노동제의 실시를 승인하는 단체협약체결)
- 2.27 진보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 조봉암,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무기 소지로 사형언도.

양명산, 상고 기각으로 사형. 박기출, 윤길중 등 원심 파기 무죄. 이상두, 전세룡 등 4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 5.17 동경발 외신 조봉암 구명 호소. 제일 동포 8천여명이 서명했다고 보도.
- 5.27 부산부두노동조합, 회사측의 태도변화없자 5,000여 부두노동자들 6월 1일을 기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
부산부두노조 일부간부들, 위원장 김기옥에 의해 전 부위원장 성도환, 박인근 등이 제거된 뒤에 김기옥은 부산부두노조의 운영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500여만원의 임금을 횡령하였으며, 모기업체와 이종의 단체협약을 체결 막대한 금액을 사취하였다는 성명을 발표.
- 5.29 피한들, 김기옥 반대하는 파의 부위원장인 김용후를 납치구타.
- 6.1 부산부두노동조합, 타협안수락 : 1959년 1월 1일부터 소급 체결 실시하고 57년 5월 1일부터 58년 12월 말까지의 소급인상 실시문제는 앞으로 2개월간의 행정알선 기간을 두고 해결(김기옥 배신, 나머지 소급인상문제 포기)
- 7.1 부산부두노조 부위원장 2명과 임원 15명, 부산부두노동조합의 혁신을 외치며 「①400만환의 육군기지창 작업노임 횡령 ②한국운수 비료작업 노임협약 부정체결 ③제3부두 미군작업관계입찰부정 ④대한국 미창회사 육군기지창 작업노임협약 부당체결 ⑤동일한 작업장에 있어서 2개회사와 이종의 협약체결」등 김기옥의 비행을 폭로하는 성명발표.
- 7.6 부산부두노조 혁신파 김용후, 이원 두 부위원장 명의로 부산부두노조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공고하고 ①조합운영의 공개 ②전체임원의 불신임 ③규약 일부 개정 ④기타 주요 사항을 토의안건으로 제시.
- 7.17 조봉암, 조국에의 충절 불변을 확인하는 제헌절 성명 발표.
- 7.27 부산부두노조, 혁신파 21명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상임위원회는 김기옥을 반대하는 농성을 전개했으며, 경찰은 김용후 등 3명 간부연행.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장소로 쇠도했는데 경찰당국은 450명의 경관을 파견하여 이들을 해산.
- 7.29 양명산 사형집행
- 7.31 대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대구 제1예식장에서 개최. 노응벽·김말룡·김관호·최종자 등은 이 대회에서 김기옥을 미루한 노총간부진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알아차린 김기옥에 대해 입장 거부당함. 이들은 회의에 참석한 86명중 약 40명이 유령 대의원이었으므로 이 회의는 정족수 미달의 불법회의였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연맹체를 결성하겠다고 선언.
진보당 사건의 조봉암 사형 집행 : 서대문 형무소 앞에 사체를 보고자 수백명 운집.
- 8.11 반 김기옥파 노조간부들, 가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서울 경전노조회의실에서 전국 37개 노동조합연합체 중에서 24개 연합회 대표 32명이 모임을 갖고 김기옥이 주도하는 대한노총의 비민주적 처사들을 비난규탄하고, 가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설립준비.이 날 준비위원회에서는 현 대한노총의 부패타락상을 지적하고,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전국적 중앙연합체로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 동 협의회 선언문, 강령 등을 기초하며 준비위원회의 부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으로 김정원, 김성화, 김말룡, 한기수, 신현수, 노응벽, 김규성, 김영태, 김경호 등을 결정.
- 8.17 석탄광노조연합회 산하 8,700여명의 노동자들,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임금 50%인상을 요구하는 쟁의제기. (58년 10월에 임금 30%인상을 비롯하여, 잉여인건비 지불 등을 요구해서 쟁의제기. -> 11월 4일 협정에 의해, 임금인상 문제를 잉여인건비 조사 종료시까지 일시보류한다고 규정하고 1년을 끌어옴)
- 8.19 이주기, 전국노협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한노총사무총장직 사퇴. 장문의 성명서 발표하여 다음의 사실지적 「1.방직공 과중노동사건:... 2.대구중앙집행위원회 사건:... 3.부산부두노조 노임횡령 분규:... 4.그러므로 썩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 진리이며, 현 대한노총간부전

- 원이 책임을 지고 총퇴진하는 것만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길이므로 먼저 사무총장 본인부터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다.]」
- 8.20 가칭 전국노협, 선언·강령 채택. 설립준비 위원장에 김정원, 부위원장에 이상진, 김말룡을 선출하고, 이두형, 정대천, 이주기, 노응벽, 최유식, 김영태를 지도위원으로 추대.
김기옥, 경전노조를 대한노총에서 제명. 경전 내부의 정대천반대파를 사촉하여 새로운 어용노조 결성을 위해 총력.
- 9.3 부산시내 택시노조(택시운전자 1,375), 6월경부터 10여차례 택시업주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교섭해오다 정식으로 쟁의제기. 「① 2일 노동에 1일 휴일제 실시 ②운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의 휴업 보상금 지불 ③독단적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지 않을 것 등을 협약내용으로 규정하자」
자유당 고위간부와 보사부 당국의 중재로 대한노총내 파벌싸움을 벌이던 김기옥, 김주홍, 정대천 3인, 대한노총의 분규를 종식시키고 다가올 정·부통령 선거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대한노총에 내분이 야기되었음은 사실이나 소아를 버리고 대아에 입각하여 그간 내분을 초래하였던 모든 사태는 이를 백지로 환원시켜 노총 깃발아래로 대동단결하여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비약시켜 부하된 사명을 완수할 것에 합의하는 동시에 내년에 실시될 정·부통령선거의 대과업을 완수함에 힘을 합치기를 전국노동조합 동지 제위에게 간원하는 바이다」(제11차 대회에서 거세된 정대천은 그후 김기옥을 공격하기 위하여 김기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부두노조가 감행한 비행사실을 폭로 공개고발하며, 어용적 노동단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태동하고 있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에 가담하는 등 맹렬한 활동을 해왔고, 김기옥은 정대천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전노조의 비행사실을 폭로 공개고발하면서 경전노조를 대한노총에서 제명하고 경전내에 별도의 노동조합조직을 공작하는 등의 싸움을 계속해옴)
- 9.23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대한노총과의 대동단결 조건으로 5개항 보사부장관에게 제시
- 10.6 경전노조위원장 정대천, 전국노협탈퇴하고 대한노총산하에 대동단결하겠다는 성명발표.(정대천, 보사부장관의 압력으로 전국노협이 대한노총과 통합할 경우에 다음의 5항목조건을 대한노총에서 수락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한노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정대천만 포섭한 것. 「① 대구에서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의 무효화 ②십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산, 인천 두 지역의 부두노조를 노동자 분위의 조합으로 다시 조직할 것 ③행정당국은 대한노총의 유령조합원 12만명을 정리할 것 ④철도노조에서는 법에 의한 연차대회를 조속히 소집할 것 ⑤김기옥은 8월 20일 임시대회 이후 「해고한 노동자 372명을 즉시 복직 시킬 것」
- 10.7 석탄광노조, 노조대의원대회에서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 (->노동자들이 요구한 50%에 못미치게 합의: ①일반노무자는 3,500환 ② 갭내 노무자는 6,000환 선에서 임금 인상을 실현)
-대한노총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 서울 31당에서 개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하 노동조합들이 참가를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 전국노동조합회측과 손을 끊겠다고 발표한 경전노조에서조차 6명의 대의원밖에 참석하지 않은 채 대한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사무총장, 선전부장, 법규부장 등 임원을 새로 선임하고,明年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시봉을 절대 지지한다는 결의를 하고 대회종료.
- 10.18 부산 택시노조, 조합원들에게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 실시하여 투표참가자 1,211명중 파업찬성 1,168명의 찬성을 얻어 10월 22일 새벽 4시를 기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
- 10.20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2부 재판장 박용원, 판사 이종진, 양현 등: 노응벽과 김말룡이 제11차대의원대회에서 행한 규약개정과 임원개선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규약변경 및 임원선거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
- 10.21 민권수호국민총연맹, 정부의 민주혁신당 등록불허 비난 성명 발표

- 10.23 부산 택시노조, 일제히 파업(쟁의 참가율 97.7%)
- 10.24 부산 택시노조, 단체협약체결 「①신규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②해고시에는 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 ③ 1일 8시간 노동원칙으로 하되 취업자사정상 2일 근무 1일 휴무로 할 것」(회사측, 단체협약 체결 파기)
- 10.26 서울 태화관에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대회. 대한생사노조를 비롯한 14개 노동조합 대표 21명이 참석,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의장제를 채택. 중앙위원회 의장에 김말룡 선출. 10명의 중앙위원과 각 역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
- 12.21 부산택시노조, 3일동안 시위 전개, 24일부터 파업결정. (관권의 개입으로 파업 단행 불가)

<1960>

- 1.24 민주당, 민권 수호국민총연맹 모체로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공명선거 촉진위원회 구성키로 결의
- 1.25 민권수호 국민총연맹, 최악의 관제선거에 전국민이 분기 촉구하여 독재와 투쟁하자는 성명 발표
민족주의 민주사회당, 3월선거 반대 5.6월경 선거실시 요청서 이대통령에게 제출
- 2.2 장택상, 서상일, 이훈구, 박기출, 윤길중 등 비보수세력. 반독재 민주수호연맹결성 : 이후 비보수정당 조직모색에 합의
- 2.5 반독재 민주수호연맹, 정부통령후보에 장택상, 박기출을 선정.
- 2.6 민권 수호국민총연맹. 이후 공명선거추진위원(가칭)로 발족키로 결정
- 2.7 민권수호국민총연맹, 범국민운동구성체인 공명선거추진위에 모든 국민이 총궐기하여 참여 바란다는 담화 발표
- 2.13 반독재민주수호연맹 대통령 후보 장택상. 강력한 대 자유당 투쟁 선언하는 성명 발표
제2차 반독재 연맹 정부통령 후보 등록방해 테러사건 발생 : 장택상 박기출 입후보 등록서류 피습사건 발생
- 2.14 민주당, 부정선거방지 위해 각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자는 담화 발표
민권수호국민총연맹, 등록방해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이고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성명서 발표
- 2.28 학생데모시발, 대구경북고교생 수백명. 최초의 자주적 시위전개 : 일요 등교 항의 학생 수백명 도청광장 진출, 국립극장 쪽 행진. 50~60명 연행. 부상학생 속출.
대구고 800여명, 일요등교항의하기 위해 도청행 중 경찰제지로해산
대구사대부고 150여명, 농성시위 : 수십명 연행
경북여고생 100여명 시위 : 약 30여명 연행
경북경찰국장 학생 100여명 검거 : 하오에 귀가조치. 부모인계, 경찰 2명 부상
공명 선거추진전국위원회 발족 : 민권수호연맹, 민주당 등 각계각층 망라하여 200명으로 구성
- 2.29 민주당, 경찰폭행 규탄하는 담화발표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경찰 문교당국 규탄, 민권탄압호소 성명 발표
- 3.1 ‘공명선거추진전국대학생투쟁위원회’ ‘공명선거추진 전국학생위원회’, 3.1절 경축식장 전단 살포 : “3.1 정신 받들어 대구학생 성원하자” “공명선거 촉진하자” 의 내용
최내무, 한강변 백사장 강연회 경비 이유로 불허
- 3.2 이대통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지지한다는 담화발표
제 34회 임시국회 폐회
민주당, 중앙선거위에 부정선거방지 26개항 건의.
전주 민주당 유세장서 고교생 “민주주의만세 ” 혈서.
공명선거추진전국위원회, 자유당의 공포분위기 조성을 지적하는 담화발표

공명선거추진학생특별위. 공명선거운동에 총궐기하자고 전국학도에 격문 발표.

최내무, 민주당이 학생을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민주당 박창화 의원 탈당

민주당 2명, 반공청년단원에게 길가에서 집단폭행당함.

- 3.3 민주당, 자유당의 경찰 공무원 선거대책 비밀공문에 관한 정보 폭로 : 사전투표, 공개투표, 투표함 바꾸기, 표바꾸기 등

자유당, 민주당에서 폭로한 부정선거지령설, 낭설이라고 반박

민주당, 중앙선거위에 26개항의 부정선거 방지조치를 공한으로 요청.

입대장병들, 장면유세 만세환호 : 목포역.

- 3.4 민주당, 중앙선거위에 선거법위반 시정촉구공한 : 비정치단체의 선거운동시정요구에 자유당 각종 사회단체 지지성명은 선거운동 아니라고 주장.

광주, 장면 유세강연 lwrgn 대학생 10명 혈서.

민권수호국민총연맹.정부의 선거법지령은 반민주적 쿠데타라고 담호발표.

공명선거추진 전국위원회, 경찰 선거대책 요강은 흉악무도하고 망국적인 폭거라고 담화 발표

- 3.5 민주당, 최내무에게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촉구하는 담화발표

이대통령. 대구 유세에서 러닝메이트제 동시선출 강조

시민 학생 1000여명, 서울운동장에서 민주당 유세후 종로행진 :

경찰과 충돌. 민주당원 4명 학생 20여명 연행. 종로서 기자출입금지.

- 3.6 민주당, 자유당은 학생데모의원인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미국 [워싱턴포스트], 한국내 카톨릭 신자들에게 대한 탄압보도

- 3.7 민주당, 중앙선거위에 투명투표지 금지요구공한 발송.

중앙선거위, 민주당의 26개항의 부정선거 방지조치에 대해 회답대상 안된다고 거부

서울시경찰국장, 선거운동범위에 벗어난 행위는 의법조치한다고 학생들에게 경고문 발표

부산 동아고교생등 학생대표 16명, 데모계획 발각으로 데모좌절

부산 영도 '공명선거호소학생위원회' 명의 전단 인쇄중 3000장 압수당함

대전고 간부학생들, 시위합의하고 결의문 작성.

공명선거추진 전국위원회, 학생시위는 자유라는 담화발표.

민주당, 국방장관에게 군인의 정치관여를 방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 발송 : 부정대리투표위한 사병 휴가금지와 군인통신의 강제 발송금지 등 요청

- 3.8 대전고 1000여명 시위 : 경찰과 유혈사태, 연행간부학생 석방 요구 연좌 농성.

인천 수원 마산 충주 포한 서울 부산 광주 등 각지에서 중고교생 시위 속출

미국 [뉴리퍼블릭], "한국의 부정선거는 미 공화당 정부를 난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경남 경찰국장, 학생이 정치도구되는 것 유감이라는 담화 발표.

민주당, 관제선거운동하는 예술인 건거운동 비난담화 발표.

민주당, 중앙선거위의 부정선거방지조치 토의거부는 임무가 의아하다는 비난담화 발표

- 3.9 자유당 선전위장 조순, 모의투표용지 유권자 나누어주라는 지시 있었으나 모의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공명선거추진위원장 장이유, 3.15가 공명선거되도록 정치인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기자회견.

민주당 여수시당 재정부장 김용호, 괴한에게 피습 절명

- 3.10 민권수호국민총연맹, 집권당의 조종을 받은 폭한에 의해 발생한 여수사건 비난담화 발표

민주당, 중앙선거위에 모의투표용지 폐기공한 발송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노동절 맞아 자유롭고 민주로운 노동운동을 쬐먹는 관권의 간섭을 배격한다는 성명서 발표

민주당, 여수 민주당 간부 피살사건의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성명 발표.

수원농고 300여명 데모 : “학원내의 간접적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등 5개항의 결의사항 적은 전단 살포하고 역진 행진.

대전상고 300여명 대전시내 시위 : " 학생 50~60명 부상

충주고교생 500여명 새내시위 행진

깡패집단, 반자유당 세력말살 정치테러 광분 : 반공청년단 오세열, 민주당원 이상철 살해. 경찰은 광산군 민주당 부위원장 구속

3.11 치안국장, 데모학생 개전의 정이 없으면 입건한다는 경구담화 발표

민주당, 연발되는 선거살인의 책임을 지고 자유당 정부는 물러가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 언커크 선거시찰반. 선거시찰을 위하여 5개반 구성하여 각 지방으로 떠남.

3.12 부산 해동고교생 150여명, 공명선거요구 시위

부산 각급학교 사복경관 배치.

청주고교생 150여명 시위

통일당 부통령 후보 김준연, 공포분위기 시정하라고 이대통령에게 공개장 발표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공명선거와 대통령의 영단을 호소하는 담화 발표.

반공청년단, 광산사건 가해자 오세열, 반공청년단과 관계없다는 성명 발표

박승준 검찰총장, 학생데모 위법행위는 의법엄단하겠다고 경고.

3.13 외신, 3.15 선거는 살인·폭력으로 불안하다는 논평

서울시 고등학교 산발적 시위 : 시공관 앞, 미도파, 반도호텔, 시청, 국제극장 등 앞에서 경기도 오산 고교생 100여명 장터 시위.

경찰, 경북 문경고교생 33명의 발기로 된 플래카드와 전단입수

민주당, 부정 시정을 최종적으로 요청하는 공개장 이대통령에게 발표

민주당, 전국동포여! 민주구국운동에 나서자는 성명서 발표

3.14 서울시 고교생 1000여명, 공명선거 요구시위 : 인사동, 화신앞, 광화문, 서대문 등지에서

부산, 학생 600여명 시위,

인천, 학생·시민 200여명, 공명선거 시위

포항고교생 200여명 시위.

원주농고생 100여명 시위.

경남상고, 데모모의중 발각 : 주동자 5명 연행.

청주, 고교대표 13명 데모준비 : 전단 2000장 살포

민주당, 사전투표위해 반공청년단이 민주당 참관인 입장 방해하려한다는 정보 발표

미국무성 공보관 링컨 화이트, 한국폭력 유감, 공명선거 요구하는 성명 발표

영국 [런던타임스], 악랄한 선거탄압과 민심동향 보도

미국 [뉴욕타임스], 인물중심의 선거전과 민주당 선거참관인 피살 사건 보도

통일당, 최후 까지 주권 수호에 분발하여 달라는 성명 발표.

공명선거추진위, 공명선거 전취에 국민은 총궐기하라는 성명 발표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공명정대하게 주권 행사하라는 성명 발표

3.15 전국 공공연한 테러의 위협분위기 속 제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 투표 및 개표 실시.

광주 민주당원 50여명, 만장 시위 : ‘곡! 민주주의 장송’ 외치며 경찰과 유혈충돌

진주 민주당원 10명, 침묵시위 모두 구속 : ‘공명선거 다시 하라’ 플래카드 들고 시위.

서울 3000여 시민 시위 : 인사동에서 한국의 민주운명을 사수하자며 데모

민주당, 3.15선거는 불법 무효임을 선언한다는 성명 발표 : 법적 정치적 투쟁전개 결의와 동시에 민주당 선거위원·개표참관인 철거.

마산 제1차데모 : 민주당원 30여명 데모 이후 시민 1000여명 행진, 허윤수 집 서울신문 마산지국 자유당 마산시 당부 등에 투석, 경찰 실탄 사격, 마산시내 정전, 마산 사망자 8명, 중경상

- 자 72명, 경찰 민주당원 3명, 학생 20명 연행.
- 3.16 중앙선거위, 정부통령 당선 발표 : 이승만 963만여 표, 이기붕 833만여 표.
 장면 민주당 부통령후보, 3.15선거는 무효, 민주구국운동의 선두에서 굳세게 싸우겠다고 기자회견.
 미대통령 아이젠하워, 한국선거폭력 유감이라고 기자회견,
 세계여론, 이정권의 불법폭력비난 : 워싱턴포스트, 더타임스, 르몽드, AP통신, UPI, 타임, 뉴스위크, 일본 신문들.
 자유당, 국민의 절대적 신임에 감사하다는 성명 발표.
 최인규 내무, 마산사건 민주당 또는 공산당 지령사주 여부 등 철저조사 언명.
 이대통령, 마산사건 배후관계 규명 의법처리 지시.
 마산 사망자. 16일 현재 11명 부상자 37명, 연행자 219명.
 마산. 오후 7시 통금 불구 학생데모 계속 : 진해여고생 100여명, 전주고교생 등.
 서울, 대학생 · 고교생 500여명 데모 : 종로 행진기도. 경찰에 해산
 미국 [뉴욕타임스], 마산사건 개요와 참모총장 송요찬이 치안담당 관리들과 회담함을 보도.
 공명선거추진위원회, 3.15선거는 민주주의를 생매장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라는 성명 발표
 민족주의 민주사회당, 3.15선거는 불법 · 폭력으로 무효라는 성명 발표
 통일당, 3.15선거는 대담한 부정이라고 성명 발표
 3.17 마산 시내 중고교 등교 중지령(17일부터 5일간).
 민주당, 의원 총사퇴 검토.
 진해고 200여명, ‘협잡선거 물리치자’ 며 시가행진.
 서울 성남고교생 200여명 시위 : 서울 시내 거리마다 학생명의 벽보 범람
 전남여고 데모기도.
 부산지검, 마산 학생 23명 구속,
 이치안국장, 마산사건은 공산당 수법과 비슷하고 사망자는 4명뿐이라고 밝힘.
 미국 [워싱턴포스트], 한국의정치적 자유제약은 미국의 직접 관심사라는 사설 논평.
- 3.18 이기붕, 기자회견서 마산사건 질문에 “총은 쏘라고(쓰라고) 준 것이다” 라고 답변
 내무장관 최인규, 사표 제출
 국회, 여당단독으로 정부통령 당선 공표
 민주당, 국회에서 3.15선거무효선언문 낭독 후 도보행진하며 무언데모
 경찰, 마산사건 부상자 마구 구타
 대한 변협, 마산사건 조사단 파견.
 부산 동래 고교생, 동맹휴학계획 경찰사전탐지로 좌절.
 전주 광주 중 고교에 경찰관 배치.
- 3.19 치안국장 이강학 내무차관 이성우 사표제출
 이대통령, 마산사건은 난동이므로 의법 처리하겠다고 담화발표
 이기붕, 마산사건 주동자 의법 처단 담화 발표
 인권수호국민총연맹, 정부의 공명선거 주장 비난담화 발표.
 한국신문편집인협회, 3.15 선거의 대량살상 인권유린에 항의, 민중대변코 항쟁하겠다는 성명 발표.
 AP통신, 마산 사건 논평 : “한국의 민주주의는 썩은 나무에 핀 곰팡이이며, 경찰행동은 침략자의 수법과 같다”
 마산 현지 시민들, 마산사건 희생자 16명 추정.
- 3.20 춘천고교생 데모계획 발각, 경찰 주동자 연행
 김준연 통일당위원장, 이대통령에게 부통령 재선 요구 공개장 발표

- 이재학 국회의장, 정부에 마산학생들 관대처분 요청.
 국회, 마산사건 개요 발표 : 사망 26명, 부상 86명, 경찰 잔학행위 등
 미국 [스크립스 하워드계] 기자 짐 루카스, 경찰 발포 사실무근 공산당 배후조정 의심된다고
 서울발 보도.
- 3.21 민주당 신파, 의원직 총사퇴 신중론 주장.
 미국 [타임]. 한국선거 9·3인조 투표·모의투표용지 사용 등 비난.
- 3.22 반공투위 위원장 장택상, 이대통령에게 하야하고 국부로 돌아가길 요망하는 공개장 발표
- 3.23 국회 마산사건 특별조사단 출발 : 여당 6명, 야당 5명으로 구성,
 정부, 최인규 내무사표수리하고 홍진기 내무장관 임명.
 언커크, 선거보고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성명 발표
 자유당, 사태수습에 강온대립 : 임철호 - 인심 수습주장, 한희석 - 선거수행 책임 거부.
- 3.24 부산고교생 900여명 시위.
 부산상고생 100여명, 시위집결 도중 경찰에 의해 해산.
 부산 내에 중고교, 조기봄방학 실시
- 3.25 부산 도성중고 300여명, 테레사여고 수십명, 폭우 속에서 시위.
 부산 혜화여고, 경남공고생 100여명 시위 : 부산시내에서 경찰과 육박전 투석전
 홍진기 내무장관, 마산경찰 발포는 괴한처사이며 이에 경남 경찰 국장내무부 대기명령 내렸다고 기자회견.
 검찰, 마산발포혐의 경찰관 5명 구속
 마산사건 구속자, 9명 제외한 나머지 석방.
 민권수호, 국민총연맹과 공명선거 추진위, 데모군중을 무차별 난타한 고문경찰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
 민주당 선거사후처리위원회, 부정선거 규탄대회와 선거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결정
- 3.26 자유당 선거대책본부장 한의석, 3.15 선거부정은 내 책임이 아닌 공동책임이라고 언명
- 3.27 민혁명당, 데모연행자에게 경찰의 고문중지요구 담화 발표
- 3.28 이대통령, 민심수습 5개 항목 제시
 정부, 치안국장에 조인구, 내무차관에 이동환 임명.
 대한변협, 마산사건 조사단 보고서 발표 : 데모의 원인은 부정선거이며 사건 확대는 경찰의 책임이다
 대한변협, 인명살상경관전원 및 지휘자 엄중 처단하라는 특별성명 발표
- 3.29 자유당 혁신파의원들, 당무 국무위원 교체 주장.
 공명선거추진위원회, 부정선거 성토대회와 3.15 순사자 위령제는 거족적인 국민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담화발표
- 3.30 민주당 신파, 의원사퇴 아닌 원내 투쟁 결의 : 민주당 선거사후대책 특별위에서 구의원 퇴장 가운데 일방적 결의(구파, 의원직사퇴주장, 신파, 원내외 투쟁 주장).
 공명선거 추진 학생특별위원회, 야당의원 총사퇴 요구 성명 발표
 장면, 의원 사퇴 재론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서 언명
 소진섭 대검차장검사, 마산사건 공산당 연관 확증 잡지 못했다고 밝힘
- 3.31 자유당, 당내 혁신파의 속당운동을 해당행위로 규정, 엄단방침 결정
- 4.1 이대통령, 당내분 수습과 참의원 조속 구성 지시
 영국 [더타임스], 학생시위는 독재정권에 대한 자연스런 결과라고 보도
 장택상,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제소.
- 4.3 민주당,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공명선거추진위 공동으로 부정선거 규탄대회열기로 결정
- 4.4 IPI시찰단 (14개국 대표), 한국언론실태 조사차 내한.

민주당,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공명선거추진위 공동명의로 부정선거 규탄시위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

전북대생 300여명, 최초의 대학생테모 전개

민권수호국민총연맹, 3.15선거 시 고문경찰관 서울지검에 고발.

- 4.5 민권수호국민총연맹, IPI 대표들에게 한국의 언론자유가 관권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비판해 달라는 공개서한 발송.

정부, 부정선거규탄시위 불허

이대통령, IPI 대표와의 회견 거부

대구민주당 부정선거 규탄대회, 경찰방해로 좌절

민주당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공명선거추진위원회 간부 50여명, 민주당사 철야농성

- 4.6 민주당 민권수호국민총연맹 공명선거추진위원회 간부 등 시민 학생 4000여명, 대규모 반정부 시위 : 서울 중심가에서 경찰의 포위 속에 중앙청 쪽으로 행진 중 경찰과 충돌, 학생 2000명, 경찰과 투석전

- 4.8 민주당 경남지구당 간부 20명 농성

민주당 강원도당, 9일 테모대비 철야 농성.

- 4.9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 200여명, 삼엄한 경비속에 시위.

민주당 강원도당 테모, 경찰방해 좌절.

- 4.11 마산 중앙부두 김주열 시신 발견 : 1000여 마산시민들 20센티미터 철물이 머리에 박혀 있는 시신 목격

제 2차 마산테모 발생, 시민 2만여 명, 경찰 잔혹성 규탄테모 : 파출소 마산시청 자유당 본부 국민회지부 서울신문지사 파괴 수류탄 탈취. 경찰 발포로 2명 사망, 14명 중상.

검찰, 조사단 마산 급파.

시민 학생 3만여, 마산 시내 시위 : 마산시청 앞 시위 군중, 시류 기물파괴

홍내무 · 신법무, 마산사건에 적색마수 개재 혐의 있다고 공동담화 발표

국회, 마산 2차 조사단 파견 결의 : 자유당 8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

대구 민주당원 100여명 시위 기도 : 경찰과 난투극

민주당 충청북도 당부. 부정선거규탄 농성투쟁 전개.

이대통령, 마산사건 조속한 선처책 지시.

전국 각급학교(초등학교 제외) 3일간 등교중지령.

공명선거추진 전국위원회, 마산테모는 경찰고문에 기인한 것이라는 담화발표

민권수호국민총연맹, 마산사건은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담화 발표

민족주의 민주사회당. 마산사건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는 담화 발표

반공투쟁위, 발포자엄단 · 재선거실시요구 담화 발표

민혁명당, 강압으로 국민 복종시킬수 없다는 담화 발표

- 4.13 마산 고 대학생 1000여명 시위 : 마산 행정사무 마비, 상가철시, 부산학생들 마산집결 김주열 시신, 독립병원 봉쇄 속에서 부검 : 눈의 철물은 직경 5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의 대 무장폭도용 최루탄으로 판명.

경찰, 김주열 시신 납원 이송.

이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 마산사건 배후에 공산당 혐의 있으며 난동자 엄단과 정국 안정 강조

경찰, 마산테모 관련 22명 에 대해 공공건물 파괴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남경찰국장, 테모 폭력화할 경우 발포 등 단호한 조치 취하겠다고 기자 회견 : 경찰, 마산사태 피해액 억대 추산

정부, 군검경 대공 3부 합동조사위원회 설치 : 마산적색분자조사 위해.

장부통령, 마산사건 긴급수습방안 대통령에게 건의 : 발포나 군대 출동 피하고 발포 : 고문 경관 처벌과 시체에 대한 잔악행위자 구속할 것 등 건의.

자유당, 마산사건 관련자 엄단 방침결정

민주당,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는 구호 당당히 외칠수 있다는 담화 발표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 6월 22일로 결정.

4.14 진주 민주당원 수십명 데모.
진주 진양군 학생 데모.
대한변협, 마산조사단 파견.
신도성 경남지사, 국회조사단에 “ 마산 2차데모는 공산당 수범 흡사하다” 고 언명
마산검거선풍, 20명 구속.

4.15 마산고교생 50여명 시위 : 무장경관저지로 해산
전주 민주당원 100여명 시위·행진 : 규탄대회는 좌절.
부산 동래 고교생 1000여명 시위감행 좌절
이대통령, 난동사건에 공산당 조종 있다 난동행위 엄단 강조 담화발표.
검찰, 2차 마산데모 관련 3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마산 향발.
민주당, 공산당개재 운운은 부정은폐수단, 성의있는 수습책 요구 담화 발표
마산사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행정부는 민심을 악화시키는 조치취하지 말기 바란다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
민권수호국민총연맹, 민심수습에 효과 없다는 이대통령 담화반박담화 발표

4.16 청주공고생 전원, 청주역 광장에서 선언문 낭독후 시위
공명선거추진위원회, 공산당 운운 등 적반하장이라는 성명 발표
민권수호국민총연맹, 대통령의 13일 담화는 실정도 모르는 말이라는 공개서한 발표
송상기 신임 마산경찰서장, 마산 7개 고교 측과 회담에서 “학생들은 할일을 했다” 고 언명

4.17 인천 민주당원, 시위기도 경찰제지로 무산.
진주·하동·창영 민주당원 데모.
한옥신 부산지검검사, 마산사건 공산당 개재 속단할 수 없다고 국회조사단에 언명

4.18 부산 동래고교생 1000여명, 데모, 시가행진, 투석전.
부산민주당원 11명 데모
청주 고교생 3000여명 시위 : 30여명 부상.
야간 국무회의, 데모진압 강경책 결정.
고려대생 4000여명, 의사당 앞 데모 : 정부에 대한 4개 건의안 채택.
정치 깡패 100여명, 귀교길 시위 고대생 습격 : 조직폭력배 동대문 특별단부(이정재) 가 청계천 4가에서 습격, 학생 40여명, 기자 3명, 경관 부상.
치안국 고위간부들, 19일 시위예견 발포 논의.
인권수호국민총연맹,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마산사건 조사단 파견.
민주당, “자발적 데모를 탄압할 것인가?” 라는 성명 발표

4.19 10만 중·고·대학생, 국회의사당·세종로 거리에 운집, 경무대로 행진, 경찰 실탄 사격 유�혈낭자 “서울대생 2000명, 대정부 결의안 채택.
대학생 4000여명, 이기봉 집 진격 : 경찰사격으로 해산
데모대 1000여명, 반공회관·서울신문사 방화, 중앙제1방송국점령
학생·시민 합세 무기탈취 기도·차량 시위 : 경찰 무차별 소탕작전 전개, 데모대 파출소 파괴.
시내 중·고교 일제 쫓기 데모 합류.

시위 군중 발포 명령자 : 서울시 경국장 유충렬. 경호실장 곽영주, 내무장관 홍진기.

부산고교생 2000여명, 실탄사격 속 시위 : “학생 9명 사망, 25명 부상, 경찰 1명 사망, 21명 부상

청주농고생 500여명, 농기구 유희시위.

인천공고 300여명 시위.

경북대생 4000여명 시위.

정부, 오후 1시에 서울일원에 경비계엄선포, 4시 30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비 계엄선포.

정부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에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사령관 송요찬).
군당국, 포고문 1·2 호 발표 : 1호. 질서교란, 안녕파괴행위 금한다, 2호, 집회 · 등교 금지, 언론 사전검열

문교부, 전국입시 휴교령 지시.

공명선거추진위, 학생데모는 조국애의 발로라는 담화발표

메카나기 미대사, 하오 8시 이대통령 방문 면담 : 근본적인 원인은 고려해야 한다는 희망 전달.

메카나기 미대사. 정당한 불만의 해결을 희망한다는 성명 발표

허터 미국무장관, 양유찬 주한대사에게 선거부정 항의각서 수교.

4.20 미국무성, 한국의 민주화 촉구한다는 성명 발표

이대통령, 4 19로 충격받았으며 불만의 주요원인 시정하겠다는 담화 발표

송요찬 계엄사령관, 학생들에 대한 보복행위 불용한다는 기자회견 : 학생 석방·고문금지, 치안국장에게 전달.

서울시경, 연행자 704명중 667명 석방발표

자유당, 시민데모 죄악시하고 경관발포 합리화하는 성명 발표

민주당, 비상계엄구성요건미비와 경찰잔학성규탄 성명 발표

김병로 등 재야 인사 13인, 계엄해제·구속자 석방 등 정부건의안 결의

청소년 데모대 200여명 새벽 시위

인천·수원·대구·전주·이리·광주·임실 대규모 시위 계속.

4.21 국무위원, 소요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담화발표하고 전원 총사퇴.

계엄사, 4·19 사상자 명단 발표 : 총사망자 민간인 111명, 경찰 4명, 총부상자 민간인 558명, 경찰 169명

장면 부통령, 4.19 수습책 10개 방안발표 기자회견 : 사태수습은 재선뿐이다.

송요찬 사령관, 주모자 학생석방, 보복경관은 계엄법으로 차단한다는 담화발표

각 병원, 사망자 유해 가족 측 인도.

서울시내 일원 버스 금주령.

인하공대생 100여명 데모.

메카나기 미대사, 경무대방문 각서제시 : 시위는 공분이며 선거법 개정위한 초당적 기구 구성·국보법 부분 삭제 등을 각서로 제시

4.22 국회, 시국대책위원회 구성.

이대통령, 변영태·허정 등과 난국타개책 논의.

변영태, 이대통령에 대한 공개장 발표

이대통령, 계엄 해제되도록 국민의 법질서 준수를 호소하는 담화 발표

인천·이리·군산·포항, 시위 계속.

이대통령, 자유당 총재 사퇴 언명.

서울대 문리대 교수회의. 구속학생 석방 결의문 채택.

- 회의동포, 이승만 퇴진요구 시위 : 뉴욕 ·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리스 · 일본 등지.
 계엄사. 9명 사망 추가 발표 (총 124명)
 [더 가디언], 책임은 이승만이 져야 하며 그 사임여부는 미국이 그의 집권을 바라는가에 의존한다고 보도.
- [런던 헤럴드], 이승만 정권 유지 위해 원조한 미국은 결판을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
- 4.23 변영태 · 허정, 이대통령 방문하고 과도적 국무원 개편인선을 협의.
 김병로 · 서상일 재야 인사 18인, 시국 수습임시 협의회 구성.
 장면, 부통령 사임서 제출.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고려 성명 발표
 인천·군산·포항, 시위 계속
 임화수·유지광 구속
- 4.24 이대통령, 자유당 총재 사임하고 대통령직에 전념하겠다는 담화 발표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공직 은퇴 선언.
 경찰간부들, 경찰 중립화 결의.
 전주, 시민·학생 2000여명 데모 : 서울신문지국·자유당 지부 파괴, 도지사 사표 음박
 마산, 데모 계속
 인천, 학생 1000명 데모
 서울시, 4·19 학생 합동위령제 서울시장 제주로 개최 : 학생 들, 관제위령제 거부 퇴장.
 4.25 계엄사, 서울 제외 전역 비상계엄 해제, 경비계엄 대치.
 서울 258명 교수들, 의사당 시위·행진. 시국선언문 14개항 낭독
 서울시민 1만여명, 철야시위 : 반민주억적도배들의 집 점령.
 수명 죽고 수십명 부상.
 춘천고교생 500여명 데모.
 전주, 학생 800여명 데모.,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
 민주당. 이대통령 하야, 정·부통령 재선, 개헌 요구 성명서 발표
 계엄사, 대통령 특명으로 구속학생전원 석방.
 매카나기 미대사, 아이젠하워 한국방문 취소·미국원조 중단 등 이대통령에게 경고
- 4.26 서울, 비상계엄선포 : 모든 차량통행 금지.
 3만여 서울시민들. 이승만 하야요구 데모 : 이기붕의 집 파괴, 이승만 동상 끌어 내림, 최인규의 집 소각.
 수송국민학생 데모.
 이대통령, 데모대 대표 5명과 면담하고 하야 확약
 미대사관, 전국적인 불만표시에 한국정부는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10 : 00)
 이승만, 하야 발표 (10 : 20)
 매카나기 미대사 경무대 방문(10 : 30)
 매카나기 미대사, 4·19 는 기념할 만한 날이고 한국당국의 노력 확신한다고 성명 발표 (11 : 00)
 동대문 경찰서, 실탄 사격 (11 : 20) : 4명 즉사, 31명 부상, 경찰서 전소
 4·19 청년학생동맹 대표 12명, 이대통령 방문 선거내각조직 등 3개항 요구.
 대구·포항·울산·인천·밀양·김천·안동·상주·경주·목포·대전의 학생·시민, 데모.
 이대통령, 대통령직 하야 담화 녹음 방송 (1 : 00)
 대구 · 부산 · 대전 · 광주, 비상계엄 선포 (2 : 00)
 부산시민 5만여 데모, 도청점령 : 자유당 지부 경찰서 · 파출소 소각 파괴.

계엄사, 26일 시위로 사망 24명, 부상 113명 발생을 발표
국회, 시국수습책 결의 (2 : 00) : 대통령 즉시 하야 · 재선거 · 내각 책임제 개헌 · 총선 실시 등의 시국 수습책.

4·19 의거 학생 대책위, 행정·입법·사법부에 부정선거원흉엄단 등 실천사항 요구하는 성명 발표.

국립방송, 4월혁명 찬양.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들, 방송중립화 · 편파방송 거부 등 결의 : 관철되지 않을시 총사직 결의.

대법원, [경향신문] 가처분 결정, 복간.

학생수습대 (학생자치단체). 치안확보에 총력 기울이자는 성명 발표.

전국 사망자 184명, 부상자 6000여명 집계 : 사망자는 서울 144, 부산 17, 마산 15, 광주 8.

4.27 이대통령, 사임서 국회제출.

허정 수석국무위원, 대통령 권한 대행

국회, 8명의원 3.15 부정선거자 규정 사퇴 권고 : 이기봉, 최인규, 한희석, 이준화, 장경금, 박만원, 손도심, 신도환 등.

자유당, 국민에 대한 사과문 발표 : 개헌단행 후 총사퇴 결의

자유당 혁신파, 새교섭단체 구성.

남녀 63개 고교대표 257명, 계엄사 방문 7개 요구조건 협의 : 조속한 개교, 경찰 중립화, 폭력 배근절., 통금시간단축, 거족적인 학도장, 학생특별위문대 조직.

박승준 검찰 총장 · 임철호 부의장. 사퇴

대법원, 3·15 당시 중선위원 겸임한 김두일·변옥주 대법관 사표 수리

대한노동조합내부, 어용노동단체 축출 운동 시작.

순천, 부정선거책임기관장 물러가라고 관공서 앞 시위.

청주. 3·15 부정선거 인책요구 시위 : 정인택 지사 사표제출.

서울 · 부산 · 대구 · 마산 등지의 각대학 대표, 질서 회복 · 학교복귀 결의
각대학 질서 유지반 편성, 각경찰서 배치.

[경향신문], 복각 첫호 발행.

허정 수석국무위원, 개헌후 에 대통령 선거하겠다고 기자회견.

육군특무대, 4·19 청년학생동맹 4명 연행조사 : 조총련 의 조종 여부들 단체 성격조사.

4.28 이기봉 일가 집단 자살.

이승만 부처, 경무대 떠나 이화장으로 옮김.

이정재. 자수

허정 수석국무위원, 과도 국무원 일부 조작 완료하고 질서 회복 · 제도 개혁 · 국민관용 등을 호소

국회 시국대책위. ‘국민에게 보내는 호수문’ 발표 : 파괴와 보복중지. 내각 책임제 후 국회 해산의 내용.

이승만 저격미수범 김시현, 유시태 출감.

계엄사. 범법 자처단 위해 고등군법회의 설치 : 계엄지역각급학교 개교 결정.

정부기관지 [서울신문], 자진무기휴간.

보사부내 4·19, 4·26 사태수습 구호 본부, 28일 현재 사망자 171명, 부상자 650명 발생했음을 발표

매카나기 미대사, 신정부 전면지지와 미국의 방위보장을 새로이 하겠다고 천명

4.29 국회, 젊은 영령의 피의대가로 민주주의 살렸다는 : 전국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 발표
허정 수반, 첫국무회의서 범법 공무원 처벌언명.

- 조인구 치안국장, 정치사찰 · 경무대경찰서 폐지 언명,
 이내무장관, 기자회견서 경찰중립화 역설.
 권법무장관, 부정선거 관련자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기자회견.
 허정 수반 · 매카나기 미대사, 공동성명 발표 : 대한경제원조업무의 즉각재개. 원조금의 정치
 자금화 불용 등 내용.
 최인규 구속 : 부정선거는 국무위원전원이 합의였음을 자백,
 정치범 서민호 출감.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어용학자 규탄 시찰.
 서울대 법대 교수회, 학도호국단 해체주장 성명서발표
 제주도 학생들, 데모 계속. 경북지구, 교원단체 결성 위한 발기인회 개초 (경북여고_
- 4.30 교수들, 혁신구국연맹 조직.
 서민호, 상경.
 마산에서 ‘민주횃불의 탑 건립위원회’ 조직됨 : 4.19 도화선 된 마산 유혈 투쟁 기념 위해 동
 아일보 마산지국과 유지들이 중심.
 부산에서 한국혁신세력 집결 촉진회 결성.
 법무부 회의, 안두회 재수감론 대두.
 전주 학도자진질서 유지반, 질서회복 계몽 운동 활동개시.
 프랑스 [마치] 극동지구장 ‘스무라’ 동양통신기고 : 4.19로 한국은 정치성숙도를 증명했으며
 이것은 재일한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 5.1 과도정부, 3·15 부정선거 무효 확인.
 대학신문들의 보도 : [중대신문] - 합리 · 합법으로 국민통치하는 정부 기대, [대학신문] -
 정상배준동 분쇄 역설. [동대신문] - 2공화국 기틀 법적 구체화 작업 촉구, [연세춘추] - 악의
 세력 일소와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고대신문] - 반혁명적 음모에 항쟁 천명.
 서울시내 47개 중 · 고교 · 3개 국민교 교직원들, 교원조합결성 준비위원회 결성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관제 노동집단인 대한노총은 물러가라는 성명 발표
- 5.2 과도국무원, 조각 완료.
 대구고교생 900명 데모
 포천중고생 1000명 데모.
 부산, 학생 수만명 데모 : 국회해산 · 개헌은 새 국회에 · 북한청년결기 등의 구호
- 5.3 포항고교생 300여명 데모.
 한양공고생, 교장 김연준 추방요구 데모.
 동구여상 300여명, 학생과장 사퇴요구 철야농성.
 대구시내 대학 학생 대표 7명, 데모중지 결의.
 인천 향만 노무자 30여명, 어용노조 규탄 데모.
 최인규 정식 수감.
 학도호국단 해체되고 학생 스스로의 조직태동.
- 5.4 부산학생 1,500 여명 데모.
 전치안국장 이강학, 경찰에 자수 : 비밀경찰조직지휘 자백.
- 5.5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기초위원회, 개헌공청회 개최 : 대학교수, 제헌동지회, 변협대표 등이
 참가.
- 5.6 김창숙· 이병로· 이강· 신숙, 과도정부 인사조치 비난성명 발표.
 5.7 매카나기 주미대사. 허정 수반에게 허터 미국무장관의 과정지지 각서 전달.
 자유당 중앙위 부의장 한희석 자수.
 대구 초 · 중 · 고교 교원 노동조합 결성.

- 혁신연맹결성대회, 좌 · 우파 이념 차이로 무산 : 좌파 - 독로당. 근민당, 구진보당, 우파 - 민혁당, 민사당.
- 5.9 대구교수협회결성.
이승만, 정계은퇴성명 발표
미평론가 월터 리프먼, 한국은 미국의 피보호국 · 피후견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논평.
- 5.10 한양대생들, 김연준 총장 사퇴요구 맹휴.
- 5.11 국회 내각책임제 개헌기초위원회, 내각 책임제 개헌안 국회제출.
정부, 내각책임제 개헌안 공고.
- 5.12 김창숙 · 장건상 등, 혁신동지협의회(가칭)를 조직하겠다고 성명 발표.
중앙교육연구소 연구원협의회, 서울시교육위는 물러가야할 인물이 재등장했다고 규탄성명 발표
- 5.13 서상일 · 김달호 · 윤길중 등 11명의 비보수계 인사, 사회대중당 (가칭) 발기 : 민족적 입장
교수하겠다는 발기취지문 발표
4월 혁명 유족회 발기
- 5.15 안동 · 경주 · 영천 · 금릉 지구 교원노조 결성.
부산지구 중등교조 겨성.
- 5.17 부산의 한국혁신세력 집결축진회 150여명, 사회대중당에 합류하기로 결의.
- 5.18 부산버스, 임금인상요구 파업
포항지구 교원노조 결성,
- 5.19 이문교장관, 교원노조 불필요 언명.
4·19, 4·26 희생자 합동위령제, 학생들 제주로 엄수 : 서울, 부산, 광주.
- 5.20 민족주의 민주사회당, 민주혁신당 등 재야 혁신계 세력, 한국사회당 발기
여수 부두 노동자 1000여명, 체불노임 지불요구 총파업.
대구지구 중등교조. 이병도문교장관 규탄성명 발표
- 5.21 전국대학생 민주수호공명선거추진위원회 발족 : 4·19 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 주동.
부산피복노동조합원들. 회사단체 협약거부에 총파업 단행.
부산지구 초등교조 결성.
- 5.22 교원노조 (대한교원 조합연합회) 결성 : 대학교수 15명, 중 · 고교교원 100여명, 국민교교원 100여명으로 구성. 교원지위향상위해 투쟁한다는 선언문 및 강연 마련.
북제주, 울산, 제주, 마산, 대전, 밀양, 괴상, 전주, 옥구, 부안, 진주, 승주, 인천, 진해, 목포, 천안, 평택 등지 교원노동조합 결성.
- 5.24 고정훈, 조봉암의 사형집행은 이박사의 지시에 따라 당시 특무대장이었던 김창룡소장이 김인숙 중령을 매개로 하여 경무대 비서 박찬일, 자유당의 임철호, 장경근과 통모하여 씨아이씨 장모 중령을 시켜 양명산과 관련 조작시킨 것이라 폭로.
- 5.26 문교부, 학원정상화를 위한 긴급조치요항발표 : 부정선거 가담자는 의법처단, 학원분규 수습 등.
대구 삼호방직 공장 1000여 교원, 어용노조규탄 데모.
전주시장 상인 500여명, 악질 세리 처단요구 데모.
- 5.27 서울등 비상계엄령 해제, 경비계엄 대체
4월 혁명 유족회 결성
혁신동지총연맹 결성 준비대회 개최 : 사대당과 한사당에 가담하지 않은 혁신세력이 혁신동지 협의회를 모체로 준비.
- 5.29 이승만 부처, 하와이로 망명.
경북지구, 교원노조연합회 결성.
- 5.30 전국대학교수단, 한국교수협의회 결성하고 시국선언 제2 호 발표 : 주권자의 감시실천 기관으

- 로 교수협의회 창설하여 정부는 부패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이니 상인 1000여명, 인정 과세 폐지요구 데모.
 충무, 군산, 광주 상인 수백명, 악질세리처단과 세제혁신요구 데모
- 5.31 단국대생들, 현국회해산 · 과도정부배격 등 외치며 국회 앞에서 데모 : 말리던 대학생들과 충돌 10여명 중 ·경상.
 문교부, 학원분규해소책으로 지방별로 학원수습대책위 조직하라고 지시.
- 6.1 정부, 파괴데모 행위 의법엄단하겠다고 천명.
 정부, 구국청년당 고정훈대표 발언 내사중임을 밝힘.
 4월 혁명부 상동지회 발족.
- 6.2 구국청년당, 사회혁신당으로 개칭
 구국청년당 대표 고정훈, ‘조봉암 간첩은 조작’ 등의 허언유포협의로 구속.
 대한방직 수언공장 400여명, 노임인상요구 총파업돌입.
- 6.3 반혁명세력 규탄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 사회혁신당 ·사회대주당 · 한국사회당 · 혁신동지총연맹의 대표 20여명 이 고정훈의 즉시 석방과 보수세력 투쟁목적으로 결성.
 영등포 소재 30개 단일 노조회원 150여명, 한국타이어 노조결성 방해 · 직원해고에 데모.
- 6.5 4월 혁명유족회, 4·19희생자 49제 거행.
- 6.6 한국청년당결성대회 : 천도교 세력 중심.
- 6.8 민주학생총연맹 결성대회 : 학생들 권익옹호에만 전력하겠다고 밝힘.
- 6.9 전국노동조합협의회, 4월혁명 전에 노동쟁의로 해직된 노동자의 즉시 복직과 체불임금지불을 기업주에게 요구
- 6.10 제2공화국의 기틀 마련할 내각 책임제 헌법 개헌안 국회에 상정,
 미도파 백화점 임차인 30여명. 무역협회에 강탈됐던 운영권 요구 데모.
 제일모직 1,300여 직공, 해고공원 신분보장 요구 데모.
- 6.11 반혁명세력규탄 공동 투쟁위원회, 반혁명세력 규탄대회 개최.
- 6.13 청년학생 60여명, 피의 대가를 개헌으로 보답하라고 의사당 앞에서 데모.
 전국 21개 대학 분규 계속
 대구지구 교조, 민주학원 쟁취 쫓기 대회 : 부정선거 가담한 교장 · 교감 규탄, 대한교련 해체등 주장 데모.
- 6.14 검찰, 총선 앞두고 혁신세력 내사에 착수
 사대당 · 한국사회당 · 사회혁신당, 검찰 내사를 정치적 저의가 의아하다고 비난.
- 6.15 내각책임제 개헌의 국회통과 (찬성 208표, 반대 3표)
 철공노조 직공 1,5000여명,외국기계도입반대, 노조의 비민주적 조항 개폐요구 데모
 조선대 교수 20여명, 박철웅 총장 학교재단 부정유용협의로 고발.
 유족 · 시민 500여명 · 경북 피할살자유족회 결성.
- 6.16 정부시국수습대책회의, 데모단속에 강력방침결정.
 이문교장관, 교원노조는 불필요하다고 언명.
- 6.17 연합신문 노조결성
 사회대중당 결성준비위, 전국대표자 대회 개최하고 허정내각과 유엔에 보내는 메시지 채택 : 반혁명행동감시와 평화 통일 가오.
- 6.18 사회대중당 대표 총무위원 서상일, 남북통일 축구 위해 남북한 문화교류 제의.
- 6.19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내한 : 집단 방위강화책 등 상의.
 경남지구 초 · 중등 교조 결성.
- 6.20 아이크 · 허정 공동성명 발표 : 한 ·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와 미국의 경제원조 등을 약속.
 민주혁명 청년연맹 발기선언문 발표.

- 6.21 경관 1000여명, 의사당 앞에서 경감 구타한 김선태 의원 규탄 데모 전개. 사상 초유의 경찰 데모.
- 6.22 문교부, 교원조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므로 해체 방침이라고 천명
4월 혁명 유족회, 4월 열령 봉안식거행.
4월 혁명 학생 동지회, 4월 혁명순국시민합동위령제 거행.
서울시 학원 수습대책위, 학원분규해결책 등 논의 : 6월내로 개강 못하면 휴교조치 등 논의.
마산지구 교조, 이문교 규탄 시위.
- 6.23 대한교원 노조연합회, 교원노조 해체지시에 대한 반박 및 이문교 사임권고문을 공표 : 교원노조는 합헌 · 합법이다
부산지구교조원 2,100여명, 교련해체 촉구 켈기대회 : 문교부 장관 규탄
- 6.24 체신 · 철도 · 교원 등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지원키로 결의
대구지구 교원노조, 이문규 규탄 성토 조합원 켈기 대회를 대구역 광장에서 개최
국회,군정 법령 55·88호 폐기하고 신문 · 정당 등록제 법안 통과
- 6.25 부산지구 교조원 500여명, 문교장관 규탄과 교원노조로 단결하자 등 외치며 데모.
마산 피학살유족 관련자 노현섭· 김용국, 정부의 양민처형 내용 밝히려는 플래카드 들고 마산 시내 시위 행진
- 6.26 인천지구 중등 교조 결성
전남교조 도연합회 결성.
전국노동조합 협의회, 교원노조와 공동 투쟁할것이라는 성명 발표
대구방직 공장 직공 680여명, 노임인상요구 데모.
총선대비 혁신진영 선거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연합공천추진을 해왔으나 사대당의 불참등으로 난항.
- 6.27 정부, 5대민의, 초대참의원 선거일자를 7월 29일로 공고 : 민주 · 자유 · 혁신 · 무소속의 4파전.
- 6.28 혁신, 연합공천 실패 : 사회대중당 · 혁신진영선거대책협의회 · 사회혁신당의 세갈래로 분열
- 6.29 부산지구 교조, 이문교 규탄대회.
대한교조연합회, 이병도를 노동법위반으로 고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문교부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
- 6.30 문교부, 교원노조 해체는 정보방침이라고 거듭 언명
인천 PLO 분회 노동자, 노임인상요구 데모 : 데모 저지노동자들과 충돌하여 39명 부상, 연행
노동자 석방요구하여 경찰서 습격하여 노동자 40여명 구속됨.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전국대의원대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개선 후 임금인상 감원방지 등을 결의
- 7.1 문교부, 교수사퇴요구로 단식농성중이던 경북의대에 휴교령 : 교수 감금하고 단식 농성.
- 7.2 7 · 29 총선 민 · 참의원 후보 등록 마감
사회혁신당, 총선 전면보이콧 성명 발표
천안 600여명 학생들, 3·15부정원흥 한희석 출마규탄 데모
전부교조연합회 결성.
김천지구 교조 이문교 규탄성토.
서울대 문리대 1,500여명, 문리대 국민계몽대 결단식 거행 : 단대별 계몽대조직 시작.
- 7.3 대구서 전국교원노조 대표자 대회 : 문교장관 사퇴 및 교련 해체 등을 결의, 각 정당 대표와 민 · 참의원 입후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울산 초·중·고 교원 노조원 700여명, 문교장관은 교원노조해체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데모.
- 7.4 혁신동지 총연맹, 혁신세력후보선거운동원 폭행사건은 혁신 세력의 진출을 억압하려는 보수분

- 자들의 소행이라는 담화발표.
- 7.5 부정선거주모자 첫공판.
- 7.6 정치깡패들 공판.
서울대 국민 계몽대 결성 : 서울대생 1,500여명, 신생활 계몽 · 농촌 계몽등을 통하여 혁명정신의 양양을 결의, 전국 대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 국민계몽대 선언문 낭독, 사대당, 연설회 통해 통일문제에 중립국 감시안과의 절충을 제안.
민주당 의원들, 사대당 주장은 용공성 통일이라 비난.
울산 고교생 200여명, 교원노조지지 시가행진.
- 7.7 서울대 국민계몽대, 전국계몽운동 위해 각 지방으로 출발
- 7.9 대한변협, 교원노조해체명령은 위법이라고 질의에 회답,
광주 · 군산 고교생들, 자유당 출신 입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요구 데모
경남 노동조합연합회, 부산역 광장에서 이병도 경남문사국장 규탄 성토 대회 개최
- 7.11 학생 신생활 계몽대 299여명, 사치배격 · 신생활 운동 등 전개 : 시내 카바레 등에서 양담배 소각하며 신생활 혁명 외침.
- 7.12 사대당 서상일, 북한과 경제 · 문화 · 인사면의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
마산 피학살자 유족회 조직.
- 7.13 민주당, 서상일 발언은 한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망언이라 비난
- 7.14 허정 국무총리 교원노조는 불법이라고 언명.
- 7.16 서울대 계몽대 50여 명,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국산품 애용운동 전개 : 서울 세종로에서 양담배 등을 소각
경북지구 교조연합회, 경북지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
경북지구 교조연합회, 사친회비 징수 반대 성명, 학부형에게 드리는 호소문 발표.
- 7.17 혁신총동맹 이광진 상무위원장, 중공의 유엔가입 없이 세계평화 없다는 담화 발표.
대한교원노조연합회, 1차 총회 개최 : 명칭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로 개칭
- 7.18 사대당 · 한국사회당, 혁련의 발언을 국제정세를 무시한 몰지각한 언사라고 비난담화 발표
- 7.19 예산 중 · 고생 800여명, 반혁명세력 규탄데모.
천안 중 · 고생 1500여명, 옥중 출마한 한희석 규탄데모.
- 7.20 반혁명세력 규탄데모, 서부경남 일대에 확대
- 7.21 이태희 검찰총장, 혁신계열의 용공적 발언을 내사하겠다고 언명.
마포구민 300여 명, 부정선거원흉 옥중출마 규탄데모.
- 7.22 이내무 장관, 특정한 사퇴요구 데모는 위법이라고 언명.
- 7.23 조흥은행에서 전국은행노조연합회 결성.
- 7.25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전국 실업자 구호대책 투쟁위원회 결성.
함안 학생 · 시민 80여 명, 반혁명 규탄데모.
안성 2600여 학생들, 반혁명세력 규탄데모.
남해 4 · 19 동지회 등 50여 명, 반혁명세력 규탄데모.
- 7.26 사대당, 민주당 대표 장면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7.27 자유법조단 신태약 변호사, 장면 민주당 대표에게 부정축재자로부터 18억 환의 선거자금을 받은 민주당 신태약의 명단을 공개요구하는 공개장 보냄.
삼천포 시민 · 학생 1000여 명, 반혁명세력 규탄데모.
- 7.28 민주당, 신태약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
경남지역, 반혁명규탄데모 절정.
경북 피학살자유족회 위령제 개최 : 대구역 광장. 유족 · 시민 2000여 명 참가, 처형 관련된 군경 색출하라는 선언문 낭독.

- 7.29 제2공화국 첫 민·참의원 총선거 실시 : 민주당 압승. 혁신계 전멸. 13개 구에서 투표구 파괴·개표중단 등 혼란.
- 8.1 민주당 신·구파 : 분당론으로 정면 대립.
경찰, 7.29 총선 사건 관계자 322명 방화 및 소요죄로 구속.
- 8.2 경남지구 교원노조연합회 결성.
- 8.4 민주당 구파, 신파와 결별 선언 성명 발표.
한국 철도기관차노조 결성 : 대한노총과 철도노조연맹과 결별선언.
- 8.6 민주당 신·구파 당선자 총회 각각 개최 : 신파-구파의 의총거부 성명을 당기구 파괴라고 반박, 구파-7일 의총거부와 분당선언 재확인
- 8.8 제2공화국 민·참의원 개원
서울 시민 200여명,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반혁명 규탄데모.
대구교원노조조합원대회, 부당 인사조치 시 극한투쟁을 결의.
- 8.9 경북교원노조 간부 전배인사 발표된.
- 8.10 대구지방공무원 노조, 교조투쟁을 지원.
- 8.11 경북지구 교원노조원 150여 명, 부당인사 철회 요구하며 경북도청 광장서 연좌데모.
경북 고조연합회, 경북지사 상대 행정소송 제기.
- 8.12 민·참 합동회의, 제2공화국 초대대통령에 윤보선 선출 : 재석 259표 중 208표로.
윤 대통령, 거족적 내각을 희망한다고 기자회견.
- 8.13 윤 대통령, 민·참 합동회의에서 경제안정 제일주의를 지향한다고 취임 맹세.
경북 교원노조, 도지사 담화문 반박 성명 발표.
- 8.14 북한수상 김일성, 남북연방제 제의.
참의원, 경북교조 분규 진상조사특별위원 대구 파견.
사회대중당 경북도당, 대구 광장서 반민주세력규탄대회 개최.
- 8.15 경북교원노조연합회, 교조탄압 및 부당인사에 항거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대표자대회 개최 :
경남, 충남, 전북대표 등 1500여 명 참석. 21일까지 요구관철 안되면 9000여 교조원 전체의 사임 결의.
- 8.16 윤 대통령, 총리에 김도연 의원을 지명.
공무원 4개 노동단체, 경북교조 집단사퇴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성명 발표.
- 8.17 민의원, 김도연 의원 총리인준 부결 : 찬성 111, 반대 112, 무효 1.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교원노조 교사 좌천발령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성명 발표.
- 8.18 윤 대통령, 2차로 장면 의원을 국무총리에 지명.
한국교원노조 · 전국철도연맹 · 전국체신노조 · 전국해원노조 · 전국전매청노조 공동투쟁 성명 발표 : 교원노조 간부 부당인사조치 반대 투쟁위원회 결성과 최후까지 극한 투쟁을 결의.
이문교, 교원노조투쟁은 불법이라고 비난.
포항 · 영일 지구 교원노조, 쫓겨시위.
- 8.19 민의원, 제2공화국 초대총리에 장면 인준 : 찬성 117, 반대 107, 기권 1.
민주당 구파, 분당 결정.
장면총리, 균형내각구성 · 경제건설 등 내용의 성명 발표.
전국노협, 경북연합회 규조투쟁 지지성명.
- 8.20 대구서 교원노조탄압 반대 전국 노협원 총궐기 대회 : 3000여 교조원 참석하여 교조합법성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결의, 데모, 시가행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대의원대회 개최 : 종로국교, 이후의 투쟁계획 토의.
- 8.22 민주당 신 · 구파 조각협상 결렬 : 신파단독조각에 착수.
- 8.23 장면총리, 조각을 완료 : 거의 신파일색.

- 윤 대통령, 정부의 강력시책과 국민의 협력 요망한다는 담화 발표.
- 민주당 구과, 민·참 양원 의총 개최하고 야당 입장서 투쟁키로 결의.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장 총리 규탄성명 발표. : 민주당구과 동지회의 이름으로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결정.
- 8.24 장면총리, 신과 일색의 내각이므로 불원간 개각 단행하겠다고 기자회견.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법무·보사·문교 3부 장관에게 불법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 제출.
- 8.25 장면총리, 매카나기 미 대사와 요담. : 경제원조 증액 등을 요청.
대구 초·중·고 교조원 2000여 명, 경북교조원 전원의 총사퇴 결행 선언대회 : 대구역 광장.
- 8.26 민의원서 신·구과 폭력전 : 정헌주 의원의 신상발언을 둘러싸고 양일동 의원 등이 단상 난투극.
- 8.27 민주당구과, 장면총리 시정방침을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난.
마산서 상경한 3·15 의거 부상자 동지회 회원 40여 명, 국회 앞에서 반혁명세력 규탄데모, 철야농성.
부산지구 중·고 교원노조 200여 명, 총회 열고 경북도 당국의 인사조치 규탄.
마산 피학살자 유족회, 마산지고 합동 위령제 개최 : 100여 군중 참가. 처형 관련 군경 색출 등의 플래카드.
- 8.29 4.19 발포명령사건 결심, 유충렬, 광영주 사형 구형.
- 8.30 4.19 발포명령사건 결심, 홍진기 사형 구형.
조선전업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 8.31 민주당 구과동지회 86명, 원내교섭단체 등록.
- 9.1 제37회 정기국회 개최.
장면총리, 민주당 구과 교섭단체 등록을 사실상 분당행위라 비난.
- 9.3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준비위원회 구성.
교조탄압 반대 경북 투쟁위원회, 성명 발표.
- 9.4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행정부에 경고성명 발표.
- 9.5 4월 혁명 유족회원 40여 명, 원흉들에 대한 무죄 변론 규탄데모.
- 9.7 검찰, 무죄변론 변호사 규탄데모에 적극 방지 강경책 제시.
- 9.8 서울 변호사의, 4.19 사태 계기로 발생한 모든 사건 변호를 사퇴키로 결정.
대구 교조원·시민 1300여명, 대정부 교원노조 합법 천명 촉구대회 : 교조의 행동권을 쟁취할 때까지 결사투쟁할 것 강조.
- 9.11 전국교조 대표자회의, 쟁의권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결의.
- 9.12 장면총리, 구과 5의원을 포함한 제2차 개편개각명단 발표.
- 9.13 민주당 광태진 외 16명,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출.
- 9.14 장면총리, 이번 개각은 신·구 거당내각이므로 정국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기자회견.
- 9.15 민자통주비위 제2차 회의 개최 : ‘자주·민주·평화’의 3대 통일원칙을 발표.
사회대중당, 당 주도권 둘러싸고 분열, 비진보당계서 결별선언 발표.
대한노총·전국노동조합협의회, 쌍방 대표자간에 통합에 합의.
- 9.16 대한상이용사회 1000명, 사회보장제도 확립 요구 데모.
- 9.18 고령지구 교조, 광태진 규탄 성토대회.
서울지구 교조, 서울대학 신생활운동 지지성명.
- 9.20 은행노조 경남지구 결성.
- 9.22 민주당 구과, 건전한 보수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발족할 것이라는 분당선언문 발표.

- 장면총리, 분당은 국민에 명분 한서는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논평.
서울대 신생활계몽대, 신생활운동을 입법화하고 가넘버 차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 드리는 공개장 발표하고 가넘버 차량 적발하여 강제유치.
- 9.23 민주당 신파, ‘민주당’ 으로 민의원 원내교섭단체 등록.
서울대 신생활운동 계몽대 300여 명, 신생활운동 부르짖으며 국회 앞 데모.
마산 지구 교조, 심봉재 의원 규탄대회.
- 9.24 서울시내 남녀중 · 고생 3000여 명, 신생활 계몽대 결성.
경전 · 남전 · 조선전업노동조합, 전업 3사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공동투쟁하겠다고 성명.
- 9.25 부산 · 대구 지구 교조원 2500여 명, 노동조합법 개악반대 단식투쟁에 돌입.
한국교수협회, 권력쟁탈 위한 파쟁을 경고하고 시국안정촉구 성명 발표.
3 · 15 부정선거 원흉 공판, 최인규, 이강학 등 사형 구형.
- 9.27 전주 초 · 중 · 고 교조원 700여 명, 교조 불법화 반대 집단농성 단식투쟁에 돌입.
예산 농민 1500여 명, 예당 수리조합 피해보상 요구하며 의사당 앞 데모.
- 9.28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전국 대표자대회 : 사직공원서 노동법 개정안 반대투쟁 목적으로 600여 교조원 참여 하에 국회 앞 연좌데모, 문교부서 철야농성 투쟁 전개.
대구 시내 중 · 고교생들, 교사들의 단식투쟁에 호응하고 공동단식 투쟁에 돌입 : 줄도교사 150여 명, 의사불명 교사 74명.
- 9.29 교원노조 불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등 개정법률안, 민의원 특별심의위원회에서 폐기.
교원노조 대표 300여 명, 동 법안 철회 요구하며 의사당 앞 데모.
이내무, 데모배후 포착하여 강력단속 언명.
대구 교조원 1200여 명 쓰러지고 40여 명 중태. 5000여 학생 단식, 6000 학생 노천 학습.
교원노조 불법화 반대 전국 대표자 회의, 단식투쟁 해체 지시.
- 10.2 사대당 비진보당계, 서울시당 결성하고 정식 정당 등록.
- 10.4 경북 교조, 교직단체법 반대 성명 발표.
- 10.6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교직단체법안 반대와 대한교련 해체 등 공개장 발표.
- 10.7 한양대생, 등록금 삭감 요구 데모 : 경찰, 학생 56명을 연행.
- 10.8 한양대생 1500여 명, 연행학생 석방 요구 성동서 습격, 기물 파괴.
서울지법, 발포명령사건 등 6대 사건 연도공판서 검찰 공소를 사실상 전면 파기 : 발포관계 유충렬에만 사형 언도하고 거의 무죄판결.
서울 도동 · 동자동 · 양동 등의 판자집 주인 100여 명, 국회 · 중앙청 앞에서 철거반대 연좌데모.
민주당 중구당원 300여 명, 판결규탄 시가행진.
민주학생총연맹, 재판부 비난하는 성명 발표.
마산 시민 3000여 명, 특별법 제정 요구 데모.
- 10.9 장면총리, 혁명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위해 개헌은 부득이하다고 기자회견.
6대 사건 판결에 불만 각처서 폭발 : 서울 · 경남 · 경북 등지서 규탄데모 발생.
4월혁명 상이동지회원 · 민주당 중구당원, 무죄판결 불만 데모.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부정선거 원흉 차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10.10 윤대통령,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 발표하고 민주당 분당을 반대한다고 기자회견.
4월혁명 유족회 · 4월혁명 상이동지회원 등 100여명, 판결규탄 철야시가행진.
- 10.11 4월혁명 유족 · 부상자들과 수천명의 시민 · 학생드르 국회개산 요구 데모 : 4.19 부상학생들 민의원에 난입 의장단 일시 점거, 민의원, 정쟁지양과 특별입법제정 약속.
반혁명 세력 규탄 공동투쟁위원회, 10.8 판결 규탄하고 국회해산, 내각 사퇴 요구하는 성명 발

표 : 사회혁신당 · 사회대중당 · 혁신총연맹 · 한국사회당 · 한국독립당 등 혁신정파들이 결성.

윤대통령, 11월 중순까지 혁명입법 완수키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증시로 특별입법에 착수.

장면총리, 부정선거 원흉 처단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할 것이며 난동데모는 의법 엄단하겠다고 기자회견.

성균관대 민족통일연맹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10.12 부산 4.19부상 동지회 및 4월혁명 유족회원 100여 명, 판결 규탄 데모.

10.13 장면총리, 10.11 사건에 정부 책임 통감한다는 성명 발표.

10.15 혁신계 두 갈래로, 한사당 · 독로당 · 혁련 · 비진보당계 사대당 · 한독당(비교적 온건세력)의 5개 정치단체, 혁신통합하여 단일정당 발족하겠다고 성명 발표 : 구진보당계 사대당도 혁신통합투진(비교적 급진세력).

10.16 사회대중당 진보계, 혁신세력 대동통일추진위 구성.

10.17 정부,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등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개헌안 공고.

10.18 민주당 구과, 보수 양당제를 지향한다는 신당 발기취지문 채택.

10.19 장면총리, 보수양당제도의 분당 찬성하며 안정세력 받침삼아 강력한 정책 수행하겠다고 기자회견.

10.20 전국 피학살자 유족회 결성대회 : 회장에 노현섭 선출, 처형된 자의 호적 정리 · 처형 관련자 법적 처단 · 유골 발굴 · 위령비 건립 등 위한 대정부 투쟁방안 결의문 채택.

10.21 맨스필드 미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한방안 제시.

경남 노조연합회 · 부산부두노조 500여 명, 민주노동운동 반역도배 규탄 성토대회 : 어용노조 규탄 시가행진.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정의신고.

10.22 정부, 민스필드 상원의원의 한국의 중립화 방안은 공산통일로의 길이므로 반대한다고 반박.

부산 부두노조 300여 명, 채불노임 지불 요구 단식농성투쟁 전개.

10.23 민주당, 자유당의 재건공작 용납할 수 없다고 신당설에 경고 담화 발표.

10.25 전국자유노조 부두노동자 정의발생신고.

10.26 국제자유노련, 한국 교조에 격려 서한.

10.30 전국학생연맹 결성대회 개최 : 중 · 고 · 대학생, 학생 상호간의 친목과 국민계몽 및 새생활 운동 전개 목적으로 결성.

서울대학교 국민계몽대, 혁명을 빙자한 각 단체 해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성명 발표.

10.31 개정지방자치법 공포 : 서울시장, 각도지사 직선.

서울대 상과대생 300여 명, 파고다 공원서 정객들의 각성 촉구 데모.

구진보계 사대당 · 혁신 연맹, 혁신통일추진위 결성 : 대표에 장건상 추대.

11.1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발기대회 : 대정부 및 사회건의서 채택.

11.2 장면총리,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한론을 재차 배격한다는 담화 발표하고 미대통령 후보들에게 한국 중립화를 거부한다는 전문 발송.

민의원, 한국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자유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11.3 사대당 간사장 윤길중 의원, 국회의 통한 결의안은 통일에 성의 없는 결의라고 비난성명 발표.

장면총리, 학생 선도책 강구 위해 대학교수들과 회합 갖겠다고 기자회견.

전국체신노조, 봉급인상 · 수당 요구하며 쟁의 돌입.

시경 정보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배후 불순세력 개재여부 내사중이라고 언명.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학생들, 현내무와 강치안국장 방문하고 불순배후세력은 없으며. ‘연립 ·

- 중립 정부론' 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문맹퇴치운동 전개.
- 11.4 국방장관, 중립화 통한론은 한국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것이라고 답화 발표.
맨스필드 미 상원의원, 한국 중립화 아니면 자결권 보장되어야 한다고 <동아일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특별 회견.
- 11.5 부산대학생 100여 명 통한 쫓기 선언문 배포.
부산대학생 4000여 명, 통한 쫓기 데모 : 교수 만류로 중지.
미 국무성, 유엔 통하여 한국의 통일을 달성한다는 결의 재확인하는 보고서 발표.
- 11.7 부산 버스노조, 노임인상 · 8시간 노동제 요구 총파업 단행.
- 11.8 민주당 구과, 보수신당 발기준비위원 대회 개최 : 자유민주주의 정당정책과 신당 발기 선언문 통과.
- 11.9 미 대통령에 민주당 케네디 당선.
장면총리, 반공 내건 신당발족에 협조하고 대미외교에 변동 없다고 기자회견.
- 11.10 허더 미 국무 · 정일형 외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 적절한 유엔의 결의에 의한 한국통일성취 위해 전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11.12 신당준비기획위원회, 당명을 신민당을 확정.
경희대 민족통일연구회 결성.
- 11.15 공화당 합동 발당대회 개최 : 구자유당계 · 통일당 · 조민당 · 노농당 · 한독당 · 한사당 · 민족주의민주사회당이 참여.
- 11.16 연세대생들, 총장서리 언더우드 불신임 건의안 채택하고 미대사관 앞에서 데모 : 언더우드의 집 파괴.
경찰, 연대 데모학생 62명 연행, 52명 구속.
비진보계 사대당 · 한사당 · 혁신연맹 · 독립노동당 · 한독당의 5개 당 통합추진 실무위원회, 통합 신당의 이름을 독립사회당으로 결정.
- 11.17 연세대생 800여 명, 연행학생 석방 요구 데모, 시가행진. 경찰, 100여명 연행.
경찰, 연대생 182명 구속(16, 17일).
4월혁명 학생동지회, 학생의 난동행위를 일체 배격한다는 결의문 발표.
대구 전매청 노조 700여 명, 노조간부 해고처분 항의데모.
전국철도노조연맹(기관차 노조 제외) 산하 9개 노조에서 쟁의행위 가부투표(총투표자 21502명 중 인 19316명(89.9%) 찬성)
- 11.18 서울대생 600여 명,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결성 : 북한학생, 남한학생, 국민에게 보내는 자주통일 메시지 채택.
- 11.19 북한 인민회담 상임의장 최용건, 남북한 연방제와 남북간의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경제위원회 창설 제의.
윤대통령, 통한보다 남한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화.
- 11.22 신민당, 장경근의 일본 도피 등에 대해 장내각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경고답화 발표.
- 11.23 북한, 남북회담과 물자교환등 제의.
- 11.24 장면총리, 북한 공산측의 남북한 교역과 남북한 연방제 구성 제의 등은 상투적 선전공세로서 정부로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기자회견서 언명.
4월혁명 부상학생 동지회 300여 명, 국회 앞서 혁명입법 완화에 반발데모.
구진보당계 사회대중당의 김달호계, 사대당 결성식 거행 : 위원장에 김달호 선출. 민주사회주의의 원리 위에 자본주의 개혁하겠다고 결성선언, 혁신세력은 사대당 · 혁신통일추진위 · 독립사회당의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됨.
- 11.25 노총 · 노협 통합대회, 노총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합병 결의.

- 11.26 정외무, 적십자 국제위원회 통하여 북한 동포에 쌀과 생필품 원조 용의 있다고 기자회견.
- 11.27 3일간 계속된 노동단체 통합대회, 중앙위원장 선출에 불만 품은 폭력 소동으로 무기중단.
- 11.28 북한 부수상 홍명희 · 작가동맹 위원장 한철야, 남북회담 및 문화교류를 다시 제의.
- 11.29 실업자 500여 명, 일터 달라고 총궐기 데모.
- 11.30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파업, 노사쌍방 4개항 합의.
- 12.2 민주당, 통일문제에 관한 성명 발표 : 북한 남침은 최악이라 비난하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
- 12.3 대한민국 대학생총연합회, 전국 학생반공총궐기대회 개최.
경북지구 교조, 동해지구 연합회 구성.
- 12.6 사대당, 사대당은 영세중립이 보장되는 조국통일을 기본 과업으로 하며, 남북서신협상 · 물물 교환과 공산 측의 연방제 위에 민족최고 회의를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 국민투표하자고 성명 발표.
전국자유노조 부두노동자, 파업 가부투표(37300명 투표, 97.6%찬성).
- 12.7 민 · 참 양원의 혁신계 의원들, 혁신구락부를 결성 : 서상일, 김성숙, 윤길중, 이훈구 등 7명.
- 12.10 박태선장교교 신도 수천 명, 기사불만 동아일보사 습격 : 경관 20여 명, 사원 4명, 부상, 경찰 1214명 검거.
윤보선대통령, 정부는 치안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신민당, 동아일보 피습에 대해 정부 책임지라는 담화 발표.
- 12.11 신현확내무장관, 난동 방지에 현행법은 미약하므로 구보안법 같은 임시조치령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언명.
- 12.12 서울시 · 각도 지방의원 선거 실시 : 민주당 185석, 신민당 66석, 무소속 209석 차지.
- 12.13 장면 국무총리, 치안확보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명.
- 12.14 신민당, 정부의 보안법 강화와 데모규제법 제정 시도는 망민법이기에 반대한다고 언명.
- 12.15 장건상, 혁신계의 단결을 호소하는 담화 발표.
- 12.16 목포 근해서 남녀 53명 집단 월북 기도 : 여수 · 순천 등지의 교사 중 · 고교생 등.
- 12.17 4월혁명 유족회 · 4월혁명 부상자 동지회원 300여 명 혁명입법에 자동케이스 해당의원 참여 반대한다고 국회 앞 데모.
장면국무총리, 목포 근해 집단 월북 사건은 여 · 야 공동책임으로 야당과 치안확보에 대한 근본대책 협의하겠다고 기자회견.
민당, 월북기도사건의 전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장총리의 회견담 반박.
- 12.19 여 · 야, 시국 안전 위해 시국 수습책을 모색.
신내무장관, 오염색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새입법 마련하겠다고 민의원 내무위서 언명.
- 12.20 은행노조, 서울지구 결성.
전국자유노조 부두노동자, 제1차 시한파업(36시간)
- 12.21 사대당, 국가통일을 위한 거구협의체 구성을 재제의하고 국가보안법 강화 · 데모규제법 제정을 이승만 독재를 재연한 제2의 공재라고 비난담화 발표.
전국자유노조 부두노동자, 제2차 시한파업(72시간)
- 12.26 북한 공산측, 50개의 채광기술반 파견을 제의.
김창숙 · 장건상 등 혁신계 재야인사,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준비위 결성 : 평화적 자주독립통일의 실현 위한 국민운동 전개하기 위하여 각층인사 망라한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구성에 합의.
- 12.27 민자통 준비위, 남북간에 경제 · 문화교류 및 서신교환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12.30 윤대통령, 새해부터 건전 양당정치 하겠다고 송년 기자회견.

<1961>

- 1.2 장면총리, 아이블릭과 케네디 신정부의 경제원조 요청하기 위해 5월 경에 방미계획.
- 1.3 윤길중, 장건상 등과 추진하던 혁신당 추진을 파기하고 우파적 입장에서 새로운 혁신정당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성명 발표.
- 1.4 여·야 각 정파 의원들, 새 통한책 모색 : 서민호 미의원 부의장 - 치안확보 후에 통신·문물 및 남북간 비정당인 교류가 행해져야 한다. / 양일동 - 각파 대표들로 구성된 통일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며 당장 문물과 비정당인 교류를 행해야 한다. / 신민당 서석범 의원 - 남북 총선거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수정당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승리 거둘 수 있다. 정헌주 국무원 사무처장, 새해 정부의 초미의 급무는 배후로 침투해 들어오는 공산주의자를 막는 것이고 대북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언명.
전북 시민 300여 명, 전북 부정선거 규탄투쟁위원회 결성하고 도지사 사퇴 요구 데모.
- 1.5 유진산 신민당 간사장, 남북교류는 시기상조, 경제재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 신민당 정책위 부의장 정해영 의원, 남북한 교류의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한에 경제사절단 파견 하자고 주장.
- 1.6 장면총리, 남북교류는 위험한 주장으로, 남북교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창숙,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 비난하고 서신왕래·경제교류 등을 위하여 정부의 성의와 노력이 있기를 요망한다는 성명 발표.
- 1.7 사회혁신당 거정훈 대표, 새로운 혁신정당운동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 한국교저신고증 법정수당쟁취 중앙투쟁위, 혁명정신이 교육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성명 발표.
- 1.8 혁련계와 전사대당 중도파가 중심된 혁신당 창당대회 : 민주적 사회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유엔 협조하에 국토를 통일하고 영세중립국으로 평화에 기여한다는 정강 채택, 장건상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
민주당, 대한민국의 주권하에서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며 남북교류·중립화론은 배격한다는 통일방법론 발표.
조국통일민족전선 결성대회 : 민족자결원칙에서 조국통일의 달성을 표방하며 위원장에 정순학 선출.
- 1.9 조국통일민족전선, 고정 이데올로기 벗어나 현실에 맞는 통일방안 모색하자고 성명 발표. 민자통, 정부의 통일문제 태도 비난하고 서신·경제교류 막을수 없다는 성명 발표
- 1.10 미 맨스필드 의원, 동양통신과의 회견에서 한국의 힘이 약한 한 한국중립국보장은 어려우며 유엔감시하 총선으로 통한 실현되어야 한다고 언명.
- 1.12 38회 임시국회 개회.
전남 초·중·고 교사 520여 명, 교육공무원의 수당지급 요구하며 데모.
- 1.13 전북 부정선거 규탄투위 부녀위원 400여 명, 상경하여 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장 선거부정 규탄데모.
- 1.15 민자통, 통일선언 및 강령 발표.
- 1.16 경북교원노조원 80여 명, 교조설립 신고증 교부 및 법정수당 요구 내걸고 집단농성투쟁. 부정선거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담당하는 특별검찰부 정식활동 개시.
- 1.19 내무부, 대공사찰강화 위해 반공특별법 기초중임을 언명.
경북교조탄압반대투쟁위, 경찰 태도에 비난성명.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경찰탄압 반대투쟁위원회 구성.
아시아지역 4개국 반공외상회의개최 : 한국과 월남의 유엔가입과 유엔에서의 자유중국의 정당한 대표권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자유세계에 호소.
- 1.21 케네디, 미35대 대통령에 취임.
혁신세력, 통일사회당 결성준비위원회 결성 : 전사대당 결별과 윤길중·고정훈, 한국사회당

의 김성숙, 혁신연맹의 정상구 등이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사회주의 표방. 이로써 혁신계는 사회당·사대당·혁신당·5당통합잔류파·통사당 등 5갈래로 갈라지게 됨.

- 1.22 혁신당, 일본자본도입은 국교정상화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의 대일외교 규탄 담화발표.
- 1.23 사대당, 영세중립화에 의한 통일과 남북한 인사교류 등의 통일방안 발표.
사단법인 4월혁명단, 이승만 소환 등 4개 항목 특검부부장에게 전달.
- 1.24 대구 철거난민 500여명, 시청에서 먹을 것과 일거리 달라고 데모.
- 1.25 대구 난민부녀자 100여명, 대구시청에서 일자리와 먹을 것 달라고 데모.
전국사회단체연합회 결성 : 민족진영사회단체가 불안정한 현시국에서 민족정기 고취하고자 결성.
4월혁명 5개단체, 4월혁명단으로 통합결의 : 4월혁명 통합 추진위원회, 4월혁명 부상동지회, 4월혁명 상이동지회, 4월혁명 불구학생동지회, 4월혁명 상이학생동지회.
- 1.26 신민당 소장의원들, 청풍운동 선언하고 생활혁명에 앞장서겠다고 언명.
경북교조, 각구단위로 일제히 농성투쟁 돌입.
민주당 소장과 32명, 신평회 결성.
- 1.27 혁신당, 청조운동에 전폭적 성원을 보낸다는 격려담화 발표.
- 1.29 교원노조 합법성 및 법정수당 쟁취를 위한 교조전국투쟁위원회, 전국교조극한투쟁돌입결의 채택.
- 1.30 장면국무총리, 제2차 개각단행 : 표면상 민주당 거당 내각이나 내면은 소장과 중심.
경북지구 자동차종업원노조, 파업돌입.
철도연맹, 체신노조·전매연맹 등 3개 공무원노조, 임금인상투쟁에 공동보조 취한다는 성명 발표.
- 1.31 윤길중 의원, 『민족일보』는 혁신유지들의 자금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조련계 자금 유입된 것 아니라고 해명.
민의원 내무위원회, 치안소위원회 구성하고 『민족일보』조련계 자금설 조사키로 결정.
마산 초·중·고 교원노조, 신고증 및 법정수당쟁취 주장하며 농성투쟁돌입.
- 2.2 민주당합작파 26의원, 정안회라는 당내서클발족.
- 2.1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 노사쌍방 임금 30% 인상 합의.
- 2.4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국제자유교원노동조합에 가입서신 발송.
- 2.5 서울시내버스, 운임인상요구 총파업.
4월혁명단체, 통합대회개최.
경남교조 공동투쟁위원회, 도민 쫓기대회 개최.
- 2.7 미 케네디 행정부, 유엔감시하 남북총선거로 한국문제 해결한다는 통한원칙 재확인.
- 2.8 정부, 한미경제단일화협정에 조인 : 미 원조자금 감독권 강화·면세조치·특전규정 등 물의 일으킬 요소 내포
사회대중당, 무정견한 시정으로 조국을 반식민상태에 몰아넣은 장면정권 물러나라고 성명 발표.
정외무, 경제협정은 내정간섭 아니라고 기자회견.
경북교조 지원투쟁위원회 구성.
- 2.9 신민당 원내대책위, 경제협정 동의에 반대결정.
- 2.12 통일사회당·사대당·혁신당·사회당 창당준위,
한미경제협정은 한국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성명 발표.
- 2.13 전국학생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위원회 조직 : 한미경협은 주권침해이며 한국을 미국의 시장화 하려는 것이라는 호소문 채택.
『민족일보』창간호 발행.

- 민의원 본회의, 장면총리에게 한미경제협정 성격추궁 대정부질문.
- 2.14 사회당 · 사대당 · 혁신당 등 재야정당 · 사회단체,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전국한미경제협정반대 전국투쟁위원회,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성토대회 개최.
- 2.15 장면국무총리, 한미경제협정반대와 한일회담방해를 집점으로 하는 북한공산당 경계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통일사회당, 미국원조는 자립경제확립에 도움되어야 한다고 경제협정 수정안 작성하여 통과추진.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 경험반대투위는 공산당과 관련없으며 경험반대는 반미운동 아니라고 성명 발표.
- 2.16 매카나기 미대사, 경제협정 운영에 있어 한국주권 불침해하겠다는 성명서 발표하고 정외무에게 공한발송.
매카나기 미대사, 장면총리와 경제협정 반대태도 등에 대해서 요담.
미정부, 경제협정 조속추진 촉구하며 늦어지면 원조자금 사용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통고.
농업은행 총재 한윤경이 서울지구 노조위원장 유병희를 비롯한 전국 노동조합 간부들 33명에 대한 전근 등 인사조치를 단행.
- 2.17 은행노조 서울지구,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체결할 것을 결의.
- 2.19 재미한국문제연구소 소장 김용중, 장면총리에게 통일문제 공개장 발표 : 빈곤극복 위해 통일이 필요하며 반공이나 친공만 고집하는 세기조료 역행은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미군기관 종업원 2000여명, 한미행정협정촉구 데모.
4월혁명 부상학생대표 일동, 반혁명단체인 4월혁명단에 참가한 바 없다고 성명 발표.
- 2.20 신민당 결당대회 : 위원장에 김도연 선출.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한미경협비준거부촉구 공개장 발표.
민주당 의총, 경제협정 무수정통과기로 결정.
- 2.21 통사당 등 혁신계 우파 중심의 중립화조국통일연맹 결성 : 남북 인사교류와 중립화통일 표방.
전국학생 한미경제협정반대 투쟁위원회, 명동에서 경제협정반대 성토대회 개최 : 데모, 시가행진.
농업은행 노조간부, 부당인사조치항거 단식농성투쟁.
- 2.22 신내무장관, 혁신계의 중립화 서명운동은 사찰대상이며 경제협정반대 · 3,4월 위기설 등은 조련계의 선동이라고 언명.
대구 혁신정당 · 사회단체 주최, 한미경제협정반대 시민궐기대회 개최 : 대구역 광장서 1000여명 시민 참가.
- 2.23 장면총리, 4월 위기설 부인, 경제협정반대에 조련계 편승 봉쇄하겠다고 기자회견.
- 2.24 사대당 등 각 혁신정당 주최, 한미경제협정체결반대 성토대회 : 시청 광장서 시민 500여명 참석.
- 2.25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결성대회 : 혁신 각 정파와 사회단체가 참가, 민족자주평화를 기틀로 국토통일과 민족역량의 총집결을 강령으로 채택.
케네디대통령, 한미관계와 극동전반문제 토의 위해 7월초에 장총리 초청을 언명.
신내무장관, 4월위기설은 3,4월을 전후해 여러 일이 겹친 것을 기화로 일부에서 선동하는 것이라고 해명.
- 2.26 대구 통일사회당, 시국강연회 : 2만 군중 참가.
- 2.27 경전 노조원 400여명,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3사통합 결사반대 데모.
- 2.28 민의원,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대결의를 조건으로 붙여 한미경제협정 비준(재적 165중 찬성 133, 반대 1).

통사당 소속의원, 경험비준 표결에서 퇴장하고 협정비준은 전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성명 발표.

특별검찰부, 수사종결 : 송사리만 검거. 26명 구속, 13명 불구속.

대구시내 40여 개 중·고교생 4만여 명, 2.28학생의거 1주년 기념식 거행.

3.1 사회당, 민주·신민당의 한미경제협정비준은 그들의 반민족성을 폭로한 것이라는 비난성명 발표.

민족자주통일 경북협의회, 3·1 통일축전 쉼기대회 개최 : 5만여 시민 참석, 3·1절을 통일절로 구호.

3.2 민의원, 한미행정협정체결 촉구를 결의.

은행노조간부 9명 징계.

3.3 한·중 통상협정 체결 : 양국간 경제발전에 협조.

은행노조경남지구, 파업 돌입.

3.4 윤대통령, 부정선거 관련자 처리 역설과 국토건설사업에 적극노력하자고 기자회견.

3.5 대구 경북지구 교조, 2대약법반대 결의문 채택.

3.6 중립화조국통일연맹 발기준비위원회, 중립화만이 통일과 독립 가져오는 길이라고 선언문 발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정한 3·10 노동절은 노동운동을 정권의 예속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5·1의 메이데이 행사에 모든 노동자와 노협은 참가해야 한다고 언명.

3.7 경전·남전·전업 등 3사 노동조합 권익투쟁위원회, 보장없는 3사통합 반대한다고 의사당 앞에서 데모.

정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 심의중.

3.8 정부, 보안법 미비점 보충한 반공법 성안.

3.9 은행노조, 경남지구노조 해산.

3.10 정부, 반공임시특별법안과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의 시안을 민주당 정책위에 회부.
야당, 반공임시특별법안은 장정권 장기집권 기도라고 논란분분.

3.11 조법부·신내무, 공동기자회견 갖고 반공임시특별법시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안 해명 : 결과범은 불처벌하며 기본권의 침해 없다.

신민당, 반공특별법은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무능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언명.

민주당 신평회·정안회, 반공특별법에 불만표시.

사대당, 반공특별법은 반국가적·반대중적 악법이라고 반대성명 발표.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장정권은 악법제정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성명 발표.

혁신당, 반공특별법은 망민법으로 공포분위기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성명 발표.

각대학 민통련 등 학생단체 대표들, 2대약법반대 전국대학생투쟁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3.13 약법반대 전국청년단체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 약법반대투쟁 위해 11개 단체 연합으로 결성(민주민족청년동맹, 피학살자유족회 청년학생위, 통일민주청년동맹, 조국통일민족전선 등).

3.14 북한, 남한미군철수 후 평화통일 위해 남북한 인민 스스로 선거를 실시케 하라고 유엔에 서한 발송.

한국대표, 유엔을 혼란시키려는 공세라고 소련의 통한각서 비난.

장면총리, 반공임시특별법에 야당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민의원서 언명.

반민주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 악법분쇄 위해 혁신계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결성.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 2대약법반대 범국민운동에 가담한다는 성명 발표.

3.15 마산서 3·15의거 1주기 추도제 거행 : 6만여 시민 모인 가운데 기념식 거행. 정부무능 규탄하는 시위행진.

신민당 기획위, 보안법 보장 원칙에는 동의하나 정부안 반공법은 그 내용이 애매하다고 거부

결의.

혁신당, 유엔군 철수 내세우는 북한 비난성명 발표.

통사당, 북한의 연방제안은 공산화 흥계라고 규탄성명 발표.

3.16 민통련 등 각 학생단체,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조직.

3.17 장면총리, 반공임시특별법은 여야와 각계의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기자회견.

민자통, 유엔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구태의연하고 비효과적 북한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 발표.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위, 2대악법규탄성명 발표.

3.18 대구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2대악법 반대 시민권기대회 개최 : 시민 1만여 명 참가, 켈기대회 후 시가행진, 켓불데모.

대구 같은 장소에서 민주수호사회단체연합기구, 임시반공법 · 데모규제법을 찬성하는 관제데모 전개.

3.19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 반공임시특별법안 제정은 반민주 · 반민족적이라는 성명 발표.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시내에 악법반대 전단살포.

3.21 반민주악법반대 경남학생공투위 조직.

3.22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반공법반대성토 대강연회 : 시청광장에서 시민 · 학생 3만여 명 참가. 시가행진 중 경찰과 충돌. 쌍방 50여 명 부상. 켓불데모.

장면총리, 반공입법추진방침 기자회견서 언명.

정부각의, 반공법안 형식을 변경하여 보안법 보강기로 합의.

한국영세중립추진위원회 마산지구, 악법철폐투쟁위원회 결성 : 악법반대데모 · 뼈라살포 등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명.

3.23 신내무 · 조법무, 22일 난동데모 주동자 의법처리하겠다고 담화발표.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국회의원은 반민주악법을 심의 거부하라는 공개장 발표.

이태희 검찰총장, 반공법안 데모 등 난동데모자는 소요죄로 입건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

마산 악법반대학생투쟁위원회, 악법반대성토대회개최 : 1000여 시민 · 학생 참가.

반민주악법반대 경남학생투쟁위원회, 2대악법철폐 켈기대회 : 부산역 광장에 5000여명 참가. 이후 켓불데모 · 시가행진.

정부, 보안법 개정시안 작성.

윤대통령 요청으로 여 · 야 고위회담 : 반공태도확립 위한 국민운동전개에 합의.

한국실업자협회 실업자 2000여 명, 중앙청 앞에서 일터 달라고 연좌데모.

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3 · 22 시위 탄압경찰규탄 성명 발표.

3.24 한국노련, 국가보안법개악반대투쟁위원회 조직 : 국보법 중 민주노동운동에 독소조항 삭제하라고 성명 발표.

경남상고생 700여 명, 23일 데모 연행학생석방과 악법반대 요구연좌데모.

신내무, 반공법 반대데모는 정부혼란이 목적인다고 내무위서 언명.

장면총리, 매카나기 미대사와 한 · 미 고위회담 : 미, 전업 3사통합과 전기료 인상 요구.

2대악법 반대 경북학생투쟁위원회, 2대학법반대 켈기대회 개최 : 대구역 광장서 3만여 시민 참가. 켓불 데모.

경찰, 3 · 22데모 연행자 중 47명을 소요죄로 구속.

대구 대학생 민주수호학생회와 4월혁명 학생동지회 경북본부 주최로 2대악법 저지대회 개최.

3.25 야당, 미측의 전기 3세 통합강요에 내정간섭과 주권외교 실패라 비난.

조법무, 어떠한 데모가 있더라도 보안법 보강하려는 정부태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

마산 혁신계 학생들, 반공 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개정반대 시민성토대회 개최 : 시민 1000여 명 참가.

부산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투위, 반민주악법반대 시민성토대회 개최 : 1000여 시민 참가, 시가행진.

전주 혁신계 주최로 통일촉진 쉼기대회 : 통일촉진과 2대악법 반대, 시민 5000여 명 참석.

광주 통일사회당, 정치강연회 : 7000여 시민 참석, 영세중립으로 남북통일 주장.

3.26 대전 혁신계 정당·사회단체 주최로 악법반대투위 구성.

악법반대 전국학생 투쟁위원회, 강제연행 체포는 독재수법의 재연이라고 성명 발표.

3.28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어떠한 반공입법 시도도 분쇄한다는 대정부 경고성명 발표.

61개 우익단체 총연합, 용공세력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

3.29 한국노동조합 총협의회, 노동운동 말살 독소조항 내포한 반공특별법 강행한다면 극한투쟁 불사하겠다는 건의문을 행정·입법·사법부와 각 정당에 전달.

반민주악법 반대 투쟁위원회, 대구역 광장 사용허가 불허에 비난성명 발표.

3.30 정부,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

3.31 경북교조, 2대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에 참가.

대구, 2대악법 반대 경북공투위 결성.

경전·남전 노조원 1000여 명, 보장 없는 3사통합 반대 데모.

인천 부두노동자 3500여 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부산 부두노조원 9000여 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은행노조, 서울지구 해산.

전국자유노조 부두노동자, 제3차 무기한 파업 결의, 노사 합의, 파업 철회.

4.1 한국노련 경북지구연합회, 2대악법 반대 규탄대회 : 1000여 노조원 참가.

4.2 대구 혁신계 주최의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 규탄대회, 경찰봉쇄로 무산 : 경찰과 데모 선두 충돌. 수라장. 32명 검거.

4.3 치안국, 4·2 대구데모 43명 구속, 6명 불구속.

4.4 통일사회당·사회당·혁신당·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 2일 대구데모 경찰탄압에 항의하고 국가보안법 및 데모규제법 철회하라는 경명 일제히 발표.

4월 1일 상경한 악법반대 영남지구 학생결사대 25명 귀향.

대구지법, 4·2데모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5명 구속영장 발부.

대한노련, 민주노동운동을 말살할 우려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고 그 수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

윤대통령, 대구역에서 데모납용 말자고 강조.

4.5 대구 2대악법 교조 각도 대표위원 대회, 구속 조합원 석방과 2대악법 철회 등 결의문 채택.

4.6 대구 혁신계 공동투위, 대구경찰서장을 불법감금 등으로 고발.

4.7 대구 2대악법 반대 정당·사회단체 공동투위, 2대 악법 반대 및 구속자 석방 요구대회 : 1000여 군중 2대악법 반대 데모.

4.9 대구 초·중·고 교조원 및 전국 각도 대표 교조원 350여 명, 한국 교원노조 극한투쟁 선언 쉼기대회 :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성과 2대악법 반대 요구 관철될 때까지 극한투쟁 결의.

한국교원노조 전국 대표자대회(대구여고) : 2대악법 철회하라는 결의문 채택.

4.11 대구교원노조원 30여 명, 4·2 데모로 구속된 교조원 석방요구 데모.

스티븐슨 유엔주재 미대사, 북한이 유엔의 한국에 대한 자격과 권한을 수락한다면 유엔 한국문제 통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제의하는 폭탄발언.

4.12 장면총리, 참의원 본회의에서 교원노조가 정치에 학생을 이용하면 파면 등 경고조치 취하겠다고 언명.

4.13 반민주악법 반대 경남학생투쟁위원회, 악법반대 성토 쉼기대회 : 부산노동회관 앞 광장서 학생 1500여 명 참가.

- 4.14 부산 2대악법 반대 경북학생투쟁위원회, 4·2 데모자 석방과 2대악법 반대 쫓기대회 : 3000여 군중 참가.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교조탄압은 정권의 수명단축행위라고 장총리 비난성명 발표.
- 4.15 건국대 민족통일연구회 결성.
- 4.16 전국학생민족통일전선 발기위원회와 악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 통일촉진 악법반대 대강연회 : 진명여고 삼일당에서 3000 군중 참가하여 단결함으로써 민권의 지키자고 결의.
- 4.17 특재, 최인규 사형 언도.
한미행정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교섭회의 열림.
- 4.18 민자통 경남협의회 결성대회 : 평화통일 결의문 채택.
- 4.19 4·19 1주년 기념식 거행 : 윤대통령·장총리, 정신혁명 강조.
4월혁명 유족회, 기념식에 국민과 정부 협조 감사하다는 담화 발표.
서울대생 3000여 명, 4·19 1주년 기념식 후 침묵 시가행진 : 반민족적 세력 타도, 학원의 경찰간섭 배격, 외세와 사대주의 타도, 생화학병 등 4개 결의안 통과. 통일조국, 민족자주통일, 외세 타도 등 플래카드.
정부·국회 대표, 북한도 유엔 현장 좇으라고 공동성명.
- 4.20 장면총리, 참의원 회의에서 용공통일보다 분단이 낫다고 천명.
- 4.21 장면총리, 보안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은 여 단독으로라도 통과 강행하겠으며 남북교류론의 배후 수사하겠다고 기자회견.
서울시 복장노동조합원, 임금인상 요구 쟁의 돌입.
- 4.22 사대당·혁신당, 통합 공동성명 발표 : 사회적 민주주의를 기본노선으로 중립화통일원칙 등 통합 5원칙에 합의.
정외부·스티븐슨 유엔주재 미대사, 유엔감시하 자유선거 통하여 한국을 재통일한다는 공동성명 발표.
- 4.25 정외부·미 러스크장관, 경제개발 계획에 협조하고 행정협정 적시에 체결하겠다는 공동성명 발표.
- 4.16 중립화 조국통일운동 총연맹 준비위원회, 통한 국제회의 소집과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자주적 토의 기회를 요청하는 성명 발표.
대한 석탄노련 산하 탄광노조원 1만여 명, 노임인상요구 총파업 돌입.
- 5.1 한국노협 주최, 제75회 메이데이기념대회 시공관에서 개최 : 400여 명 참석.
- 5.3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대의원대회, 남북학생회담의 개최와 남북학생교류를 제의하는 성명서 발표.
제2차 장면내각 개편 : 장총리, 개각 기점으로 민생안정과 치안확보에 과감한 시책 펴겠다고 담화발표.
- 5.4 북한, 남북학생회담의 즉각 개최 요구하는 정식 성명 발표.
민자통·민주민족청년동맹,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의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서 각각 발표.
보수양당, 통일방안 재검토론 대두 : 신민당 양일동 의원/남북학생회담 제의는 위험하지만 중립화 통일과 통일협의체기구 만들자/ 서민호 민의원 부의장-남북서신이나 언론인 등의 교류 필요하다.
- 5.5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 준비위원회,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 발기대회 개최 : 서울대 민통련의 회담 제의 지지와 5월 안에 남북한 학생회담 가질 것을 결의
통일사회당·중립화 통일연맹, 보수정당의 통일방안 재검토론을 환영하며 초당파적 통일방안 협의체 구성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언명.
정부, 남북학생회의를 환영한다는 북한의 성명은 음흉한 계획이며 학생들의 주장은 허용할 수 없다고 언명.

- 5.6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 공동선언문 · 성명서 · 결의문 발표 : 13일 시청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민족통일 촉진 쉼기대회 개최 예정이라고 밝힘.
사대당 · 혁신당 · 사회당, 민족자주적 민주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남북협상을 통일방안으로 한다는 기본 통합 원칙에 합의.
민주당, 통일협의회 구성 · 중립화통일론 · 남북학생회담 주장은 환상론으로 반공정신 무장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성명 발표.
윤대통령, 남북학생회담이나 남북한통일협의회 구성은 북한에게 역이용당할 뿐이라고 반대한다고 기자회견.
신민당, 남북학생교류 허가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을 지지하며 양일동 의원의 민간통일협의회 주장은 양의원의 사건으로 당론 아니라고 언급.
- 5.10 대구 사회당 경북도당부, 남북한 학생 판문점 회담 촉진대회 개최 : 남북회담 방해는 민족반역 행위라고 규탄.
민자통 중앙협의회, 민자통 서울시 협의회 결성 : 남북학생회담 지지 · 남북인사 교류 · 경제교류 등의 결의문 채택.
- 5.11 통일사회당, 남북학생교류 촉진 협의회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할 것을 민주 · 신민 양 보수정당에 제의하기로 결정.
사대당, 남북학생회담 반대하는 정부규탄과 남북학생회담 주장하는 학생내사는 부당하다는 성명 발표.
장면총리, 통일총성 이복민 대회에서 통하는 국제문제로 북한과 직접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천명.
문교부, 서울 시내 총 · 학장회의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활동하면 학교에서 처벌하라고 지시문 발표.
- 5.13 민자통,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쉼기대회 개최(서울운동장) : 3만여 시민 참가. 장면총리와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시가행진.
- 5.14 민족통일당 발기인 일동, 소아병적인 좌파 사회주의 세력을 배격한다는 담화 발표.
민자통 충남협의회, 통일촉진 시국강연회 개최.
- 5.15 민족통일당 결성대회 : 민주적 복지사회 건설을 기본 이념으로 결성.
서민호 국회부의장 : 학생회담이나 민간협의회 구성은 반대하나 남북교류의 실제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할 조직체 구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명.
- 5.16 군사쿠데타 발생 : 군사혁명위 조직(의장장도영, 부의장 박정희), 수도서울 완전점령, 포고 4호까지 발표(금융기관 동결 · 국회해산 · 정당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 엄금 · 전각료 체포 등).
전국에 비상계엄령선포 : 윤대통령 연금 상태, 장면총일 피신.
정 군사쿠데타 발생, 朴正熙소장 주도. 軍事革命委員會 설치(의장 張都暎, 부의장 朴正熙), 혁명공약 6장 발표, 3권 장악,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포고1호(집회금지, 보도관제) 2호(금융동결, 물가동결) 3호(공항·항만봉쇄) 4호(張勉정권인수, 각급의회 해산, 정치활동금지)발표. 그런 美대리대사·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 합헌 정부(장면내각) 지지 공동성명 발표
보도 사전검열제 실시(~5.27까지)
- 5.16쿠데타로 남북교류 주장자들 일제 검거
- 5.17 혁명위, 전국무의원의 자진출두·사무차관의 원직복귀명령·각부처연락장교단 임명 등 발표.
혁명위, 영장없는 체포·구금 軍裁管轄의 布告 및 淸新한 사법운용촉구 포고 발표
- 5.18 쿠데타세력에 의해 혁신계 3천 3백여명과 조용수 등 민족일보 관계자 전격 체포
- 5.19 《民族日報》 폐간
인천흥한방직 해고자 59명 농성투쟁 시작.

- 5.22 국가재건최고회의 정당및 사회단체 해체 포고 발표. 勞組해산
- 5.22 치안국, 容共분자 2000여명·강패 4200여명 검거 발표. 6.4 강패 965명, 국토개발사업장 동원
- 5.23 최고위, 언론정화 포고 발표. 정기간행물 1200여종 폐간, 사이버기자 일제 단속 미명 하에 언론 대탄압
- 5.26 대전방직 노동자 800명 연좌시위.
- 6.1 문교부, 학원정정화 5개 준수사항발표(대학생 校服착용, 중고생 삭발령)
- 6.14 제일모직 대구공장 노조 단식농성 돌입.
- 6.20 《民國日報》 조세형정치부장 구속
제일모직 대구공장 노조 쟁의신고.
- 7.4 제일모직 대구공장, 공장 사무실 점거농성 돌입.
- 8.10 제일모직 대구공장 쟁의, 3개항 보사부 중재안에 합의.
- 8.25 革裁, 고대생 피습사건(60.4.18) 선고. 임화수 사형(12.21 집행), 신도환 무기, 유지광 징역 12년
- 8.28 革裁, 《民族日報》1심공판, 조용수·안신규·송지영 등 3인 사형 언도, 그 외 관련자 실형언도
- 8.29 한국로동조합총련맹 결성
- 9.12 문교부, 국립대정비 반대한 서울사대 학장과 교수 2명 파면
- 9.13 경성방직 노동자 700여명 연좌시위.
- 9.14 革裁, 사회당사건 최백근 사형언도(12.21 집행)
- 9.16 경성방직 노동시위 강제해산, 7명 연행.
- 9.20 革裁, 최인규·이강학·한희석에 사형 선고(12.21 최인규 집행)
- 9.28 문교부, 사상관계 우려, 서적은 검열받도록 출판사 등록규정 마련
- 9.30 革裁, 경무대앞 발포사건 洪璣基·곽영주 사형언도, 유충렬 무기 선고. 민통학련사건 피고 전원 유죄판결. 12.21 곽영주 집행
- 10.19 전국전매노조연합회, 쟁의발생신고.
- 10.31 革裁, 민족일보사건 조용수·안신규·송지영 사형 선고,
- 11.1 교원로조사건 첫공판, 11.7 구형, 12.7 선고
- 11.3 전국체신노조, 쟁의발생신고.
- 11.8 혁재, 사회당반국가행위사건 上訴審 기각결정, 최백근 사형언도
- 11.17 전국전매노조연합회 소속 대구전매청 조합원 43명 집단해고
- 11.21 대구전매노조 간부 단식 돌입, 전국전매노조연합회 5개항 요구, 서울 의주로 공장 비릇 청구 및 대구공장 오전 9시부터 태업에 돌입
- 11.23 대구전매노조태업, 노사합의로 종결.
- 12.15 전국체신노조, 쟁의행위 가부투표(5000 조합원 중 3350명 투표, 3065명 찬성), 그러나 노사합의로 종결.
- 12.20 박정희 최고회의의장, 조용수 외 송지영, 안신규에게 무기로 감형.
- 12.21 최인규·곽영주·조용수·임화수·최백근 사형집행

<1962>

- 1.1 부두노조, 조합원등록제 실시
- 1.8 선원법 공포(시행령 62.8.27공포)
- 2.7 노총, 각도협의회 결성(~2.17, 제주도 제외)
- 3.8 서울운수노조 소속 노무자 서재민씨, 생활고 비판 자살
- 3.9 노총,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기준법 개악운동 반대성명

- 3.10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근로자 해고예고 등)
- 3.16 최고회의, 정치활동정화법 공포(교원노조도 대상으로 포함)
운수노조, 반장제폐지하고 근로지도원제로.
국산자동차회사, 조합결성 이유로 2명 해고
- 3.22 윤보선대통령, 하야 성명
- 3.24 박정희 의장, 대통령권한 대행
- 3.29 노총, 현업공무원의 노동운동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법 재개정안, 반대성명
- 3.31 한국엔진공업, 조합활동을 이유로 엔진부 63명 해고
- 4.4 4.19희생자 186명에 건국포장, 원호대상 156명 결정
- 5.9 革裁 革檢 폐소식
- 5.16 노총, 5.16기념 경축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서울시청광장)
- 5.29 경기도 坡州 美軍 한국인 린치사건 발생.
- 6.1 김상돈·조중서 등 민주당계 41명 반정부음모혐의 피검(민주당반국가사건) (9.29 軍裁 선고공판 조중서 사형, 김상돈 무죄) 63.2.16 고소심 공소포기(조중서 사형 무기 감형확정)
- 6.4 노총, 시흥광산의 집단해고 및 직장폐쇄 처결문제 건의
- 6.6 고대생, 미군 린치사건 항의 한미행정협정촉구데모, 13명 구속. 미국무성, 동사건 정식 사과.
- 6.7 노총, 쟁의권의 일부 부활 요구 건의
서울대생 1천여명 한미행정협정 체결·구속고대생 석방요구 데모
- 6.13 합동수사본부, 대학생 지하서클 간첩단 사건 발표, 주모자 김낙중 체포.
- 7.7 노총, 태창직물 체불노임 해결 건의
- 7.13 《民國日報》 무기휴간
- 7.10 미왕산업주식회사, 전국화학노조 미왕산업분회장 한재선, 부분회장 이병렬, 조사통계부장 김상준, 후생부장 최종민 등 부당해고
- 7.19 미왕노조측, 임정홍 사장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
- 7.28 《東亞日報》사설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필화, 주필 고재욱, 논설위원 황산덕 구속
- 8.20 최고회의, 공무원법 개정안(노동운동 조항) 폐기결정
- 9.9 日曜新聞 창간
- 10.15 노총 제주도협의회 결성
- 10.30 노총 전국대의원대회(~31일, 국민회당)
- 11.12 김종필·오하라메모합의(청구권문제, 한일문제 타결 등)
- 11.27 홍제동 판자집 철거소동
- 11.28 《한국일보》 사회로동당 운운 기사 필화. 11.29 사장 등 4명 구속, 3일간 휴간
- 12.12 조광섬유 소속 노동자, 노조분회 결성위한 가입원서 배부 중 공장장에 의해 폭행·감금, 남녀 종업원 6명 부당해고 당함
- 12.13 노총, 계엄령해제에 따라 쟁의권 자동부활 선언
- 12.17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투표율 82.28%, 찬성율 78.78%)
- 12.31 정당법 공포

<1963>

- 1.16 미왕산업노조 임시총회개최, 쟁의 결의
- 1.21 미왕산업노조, 정식 쟁의발생신고
- 1.27 민정당창설 黨준비발기인대회(6인 지도위원제 채택) 5.14 민정당 창당대회(대표최고위원 김병로, 대통령후보 尹譜善 지명)
- 2.8 미왕산업파업사태,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제시, 쌍방의 수락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의 거부

로 결렬

- 2.10 미왕산업사태,노조측, 영등포 지역 지부산하 조합원 827명 중 706명의 찬성으로 2월 14일 정오를 기해 파업 단행 결의
- 2.14 미왕산업, 파업돌입,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명이 조합원 7명을 포고령 1호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 보건사회부 노동국장과 영등포 경찰서장이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3일 내 중재할 것을 약속, 파업 중단
- 2.15 윤태일 서울시장, 미왕산업 사장 임정홍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에 관한 조정에 불응’ 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 화학노조측, ‘영등포 지역 지부 미왕산업분회 투쟁대책위원회’ 설치
- 2.16 미왕산업 사측, 250명의 전종업원 해고, 日給노동자 고용
- 2.17 종로 1가의 서울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약칭 한국노련) 결성준비대회 개최.
- 2.27 정쟁법해당 구정치인 2322명 해제(미해제자 장면 등 269명)
- 3.10 노총과 노련 노동절 기념행사 따로 거행
- 3.14 노총경상남도협의회 해체분리하여 부산직할시 협의회 결성
- 3.16 박의장 군정 4년 연장 제의
- 3.17 《東亞日報》·《朝鮮日報》, 15일간 무사설로 군정연장 항의
- 3.20 尹譜善·許政, 서울시청앞서 군정연장 반대 산책데모
- 3.22 군비상지휘관회의, 군정연장 지지. 재야정치인, 구국선언대회 군정연장반대 데모. 美케네디 대통령, 한국 민정실현 요망
- 3.26 지연일 금속노조위원장, ‘한국노총 탈퇴 및 노조해체’ 성명서 발표
- 3.28 지연일 등, ‘인천철강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 3.29 서울문리대생 300여명, 자유수호궐기대회(軍政연장반대 결의)
- 3.30 박정희·윤보선·허정 제1차 朝野영수회담 개최(3.31 2차회담, 4.1 3차회담)
- 4.3 한국노총 긴급 중앙위원회 소집, 지연일을 금속노조 위원장 직무 무기정권 조치.
- 4.5 금속노조측,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지연일 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의와 임시대회를 정기대회로 대치하는 등 규약개정, 예산편성 및 임원선출
- 4.7 금성사 (부산시 소재, 종업원 2,200명)소속 170여명 종업원, 노조결성대회 개최
- 4.8 금성사, 노조가입원서 350매 강제탈취, 조직위원 전보발령
- 4.9 금성사, 쟁의조정 거치지 않고 집단해고와 직장폐쇄(5.1조업재개)
- 4.11 부산시협의회, 금성사 부당노동행위 규탄투쟁위원회 구성
- 4.15 노총 단결권 침해대책위원회 설치(6.3해산)
- 4.17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전문 개정. '노동조합 설립의 허가주의(노조법 제13조 및 제15조)’ 및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조직은 불허(노조법 제3조의 5호)’ 조항 신설
근로자의 날(3월 10일) 제정에 관한 법률 공포(유급 휴일로)
- 4.19 서울대생 제4선언문발표(군정연장반대, 구정치인 자숙, 미국 내정간섭 반대)후 침묵시위
- 4.21 육군공수단 소속 군인 13명, 서울법원 난입
- 4.26 부산 럭키화학 노동자 100여명, 노조지부장 하동진의 부당해고에 연좌농성, 경찰의 제지로 강제해산
- 4.22 35개정당·단체, 군정반대전국투위 구성
- 5.5 민정·신성·민주 등 정당법·선거법 고치지 않으면 공명선거 기대할 수 없어 선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태도 표명. 군정연장반대연설회 서울 교동국민교서 개최(청중 3만, 뒤이어 대구·부산 등지도 개최)
노총부산시협의회 주최로 금속노조 금성사지부설치대회를 조합원 1,68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5.11 고려석면 안양공장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하며 쟁의, 사측이 노동위원회 알선 거부하고 4원씩 인상할 것 제의, 노조측이 거부
- 5.13 고려석면, 77명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쟁의
- 5.14 민정당 창당대회(대표최고위원 김병로, 대통령 후보 윤보선)
- 5.15 화학노조 樂喜化學지부 결성
- 5.22 국회본회의에서 정일권 총리, 무장군인 난입을 애국적 충정으로 규정
- 5.23 서울법대, ‘법의 존엄 수호 쉼기대회’ 를 열어 무장군인의 사법부 침입행위를 비난
- 5.27 삼화제분 인천공장 종업원 68명이 중간착취 배제 및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하며 쟁의 돌입
- 6.1 5대양기선회사, 제주기선회사 82명 임금인상 요구쟁의
- 6.3 대한해운공사 955명 쟁의
- 6.5 대한석탄공사, 대한철광, 대한광업제련, 대한중석회사 등1만여명 단체협약 갱신체결 쟁의
조흥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인천중공업 등 4,300여명 쟁의
- 6.11 운수노조 금성여객 249명 임금인상 요구쟁의
근신산업노조 파업(부당해고자 52명 복직, 법적 제수당 지급 요구)
- 6.12 재야3당연락위, 공동성명 발표(14일 중앙정보부, 3당대변인 연행문초)
- 6.13 고려석면, 파업돌입(10일간)
- 6.20 해상노조 목포어업협회 지부 500명 임금인상 요구쟁의
- 6.26 세브란스병원 249명쟁의(8.5파업)
- 6.29 삼화제분회사 69명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요구 농성파업(5일간)
- 7.2 삼화제분 조합원 신인균이 ‘중간착취 배제하라’ 는 내용의 혈서 씌
- 7.3 삼화제분, 동인천 경찰서 소속 100여명이 동원 쟁의 가담자 연행
- 7.5 노총, 지부장 명칭 통일지시
- 7.6 전국출판노동조합 결성
- 7.15 의정부 소재 미 태평양 건축회사 종업원 최도순 씨 등 16명 부당해고
- 7.18 한·미 경제위, 신설에 관한 협정체결
- 7.22 미태평양 건축회사 남·여종업원 1,000여명이 부당해고 항의 가두데모
근신산업노조 단식농성, 7·23해고자 52명 복직
- 8.2 새나라자동차, 조합원 17명 해고
- 8.6 우일화학공업사 86명 쟁의(부당노동행위시정, 단체협약체결, 임금인상요구)
- 8.17 국정교과서주식회사 226명 쟁의
- 8.21 고려해운 외 6개사 255명 임금인상 요구쟁의
- 8.26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문개정
- 9.1 정노동청·철도청 발족
- 9.2 대한방직 22명부당해고
- 9.9 지연일 (전)위원장, 3·26성명 반성 사과문발표
- 9.16 연합노조 서울시 지부2,000명 임금인상 요구쟁의
- 9.23 노총, 최초로 지구협의회 결성(여수지구협의회)
- 9.24 노총, 목포지구협의회 결성
- 9.27 중앙정보부, 황태성사건 전모 발표(공화당창당 관여설 부인)
- 10.22 황태성 사형확정(12.14 사형 집행)
- 10.30 노총 1963년 전국대의원대회(~31일, 경기도청 회의실)
- 11.15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결성(운수노조에서 분리 결성)
- 11.20 동양건직 523명 임금인상 요구쟁의
노총 영등포지구협의회 결성

- 11.28 서울시 이용화양복점 외 41개소 603명 임금인상요구 쟁의
- 12.7 노동조합법률 개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노동위의 적법 판정제도 신설)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 12.18 대한탄광 등 8개회사 2,000여명 임금인상 쟁의
- 12.21 첫 노동수출, 서독에 광부 1진 123명
부두노조 18,005명 임금인상 요구 쟁의
- 12.26 철도노조 26,496명 임금인상 쟁의(생활급 확보투쟁)
- 12.27 대한석공 1만여명, 대한통운 1만여명 임금인상 쟁의

<1964>

- 1.8 전매노조 9,539명 임금인상 요구쟁의
- 1.9 체신노조 8,497명 임금인상요구 쟁의
- 1.14 연합노조 부산시 지부, 부산위생지부 등 795명 임금인상 요구 쟁의
- 2.26 쌀값 올라 정치문화화(가마당 4,000원)
- 2.29 가나다양장점 외 22개소 110명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요구 쟁의
- 3.9 야당 및 각계 대표 2백여명 對日屈辱外交反對汎國民鬪委 결성, 대정부 경고문 채택. 3.15 전국 유세 시작(부산서 장준하연설)
연간물가지수 41.3%, 근로자 소득 16.5% 상승(韓銀)
- 3.15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김질락, 정태목)
- 3.16 동방제사 436명 임금인상 요구 쟁의
- 3.24 서울대, 고대, 연대생 약 5천여명 대일굴욕외교 반대데모, 전국 파급(3.27 16개 도시 확대)긴급구속 34명
- 3.30 박정희대통령, 학생대표 11명 면담
- 4.1 국회, 金大平메모설로 말썽
- 4.7 세브란스병원 345명 노동위, 결정이행 및 차별대우 금지 쟁의
- 4.11 학원사찰 국회서 문제, YTP(청사회) 정채 폭로
- 4.14 일신방직 119명 부당해고(5.18 140명 해고)
- 4.18 전남방직 109명 집단해고
- 4.23 국회에서 학원사찰 문제화
- 4.24 서울시대 28개학 총장, 시국수습을 위한 4개 항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학원사찰을 중지할 것과 학생들은 의사가 충분히 표명되었으니 학업에 전념하라고 호소
- 4.27 동국제강 36명 부당해고
- 5.20 서울시내 9개대학생 2천여명, 서울문리대 교정서 한일굴욕외교 반대시위 <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개최(경찰과 학생총동로 쌍방 65명 부상, 학생·시민 182명 연행)
- 5.21 무장군인 13명, 법원 난입, 데모학생 영장 발부 압력
- 5.25 서울·부산·대구·춘천 등지서 난국타개학생궐기대회(서울서는 데모, 26에도 수개대학서 궐기대회)
- 5.27 서울대교수협의회, 군의 정치적 중립, 학생 학업전념 등 6개항목의 시국수습건의문 채택
- 5.31 대한제사 129명 집단 해고
- 6.3 각급학교 휴교령(8.17 전국대학 개교)
학생 1만여명 시위. 파출소 파괴등 서울시내 소요. 하오 8시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민기식육참총장(6.3사태)(집회·시위 금지, 언론·출판 사전검열, 각급학교 무기휴교령, 통금연장, 영장없이 압수·수색·체포·구속조치, 계엄군법회의 설치)
- 6.5 인천중공업 807명 단체협약 이행 요구 쟁의
- 6.8 제1공수단 장교 8명, 밤중 동아일보사 난입

- 7.1 산업재해보상보험 500인이상 사업장 적용 실시
동양제사 74명 부당 해고
- 7.6 6.3항쟁 배후로 도예종과 김정강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수배
- 7.11 남양산업 120명 해고로 농성투쟁
- 7.18 양찬우내무장관, 학생데모 김정강 주동으로 하는 <불꽃회> 조종했다고 발표
- 7.20 해상노조 조선선박 외19개소 352명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요구쟁의
- 7.30 6.3데모 주동학생 352명 정·퇴학처분
- 8.1 통혁당 합법기관지 《靑脈》 창간. 1967.6 《靑脈》 정간처분
- 8.2 국회, 언론윤리위법 통과
- 8.10 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 결의 (8.29 동아 등 4개사 제외한 22개사 탈락)
- 8.14 중앙정보부, 제1차 人民革命黨(인혁당) 조작 수사결과 발표(41명 검거)
- 8.17 한국기자협회 창립, 언론악법 반대투쟁 강화
- 8.31 정부, 言論倫理委法 불찬성 5개사 보복조치 단행
- 9.4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 발기준비회의, 범국민운동 전개방침 결정
- 9.10 자유언론수호연맹 발족(위원장에 함석헌)
- 9.11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만 4년만)
- 9.12 박한상 인권옹호협회장, 人革黨사건 피고들 고문당했다고 발표
- 9.22 노총 니규철위원장, 철도노조강릉대회 발언관계로 사퇴, 직무대행에 김광수 부위원장
- 9.24 검찰, 人革黨사건 재수사 착수(담당 韓沃申 高檢검사) 10.16 검찰, 人革黨사건 피의자 중 14명 공소취하(나머지 12명도 保安法을 反共法으로 공소장 변경) 11.14 人革黨사건 기소거부한 여운상, 이용훈 검사 사표수리
- 11.10 월간 『세대』 지 게재된 황용주의 글,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필화.
- 11.19 황용주씨 서울지검 공안부에 의해 구속.
- 11.21 이영희 ‘남북동시가입’ 필화사건(『조선일보』 필화사건)

<1965>

- 1.18 한일회담 속개
- 1.23 서울지검 최대현 검사, ‘불꽃회 사건’, 김정강에 5년, 김정남에 2년 구형.
- 1.27 ‘불꽃회’ 선고공판(이석조 판사), 김정강에 징역2년 선고.
- 2.16 민주당 한일회담 대책 9인위원회 구성
- 2.17 일본외상 시이나 방한
- 2.19 한일협정 기본조약 가조인. 한일회담 반대 시위 최초로 대규모적으로 발생
- 2.20 한·일 기본조약 가조인.
- 2.28 대한상공회의소 ‘종합경제시책’ 건의안 채택, 주요골자는 ①현 산별조직을 해체하여 기업별로 약화할 것 ② 여성근로자 1개월에 1일의 생리 유급휴가를 없앨 것 ③ 산전후 유급휴가 60일을 40일로 줄일 것 ④ 현행 일주일에 60시간 이내인 근로시간을 72시간으로 연장하고 시간외 수당을 현행 절반인 25%로 할 것 등.
- 3.04 중앙정보부, 방속작가 김성욱 반공법 위반혐의 구속(방송극 「송아지」)
- 3.10 전국노동절기념대회에서 상공회의소의 '종합경제시책'을 성토·규탄.
- 3.19 시청앞 광장에서 굴욕외교반대투위 주최로 수천 명의 참여 속에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 경찰의 제지로 확대실패. 시위자 75명이 연행, 경찰과 4명, 시민 12명 부상, 함석헌 장준하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
- 3.20 서울운동장서 對日굴욕외교 성토대회 이후 전국서 성토대회 계속
- 3.31 목포·광주·여수서 열린 한일회담 반대유세 연사 劉沃祐 당국 연행

- 전남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1천여 명이 집결하여 ‘매국외교 결사규탄 성토대회’
- 4.1 대학생들, 平和線사수투쟁위원회 결성(서울), 13일 굴욕외교 반대데모, 4000여명 곳곳서 경찰과 충돌, 15일 부상입은 대학생 김중배 사망 정치문제화
- 4.2 전남대, 총학생회장 등 7명의 학생이 31일의 규탄대회를 이유로 제적
- 4.8 중앙정보부, 《京鄉新聞》 간부진 간첩혐의 체포(구속자: 이형백체육부장, 이준구사장, 홍화수 업무국장. 사주 金喆浩로 바뀜) 10.2 서울형사지법, 언론계침투 간첩사건 선고(송택봉·유익재 2명 사형, 이형백 징역 15년) 11.6 전사장 이준구 징역 3년, 홍화수 징역 1년 6월 선고(서울형사지법) 66.4.26 대법원 피의자 上告기각, 형 확정
- 4.9 동국대생 500여 명, 한·일회담 반대 성토대회 개최, ‘한·일협정 가조인은 무효’ 결의문과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 ‘일본정부에 대한 경고문’ 을 채택
- 4.10 서울법대생 500여 명, '매국외교반대 성토대회' 개최
- 4.12 경희대 300여 명, 연세대 2천 명, 동국대 2부학생 200여 명 등 잇달은 성토대회. 초급대학연맹회도 한·일회담 반대 결의문을 발표
- 4.13 서울시내 대학생 4천여명, 굴욕외교 반대시위, 高大生 플래카드 「제2의 乙巳보호조약 즉시 철회하라」 延大生 플래카드 「데모가 불법이나 暴政이 불법이다」 시위에 참가했던 동국대 김중배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
- 4.14 중앙대생 약 1천여 명, “민족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사수하자” 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투석전 전개, 성균관대에서도 500여 명의 학생이 ‘애국학생 석방하라’, ‘평화선 너 어디 갔느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 밖으로 나와 경찰과 대치.
- 4.17 효창공원에서 「鬪委」 주최 굴욕외교반대 시민궐기대회(효창공원), 시위군중 파출소 점거
- 4.19 오전 공화당 이병희 의원 외 30인의 이름으로 ‘4·17폭동사태에 관한 대정부 질문’ 벌임
- 4.30 황용주씨, 1차공판에서 유죄선고(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 5.4 한일회담 반대 부산시민궐기대회
- 5.16 중앙정보부 민사당 임시 대변인 이필선을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 5.19 박정희-존슨미 대통령간 2차회담, 한일회담지지 공동성명발표
- 5.24 민사당 간부 김윤식, 임창수 중앙정보부에 연행
- 5.27 민사당 창당발기위원장 서민호 의원 반공법 위반혐의로 연행
- 6.3 서민호 구속
- 6.12 서울법대생 200여 명, 5월의 학원 내 투쟁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여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주장에 “한·미행협 체결에 있어서 호혜평등을 관철하라” 는 주장의 데모전개
- 6.14 서울법대생, 한·일회담 조기타결 반대와 한·미행협에서의 미국측 성의를 촉구, “민족주체성 확립” 과 “부정부패 일소” 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무기한 단식투쟁
- 6.18 고대생 1천여 명, 서울상대 300여 명이 시위, 경찰과 충돌
- 6.19 서울법대생 232명 외에 문리대생 63명과 상대생 320명, 사대생 20명이 단식농성에 합류
- 6.21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숭실대 외국어대 동국대 등 시내 12개 대학 학생들과 대광 숭실 양정 등 3개 고교생 도합 1만여 명은 교문을 나서 “매국외교 반대” 시위행진 정부, 오후 5시를 기해 전국 경찰에 감호 비상경계령 전국 13개 대학·서울 58개 고등학교 방학 및 휴학조치
- 6.22 한일협정 정식조인(이동원외무, 추명열삼랑외상, 東京) 8.14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比準동의서 국회 통과
- 서울시내 10개 대학과 지방 3개 대학에서 약 800여 명이 단식농성투쟁
- 6.23 이대, 숙대 등 여자대학과 성균관대 서강대 서라벌예대 가톨릭의대 경북대생들이 한·일협정 조인무효화와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성토대회와 시위
- 6.25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4개 대학에서 140여 명이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외치며

단식을 계속

- 7.1 한경직등 목사 100여명, 한일협정 반대 성토코 5개항 성명.
- 7.9 歷史學會·在京문인 82명, 韓日協定 比準 반대성명
소설 《盆地》 작가 남정현, 반공법 위반혐의 구속
- 7.14 김홍일 등 예비역장성 11명, 한일협정 반대성명. 7.16 김정렬등 예비역장성 103명 한일협정 지지성명
공화당이 밤 8시 40분에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발의
- 8.12 민중당, 61명 의원직시퇴서 제출(탈당서 첨부 14의원만 수리 나머지 47명 사퇴서 반송)
- 8.13 야당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안, 전투사단(맹호부대) 派越案 국회 통과
- 8.17 서울법대 학생회는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선언식 거행
- 8.18 서울법대,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경희대를 필두로 경기대, 부산 동아대, 서울농대 등이 대대적인 시위에 돌입
- 8.20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시탑 앞에서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성토대회
- 8.23 대규모 학생시위가 재개. 서울시내의 연세대(2천여 명), 외국어대(500여 명), 동국대(2천여 명), 경희대(600여 명), 한양대(2천여 명), 중앙대(2천여 명), 숭실대(500여 명), 서울사대(40여 명) 및 지방의 전북대(1천여 명), 제주대(100여 명), 충남대와 오산고교생(300여 명) 등 1만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참가
내무부는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와 조국수호국민협의회, 비준반대 서명교수단, 무공화애호총연합회, 6·3동지회, 한국학사청년연맹, 초급대학학생연합회, 범태평양동지회 등 8개 단체를 등록되지 않은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공보부, 문교부 등 관계부처에 의법조처할 것을 요청
서울법대생 300여 명은 동교 도서관에서 긴급학생총회를 열고 제적된 학생회장 장명봉을 복직시킬 때까지 24일부터 무기맹휴에 들어가기로 결의
- 8.24 서울법대생들의 맹휴와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시위 계속 전개, 500여명 연행, 24명 구속
- 8.25 무장군인, 高大난입(26일 연대에도) 9.4 고대·연대 무기휴업령, 학사감사 시작
- 8.27 예비역장성 11명, 군의 정치적 중립호소. 문안 작성 金弘壹·朴炳權·金在春·朴圓彬 등 4명 구속기소(8.29)
- 9.5 서민호 보석석방
- 9.6 서울대 상대생, 軍靴화형식
- 9.7 폭파 및 테러사건 연발(9.7 邊永權 동아일보편집국장 대리 자택 폭파. 9.8 조동화동아방송 제작과장, 심야 괴한 피랍 테러. 9.9 유옥우민중당중앙상위의장 자택 폭파)
- 9.16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간부 5명 구속
- 9.21 대법원, 인혁당사건 上告기각. 도예종등 13명 피고 전원 유죄판결 확정
- 9.25 중앙정보부,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원 11명을 반공법 위반 및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송치, 이들에게 자금을 대준 혐의로 김한림(한국기독교장로회 여전도회 서울연합회총무)을 불구속 송치, 김도현(문리대 4) 등 6명을 지명수배
- 10.19 전국외국기관노조부산지부 임금인상, 보너스 연 2백% 지급,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 부산시 노동당국에 쟁의 신고
- 11.12 전국외기노조, 사용주 신한건설 요구조건을 거부
- 12.25 혁신계 56명 특사출감

<1966>

- 1.24 외기노조, 주한미군사령부 상대 임금인상, 처우개선 요구쟁의, 24,822명 참가
- 1.25 외기노조 인천지부, 임금인상 요구 쟁의, 33명 참가

- 1.27 자동차노조 경북지부, 단협 및 근로기준법 이행 요구쟁의, 4,658명 참가
- 2.5 미 합동건설 부당해고 시정 쟁의, 876명 참가
외기노조 파주지부 문공분회 파업
- 2.8 전국외기노조 파주지부 문공분회 쟁의 협상안 타결
- 2.10 미8군의 일방적 노동조건 및 임금·인사규정에 반대하여 전국 외기노조 13개 지부 노조원 2만 4천여 명의 파업가부투표, 조합원 2만3천8백68명 중 98%인 2만1천5백73명이 파업에 찬성
- 2.23 자동차노조 전북지역지부, 임금 100%인상 쟁의, 800명 참가
- 2.25 자동차노조충북지부, 임금인상 쟁의, 507명 참가
- 3.2 제적학생 전원 복교(2학기부터 등록), 정부·대학간 합의
- 3.7 서울 등 8개도시 石公炭荷役夫 400여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3.9 보사부 조정으로 중지)
- 3.9 주한 초대 일본대사 木村 부임
외기노조 일본상사노조 파업
- 3.15 국제용진사(IDC) 파업
- 3.17 국제용진사, 노조 간부 이진식 외 3명 구속
- 3.21 연합노조 서울의류지부, 가나다양장점 상대 임금인상 쟁의 181명 참가
서울시경정보과, IDC 총무 최윤석·사원 최기원씨 등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노동조합 회장 이창·부회장 이문찬씨 수배
- 3,24 毎日經濟新聞 창간
- 3.28 전매노조 연초유타지부, 휴업수당 지급요구 쟁의, 80명 참가
- 4.6 전국외기노조 산하 13개 지부 2만 5천 여명의 회원이 일제히 시한부 파업
- 4.9 대한중석광업, 임금인상 쟁의, 640명 참가
- 4.20 동양제사 외 15사, 임금인상쟁의, 4,440명 참가
- 5.19 외기노조 서울지부 제임스리회사 상대 임금인상 쟁의, 683명 참가
- 6.1 서울시, 韓電서 전차운영권 인수
- 6.7 연합노조 부실보세가공지부, 최저임금 보장, 근로기준법 이행요구 쟁의, 1,231명 참가
부두노조 부산(하역)지부, 임금인상 쟁의 ,3,050명 참가
- 6.9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 6.13 조흥은행 외 5개 은행, 물가수당 지급 요구 쟁의, 7,910명 참가
- 7.9 민중당, 재야세력과 합류선언 (7.21 당수 박순천 선출)
한미행정협정 14년만에 서울서 정식조인(李東元외무, 러스크美국무장관, 대전협정·마이어협정 폐기) 10.14 국회비준, 67.2.9부터 발효
- 7.12 서울高法, 서울대 민비연사건 피고 김중태등 전원 무죄선고
- 7.29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 8.5 금속노조 인천중공업지부, 임금 305인상쟁의, 1,076명 참가
- 8.16 조선방직 외 15개사, 임금인상 쟁의, 24,625명 참가
- 8.18 부두노조 인천(하역)지부, 임금 70 ~ 156% 인상쟁의, 1,576명 참가
- 8.19 전매노조 대한염업지부, 단체협약갱신 체결쟁의, 1,188명 참가
- 8.30 부두노조 국제실업 및 1개사, 임금 40% 인상쟁의, 1,001명 참가
- 9.13 쌀, 연탄 기근, 정치문화화
- 9.15 시내버스 자동차운송조합 근로조건 개선쟁의, 5,512명 참가
삼성 계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이 『경향신문』에 최초 보도
- 9.19 박정희대통령, 사카린 밀수사건 대검 특수부에 재수사 지시
- 9.20 통일사회당 창당(대표 김성숙)
- 9.23 황용주 필화사건, 대법원 원심확정, 최종판결.

- 9.27 서울대 학생들 삼성재벌 밀수 규탄성명서를 발표
- 10.4 농가부채 戶當 2만560원으로 토지경제연구소 집계
현대모직외 2사 임금인상 쟁의, 862명 참가
- 10.9 서울법대생, 밀수재벌 성토대회
민중당, 효창구장에서 「특정재벌밀수진상폭로 및 규명 국민 쫓기대회」 개최
- 10.15 대한해운공사, 임금인상 쟁의, 1,003명 참가
동양견직주식회사, 임금인상쟁의, 536명 참가
장준하, 대구 유세에서 ‘밀수왕초’ 발언
- 10.26 서울시경, 장준하를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구속
- 10.27 1966년도 노총 전국대의원대회(∼28일, 건설회관)
- 11.3 서울대생 4백여명, 학원자유수호대회 유기천총장 퇴진요구
- 11.4 대한석유공사 체불노임쟁의, 367명 참가
- 11.15 외기노조 주한미군사령부 상대 임금인상 쟁의, 1,940명 참가
- 12.12 오후 부산 유세에서 조윤희 의원 ‘밀수왕초’ 발언
- 12.13 대한통운, 한국운수창고, 대한운수, 임금인상 쟁의, 12,695명 참가
- 12.17 권중동 체신노조위원장, 반공법 위반혐의 구속
- 12.22 민주사회당 창당 (대표 서민호)
- 12.30 장준하, 병보석으로 석방

<1967>

- 1.1 산재보험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실시
대한조선, 단체협약체결 쟁의, 238명 참가
- 1.12 부두노조 속초지부 쟁의
- 1.24 윤보선신한당총재-유진오민중당 대통령후보 단독회담(1.25 제2차회담 민중·신한 합당 黨名
신민당 결정 합의)
- 2.7 신민당정식 발족, 대통령후보 윤보선, 당수 유진오 선출
- 2.10 금호운수, 노동자 파업통고
- 2.21 대한통운외 37사 임금인상 쟁의, 8,711명 참가
- 3.7 한국노총 기관지 ‘勞總’ 재등록
금호운수,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아침을 굶고 태업
- 3.10 노동절 행사, 서울시민회관, 5,000여조합원 참가
울산지구 협의회 결성
- 3.13 금호운수노조, 모든 제복을 벗어 물통에 집어넣는 투쟁을 시작. 회사측은 업무방해혐의로 노동
자들을 고발
- 3.14 서울 금호운수 노동자 회사측에 파업통고, 회사측 2명을 부당 해고. 4명이 특수업무방해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연행
- 3.27 연합노조 중화요식지부 임금인상, 유급휴가 등 요구쟁의, 235명 참가
- 4.7 연합노조 고려대학교, 임금 60%인상 부당해고 반대, 차별대우 금지 등 요구쟁의, 65명 참가
- 4.16 화학노조 제주주정 단협 경신 등 요구 쟁의, 103명 참가
- 5.10 출판사 노임적기 지불요구 단식투쟁
- 5.17 육군방첩부대, 김대수(金大洙) 등 무전간첩망 조직 일당 18명을 검거, 발표
- 5.24 태광화학 부당해고 구제신청
- 6.7 연합노조 서울여자대학, 임금인상, 부당해고 반대쟁의, 48명 참가
- 6.8 제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투표율 70%) 전국적으로 공개·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자행(공화 130,

- 신민 44,대중 1석:전국구 포함) 신민당 호헌선(59석) 확보 실패
- 6.9 서울동대문구 신민당 우세하자 20여 공화당원 개표소 난입(6.11 46명 구속)
- 6.10 전국 대학 6·8총선 규탄 데모
- 6.12 금호운수노조,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
- 6.13 6·8부정선거 규탄 학원데모 전면화, 고대·건대·성대 휴교
정부·여당 수뇌회동, 전국적 데모 강경책, 선수습 후각료사퇴 방침 결정
- 6.14 신민당 운영위원회의, 議員등록 거부 총선무효화투위 결성. 6.17 유진오신민당수, 6·8총선 선거 쿠데타로 규정 재선 촉구(공화당 거부)
- 6.15 전국 28개 대학, 57개 고등학교 휴교령
- 6.28 도피중인 사장 김종훈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
- 6.29 외기노조 강원지부, 주한 미사령관 상대직속 하청 전환반대
- 7.1 박정희대통령 제6대 대통령 취임
- 7.3 서울시내고교 무기휴교, 데모재연 대학가 거의 조기방학
- 7.7 신검찰총장, 선거부정 제2차수사결과 발표, 부분적 부정 인정
- 7.8 중앙정보부, 「동베를린 거점 北韓對南赤化공작단사건」 발표(東伯林사건) 관련자 194명중 104명 구속(기관원이 서독·프랑스에서 관련자 비밀연행, 관련정부 엄중항의 각서 전달 및 서독대학생 항의시위)
- 8.14 신민당, 6·8부정선거백서 발표(사전음모등 7개항 지적)
- 8.24 노총, 근로소득세법 개혁반대 성토대회
- 8.28 연합노조 서대문분노수거대행소 외 1개소, 도급제를 일급제 전환요구 쟁의, 245명 참가
- 8.29 검찰, 동백림사건관련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 31명을 구속, 5명은 불구속기소, 6명 불기소 처분
- 9.5 노동청, 근로기준법 제36조(정기지불) 위반죄로 금호운수를 고발 조치
- 9.9 노총, 근로소득세 조정 및 기초공제제도 건의
- 9.11 인천하역협회 13사 처우개선 쟁의,
- 10.4 삼풍제지 단체협약 불이행 서울시장에 고발
대화연료 부당노동행위 서울시장에 고발
- 1030 충북, 쌍용 한일시멘트 하역노무자 파업
- 11.1 구속 기소된 농촌문제연구소소장 주식균 구속집행정지 결정
- 11.6 자동차노조 좌석버스지부 27개사, 임금인상쟁의, 4,908명 참가
- 11.9 동백림사건, 오전 10시 첫 공판
- 11.11 태양양화점 외 37사 임금인상 쟁의, 570명 참가
- 11.21 중앙정보부, 무전간첩단 6명 체포 발표, 주모자 김배영 등
- 11.22 주한미군 종업원 임금인상 쟁의, 32,079명 참가
- 12.10 부산화양공사 외 11업체 임금 70% 인상요구 쟁의, 2,557명 참가
- 12.13 東伯林공작단사건 선고공판. 34명 전원 유죄(조영수·정규명 사형, 정하룡·윤이상·어준 무기선고, 4.13 고법, 15명 원심파기, 정하룡·정명규·임석훈 사형언도)
- 12.16 民比研사건 선고(황성모 3년, 김중태 2년형)
대한통운 외 34사 임금인상쟁의 9,334명 참가
- 12.18 동백림사건, 항소
- 12.21 연합노조 서울시청지부 임금인상 쟁의, 4,047명 참가
- 12.22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쟁의 신고
- 12.29 광산 노동자 실직 8,000여명, 체불노임 25억 노동청에 구제대책 건의

<1968>

- 1.16 연료정책시정투쟁궐기대회
- 1.22 전국철도노조, 실력행사 가부투표와 98.6%의 찬성
- 2.27 동백림사건, 윤이상, 병보석으로 석방
- 4.3 서울사대독서회 사건 발생
- 4.5 동양기계 단식농성
- 4.6 동양기계농성, 노동청 진상조사 착수
- 4.8 동양기계, 단식농성 중이던 노동자 이상봉 등 3명 출도후 입원, 대한노총 영등포 지구협의회 정식 관여 결의
- 4.9 6·8선거 개표소난동사건 18명 모두 유죄선고
낙원시장 철거민 입주권 보장 요구 시위
- 4.10 동양기계, 노동청의 중재안을 회사측이 거부, 노동청 회사장부 압수
- 4.13 대한노총 동양기계노사분규에 동정시위를 벌이기로 결의
동백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22명 가운데 주석균등 7명을 제외한 15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파기
- 4.16 동자동 철거민 대표 1백여명 정착지 이주요구 시위
- 6.1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법개정건의안 국회에 제출, 노총측 이에 즉각 반발, '총궐기' 결의
- 6.27 정부·여당, 전문 52조의 '자본시장육성법안' 국회상정, 제66회 임시국회 종결일인 7월 4일까지 통과할 것 계획.
- 6.28 노총측, '자본시장육성법안'의 통과저지 투쟁 결의
- 6.29 노총 중앙위원회 소집, 중앙위원 전원으로 대책위원회 구성, 저지 투쟁전략 숙의
- 7.1 노총 제88차 중앙위원회,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강화, 3단계 투쟁전략을 수립, 제1단계로 대정부·국회 활동, 제2단계로 정부관리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 전개, 제3단계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
- 7.3 해운노조 산하 조합원 3천명을 비롯, 철도, 광산, 전력, 체신 등 정부관리 기업체 및 공무원 노조 지부 등에서 3만 5천명의 백지위임 사표 제출, 오후 국회 재경위원회, 문제된 동 법안 제 2장 제4조를 삭제하고 동 법안의 급회기내 국회 통과 보류하기로 결정
- 7.5 국회 경제화학심의회와 보건사회부에서 경제인연합회의 개정안 유보결정
- 7.6 동백림사건, 이용로 보석으로 석방
- 7.20 통혁당 전라남도위원회 검거사건. 목포 거점(월간 《青春》 발간), 관련자 118명 중 27명 구속
- 7.24 동양통신 편집부장등 4명, 군기누설 혐의 구속(7월말까지 각 신문 편집책임자 등 30명 소환신문, 군사기밀한계 문제 등으로 큰 말썽)
- 7.30 상소심 선고공판, 12명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환송
- 8.2 서울 법원 주변 등에 동백림사건 및 무전간첩사건(김연규) 판결한 대법원판사 등 용공판사로 비난하는 피력보 나붙어 큰 말썽(8.5 조대법원장, 동요말고 법따라 판결하라고 피력보사건 특별담화, 8.9 다시 동아·신아·경향·중앙·대한 등 5개신문편집국장에 피편지 말썽, 며칠 뒤엔 대법원장·관계판사부인에게 피편지, 8.12 신민당 송대변인에게도 협박장 우송. 8.14 국회 법사위, 피력보·피편지사건 진상규명 착수 결의)
- 8.12 東伯林사건 심리 대법원 崔濶模판사 사퇴 물의
- 8.15 정치활동정화법 시효만료, 70명 정치활동 자유 획득
- 8.20 북한 753부대 참모장으로부터 이문규 부부를 구하라는 특별지령을 받고 무장공작선으로 제주도 에 도착한 북한군 14명이 발각되어 교전 끝에 12명은 사살되고, 이관학·송승환 등 2명은 체포
- 8.24 중앙정보부, 통혁당 지하간첩단 사건(서울시위원회) 전모 발표
- 9.9 서울지검 공안부, 통혁당사건관련, 남조선해방전략당 권재혁(43) 등 11명을 국가보안법, 반공

- 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구속기소
- 9.19 검거된 統革黨 서울시위원장 김종태, 탈옥시도 미수
- 9.29 김종태, 서울구치소 탈옥, 도주하려다 붙잡힘. 특수도주 미수죄 추가
- 11.00 통혁당 서울시위원회 성원 27명·전라남도위원회 성원 16명, 남조선해방전략당 11명 공판 열립
- 12.3 《新東亞》 필화사건, 천관우주필·洪承勉주간 등 구속
- 12.5 東伯林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선고(정규명·정하룡 사형, 조영수 무기, 林憲植·어준 15년, 윤이상·천병희·최정길 10년) 69.2.24 윤이상 형집행정지 석방(3.30 칼文化大賞 받으로 독일 출국) 69.3.7 이응로화백과 최정길 형집행정지 석방
- 12.21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결심공판, 권재혁 등 4명에 사형 구형, 그 외 관련자 8명에 무기-10년 형 구형

<1969>

- 1.6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 「개헌을 검토중」이라고 처음 개헌논의 제기
- 1.7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 처음으로 기자회견서 「三選改憲」논의. 신민당 어떤 형태 개헌도 반대 성명
- 1.8 공화당, 삼선개헌 공식검토 발표
- 1.10 박정희대통령, 연두기자회견서 「임기중 개헌의사 없으나 필요하다면 연말에도 늦지 않을 것」 언명
- 1.13 신민, 개헌안 발의전 저지계획수립. 공화, 「여론성숙되면 연내처리」검토
- 1.14 삼선개헌 반대투쟁방안마련 위한 신민당 5인위 구성
- 1.17 유진오신민당총재, 「黨運命 걸고 대통령 三選改憲沮止」선언
- 1.20 유정기교수(충남대) 파면발령(한글전용 반대 혐의)
- 1.24 동백림사건, 윤이상과 김성칠 형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
- 1.27 統革黨 군법회의 판결공판, 신영복 등 4명 사형 선고. 7.10 金鍾泰 사형집행. 9.23 판결공판 金瓊洛,李文奎 사형확정, 여타 관계자 중형 선고. 11.4 권재혁(남조선해방전략당) 사형집행. 11.6 이문규 사형집행. 11.28 尹相守(통혁당 전라남도위원회) 사형집행 1972.7.15 김질락(통혁당 서울시위원회·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사형집행
- 2.3 공화당 의원총회·개헌 찬·반 논쟁
정정법에 묶여 정치활동을 제한받았던 해금인사인 김영선·이철승·김상돈·김선태·윤길중·조중서 등은 서울시내 「금문도」 식당에 모여 '「3선개헌」 반대국민 투쟁위원회 준비위원회'결성
- 2.4 박대통령, 공화당 내에서 개헌거론 금지 지시
- 3.3 노총, ‘대한상회의 물지각한 노동법 개악책동을 규탄한다’ 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
- 3.7 동백림사건, 이응노와 최정길 형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져 석방
- 3.29 동백림사건, 윤이상 서독으로 귀환
- 3.30 대법원형사부, 동백림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 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확정
- 4.1 여수시 덕충동 주민들 여수역 점거시위
- 4.3 여수역 점거, 여수경찰서 19명을 소요·기차통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 4.4 여수역 점거, 신민당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
- 4.8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의결
- 4.15 48항명 주동자로 양순직 예춘호 정태성 박종태 김달수 의원 공화당에서 제명
- 4.19 인천 공작창 노동자 민영화 반대 시위
- 4.26 천호동 광장교 밀 철거시작
- 4.28 서울시 천호동 광장교 밀 철거민 철거에 항의하여 동부경찰서 입구에서 항의시위
- 5.5 新民黨·재야인사, YMCA강당서 三選改憲反對汎國民鬪爭準備委員會 결성(위원장 金在俊목사)

- 5.7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 개헌 필요성 역설
- 5.8 유진오 신민당총재, “공화당이 개헌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핑계로 개헌을 음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비난
- 5.10 공화당, 개헌문제에 관한 국민의 고려 촉구
- 5.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 철도부지의 철거민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거에 대한 항의
- 5.14 중앙정보부, 金圭南의원, 朴櫓洙 등 60여명 북한간첩단사건 발표, 국회, 김규남의원 사표수리. 공화당 당기위, 김규남 제명
- 5.21 신민당 전당대회, 개헌저지 결의
- 5.26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 윤운영 부장판사)는 ‘통일혁명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질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등 4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등을 적용, 원심으로 사형을 선고. 신광현·정중운·이재학·오병철 등 무기징역 선고
- 5.27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항소심공판, 권재혁에 원심(사형)확정.
- 5.28 여수역점거, 24명의 구속자, 소요·기차통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음
- 6.2 길재호 공화당사무총장 개헌안 내용에 언급
- 6.5 재야, YMCA강당서 三選改憲反對凡國民鬪爭準備委 결성
- 6.7 서울대 법대생 첫 개헌반대 성토대회
- 6.9 서울시 서대문구 정동 15-1 전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철거민들 항의시위
- 6.20 金泳三의원 귀가중 피한 수명 초산테러 당함
- 6.27 고대생 5백여명 개헌반대 데모, 처음 가두진출(경찰 최루탄발사, 학생 120명 부상)(~6.28)
- 6.30 연세대·서울공대·경희대·경북대·부산대생, 개헌반대 데모
- 7.2 중앙대·동국대·성대·외대·경북대 학생들 三選改憲반대 데모
- 7.3 三選改憲반대 데모 전국 파급
- 7.7 홍문교, 학생들의 집회·시위 교내외 막론 일체 불허 언명
박대통령, 개헌문제에 관해 「7·7 담화」
- 7.17 박대통령, 제헌절기념식사서 개헌 기본적인 자유권 행사로 결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언명. 삼선 개헌반대투쟁위원회 발기인대회
- 7.19 신민당 서울서 개헌반대 유세 개시
- 7.25 대통령 개헌투표로 국민의 신임 묻겠다고 특별방송
- 7.26 개헌지지 첫 성명을 예편장성들 광고
- 7.29 공화당 당론조정 의원총회,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흥만 의원 3선개헌지지성명
- 7.30 신민당 소속 연주흠의원 3선개헌 지지 성명
- 8.7 尹致暎의 121의원, 대통령 3期 連任 허용 골자 三選改憲案 국회 제출. 신민당, 삼선개헌안 포기하여 호헌으로 국민단압하라고 대통령에 촉구성명
- 8.9 이효상의장, 신민당 저지로 국회보고가 불가능해지자 보고절차 생략하고 개헌안 정부 直送. 정부, 개헌안 공고. 신민당의원, 개헌안 정부직송되자 농성 풀고 가두 데모
- 8.14 공화당 국민투표법안 국회 제출
- 8.28 국민투표법안, 국회 내무위 與黨단독의로 수정 통과, 30일 野黨출석 안하는 틈을 타서 국회 법사위 기습 통과
- 8.30 공화당 전당대회 개헌 추진 결의
- 9.2 경북대, 무기휴교
- 9.3 공화, 논산에서 개헌 지지유세 개시
- 9.7 신민당 전당대회서 당 해체 결의
- 9.8 개헌안 공고기일 만료

- 9.9 개헌안 국회본회의 상정
- 9.10 개헌안 제안 설명
- 9.10 개헌안 국회질의 토론 개시
- 9.12 改憲反對鬪委 救國宣言大會 개최
- 9.14 共和黨 삼선개헌안·국민투표법안 국회 제3별관 변칙통과(찬성의원 공화당 107명, 政友會 11명, 무소속 4명)
- 9.23 2심 재판에서 김질락, 이문규, 사형 확정.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대법원 선고공판, 권재혁 사형 확정.
- 9.29 중앙정보부 경남지구 지하당 조직사건 발표, 간첩 임종영과 김삼연 등 일당 10명 체포
- 9.30 統革黨 경남지구 지하당사건. 남파간첩 朴鍾永(가명)등 12인 검거.
- 10.8 치안국, 호남 일대 지하당 조직 간첩사건 발표, 전북 조직책 진락현(50세) 등 관련자 7명 검거.
- 10.16 통혁당 경기도지구당 19인 검거. 10.16 통혁당재건 간첩사건, 간첩 韓榮植 등 19명 검거.
- 10.17 삼선개헌안 국민투표 가결, 투표율 77.1%, 찬성 755만0655표, 반대 363만 6369표.
- 10.29 제1회 한·미 민간 경제위원회 합동회의 개최(~11.4)
- 11.1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 해체.
- 11.4 권재혁(남조선해방전략당) 사형집행.
- 11.6 이문규 사형 집행
- 11.00. 노동청과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쟁의조정예 관한 임시특례법(이하 ‘특례법’)’ 성안
- 11.24 외국인 투자업체 중 노조결성 11개업체 조합원 12,408명, 일괄사표제출, 노총측, ‘특례법’ 결사반대성명서 발표
- 11.28 윤상수 사형집행
- 12.4 ‘특례법’ 경제장관회의 거쳐 국무회의에 회부
- 12.6 제101차 노총 긴급중앙위원회, ‘노동기본권 수호투쟁위원회’ 설치
- 12.13 서울 신문회관에서 노총전국총궐기대회 개최, ‘특례법’ 규탄
- 12.15 영등포 건설회관에 노동자 대표 천여명이 집결, ‘노동기본권 수호 투쟁궐기대회’ 를 개최
- 11.28 통혁당사건 관련자 尹相守 처형.
- 12.21 ‘특례법’ 국회보사위 통과
- 12.22 ‘특례법’ 국회법사위 상정, 공화당 단독으로 전격 통과
- 12.27 노총측 긴급 중앙위원회 개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악법’으로 규정,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분쇄할 것을 결의.

민주화운동 관련 참고문헌

<연구사>

- 김동춘, 1989 「4월혁명 인식의 발전사」 『사회와 사상』 4월호
김동춘, 1990 「4월혁명에 대한 기존 연구와 문제점」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현대사』2 풀빛
도진순·정창현, 1990 「1950-70년대 한국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역사와현실』 제4호
조희연, 1990 「50-60-7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안병옥, 1996 「4월민중항쟁」 『한국역사입문』 3 풀빛
정창현, 1997 「1945~1960년 민중운동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7 국사편찬위원회
홍석률, 1997 「4·19, 5·16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론』 27 국사편찬위원회

<진보당>

- 이상두, 1986 「한국혁신정당연구」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거목
전성환, 1987 『진보당연구』 서울대석사논문
유근일, 1987 「1950년대 후반의 국가와 해계모니투쟁-진보당이념에 대한 하나의 시각」 서울대석사
서중석, 1987 「1950년대 이후의 혁신정당론」 『한국의 민족주의운동과 민중』 두레
이동화, 1987 「한국혁신정당운동의 인맥과 활동평가」 『민족지성』 2월호
고성국, 1989 「한국의 민족민주대중정당운동사」 『대중정당』 백산서당
구천서,
오유석, 1990 「진보당사건 분석을 통한 1950년대 사회운동 연구」 『경제와사회』 여름호
정창현, 1991 「진보당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현대사』2 풀빛
정태영, 1991 『조봉암과 진보당』 한길사
김창진, 1992 『1950년대 한국사회와 진보당』 『1950년대 한국사회와 4월혁명』 태암
정태영, 1994 『조봉암과 진보당』 한길사
박태균, 1995 『조봉암연구』 창작과 비평사
徐仲錫, 진보당 연구; 조봉암·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第66輯, 1995년 12월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서중석,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길', 역사비평 통권47호, 1999년 5월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최용·이석연·이종범·최영태, 한국에서의 '혁신주의' 정당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1), 전남사학, 1989년 12월
유영구, 1993 『북에서 본 진보당사건』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글
윤기정, 1959 『한국공산주의운동비판-부 진보당사건기록』 통일춘추사
황재운, 1960 『조봉암과 진보당사건』 『흑막』 6월호
임홍빈, 1965 『죽산 조봉암의 죽음』 『신동아』 10월호
임홍빈, 1965 『죽산 조봉암의 죽음과 사법권』 『신동아』 12월호
장건상 외, 1966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희망출판사
박기출, 1968 『내일을 찾는 마음』 신서각
김갑수, 1970 『법창30년』 법정출판사
정화암, 1982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이영석, 1983 『죽산 조봉암』 원음
태륜기, 1983 「진보당사건의 의혹과 진실」 『권력과 재판』 삼민사
권대복, 1985 『진보당』 지양사
김민희, 1993 『박정호』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 유민 흥진기전기 간행위원회, 1993 『유민 흥진기 전기』 중앙일보사
- 최용·이석연·이종범·최영태 한국에서의 '혁신주의' 정당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1) 전남사학 1989
- 최용·이석연·이종범·최영태 한국혁신주의 정당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2) 전남사학 4 1990
- 권희경 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인터내셔널 1989 태양
- 裴淳吉 저 韓國社會主義政黨史 1995 한마음
- 고성국, 1989 「한국의 민족민주대중정당운동사」 『대중정당』 백산서당
- 박상철, 1986 「한국혁신정당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주의 제정당의 전개과정(해방~3공화국)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鄭太榮 曹奉岩과 進歩黨 1991 한길사
- 鄭太榮 韓國 社會民主主義 政黨史 1995 世明書館
- 고성국 진보당의 이상과 한계 한국현대정치론 1; 제1공화국의 국가형성 ·정책과정 ·정책 1990 나남
- 徐仲錫 진보당 연구; 조봉암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第66輯 1995
- 심지연 좌파운동과 진보당 사건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정부의 붕괴- 1998 오름
- 박중환 1989 <정당의 해산 : 특히 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인하대 법학과 석사논문
- 김지선 1986 <진보당과 한국정치체제의 구조적 제약> 고려대 정외과 석사논문
- 전성환 1987 <진보당 연구 : 그 불법화에 이르는 과정과 성격>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 윤순갑 1991 <한국 혁신정당(1945-1960) 연구 : 생성의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경북대 정치학과 박사논문
- 현신용 1992 <진보당 연구 : 보수정당과의 강령·정책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 현재호 1996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원인에 관한 연구 : 정당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 정외과 석사논문
- 황성수 1991 <한국 혁신정당의 생성과 실패에 관한 연구 : 진보당을 중심으로> 경희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 황인원 1991 <1950년대 한국정치와 진보당 : 진보당의 사회변혁운동사적 위상을 중심으로> 서강대 정외과 석사논문
- 황인진 1993 <진보당 성격 연구> 부산대 정외과 석사논문
- 원선희 1992 <진보당의 이념과 조직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 <4.19시기 혁신정당>
- 유재일 1989 <4.19 시기 혁신정당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외과 석사논문
- 차창훈 1992 <제1공화국 붕괴 이후 혁신정당운동에 대한 연구(1960-1961)>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 김수미 1994 <제2공화국 시기 혁신정당운동의 전개와 실패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석사논문
- 곽순모, 1984 『민주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주의운동의 형성과정』 예지사
- 김광식, 1988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 봄호
- 김경권, 1985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 -민족자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형, 1996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 과정」 『역사와 현실』 21
- 김지형, 1997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노선과 활동」 『경기사론』 창간호

김영갑, 1985 「민족자주통일협회의의 통일운동」 『고대문화』 25 고려대학교
 김학준, 1983 「4·19 이후 5·16까지의 진보주의 운동」 『4월혁명론』 한길사
 문한영, 1990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노중선, 1992 「4월혁명기, 혁신정당 왜 좌절하였나」 『역사비평』 가을호
 서중석, 1987 「1950년대 이후의 혁신정당론」 『한국의 민족주의운동과 민중』 두레
 유재일, 1989 「4월혁명 직후 민자통의 통일운동」 『사회와사상』5월호
 유재일, 1990 「4월민중봉기와 민족자주화운동」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4.19민중항쟁>

강만길 외, 1983 『4월혁명론』 한길사
 고성국 외, 1991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사월혁명동지회, 1995 『4월혁명』 사월혁명동지회
 이화수, 1985 『4월혁명』 평민서당
 한완상 외, 1983 『4·19혁명론 I』 일월서각
 일월서각편집부 편, 1983 『4·19혁명론』 II(자료편) 일월서각
 사월혁명연구소,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2 한길사
 사월혁명연구소 편, 1995 『변혁과 통일 : 4월혁명 35주년 기념』 사월혁명연구소
 노중선, 1989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대한정책개발연구소 편, 1995 『4·19, 그후 30년』 대한정책개발연구소
 민영빈 편저, 1993 『4월의 영웅들 : 세계의 눈에 비친 4·19혁명의 산 기록=The April heroes』 시사영
 어사
 박수만 편, 1965 『4월혁명』 4월혁명동지회 출판부
 송건호 외, 1984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양호민·이상우·김학준 공편, 1986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송원영, 1990 『제2공화국』 샘터
 안동일·홍기범, 1960 『기적과 환상』 영신문화사
 六一會 편, 1992 『4월민주혁명사』 제3세대
 이강현 편, 1960 『민주혁명의 발자취』 정음사
 이목, 1989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이정식, 1976 『한국현대정치사 -제2공화국-』3 성문각
 조덕송 편, 1960 『4월혁명 : 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 창원사
 편집부 편, 1982 『4월혁명』 청사
 학민사편집실 편, 1984 『4·19의 민중사』 학민사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1963 『한국군사혁명사』 동아출판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편, 1993 『4·19혁명의 새로운 인식』 동아일보사
 4월회, 1993 『사월의 소리- '4·19민주이념' 을 실천하는 사람들』
 한승주, 1983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현역일선기자동인, 1960 『4월혁명』 창원사
 Quee-Young Kim, The Fall of Syngman Rhe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83

<4.19의 배경>

李炫熙, 3-15馬山義舉 研究; 4月革命의 位相定立과 그 前提條件, 芝邨金甲周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4년 12월 서울 刊行委員會
 전철환, 1983 「4월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 『4월혁명론』 한길사

- 강성혁,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와 미국」 『역사비평』 봄호 역사비평사
 김성태, 1960 「4·19 학생봉기의 동인」 『성대논문집』 5
 김성환, 1984 「4월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 『1960년대』 거름
 이대근, 1990 「4월혁명을 전후한 미국의 대응전략」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이재봉, 1995 「4월혁명과 미국의 개입」 『한국정치학회보』 제29-1
 이재봉, 1996 「4월혁명, 제2공화국, 그리고 한미관계」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4.19시기 민족민주운동>

- 김경대, 1990 「4월혁명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고명균, 1990 「국민계몽대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김경권, 1985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 -민족자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광식, 1988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 봄호
 김낙중, 1982 「4·19와 노동운동의 간영기적 양양」 『한국노동운동사 : 해방후 편』 청사
 김동춘, 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4·19시기 학생운동」 『역사비평』 봄호
 김자동, 1990 「언론운동으로서의 민족일보의 성격」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김지형, 1996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 과정」 『역사와 현실』 21
 김지형, 1997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노선과 활동」 『경기사론』 창간호
 문한영, 1990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김영갑, 1985 「민족자주통일협의회회의의 통일운동」 『고대문화』 25 고려대학교
 김동춘, 1994 「4월혁명」 『한국사』 18 한길사
 변명희, 1989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의 비판적 연구」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박현채, 1988 「4·19시기 노동운동의 전개와 양상」 『역사비평』봄호
 서중석, 1991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 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가을호
 손병선, 1990 「2대악법반대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송건호, 1983 「4·19혁명과 학생의 현실인식」 『4·19혁명론』 I 일월서각
 송건호, 1984 「4·19혁명기의 교원노조운동」 『자본주의사회의 교육』 창작과비평사
 유재일, 1988 「4·19시기 혁신정당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유재일, 1989 「4월혁명 직후 민자통의 통일운동」 『사회와사상』5월호
 유재일, 1990 「4월민중봉기와 민족자주화운동」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이목, 1990 「교원노동조합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이우관, 1990 「4·26에서 7·29총선까지」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이우재, 1990 「4월혁명과 농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이우재, 1990 「4월혁명과 농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장명국, 1986 「4·19하의 교원노동조합운동」 『교육노동운동』 석탑
 이철국, 1988 「4·19시기 교원노동조합운동」 『역사비평』 봄호
 전기호, 1990 「4월혁명과 노동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이종석, 1990 「4월혁명의 주도세력의 변천과정-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이종오, 1991 「4월혁명의 심화발전과 학생운동의 전개」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정기영, 1990 「4월혁명의 주도세력」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정계정, 1995 「4월혁명기 학생운동의 배경과 전개-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정국로, 1995 「4·19혁명의 전개과정」 『한국학생민주운동사』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1991 「4월민중항쟁 직후 혁신정당운동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한국현대사』2 풀빛

황건, 1990 「민통선과 민족통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최용·이석연·이종범·최영태, 1989 「한국에서의 ‘혁신주의’ 정당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1)」 『전남사학』제3집 전남사학회
 한상구, 1990 「피학살자 유가족문제」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한상진, 1990 「4·19혁명과 학생운동」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아일보사
 ·이영환, 해방 후 도시빈민과 4·19, 역사비평 통권46호, 1999년 2월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정계정, '4월혁명기'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 成大史林 第12 ·13合輯, 1997년 11월 서울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4.19시기 통일논의>

강충선, 1981 「한국혁신세력의 남북통일방안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남식, 1988 「북한의 통일전략과 통일방안」 『사회와사상』창간호 한길사
 김학준, 1986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의」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성유보, 1983 「4월혁명과 통일논의」 『한국민족주의론』2 창작과비평사
 서중석, 1987 「1950년대 이후의 혁신정당론」 『한국의 민족주의운동과 민중』 두레
 송인진, 1986 「제2공화국의 중립화 통일논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송건호, 1984 「한국정당의 통일정책」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안병욱 1997 「4월 민중항쟁기 진보적인 統一論議와 統一運動」 『국사관논총』 제75집
 홍석률, 1993 「4월 민중항쟁기 중립화통일론」 『역사와 현실』제10호
 홍석률 1997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홍석률 2000 「4·19시기 북한의 대남 제안과 남북경제협력」 『통일시론』 봄호
 이성철, 4·19직후의 민족문제에 대한 논의; 통일논의를 중심으로, 민족문제논총 1, 1990년 2월 부산 부산대민족문제연구소
 정창현 1997 「1950년대 북한의 통일노선과 통일정책연구」 『國史館論叢』 제75집

<4.19의 영향과 역사적 의미>

강만길, 1983 「4월혁명의 민족사적 맥락」 『4월혁명론』 한길사
 고성국, 1990 「4월혁명의 이념」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고영복, 1983 「4월혁명의 의식구조」 『4월혁명론』 한길사
 김동춘, 1990 「남한운동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II』 한길사
 김동춘, 1991 「4·19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그 한계」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김일영, 1991 「4·19혁명의 정치사적 의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김진균·김재훈·백승욱,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1 한길사
 김학준, 1983 「4·19혁명, 오늘의 의미」 『4·19혁명론』 I 일월서각
 박동운, 1965 「4·19의 문제정리와 역사적 사명」 『4월혁명』 사월혁명동지회
 곽상훈, 1971 「4·19와 우리의 각오」 『4·19 10주년 기념지』 4·19유족회
 김병걸, 1995 「4월혁명과 문학」 『1995년 변혁과 통일(4월혁명 35주년 기념) 사월혁명연구회
 김윤식, 1983 「4·19와 한국문학」 『4·19혁명론』 I 일월서각
 박태순, 1990 「4·19의 민중과 문학」 『4월혁명론』 한길사
 박태순, 1995 「4월혁명과 반혁명의 문학」 『1995년 변혁과 통일(4월혁명 35주년 기념) 사월혁명연구회
 李延馥, 4·19혁명의 성격과 전망, 韓國近現代史論叢, 1995년 12월 大邱 吳世昌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박현채, 1983 「4월민주혁명과 민족사의 방향」 『4월혁명론』 한길사
 박현채, 1990 「4·19민주혁명과 이의 계승」 『계간사상』봄호

백낙청, 1990 「4·19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성」 『4월혁명론』 한길사
 윤종일, 1993 「4·19혁명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반응」 『4·19혁명의 새로운 인식』 동아일보사
 이재오, 1985 「4·19혁명의 새로운 인식」 『민주공화국 40년』 중원문화
 이정복, 1993 「4·19혁명의 성격과 그 전망」 『4·19혁명의 새로운 인식』 동아일보사
 이해찬, 1987 「4·19학생혁명의 성격과 전개」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열음사
 정국로, 1995 「4·19에 관한 역사적 시각의 변천」 『한국학생민주운동사』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진석, 1983 「4·19와 언론의 역할」 『4·19혁명론』 I 일월서각
 정태수·정창현, 1997 「4·19 당시 평양주재 소련대사 푸자노프 비망록: 남한의 진보정당 지원 흡수통일 시도」 『WIN』5월호
 조동걸, 1998 「4·19혁명과 역사학의 새로운 발전과 과제」 『현대한국사학사』 나남출판
 진덕규, 1983 「4월혁명의 정치적 갈등구조」 『4월혁명론』 한길사
 최민지, 1983 「4·19민주혁명과 오늘의 현실」 『4·19혁명론』 I 일월서각
 한상진, 1990 「4·19혁명의 사회학적 분석」 『계간사상』 봄호
 서중석, 1960년 4월혁명 개념 소고, 成大史林 第12·13合輯, 1997년 11월 서울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4.19시기 혁신세력>

김학준, 1983 「4·19 이후 5·16까지의 진보주의 운동」 『4월혁명론』 한길사
 노중선, 1992 「4월혁명기, 혁신정당 왜 좌절하였나」 『역사비평』 가을호
 박상철, 1986 「한국혁신정당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주의 제정당의 전개과정(해방~3공화국)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김경권, 1985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 -민족자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지형,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과정, 역사와 현실 제21호, 역사비평사 1996년 9월
 김지형, 4·19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회의의 노선과 활동, 京畿史論 創刊號, 1997년 3월 水原 京畿大學校 史學會
 서중석, 4월 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14, 1991년 08월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최용·이석연·이종범·최영태, 한국에서의 '혁신주의' 정당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1), 전남사학, 1989년 12월

<한일회담반대투쟁과 6.3항쟁>

이재오, 1984 「1960년대 한국학생운동사 시론 - 한일회담반대학생운동을 중심으로 -」 『민족 통일 해방의 논리』 형성사
 이재오, 1984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이재오, 1985 『한일관계사의 재인식』 중 제5장 학민사
 이종오, 1988 「반제반일민족주의와 6.3운동」 『역사비평』 여름호

서중석, 1985 「6.3사태 - 64년 봄의 한일회담반대시위 -」 『신동아』 6월호

<60년대 조직사건>

정창현, 1991 『1960-70년대 공안사건의 전개양상과 평가』 『한국현대사』3 풀빛
 조희연, 1933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통혁당, 남민전, 사노맹을 중심으로 본 비합법 전위조직 연구』 한울
 이상우, 1985 「민족일보, 인혁당사건의 전말」 『신동아』 6월호
 김남식, 1972 「북한의 대남공작 본의」 『한국통일의 이론적 기초』 고대 아연

조희연, 1990 「6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통혁당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여름호 까
 치
 조희연, 1990 「50, 60, 7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강연, 1990 「『청맥』의 민족현실인식 연구」 『사회와사상』 8월호
 정창현, 1991 「1960-70년대 공안사건의 전개양상과평가」 『한국현대사』 3 폴빛
 조희연, 1933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통혁당, 남민전, 사노맹을 중심으로 본 비합법 전위조직 연구」
 한울
 조선문제연구소, 1963 「조선자료」 3월호 동경
 김형욱, 1971 「통혁당사건의 전부」 『대지의 가교』 광명출판사
 중앙정보부, 1972 「북한대남공작사」 2
 국민방첩연구소 편, 1974 「방첩과 스파이전」 갑자문화사
 동아일보사, 1976 「북한의 대외정책기본자료집」
 김질락, 1985 「주암산」 『북한』 3월호 부터 21회에 걸쳐 연재 (『어느 지식인의 죽음』 1992 행림출판사)
 편집부 편, 1986 「공안사건 기록」 세계
 편집부 엮음, 1988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 『북한의 사상』 태백
 장길생, 1988 「20년전 통혁당사건의 또 다른 의혹」 『현대공론』 10월호
 편집부 편, 1989 「통혁당」 대동
 편집부 편, 1989 「통일혁명당」 나라사랑
 이기하, 197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제7장 국토통일원
 유명훈, 1989 「민족해방운동사 지평의 확대」 『사상문예운동』 가을호
 반미청년회, 1987 「한민전의 역사」 『자주언론』 혁신1호
 ? , 1988 「통혁당과 한민전」
 조해문, 1989 「애국시대」 상, 하 대동
 김동식, 1984 「북괴대남공작과 통일혁명당의 정체」 『자유공론』 6월호
 김봉현, 1980 「통일혁명당의 정체」 『북한』 7월호
 대진여, 1984 「통혁당과 북한의 대남전략 - 통혁당의 실체와 공작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5
 월호
 서석, 1980 「통일혁명당의 정체 : 통일실현의 길」 『국민회의보』 8월호
 유영구, 1993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글
 김민희, 1993 「김종태」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편, 1992 「암장」 지리산

<잡지 참고목록>

<진보당>

최덕신 <해방후 20년간의 주요사건 내막> 『옵서버』 91.4
 홍인근 <중립화통일론의 선구 김삼규선생> 『신동아』 89.6
 임홍빈 <조봉암은 왜 죽어야 했나> 『신동아』 83.3
 이영석 <조봉암과 양명산의 미스터리> 『정경문화』 83.7
 조용중 <조봉암의 복권신청> 『월간조선』 85.2
 이영석 <조봉암 사형집행-이승만과 보수파의 합작> 『월간조선』 91.8
 오연호 <토머스증언-조봉암 처형전야의 미국공무원들> 『월간말』 93.8
 이철호 <신도성의 정치역정-한민당에서 진보당까지> 『월간경향』 87.8
 김진배 <名工 기다린다던 윤길중> 『월간중앙』 88.8

<4.19혁명과 장면정권>

- 김성식 <4-19의 재평가> 『월간조선』 80.4
김진균 <4-19는 미완성 혁명> 『월간조선』 86.4
진덕규 <4-19혁명의 갈등구조> 『신동아』 80.4
김학준 <4-19혁명, 오늘의 의미> 『신동아』 82.4
전철환 <4-19의 경제적 배경과 의의> 『정경문화』 83.4
권오훈 <4-19정신의 사회구조적 분석> 『정경문화』 83.4
김창진 <4월혁명과 민주주의> 『월간경향』 88.4
고정훈 <내가 겪은 4월 전후> 『월간조선』 80.4
권영기 <4-19의 뿌리를 찾아서-신진회에서 민통련까지> 『월간조선』 84.4
권영기 <4-19주역들과의 인터뷰-평가는 당신들께 맡깁니다> 『월간조선』 84.4
이근성 <황건 증언-민통련은 4-19통일「논의」를 「운동」으로 끌어올려> 『월간중앙』 90.4
유일라 <“이대통령 해야않으면 저격하러 했다> 『월간중앙』 90.4
박덕건 <4-19의 사람들> 『월간중앙』 90.4
김진배 <이세기-“4-19학생의거, 내가 주도했다”> 『세계와나』 93.4
홍종흠 <증언! 4-19의 전주-2-28대구학생의거> 『정경문화』 84.2
윤재걸 <4-19 권력엘리트의 야망> 『정경문화』 84.4
최형두 <4-19세대-진통과 원숙의 현주소> 『옵서버』 90.4
이경남 <누가 4-19에 발포했는가> 『정경문화』 83.4
이상현 <자유당 취후의 국무회의 비록> 『월간조선』 87.4
김교식 <최인규는 부정선거의 원흉인가> 『월간조선』 83.4
최인규 <최인규 옥중기> 『월간조선』 84.9
한수남 <3-15부정선거 원흉재판 중 국무위원사건 시말기> 『정경문화』 84.4
조용중 <4-19피고인들의 찬란한 변신> 『월간조선』 84.4
이경남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날> 『신동아』 82.4
이상우 <이승만 하야의 날 美대사 극비행각> 『정경문화』 83.4
민기식 <민기식회고(속)-4-19는 군의 지지로 성공했다> 『신동아』 94.2
김교식 <이기붕일가, 독살되었나> 『월간조선』 82.12
김진배 <좌절된 이기붕의 해외도피내막> 『옵서버』 90.4
김교식 <이기붕일가 자산, 독살의 냄새가 난다> 『월간조선』 91.8
이경남 <허구의 존재증명-4-19직후 정치·사회단체 총람> 『정경문화』 83.6
황문수 <허정인터뷰-나는 왜 과정수반을 수락했나> 『신동아』 83.4
김동선 <물산객주의 아들 허정 정치사> 『정경문화』 84.6
이경남 <재판을 통해 본 4-19> 『월간조선』 82.4
주돈식 <장면정권의 붕괴 전야> 『월간조선』 82.4
박기정 <장면정권 270일천하> 『신동아』 82.5
이수연 <도큐멘트-4-19에서 5-16, 격동 393일> 『정경문화』 86.5
조세형 <청와대의 「정권 내놓아라」싸움> 『월간조선』 85.10
이상우 <다큐멘터리-장면총리의 비극> 『신동아』 84.2
김갑식 <장면총리, 수녀원 피신 55시간> 『월간조선』 85.5
정현주 <민주당정부는 과연 무능했는가> 『신동아』 85.4
양동안 <장면총리와 박정희대통령> 『신동아』 82.5
실 바 <미국은 과연 장면정권의 붕괴를 몰랐는가> 『신동아』 82.5
이재봉 <미, 민중혁명 막을 군사독재구상> 『신동아』 95.5

<6.3항쟁>

- 박인도 <65년 반혁명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박정희를 체포하라’ > 『월간경향』 88.10
서중석 <6·3사태-64년봄의 한일회담반대시위> 『신동아』 85.6
신태환 <6·3사태 전후의 서울대> 『신동아』 93.7
민기식 <『6·3사태, 미군 속이고 군 출동했다> 『신동아』 94.1
이종률 <『6·3사태는 「젊은 민족정신」의 발화였다> 『신동아』 94.6
김택수 <4·19와 6·3주역들의 어제와 오늘> 『세계와나』 91.6
김도현 <시퍼렇게 살아 있는 반역의 문서> 『세계와나』 90.6
한상구 <재조명되는 ‘6·3사태’ ‘민청학련사건’ > 『월간예향』 93.8
전진우 <동백림사건과 「6·8부정선거」> 『신동아』 89.4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69년 사건·단체편

발행일: 2003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